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 문

역사란 흔히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진정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간 내전(civil war)이자 20여 개국이 참전한 미니-세계대전(mini-world war)이었던 6·25전쟁에 대해 그 실상을 규명하고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와 저술활동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연구 활동의 하나로 지난 1967년부터 13년간에 걸쳐 전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전11권)는 6·25전쟁의 배경과 원인, 전쟁경과, 교훈 등을 담은 전사(戰史)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이 경과되면서 6·25전쟁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의 비밀 기록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전쟁사의 재편찬(再編纂)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軍史編纂硏究所)에서 새로운 국내외 사료(史料)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6·25전쟁사』 재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등 전환기적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전쟁체험세대가 점차 감소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6·25전쟁사』 재발간 사업

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첫 단계로 금번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1집은 광복으로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 남북분단 과정과 통일노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리고 북한정권의 수립 및 남침 준비 과정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한 귀중한 역사서로 평가될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본서 발간에 진력해 온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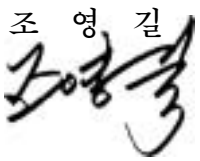
그리고 제1집에 이어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한강선 방어 이전까지의 내용을 담은 『6·25전쟁사』 제2집도 새로 발굴된 북한문서 및 구소련의 외교문서, 참전자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추가하여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 군사편찬연구소의 큰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매우 힘들고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런 노력은 현재 우리 군이 미래의 안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천하고 있는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민족 전쟁사와 대한민국 국방사 연구의 산실인 군사편찬연구소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각고 끝에 출간된 『6·25전쟁사』 제1집이 6·25전쟁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군내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안보전문가와 정책수립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군사편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6월

국방부장관 조 영 길



발 간 사

2004년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5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15광복을 맞은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비롯된 이 전쟁은 3년 1개월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수많은 동족의 희생속에 1953년 7월 27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전쟁의 종결이 아닌 휴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남북한간의 민족전쟁의 성격과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으며, 비록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남침 이후 20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함으로써 양대 진영간의 국제전적인 성격을 띤 전쟁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오천년 역사를 통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전쟁사의 편찬은 당시 동서냉전 속에 국제관계와 민족수난의 참상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후세에 길잡이가 되게 하는 동시에 국방을 담당한 장병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교훈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6·25전쟁의 역사를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모두 11권의 전집을 발간하여 국내외적으로 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발행부수가 제한된 데다 시기가 오래되어 군을 비롯하여 참전원로, 관련학자 등 각계에서 증보판 편찬을 요망하여 왔습니다.

이에 당 연구소는 그 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최근에 전쟁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의 증언자료 등에 의거하여 기존의 전쟁사를 총 18권 규모

로 10여 년에 걸쳐 증보하기로 계획하여 현재 연구편찬 중에 있습니다.

그 첫 결실로 이번에 발간되는 『6·25전쟁사』 제1권은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여 광복 직후부터 전쟁발발 직전까지의 상황을 서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광복 직후 각종 군사단체의 조직, 미·소군의 남·북한 진주 상황을 비롯하여 미국·소련·중공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남·북한의 창군, 국군의 방위태세와 북한의 남침준비 과정 등 전쟁의 배경 내용을 소상하게 다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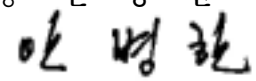
본 전쟁사의 편찬은, 미·소와 남·북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추진되고 또 세계냉전이 종식된 이후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시점에 추진되어, 사실에 의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본 전쟁사가 북한의 남침의지와 준비 과정, 소련, 중공의 전쟁지원, 한·미 관계, 우리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정부의 전쟁지도,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며,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행복·양영조·남정옥·조성훈·박동찬 연구원 등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원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소 자문위원(백선엽 위원장, 김동호, 정용근 위원)을 비롯하여 군 원로와 관련학자 등 많은 자문위원님들의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학제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4년 6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안 병 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연대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7.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8.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9.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목 차

■ 장관 서문

■ 발간사

■ 일러두기

제 1 장 광복과 한반도의 분단 / 1

제 1 절 광복과 미·소 군정 ·····3
제 2 절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33
제 3 절 남한 정부 수립 ·····44
제 4 절 북한 정권 수립 ·····69

제 2 장 미·소·중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 87

제 1 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89
제 2 절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30
제 3 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93

제 3 장 북한군의 창설 / 223

제 1 절 광복 직후의 무장세력 ·····225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234
제 3 절 군 창설 준비 ·····245
제 4 절 군 창설과 확장 ·····259

제 4 장 국군의 창설 / 311

제 1 절 광복 이후 건군 활동 ····· 313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 325
제 3 절 미 군정기 경비대 창설 ····· 338
제 4 절 건군과 발전 ····· 361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 407

제 1 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 409
제 2 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 451
제 3 절 북한 유격대의 남파와 국군의 토벌작전 ····· 486
제 4 절 38도선상의 국지 도발 ····· 498

제 6 장 북한의 남침준비 / 531

제 1 절 북한·소련·중공의 군사회담 ····· 533
제 2 절 전시동원체제로의 전환 ····· 554
제 3 절 위장 평화공세와 전쟁계획 ····· 564
제 4 절 전투배치와 전투명령 하달 ····· 606

제 7 장 국군의 방어태세 / 629

제 1 절 국방체제와 운용 ····· 631
제 2 절 국군의 방어계획 ····· 641
제 3 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 651

부 록 / 699

1. 연 표 ····· 701
2. 조약 및 협정 ····· 721
3. 관계법령 ····· 733
4. 북한군 전투명령·정찰명령 ····· 737

참고문헌 / 755

찾아보기 / 767

〈표 목 차〉

<표 1－1> 북한지역의 소련 군정 조직 ····· 23
<표 1－2> 주한 미 육군사령부 기구표(1945. 9. 8) ····· 26
<표 1－3> 미 군정청 기구표 ····· 30
<표 1－4>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분포도 및 득표율 ····· 55
<표 1－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사회단체 입후보 현황 ····· 59
<표 1－6> 남한의 토지소유 현황(1945년 말) ····· 66
<표 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 ····· 90
<표 2－2> 1950년 6월 현재 미국의 각 군별 병력 ····· 91
<표 2－3> 6·25전쟁시 미 국방 수뇌부 현황 ····· 94
<표 2－4> 6·25전쟁시 미 합동참모본부 구성요원 ····· 96
<표 2－5> 6·25전쟁 발발 당시 극동지역 미군 지휘관 ····· 111
<표 2－6> 역대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 현황, 1949～1953년 ····· 125
<표 2－7> 소련군의 지휘체계 ····· 152
<표 2－8> 소련의 대북 정책결정 인물 ····· 153
<표 2－9> 연해주 군관구 지휘부 ····· 153
<표 2－10> 제25군사령부 지휘부 ····· 166
<표 2－11> 소련 군정 조직 ····· 168
<표 2－12> 위수사령부 조직편제와 도별 담당관 ····· 172
<표 2－13> 1945～1946년 조선의용군 입북자 ····· 201
<표 3－1> 보안훈련소 ····· 230
<표 3－2> 철도경비대 편제표 ····· 232
<표 3－3> 평양학원 편성 ····· 236
<표 3－4>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제1군관학교) 편성 ····· 243
<표 3－5>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8) ····· 247
<표 3－6>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11) ····· 248
<표 3－7> 북한군 보병사단 편제표 ····· 249
<표 3－8> 제1경보병사단 현황(1946. 12. 25 현재) ····· 251
<표 3－9> 제2경보병사단 현황(1946. 12. 30 현재) ····· 252
<표 3－10> 군 직급과 급수 ····· 256

<표 3－11> 북한군 사단의 창설표(1947. 5. 17) ····· 256
<표 3－12> 인민집단군 편성 ····· 257
<표 3－13>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 6) ····· 260
<표 3－14> 북한 경비여단의 창설(1949. 5 ▫ 9) ····· 262
<표 3－15> 조선인민군총사령부 편성(1948. 2. 8) ····· 266
<표 3－16> 북한군 사단의 증편표(1948.10 ▫ 50. 6) ····· 279
<표 3－17> 북한군 전차여단 편성 ····· 285
<표 3－18> 북한 해군 편성 ····· 291
<표 3－19> 북한 해군군관학교 편성 ····· 292
<표 3－20> 항공사단 편성 ····· 296
<표 3－21> 민족보위성 편성 ····· 298
<표 4－1> 8·15 광복 이후 자생적인 군사단체 ····· 315
<표 4－2> 광복당시 군사학교 현황 ····· 323
<표 4－3> 국군 계급 현황 ····· 331
<표 4－4> 해군병학교 명칭 개칭 현황 ····· 334
<표 4－5> 통위부 편성 ····· 341
<표 4－6> 뱀부계획에 의한 조선경비대 창설 현황 ····· 347
<표 4－7> 조선경비대의 여단창설 현황 ····· 348
<표 4－8> 역대 경비대 총사령관 ····· 350
<표 4－9> 해안경비대 변천과정 ····· 354
<표 4－10>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 기구 ····· 356
<표 4－11> 항공기지부대 편성 ····· 360
<표 4－12> 병역 구분 ····· 364
<표 4－13> 대한민국 국방기구 편성 ····· 366
<표 4－14> 육군 편성 ····· 371
<표 4－15> 정부수립 이후 연대증편(1948. 8. 15～1949. 6. 10) ····· 372
<표 4－16> 국군 보병사단 편제표(1950. 6. 25 기준) ····· 374
<표 4－17> 6·25전쟁 당시 사단 현황 ····· 375
<표 4－18> 해군본부 편성 ····· 380
<표 4－19> 공군 편성 ····· 387
<표 4－20> 해병대 편성 ····· 392
<표 4－21> 청년방위대의 지역별 편성 ····· 397
<표 5－1> 좌익세력의 군내 조직건설 관련 주요 활동 ····· 419

<표 5－2> 미 제59군정중대 병력 ····· 426
<표 5－3> 주한미군 지휘계통 ····· 427
<표 5－4> 제59군정중대 지휘체계 ····· 427
<표 5－5> 제주도 인민유격대 계도(系圖) ····· 434
<표 5－6> 제9연대 편성 ····· 436
<표 5－7> 제11연대 편성 ····· 441
<표 5－8> 재편 제9연대 편성 ····· 442
<표 5－9> 제주도경비사령부 편성 ····· 444
<표 5－10>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작전 현황 ····· 445
<표 5－11> 제2연대 편성 ····· 446
<표 5－1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449
<표 5－13> 제14연대 남로당 조직 건설 과정 ····· 452
<표 5－14> 호남방면전투사령부 편성 ····· 467
<표 5－15> 호남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469
<표 5－16>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편성 ····· 470
<표 5－17> 인민유격대 지휘체계 ····· 489
<표 5－18> 북한의 인민유격대 남침 상황 ····· 495
<표 6－1> 조·소 협정에 의한 1차년도 지원 장비(1949. 6. 4 승인) ····· 543
<표 6－2> 애국채 및 애국미 헌납 현황(1949년 12월말 현재) ····· 558
<표 6－3> 북한군 사단의 증편(1948. 10～50. 6) ····· 588
<표 6－4> 전쟁 직전 북한군 전투편성(1950. 6. 24일 현재) ····· 589
<표 6－5> 북한군 병력 판단(1950. 6. 25일 현재) ····· 590
<표 6－6> 북한군 장비 판단(1950. 6. 24일 현재) ····· 591
<표 6－7>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1950년 6월) ····· 592
<표 6－8> 단계별 작전목표 ····· 602
<표 6－9>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이동 상황(1950. 6) ····· 614
<표 6－10>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 ····· 615
<표 6－11>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 ····· 617
<표 6－12>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 ····· 618
<표 6－13>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 ····· 619
<표 7－1> 6·25전쟁 당시 대통령 및 국방장관 현황 ····· 633
<표 7－2> 6·25전쟁 당시 각 군 총참모장/해병대사령관 ····· 635
<표 7－3> 전쟁직전 육군 전투부대 현황 ····· 652

<표 7－4> 6·25전쟁 발발 당시 후방부대 지휘관 및 임무 ····· 678
<표 7－5> 예상 접근로별 피아 병력 비교 ····· 680
<표 7－6> 6·25전쟁 직전 대대급 훈련 수준(1950. 6. 15 현재) ····· 682
<표 7－7> 전쟁 당시 육군 사단장 및 제17연대장(1950. 6. 25) ····· 684
<표 7－8> 경계태세 발령(1950. 4. 7～6. 23) ····· 691

〈지도 및 상황도 목차〉

<지도 2－1> 동서진영을 양분한 소련의 철의 장막 선 ····· 98
<지도 2－2>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 110

<상황도 2－1> 소련군의 웅기・나진 작전(1945년 8월 9일～12일) ····· 156
<상황도 2－2> 소련군의 청진・나남 작전(1945년 8월 13일～14일) ····· 159
<상황도 2－3> 소련군 북한 입북 상황(1945년 9월 초순) ····· 163
<상황도 3－1> 북한의 38경비여단 배치 ····· 262
<상황도 3－2> 간도 지방 ····· 274
<상황도 3－3> 북한군 지상군 배치(1948. 10 현재) ····· 302
<상황도 5－1> 제주 4・3사건 발발시 경비대 및 인민유격대 배치도 ····· 437
<상황도 5－2> 국군의 호남지구 반란진압작전(1948. 10. 19～1948. 10. 30) ····· 461
<상황도 5－3>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1～5. 9.) ····· 473
<상황도 5－4> 북한 인민유격대 남파경로(1948. 11～1950. 3) ····· 493
<상황도 5－5> 개성지구 작전(1949. 5. 4～6. 24) ····· 501
<상황도 5－6> 배천지구 작전(1949. 5. 17～5. 19) ····· 503
<상황도 5－7> 옹진지구 작전(1949. 5. 21～1949. 11. 22) ····· 507
<상황도 5－8> 의정부 지구 작전(1949. 5. 7～5. 8) ····· 511
<상황도 5－9> 춘천지구 작전(1949. 8. 6～8. 21) ····· 513
<상황도 5－10> 강릉지구 작전(1949. 7. 3～7. 4) ····· 517
<상황도 6－1>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 ····· 598
<상황도 6－2> 북한군 남침계획(선제타격작전계획) ····· 599
<상황도 6－3> 북한군의 전투배치 ····· 611
<상황도 7－1> 국군 방어계획(후방사단 전방전개 및 지연도) ····· 643
<상황도 7－2> 전쟁직전 국군 부대배치 ····· 653
<상황도 7－3> 제17연대 방어계획 ····· 655
<상황도 7－4> 제1사단 방어계획 ····· 659
<상황도 7－5> 제7사단 방어계획 ····· 663
<상황도 7－6> 제6사단 방어계획 ····· 667
<상황도 7－7> 제8사단 방어계획 ····· 671
<상황도 7－8> 전쟁직전 국군과 북한군의 대치상황(1950. 6. 24 현재) ····· 687

제 1 장 광복과 한반도의 분단

제 1 절	광복과 미·소 군정
제 2 절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제 3 절	남한 정부 수립
제 4 절	북한 정권 수립

제 1 절 광복과 미·소 군정

1.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38도선 획정

1) 일본의 침략과 한민족의 독립운동

한반도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구 열강과 청국, 일본 등의 문호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외세에 대항하여 조선왕조는 한동안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수하였으나, 국제정세의 조류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1882년에는 미국, 1883년에는 영국 및 독일, 1884년에는 러시아 및 이탈리아와 차례로 통상조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열강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호 개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청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였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던 이들 국가들은 한국 문제가 자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우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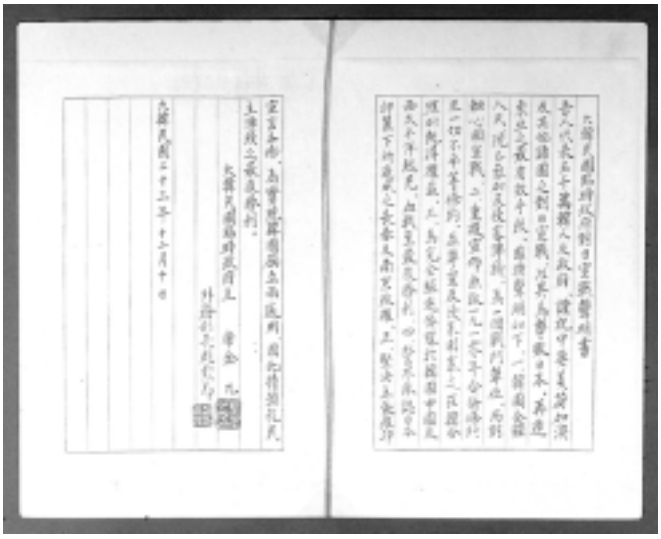
이들 세 나라의 대립은 마침내 전쟁으로 비화되어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과 러일전쟁(露日戰爭, 1904~1905)이 발발하였는데, 두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미국·영국 등 열강과 일련의 협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05년에는 을사조약(乙巳條約)[1]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에는 고종(高宗) 황제의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을 강요하였다. 이어서 1910년에는 한국의 국권(國權)을 완전히 빼앗아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자주성을 잃고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義兵)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국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국권 피탈 이후에는 독립군(獨立軍)이 일본에 대한 항쟁을 펼쳤다. 이런 항쟁은 윌슨(Woodrow T. Wilson) 미국 대통령 민족자결주에 고무되어 1919년의 3·1 독립만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으나 일제(日帝)는 이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국내에서의 항일독립투쟁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지고,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나가게 되어 그 활동 무대는 미국, 소련, 중국 등으로 분산되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지도자들은 그 해 4월에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의정원(大韓民國議政院) 회의를 열고 국호(國號) 및 관제(官制)를 의결하여 그 해 4월 13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2]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한층 조직적이고 통일성 있는 항일투쟁을 시작하였다.[3]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크고 작은 항일운동은 일제의 막강한 무력 진압에 의해 그 성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반면에, 국외에서의 무장독립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 일본군과 직접 교전을 벌인 독립군 부대들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김좌진(金佐鎭)을 사령관으로 한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임시정부 휘하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및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등이 대표적인 부대들이었다. 이들 독립군은 만주지역 혹은 한만(韓滿) 국경지역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을 습격하는 등의 유격항쟁을 펼쳤으며, 1920년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와 청산리전투(靑山里戰鬪)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자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도 1940년 8월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공인받았다. 또한 동북 만주와 중국 대륙 여러 곳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던 애국투사들을 규합하여 1940년 9월 17일 중경(重慶)에서 광복군[4]을 창설하여 항일투쟁을 펼쳤다.

이처럼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줄기차게 전개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對日宣戰)성명서
(1941. 12)

일본은 중일전쟁(中日戰爭, 1937)을 일으키고 곧 독일 및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후에 1941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를 국권 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여 1941년 12월 9일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고 연합군과 협동으로 대일전(對日戰)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중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중국군과도 연합작전을 하였다. 또한 1943년 6월에는 영국군 총사령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인도, 미얀마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주로 대적선전(對敵宣傳), 포로 심문, 적지(敵地) 정찰 등의 활동을 통해 일제에 대항하였다. 전쟁 기간동안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물자를 충원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극도의 억압과 수탈행위를 자행하였는데,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이런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2) 전후(戰後) 처리를 위한 국제회담과 한국문제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독립 달성의 가능성 여부는 연합국과 일본의 전쟁 결과에 달려있었다.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 고전하던 연합군은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1942년 중반부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전황이 바뀌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측은 최종적인 승리를 예상하면서, 차후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과 종전(終戰) 이후의 평화 및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게 되었다.

1943년 3월에는 워싱턴에서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헐(Cordell Hull) 국무부장관, 그리고 영국의 이든(Anthony Eden) 외무부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전후 아시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동안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 대만(臺灣) 등의 반환과 한국 및 인도차이나에 대한 신탁통치를 논의하였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수뇌들이 한국문제를 공식적으로 취급한 최초의 회담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Winston S. Churchill) 영국 수상 및 장개석(蔣介石) 중화민국(中華民國) 총통이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종전 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전후 일본 점령지 처리에 대한 기본 구상과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 11. 27)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상의 모든 도시, 중국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영토와 강압적으로 탈취한 그 밖의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은 한국인이 처해 있는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in due course)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장개석, 루스벨트, 처칠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5] 이 선언으로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보장을 받았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원칙만 명시되어 있었을 뿐 그것을 시행할 순서와 절차는 명기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신탁통치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내에서는 대전 후 한국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문맹 상태이며 가난하고 정치적 경험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후진적이고 미개할 뿐 아니라, 일제 지배에 의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독립과 신정부 수립에 대한 역량 및 준비를 갖추지 못했고, 일본 점령기의 강압정책 때문에 지도력 부족으로 재조정 기간이 필요하며, '한국이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에 의해 보호·지도되고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 평가되었다. 국무부장관 헐은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문제 해결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위해서 소련, 중국, 그리고 영국을 위시하여 미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6]

루스벨트 대통령도 한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일정 기간 정치적 수습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구에 의한 제국주의가 종식되기를 희망하여 일본 패망 후 구 식민지를 회복하려는 서구제국의 의도를 봉쇄하고자 했다. 그의 세계전략적 구상은 특정 국가가 한반도를 자신의 독점적 지배 하에 종속시키려는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연합국의 공동관리 아래 두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반도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경쟁국들의 독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예상되는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미국 자신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종의 세력균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후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에 자체 방어능력과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춘 안정된 정부의 출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일본이 한

반도를 지배하는 동안 이곳에서 한민족의 지도력을 말살하고 자치능력 생성의 뿌리를 철저히 제거하였으므로 자주적인 지배 구조가 형성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들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배 및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후에 이 지역이 긴장과 갈등의 잠재적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신탁통치를 제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반도에 독립을 부여한다는 카이로 선언으로 문서화되었던 것이다.

당초 카이로 회담에는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미·영 수뇌들은 이 회담이 끝난 직후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V. Stalin)을 별도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Teheran)에 초청하여 카이로 회담 내용을 알리면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스탈린은 카이로 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한국을 신탁통치한 후에 독립케 한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에 찬동을 표명하였다. 이로서 카이로 및 테헤란 회담은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연합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장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회담이 되었으며, 카이로 선언의 관련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문제 처리의 기본전제가 되었다.

테헤란회담에 참석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

카이로 선언의 한국 관련 조항 중에서 '적당한 절차'로 해석되는 구절은 한국에 '즉각적인 독립'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독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

과 동시에 독립이 되기를 갈망하던 한민족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었으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즉각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국은 일본의 패망 즉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얄타회담에 참석한 처칠, 루스벨트, 스탈린

1944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가 가시화되자 그 다음해인 1945년 2월 미·영·소 3국 수뇌들이 소련 남부의 크림반도(Krym Peninsular)에 있는 얄타(Yalta)에서 회동하여 패전국의 처리, 식민지의 독립, 이권의 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얄타 회담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년 후에 공표된 협정문에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시기와 그에 따라 소련이 확보할 권익이 명시되어 있을 뿐,[7] 한국문제를 비롯한 기타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정서 상으로는 한국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회담 중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전쟁 후의 한반도 신탁통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신탁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루스벨트가 필리핀의 자치 준비에 약 50년이 소요되었던데 비해 한반도에서는 20~30년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8]

얄타 회담이 끝난 후에 미 국무부는 얄타 협정을 한국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李承晩)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1905년 미·일간에 맺은 태프트-카츠라 비밀협

포츠담회담에 참석한 처칠, 트루만, 스탈린

정(Taft-Katsura Agreement)의 분노가 한국민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매도하기 위한 비밀협상을 벌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에게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지만 강대국의 전략과 협정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9]

얄타 회담 후 5개월이 지난 1945년 7월 하순에 제2차 세계대전 중 마지막이 된 연합국 수뇌회담이 포츠담(Potsdam)에서 열렸다. 이 시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하였고 일본만이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었다. 연합국측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종전을 달성하려는 목적 아래 이 회담에서는 주로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방침의 설정, 소련의 대일전 참전 시기와 미·소간의 작전 협조,[10] 미국이 실험에 성공한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멸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 일본국 정부가 즉시 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소도(小島)들에 국한된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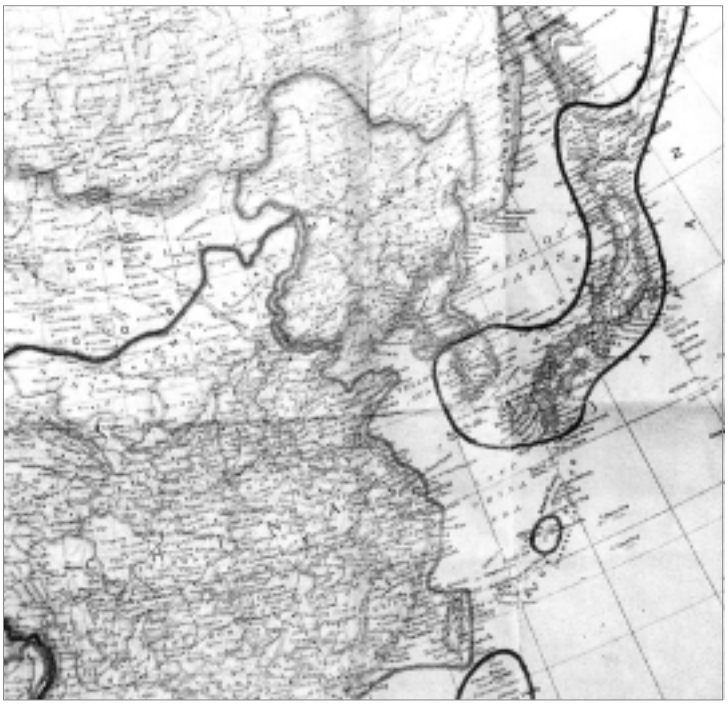
이것은 미·영·중 3국이 서명한 최후통첩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교섭의 여지가 없는 이 선언을 즉시 거부하는 동시에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3) 북위 38도선에 의한 분단

1945년 5월 초 독일이 항복한 후 연합국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였다. 일본이 연합국측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미국은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8월 6일과 9일에 일본 본토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岐)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소련도 8월 9일 선전포고와 더불어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광복군의 일부를 미국전략정보처(OSS)의 훈련반에 참가시키고 대일공작반(對日工作班)을 설치하였다. 또 광복군 정진대원(挺進隊員)들은 미 육군성의 지원으로 중국 부양(阜陽)과 서안(西安)에서 공수작전 등의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한국 국내로의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인 8월 10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의사를 표시하였다. 연합군측의 총공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항복은 그동안 원폭을 투하하고 일본 본토 진격까지를 준비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황의 급속한 진전에 대처해야 할 부담감과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다. 특히 일본에 선전포고한 소련의 군대가 급속히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한반도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전개라는 종래의 계획을 바꾸어 이곳에서의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사적 점령이라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할 주체와 극동에서의 작전 한계선을 신속히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은 스팀슨(Henry S. Stimson)의 지시에 의해 1945년 8월 11일 국무-육군-해군부 3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에서 착수되었다.



미국측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미·소 간의 분할선으로 북위 38°선을 획정한 지도

실무를 담당한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령과 딘 러스크(Dean Rusk) 대령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Geographic)」지의 1942년판 지도를 보고 한반도에서의 미·소 작전 담당 구역의 분할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이 시기에 소련군이 이미 북한의 동북부를 폭격하고 있음에 반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미군은 1,000㎞ 떨어진 일본의 오키나와(沖繩)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만일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군이 이 선까지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군이 현실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선으로서 그 지역 내에 서울·부산·인천 등의 주요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시했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선을 가능한 한 북상시키려는 희망을 의식하면서도, 그 선이 미국의 군사 능력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미국 군부는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과 현실적 능력의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딘 러스크 대령은 뒷날 미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 (1945년) 8월 10~13일 사이에 몇 차례 긴 회의를 열었다. 의제는 일본 항복의 수락에 관한 논의였다. 국무부는 미군이 가능한 한 북쪽으로 올라가 항복을 접수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군부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하고, 또 시간적·공간적 조건으로 보아도 소련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웠다.[12]

한반도에 있어서의 작전지역 분할에 대해서는 이 시기 이전에도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포츠담 회담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관리들이 소련의 대일참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육상분계선을 고려해 본 것과,[13] 1945년 여름에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미국의 합동전쟁계획위원회(Joint War Plans Committee)의 비밀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때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소련의 참여를 전제로 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일본이 갑자기 항복한 시기에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고 시도할 것이라 판단하고서 우선 그 절반만이라도 확보하려 하여 38도선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한자(漢字), 러시아어, 영어로 표기된 '북위 38도선' 표지판

한편, 작전한계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해군측 대표는 요동반도(遼東半島)의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을 포함할 수 있는 북위 39도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감격과 영광의 광복을 맞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독립투사들과 이들을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는 군중(1945. 8. 16)

이 선을 확보하기 위한 점령군이 한반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곤란하다는 육군측의 의견과 대련보다 한반도가 더 중요하다는 국무부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3부조정위원회(SWNCC)는 38도선을 극동에서의 작전한계선으로 선정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을 확보할 수 있고 신탁통치 시에 영국과 중국에 할애할 지역적 공간이 있다'는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의 논평과 승인을 거치고, 국무·육군·해군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의 결재를 상신하게 되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한반도 전역과 만주의 공업지대를 미군이 점령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당면한 기회는 장기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판단하여 그 건의를 채택하지 않고,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에서 분단하는 건의안을 아무런 수정 없이 결재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15일 이 내용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장군에게 하달하

였다. 동시에, 이 명령의 내용은 연합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영국과 중국, 그리고 모스크바 주재 미군 사절단을 통해 스탈린에게도 전달되었다. 미국의 제안에 대한 소련의 회답은 다음날인 8월 16일에 돌아왔는데 예상 외로 38도선 획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것은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되는 일이었다. 이로써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그 이남에서는 미군이 각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다는 방침이 양국 간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곧 이어, 일본군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가 신속하게 작성되었으며, 9월 2일 동경만(東京灣)의 미주리(Missouri)호 함상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은 후 발표되었다. 요컨대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국이 초안을 만들고 연합국의 동의를 받아 일본에 제시한 것이며, 대본영(大本營)이 일본 국내와 국외에 있는 일본 군대 및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군대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또한, 이 명령에 언급된 38도선은 단지 '일본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책임구역의 할당'을 목적으로 선정된 것일 뿐이었다.

38도선과 관련된 일반명령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국(帝國) 대본영(大本營)은 ……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의 결과로서 일본국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지휘관에 대하여 …… 적대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현위치에서 다음에 지시하는 …… 각 지휘관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할 것을 명령한다.
>
> 1) (생략)
> 2) 만주,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 사할린, 쿠릴열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군·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하라.
> 3) 일본국과 일본국 본토에 인접한 모든 소도(小島),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유구열도(琉球列島) 및 필리핀 제도에 있는 일본국의 선임지휘관과 모든 육군·해군·공군 및 보조부대는 미국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
> 4) 위에 지정한 각 지휘관만이 항복을 수락할 권한이 부여된 연합국 대표자이며, 모든 일본국 군대는 이 지휘관 또는 그 대리자에게만 항복하라.[14]

미주리호 함상에서 실시된 일본 항복 조인식(1949. 9. 2)

이 일반명령 제1호는, 미국과 소련 당국이 내면적으로 38도선을 군사점령지역의 경계선으로 할 것을 이미 합의한 바 있었지만,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進駐)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다. 독일 항복 이후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소련이 일단 점령한 지역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성향을 간파한 미국으로서는 그 소련의 전진을 38도선에서 일단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 미칠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으므로, 소련군의 진격을 일본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추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일단 저지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외관상으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회담에서 한반도의 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군의 항복 접수를 목적으로 지역을 구분한 일이 결국 한반도의 분할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때 군사적 편의에 따라 잠정적

으로 설정된 북위 38도선이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분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경계선으로 변하여 이 선의 양편에 각각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력에 의해 점령하려고 북한이 남침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38도선에 의한 분할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2. 소련의 북한 군정

1) 소련군의 북한 진주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포고와 동시에 소·만 국경선으로부터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태평양함대의 해군 항공기는 소련 국경에 가까운 한국의 나진·청진·웅기 등을 이미 폭격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소련 극동군총사령관 바실리예프스키(A. M. Vasilevsky)가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 극동군총사령관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소련군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일투쟁(反日鬪爭)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대일전에 참전한 부대 중에서 장고봉(張鼓峰) 부근의 소련군 선발대는 두만강 방면으로부터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였고, 한편 8월 13일에는 1개 사단 병력이 청진에 상륙하였으며, 이들은 기갑부대를 증강시켜 점령지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 무렵 미군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소련군은 미군의 선두부대가 한국에 도착하기 거의 1개월 전에 북한 지역에 진입한 셈이었다. 전차를 앞세운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면서, 또 항복한 후에도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남하하였다.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15] 대장이 지휘하는 제1극동방면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16] 5개 사단, 1개 여단의 12만 명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의 태평양함대의 해군 시설부대와 기타 부대 병력 3만 명을 합쳐서

약 1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7]

8월 15일, 당시 만주에 주재하고 있던 제25군사령부는 종전(終戰)과 동시에 「해방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 극동군 제1전선 제25군사령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소련군 제25군사령부는 만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으다. 이 호소문의 내용은 '조선은 자유국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새로운 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 소련 군대는 조선 인민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업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 조선 인민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치스챠코프의 그 성명은 소련군이 아직 한반도의 어느 곳도 점령하기 이전에 소련군의 지휘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한국인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그는 한국에 진주할 때 내린 명령에서 '붉은 군대는 조선에서 우리 질서의 주입과 조선 영토의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때까지 공포된 소련군 당국의 포고문에서 읽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북한 주민을 극진히 존대하고 북한의 자유와 자주적인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1주일 전에야 참전함으로써 일본을 패망시키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스스로의 입장을 의식하고, 소련군 및 공산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었다. 또 그들의 북한 점령정책과 의도는 어느 포고문에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실상은 곧 이어서 실시된 강력한 북한 통제와 정치권력 장악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소련군의 북한 지역 진입은 8월 15—17일 사이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함경남도에 소련군이 최초로 도착한 시기는 8월 21일이었다. 동해안으로 흥남에 상륙한 소련군 선발대 1개 여단 병력은 전차를 앞세우고 다음날 함흥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제17방면군 참모부장과 무장해제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어서 24일에는 치스챠코프가 그의 참모들을 이끌고 비행기로 함흥에 도착하였다.

평양에 소련군 선발대가 처음 들어온 날은 8월 24일이었다. 치스챠코프는 평양 도착 연설에서 소련군은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한국에 왔으며,

'우리의 질서를 당신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과 당신들 인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8월 26일에는 약 3—4,000명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였다. 그날 밤 치스챠코프 장군은 조만식(曺晩植)과 현준혁(玄俊赫), 그리고 일단의 일본인 현지 간부들을 모아놓고 '26일 오후 8시 부로 평안남도의 일본 행정은 소멸하며,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정권을 인수한다. 모든 기관들은 인민정치위원회에 의해 접수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서 평안남도의 도정(道政)이 조만식 주도의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리하여 8월 27일부터 이 기관이 도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관서, 경제기관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새로운 한국인 기관장과 간부들이 임명되었고, 여기에 실권을 행사하는 소련군 장교가 고문관의 이름으로 배치되었다.

평안북도의 경우 신의주에 소련군 선발대가 도착한 날은 8월 27일이었고, 치스챠코프는 8월 30일 이곳에 들어왔다. 다음날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유력자 및 한국인 유력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일본인들에게 '평안북도의 행정 기타 일체를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18]

한편, 소련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하면서 본대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8월 25일에는 38도선을 넘어 개성까지 진출하였다.[19] 또 26~28일에는 해주·신막·복계·김화·화천·양양까지 이르러 38도선 이북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20] 이때 소련군의 1개 소대 병력은 38도선 이남인 춘천에까지 침입하였고, 이 지역 주민들이 환영회를 베푸는 등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정 이양 공작을 하기까지 했다. 또 평강 및 화천에 진주한 소련군은 미군이 춘천에 들어오기(9월 20일)까지 매일 이곳에 내려오곤 하였다.

38도선에 이른 소련군은 이 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여 남북으로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남행 열차 운행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소련군이 38도선 북부의 남단인 금교와 신막에서 경의선 운행을 정지시킨 날은 8월 25일이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남북을 잇

는 경원선 등 철도와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 및 통신을 제한 및 정지시켰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원선(서울－원산) : 원산-금곡까지 운행 제한(8월 24일)
경의선(서울－신의주) : 신의주-신막까지 운행 제한(8월 25일)
토해선(토성－해주) : 운행 정지(8월 26일)
사리원선(사리원－해주) : 운행 정지(8월 26일)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통이 차단되는 발단이 되었는데, 광복으로부터 38도선 폐쇄까지는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미군이 아직 한반도에 진주하기 이전에 전격적으로 북한 지역 일대에 진출한 소련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방으로 진출하고, 그들의 영향하에 자치단체를 조직케 하여 그 지방의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로마넨코(A. A. Romanenko) 정치사령부는 은밀히 그들 단체를 감시 또는 조종함으로서 이 때부터 그들의 본색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북한에 진주할 때 소련측은 한국인 2세를 대동하였으며, 그들을 이용하여 북한 내의 세력 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갔다. 이런 기미를 탐지한 북한의 유력 인사들은 이때부터 38도선 이남으로 피신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점령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대가 진주하였는지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전투부대가 왔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위원들이 왔으며, 세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뒷받침할 소련계 한인 집단이 들어왔다. 4단계 점령이었던 것이다. 또 그들이 기도했던 바는 북한에 진주한 직후 치스챠코프 소련군사령관의 이름으로 공포된 다음과 같은 포고문에서 읽을 수 있다.

조선인민에게

조선인들이여! 소련 군대와 동맹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침략자를 구축하였습니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으며 이것은 다만 조선역사의 제1페이지에 불과한 것입

니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도 근면한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입니다. 일본 통치하에서 살아온 고통의 시일을 추억합시다.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당신들은 일하였습니까.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은 잘 압니다.

(중략)

조선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을 발휘합시다. 조선인의 훌륭한 민족성의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합시다. 진정한 사업에 의해서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을 계획하는 자만이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인이 됩니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21]

도처에 나붙은 이러한 포고문은 당시의 북한 주민에게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통상적인 선전·선동 술수가 그러하듯이, 이 포고문은 그들의 본 의도를 은폐하려는 한낱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을 조직적으로 적화하려는 소련의 계획은 애초부터 고도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실상이 곧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2) 북한에서의 소련 군정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8월 26일 평양에 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군정실시 기관으로 로마넨코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에는 정치·경제·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도·사법 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가 있었으며 군사회의(정치사령부)의 별도 통제를 받았다.

소련군은 군정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하는 한편 38도선 일대에 초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교통·통신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

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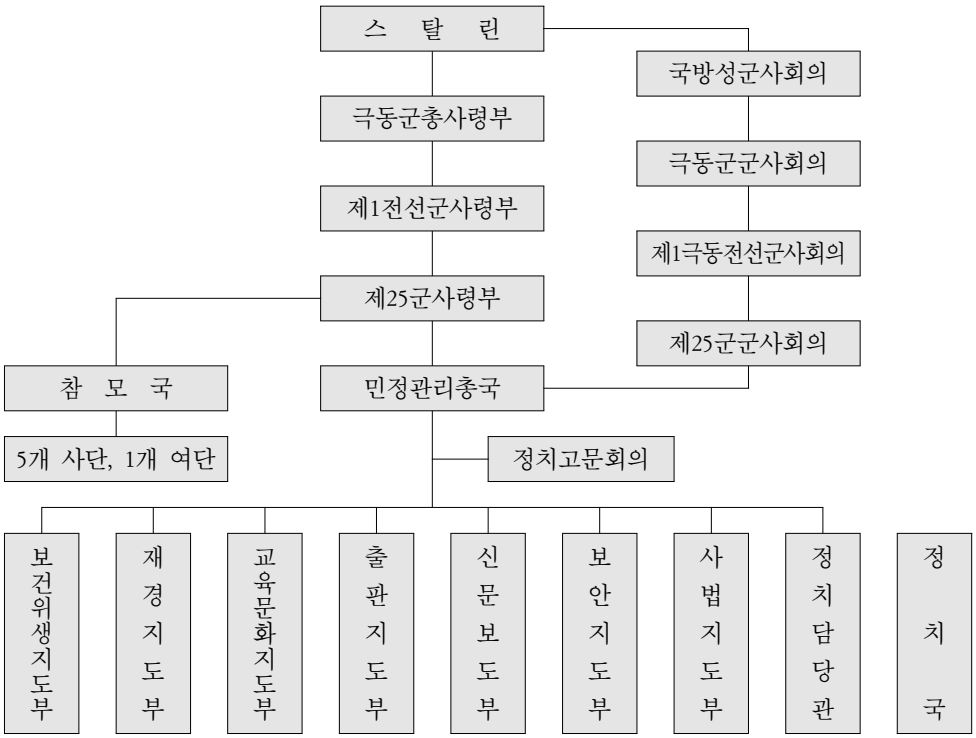
소련군은 가는 곳마다 같은 방법과 수단으로 각 도에 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그 곳에는 반드시 치스차코프 장군이 직접 나타났다. 8월 25일 소련군 선발대의 진남포 진주에 뒤이어 진남포 인민정치위원회가 결성되고(9월 2일), 소련군이 의주에 진주한 며칠 뒤인 30일에 치스챠코프 장군이 신의주 철도호텔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지역에서도 도민(道民)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고 있던 민족주의자 이유필(李裕弼)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반하여, 부위원장에는 공산주의자가 임명되었다. 그후 치스챠코프가 해주에 나타난 것은 9월 8일이었다.[22]

북한에 진주해 온 소련군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지방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조직된 것처럼 가장하고, 한국인을 진심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애썼다. 각 지방마다 자치 단체의 명칭을 조금씩 달리하게 한 점이나 치스챠코프 장군이 반드시 참석하여 일본인 대표들에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소개한 점에서 그런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해방과 동시에 이미 다수의 자치단체들[23]이 결성되었는가 하면,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24] 그 중에서도 먼저 조만식[25]을 중심으로 평양에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가 결성되어 해방 이후 정부 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 도의 중심 도시에 속속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북한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치스챠코프 장군은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여 평안남도에 설치된 인민정치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어서 각 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26] 이것은 소련 군정이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는 기도를 숨긴 채, 한민족이 주인이 되는 조직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는 고도의 술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8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도별(道別)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도별 인민위원회는 일본인 관료로부터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모든

<표 1-1> 북한지역의 소련 군정 조직[27]



국가기관을 접수하고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인을 기용하였지만 소련군 장교를 고문역에 임명하였는데, 그들이 입북시 함께 들어온 소련계 한인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군정 당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 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소련 군정 당국은 10월 14일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소련군 대위 김일성(金日成)을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웠으며,[28] 이때부터 김일성이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공산당으로 하여금 민족주의자들을 말살하게 하려는 공작을 진행하자, 이에 분노한 조만식 등 북한 5도

민족주의 세력 대표자들은 북조선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이들은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11월 18일,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의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조만식의 지도하에 두었다가, 그 후 12월 17일에는 김일성을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그를 정점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의 군정이 실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 군정의 하수인 역을 담당하는 김일성을 제1인자로 한 공산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 군정 당국은 이 세력으로 하여금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게 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주려는 전략을 폈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의 공산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포섭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여기서 소련 군정에 협조하는 동조자는 포섭하고, 비협조자들에 대해서는 남한 탈출을 방조하거나 이들을 구금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숙청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경제문제와 북한으로부터 남하하는 피난민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하는 미 군정 당국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진력하였다.

3. 미국의 남한 군정

1) 미군의 남한 진주

일본이 항복하고 한반도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통보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John R. Hodge) 중장 지휘하의 미 제24군단(제6·제7·제40보병사단)을 한국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진주시켜 이 곳의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였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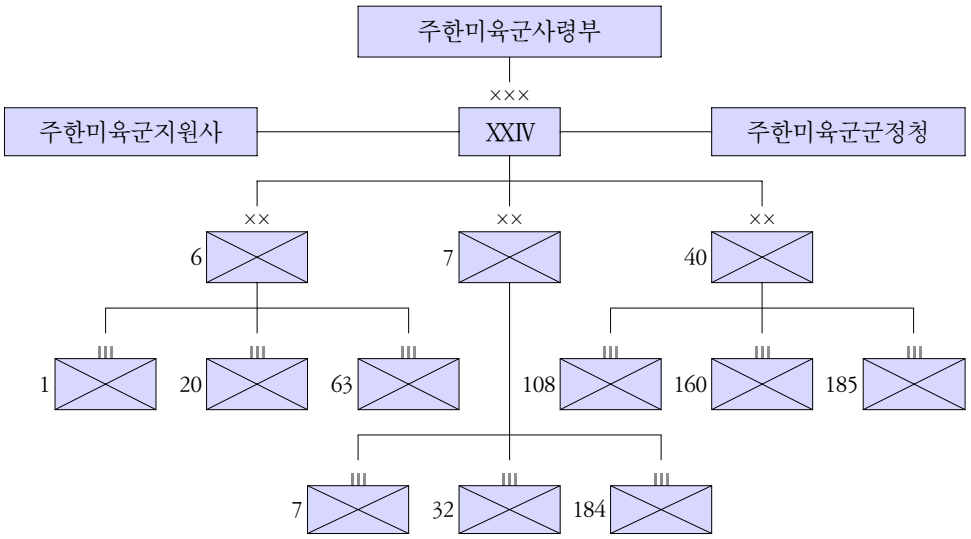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에 입성하는 미군 (1945. 9. 9)

미군 진주후에 서울에서 철수하는 일본군 (1945. 9. 9)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남한지역 점령군사령관으로 제7보병사단과 함께 9월 3일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9월 8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30]

미 제24군단 제7사단이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그리고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으로 진주한 이후인 9월 말에는 미 제40사단이 경상도 지방 일원에 배치되었으며, 10월 16일에 도착한 미 제6사단은 전라도 지방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 남한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7,600명이었으며, 그 편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주한 미 육군사령부 기구표(1945. 9. 8)[31]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 대한 지휘계통은 맥아더 장군[32]을 거쳐 워싱턴의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연결되었으며, 한국 군정에 관한 정책지침은 원칙적으로 국무·육군·해군 조정위원회로부터 합동참모본부를 경유하여 하달되었다.

2) 남한에서의 미군의 군정

미국측은 1945년 8월 20일 주중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중장 명의로 남한 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것임을 알리는 삐라를 공중 살포하였다. 이어서 9월 7일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는 포고 제1호·제2호·제3호를 동시에 발표하여 남한에 군정을 실시할 것임을 공포하였는데, 이때 공포된 제1호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33]

한국민에 고함

태평양 미국 육군최고지휘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포고함.

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일본 국왕, 정부 및 대본영의 명에 의하여, 또한 이에 대신하여 서명된 항복문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지역을 점령한다.

오랫동안 한국민이 노예화되어 있었던 사실과 한국은 불원 해방 독립될 것을 결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의 조항 실행과 한국민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의 보호에 있는 것을 깊인 인식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하여 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망한다.

본관은 본인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으로써 여기 한국의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 내지 동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한다.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제1조 한국의 북위 38도 이남 지역 및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을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기타의 명예직원 및 모든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 및 고용인은 유급 또는 무급을 불문하고 그밖에 모든 중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이 없는 한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모든 서류 및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제3조 주민은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으로 발하는 명령에 즉시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동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엄벌한다.

제4조 주민의 소유권은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없는 한 일상 업무에 종사할 것.

제5조 군정 기간 중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로 한다. 영어와 한국어 또는 일본어간의 정의의 해석의 불명, 불일치한 것은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되는 포로·법령·규약·고시·지시 또는 조례 등은 본관의 권한 하에 발표되며 주민의 이행 사항을 명기함.

이와 같이 포고함.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橫濱)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

미국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주한 미 점령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9월 9일 아래와 같은 최초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군정에 임하는 그의 기본 태도를 밝히고 한국민에게 대하여 협력과 각성을 촉구하였다.

> 한국민에게 고함
>
> 미군은 일본군의 항복을 이행하며 한국의 재건과 질서있는 정치를 실행코자 근일 중 귀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엄격히 실행코자 하오니 불행한 국민에게 자비심 깊은 민주국인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니 확실한 것입니다.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어 재건이 지체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은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장래의 한국을 위하여서는 평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국내에 동란을 발생할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래의 귀국의 재건을 위하여 평화적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지시함을 충실히 지키며 귀국은 급속히 재건되고 동시에 민주주의 하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시기가 속히 도달될 것입니다.[34]

이러한 포고와 성명에 뒤이어 군정 실시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며칠 후 하지 장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지도자들을 연합국의 후원 아래 중국에서 귀국시켜 정치가 안정되고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명목상의 지도체제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맥아더 장군에게 제안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해방 직후인 8월 17일에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중 미 대사를 통해 트루만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대표를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과 한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바 있었다.[35] 결국 미 군정 당국은 38도선 이남에서 미 군정이 유일한 정부이며 다른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주도해 온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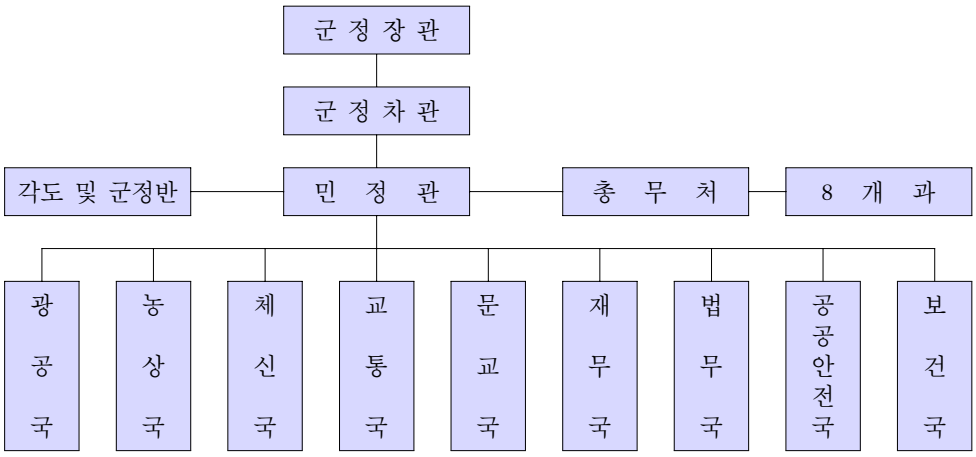
그러나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한 후에도 상부로부터 군정에 관한 지침을 받지 못한 하지 장군은 일본 총독부 체제를 잠정기간 유지시키고 이를 관리

미군정 포고문(1945. 9. 19)

감독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국인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점차 한국인으로 대체시켜 군정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韓國化 Koreanization)을 수립하였다. 미군 선발대인 해리스 준장 일행이 9월 7일 일인(日人) 정무총감과 대담할 때에도 이 구상이 논의되었다. 9월 9일 항복 접수식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아베(阿部信行) 총독과 다른 일본인 관리를 당분간 현직에 유임토록 하겠다는 하지 중장의 발표는 이러한 의도에서 취해진 결정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일본인 관리들은 그대로 유임되었다. 미 군정청은 전(前) 조선총독부에 자리를 잡고 9월 11일에 비로소 한국에서 반세기만에 일장기(日章旗) 강하식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한국인을 배제한 채 일본인 관리들을 유임시킨 이러한 처사는 한국인들로부터 일본식민통치를 연장하려 한다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지 장군은 9월 12일 아베 총독을 해임함과 동시에 제7사단장 아널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 쉭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경무국장에 임명하고, 국무부 관리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를 정치고문으로 지원 받아 미군이 직접 관장하는 군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정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새로운 군정청 기구를 출범시키고 각 국(局)의 국장을 임명하였다.[36]

<표 1-3> 미 군정청 기구표[37]



미 군정 당국은 한국민의 반대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시키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현지 실정을 알지 못하는 미군이 직접 행정사무를 관장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일본 총독부 기구를 모방하고 국장에는 미군 장교를 임명하면서도 현직에서 물러난 일본인들을 고문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보좌를 받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잠정적이나마 유지시키려 했던 미 군정 당국의 의도는 한국의 실정을 외면한 중대한 착오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후 한국 문제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던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군정정책을 한국 사정에 어두운 현지 군사령관에 일임한데서 연유하였다. 한국 점령 후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하지 장군의 입장도 곤란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책의 미비와 불일치로 인하여 워싱턴-도쿄-서울로 이어지는 군정 지휘체계에는 계속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하지 장군은 확실한 정책지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 밖에도 미군의 군정에는 또 다른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당시 한국의 산업은 위축되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여 좌·우·중도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나 산업체의 자격이나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 한국인을 거의 기용치 않은 일본 식민정책이 남긴 유산이었다. 하지 장군은 이러한 정치적 복잡성과 일본 잔재의 어려움을 처리할 방도에 대해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베닝호프는 미 군정이 한국의 장래에 관한 미국 및 연합국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 병력이 부족하고 유능한 군정장교 및 전문적인 장교가 적어 효율적인 군정을 실시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38]

이런 현상이 초래된 원인은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에게는 전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걸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들의 주요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될 수가 없었으며, 한반도의 사태 수습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은 소련의 입장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한반도 문제를 서양식 논리와 사고에서 풀어가려고 했던 데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있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 부재와 남한 사회의 혼란 가운데서도 미 군정 당국이 남한의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자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은 10월 5일에 이르러 일본인 고문들을 퇴임시키고 그 자리에 11명의 지도급 한국인 인사[39]를 임명함으로써 한국인이 참여하는 군정으로 한 걸음 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 군정 당국은 10월 9일에는 일제 시대의 악법들을 폐기하였으며, 미 군정하의 사법기관장인 대법원장에 김용무를 임명(10. 12)하는 등, 각 행정기관장을 한국인으로 대폭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군정청 행정기구에 미국인과 한국인을 함께 기용하는 양국장(兩局長)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인이 군정청에서 일하게 되어, 1945년 말에는 그 수가 75,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군정기구가 정비되고 있을 무렵인 10월 17일 다음과 같은 미국의 기본 군정지침이 맥아더 장군을 거쳐서 하지 장군에게 하달되었다.

> 한국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는 자유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 나아가 책임 있고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 있어 귀하는 미국의 대한정책, 즉 미·소에 의한 잠정 군정기로부터 미·소·영·중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 독립국가에 이르는 단계적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유념해야 한다.[40]

이로써 미국의 정책은 군정－신탁통치－독립국가로 이행한다는 것으로 분명해졌다. 이즈음 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환국(還國)하기 시작하였다. 10월 16일에는 이승만(李承晩)이, 11월 23일에는 김구(金九)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군정은 임시정부를 정부수임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좌·우익을 망라한 모든 정파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는 크게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여 공산체제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간 북한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제 2 절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1.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 미·소 대립

미·소 양국은 카이로선언의 '적당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미 1945년 10월 20일, 미 국무부 극동과장 빈센트(John C. Vincent)는 "조선이 다년간 일본에 예속되었던 관계로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신탁관리제를 실시하여 그 간 조선 민중의 독립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41]

이에 대해 우익정치세력은 물론 좌익세력도 반대했다.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회'는 "조선민족은 4천년의 장구한 역사와 혁혁한 문화를 가졌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유지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과 열의를 가진 것은 각 국이 충분히 인식할 줄 믿는다. 일본의 통치하에서도 우리는 해내외에서 수많은 동지가 혈전고투하여 해방에 노력해온 것을 그들이 시인하고 원조까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운운함은 조선민족을 모욕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통치의 절대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 때, 조선공산당 정태식은 "신탁관리문제의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선민족으로서는 절대로 찬성치 못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42]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남북을 분할 점령한 상황에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상회의를 열었다. 삼상회의에서 "조선 주재 미소 양국군사령관은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 조선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원조한다. 또 미·영·소·중 4국에 의한 신탁통

치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케 하여 조선의 장래 독립 준비, 신탁통치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조선 각종 민주적 단체와 협력하여 정치적 경제적 발달을 촉진하고 독립에 기여하는 수단을 강구한다"는[43] 내용이 결정되었다. 이는 한국에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함으로써 통치능력을 향상시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신탁통치의 비보를 접한 서울의 유흥업체는 일제히 문을 닫았다"는 기사처럼 국내에서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군정청에도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신탁통치 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44] '중경 임시정부'에서는 긴급히 회의를 열고, 신탁통치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민족의 총의에 절대로 위반된다"고 결의하였다.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45]

삼상회의 결정 직후에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조선신탁통치가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이제 막 읽고 너무나 의외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조선은 어떠한 이유로도 신탁통치를 실시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공산당에서도 탁치반대 전단을 살포하였다.[46]

그런데 1946년 1월 초, 좌익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세계 민주주의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라고 평가하면서,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순서, 과도적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의 위대한 일보 전진이다. 그것은 을사조약이나 위임통치와는 전연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과도 아주 판이할 것"이라고 이를 지지하였다.[47]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그들의 위신과 지지는 크게 추락하였다.[48]

좌익의 태도변화 후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좌우익이 각각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민주의원'으로 양분되어 정치세력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었다. 좌익은 한국의 해방이 스스로 획득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여 탁치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중요성을 내세워 탁치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이와는 달리 즉시 독립을 주장하여 왔던 한국민족의 열망

을 바탕으로 한 김구(金九)와 이승만(李承晩) 등의 우익세력은 "신탁통치가 웬말이냐, 반탁운동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해방직후의 정계 상층부만의 대립과 분열이 민족의 대립과 분열로 확대되었다.[49]

신탁통치 결사반대(1945.12)

국내세력의 양분 속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공동위원회는 미·소 양 주둔군 대표들이 삼상회의 결정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남북통일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과도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였다.

1946년 1월 16일부터 공동위원회의 예비회담이 소련측 위원으로 스티코프(Terentii F. Shtykov) 중장, 로마넹코 등과 미국측 대표로 하지(John R. Hodge) 중장,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소장 등이 참가하여 1개월 안에 미·소 양군으로 조직된 공동위원회를 서울에 두고, 위원회는 미군측 5명, 소군측 5명으로 조직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50]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다. 당시 한 언론은 "동회의가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는 만큼 그 추이는 자못 3천만 민중의 주목의 집점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천만의 감격과 흥분은 격앙되고 있다"고[51] 공동위원회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을 전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할 조건, 순서와 실천에 관한 순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기구와 조직원칙 등 제안, 장래 임시정부의 정강, 법규문제에 관한 준비토의 등을 위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52] 미・소가 협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회담의 진행절차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결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의 의도는 제5호 공동성명의 해석을 둘러싸고 드러났다.[53]

1946년 4월 18일 발표된 제5호 공동성명에서 공동위원회 사업의 첫 순서인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과의 협의할 조건에 대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과도정권으로서의 조선림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원조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협의의 대상을 삼는 조선민주주의 정당급 사회단체는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이번 결의문에 포함된 선언서를 시인하여야 한다. 선언서에는 막부삼상회의결의문중 조선에 관한 제1절의 목적을 지지하고, 제2절의 협의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제3절 정치적 경제적 진보에 대한 원조(신탁)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는데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54] 즉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하였다.

이는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중장이 공동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공동위원회의 과업은 조선인민들이 국내의 부흥과 민족민주주의화 실천사업을 능히 실행할 그런 민주주의적 조선림시정부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각 민주주의적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단결의 토대 위에서 창설되어야 할 것"[55]이라고 연설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소련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서명하였다. 우익 정당과 사회단체는 '제5호 성명' 속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후 하지 장군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에게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보장한다는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우익세력의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되 탁치를

전제로 한 일체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고 결정하였다.[56] 그러나 소련은 탁치반대세력의 공동위원회의 참가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휴회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후 1946년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정부이며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승만에게 제의하였고, 1947년 초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신정부수립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미 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57] 이미 1946년 6월 초, 이승만은 정읍에서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여건에 비추어,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58] 1946년 12월초, 그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의 폐기와 유엔이 한국문제를 떠맡아 한국의 즉시 독립을 미국정부와 여론에 호소하였다.[59]

한편, 미국과 소련은 휴회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을 계속하였다.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소련 주둔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중장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고, 하지 중장은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대상에서 참가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에 조성환(曺成煥), 조소앙(趙素昻), 김성수 등이었다.[60] 이에 맞서, '민주주의민족전선'·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개 단체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미·소간의 교환서한에 대하여 신탁통치를 반대해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끝까지 배제시켜야 한다고 성명하였다.[61]

이러한 갈등 속에 과거에 반탁운동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단체를 임시정부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다는 선까지 소련이 양보하면서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6월 7일, 미

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에게 ① 모스크바결정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신서를 제출하는데 합의하여, 11일 공동성명 제11호를 발표하였다. 공동위원회는 선언문과 자문서 등을 정당 사회단체에게 배포하였다.[62]

이에 따라, 남한에서 425개, 북한에서 38개 등 모두 463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협의를 신청하였다. 이를 정파별로 구분하면, 우익 158개(51.3%), 좌익 108개(35.1%), 중간파 42개(13.6%)였다. 북한에서 제출한 단체는 전부 좌익이었다. 각 단체들의 회원 수를 살펴보면 모두 7,5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남북한 총인구 3,000만 명을 훨씬 넘어서 과장과 중복이 심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를 재정리한 소련측 분석에 따르더라도 좌익 1,445만 명, 우익 1,248만 명, 중간세력은 1,151만 명에 이르렀다.[63]

그러나, 여전히 미·소 양측은 협의대상이 될 정당사회 단체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음을 자문단체의 명부작성에서 드러냈다. 소련은 정당사회 단체 가운데 삼상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와 삼상회의 결정을 반대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7년 6월 27일 회의에서 300만 명의 회원을 가졌다는 8개 우익 정당을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28일에는 1947년 1월에 조직된 반탁위원회에 속한 35개 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다시 주장하였다. 7월 12일에도 반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익정당의 배제를 요구하였다.[64] 이는 앞으로 구성될 임시정부에서 좌익주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만일 우익을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게 되면 한반도에 좌익정권이 수립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였다.[65] 1947년 9월,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J. Jacobs)는 국무장관 마샬(George Marshall)에게 "한국에 좌익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공동위원회를 진척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66] 즉 미국입장에서는 소련안으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과도정부를 과연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지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협의대상 선정문제로 결렬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미·소 협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편의 이익도 침해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분할 통치'에 의한 세력균형을 선택하였다.[67]

2.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협의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미·영·중·소 4대국 회담으로 한국문제를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중국은 4개 국 회담 초청을 받아들였으나 소련은 그 회담이 모스크바 협정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다.[68]

미국은 모스크바협정 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이미 1947년 초부터 트루만 행정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점차 포기하고, 남한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7년 2월, 민정합동위원회(JCAC)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면 유엔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7월 하순, 국무부·육군부·해군부 대표로 구성된 3부조정위원회(SWNCC)에 의해 설치된 한국문제특별위원회에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이 제안되었다.[69] 9월 1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이는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철군 후 남한의 안전보장도 가능한 방안이었다.[70]

미국안에 맞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대표단은 한국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문제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조선인민이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동시 철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1947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1948년 초 동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후 그 치안군이 전 한국의 치안을 보장하기를 기다려 미·소 양군이 철퇴할 것을 주장하였다.[71]

미·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남북협상을 앞두고 문화인 108인 성명에서 "미소양군은 동시에 철병하여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에게 맡기라고 한 소련의 제안은 대경대법(大經大法)이다. 작위가 아닌 한에서 반대가 있을 수 없겠거늘, 미국의 묵살하에서 소련의 일방적인 성명에 그치었고, 남북을 통한 총선거로 통일정부의 수립을 기한다고 한 유엔의 경정도 명정언순(明正言順)이라 소련의 참가하에서 이대로 추진되는 한 이의가 있을리 없겠거늘, 필경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 자신의 기록에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평가하였다.[72] 그러므로 이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었고, 국내에서도 정치세력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달랐다. 이 때문에 조소앙은 좌찬탁(左贊託) 우반탁(右反託)의 대립으로 좌철병(左撤兵) 우주병론(右駐兵論)의 미론(迷論)을 재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73] 그러나 1947년 하반기부터 국내 세력은 유엔감시하의 총선과 선철군 총선론으로 대립하였다.

미 군정측은 소련안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한국인의 자주적 정서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우려하였지만 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철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74]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지지하였다.[75]

중간세력 가운데, 김규식(金奎植)은 주둔군의 철퇴가 원칙적인 것이지만 아무런 선결조건의 언명도 없이 철퇴만 하자는 것은 우롱이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미국이 북한군대에 상응하는 군대를 양성하지 못하면 북한군대가 침입하여 공산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충실히 할 것으로 요망하였다. 박건웅(朴建雄), 원세훈(元世勳) 등은 외국군 주둔이 진정한 완전독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외군철퇴를 주장하면서 철병 후 걱정은 민족내부의 결정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근로인민당, 사회민주당 등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선철병(先撤兵) 후총선거를 주장하였다.[76] 이러한 양상은 중간세력의 노선을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좌익측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이 "미국의 식민지가 될 남한 단독정부를 강제로 수립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 한국전역에 걸쳐 실시될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라고 강조하였다.[77]

유엔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미 군정은 이제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드골, 중국에서 장개석(蔣介石) 등과 같은 우익지도자들과 함께 남한만의 정권이라도 세우려고 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유엔총회는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정부수립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도록 정당한 한국대표를 초청하고, 이를 위하여 9개국으로 구성되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설치하며, ②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며, ③ 수립된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고, 점령당국의 군대철수를 위하여 점령국가와 협의하며, ④ 위원단은 사태진전에 따라 유엔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78] 한반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소련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동맹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했다. 위원단은 오스트렐리아·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1948년 1월 8일,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유엔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여 12일부터 덕수궁 석조전에서 동 위원회를 열고 인도대표 메논(Crishna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13일에는 한국인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하고 남북을 통한 전 한국의 총선거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메논 의장은 하지 중장을 요담하고,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이 소련점령하의 북한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원단은 남한에서만 총회의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총회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임시위원단 중 캐나다와 시리아, 오스트렐리아 대표들은 남한만의 선거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결국 유엔소총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79] 1948년 2월 28일, 유엔위원단은 5월 9일 이전 선거시행을 발표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위원단은 총선거에 대해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전체 한

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주민을 가진 한국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하였다.[80]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을 떠났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양대 진영이 날로 대립되어 가는 정세 속에서 자유진영은 한국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을 재조직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한에서 위원단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남한 전복활동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미국은 미군의 철군 후 유엔을 남한방어의 최소한의 기제로 간주하였다.[81]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반대를 일축하고 48 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동시에 '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신한국위원단(新韓國委員團)은 7개국으로 결성되었다. 이전 '임시한국위원단' 가운데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동일하였다. 다만, 일부 대표만 달라졌다. 이 위원단의 역할은 1949년 1월 31일자 신한국위원단 공보 제1호에 따르면, ①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1947년 11월 14일자 총회 결의에 규정된 조항에 준하여 모든 한국의 국방군을 통일하도록 조력한다. ② 남북한의 물자교류, ③ 대표정부의 발전을 위한 감시와 협의, ④ 점령군의 실지철퇴를 감시하며, 또는 이미 실현되어 있을 때에 철퇴사실을 확증할 것 등이었다.[82] 그 후,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중국, 필리핀, 오스트렐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단은 전쟁직전까지도 한국 내에 군사충돌 사태를 감시하고, 한국통일과 남북 교역장벽 제거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83]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창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내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유엔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진정한 통일의 길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민의 길"을 강조하였으므로 이전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듯이 신한국위원단의 활동을 부인하였다.[84] 위원단의 보고처럼 전 세계에 걸친 미·소간의 대립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었다.[85]

제 3 절 남한 정부 수립

1. 광복 직후 한국사회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왕이 목멘 소리로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드디어 한국은 36년간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졌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되었다. 이 날을 온 민족이 얼마나 애타게 바랬던 것인가. 이제 온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바쳐서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1945년 해방은 오랫동안 식민지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한국사회를 활성화시켰다. 1년도 채 못되어 정당이 300여 개에 이르렀고, 수많은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이 분출하였다. 그 수는 1945년 10월에서 1947년 5월까지 총 2만여 개가 등장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국가권력의 공백, 미군정 시기 결사운동의 허용정책, 일제시대의 활발한 단체활동의 영향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8월 16일 1만여 명이 넘는 정치범의 석방,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 등으로 활발한 사회운동의 배경이 되었다.[86] 많은 청년들이 일제시대 관제단체, 노동수용소, 탄광 등지에서 돌아오거나 사회로 복귀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사체 가운데 비정치적인 것으로 한글을 가르치거나,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육과 문화운동단체도 있었으나, 정치적 단체가 주를 이루었다. 정치적 단체들은 일본신사 파괴를 비롯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관공서 접수, 치안 확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점차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다. 남북한을 분할 점령한 미·소의 대립은 좌우익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당시 언론도 정치이념의 지향에 따라서 우익, 좌익, 중도로 3분되었다. 『해방

일보』, 『조선인민보』, 『독립신보』 등 좌익언론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면서 다른 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이에 비하여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우익적 성향이었다. 『경향신문』, 『자유신문』, 『한성일보』 등은 당파성을 띠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 신문이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실정이었다.[87]

이 시기는 미·소의 냉전구조 아래 좌우익세력의 이념적 투쟁 속에 시민사회의 다원성, 민주적 타협, 관용성,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배양되기 힘들었다. 여러 정치세력은 자주적 민족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 보다는 이해 갈등 속에 매몰되어 자율적인 행위의 영역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해방공간이 정치적 시민권을 고양시켰지만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거나 발전시키지 못했다.[88]

정치사회의 활성화 혹은 다양화와는 달리, 경제 형편은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식량마저 부족하였다.[89] 일제시기 독립된 경제구조가 아니라 일본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경제 체제가 일시에 붕괴되면서 해방 후 남한 경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미 군정시기 일제재산과 귀속사업체에 대한 일부 불하조치가 있었으나 경제정책은 기아와 질병의 방지 및 치안에 주안을 둔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한 현상유지적이고 무계획적이었다. 또한, 원료와 자재 공급지였던 북한과 분리됨으로써 공업이 크게 후퇴하였다.

공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실업자가 범람하고 물가가 폭등하여 일반대중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다. 1943년 6월 현재, 8,998개였던 공장수가 1946년 11월에는 4,996개로 줄어들었고, 대다수 공장이 종업원의 규모가 50인 미만으로 영세한 수공업적 단계였다.[90] 1947년 당시 귀속공장 1,202개 가운데 42.6%인 512개가 적자상태였고, 1948년에 귀속공장 1,719개 가운데 17.4%인 299개가 운휴상태였다. 이에 따라 불완전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실업자의 수는 1946년에 105만여 명이었고, 1947년에는 110만여 명에 이르렀다.[91] 그 외에도 일본, 중국, 소련 등지에서 많은 동포들이 귀환하여 경제적 압박은 가중되었다. 1945년 8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백만 명이 넘은 인원이 귀환하였다.[92] 이들은 오랜 기간 조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구호물자를 배급받기 위해서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정착했다. 또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북한에서 월남한

인구는 통계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194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48만 명이 넘었다.[93]

2. 정치세력의 분열

1) 정치세력의 분열과 정당 통합운동 좌절

일제의 핍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광복을 위해 투쟁하여 왔던 독립운동세력들은 '중경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어느 단체도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고 효과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경 임시정부'는 해방 후에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독립운동 세력은 통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로 인해 단일한 통합조직을 이루지 못한 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은 김구의 표현처럼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탄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던 독립군이 조국탈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측의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 속에 빠져있을 겨를이 없었다. 당장에 36년간의 식민지 억압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초래한 혼란을 극복해야 했다.

해방의 흥분 속에서도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여운형(呂運亨)이 조선총독 아베의 요청에 의해 일본인의 생명보호를 조건으로 연합군의 진주까지 치안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활동 등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엔도(遠藤陸作) 정무총감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당시 일제하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독립운동세력은 한반도 내에 기반이 없었고 귀국이 지연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운형은 일제말에 조직한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방과 동시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치안위원회, 자치

위원회, 치안대, 보안대 등 각종 단체들을 규합하여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결성하였다.

1945년 8월말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이미 도 단위에 전부 지부가 결성되었고, 군 단위를 비롯하여 일부 면 단위까지 설치되어 그 지부의 수가 145개에 이르렀다.[94]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사실상의 정부기구'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95] 건국준비위원회가 점차 '조선공산당' 세력이 주도하게 되자, 안재홍(安在鴻)은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탈퇴하였다.

미군 진주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아서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서둘러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인민위원 55명을 선출하고, 9월 14일 내각을 조직했다. 이는 미군이 입성한 후 '인민공화국'을 기정사실로 인정받아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맞추어 지방에서도 행정기관의 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96]

이들과 대립적 입장을 띠고 있던 송진우(宋鎭禹), 김성수(金性洙) 등 보수 우익 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좌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참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경 임시정부'의 귀환만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하다가 미군이 진주하는 날 비로소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창당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타도를 외쳤다. 한국민주당은 648명의 발기인을 내세워서 결성한 후 서울에 5천 명, 지방에 5만 명의 지지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97]

당시 난립되어 있던 정당들은 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국민들은 각 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국외지도자로서 명망이 있었던 이승만의 귀국과 '중경 임시정부'의 환국을 기대하였다.

1945년 10월 5일, 각 정당의 통합운동의 일환으로 양근환(梁槿煥)의 중재 아래 '각 정당 수뇌간담회'가 열렸다. 10월 10일에는 건국동맹, 한국민주당, 국민당 등 32개 단체대표 50여 명이 '각 정당 긴급문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38선 문제, 일본인 재산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고 상설기관으로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회'를

조직했다. 10월 16일, 이승만이 귀국하자 각종 우익 사회단체들은 이승만의 지도 아래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처음에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한국민주당, 국민당 등 주요 정당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에 대한 취임을 거부하고 공산당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보수진영 연합체로 한정되었다가 이승만 지지세력으로 변하였다.[98] 협의회는 이승만의 지방순회를 계기로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945년 11월 23일, '중경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등 15명이 먼저 돌아오고, 12월 2일, 외무부장 조소앙, 의정원장 홍진 등이 귀국했다. '임시정부'는 귀환을 위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이 개인자격으로 입국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늦어졌다. 김구는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에게 "어떠한 공적 위치로서가 아닌 완전히 개인 자격으로서 귀국을 허락받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99]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을 환영하는 시민들(1945. 12)

귀국한 김구가 통합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국제적 합의에 의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 군정 이외는 여하한 정부라도 인정하지 않는 미 군정의 발표로 '중경 임시정부'는 개인의 자격만을 갖게 되었다. 비록 개인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의 귀국으로, '중경 임시정부'는 정치세력의 통일운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허헌 등이 김구와 김규식을 방문하고 '인민공화국'의 중앙위원의 취임을 요청하였으나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거부하고 '중경 임시정부' 주도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치세력들은 '중경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의 지지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였고, 한국민주당이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웠다. 인민당의 여운형은 '중경 임시정부'를 조선독립동맹과 같이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로 인식하여 배타성을 띤 법통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국내의 정치세력을 규합한 후 과도적 건국준비 조직을 결성하여 해외의 혁명세력을 포용해서 거국일치의 과도정권을 세우려 하였다.[100]

이상과 같이 국내 정치세력들은 모두 통일된 단일정부의 수립을 바랬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했다. 그들이 서로 대립한 이유는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데에 있었다.[101]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점령한 사실이 남북분단의 결정적인 근거였지만, 또한 해방 후 모든 정치세력이 완전한 자주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좋은 기회였으나, 통일된 운동노선을 형성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의 실패

좌우합작운동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좌우익의 편파적 노선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이 필요하다는 여운형과 김규식의 논의와, 소련과 협상을 재개하고 남한에서 미국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 군정의 의도가 맞물려서 추진되었다. 1946년 6월 30일, 미 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좌우합작노력에 공식적인 지지를 나타냈다.[102]

당시 이승만이나 김구 등 우익세력은 신탁통치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일으켰고, 소련에도 적대적인 입장을 띠었다. '중경 임시정부'는 탁치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자율적인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좌익세력 또한 미 군정과 우익세력의 견제를 받아서 쇠퇴되어 갔다. 그러나, 중간세력들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를 계기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와 미·소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주노선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식민지 시기에도 민족주의와 협동전선을 표방한 경우가 있었다. 1920년대의 중국에서 민족유일당운동과 국내의 신간회운동, 1930년대와 1940년대의 대일전선통일동맹, '임시정부'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103] 이러한 여러 좌우합작운동은 좌우익이나 세력내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해방 전까지 단일한 통일전선의 결성에 실패하고 말았지만 각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념적 수렴이 이루어져서 해방 후 재차 좌우익의 통합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46년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 5원칙[104]과 우익 8원칙[105]을 절충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정부 수립,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유조건 몰수·체감매상, 친일파 처리안은 입법기구에서 처리, 입법기구 구성 등 7원칙을 발표하였다.[106]

'합작 7원칙'에 김규식, 여운형, 박건웅, 장권, 원세훈, 안재홍, 김붕준, 최동오가 개인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산당은 '합작 7원칙'이 단독정부를 향한 입법기구 수립이라고 비판하였고, 한국민주당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국가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재미한족연합회, 신한민족당, 건민회, 천도교청우당, 조선대중당, 한국청년회 등 많은 군소정당 사회단체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김구도 좌우합작 성립이 "8·15 이후 최대의 수확"이라고 지지하였으나 정당적 지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107]

좌우합작운동에 이러한 지지는 이 시기에 좌우이념 대립과 미·소갈등이라는 냉전질서를 벗어나서 민족 스스로가 단결하여 정치적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려는 다양한 중간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했다. 이 때, 반드시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

았더라도 좌우합작이나 중간노선을 모색하는 지식인도 등장하였다.[108]

좌우익과 구별되는 독자세력으로서 인민당이나 신민당 및 국민당은 지지세력으로 노동자, 농민, 양심적인 인텔리나 자영업자 소시민 등 이외에도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였다. 안재홍은 해방 후 한국사회가 일제의 질곡으로 지주와 자본가, 노동자, 농민 등 전 민족이 초계급적으로 굴욕과 피착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엄정한 경제적 토대에 의한 계급대립, 분열이라는 기본조건이 소멸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초계급적 통합국가론을 주장하면서도 우익주도하의 좌익의 협동연합을 의도하였다.[109]

미 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가 중간정당으로 발전하기를 원해 입법의원을 설치하여 그들의 세력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군정장관의 토지개혁법안의 부결, 부일협력자법안 인준거부로, 좌우합작위원회는 해체론이 대두할 정도로 존재이유가 없어졌다.[110] 미국은 중간세력의 연합정책과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던 세력과 그 지지세력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이 되어서 정당사회단체의 통합을 모색하고 1947년 12월,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민족자주연맹은 당시 한국사회에 중간계층의 미발달로 지지기반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111]

한편, 반탁을 주장했던 우익진영은 한반도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자, 유엔의 감시아래 총선거가 실시되면 그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될 것으로 여겨서 크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총선거의 의미를 두고,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승만은 남한만의 선거를 뜻한 반면에, 김구는 남북한 총선거를 상정하였다.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의 주장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에서 그를 지지하였다.[112] 이로써 반탁진영이 분열되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유엔위원단을 방문하고 남북협상 방안과 양군철병 조건 및 시일의 협정 공포 등을 제안하였고, 유엔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2월 6일,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안을 유엔한국위원단에 제출하였다. 2월 10일, 김구는 "3

천만동포에 읍소하노라"는 성명에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미소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지도자회담을 소집할 것이니,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의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라고 사상을 초월한 단일민족의 정신으로 행동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와 달리 2월 3일, 이승만은 공산당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전 한국민은 민족자결정신을 발휘하여 가능한 지역에서의 단독선거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지역 선거'를 결정함으로써 미소대립이 커지고 남북총선의 실현이 좌절되자,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 7인은 공동성명에서, "우리 문제를 미소공위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국제연합도 해결 못할 모양이니 이제는 우리민족으로 자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협상을 구체화하였다.[113]

이에 대해서 이승만 등은 김구의 견해가 소련의 충실한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114] 1948년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두봉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의사를 전달하였다.[115]

1948년 3월 8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남북협상에 관한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5일, 김일성이 이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북한측은 '전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평양에서 4월 14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남한 지도자 15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116]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 지도자회담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김구와 홍명희가 4월 19일에 출발하였고, 조소앙 등은 20일, 김규식은 21일에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미 19일에 북한은 연석회의를 개막하여 김일성이 제시한 "유엔임시위원단을 몰아내고 유엔총회와 소총회 결정의 무효화, 단정단선반대, 소미 양군의 즉시 동시철퇴의 실현, 양군 철퇴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위에서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 등을 논의하였다.[117]

이어서 4월 30일,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과의 요인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118] 서울에 돌아온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의 성과

를 자주적 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한 단선단정(單選單政)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일치하였다고 평가하였다.[119]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이유처럼 미·소 양국간의 냉전은 한국인의 자결에 의한 통일독립의 꿈은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120] 이미 국제화된 한국문제를 미국과 소련의 합의없이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3. 남한 정부수립

1) 정부 수립과 유엔의 승인

미·소의 의견대립으로 2차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내세력 가운데 선거참여를 거부한 중간세력이 배제되고, 이미 1946년 6월 통일정부가 여의치 않으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였던 이승만과 이를 지지하였던 한국민주당은 미국의 지지를 받아 남한 정부를 수립하였다. 오랜 독립운동으로 대중적 명망을 지닌 이승만은 미·소와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현실적 국가건설노선을 추구하였다. 그는 공산주의가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국가의 건설에 장애가 된다는 반공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북한에 공산당 중심의 정권이 기능을 하고 있었고, 남한에서 좌익세력이 벌인 수많은 투쟁으로 이들과 협의하여 정부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121]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은 우익세력과 협조하여 선거준비를 진행하여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선거권이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총 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남한지역의 선거구는 부(府)·군 및 서울특별

시의 구(區)를 단위로 인구 15만 명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 25만 명 미만은 2개구 등으로 200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입후보자의 총수는 948명으로 평균 4.7 :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당 사회단체 중 10명 이하의 입후보자를 낸 정당이 43개나 되었고, 1인의 입후보자를 내세운 정당과 사회단체도 26개였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이 총 입후보자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 총 13,272개 투표구 중에서 폭동이 일어난 제주도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민들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주권을 행사하였다. 선거에는 좌익세력과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김구세력과 중간세력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민주당, 조선민주당 등이 참여하였다. 4월 14일 국회선거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선거등록률은 전체 유권자 882만 여 명 가운데 모두 805만 여 명이 등록하여 91.7%였다. 이는 좌익과 중간파의 선거불참을 고려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였다.[122]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표 1－4>에서처럼 무소속이 85명(42.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27.5%), 한국민주당 29명(14.5%), 대동청년단 12명(6%), 조선민족청년단 6명(3%)

5 · 10 총선거

<표 1-4>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 분포도 및 득표율

구 분	득표율(%)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계(%)
무 소 속	38.1	2	16	8	8	8	9	11	17	5	1	85(42.5)
독립촉성국민회	24.6	1	7	2	10	6	5	11	6	6	1	55(27.5)
한 국 민 주 당	12.7	4	2	1	-	4	10	5	3	-	-	29(14.5)
대 동 청 년 단	9.1	2	3	1	1	1	1	2	-	1	-	12(6.0)
조선민족청년단	2.1	-	-	-	-	2	1	-	3	-	-	6(3.0)
기 타 단 체	13.4	1	1	-	-	1	3	3	2	-	1	12(6.5)
합 계	100	10	29	12	19	22	29	33	31	12	3	200(1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 1973, pp. 616-617.

등이었다.[123]

이에 따라 1948년 5월 20일, 미 군정시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폐원되었으며, 같은 달 31일 제헌국회의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申翼熙), 김동원(金東元)이 각각 선출되었다. 7월 12일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후, 20일 이승만과 이시영(李始榮)을 정·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7월 24일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내각으로 국무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문교부장관 안호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국방장관은 국무총리가 겸임하였다.[124] 내각구성에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3년간의 군정기간을 거쳐 비록 통일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125]

이미 1948년 8월 13일, 미국정부는 "신정부를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한국의 정부로 간주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사실상 승인하였다.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8월 15일부터 미 군정이 폐지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한민국정부에 정부기능을 이관했다. 신생 정부가 이들 기능을 완전히 인수한 것은 1948년 12월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공포와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1949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한민국 승인을 방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8 대 6이란 압도적 다수로 유엔한국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 된 총선을 통해 수립된 한국정부를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해 주었다.[126] 이러한 국제적인 지지의 획득은 전쟁이 발생할 때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어서 미국 외에도 교황청을 포함한 오스트렐리아・벨기에・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중국・코스타리카・쿠바・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프랑스・그리스・아이티・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터키・영국・미국・칠레 등이 법적 승인을 하였고, 그 중 수개 국과 외교기관을 교환하였다.[127]

이에 대항하여 북한도 그들이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진정한 총의를 대표하는 조선 최고인민회의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통일적 중앙정부의 수립이고, 조선인민이 가지는 유일한 합법적 조선 중앙정부”라고 맞섰다. 북한은 미 군정하의 남한과 비교하면서 “북조선이 걸어 온 길은 조국발전의 유일한 길이다”이라고 주장하였다.[128)]

해방 후 우리 민족은 통합과 독립을 갈망하였으나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가운데, 남한은 강력한 반공·반소주의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하였고, 북한은 무력통일론까지 정당화하는 적대적 갈등관계로 이어졌다.

2) 정부수립 후 국내정세

(1) 정치·사회 정세

이승만 정부는 신생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민주주의 발전, 민생안정, 경제건설 등과 남북통일의 과제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남한 내 좌익이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북한이 38선 충돌을 야기하면서 남으로 게릴라를 파견하는 등 남한사회의 불안을 조성하였다. 여기에 정부수립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남북협상파 세력들의 움직임도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초래했다.

총선거 후부터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다. 한국민주당은 내각제를 채택해 이승만을 상징적인 대통령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내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민주당의 기대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또 한번 대립하였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이승만이 추천한 국무총리로 이윤영을 인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범석을 인준했다.

제헌국회의 정파별 의원구성에서 이승만 계열인 독립촉성국민회는 55명에 불과하여 정당정치에 기초한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 소속 50여 명이 구성한 이정회(以正會)가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으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1949년 1월 26일,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독립당 계열이었던 신익희 세력과 대한청년단 세력 등을 규합하여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창당하였다. 1950년 1월, 민주국민당은 내각제 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승만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129]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고 김구가 암살되면서 중도세력들은 약화되어 갔으나 남한에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은 제헌국회 내 소장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무소속의원 85명 가운데 소장파 집단은 의회 내에서 진보적 혹은 급진적 성향을 띠었다. 민주국민당이 결성되자, 한국독립당계를 중심으로 한 동인회(同仁會)와 진보적 색채의 성인회(成仁會)는 동성회(同成會)로 통합하였다.[130] 이들은 각종 법안 처리과정에서 주요 자원의 국유화, 무역과 주요 공장의 국가관리, 부의 집중방지, 분배정의 등을 강조함으로써 반독점자본의 입장을 표현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반대하였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김구·김규식의 노선을 대변하면서 보수세력의 반공주의적 통일관에서 벗어나 미군철수와 남북협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131]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잘 드러났다. 이 선거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첫 의원선거로 2년간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점과 냉전의 제1선인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실시된다는 극적인 증거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132] 또한,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1952년에 실시될 제2대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의무가 있었다.

당시 제헌국회의 임기가 끝날 즈음, 선거에서 승산이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연기를 원했으나 미국측의 압력으로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했다.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로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가해 선거구별로 최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의원 정수는 제헌국회 때보다 10명이 늘어난 210명이었다.

총유권자 수는 843만 4,737명으로 이 가운데 775만 2,076명이 투표에 참가해

91.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공산당을 제외하고, 제헌 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던 남북협상파와 중도 계열이 선거에 참가해 평균 10.5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5·10선거를 반대하던 중도세력들의 출마는 이들이 남한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이해되었다.[133] <표 1-5>에서 보듯이, 대한국민당 후보가 165명, 민주국민당 154명, 국민회 113명, 대한청년단 60명 등 39개 정당·단체와 1,513명에 이르는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였다.

<표 1-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사회단체 입후보 현황 (단위 : 명)

정당 단체	후보자 수	정당 단체	후보자 수
대한국민당	165	정경연구회	2
민주국민당	154	대동청년단	1
국민회	113	삼민회	1
대한청년단	60	신강회	1
대한노동총연맹	41	우국노인회	1
사회당	28	반공연맹	1
일민구락부	19	3·1혁명동지회	1
한국독립당	13	천도교	1
민족자주연맹	10	대한의열단	1
독립노농당	20	신사회	2
유도회	9	천주교총연맹	1
조선민주당	8	신문기자협회	1
대한부인회	5	농민회	1
대한농민총연맹	3	대한기독교침례	1
불교	3	선랑동지회	1
독립노농당	3	노농청년연맹	1
재일동포거류민단	2	기독교청년회	1
여자국민당	2	민보단	1
대한노농당	2	애국단체연맹	(1)
신생회	?	노총해상연맹	(1)
독립당	12	농민연맹	(1)
무소속	1,513	민주당	(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 1973, p. 613.

선거는 1948년 선거보다 더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134] 선거 결과, “서울시 개표 결과, 1명 이외는 모두가 신인”이라는[135] 기사 제목이 시사한 것처럼 무소속이 총 정원의 60%인 126석이나 당선되어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고,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11.4%), 국민회가 14석(6.6%), 대한청년당이 10석(4.76%), 대한노동총연맹과 일민구락부가 각각 3석, 사회당이 2석, 민족자주연맹이 1석, 기타가 3석을 차지하였다. 입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을 보면, 무소속은 1,513명이 출마해서 126명이 당선되었고, 대한국민당은 165명이 출마하여 24명 당선되었으며, 민주국민당은 154명이 입후보해서 24명이 당선되었다.

이를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안정을 가늠할 수 있게 여야를 구분하면, 여당적 입장인 대한국민당 24석, 국민회 12명, 대한청년단 1명 등 총 57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야당 세력인 민주국민당 24석, 사회당 2석, 민족자주연맹 1석 등 총 27석이었고, 그 외 2/3정도가 무소속이었다.[136] 한국민주당이나 제헌의원들이 다수 낙선되고 무소속이나 중간파에서 다수 당선되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던 성북구에서는 조소앙이 3만 4,035표를 획득하여 조병옥의 1만 3,498표에 비해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원세훈・장건상 등이 ‘뜻밖에 다수표’로 당선되었다.[137]

당선자의 분포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이 크게 패배하였다. 5・10선거에서 민주국민당의 전신인 한국민주당은 입후보자 90명 중 29명이 당선되었지만, 무소속까지 포함하여 60여 명에 이르러 원내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5・30 선거에서 민주국민당의 명의로 당선된 의원과 무소속 중에서 민주국민당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포함하더라도 40여 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민주국민당의 주요 인사이며 구 한국민주당 계열인 백남훈・조병옥・김준연・함상훈 등이 낙선하였다.[138]

선거 결과, 중간파의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중간파 당선자는 10명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139] 다만, 이들 중간파들은 남북협상이 남북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자들로 지지를 많이 획득하고 있었으므로,[140] 특히 남

북관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5·30선거에서 자신이 졌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141] 우파세력이나 이승만의 패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지지세력과 민주국민당 사이의 양자대립구도가 다정파 대립구도로 전환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 재생산되었다.[142]

한편, 해방 후 일제시대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처벌 문제는 농지개혁과 함께 건국 이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였다. 이는 단순히 친일파 개개인의 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형성된 식민지 잔재를 함께 청산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에 꼭 필요한 과제였다.[143]

일제의 질곡에서 해방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친일파의 숙청을 원하였다. 각 정치세력은 친일파 처리를 표방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1945년 9월 3일, 중경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발표한 당면정책에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賣國賊)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단할 것"을 주장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좌익세력의 결집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파의 공민권박탈을 물론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그들의 물적 기반을 박탈할 것으로 주장했다.[144]

이에 대해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국권 회복을 우선한 후, 즉 정부 수립 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145] 미 군정은 친일파를 처벌하라는 여론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등용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미 군정을 불신하게 한 요소가 되었다.

미 군정시기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은 과도입법의원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일부 친일파 의원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1947년 7월 2일 제102차 본회의에서 전문 12조로 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146] 그러나 제177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군정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부일협력자등의 법안'을 인준한다면 불가피한 경우로 부일한 현존의 우수한 관리가 제거되므로 인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47] 군정장관이 인준을 해야 비로소 효력

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수립 후, 미 군정기간 해결하지 못한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가 재론되었다. 1948년 8월 5일 제40차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반민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좌익이 도전하는 건국 초기 남북분단 상황이므로 반민족행위자의 처리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 문제 보다 먼저 정권을 회복하여 정부의 권위가 내외에 확립되도록 가장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148]

그러나, 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제59차 본 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재석 141인 중 찬성 103, 반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정시기 입법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전문 3장 32조로 이루어졌다. 법안의 내용은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 등이었다.

특별법안이 공포되자, 반민족행위자의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김인식 의원 외 19인의 긴급동의로 곧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리기구를 완성하였다. 특별조사위원장 김상덕(金尙德) 의원, 특별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특별검찰부장 권승렬(權承烈) 등을 비롯해 경기도 이기룡(李起龍), 충청남도 윤세중(尹世中) 등 각도 조사책임자를 임명하고, 40명의 특경대를 조직했다.[149]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열었다. 같은 달 8

일, 최초로 화신재벌 박흥식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을 체포하였다. 또한 노덕술, 김태석, 김덕기 등 일제하의 경찰, 헌병 등과 뒤이어 전 대동신문 사장, 대한일보 명예사장이었고 한국방공단장인 이종형이 체포되었다. 이종형은 1948년 10월 서울운동장에서 반공대회를 열었을 때 '반민법은 망민법(亡民法)'이라고 주장한 반민법 반대의 대표자였다.[150]

당시 여론은 "반민자 처단의 역사적인 사업은 진정 3천만의 부르짖음에 호응하였고 민족정기는 푸른 산맥처럼 줄기차게 소생하였다"고 반겼다.[151] 그러나 친일파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미 국회에서 처벌법이 거론되자, 친일파들은 반민법을 '망국법'이라고 주장하고, 이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산당의 주구'이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반민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친일세력들은 법의 시행을 반대하기 위해 '친일세력 처단 반대'가 아닌 '반공구국총궐기대회'를 열었다.[152]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별위원회 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시켰다. 경찰당국에 무장해제를 당한 특경대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약체화되었다. 더욱이, 6월 26일 김구가 암살되고,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이 간첩혐의로 체포됨으로써 '반민특위'는 크게 위축되었다.

1949년 7월 6일, 국회에서는 곽상훈 의원 등이 1950년 6월 20일까지였던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30일로 단축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6명, 찬성 74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153] 그 결과, 해당자의 체포와 공소를 위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8월 31일로 그 종지부를 찍었다.[154] 1949년 9월 5일, 위원장 김상덕 이하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중지하였다.

'반민특위'가 다룬 반민족 행위자 682명(남 676, 여 6) 가운데 408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였고 305명을 체포하였다. 그중 221건을 기소하여 이 가운데 재판을 받은 사람은 41명이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 1명, 무기 1명, 2년 6개월 1명, 1년 6개월 1명, 1년 3명 등 7명에 그치고 말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덕기도 전쟁 전에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자격정지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재감

자수는 56건이고 보석된 자는 64건이었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미 군정기 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로 추산한 규모에 비추어 보면[155]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었다.

(2) 경제 정세

미 군정기간의 경제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산업생산력이 80%까지 감축되었다. 예컨대, 탄광은 실질적으로 휴면상태였으며, 어업은 해방 당시 일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어구를 가져갔으므로 크게 위축되었고 납세는 제반 경제활동의 무정부상태로 말미암아 고갈되었으며, 상품부족은 인플레를 낳아 물가가 급등하였다. 그리고 400만 명의 난민이 운집하여 주택난과 실업은 심각하였다. 거기에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측이 남한경제의 타격을 주기 위해 단전을 감행하여 남한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윤번제 송전을 실시하고 가정용 전등은 하루 1~2시간으로 줄여야 했다.[156]

따라서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성립 2년째인 1949년에도 여전히 정부 세출의 60%가 적자 세출이었고 통화량이 미 군정 말기보다 2배나 팽창함으로써 물가도 2배나 뛰었다. 서울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1945년 100으로 할 때, 1946년 470, 1948년 1,392, 1950년 2,974로 폭등하였다. 공업생산 실적은 일제말기(1944)의 18.6%에 지나지 않았다.[157] 그러므로 제1공화국의 기본정책 중 국가안보태세의 강화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국민경제의 안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이 미약하고 국가산업의 기반이 취약했다.

1949년 정부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전 예산액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순사건 이후 좌익들의 무장투쟁과 38선 무장충돌이 늘어나면서 국방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므로 국가경제 자립의 근원이 되는 산업부흥자금이 약 15% 밖에 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외국의 40% 또는 50%에 비할 때 크게 부족한 규모였다.[158] 정부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

기 위해 귀속재산 불하와 농지개혁을 도모했다.

해방 당시 한국 내에 일본인이 축적해 놓은 공유 및 사유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미 군정청에서 한국정부로 이관되어 국가재정의 주요한 세입원이 되었다. 정부가 인수한 귀속재산은 기업체 2,203건, 부동산 287,555건, 기타 2,151건 등 모두 291,909건이었다.

이는 국내 재산의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가로 따진다면 5억 달러 규모로 조선은행 발행고 700억 원에 200억 원을 더 해야 하는 막대한 규모였다.[159] 전 공업 생산시설면에서 70% 이상으로 추산되었고, 공업부문 전 종업원의 45%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귀속공업 사업체의 1948년도 생산실적은 공업 전 생산액의 35%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필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귀속사업체 처리가 시급하였다.[160]

194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여 비료를 제외한 전 귀속재산을 경매방식에 의하여 일반에게 불하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 귀속재산의 처리는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했으므로,[161] 재정수입의 확대와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 과제는 전후로 이관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많은 사람들은 농지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희망했다. 더욱이, 북한에서 1946년 초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표 1-6>에서처럼 해방 당시 농지소유관계는 총경지면적의 63.4%가 소작지이고, 36.6%가 자작지였다. 한국인 지주 가운데 5정보 이상을 소유한 규모는 24.6%이고, 이 가운데 논은 33.6%에 이르렀다. 일본인의 토지 소유는 거의 10%를 차지하였다. 1946년 미 군정 당시, 남한 전체 인구 1,960만 명 가운데 농민수는 1,4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70%였다. 농민 가운데 67%가 순 소작농이고, 또 1정보 미만의 자작농을 합하면 거의 90%가 소작농이었다.[162] 그러므로 국민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경제안정을 확립하지 않고는 국가재건, 산업재건을 도모할 수 없었다.

미 군정은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1947년

<표 1-6> 남한의 토지소유 현황(1945년 말)

(단위 : 만 정보, %)

구 분	논	밭	계
1. 총경지면적	128(100.0)	104(100.0)	232(100.0)
2. 소작지면적	89(70.0)	58(56.6)	147(63.4)
1) 구일본인소유	18(14.5)	5(5.0)	23(9.9)
2) 한국인 지주소유	71(55.5)	53(51.0)	124(53.5)
3) 5정보 이상소유지주(5만호)	43(33.6)	14(13.5)	57(24.6)
4) 5정보 이하 소유지주(15만호)	28(21.9)	39(37.5)	67(28.9)
3. 자 작 지	39(30.0)	46(44.0)	85(36.6.)

자료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감』, 1948, pp. 1-29.

2월 5일, 구 일본인 소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계획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과도입원의원의 미온적이며 회피적인 태도 때문에 지연되었다가 1948년 3월 22일 귀속농지를 불하계획을 발표한 후, 20만 여 정보를 65만 여 농가에 분배하였다. 당시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의 주생산물의 연간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 하고, 연간 생산량의 20%씩 15년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했다.[163]

정부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48년 11월 23일, 농림부는 국회에 농지개혁법 초안을 제출했다. 그 목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타파하고 농가경제의 자립, 농민생활의 향상, 농업생산력을 증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164]

그러나 농림부안이 농지보상액과 농민상환액 사이의 차액을 정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지가보상율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쳤다. 새로 정부 기획처안과 국회 산업위원회안을 절충하여 1949년 6월, 지주보상율을 농림부안의 경우처럼 150%로 낮추었고, 농민상환율은 125%로 낮추었으며, 농지강매를 금지한 규정을 신설한 법안이 통과되었다.[165]

그 후 1950년 3월,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주보상과 농민상환율을 150%로 동일하게 관철시켰다. 결국,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매년 30%씩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상환하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농지개혁의 실시 시기는 '농지분배예정지통지서'가 분배대상 농가에 발부되는 1950년 4월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1950년 4월, 분배농지예정지통지서가 발부되어 분배농지일람표 작성은 1950년 3월 15일까지, 일람표의 농민확인작업은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농지분배예정통지서 발송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6월 22~23일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의 이의 신청에 대한 2차 심의까지 하였다.[166]

농지개혁의 결과, 실제로 분배된 농지면적은 32만 정보로 1949년 6월 당시의 분배대상 면적 60만 정보 중 55.2%에 불과하였다. 1945년 12월 남한 총소작지와 비교하면 39.8%에 지나지 않았다.[167] 또한, 지가보상을 통한 지주의 산업자본가로 전환도 인플레이션과 불투명한 정치정세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의 경우, 총 지주 17만 명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14만여 명이 겨우 50석 미만의 지가보상을 받은 군소지주여서 지가보상만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어려웠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가증권을 액면가의 30% 정도의 헐값으로 매각 처분하여 소비자금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지가증권의 발행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의 심화로 대부분의 지주들은 자본가계급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다.[168]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5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대상농지의 70~80% 정도에 대한 분배가 단행되면서 전쟁 당시 점령한 지역에서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완충작용을 했다. 북한은 전쟁 중 자신들의 주도 아래 농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남한 농민의 지지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남한의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169]

국내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미국이 계속 원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붕괴와 혼돈이 일어날 형편이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므로 신중하게 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한·미경

제원조협정(ECA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생문제의 해결과 전반적인 경제운영을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왜냐하면, 미 군정하의 경조원조가 긴급구호용이라면, ECA원조는 한국경제의 자립과 부흥이라는 장기적인 목적아래 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계시설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물자로 구성되었다. 즉 1948년 12월 1일, 정부가 원조물자 사무취급을 개시한 이래 1949년 11월 30일까지 1년 간 비료 71.5만 톤(총 입하량의 34.7%), 석탄 62.9만 톤(30.5%), 석유류 22.3만 톤(10.8%), 소금 17.7만 톤(8.5%), 식량 8.1만 톤(3.9%), 시멘트 7.6만 톤(3.7%) 등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1,103만 8,000달러이며, 월평균 1,057만 7,000달러로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534억 6,493만 원으로 월평균 약 50억 9,189만 원이었다.[170] 이를 토대로 기획처에서는 '산업부흥 5개년계획'과 '5개년 물동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 각 부처는 중장기 증산계획을 수립하였다.[171]

그 후 1950년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안정 15원칙'은 미국측이 제시한 일본 경제안정을 위해 시행 중이던 닷지 라인(Dodge Line)으로 알려진 '경제안정 9원칙'을 참고하여 재정 및 금융의 균형화와 건전화를 위한 통화최고발행제, 조세체계의 합리화, 정부관리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독립채산제, 수송능력의 정비 강화, 노동생산성제고 등이었다.

이 원칙이 시행되면서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사회혼란이 수습되어 갔다.[172] 그러나, 정부예산의 균형, 통화량 수축, 물가안정, 소비재 공업부문의 생산 증진 등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제 4 절 북한 정권 수립

1. 초기 공산주의 세력의 성장

일본군이 항복하고 소련군이 진주할 때 북한지역에서는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173] 이들 단체들은 주로 광복 직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자생적(自生的)으로 생겨난 것들이었다. 이 단체들은 참여하는 인물의 성향에 따라 대체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로서, 대체적으로 서북지방(西北地方 : 평안도 방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모임이 활발했던 반면에, 동북지방(東北地方 : 함경도 방면)에서는 공산계의 활동이 현저하였다.

이들 중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로는 평안남도 치안유지위원회가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곧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필요시 '건준'으로 약함)[174]로 개칭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추대되었고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 현준혁이 부위원장이 되었다. 평안북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요인으로서 민족주의자인 이유필(李裕弼)이 중심이 되어 '신의주치안유지회'가 결성되었다. 이와 별도로 황해도 해주에서는 김덕영(金德永)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황해지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형택(李瀅澤)을 대장으로 하는 '해주보안대', 김응순(金應珣)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 황해도지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도청 내에서는 별도로 한국인 직원들의 단체도 생겼다.[175]

한편, 8월 16일 함경북도 함흥에서는 정치범으로 석방된 인물들이 모여서 '함경남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10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으로서 '함경남도 공산주의자협의회'로 발전하였다. 흥남화학노동조합을 위시하여 각 공장에는 조합이 생기고 농촌에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

회 함경남도지부'가 결성되어 위원장에는 공산주의자인 도용호(都容浩)가 추대되었다.[176]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치스챠코프 장군이 8월 24일 평양의 도청사(道廳舍)에 사령부를 설치한 바로 다음날 참모를 데리고 급히 함흥으로 날아간 것도 이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함경남도 공산주의자협의회의 송성관(宋成寬), 건국준비위원회 도지부(道支部) 위원장 도용호와 부위원장 최명학(崔明鶴) 등 3명의 좌익계 인사들과 회합하고, 일본인 도지사를 비롯하여 행정, 산업, 경제, 교통, 신문사 등 각계의 대표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오늘 도용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민족 함경남도집행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소련군의 명령하에 이 집행위원회는 함경남도의 치안·행정의 일체를 담당하며, 헌병 및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관공서 기타 공공물은 이 위원회가 인수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소련군은 그들의 저의(底意)를 은폐하고 한국인 주도의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듯이 하면서 공산계열의 단체를 앞세우는 데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 지휘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산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에 비해 미약한 편이었으며, 더구나 소련과의 연계도 거의 없었으므로, 점령 초기단계에 북한 정권의 구성을 지역공산주의자에 의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점령 초기 소련 군정 당국은 지역공산주의자들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친소(親蘇) 그룹을 만드는 한편, 권위 있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제휴를 도모하는 등 인위적으로 지지 세력을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광복 직후 북한에서 중요한 그리고 널리 알려진 민족주의자는 당시 '한국의 간디'로 불리던 조만식이었으며, 그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지방자치조직인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는 상당한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소련군 사령부는 그를 북한 정권의 책임자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공산주의 운동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상황을 고려하고,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활용하는 일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를 선택했던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민족주의 인물들과

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소련군 지휘부와 건준의 접촉은 일찍이 소련군 제25군 사령부가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평양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8월 28일(또는 29일)의 회담에서 건준 대표들은 소련군 지도부에 당면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상호친선을 도모하였다. 당시의 회합에 치스챠코프가 직접 참가하여 건준 구성을 변경하고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에 대한 이견도 있다.

어떻든 이 과정에서 건준 평안남도 지부가 해체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 민족주의 진영의 인물 16명,[177]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소속 인물 16명,[178] 도합 32명을 임원으로 하는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같이 위원회가 민주·공산 양파의 동수 비율로 구성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동등하게 세력균형을 이루었으나, 사실은 우익측의 위원 중에서 좌익에 접근하는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점점 좌익측이 우세하게 되어 갔다.

소련군 당국은 조만식에 대한 북한 대중의 신망(信望)을 무시할 수 없고, 급격한 공산화정책이 그들의 과업수행에 예기치 않은 장해와 반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여 좌익의 우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좌·우 양측을 안배하는 형식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의 중요 부서를 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배로는 실제 문제에 있어서의 제반 난관이 극복되지 않았으므로, 매사에 있어서 양측의 대립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좌익측이 우익측을 꺾으면서 점차 득세하게 되었다.

황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주에 들어온 소련군 정치장교들은 기독교도인 김용순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족진영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국준비위원회 황해도지부를 이름만 '황해도 인민정치위원회'로 고치게 한 다음, 이 기구에 행정권을 넘기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9월 13일 행정권 이양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우파 인사들을 격분시켰다. 그리하여 이형택을 대장으로 하는 해주보안대는 9월 16일 황해도 인민위원회 본부를 습격하였고, 곧 바로 시가전

이 벌어졌다. 소련 점령군 치하에서 우파의 보안대쪽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간부들은 서울로 피난하게 되었다. 좌파의 인민위원회 쪽은 곧 자파 중심의 치안대를 조직했다. 어떻든 황해도에서 벌어진 이 좌우익 유혈투쟁은 곧 이어 북한 전역에서 발생할 좌우익의 유혈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북한 전역에 대한 점령을 강행하면서 남북한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조처들을 취하였다. 철도의 차단, 전화와 통신의 단절은 물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이로서 북한은 점점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는 지역으로 변해 가게 되었다.

2. 김일성의 등장과 인민위원회

광복 직후 북한에서 군정을 시작할 때 각 지방 소재 소련군정 대표들은 위수사령관들이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순수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경험이나 준비 상태의 측면에서 정치·경제 문제의 처리에 적합지 않았다. 따라서 10월초 소련민정부(蘇聯民政府)가 구성되어 이 기구가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전반을 통할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소련민정부는 1945년 10월 3일에 구성되었다. 그 책임자는 로마넨코(A. A. Romanienko)였으나 모든 활동은 슈티코프(T. F. Shtykov)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소련민정부에는 10개의 국(局 : department)이 설치되었는데, 각 국의 인원은 대부분 북한인들이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경험 있는 일본인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 국들이 북한의 각 분야를 관리하면서 각 지역에서 소련 군정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였다.[179]

한편 소련 군정 당국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조만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시 구성 중이던 행정기구의 책임자 자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기구는 1945년 10월 8일 소련군사령부가 주최한 5개 도(道)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5도행정국(5道行政局)'으로서 그들 나름의 자치기구

소련군 진주 환영대회(1946. 10. 14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북한 주민에게 소개되었다.

이며 북한 정부의 시초가 된 것이다. 조만식은 이 기구의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 군정 당국은 1945년 9월 말에 이르러 조만식 중심의 현지 민족주의 세력에 의존해서 전개하려는 대북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반공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가 소련 군정의 지시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만식과의 갈등이 증대해 가는 상황에서 소련 군정 당국은 새로운 정치적 제휴 세력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만식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대상을 물색하기도 곤란했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남한에서 활동한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헌영(朴憲永)에 대해서는 소련측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초 소련 당국이 선정한 인물이 김일성이었다. 그는 9월 말에 평양에 도착해 있었는데, 소련 군정 당국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진보세력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잘 어울리는 후보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1945년 10월 14일 치스챠코프 장군은 평양에서 열린 '소련 해방군 환영' 군중대회에서 당시 33세인 김일성을 '빨치산 지도자'인 동시에 '민족의 영웅'으로 소

개하였다.[180] 이것은 물론 과장된 것으로서, 소련군 지휘부는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해 '항일유격대'의 전설을 이용했던 것이다. 거기 모인 대다수의 참가자들에게 그는 완전히 생소한 인물이었다. 이 대회에서 5도행정국의 위원장이면서 당시 공식적인 지역 행정지도자였던 조만식과 더불어 김일성도 소련군을 환영하는 연설[181]을 했는데, 그가 이 대회에서 군중들 앞에 출현한 일은 북한 권력의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다음 단계로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18일의 기간 중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로 임명되었으며, 이로서 그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1946년 초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실이 발표되자 남과 북의 민족주의자들 및 그 동조세력들의 대중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다른 한국인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으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주민들이 반탁시위에 참가하였다.

1월초 소련군 사령부가 5도행정국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을 때 조만식을 대표로 하는 5도행정국은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조만식은 사직하였으며, 민족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위원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만식은 체포되어 '남조선 반동분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제와 은밀히 협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련군 사령부와 공산주의자들을 한편으로 하고, 민족주의자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두 정치 세력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182]

해산된 북조선 5도행정국 대신에 1946년 2월 소련 군정 당국의 결정으로 사실상 소련의 위장 정권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김일성이 이 위원회를 지휘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사실상의 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은 각 도별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일성이 위원장직에 앉게 된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북한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제거되고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이 권력

을 장악하게 되었다.

각 도의 인민위원회는 소련 점령군의 지시에 의해 수립되었고, 이것이 뒤이어 1946년 11월에는 시·군·면의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로 그 조직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조선인민의 자발적이며 민주주의적 기관'이라는 인민위원회가 소련 점령군의 전반적인 명령과 엄격한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 결정적인 정치권력은 역시 소련 군정 당국과 고문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은 1946년 11월에 각 도·시·군 단위의 제1차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곧 이어 부락단위 인민위원회 선거까지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선거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이 단일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흑백투표[183]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 의해 인민위원들이 선출되어 1947년 2월 17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소련 점령군은 소련식 정치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정치조직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초기 단계에서 소련 점령군이 정당으로 인정한 것은 공산당 밖에 없었다. 그들의 시책과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은 어김없이 소련 점령군 헌병대에 의해서 그 활동이 제한되거나 정지되었다.

3. 공산정권의 수립

1946년 여름에 이르러 신탁통치를 거쳐 한반도에 단일 국가를 건설한다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자 소련 정부는 38도선 이북에 공산주의자를 내세운 단독 정부의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 지휘부는 북한의 '소비에트화' 또는 '공산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즉 최고의 수준에서 소련지도부의 마음에 드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184]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가 한국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소련 정부는 북한에 공산 정권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인민헌법'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48년 3월 2일 북조선인민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전 한국의 주권을 주장한 인민헌법 초안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남한의 5·10선거와 때를 같이 하여 5월 1일에 이 헌법 초안을 통과시키고, 이 해 7월에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이 헌법을 북한지역에서 실시할 것'과 '이 헌법에 의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발표하였다.[185]

이 결정에 따라 그들은 8월 25일 북한 전역에서 소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이 해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성립을 선포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같은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수상으로 선출되었으며, 그가 임명한 내각이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그가 내각 성립 다음날인 9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언'이다. 그는 이 선언에서 북한 정권은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로 수립되었으며, 중앙정부는 …… 단일 민주주의 국가와 '조국통일과업'을 제1차 목표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또 그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하여 유효한 모든 법률이 '무효'이며 '위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였다.[186] 이 선언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 당국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위 조국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인 1948년 10월 12일 소련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때 소련 수상 스탈린은 "공화국 정부가 조선 사람들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으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남침'의 별칭인 '조국통일과업'을 북한 정권의 '주도'로 추진하라고 하는 공개적인 지령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스탈린이 이때 사용한 '통일'이라는 말은 '평화적인 통일'

이거나 '무력적인 통일'이거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 당국이 그것을 주도하라는 뜻이었다. 소련 정부가 북한 정권을 승인한 이후 다른 공산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소련 정부는 10월 18일 전 소련 점령군사령부의 군사위원이며, 미·소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수석대표로 활약한 슈티코프 장군을 초대 주(駐)북한 소련 대사로 임명하였다.[187] 슈티코프는 '특별군사사절단'을 이끌고 다음 해 1월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그는 대사와 군사령관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임명은 소련의 외교 관례로서는 매우 드문 일로서,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리하여 한민족에게는 광복과 함께 단일국가를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는 듯했으나, 소련의 남진(南進)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점령지 분할과 한반도에 위성국가를 건설하려는 소련의 확고한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에는 대한민국 민주 정부,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산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 고정화되고 말았다.

주 (註)

1)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의 외무성이 관할하고, 이를 위해 한양에 일본의 통감부를 두며, 또한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2) 초기에는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총리 이동휘(李東輝), 내무부장관 이동녕(李東寧), 군무부장관 노백린(盧伯麟), 재무부장관 이시영(李始榮), 법무부장관 신규식(申奎植), 학무부장관 김규식(金奎植), 의정원의장 손정도(孫貞道)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37년 이후에는 중경(重慶)으로 이동하여 활동하였다.
3) 항일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처럼 민족지도 세력이 국내외로 흩어진 것은 이후 민족 분단의 빌미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총사령부를 서안(西安)에 두고 총사령은 이청천(李靑天), 참모장은 이범석(李範奭)이 맡았으며, 3개 지대(支隊)로 편성되었다.
5) U. S. Department of State, *A Historical Summary of United States-Korean Relations, 1834-1962*(Washington, D. 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p. 10.
6) M.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A, 1983), pp. 90, 96.
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 7.
8)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 20년 부록』(1966), pp. 251-252 ; 金基兆, 『38線 分割의 歷史』(서울 : 동산출판사, 1994), pp. 66-67.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1집)』(1984), pp. 106-107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1995), p. 6.
10) 이 회담에서 미·소 양측 군사대표들은 얄타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할 경우 양측의 육·해군이 작전을 전개할 범위로 한국, 만주, 동해를 두 개의 작전지역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켰는데, 이때 한반도의 작전경계선으로는 38도선과 유사한 선이 고려되었다.
1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8 ; Roy E. Appleman,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p. 3.
1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Washington, D. C.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Ⅳ, p. 1039.
13) 미국쪽 수행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미·소 대표들 간에는 토의되지 않았다.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3-4.
14) 조선일보사 엮음, 『한국 現代史 秘資料 1백25건』(서울 : 월간조선, 1996), pp. 78-80.
15) 치스챠코프는 1900년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볼셰비키 혁명 때 적군 병사로 가담하였다. 독·소전쟁 때 제6군사령관이 되었으며, 북한점령군사령관으로 북한에 진주하였다.
16) 당시 소련극동군은 제1극동방면군, 제2극동방면군, 자바이칼방면군, 태평양함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제25군은 제1극동방면군의 동측방을 담당한 조공부대였는데, 동만주 일대의 일본군 방어지대를 돌파한 후 왕청(汪淸)·도문(圖門)·연길(延吉)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17)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 1946. 6. 20.
18) 평안북도에서도 역시 8월 26일에 결성된 '평북자치위원회'가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평북임시인민정치위원회'로 바뀌었다.

19) 개성에 침입한 북한군은 은행에서 현금(9,000만圓)을 강탈, 개성인삼(2,000만圓 상당)을 비롯하여 기타 물자를 강제 징발하는 등 이 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때(9월 10일)까지 횡포를 자행하였다.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제1권)』, pp. 55-56.
21) 위의 책, pp. 54-55.
22) 위의 책, p. 54.
23) 자위대, 보안대, 치안유지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지부 등이었다.
24)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1.
25) 당시 63세, 평양 출생, 기독교인, 명치대학 법과 졸업, 오산중학교 교장, 숭실전문학교 교수, 신간회 평양지부장.
26)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1-52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1964, 巖南堂書店, pp. 184-185.
2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9.
28)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24 ; EUSA,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90.
29) 이로써 하지 장군은 주한미군사령관(駐韓美軍司令官 CGUSAFIK)이 되었다.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3 ;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 7.
30) 미 제24군단의 선발대는 9월 4일에 인천에 상륙하였는데, 이 날은 소련군이 북한에 진입한 지 22일 만이었다.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1집)』(1984), p. 179.
32) 맥아더 장군은 연합군사령관의 직위를 갖고 있었으며, 1947년 1월 1일에 공표된 통합군사령부 계획에 의거 극동군사령관(CINCFE)과 극동미육군사령관(CGUSAFFE)의 직위를 겸무하고 있었다.
33) 위의 책, pp. 61-62. 제2호와 제3호 포고는 범죄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규정과 통화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34)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60.
3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4-15.
36) 재정국장 고오든 중령, 철공국장 언더우드 대령, 법무국장 우드올 소령, 농상국장 아던 중령, 교통국장 해밀튼 중령, 체신국장 헐리 중령, 교무국장 럭키아드 대위 등이었다.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제1집)』, p. 181.
38)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7-18.
39) 김성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인 고문은 김용순, 김동원, 이용설, 오영수, 송진우, 김용무, 강병순, 윤기익, 여운형(그후 사직), 조만식 등 11명이었다.
40)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9 ; *History of US AFIK*, pt. 2, ch. 4, pp. 57-58.
41) 『매일신보』 1945. 10. 23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출판부, 1997, pp. 67-71.
42) 『매일신보』 1945. 10. 29.
43) 『동아일보』 1945. 12. 29.
44) 『자유신문』 1945. 12. 30; 『동아일보』 1946. 1. 1.
45) 『동아일보』 1945. 12. 30.
46) 『서울신문』 1945. 12. 29; 『중앙신문』 1946. 1. 1.
47) 『중앙일보』 1946. 1. 3.
48)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 1986, p. 155.
49)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연구』, 청계연구소, 1989, p. 25.
50) 『조선일보』 1946. 2. 6.

51) 『서울신문』 1946. 3. 21.
52) 『서울신문』 1946. 3. 31.
53) 심지연, 앞의 책, p. 11;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출판부, 2003, pp. 222-226.
54) 『동아일보』 1946. 4. 19.
55) 『서울신문』 1946. 3. 21.
56) 『조선일보』 1946. 5. 3 ;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평민사, 1990, pp. 125-127.
57) 로버트 T. 올리버(박일영역), 『이승만비록』, 한국문화출판사, 1982, pp. 90-91.
58) 『서울신문』 1946. 6. 4 ; "Summary of Conditions in Korea", 1946. 6. 1-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0, p. 8.
59) 로버트 T. 올리버(박일영역), 앞의 책, pp. 90-91, 97, 113 ; 정용욱, 『미 군정기 이승만의 '방미외교'와 미국의 대응』, 『역사비평』 30, 1995 가을, pp. 310-312, 319-320. 로버트 T. 올리버(박일영역), 『이승만비록』, 한국문화출판사, 1982, pp. 93-94, 97-98, 105-106.
60) 『조선일보』 1947. 1. 16 ; 『동아일보』 1947. 1. 28.
61) 『경향신문』 1947. 1. 17.
62) 『동아일보』, 1947. 5. 22 ; 정용욱, 앞의 책, p. 404.
63) 『서울신문』 1947. 8. 2 ; 주한 미육군사령부 정보참모부, 『미군정정보보고서』 14, 일월서각, 1986, p. 319; 정용욱, 앞의 책, pp. 404-408.
64) 서용선, 『미소공동위원회 연구』, 『군사』, pp. 207-208 ;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서울대출판부, 2000, p. 131.
65) 심지연, 앞의 책, p. 19.
66) 신복룡, 『미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 : 1948-49』,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1, pp. 239-240.
67) 김계동, 『한반도 분단·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5-1, 2001. 6, p. 355.
68) 한철호역, 『미국의 대한정책(19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p. 135-136.
69) 신복룡, 앞의 논문, pp. 252-253;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1991, pp.153-156.
70) 브루스커밍스 외(박의경 역),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1943-1953』, 청사, 1987, p. 36.
71) "Committee approves Korean Commission", UN Weekly Bulletin, Nov. 11, 1947, 신복룡편, 『한국 해방전후사 논저』 1, 선인문화사, 1998, p. 390.
72) 『조선중앙일보』 1948. 4. 29.
73) 『경향신문』 1947. 10. 2.
74) 조성훈, 『남북협상파의 철군론 연구』, 『군사』 40, 2000, pp. 82-83; "SD(Marshall) to USPOLAD(Mitchell), 9 Mar 1948(Summary of Comment about Korea)", 『대한민국사자료집』 39, pp. 50-51.
75) 『동아일보』 1947. 9. 2 ; 『조선일보』 1947. 9. 12, 20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pp. 541-545.
76) 『경향신문』 1947. 9. 28 ; 『조선일보』 1947. 9. 29 ; 『독립신보』 1947. 10. 21 ; 『조선중앙일보』 1947. 11. 6.
77) 『독립신보』 1947. 11. 4 ; 허헌, 『연석회의축사』, 『북한관계사료집』 6, pp. 63-64 ; 김렬, 『북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근로자』 18, 1948. 8, p. 32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1, 1987, pp. 69-70.
78) 『조신일보』, 1947, 11. 14 ; 『동아일보』, 1947, 11. 15, 12. 8 ;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1991, pp. 175-176.
79) 김계동, 앞의 책, p. 143.
80) 강성천, 1947-1948년 '유엔조선 임시위원단'과 '통일정부논쟁', 『한국사론』 35, 1996. 6, 서울대 국사학과, p. 248.

81) 강성천, 앞의 논문, p. 263.
82)『남북통일의 구체적 방안』 1949. 3,『안재홍 선집』 2, 지식산업사, 1981, pp. 423-424.
83)『국련한위의 신사명』,『한성일보』 1950년 2월 14일자 사설 ;『서울신문』 1950. 6. 23.
84)『소위 '유엔신조선위원단'의 괴뢰극은 개막되었다』(『순간통신』 1949년 3월 중순호 No. 15),『북한관계사료집』 28, pp. 279-283.
85)『국제연합한국위원단보고서』, 1949. 9. 10, pp. 88-99.
86) 강혜경,『해방직후 청년의 초기 국가건설활동』,『숙명한국사론』 2, 1996, pp. 437-38.
87) 김민환,『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p. 325, p. 340.
88) 박형준,『해방 50년과 시민사회』, 나라정책연구원,『나라의 길』, 1995. 1 , pp. 30-40 ; 서중석,『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p. 597.
89)『매일신보』 1945. 10. 13.
90) 조선은행 조사부,『조선경제연감』, 1948 ;『조선경제연보』 1949 ; 이동원・조성남,『미 군정기의 사회이동』, 이대출판부, 1997, p. 39 ; 한국은행,『한국의 국민소득』, 1982 ; 김형기,『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p. 156 ; 공제욱,『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p. 44.
91) 조선은행 조사부,『조선통계연보』, 1948년판 ; 김형기,『한국의 독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p. 156 ; 공제욱,『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p. 44 ; 조선은행 조사부,『조선경제연감』, 1948 ;『조선경제연보』, 1949.
92) 최영호,『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p. 141.
93) 권태환・김두섭,『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0 ; 강정구,『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사회학 대회 심포지엄,『한국전쟁과 사회변동』, 1992 ; 이동원・조성남,『미군정기의 사회이동』, 1997, pp. 54-57, 59.
94)『매일신보』 1945. 9. 4.
95)『현대일보』 1946. 8. 2 ; 심지연,『인민당연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4-15 ; 심지연,『1945-48 남한 정치세력의 노선과 활동연구』,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론』 27, 1997, pp. 55-57.
96) 이기하 외,『한국의 정당』, 한국일보사, 1987, p. 33.
97)『서울신문』 1945. 12. 12 ; 심지연,『보수당의 뿌리, 한민당의 공과』, 이기하 외, 앞의 책, p. 146 ; 서중석,『한국근현대 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pp. 290-292.
98) 장원정,『1945-46년 경상남도 우익세력에 관한 고찰』,『해방 후 정치세력과 지배구조』, 문학과지성사, 1995, p. 59.
99) 정병준,『남한진주를 전후한 주한미군의 대한정보와 초기 점령정책의 수립』,『사학연구』 51, 1996, pp. 170-174 ; 한시준,『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국민대한국학연구소,『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연구』, 2003. 5, pp. 178-188.
100) 정병준,『몽양 여운형평전』, 한울, 1995, pp. 114-115.
101) 심지연,『해방의 의미와 해방정국의 전개』, 韓國政治學會 編,『韓國現代政治史』(法文社, 1995. 8), pp. 38-42.
102) 여운홍,『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p. 216 ; 이정식,『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신동아』 1987. 5, pp. 666-668.
10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도산안창호자료집』 3, 1992, p. 264 ; 도산기념사업회,『도산 안창호』, 삼협문화사, 1973, p. 6 ; 유병용,『일제하 중도파 민족주의』,『한국근현대사강좌』 9, 1997, pp. 78-79 ; 홍선희,『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 pp. 41, 47-48.
104) ①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위 속개 촉진 운동을 전개하야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며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

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함. ② 토지개혁(무상몰수·무상분여),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 급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 과업에 매진할 것. ③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팟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로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야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④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주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⑤ 군정 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조선일보』 1946. 8. 2).

105) ①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②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③ 소위 신탁 문제는 임정 수립 후 동 정부가 미소공위의 자주독립 정신에 기하야 해결할 것. ④ 임정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보선(보통선거)에 의한 전국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 ⑤ 국민대표회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⑥ 보선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야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⑦ 정치·경제·교육 모든 제도·법령은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야 국민대표회의에서 인정할 것. ⑧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법정을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동아일보』 1946. 7. 31).

106) ①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결정에 의하야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②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③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有)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야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④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야 입법기구로 하야금 심리 결정하야 실시케 할 것. ⑤ 남북을 통하야 현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로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⑥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야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⑦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독립신보』 1946. 10. 7).

107) 『조선일보』 1946. 10. 10 ; 정병준,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1993, p. 290.

108) 방기중, 『해방정국기 중간파노선의 경제사상 : 강진국의 산업재건론과 농업개혁론을 중심으로』, 『최호진박사 강단 50주년기념논문집,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3 ; 장규식, 『해방 정국기 중간파 지식인 오기영의 현실인식과 국가건설론』, 김용섭 교수 정년기년논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1997.

109) 안민세, 『몽양 여운형씨의 추억』, 『민성』 5-10, p. 70 ; 안재홍, 『한민족의 기본진로』, 조양사, 1949, pp. 59-61.

110) 조성훈, 『좌우합작운동과 민족자주연맹』, 『박성수교수화갑기념논총』, 1991, pp. 407-408.

111) 김광식 인터뷰, 『혁신계 변혁, 통일의 맥-유한종의 증언』, 『한국현대사의 증언』, 『역사비평』 1989 여름호, p. 328.

112) 심지연, 앞의 책, p. 64.

113) 『경향신문』 1948. 4. 6 ; 『새한민보』 2-9, 1948 4월 하순호; 『백범김구전집』 8, p. 351.

114) 『서울신문』 1948. 1. 29, 1. 31 ; 『경향신문』 1948. 2. 1 ; 『조선중앙일보』 1948. 2. 7 ; 『조선일보』 1948. 3. 5.

115)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대출판부, 1997, pp. 207-210.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47년 10월 3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남북한의 단합된 역량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연석회의 구상을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조선통사』 하, p. 360).

116) 「유엔결정과 남조선 단선 단정을 반대하고 조선통일적 자주 독립을 위하는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 1948. 3. 25, 『북한관계사료집』 27, pp. 493-496.

117) 『동아일보』, 1948. 4. 21 ; 김월송, 「개회사」, 『북한관계사료집』 VI, pp. 9-10.

118)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북한관계사료집』 6, pp. 61-63.

119) 『서울신문』 1948. 5. 6 ; 「평양으로부터 환경후 양김선생공동성명」 1948. 5. 6, 엄항섭편, 앞의 책, p. 43 ; 「남북회담의 성과에 대하여」 1948. 5. 10, 삼균학회편, 『소앙선생문집』 하, 1979, pp. 106-107.

120) 강재륜, 「남북한 통일대화정책의 역사적 조망」,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7, p. 195.

121) 유영익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세대출판부, 1998, p. 142 ; 이택휘 등,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백산서당, 2001, p. 55, p. 70.

122)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10, 1994. 12, p. 21.

123) 정용국, 「정치사회의 유동성과 제헌국회 선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오름, 1998, p. 233.

124) 『동아일보』 1948. 7. 25, 8. 5.

125)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8, p. 32 ;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건국대출판부, 1999, pp. 10-21.

126) 『동아일보』, 1948. 8. 14 ; 「조병옥, 유엔한국대표, 유엔 제4차 총회에 한국정부의 서한을 전달」, 『서울신문』 1949. 10. 10.

127) 「건국 1년의 업적(정계편) : 趙憲泳」, 『서울신문』 1949. 8. 14 ; 「조병옥, 유엔한국대표, 유엔 제4차 총회에 한국정부의 서한을 전달」, 『서울신문』 1949. 10. 10 ; 『동아일보』, 1949. 12. 12.

128) 「북조선이 걸어 온 길은 조국발전의 유일한 길이다」, 『민주조선』 1948년 8월 20일자 사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민주조선』 1948년 9월 12일자 사설.

129) 최한수, 『한국정당정치변동』, 세명서관, 1999, pp. 56-58.

130) 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pp. 154-155;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선인, 2003, pp. 125-126.

131) 백운선, 「이승만 정권 초기 성격과 제헌국회소장파」, 『구범모 교수 화갑기념논총,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지평』, 나남출판, 1994, p. 466, pp. 468-472.

132) 『서울신문』 1950. 5. 21.

133) 『한성일보』 1950. 6. 3.

134) 무쵸 주한미국대사, 「미 국무부장관에게 5·30 총선거 진행상황을 보고」, *FRUS* 1950. 5. 27, pp. 89-92.

135) 『서울신문』 1950. 6. 1-2.

136) 이기하, 『한국정당사』, p. 213.

137) 『연합신문』 1950. 6. 1 ; 『한성일보』 1950. 6. 3.

138) 『국도신문』 1950. 6. 4 ; 김일영, 「전쟁과 정치」,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전쟁과 6·25전쟁』, 2002, pp. 10-12.

139) 이임하,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 『성대사림』 10, 1995, pp. 67-68 ; 김일영, 「전쟁과 정치」, pp. 7-8.

140) 『자유신문』 1950. 6. 2.

141) 로버트 T. 올리버(박일영역),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pp. 393-394.

142) 정영국,『정치지형의 변화와 5·30선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한국현대사의 재인식』 3, 오름, 1998. p. 197.
143) 안진,『해방후 친일파 처벌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14-2, 1996, p. 167 ; 이강수,『반민특위연구』, 나남출판, 2003, pp. 15-16.
144) 안진, 앞의 논문, pp. 169-170.
145)『서울신문』 1946. 11. 12 ;『동아일보』 1947. 7. 12.
146)『서울신문』 1947. 7. 4.
147)『동아일보』 1947. 11. 30.
148)『조선일보』 1948. 9. 4.
149) 허종, 앞의 책, pp. 151-193.
150)『조선일보』 1949. 1. 12.
151)『反民特委의 총결산』,『주간 서울』, 1949. 9. 26.
152) 송건호,『분단과 민족』, 지식산업사, 1986, p. 200.
153)『경향신문』 1949. 7. 6.
154)『반민특위의 총결산』,『주간 서울』, 1949. 9. 26.
155)『경향신문』 1947. 3. 19 ; 이강수, 앞의 책, p. 76.
156)『서울신문』 1950. 5. 21.
157) 유광호외,『현대한국경제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 86.
158)『산업인 좌담회 : 경제재건과 민간의 요망』,『연합신문』 1949. 12. 29 ; 김대래 외,『한국경제사 강의』, 신지서원, 2003, pp. 299-300.
159)『서울신문』 1950. 1. 8.
160)『국도신문』 1949. 12. 25-26.
161) 재무부,『재정금융의 회고』, 1958, p. 167.
162)『대구시보』 1949. 1. 15.
163) 함한희,『미 군정의 농지개혁과 한국 농민의 대응』,『한국문화인류학』 31-2, 1998, pp. 429-430 ; 김성호 외,『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pp. 400-409.
164)『동아일보』 1948. 11. 24.
165) 신병식,『제1공화국 토지개혁의 정치경제』,『한국정치학회보』 31-3, 1997, pp. 37-38.
166) 장상환,『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경제발전연구』 6-1, p. 146.
167)『남선경제신문』 1950. 5. 19.
168) 장상환,『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pp. 152-153; 이대근, 앞의 책, pp. 185-186.
169) 신병식, 1992『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논문, pp. 41-42 ; 김성호,『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연구』, 홍성찬 편,『농지개혁 연구』, 연세대출판부, 2001, pp. 268-269.
170)『경향신문』 1949. 12. 22 ;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 1970, p. 122.
171) 이대근,『해방 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pp. 170-174.
172)『이승만과 1950년대를 다시 본다 : 송인상 부흥부장관 증언』,『월간조선』 2000. 11 ; 이대근, 앞의 책, pp. 196-198.
173) 자위대, 보안대, 치안유지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지부 등의 이름으로 결성된 단체들이었다.
174) 위원회는 총무부, 치안부, 선전부, 교육부, 경제부, 재정부, 생활부, 지역업무부, 외교부 등 총 9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17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제1권)』, p. 51.
176) 위의 책.
177) 조만식, 오유선, 이윤영, 홍기주, 김광진, 노진설, 한근조, 정기수, 박현숙, 최아립, 장이욱, 김병서, 이종현, 조명식, 김익진, 김병연.
178) 현준혁, 김용법, 박정애, 김유창, 장시우, 송창렴, 이주연, 장종식, 허의순, 문태영, 이성진, 김귀현, 이관엽, 최윤옥, 한재덕 외 1명.
179)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현대정치사』(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5), p. 69.
180) 일부 자료에는 이 군중대회가 김일성을 환영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북한의 허구이다.
181) 소련 제25군 정치부에서 작성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182) 안드레이 란코프 저,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p. 81.
183) 1인 후보자에 대하여 찬성자는 흰색 투표함, 반대자는 검은 색 투표함에 표를 넣게 함으로써 투표자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공개투표 방식이다.
184) 북한에서 새 정부의 수립은 형성 초기부터 여러 차례의 위기에 직면하였는데, 그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에서 발생한 학생소요사건이었다. 반공을 부르짖으며 일어난 이 소요사태는 결국 소련군을 비롯한 지방치안단체에 의해 진압되었다.
185) Philip Rudolf,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New York :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p. 17.
186) 남·북한이 채택한 헌법은 모두 강력한 통일지향적 법체계로서 상호간에는 법률적으로 충돌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187) 그는 임지로 떠나기 전인 1948년 12월 3일 소련 정부로부터 그 동안 북한에서 활약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소연방 최고 영예인 '레닌훈장'을 수여받았다.

제2장 미·소·중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제 1 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제 2 절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제 3 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제 1 절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략

1) 전시 동원체제 해제와 안보체제 개편

(1) 동원체제 해제와 군사력 감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신속히 단행되었던 동원해제와 국방비의 대폭 감축은 결과적으로 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러왔고, 이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 김일성(金日成)으로 하여금 6·25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쟁 중 사상최대로 증원되었던 대규모의 전시동원체제를 급속히 해제해 나갔다. 미국의 이와 같은 동원해제는 전쟁이 끝나자,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라(Bring Boys Home)"는 사회 각계 계층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회 및 여론이 합세함으로써 더욱 가중되어 재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종전 당시 미국의 총 병력은 해외주둔군 750만 명을 포함하여 1,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1)]

동원해제가 끝날 무렵인 1947년 6월말 미국은 육군 684,000명, 육군 항공대 306,000명, 해군 498,000명, 해병대 93,000명 등 158여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2)]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의 병력은 146만 명으로 소련군의 430만 명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 당시 소련은 전후 군사력을 1/3 수준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75개 사단에 병력 430만 명,[3)]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155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력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불과 5년만에 제2차 세계대전 말

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축됨으로써 소련과는 원자폭탄을 제외하고는 군사력 면에서 모두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미국의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에서는 소련의 이러한 군사정책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소련과 싸울 수도 없고, 소련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발칸(Balkans) 지역·터키·남한, 그리고 미·소의 잠재적인 대립지역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합동참모본부에 경고하였다.[4] <표 2-1>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병력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폭적인 동원해제는 국방비의 삭감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군사력 감축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을 1948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데 이어 계속해서 1949년, 1950년, 그리고 1951년 회계연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시켰다. 미국의 1948년도 국방예산은 109억 달러였다가 미·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방예산을 1949년도에 135억 달러, 1950년도에 145억 달러로 약간 증액이 되었으나, 이 예산으로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30일 현재 미국 육군은 인가병력 837,000명에 실제병력은 약 70%에 해당하는 593,167명이었다. 미국 해군·해병은 인가병력 666,882명에 실제병력은 70%에도 못 미치는 456,908명이었다. 미국 공군도 인가병력 502,000명에 실제병력은 82% 수준인 411,227명이었다. 따라서 전체 미군의 인가병력은

<표 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력[5]

연 도	총병력수	육 군	공 군	해 군	해병대
1945	12,123,455	8,267,958	-	3,380,817	474,680
1946	3,030,088	1,891,011	-	983,398	155,679
1947	1,582,999	991,285	-	498,661	93,053
1948	1,445,910	554,030	337,730	419,162	84,988
1949	1,615,360	660,473	419,347	449,575	85,965
1950	1,460,261	593,167	411,277	381,538	74,279

2,005,882명에 비해 실제병력은 70% 수준인 1,461,352명으로 544,530명이 부족하였다.[6] 이를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그 중 미국 육군은 병력 59만 명 중 36만 명이 미 본토에 있었고, 나머지 23만 명은 해외에서 주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외 주둔 미군 중 극동군은 1949년 1월 1일 120,000명에서 1950년 6월 108,50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해외 주둔군중 가장 많은 병력이었다. 해외주둔 미군으로는 독일에 80,000명, 오스트리아에 9,500명, 트리에스테에 4,800명, 태평양 지역에 7,000명, 알래스카에 7,500명, 카리브지역에 12,2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7]

미국 육군 사단 가운데 본토에는 제2기갑사단, 제2보병사단, 제3보병사단, 제2공수사단, 제11공수사단 등 5개 사단과 제3기갑연대, 그리고 하와이에는 제5연대전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8] 미국 극동군사령부 지역에는 4개 사단과 1개 연대전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유럽에는 1개 사단, 1개 연대전투단, 3개 기갑연대, 1개 독립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알래스카에는 1개 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리브지역에는 2개의 독립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9]

미국 해군은 병력 337,000명에 함정 670척과 항공기 4,3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미 공군은 병력 411,000명에 48개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 해병대는 병력 74,0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10]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미국 극동군의 전체 병력은 1947년 300,000명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에는 그 1/3 수준인 105,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즉 1947년 1월에는 300,000명에서 1년이 지난 1948년 초에는 1/2 수준인 142,000

<표 2-2> 1950년 6월 현재 미국의 각 군별 병력

구 분	인가병력	실제병력	과부족	1951년 회계연도 목표
계	2,005,882	1,461,352	544,530	1,507,000
육 군	837,000	593,167	243,833	630,000
해군/해병대	666,582	456,908	209,674	461,000
공 군	502,000	411,277	90,723	416,000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쟁 발발 1년 6개월 전인 1949년 1월 1일에는 120,000명으로 축소되었다가 전쟁 발발 당시인 1950년 6월에는 105,000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 참모부에서는 "극동군사령부의 전시 전투능력은 정상적인 편제와 비교해 볼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에도 못 미치는 능력 밖에 없다"라고 평가하였다.[11] 미국의 극동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의 한국 지원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부로서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2) 국가 안보체제 개편과 통수체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건군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국방체제의 모델로 1947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과 1949년의 개정법에 나타난 국방기구를 대부분 반영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국방관계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1948년 11월 30일 제정하여 공포된 국군조직법 상에 나타난 한국의 국방체제는 육・해・공군의 3군 체제, 연합참모회의,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군참모총장제, 대통령 국방자문기구로 설치된 최고국방위원회, 중앙정보국 설치 등은 미국의 3군 체제,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앙정보국(CIA) 등과 그 기능 및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체제(National Defense System)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과 1949년 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그 근간(根幹)이 형성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새롭게 개편된 미국의 군사기구는 오늘날 세계 강대국 미국의 국방조직 및 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신설된 미국의 '국방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는 기존의 육군 및 항공대를 관장하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와 해군 및 해병대를 관장하는 해군부(Department of Navy)의 상위 통제부서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군사기구는 오늘날과 같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

방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국방군사기구는 제도상으로 국방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체제였다. 그 당시 미국의 육·해·공군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각(Cabinet)의 구성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소속 군에 대한 군정 및 군령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단순히 육군·해군·공군간의 업무를 협조하거나 조정하는 합의체의 장(長)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을 개정하여 각 군 장관을 내각에서 제외시키고,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방군사기구의 명칭을 오늘날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개칭하고, 국방부 장관이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관우위의 군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최고 군령기관인 합동참모본부를 신설하고, 의장직을 상설화함으로써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에 대한 군령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

미국 제34대 대통령
트루만(Harry S. Truman, 1884-1973)

6·25전쟁 당시 미국은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새로운 국방체제 속에서 한국전쟁을 지도하였다. 미국의 국방 수뇌부는 임기 5년째를 맞고 있는 대통령 트루만(Harry S. Truman)을 정점으로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 육군장관 페이스(Frank Pace Jr.),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해군장관 매튜(Francis P. Mathews), 해군참모총장 셔만(Forrest P. Sherman), 공군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 공군참모총장 반덴버

미국 제2대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1891-1966)

그(Hoyt S. Vandenberg),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등이 있었다. 극동군사령관에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General of the Army)가 일본 점령연합군사령관 겸 미 극동 육군사령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6·25 전쟁기 국가 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미국 합동참모본부(JCS)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군사자문을 위한 합의체로서 군의 전략계획 수립 및 전략지시 준비, 합동군수계획 수립 및 계획에 의한 주요 군사력 소요 검토, 전략지역 내에 설치된 통합군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제였다.[12]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는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는 모두 6개 사령부로서, 여기에는 극동군사령부(FECOM : Far East Command), 알래스카사령부(Alaskan Command), 카리브해사령부(Caribbean Command),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 유

<표 2-3> 6·25전쟁시 미 국방 수뇌부 현황[13]

구 분	이 름	재임 기간	비 고
대 통 령	트루만(Harry S. Truman)	1945. 4. 12~53. 1. 20	1945. 4. 12 대통령직 승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953. 1. 20~61. 1. 20	1915년 육사 졸업
국방장관	존슨(Louis A. Johnson)	1949. 3. 28~50. 9. 19	변호사 출신
	마샬(George C. Marshall)	1950. 9. 21~51. 9. 12	육군참모총장(1939-45)
	러베트(Robert A. Lovett)	1951. 9. 17~53. 1. 20	-
	윌슨(Charles E. Wilson)	1953. 1. 28~57. 10. 8	-
육군장관	페이스(Frank Pace Jr.)	1950. 4. 12~53. 1. 20	변호사 출신
	스티븐스(Robert T. Stevens)	1953. 2. 4~55. 7. 20	-
해군장관	매튜(Francis P. Mathews)	1949. 5. 25~51. 7. 30	변호사 출신
	킴볼(Dan A. Kimball)	1951. 7. 31~53. 1. 20	-
	앤더슨(Robert B. Anderson)	1953. 2. 4~54. 5. 2	-
공군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	1950. 4. 24~53. 1. 20	변호사 출신
	탈보트(Harold E. Talbott)	1953. 2. 4~55. 8. 13	-

럽사령부(European Command)가 있었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 및 지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였다.[14]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합참의장직이 신설되자, 합참의장은 미군 현역 장교 가운데 최선임으로서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보좌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군사적 자문을 하게 되었다.

6·25전쟁기 미국 합참의장은 1949년 1월 16일 임명된 브래들리(Omar N. Bradley) 원수였고,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은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육군대장,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공군대장, 해군참모총장 셔먼(Forrest F. Sherman) 해군대장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것은 1952년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해병대장 때부터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구성요원
좌로부터 해군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 대장,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

<표 2-4> 6·25전쟁시 미 합동참모본부 구성요원

구 분	계 급	이 름	재임 기간	비 고
합동참모의장	육군 원수	브래들리(Omar N. Bradley)	1949. 8. 16~53. 8. 15	1915년 육사 졸업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1949. 8. 16~53. 8. 15	1917년 육사 졸업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셔먼(Forrest P. Sherman)	1949. 11. 2~51. 7. 22	1918년 해사 졸업
	해군 대장	페치텔러(William M. Fechteler)	1951. 8. 16~53. 8. 16	1916년 해사 졸업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1948. 4. 30~53. 6. 30	1923년 육사 졸업
	공군 대장	트윈잉(Nathan F. Twining)	1953. 6. 30~57. 6. 30	1917년 육사 졸업
해병대사령관	해병 대장	케이츠(Clifton B. Cates)	1948. 1. 1~52. 1. 1	1917년 해병소위
	해병 대장	세퍼드(Lemanuel C. Shepherd Jr.)	1952. 1. 1~55.12.31	1917년 해병소위

이렇듯 6·25전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1947년과 1949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새로 구성된 국방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비록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전후 신속한 복원과 국방비 삭감으로 미군의 전력은 미국에 의한 평화유지라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수행하기에는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2)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과 핵무기 의존 전략

(1) 소련의 팽창과 봉쇄정책 수립

① 봉쇄정책 수립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 이전 세계 강대국이었던 독일·이탈리아·일본을 포함하여 전승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2등 국가(a power of second rank)'로 전락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을 가져왔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수 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대량살상, 경제적 손실, 그리고 자포자기와 같은 전쟁 후유증에 시달렸다.[15]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를 체험한 세계는 전쟁재발 방지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유지에 필요한 국제평화기구 구성에 노력한 결과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UN : United Station)을 창설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침략행위나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집단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국제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6]

그러나 전후 세계는 사실상 이러한 국제협력이나 평화유지 보다 오히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체제로 분열되어 갔다. 전후(戰後)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공헌도를 앞세워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대외 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련은 그들의 국경과 맞대고 있는 동독(East Germany),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루마니아(Rumania), 불가리아(Bulgar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알바니아(Albania) 등 동유럽 국가와 만주 및 북한에 소련군을 주둔시키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소련의 이러한 팽창 위협에 대해 영국의 전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은 1946년 3월 5일 미국의 미주리(Missouri)주 풀턴(Fulton)의 웨스트민스터 대학(Westminster College)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리에서 그 유명한 「철의 장막(Iron Curtain)」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철의 장막」 연설에서, "소련은 팽창주의 국가이다. 발트(Baltic)해(海)의 슈제친(Stettin)에서부터 아드리아(Adriatic)해(海)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철의 장막이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 있다. 이 장막의 뒤에 고대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의 수도가 모두 들어있다. 바르샤바(Warsaw), 베를린(Berlin), 프라하(Prague), 비엔나(Vienna), 부다페스트(Budapest), 베오그라드(Beograde), 부카레스트(Buchrest), 소피아(Sofia)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모든 도시와 시민이 소련의 영향력 안에 있으며,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소련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Moscow)로부터 고도의 정치적 통제 및 조정을 받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의 성과와 그들 세력 및 [공산주의] 이론의 무한한 확장뿐이다"라는 말로 전후 소련의 침략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했다.[17] 이에 대해 소련 수상 스탈린(Joseph Stalin)은 처칠을 '전쟁의 선동가(firebrand of war)'로

<지도 2-1> 동서진영을 양분한 소련의 철의 장막 선

매도하는 한편, 철의 장막 연설에 대해서는 '소련과의 전쟁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18]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1946년부터 소련의 스탈린이 세계적화를 노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미국의 고위 정책수립가들은 전후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책임감만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였다.[19]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전체주의(全體主義) 독일에 맞서 싸웠던 유럽은 전쟁 동안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0만 명의 인명 손실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산업시설의 파괴, 그리고 석탄 등 원자재의 부족으로 제한생산이 불가피하였고,[20] 그 결과 기아와 빈곤, 달러(dollar)의 부족으로 인한 생필품의 수입제한, 경제회복의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전시 연합국의 분열, 독일 문제의 미해결,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 및 확산으로 서유럽은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omnious crisis) 국면을 맞게 되었다.[21]

이렇듯 전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동유럽과의 대결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 미국이 이러한 전후 유럽의 총체적 위기 상황과 소련의 팽창주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 바로 트루만 선언(Truman Doctrine)과 마샬 플랜(Marshall Plan)이었다.[22]

②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

트루만 독트린의 직접적인 배경은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소련의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전후 산유국인 이란은 영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소련은 1945년 9월 런던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1946년 3월까지 모든 외국군을 이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란의 점령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병력을 증강할 뿐만 아니라 이란 국경지역인 터키(Turkey)로의 진출을 획책하였다. 소련은 흑해에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다르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터키에서 분할하여 이곳에 소련군을 주둔시

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스는 전후 영국의 점령지역으로서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대항했던 그리스 공산당이 그리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동유럽 공산국가의 무장지원에 힘입어 이른바 민족해방전선(民族解放戰線)을 결성하고, 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그리스를 내전상태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이 전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1946~1947년 유럽에 몰아닥친 혹한(酷寒)으로 대외원조능력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를 지원할 수 없음을 미국에 통보하게 되었다.[23] 그리스는 미국의 즉각적인 지원이 없으면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이 고도의 정치적·전략적 차원의 해결책이 바로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이다.

트루만 독트린은 1947년 3월 12일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이 미국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와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영국의 입장과 터키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트루만은 "소련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한 향후 미국이 지향해야 될 정책은 소수의 무장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원조는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재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긴박한 사태를 맞아 세계 강대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지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24]라고 경고하였다.

> 지금까지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정부도 [1947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가 없다 ……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터키는 민족적 통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

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나는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 또한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 나는 1948년 6월 30일까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다.[25]

트루만 독트린은 공화당의 반덴버그(Arthur Vandenberg)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을 비롯한 양당으로부터 초당적 외교정책(bipartisan foreign policy)이라는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그리스·터키 법안은 4월 22일에는 상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어 5월 22일에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터키에는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실시했고, 그리스에는 3억 달러의 경제 및 군사원조와 함께 군사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원조는 지중해 해역(海域)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봉쇄정책임을 입증하였다.[26]

그러나 1947년 미국의 지도자들은 트루만 독트린이 지닌 정치적·군사적 성격만으로는 현재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근본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1947년까지 미국은 유럽국가들에게 약 9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유럽 경제는 회복되지 않은 채 소련의 위협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27]

마샬 계획(Marshall Plan)은 이러한 배경에서 수립되었다.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1947년 4월 29일 소련 문제 전문가인 케난(George F. Kennan)에게 유럽의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고 소련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28] 케난은 1947년 5월 5일 미 국무부의 정책기획 부서로 새로 설치된 정책기획국(PPS : Policy Planning Staff)의 국장으로 취임하여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 정책으로 유명한 마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29]

미국 제51대 국무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 1880-1959) 장군

마샬 계획은 1947년 6월 5일 마샬 국무장관에 의해 하버드(Harvard)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공포되었다. 마샬 국무장관은 유럽의 경제구조를 재건시키는 일은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계 경제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안정도 확실한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소생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미국의 지원은 여러 위기들이 조성될 때마다 조금씩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일시적인 완화책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책의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30]

마샬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 소련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유럽은 마샬 계획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무역에서도 놀라운 신장세를 보여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전후 만성적인 달러 부족에서 허덕이던 유럽 국가를 구제하였다.[31]

그 결과 서유럽은 전후 유럽에서 강대국의 쇠퇴로 생긴 힘의 공백을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게 했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베네룩스 3국 등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만일 그 당시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을 통해 그리스·터키를 비롯하여 서유럽에 막대한 원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련의 공산화는 중동 및 서유럽에 이어 극동으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한국전쟁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32]

③ 봉쇄정책의 수립과 적용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소련 주변부를 막아야 한다는 개념의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수립하였다. 봉쇄정책의 개념은

소련 전문가로서 봉쇄정책을 수립했던 케난이 1946년 2월 소련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도와 방책을 담고 있는 전문보고서(long telegram)를 수정하여 1947년 『외교평론(*Foreign Affairs*)』 7월호에 기고한 「소련 행동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이라는 논문에서 제시되었다.[33]

케난은 이 논문에서 소련 팽창주의 정책을 막을 방도는 봉쇄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련의 행동은 전통적인 팽창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고, 소련의 침투 징후가 보이는 모든 곳에서 그것에 맞서도록 설계된 봉쇄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 소련 외교정책은 태엽을 감고 작동을 시키면 어떤 막는 힘에 의하여 멈출 때까지 오직 한 방향으로만 계속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 [따라서]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정책은 소련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표시를 보이는 모든 곳에서 변함없는 저항력을 갖고 소련에 대결하도록 의도된 강력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이어야 한다 …… 또한 미국의 대소 정책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결코 방심하지 않는 봉쇄정책이어야 한다.[34]

전후 전시 연합국이었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 확립과 확고한 대소(對蘇)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946년 처칠의 「철의 장막」에 관한 연설은 미국 내에서 소련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공연히 확산시켰고, 터키 및 그리스 사태, 그리고 서유럽의 위기적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소 봉쇄정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봉쇄정책만이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미국 봉쇄정책은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계획처럼 주로 경제원조와 군사고문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점차 소련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군사적인 지원 성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5] 6·25전쟁 이전까지 봉쇄정책이 반영된 미국의 주요 조치로는 대소(對蘇) 정책문서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20/4와

NSC-68, 그리고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었다. NSC(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정식명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로서 이는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의 안보자문기관으로 미국의 안보문제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그 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시행되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20/4는 1948년 11월 24일 트루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문서에서 "미국은 장차 소련만이 미국의 위협대상이며, 소련은 전제적·전체주의 국가로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지배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련은 평시에도 전쟁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방측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36]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봉쇄정책의 원리를 적용하여 전후에 허용되었던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소련의 지배를 차단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37]

1949년 4월 4일 미국은 1778년 이래 처음으로 평화시 동맹기구인 미국과 서유럽간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사활적 이익지대인 서유럽의 방위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아시아의 반공지도자로서 태평양동맹(太平洋同盟)을 구상했던 이승만 대통령, 중국의 장개석(蔣介石) 국민당 총재, 필리핀의 퀴리노(Elpidio Quirino) 대통령 등을 자극하여 유럽에서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군사동맹 기구를 태평양에서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8] 그러나 이승만과 장개석이 주도한 태평양동맹안은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39]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68은 6·25전쟁 이전 수립되었다. 이 문서의 작성배경은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정부수립과 1949년 8월 29일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이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그때까지 유럽에 진행되었던 냉전이 아시아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소련이 원폭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소련의 재래전력 우위가 상대적으로 큰 의의를 가졌다는 점에서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은 1950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68를 작성하

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기존의 냉전정책의 적용 대상지역인 서유럽과 중동의 아시아를 추가하면서 소련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군사력 증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위협 증대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추가 소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6·25전쟁 이전에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40]

2) 핵무기 의존전략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소 봉쇄정책을 택하였다.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은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전략적 배경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한 원자폭탄이 있었다.[41] 미국은 1945년 신무기인 원자폭탄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을 훨씬 빨리 종결시킴으로써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42] 미국은 1945년 7월 생산된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전후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대규모 전쟁에서 핵무기는 방어작전과 공격작전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43] 그 결과 미국의 봉쇄정책은 핵무기를 군사적 수단으로 채택하는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트루만 행정부가 군사전략으로 수립했던 주변기지전략도 대소 우위인 미 공군력과 핵무기를 결합시켜 소련 주변지역에 전략공군기지를 설치하고, 핵무기를 이용하여 소련의 세력확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었다.[44]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시 대규모로 동원했던 막대한 병력에 대한 동원해제를 단행하고 군비를 감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략적 배경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전후 미국은 일본을 조기에 패전으로 이끈 핵무기(核武器)가 미래의 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큰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핵무기의 투발(投發) 수단인 전략공군에 기초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채택한 국방

비의 대폭 감축과 함께 국가동원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종전 당시 재래식 군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방비 삭감과 병력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적 안보환경 상황하에서 장차 대소(對蘇) 전쟁을 수행해야 할 미국의 정책 및 군사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정책과 전략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사적 환경 속에서 미국의 군부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인 전략공군에 의존하는 전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1946년 여름 미·소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가자 핀셔(PINCHER)라는 암호명의 대소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45] 이 전쟁계획은 소련이 세계전쟁을 일으킬 경우, 소련군은 유럽과 중동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재래전과 함께 20개 도시에 50개의 핵무기를 투하하여 소련의 산업시설을 50% 파괴한다는 것이었다.[46]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핵무기 운반 수단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격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작성된 미국의 전쟁계획인 문라이즈(MOONRISE)에 의하면, 전쟁 발발 후 소련은 20일 이내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이며, 대부분의 만주지방과 북중국(北中國)을 전쟁 개시 40~50일 사이에 점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47] 문라이즈 계획에 의하면 지상군 병력수에 있어서 소련에 비해 열세인 미군은 소련의 한반도 진격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전쟁개시 20일 이내에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주일미군(駐日美軍)의 한반도 배치는 일본의 방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조치는 베링해(Bearing Sea)-동해(East Sea)-황해(yellow Sea)를 따라 연결된 선에서 방어를 취할 것이고, 이 방어선 안에 일본과 류큐열도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문라이즈 계획에서는 전쟁이 발발되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중국 주둔 미군은 그곳에 남아 보다 취약한 지역으로 전개시키거나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곳에서 철수시킨다고 명시하였다.[48]

미국의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가 1948년 3월말에 작성한 대소작전계획은 건파우더(GUNPOWER) 계획이다. 이 계획은 극동군사령부의 극동지역에서의 전시 작전계획으로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인 문라이즈 계획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49] 이후 작성된 미국의 대소 전쟁계획인 오프태클(OFFTACKLE)계획에는 미·소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경우, 수세적 입장에서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선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이 아시아 대륙으로 총 반격시 한반도는 우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50]

이렇듯 미국은 대소 전쟁 계획 및 극동군사령부의 전시 작전계획에서 보듯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군사기지를 설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시 아시아 지역에서 공세이전의 기회가 주어져도 한반도는 우회하여 중국 대륙을 공격한다는 전략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극동에서의 군사전략은 핵무기 및 해·공군력에 의존하는 도서방위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2. 미국의 극동전략과 군사력 현황

1) 도서방위전략과 극동방위선

미국이 극동방위를 위해 채택한 도서방위전략(off-shore defensive perimeter strategy)은 알류산열도에서 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도서방위선(島嶼防衛線)상의 도서들이 제공하는 해·공군기지를 활용하여 전략공군과 핵무기로 전쟁을 수행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극동군은 소련과 전면전 발생시 최초에는 수세적인 방어자세를 취하다가, 태평양 지역의 일본 및 필리핀에 산재해 있는 미국의 해·공군 기지를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이 선에서 격퇴한 후, 공세이전으로 전환하여 아시아 대륙으로 공격을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부가 극동에서 도서(島嶼)를 연결하여 방위선을 구축한다는 개념은

1947년 중반 대소 전쟁계획에 반영되었다. 맥아더는 1948년 3월 일본 동경을 방문한 소련전문가 케난에게 극동의 안전보장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방위전(防衛戰)은 남북아메리카 서해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대륙의 동해안에서 싸우는 것이며, 필리핀에 있는 방위거점을 북쪽으로 더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U자형(U-shaped Area)으로 알류산열도-미드웨이-마리아나 군도-필리핀의 클라크 기지로 연결되는 선이다. 이 방위선에서는 오키나와의 미 공군 비행장이 그 전진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51]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아시아의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어진은 미국 대륙 서해안에 근거하고 있었다. 태평양은 가능한 한 적의 접근로로 간주되었다. 이제 태평양은 앵글로-색슨의 호수가 되었고, 우리의 방어선은 아시아 대륙의 해안을 둘러싼 섬들의 연결선을 지나가고 있다. 그것은 필리핀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주요한 요새인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류큐열도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는 일본과 알류산 열도로 휘어지고 알래스카로 이어진다.[52]

맥아더는 일본 본토에는 미군기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 열도에 대해 미국이 영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53] 맥아더가 도서방위선을 강조한 것은 그곳에 미 국방의 제1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시아대륙을 방어할 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상의 이점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1949년 1월 19일 주한미군 철수연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회신에서 최근 중국정세와 관련하여 "해군력과 공군력에 의한 해양수송선(Sea Lane)의 완전한 지배야말로 일본을 미국에 붙들게 하는 장기적 포석"이 될 것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도서방위선을 중심으로 해·공군력을 이용해 그 방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54]

미국 합동참모본부도 이 도서 방위개념에 동의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태평양 지역의 방위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외의 기지를 사용하여 전략적 항공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지하였다.[55]

미국 국무부도 도서방위선 구상을 지지하였지만, 맥아더나 합동참모본부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 국무부는 중국대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청산된 후, 도서방위선은 아시아 대륙의 민족주의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할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56]

미국의 국무부·맥아더·합동참모본부는 아시아대륙에서 소련의 확장에 대처해야할 지상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동방위는 일련의 도서방위선 상에서 해·공군의 우위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도서방위전략이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전국기자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행한 '아시아의 위기(Crisis in Asia)'라는 연설에서 미국의 방위선(defensive perimeter)은 알류산 열도-일본본토-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대만(臺灣, Formosa)을 이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미국 제52대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 1890~1971)

>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Aleutian)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연장되는 선에서 다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결정한다. 이 방위권내의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한 한 이 방위권외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이를 보장할 사람은 없다 …… 먼저 공격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차후 UN헌장에 의하여 전 문명세계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57]

애치슨 선언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최초의 저항은 당사국 국민이 부담

<지도 2-2>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방위선

하고, 차후에는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전 세계가 개입할 것이라는 연설 내용에서처럼 이 두 지역이 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북한을 비롯한 공산측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의문은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16개국이 한국을 적극 지원하게 됨으로써 풀리게 되었다.

2) 극동군사령부와 군사력 현황

1950년 6·25전쟁 당시 극동지역에서 작전책임을 맡고 있던 미군 부대는 1947년 1월 1일 창설된 극동군사령부였고, 사령관은 맥아더 원수(元帥)였다. 극동군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시 맥아더의 남서태평양사령부(Southwest Pacific Command)를 모체로 재창설되었다.[58] 극동군사령부는 통합군사령부로써 그 예하에 육군·해군·공군 등 3개 사령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는 일본, 한국, 류큐열도(Ryukyu Islands),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 볼케노(Volcano) 및 보닌열도(Bonin Islands) 등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극동군사령부 예하 지휘관으로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육군중장,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공군 중장,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harles Turner Joy) 해군 중장이 있었다. 제5공군사령관에는 패트리지(E. E. Patridge) 공군 중장, 제90기동함대사령관 도일(J. H. Doyle) 해군 소장, 류큐

<표 2-5> 6·25전쟁 발발 당시 극동지역 미군 지휘관

구 분	계 급	이 름	재임 기간
극동군총사령관	육군 원수	맥아더(Douglas MacArthur)	1947. 1. 1~51. 4. 11
태평양지역사령관	해군 대장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1949. 4. 30~53. 7. 10
극동공군사령관	공군 중장	스트래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1949. 4. 26~51. 5. 21
극동해군사령관	해군 중장	조이(Charles Turner Joy)	1948. 8. 26~52. 6. 4
미제8군사령관	육군 중장	워커(Walton Harris Walker)	1948. 9. 3~50.12.23
제7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1950. 5. 6~51. 3. 28
제90기동함대사령관	해군 소장	도일(J. H. Doyle)	1950. 6. 25~50. 9. 27
제5공군사령관	공군 중장	패트리지(E. E. Patridge)	1948. 10. 6~51. 5. 21

6·25전쟁당시 미 극동군 지휘관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arris Walker) 장군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Turner. C. Joy) 제독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래트메이어
(George E. Stratemeyer) 장군

지역 사령관 쉬츠(Joseph R. Sheetz) 육군 소장 등이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59] <표 2-5>는 맥아더를 포함한 극동군사령부의 지휘관 현황이다.

일본 요코하마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제8군은 1944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시 뉴기니아(New Guina)와 레이테(Leyte) 전투에서 미 육군 전투부대를 통합지휘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이다. 제8군에는 혼슈(本州) 중부에 있는 제1기병사단, 홋카이도(北海島)에 있는 제7보병사단, 큐슈(九州)에 있는 제24보병사단, 혼슈의 남부에 있는 제25보병사단,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제9방공포병단(Antiaircraft

Artillery Group),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독립 류큐사령부(RYCOM) 소속의 제29연대였다.[60]

제8군은 1950년 6월 25일경 인가된 병력의 93%를 유지하고 있었다. 각 사단은 전시편성 18,900명에 평시 12,500명이 인가되었으나 완전편성된 사단은 하나도 없었다.[61] 각 사단은 병력이 약 7,000명이나 부족했고, 편제상으로는 3개의 소총대대, 6개의 중전차중대, 3개의 105밀리 야전포병 포대, 3개의 대공포대가 부족하였다.[62]

제8군은 1949년까지 주임무인 점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훈련을 실시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에는 병력부족과 빈번한 병력교체로 인해 1949년까지는 주로 기초훈련 및 예절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었다.[63]

미국 극동공군은 1944년 6월 15일 호주 브리스밴(Brisbane)에서 창설되어 미 극동군총사령부의 일부로서 태평양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점령군의 일부로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력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로 편성되었다.[64] 극동공군의 주요부대로는 일본 나고야에 주둔한 제5공군(Fifth Air Force),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13공군(13th Air Force),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한 제20공군(20th Air Force)이 있었다.

미국 극동해군은 해군 중장 조이(Charles Turner Joy)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다. 극동해군에는 상륙부대의 핵심인 제90기동부대와 소수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제96기동함대가 있었다. 이들 극동해군의 전력으로는 1척의 경순양함, 4척의 구축함, 그리고 6척의 어뢰정, 보조함 및 상륙용 주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필리핀 해역에는 해군 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지휘하는 미 제7함대가 있었다. 미 제7함대는 1척의 항공모함, 1척의 중순양함, 8척의 구축함, 그리고 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극동해역에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함정들이 활동하고 있었다.[65]

한편 1950년 6월 미 극동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품의 전투예비량은 약 60일

분에 지나지 않았다. 극동군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 및 차량 등 주요 전투 및 기동장비에 대한 보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4개 보병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 중 90%와 차량 가운데 75%는 극동사령부에서 재생산한 것이었다.[66]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전차(medium tank)나 4.2인치 박격포, 무반동총 등 중요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동장비 가운데 1/4톤 지프차는 18,000대 중 55%에 해당하는 10,000대가 가동이 불가했고, 21/2톤 트럭도 13,780대 중 4,441대만이 운행이 가능했다. 탄약 및 식량에 대한 전투예비량은 45일분, 유류는 180일분[67]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극동군의 평균 전투예비량은 30일분의 부대 보유량과 60일분의 비축물자 등을 고려할 때 약 90일분에 해당되었다.[68]

이렇듯 태평양 지역 및 극동지역의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 극동군의 전력은 병력 105,000명으로 지상군이 1개, 야전군에 4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군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4척, 중순양함 1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8척, 잠수함 3척, 어뢰정 6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군은 18개 전투 및 전투폭격비행단, B-26 경폭격기로 편성된 1개 경폭격기 비행단, B-29중폭격기로 편성된 1개 중폭격기 비행단, 그리고 몇 개의 병력 수송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투예비량도 3개월분에 해당하는 90일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미국 극동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6·25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3.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철수정책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단행한 대폭적인 병력 감축과 국방비 삭감과 관련이 있다. 1950년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16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군 병력 146만 명은 전후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한 미국으로서는 14만 명이나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

는 주한미군 45,000명에 대한 재배치 문제는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세계전략을 수행해야 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분배라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전후 미국이 채택한 핵무기와 전략공군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대소 전쟁계획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유럽이었던 반면, 한반도가 위치한 극동지역은 미국의 안보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지상군보다 우세한 해군과 공군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한다는 도서방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평가는 이러한 병력의 제한과 미국의 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미군을 어느 곳에 먼저 배치하느냐 하는 우선 순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철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했던 미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 사절단(Wedemeyer Mission)의 비밀보고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1)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평가와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보고서

(1)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

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산하의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가 작성한 「국가안보면에서 본 미국의 대외원조」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역을 주변지역(peripheral)과 핵심지역(vital)으로 구분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대외 원조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은 미국 국가안보의 중요도에서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8개국 가운데 5위,[69] 미국 안보의 중요성에서 본 우선 순위에서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5위,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13위라는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70]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낮게 평가한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은 군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이러한 평가는 1947년 9월 15일 국무부가 「미국의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본 미국 주둔의 이익에 관한 견해」를 요청하면서 '한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71]를 합동참모본부에 요구하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9월 26일 국무부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은 군사 전략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국에 군대나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하였다. 만약 극동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국에게 오히려 군사적 부담이 될 것이고, 적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지 않고는 현재의 주한미군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더욱이 장차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수행하게 될 어떠한 지상작전(land operation)도 한반도를 우회(by pass)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2]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만일 소련이 한반도에 강력한 해·공군기지를 설치하여 동중국·만주·황해·동해, 그리고 연안 도서에서 미국의 작전을 방해할 경우, 이들 소련 기지는 미국의 공군작전에 의하여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전은 대규모 지상작전 보다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극동지역 전문교수와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라이샤워(Edwin O. Raischauer) 박사는 한국은 군사적인 견지에서 미국에게 불필요한 국가라고 단정하면서, 한국의 공군기지는 소련지역과 가깝지도 않고 오키나와 기지처럼 안전하거나 편리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는 어느 정도의 육군만 있으면 공군력과 절대적인 해군력으로 일본을 방위하는 것이 육군으로 한반도의 38선이나 두만강을 방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하였다.[73]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의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군 병력과 대소

전쟁계획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개 사단의 45,000명에 대한 병력을 미국이 세계전략을 수행하는데 보다 긴급한 지역으로 보낸다고 해도, 소련은 한국과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합동참모본부는 또 현재 미국은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너무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 미군의 현 병력수준이 명백히 부족함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 2개 사단의 총 4만 5,000명의 군단병력은 이를 다른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만큼의 병력을 철수시켜도 그 결과는 소련이 남한과 일본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병력을 집결시키지 않는 한 미 극동군의 군사태세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점령은 역병과 폭동을 방지한다는 주목적에 너무나 많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안전에 대한 도움이 적은 반면에 미국의 점령군을 위험 속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74]

또한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데에는 미국의 대소(對蘇) 전쟁계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차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은 국지전이 아니라 소련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략공군을 이용하여 전략적인 수세작전을 실시한다는 대소 전쟁계획에 의해 한반도에서 지상군을 이용한 작전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을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극동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군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극동지역에서의 지상작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를 우회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군작전에 의한 적 기지의 무력화는 한국에 의한 지상군에 의한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무기 의존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2) 웨드마이어 사절단의 보고서

1947년 7월 초순 트루만 대통령은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육군 중장에게 2개월에 걸친 중국과 한국에 대한 현지 실정의 파악과 조사를 위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주둔 미군 총사령관 겸 장개석(蔣介石)의 참모장을 역임했던 웨드마이어 장군은 국무부·전쟁부·해군부·재무부에서 파견된 그의 보좌관들과 함께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1947년 7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조사를 마친 후, 8월 25일 일본 동경에서 맥아더와의 회담을 위해 체류하였다. 8월 26일 오후에 서울에는 도착하여 한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9월 3일 서울을 떠났다. 이 때 웨드마이어 조사단(Wedemeyer Mission)은 모두 9명으로, 여기에는 단장인 웨드마이어 장군을 비롯하여 전쟁부의 보일(James J. Boyle), 앵(Horace L. Eng) 대위, 허친(Claire E. Hutchin) 대령, 해군부 소속의 트렉설(Carl A. Trexel) 제독, 재무부 소속의 젠킨스(David R. Jenkins), 국무부 소속의 스프라우즈(Philp D. Sprouse), 워커(Melville H. Walker), 볼티모아 선(The Baltimore Sun)지의 왓슨(Mark S. Watson) 기자가 있었다.[75]

웨드마이어 장군은 1947년 여름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사태에 관하여 그 자신이 직접 조사 연구한 것을 1947년 9월 19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비밀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웨드마이어 장군은 그의 보고서에서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한 미국은 남한에 부대를 계속 주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데올로기적인 패배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입장은 극동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가상적국이 한반도를 점령함으로써 부동항을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한반도에 강력한 해·공군 기지를 확보할 기회를 저지한다는 이유를 빼놓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그 부대와 기지를 유지한다 하여도 군사상의 이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서 현재의 병력은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군사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 취할 군사행동에는 세 가지 방책이 있는데, 이중 최선의 방책은 소련군의 철수와 동시에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되도록 소련과 협상을 해서 이에 따라 철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원조와 한국인으로 편성된 방위부대를 창설하여 훈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76]

2)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1947년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서로 대립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미 국무부는 1945년 9월 미군정 수립부터 1947년 초반까지 국방부의 조기철군 주장을 적극적인 한국 개입 논리로 맞섰으나, 1947년 이후에는 미 군부의 철군요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30일 500여 명의 주한미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한 데에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웨드마이어의 보고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검토는 주로 국무부・전쟁부・해군부의 대표가 모여 구성되는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 :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산하의 한국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에서 담당하였으나,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의거 공군부(空軍部)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3부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육군부・해군부・공군부의 4부정책조정위원회(SANACC : State-Army-Navy-Air Force Coordinating Committee)로 확대되면서 이곳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SANACC)에서 작성된 4부정책조정위원회의 문서 SANACC-176/35와 SANACC-

176/39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문서는 4부정책조정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은 뒤, 1948년 4월 2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되어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NSC-8)로 채택되어 1948년 4월 8일 트루만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8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적, 경제적 공약의 경감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으로서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한에 수립된 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한군이나 외국군의 침략행위 이외의 다른 침략행위로부터도 한국의 안전을 수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은 철수에 앞서 한국 군대의 훈련 및 장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한국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77]

그리고 나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시한을 소련군이 주장한 바 있는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할 것을 규정하였다.[78] 또한 이 문서에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로 미국은 한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의 50,000명에 대한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장비 이양 문제도 규정하였다.[79]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8/2는 1949년 3월 22일 제36차 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되어 다음날인 3월 23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80] 그 당시 미국은 베를린 사태 등 유럽 상황의 악화로 인해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입각하여 새롭게 미국의 정책을 검토한 것이 1949년 3월 22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 NSC-8/2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NSC-8/2는 NSC-8이 규정한 주한미군 철수 완료 일자를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수정하였다. 수정하게 된 동기는 1948년 10월 19일 한국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여순 10·19사건 등 한국 국내에서 발생한 좌익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이 충성심으로 단결되고, 대내외적인 어떠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군 철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81] 이범석 국방장관도 1948년 11

월 20일 국회에서 미군철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군의 주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자, 국회에서는 「현하(現下) 국내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방위태세가 정비될 때까지 미군의 남한 주둔이 필요함을 결정함」이라는 결의를 하였다.[82] 또한 1948년 12월 12일 파리 유엔총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수립과 점령군의 철수결의」에서 "점령국들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결의하였다.[83] 이로써 미군은 유엔에 의해 철수시한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무부 차관 러베트(Robert A. Lovett)는 1949년 1월 17일 NSC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하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1949년 1월 25일 미군 철수에 대한 완료시한을 연기해 줄 것을 미 육군부(Department of Army)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미 합동참모본부(JCS)도 맥아더에게 철수 완료시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맥아더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이 도발하는 국내 소요와 전면적인 침략에 대처할 정도의 수준까지 장비 및 훈련 면에서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에 있는 잔류미군을 1949년 5월 10일까지 완전히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8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한미군의 최종적인 철수시한은 국무부가 제기한 철수 연기 요청에 따라 그 완료시한을 NSC-8이 규정한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6월 30일로 연기하게 되었다.[85]

NSC-8/2에서는 군사적 공약으로 잘 훈련되고 무장된 65,000명의 병력을 갖춘 한국 정부가 내부질서 유지와 국경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86]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NSC-8이 규정한 것보다 15,000명이 더 많은 육군병력에 대한 무장과 훈련을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SC-8/2는 NSC-8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찰 35,000명, 해안경비대 4,000명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원조를 규정하였다.[87] 그러나 NSC-8/2은 한국이 독자적인 공군과 해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88]

주한미군은 NSC에서 결정한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따라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1월 15일 만 4년간 주한미군사령부 역할을 했던 미 제24군단이 정식으로 해체되고, 7,500명의 1개 연대전투단(RCT : Regiment Combat Team)과 임시군사고문단(PMAG)만 잔류시킨 채 미군은 철수하였다. 연대전투단도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일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1949년 7월 1일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KMAG)으로 정식 발족되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까지 한국에 있는 미군은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에 관해 지원과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의 효율성을 위해 활동하는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 뿐이었다.[89]

4.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목표와 지원

1) 미국의 한국군 육성 목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라 남한에 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통일된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돕기 위해 남한에 들어왔던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문제는 1947년 한국 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미 국무부와 육군부(陸軍部)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의 성격과 한국의 안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외부의 대규모 침공이 아니라 내부의 치안유지와 제주 4·3사건을 비롯하여 여순 10·19사건과 38도선에서의 무력충돌 등과 같은 소규모 국경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군 육성이 그 당시 미국 군부의 한국군에 대한 군사목표였다.

미국의 고위 정책 및 전략가들은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외부에 의한 전면

적인 군사적 침공이 아니라, 당시 태평양상의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전복활동이나 침투와 같은 문제를 더 우려하였다. 이는 애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의 다수의 나라들이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곤란, 사회적 혼란 때문에 공산권으로부터의 전복행위, 침투행위에 취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90] 즉 애치슨은 태평양상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의 침략위협 보다는 내부의 경제적 혼란과 전복 및 침투 등과 같은 국내의 내부혼란을 더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군사원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내부의 혼란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이에 군사력도 소규모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적합한 방어형 성격의 한국군 건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군의 훈련을 돕는 군사고문단만 남겨 놓게 되었고, 무기 및 장비에 대한 원조도 전투기나 전차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위주의 군사원조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낮게 평가해서 철수한 한국에 대해 소련이 장차 미국과의 전면전을 치를지도 모를 침략전쟁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소련은 그 틈새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이 철수한 한국을 미국이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였던 것이다.

2)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주한미군사고문단 창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에서 비롯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방위군의 통수권을 점차적으로 장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 즉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1948년 8월 24일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미군이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하여 조선경비대와 해안 경비대를 훈련시키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지역을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國防軍)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주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 군대의 한국 철수와 동시에 종료한다.[91]

한국 정부는 한·미간에 체결된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군의 군비증강 대책이 시급하게 되자, 미군이 군사고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호응하여 초대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무쵸(John. J. Muccio)는 1948년 8월 24일 「한미군사잠정 행정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국임시군사고문단(PMAG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을 설치하고 한국군의 훈련을 돕는 기구로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 후 임시고문단은 1949년 7월 1일 주한미군의 최종 병력이 철수하자 주한미국군사고문단(KMAG)으로 발족되었다.[92]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50년 1월 26일 한·미 양국 대표가 서울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주한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협정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일자를 1949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시켰다.[93] 미 군사고문단의 설치 목적은 대한민국 경찰을 포함한 국방조직 및 훈련에 있어 한국정부를 조언하고 보좌하는 것이었다. 미 군사고문단의 목적과 정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대와 국립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방조직 및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조언 및 원조하며, 또한 국방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군을 한국경제력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주한미군사고문단]은 양국 정부가 합

의하는 미국정부군 및 민간인으로써 구성한다. 단, 해단의 국방부 인원수는 양국 정부의 상호합의가 없는 한 장교 및 병원(兵員) 도합 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94]

이처럼 한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군정청은 해체되었으나 한미간의 군사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계속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지휘 감독은 맥아더가 작전지휘권을 거부함에 따라 주한미국대사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의 극동사령부의 한국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표 2-6>은 역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사단에 배치되어 한국군을 훈련하고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군사교육기관 설립, 그리고 한국군 장교의 미국에서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사고문관들은 공군 및 해안경비대에 파견되어 훈련을 지원하였다.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과 참모장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대령에게는 전용 사무실이 제공되었고, 각 부대에 파견된 군사고문단은 한 사무실에서 한국군 장교와 함께 책상을 나란히 하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 총참모장실에 소속된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연락장교에는 하우스만(James H. Hausman) 대위가 파견되어 한·미 양측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6> 역대 주한미군사고문단 단장 현황, 1949~1953년[95]

구 분	기 간	계급	성 명
제1대	1949. 7. 1~1950. 6. 15	준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대 리	1950. 6. 15~7. 25	대령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제2대	1950. 7. 25~1951. 5	준장	파렐(Francis W. Farrell)
제3대	1951. 5~1951. 9	준장	데이비슨(Garrison H. Davidson)
제4대	1951. 9~1953. 5	소장	라이언(Cornelius E. Ryan)
제5대	1953. 5~1953. 10	준장	로저스(Gordon B. Rogers)

초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싸웠던 전투경험을 토대로 한국군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여러 면에서 한국군의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로버츠 장군은 6・25전쟁 발발 열흘전인 1950년 6월 15일 정년 퇴임함으로써 6・25전쟁 발발 당시인 6월 25일에는 고문단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 참모장인 라이트 대령도 퇴임한 로버츠 장군을 일본까지 배웅한 관계로 전쟁 당일 한국에 없었다. 그는 6・25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6월 26일 한국에 돌아와 고문단장 대리를 맡아 미 군사고문단과 함께 가장 어려운 한 달간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와 통신을 유지하며 한강에서 낙동강까지의 지연작전을 도왔다.[96]

3)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한국 정부는 외교방향을 미국의 군사원조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외교활동을 위해 1949년 3월초 조병옥(趙炳玉) 박사를 대통령 특사(特使)로 임명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조병옥 특사는 1949년 3월 24일부터 애치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러스크(Dean Rusk) 국무차관보, 놀랜드(William F. Knowland) 상원의원, 키(John Kee) 하원외교분과위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대한(對韓)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97]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에 한국군의 국내방위를 위해 대한(對韓)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는 한국 방위유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원조였다. 주한미군철수정책을 다룬 국가안전보장회의문서(NSC-8/2)에 포함된 군사지원 내역은 육군은 항공대를 포함한 65,000명의 병력과 소요장비를 제공하고, 해군은 약간의 무기와 함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6개월분의 정비보급품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대한군사원조계획은 자유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원조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졌고, 1949년 통과된 공법 제329호의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라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안은 트루만 미대통령이 1949년 10월 6

일에 서명함으로써 1950년 회계연도의 대외군사원조총액은 1,314,010,000달러에 달하였다. 이 원조 중에서 10,200,000달러가 한국에 할당되었으나, 주로 정비품과 부속품이 제공되었다.[98]

그러나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초 계획은 65,000명에 대한 군사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한국군의 규모는 10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정비품과 부속품의 재고량도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각종장비 및 무기 등도 부족한 것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게릴라 침투와 38도선 상의 무력 충돌, 그리고 북한군이 전차나 항공기 등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자, 한국 정부는 미국정부에 한국군의 중무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전차를 비롯하여 155㎜곡사포와 기타 중장비에 대한 원조는 당초부터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미국 정부가 거절한 것은 미국의 대외 원조자금액에 대한 한계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한국의 지형은 도로나 교량이 협소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전차가 기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9년 4월에 북대서양조약(NATO)에 가입하고 동년 10월에는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of 1949)」을 제정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가에 대한 군사원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북대서양조약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게도 제공되었는데, 미국은 이들 국가와 상호방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1949년 12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관계관과 주한미군사고문단 및 미국대사관 요원들과 협의한 후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 양국 대표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99]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은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하여 유엔 가맹국의 합의 아래, 안정과 국제평화를 해치려는 범법자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으로 하여금 무력을 준비, 자위책을 강구하고 이 능력을 발전시켜 외부침략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전을 제거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한

미상호방위원조협정의 기본 취지는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협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조약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100]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UN헌장의 범주 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적절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조성하기를 원하며 ……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여 ……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 협정을 체결한다.[101]

한·미 양국간에 상호방위원조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병참지원을 비롯하여 무기 및 장비 등 주요 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원조계획에 책정된 장비의 보수와 정비도 사용 불가능한 것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주한미국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장군이 무쵸(Muccio)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대한군사원조는 한미상호방위지원계획에 의하여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7,500만 달러 가운데에서 재정비 보충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1949년 12월 31일 각종 비행기(F-51, T-6, C-47 등)와 해군용 포(3인치),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 기관총, 박격포(4.2인치) 등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으나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02]

이렇듯 주한미군 철수 이후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무기 및 장비를 지원하는데 방어 위주의 소극적 지원에다가 이러한 지원마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차 및 항공기 등 공격용의 현대식 무기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면서, 중공으로부터는 중공군에 소속된 한인의 용군 출신 간부를 포함하여 약 50,000명의 병력을 그들의 정규군인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등 남침을 위한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

군을 방어형 무기 및 장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소극적인 군사지원과는 달리, 북한은 현대식 장비 및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은 전쟁을 앞두고 군사적인 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제 2 절 소련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소련의 정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전쟁 그 자체의 종결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국제세력 판도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소련의 세력지배 하에 있던 동독, 폴란드(Poland), 헝가리(Hungary), 루마니아(Rumania), 불가리아(Bulgaria),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알바니아(Albania) 등 동유럽 제국은 소련의 주도하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전쟁의 종결과 동시에 동유럽 공산국가의 등장으로 소련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103]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외형적으로는 연합정권을 형성하였으나 실제 소련식의 정치형태를 취함으로써 동유럽 전역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었다. 소련은 동유럽제국을 소위 철(鐵)의 장막(帳幕)의 틀을 형성하여 서구의 자본주의 제국에 도전하는 하나의 동구세력을 형성하였다.

소련은 동유럽권에서 서유럽의 시장을 폐쇄시켰을 뿐 아니라 그 세력을 점차 자본주의 제국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특히 군사 면에서 소련은 영국과 함께 이란(Iran)에 주둔한 외국군대를 전후 반년 간 더 주둔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런던에서 영국-소련 외상(外相)회의를 개최하여 1946년 3월까지 모든 외국 군대를 이란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후에도 이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소련의 태도에 대해 열강제국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소련은 오히려 그곳에 병력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또한 소련군은 다시 이란 지역을 거쳐 터키(Turkey)를 포위하였다. 그것은 다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분할하여 하나의 독립권을 수립하고 소련군과 독일군이 공동 방위한다는 구실 하에 소련군을

주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장차 그리스(Greese)에서 연결하고 극동지역에까지 그 세력권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리스는 전쟁 중에 대독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던 그리스 공산당이 전후 동구권의 지원과 책동에 의하여 소위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정부군에 대항하는 게릴라전을 감행함으로써 전 그리스를 내전(內戰) 상태로 몰아넣었다. 전후의 경제부흥은 고사하고 날로 팽창되는 인플레로 인해 그리스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그리스는 그러한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제전문가의 조언 제공에 관한 미국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미국이 조사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는 경제적으로 피폐된 데다가 소련을 비롯한 공산세력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서구를 위협함으로써 다시 절박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편, 소련도 공산권내에서 크게 제고된 비중과는 달리 국제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동맹국이었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방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진영 사이의 양극(兩極) 대결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종전이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간의 대결, 동서냉전(東西冷戰)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서유럽은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승국인 여러 국가에 있어서도 전화로 말미암아 국가경제가 피폐되어 전쟁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일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승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미국은 전쟁 중에 직접 전화를 입지 않았지만 전쟁을 통하여 전시의 생산력이 거대하게 팽창하여 악성 경제공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의 경제 원조를 증대하여 소련의 침투를 막는 한편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에 서둘게 되었다.

결국 종전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동서냉전은 양 진영간의 정치, 군사적 경

쟁을 초래하였다. 우선 이 시기 미국은 스탈린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위기를 느끼고 소련과의 협조체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채택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유럽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방위조약(防衛條約)과 동맹체제(同盟體制)를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47년 3월 12일 있은 트루만 독트린의 선언 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동년 6월 5일에는 마샬 국무장관의 유럽 부흥계획인 마샬 플랜도 발표되었다.[104]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바르샤바에서 국제공산당 정보기관인 코민포름(Cominform)을 창설하였다. 여기에는 소련·폴란드·체코·헝가리·루마니아·유고 등 동구 6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개국의 서유럽 공산당이 참가하여 미국과 서유럽 국가간의 단결에 대항하였다.

소련은 코민포름 회의에서 "각국의 공산당간에 연락을 도와서 강건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공산당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활동조정을 꾀한다"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당면한 활동목표는 서유럽의 경제부흥을 방해하는데 두었다. 이 회의에서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즈다노프(A. A. Zhdanov)는 '서방에 대한 영원한 냉전을 선언'하는 이른바 즈다노프 노선을 발표하였다. 또한 다음 해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경제상호원조회의, 즉 코메콘(Comecon)을 발족시켜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집시켜 미국의 봉쇄정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하였다.[105]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 위성국들과 서유럽의 공산당이 창설한 동 기구는 공동선언에서 "트루만 독트린, 마샬 플랜이란 세계의 모든 지방에 미국의 손이 뻗치고 있는 세계적 팽창을 기도하는 정책을 위해 일반적 계획 속에 포함된 것과(중략)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럽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계획(중략)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는(중략) 제국주의자의 침략계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민주적 반제국주의자의 능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여 실제로 서유럽에 대한 정면대결 태세로 나왔다.

이리하여 유럽은 완전히 동서로 분열되었고 두 개 진영간의 대립은 격화하게 되었다. 이때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정치적 파업을 통해 경제 혼란과 파괴 공작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은 대규모적인 노동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공산당의 노력은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 선언 이래 소련세력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마샬 플랜에 의한 긴급원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효력이 없었다. 다만 1948년 2월 철의 장막 가운데 유일한 서구식 민주주의국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당 쿠데타로 인해 전복되어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된 사실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자유진영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노동당 내각조차도 반공적 태도를 취하게 되어 베빈(E. Bevin) 외상이 주도하여 공산주의세력 확대에 대항하고 서구제국의 공동방위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1948년 3월에는 영국·프랑스·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3개국) 등 5개 국가가 서유럽연합 부루셀 조약기구를 결성하였다. 한편 트루만 대통령도 소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대하여 서구부흥계획의 촉진, 징병제도의 채용 등을 의회에 요청하고 동시에 아메리카 대륙 자체를 공동방어하기 위해 1947년 9월에 체결한 리오조약에 이어 1948년 4월에는 아메리카기구 헌장을 조인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마샬 플랜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되어 서구제국에 대한 경제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원조까지도 확대하였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코민포름의 활동은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자 마샬 플랜에 반대투쟁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세계평화 옹호운동으로 전환시켰다. 1948년 6월 코민포름은 유고의 공산당이 농촌에 대한 골호즈(Kolkhoz : 소련의 집단농장화)화를 촉진하지 않고 있다고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의 편향에 대해 비난하는 결의를 행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대전 중 대독 게릴라전의 영웅 티토(Tito)가 전후 소련의 지지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모든 것을 소련과 협조해 왔다. 그러나 티토는 유고의 민족적 이익을 강조하고 소련이 민족적 불평등과 지배주의를 위하여 위성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이라 판단하고 암암리에 소련의 대국주의(大國主義) 정책을 비판하고 코민포름의 결정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동구제국의 공산당은 코민포름의 결의에 따라 일제히 당내숙청을 감행하여 각 공산위성국 내에 있는 티토주의자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감행하였다. 이어 동년 6월 유고를 코민포름에서 제명하는 동시에 대(對)유고 경제봉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유고는 재건 5개년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원조가 절실하였으므로 서구에 의존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코민포름의 활동과 마셜 플랜의 진행으로 미·소 양대진영의 대립은 한층 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립은 동서독의 통치문제를 절박한 사태로 몰아갔다. 서구측은 서독점령 지역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 가입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1948년 6월 서독에서의 마르크 통화개혁(通貨改革)을 감행하여 통화안정을 꾀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서독에 적용한 마샬 플랜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동독 점령지역 내에 있는 미·영·불·소 등 4개국 관리 하에 있는 베를린(Berlin)을 봉쇄하여 유럽와의 관계를 차단하여 고립시키려고 함으로써 양 진영간에 일대 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서독에서 단행한 통화개혁의 결과는 오히려 생산율을 상승시켜 동독의 경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나 유럽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공수(空輸)로 베를린에 대대적인 물자보급을 계속하여 소련의 지상봉쇄에 대한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역보복(逆報復) 조치로 이미 유럽에서 영, 불, 베네룩스 등 5개국이 체결하였던 부루셀조약기구를 반공방위체제로 정비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1947년 9월에 양 아메리카대륙 제국 간에 체결된 공동방위조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48년에 열린 보고타 회의에서 기구를 발전시켜 아메리카제국의 안전과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능력을 제고시켰다.

그 후 1949년 4월에는 다시 이들 유럽동맹제국과 아메리카 공동 방위제국을 결속시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체결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루트칼·아일랜드 등 12개국이 이에 가맹하고 서독을 포함한 유럽과 양 아메리카대

륙에 있는 가맹국(加盟國) 중에서 어느 한 나라,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방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가맹국은 이에 필요한 군사훈련 전략 군수생산 등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여 반공 전초(前哨)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정치적 반공체제를 강화시켰다.[106]

한편 소련은 현실적으로 국제 관계에서의 문제보다 국내문제로 훨씬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세계 제2의 강국으로 부상한 소련은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난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엄청난 인적 손실과 물적 피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 상태를 면한 것이었다. 전쟁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산업시설은 철저히 파괴되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침체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굶주림 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소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 전쟁을 통해 소련은 국부의 약 30%를 상실하였다고 하였다.[107]

소련은 경제회복을 위해 제4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108] 이때의 조달된 재원(財源)은 주로 패전국 독일 등으로부터 받아 낸 배상금과 기타 지불금, 그리고 소련군이 주둔한 국가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낸 주둔지원비 등이었다. 그 액수는 대단히 큰 규모였으며, 소련 정부의 전체 수입가운데에는 상당 부분이 그러한 형태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109]

냉전의 격화와 국내 경제력의 피해상황은 전쟁 직후 소련의 군사정책 기조를 설정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소련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된 자국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군사력 감축을 위시한 다양한 경제수단을 동원하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와의 군사력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군사력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후 소련은 전쟁 중에 점령하였던 동유럽 지역을 그의 위성국으로 만들어 완전 장악함으로써 철의 장막을 치고 서구지역으로 그의 세력을 팽창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서유럽제국의 공고한 결속과 미국의 적극지원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 확장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소련은 베를린 봉쇄에 전면적

으로 대응한 미국과 서방측의 봉쇄정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렇듯 소련은 서구세력의 강화로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유럽에서의 진출이 완전 봉쇄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대한 집념을 결국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대신 소련은 목표를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특히 극동지역과 동남아지역은 서구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 소련은 이 지역이 미국이나 서구제국의 저지정책 내지는 봉쇄정책이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세력 확장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설정하였다. 극동에 있어서 제정러시아 시대 이래의 남진정책이 러일전쟁에서 실패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전후에 있어서 중국과 한반도 지역은 소련의 극동진출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소련은 전쟁 중 연합국의 4대강국으로서 전후처리에 직접 참여하여 미국과 함께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킨 후 북한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만주를 비롯한 중국대륙의 진출에 있어서도 중국내전의 결과 중공군이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대륙을 석권함에 따라 극동지역으로 향한 팽창정책은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2. 군비감축에서 재무장정책으로의 전환

1) 군비감축 정책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비감축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종전 직후 소련은 군비감축의 일환으로 1945년 5월 현재 1천 1백만 명에 달하던 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기 시작하였다.[110] 이와 관련된 소련 최초의 공식적 움직임은 종전직전인 1945

년 6월 23일 전후 최초의 소련최고회의에서 제정된 현역(現役)으로 편성되어 있는 노병을 동원해제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군사력의 감축이라는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이 법률과 관련하여 당시 러시아 연방공화국 인민위원소비에트 의장이었던 코시긴(A. N. Kosigin)의 발언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백해진다. 즉, 그는 "수백만 명의 군 병력이 군으로부터 민간 경제분야로 복귀하였다. 우리의 공업과 농업분야는 군에서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전문성을 보유하게 된 인력의 확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데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소련군 병력의 동원해제는 법률에 따라 1945년 7월 5일 시작되어 소련 최고회의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48년까지 약 850만 명의 사병과 하사관이 동원해제되었으며, 소련군 병력이 총 287만 4천명으로 감소되었다.[111] 동원해제 결과 경비군은 약 1/3 규모로 감축되었으며 후방 방위군도 대폭 해체되었다. 장정들에 대한 동원해제와 함께 주로 동원에서 해제된 자들로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으로 군에 소집된 자, 중등 혹은 고등 농업교육을 받은 자, 소집 전에 교육자로 근무한 자, 전쟁 기간 3급 이상의 부상을 당한 자, 계속해서 7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그리고 계속적인 군 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여성 사병 및 하사관 등이 동원 포함되었다.

그러나 소련 당국은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다른 한편 양질의 기간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고급 군사교육, 고급군 정치교육, 고급군 기술교육 등을 이수한 장교의 경우에는 예비군으로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모든 병과 장교들 가운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교는 불과 2.5%만이 동원해제되었다.

한편, 군에서 전역한 인력은 대부분 민간 산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다. 그 결과 노동인력이 대규모로 증가되었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시와 비교하여 1947년 초 현재 노동인력이 약 25만 명 증가하였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13만 7천 7백 명이 해제되었으며, 스탈린그라드는 6만여 명이, 로스토프는 11만 6천 1백 명이, 북오세티야는 1만 2천 1백 명이, 그로즈니는 1만 5천 9백 명이 각각 해

제되어 산업분야에 투입되었다.

소련군은 병력감축과 아울러 군 장비도 대대적으로 감축하였다. 즉, 1946년 9월 현재 군용차량 약 15만대와 군마 약 1백만 필이 민간 경제분야로 이전되었다. 해군의 경우에는 1,500척 이상의 선박을 민간분야로 복귀시켰으며, 수송항공부대들 역시 민간 항공으로 전환시켰다. 당시 동원 해제된 군 인력 가운데 상당수는 공산당원이었으며, 1945년 중반부터 1946년 1월까지에만 군내 공산당원의 수는 297만 4천명에서 181만 5천명으로, 그리고 기초 당 조직의 수는 8만 4백개소에서 5만 9천 4백 개소로 각각 감소되었다.[112]

결과적으로 1947년 1월 1일 현재 소련군 내에는 118만 7천명의 공산당원 혹은 전체 당원의 19.6%만이 활동하게 되었으며, 군으로부터 각 지역 민간조직으로 2백 6십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과 콤소몰요원이 복귀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역 당 조직의 경우 전체당원의 2/3에 달하는 46만 명의 당원과 후보당원들을 군으로부터 동원 해제된 병력 가운데 영입하였다.

2) 재무장 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던 미·소의 관계가 1948년 말을 고비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냉전이 표면화되면서 소련의 대외(對外)정책도 1920년대로 회귀했다. 소련 내에서 소위 "적에게 포위된 신생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대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총력 국방사상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전과의 차이는 그 범위가 종전 소련 일국에서 동유럽과 중국·몽골·북한을 포함하는 신생 사회주의 진영으로 확대되었을 뿐이었다.

소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복구와 경제력 회복을 위해 군비를 대규모로 감축시켰으나 다시 재무장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미 1946년 1월부터 2월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군사정책 계획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으며, 정치국 특별위원회는 군의 재조직과 군사력의 지속적 증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1946년 2월 2일 당 중앙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하여 전후 당 군사정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당시 선언문에 제시된 소련 군사정책의 기본원칙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물적, 기술적 기반의 지속적 강화, 과학기술의 발전성과를 이용한 국방력 강화, 대외 상황을 고려한 군의 감축 및 재조직, 유사시 군의 동원 및 대처능력 향상 등이었다. 당시 수립된 계획의 주요 방향은 소련의 방위에 적합한 무장과 인원 확보, 강력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규 상비군 건설, 각 군종 및 병과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47년 4월에 개최된 최고 군 지휘관회의에서 군사정책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이 시기 소련당국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재래식 병기의 성능향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단시일 내에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서방국가들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113]

당시 소련 당국은 제4차 국가경제부흥 발전 5개년 계획(1946-50)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소련 방위력의 강화와 신형 병기(兵器)의 보급지원"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 특히 중공업의 발전과 군사력의 강화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잇다는 것을 재차 발표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이 소련군사력 강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한 것이었다. 소련당국은 경제 특히 국가의 생산력 수준이 군사력의 원천으로 보고 과학에 기반을 둔 군사 경제정책과 국가경제의 성공적 발전만이 소련 군사력의 물적, 기술적 기반의 질적 변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련은 국가 경제력의 강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산업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성취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련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우선 군수산업과의 연관성이 깊은 에너지, 자동차 산업, 화학공업, 철강산업, 건설 등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고, 항공기 제작, 함선 제작, 트랙터 생산, 차량생산 공장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 영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군수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14]

군수산업 관련 분야의 발전 결과 소련군의 무기와 군 장비 수준은 사실상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소련 군사기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이었다. 당시 서방 국가들에서는 소련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해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수많은 외국 군사전문가들은 핵에너지를 이용하는데 10-15년 심지어는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15]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잘못된 것이었다.

즉, 소련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에 이미 소련 과학아카데미로 하여금 원자력에 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1943년 초부터는 학자인 쿠르차토프(I. V. Kurchatov)의 지휘 하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과학 실험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 결과 소련은 1946년 말 우라늄 흑연반응기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우라늄의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다.[116] 이와 관련하여 소련정부가 1947년에 이미 "핵 폭탄에 대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17]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소련은 결국 1949년 8월 최초의 핵실험을 행하였고, 그 실험 결과는 동년 해 9월 25일 타스통신에 의해 성공적이었다고 보도되었다. 즉, 타스통신은 소련이 핵무기와 핵무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후 소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신형 핵무기들이 속속 생산되었다.[118]

소련은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핵무기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개발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당시 소련 군사이론에서는 핵폭탄을 목표물까지 운반하는 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항공기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던 미국과는 달리 미사일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다.[119]

결과적으로 소련은 1947년 소련 최초의 미사일(R-1) 제작을 완료하여 같은 해 10월 18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으며, 그 후 즉시 군에 미사일을 보급하였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보다 강력한 로켓용 엔진이 개발되어 1951년부터는 보

다 개선된 미사일(R-2)을 보유하게 되었다.[120]

3. 소련군의 개편

1) 지휘부의 개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평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력 감축은 병력과 장비의 감축만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후 소련 당국은 결과적으로 2차에 걸쳐 군 지휘부를 개편하였다. 즉, 1차 편성은 종전 직후 군을 평시체제로 전환시킴에 따라 이루어졌고, 2차 편성은 재무장정책으로 전환된 후 이루어졌다.[121]

소련 지도부와 총참모부는 총력국방을 위한 사회주의 진영 내 총 가용자원의 파악과 효율적 운용을 검토하였고 사회주의 진영의 재무장과 역할 분담도 논의하였다. 서구진영과의 접점 지역은 만약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증강할 필요가 있었고 또 적전 분열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친소(親蘇)정권의 확립도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종전 직후 1차편성에서 소련 당국은 먼저 군 지휘기관들을 대폭 개편하였다. 1945년 9월 4일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의 지시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국가방위위원회(GKO)를 해체하였으며 최고총사령부 역시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1946년 2월 25일 소련인민위원소비에트의 포고령에 따라 방위인민위원회와 해군인민위원회를 '무력인민위원회'라는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 무력인민위원회는 무력부(武力部)로 개칭되었다. 무력부 산하에는 협의체기관 성격의 최고 군사소비에트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격화된 1950년 2월 무력부는 지상군・공군・방공군 등이 속하는 군사부와 해군부로 재분할되었으며, 1950년 3월에 설립된 최고 군사소비에트

는 군사력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 국가기관으로 기능 하였다. 군사부와 해군부는 스탈린 사후인 1953년 3월 재차 소련 국방부로 통합되었으며 국방부 산하에는 통합군사소비에트가 설립되었다.[122] 또한 일부의 중앙 군 정치기관들도 개편하였다. 즉, 1946년 2월말 전군에 대한 지휘권이 단일의 무력인민위원회로 통합된 것과 관련하여 전군 통합의 정치 총지휘부를, 그리고 각 군종별로는 정치지휘부를 설립하였다.[123]

아울러 육군·해군·공군 등에 대한 지휘권은 해당 군종의 총사령관 및 총참모부에 귀속시켰으며, 각 군종 총사령관 산하에는 협의체 기관인 군사소비에트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군 건설과정에서 해당 총사령관 산하의 군사소비에트를 협의체 기관으로 개혁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1950년 중반 각 군종, 군관구, 집단군, 군 등에 해당 부대의 지휘를 위한 군사소비에트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부대에 설립된 군사소비에트의 권한은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강화되어 부대의 동원과 훈련, 정치교양 활동, 규율통제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원적 지휘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군사소비에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권이 발휘되었다. 즉, 군사소비에트에서 채택된 결정은 해당부대 지휘관 및 참모장의 서명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지시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포병사령관에 속하는 방공군사령관 직책을 부활시켰으며, 각 군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참모장, 각 군종 총사령관 및 후방사령관 등은 모두 무력부의 차관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각 부대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대에 대한 규칙적인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이 끝난 직후 각 군종 내에 총감찰국을 설립하였으며, 1947년 초에는 무력부내에 총감찰부를 설립하여 모든 군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124]

한편 소련당국은 1945년 7월부터 9월까지 각 전선군과 일부군의 지휘부를 군관구 지휘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관구의 수를 증가시켰으며, 시베리아군관구, 백러시아-라트비아군관구 등 기존의 일부 군관구는 해체하였

다. 이때 새롭게 창설되거나 과거에 해체되었다가 다시 설립된 군관구로는 바쿠(Baku)·바라노비치(Baranovich)·보로네즈(Voronezh)·고리키(Goriky)·돈(Don)·서부 시베리아·동부 시베리아·카잔(Kazan)·쿠반(Kuban)·레닌그라드·민스크(Minsk)·프리발틱(Pribaltik)·프리카르파트(Prikarpat)·스몰렌스크(Smolensk)·스타브로폴(Stavropol)·스텝(Step)·타브르(Tavr)·투르케스탄(Turkestan) 군관구 등이 있었다.[125]

종전 직후 극동지역에서 자바이칼전선군을 근간으로 하는 자바이칼-아무르군관구, 제1극동전선군을 근간으로 하는 프리모르예군관구, 제2극동전선군을 근간으로 하는 극동관구 등 3개의 군관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소련은 자국 내에 총 32개의 군관구를 보유하게 되었다.[126]

1946년 초에는 방공활동과 관련하여 바쿠관구와 모스크바관구 등 2개의 방공관구를 설립하였다. 방공관구의 경우에는 일반 군관구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각 군사위원회 활동의 지휘, 군 징집활동, 관구내 동원 활동 수행 등 일반 군관구의 고유한 행정적 기능들은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부터는 군관구의 수가 수차례에 걸쳐 감소되었다.[127]

동유럽에 주둔한 소련군의 경우에는 각 국가를 기준으로 수 개의 집단군으로 통합되었다. 우선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부대들이 북부 집단군으로 통합되었다. 1947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로부터 소련군 부대들이 철군함에 따라 이미 조직되어 있던 남부 집단군은 해체되었다. 또한 1949년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 부대들은 독일점령 집단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동유럽 각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집단군들은 이후 결성된 바르샤바조약군의 근간이 되었다.

2) 군의 재편성

소련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는 히틀러의 침공 8개월 후인 1942년 2월 23일 스탈린 지시 55호를 통하여 제창한 바 있는 '항상적(恒常的) 작전요인'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전후에도 계속하여 "전쟁은 지상군을 주축으로 하는 모든 군종 및 병과의 통합된 노력, 효율적인 전술 전략

적 이용 및 엄정한 협조 하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기존의 소련 군사이론에 입각한 군사력의 재편과정이 진행되었다.[128]

당시 소련의 군사력은 크게 육·해·공군의 3개 군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방공군과 공정군은 독자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위원회(GPU) 소속 국경수비대와 내무부 소속 경비대가 소련 군사력의 일부를 점하고 있었다.

소련 육군은 완전한 기계화, 화력과 기동력의 강화, 전투 시 각급 부대의 독자적 작전능력 강화 등에 입각하여 건설되었다. 지상군의 최고 전술단위인 보병군단은 기계화사단과 수 개의 새로운 군단 포병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화력과 기동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각종 포와 박격포가 21%,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가 20배 이상 증가하여 1953년 현재 보병군단의 일제 사격량은 전차, 고사포 및 자주포를 제외하고는 37톤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는 독·소 전쟁 말기 군단 일제(一齊) 사격량의 7배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당시 1개 군단의 일제 사격량은 약 5톤이었다. 또한 소련 군사전략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시기 보병군단의 기동성은 독·소전 시기의 기갑군에 뒤지지 않았으며 전투임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강화되었다고 한다.[129]

한편 지상군의 기본 전술단위인 보병사단 조직도 대폭 개편되었다. 사단에 1개 자주 기갑 연대가, 그리고 각 보병연대에는 SU-76포대(중대)가 편입되어 화력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1946년의 경우 사단포병의 일제사격 화력은 3,500톤으로, 그리고 1분당 사격량은 65만 2천 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차, 자주포, 일반차량, 견인차량, 장갑차량 등의 보급에 따라 보병사단의 기동력이 대폭 강화되어 일반 보병부대와 기계화부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1948년 소련군 편제에 의하면, 1개 보병사단은 일반차량, 견인차량 및 장갑차를 포함하여 총 1,488대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30]

그러나 기동력과 화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도 보병사단은 고사포, 공병장비, 통신장비 등의 면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기병은 그 효용성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축된 끝에 1954년 마침내 해체되었고 기갑 및

기계화부대 역시 개편되었다. 우선 기갑군을 주축으로 기계화군이 새로이 창설되었다.

기계화부대는 통상 2개 전차사단과 2개 기계화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보병과 비교할 때 보다 많은 전차와 자주포, 강력한 일반포와 고사포 장비를 보유하였다. 전차군단과 기계화군단은 전차사단과 기계화사단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 사단들은 2차대전시의 전차군단 및 기계화군단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전차와 포병 장비를 보유하였다.[131]

포병은 일반포병뿐만 아니라 최고총사령부 예비포병의 화력도 강화되었다. 포병소속의 대전차부대와 로케포부대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지상군부대들이 보유하는 각종 포 및 포격유도장비가 급속하게 강화, 발전되었다. 즉, 먼저 포병부대와 박격포부대는 신형 85㎜ D-48 대전차포, 대전차무반동포, 122㎜ D-74포, 130㎜ M-46포, 152㎜ M-47포, 240㎜ 박격포, 육상목표물에 대한 탐색 및 측정을 위한 레이다기지, 파편축적기뢰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1944년형 85㎜ 포와 100㎜ 야전포, 1938년형 122㎜ 유탄포, 120㎜와 160㎜ 박격포 등이 개량되었다. 셋째, 적 항공기에 대한 공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낙후된 고사포들이 신형 57㎜와 100㎜ 고사포로 교체되었다. 넷째, 로켓무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BM-14 및 BM-24체계의 도입으로 사거리, 정확성 등이 향상되어 카튜샤(M-8, M-13)의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화력의 강화와 함께 포병의 기동력도 크게 증강되었다. 즉, 이 시기 신형 견인장비의 도입으로 중포(重砲)장비까지도 시속 25-30㎞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시속 6-10㎞를 넘지 못하였다. 공병, 화학 등 여타의 병과의 경우 새롭고 보다 현대화된 기술병기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부대 화력이 강화되고 장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전쟁말기와 비교하여 1953년 보병군단 내 대포병중대의 수가 1.5배로 증가하였으며, 화학병과의 경우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들도 강화되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전략 폭격기 및 핵무기에 의한 공격능력이 강화되자 소련 방공군의 역할과 의미도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이 시기 소련지

도부는 방공군의 강화에 상당히 주력하였다. 즉 서부전선, 남서부전선, 중앙전선, 자카프카즈전선 등의 방공군을 방공관구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48년에는 마침내 방공군을 소련군의 독립 군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전 국토를 국경에 연한 지역을 관할하는 국경대와 내부지역으로 다시 구획하였다. 국경대의 방위임무는 각 해당 관구사령관에게, 그리고 해군기지에 대한 방위임무는 각 해당 함대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내부지역은 독립군종인 방공군으로 하여금 방위하게 하였다.

또한 방공군의 무장체제도 강화하였다. 이 시기 방공군의 강화는 우선적으로 고사포부대의 강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고사포부대들은 큰 구경과 빠른 발사속도를 지니는 고사포를 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방공군 항공이 강화되어 이 시기 소련 방공군은 최초로 초음속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952년에는 대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132]

방공군 체제의 강화와 아울러 공군도 대폭 강화되었다. 과거 소련공군은 전술항공과 전략(장거리)항공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 시기 전술항공 소속의 강습항공이 전투폭격항공으로 교체되고 1946년 전략항공이 조직상 독립되었다. 또 같은 시기 공정군 소속의 수송항공이 창설됨에 따라 이후 소련공군의 편성체제는 전술항공, 전략항공, 수송항공 등 3개 분야로 크게 대별되었다.[133]

각 항공부대의 편성체제는 독소전 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련공군은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1945년과 비교할 때 1953년 말 현재 소련 군사력에서 공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이시기 제트기가 실전 배치됨에 따라 제트기 조종사로의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과정들이 개설되었으며, 그 결과 1947년 말에는 약 50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제트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1946년 6월 공정군은 공군으로부터 독립하여 무력부에 직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령관 직책이 도입되는 등 공정지휘부가 새롭게 조직되었으며 독립근위공정여단과 일부의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낙하산공수와 착륙공수부대들이 창설되었다.

공정군은 조직체계상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병기로 재무장하게 되었다. 즉 먼저 각 공정부대들은 ASU-57 자주포, 85㎜ 포, 120㎜ 박격포 등 보다 많은 수의 자동화기, 포, 박격포, 대전차 및 고사포 장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둘째, 중형(重型)글라이더와 화물낙하산이 공수부대들에 도입되어, 57㎜와 85㎜ 포, 경자주포 장비 및 소령차량 등이 공중낙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신형 수송기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도 공정군은 속도가 느리고 화물탑재 능력이 적은 Li-2와 같은 많은 수의 노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글라이더의 견인과 무거운 화물의 수송을 위해 공군이 퇴역시킨 TU-2 및 TU-4 폭격기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환경에 처한 소련 지도부는 해군력의 강화에 주목하고, 제4차 5개년 계획의 수행을 통하여 소련 해군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52년 제작에 착수한 선박의 총 배수량은 1940년 제작된 함선 배수량의 3.5배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신형 선박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1953년에 이르러서는 전후 제작된 신형선박이 전체 해군 선박의 약30%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소련해군은 연안지역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쟁 시와 비교할 때 이 시기 해군의 편성체제에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즉, 당시에도 해군은 함선, 잠수함, 해군항공, 연안방위부대, 해병 등의 병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지로부터 멀리 위치해서 전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의 비율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소련 해군은 이후 잠수함과 해군항공의 지속적인 강화에 주력하였다. 평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일부 독립소함대들이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해체되었다. 당시 해체된 소함대는 백해 군사 소함대, 도나우 및 드네프르 군사 소함대 등이었다. 또한 연안 방위지역과 해외에 설치되었던 임시 해군기지들도 해체되었다.[134]

또한 국경수비군 및 내무경비군의 활동과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다. 우선 현역군 후방에 대한 방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전쟁시 현역군 후방의 방위를 책

임지고 있던 내무인민위원회군 총지휘부가 해체되었다. 내무군은 대폭적으로 감축되었으며 철도 및 주요 산업체 방위부대들도 해체되었다. 소련 국경이 일부 변경되자 과거 현역군 후방을 방위하던 부대들은 새로이 국토로 편입된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135]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소련군의 군사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최초의 징후는 1946년 8월 2일 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선포된 '당 및 소비에트 활동가 지휘요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포고령'이었다. 이 포고령에서는 기존의 장교 및 지휘관 속성 양성과정을 "계획적이고 엄정하게 조직된 양성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결과 소련 군사교육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

먼저 중급 군사교육기관의 교육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입교대상은 전쟁에 참전했던 일반병사와 하사관, 그리고 장교가 되기를 원하는 8-9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입교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중급일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일반교육과정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쟁시 빈번한 직책 변경과 급속한 계급 상승 등으로 충분한 일반교육 혹은 군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당수의 장교들을 위하여 새로운 고급 및 중급 군사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으며, 새로운 장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수의 재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즉, 1946년 방공군 최고군사학교가 포병 레이더 군사아카데미로 재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947년 레닌 군정치아카데미와 군사물리체육연구소가, 1949년에는 방공군을 위한 2개 고사포학교와 1개 레이더 학교가, 그리고 1953년에는 통신지휘 아카데미와 포병지휘아카데미 및 방공군을 위한 2개의 무선기술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이외에도 수 개의 공병기술과정의 고급 혹은 중급군사학교들이 설립되었다.[136] 또한 전쟁종료 후 고급군사교육기관인 군사아카데미에 입교하고자 하는 장교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소련군지휘부는 군사아카데미의 입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그 수효를 조정하였다.

소련지도부는 군 교육기관의 개편과 아울러 당정 활동체계도 개편하였다. 전쟁종료 후 소련지도부는 '군내 당정활동의 강화, 군내 소장 공산당원들에 대한 이념과 정치교양의 주입, 신형병기에 대한 군 인력의 적응력 향상, 일원적 지휘체계와 군기의 강화 등 평시 군내 당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관련시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당 중앙위원회는 군내 공산당원의 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1945년 12월 8일 군 인력을 당에 영입한다는 일반조항의 재도입을 규정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전쟁시 전투에 참여했던 유능한 전사들을 당에 영입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동원 해제에 따른 군내 공산당원의 급감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포고령 선포 후 3년이 지난 1948년 말 현재 보병중대의 40%이상과 포병중대의 25%가 당 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치를 통한 영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어떻든 당 중앙위원회는 군내 공산당원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전후 군내 당정활동의 개편을 위하여 1946년 7월 '당의 확장에 대한, 그리고 당에 재영입되는 자들에 대한 당 조직화활동과 당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한 포고령'을 선포하였다. 이 포고령에는 특히 '당 규범에 제시된 당 원칙 및 규정의 엄격한 준수,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 공산당원에 대한 이념 및 정치교양활동 강화, 공산당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자율성 향상' 등의 과제가 강조되었다.

군내 정치교육체계의 강화 결과 1947년의 경우 약 50%의 장교요원이 지휘관 정치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으며, 13%는 야간대학과 야간 당 학교에서, 약 30%의 장교는 자습을 통하여, 7%의 장교는 일반학교 혹은 고급군사교육기관의 불출석 수업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군내 정치교육체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1948년 현재 소련군내에는 정치학교 2,640개, 레닌 생애 연구모임 4,250개, 공산당역사 연구모임 6,200개, 대대 정치학교 690개, 마르크스-레닌주의 야간대학 162개 등이 있었으며, 총 27만 명의 공산당원과 콤소몰요원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1951-1952년에는 각급 부대 지휘관 가운데 74%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야간대학을 수료하였다.[137]

결과적으로 소련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군 교육기관과 또 새롭게 체계화된 당정 활동체계를 통해 대규모의 군 인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고 재무장계획에 의해 재편된 병력을 기반으로 유사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을 육성하고 있었다.

4.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과 군사전략

1) 북한 점령정책

(1) 소련군의 북한점령

해방 직후부터 미·소 공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렬되기 이전까지 소련은 한반도내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기본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련은 해방직후 북한에서 소위 '사회주의 구축(構築)'이라는 차원에서 한반도가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前哨) 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역시 소련이 북한건설 초기부터 군사물자와 장비지원은 물론 군 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소련 군사고문관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한의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45년 8월 8일 소련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리예프스키(Vasilebvsky)는 대일전쟁에 참전하면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소련극동군총사령관의 호소문'을 통해 "소련군은 조선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조선인들의 반일(反日)투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고 "서울의 상공에는 자유와 독립의 기치가 휘날릴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8일 소련의 한국진주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명령(一般命令)」 제1호의 결정 및 전달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 상공이라는 문구는 아직 38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138]

8일 북한으로 진주하기 시작한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상장[139]이 지휘하는 제1극동전선군 소속의 제25군으로서 5개 사단, 1개 여단의 12만 명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의 태평양함대의 해군 부대와 기타 부대병력 3만 명 등 모두 15만 명으로 구성되었다.[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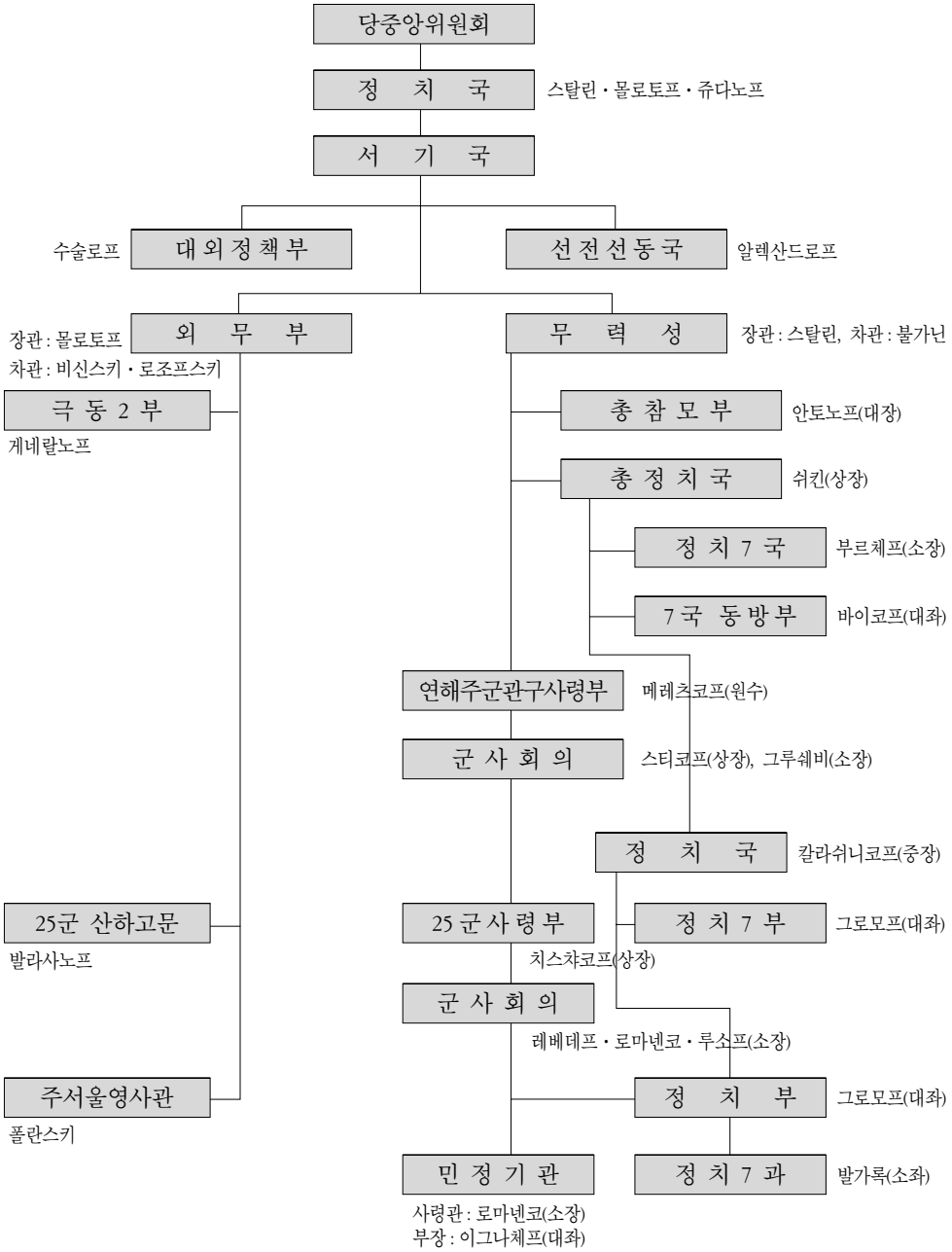
소련군은 제1극동전선군 병력을 동해 연안을 따라 남진시키면서 북한지역에 있던 일본군을 괴멸시켜 만주에 있던 관동군과의 연결을 차단하는데 전략목표를 두고 있었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동해내의 일본 해상 보급선과 북한의 항구 이용을 차단하고 일본군의 소련 연해주 상륙을 예방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양군은 합동으로 "조선을 해방하려는 임무를 영광스럽게 완수하기 위하여", "북조선의 제 항구를 점거하여 관동군을 보급기지로부터 차단시키고 일본 본토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을 지향하였다.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는 소련군의 관할구역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울러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의 경계로 삼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면서도 "신정권(新政權)이 각도에 성립된 후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동해안의 소전투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의 특별한 저항 없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진주하고 평양에는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부를, 각 도 및 군에는 '위수사령부'(衛戍司令部)를 설치하여 군정 업무를 개시하였다.

소련군 진주(進駐) 직전 북한에서는 먼저 평양에서 조만식(曺晩植)이 중심이 되어 국내 공산주의자들까지 포함한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 지부(支部)를 결성하고 해방이후 정부수립에 대비하였으며 각도 중심 도시에서 속속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북한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정부수립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소련군은 진군에 박차를 가하였다.[141] 당시 소련의 북한정책 결정은 <표 2-7>과 같은 계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명령』 제1호의 접수 이후 모스크바의 지침은 연해주 군관구를 통하여 제25군에 내려 왔으며, 당시 소련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연해주 군관구의 주요 지휘계통은 <표 2-8>, <표 2-9>와 같다.

<표 2-7> 소련군의 지휘체계[142]



<표 2-8> 소련의 대북 정책결정 인물

성 명	주 요 직 책	주 요 역 할
스 탈 린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의장, 무력성장관	정책 최고결정자
몰로토프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부의장, 외무성 장관	한반도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와 미소교섭을 주도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
쥬다노프	당 정치국원, 당서기	대북한 이념작전을 지도
불 가 닌	당 치치국 후보위원, 무력성 차관	대북한 군사정책에 지도 및 영향력 행사
수술로프	당 중앙위 대외정책부장,당서기	정부기관과 상급 군정치기관의 보고와 건의를 접수하고 정책판단 수행

<표 2-9> 연해주 군관구 지휘부[143]

부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 령 부	사령관	메레츠코프	원 수	비류초프(상장)
군사회의	위 원	스티코프	상 장	
		그루쉐비	소 장	
정 치 국	국 장	칼라쉬니코프	중 장	소로킨 · 두봅스키
	부국장	바빌로프	대 좌	이바노프
정치국7부	7 부장	메클레르	중 좌	마르모르쉬체인

제25군 군사회의 위원인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에 의하면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스티코프(Terenth F. Shtykov) 상장에 대해 “그가 조선에 있건 관구 참모부에 있건 또는 모스크바에 있건 간에 그의 참여 없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스티코프는 북한에는 1946년 2월말에 왔으나 이미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기 이전인 8월 12일 소련군이 한반도 북단지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부터 조선의 주민들이 소련군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소련군이 현지 주민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다.

1946년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는 "소련은 조선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 소련에 우호적인, 그리하여 장래에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정과정에 따라 소련 제25군은 가장 먼저 1945년 8월 8일 한반도 북단 함경북도를 통하여 1개 보병여단과 1개의 기갑여단 등 2개 여단병력을 투입하였다. 이들은 이날 야간 조선인 약 80여명과 함께 쾌속정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소군은 일본경찰서를 기습한 후 소련령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에게 "9일 정오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할 것"이라고 경고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련군의 최초 두만강 도하공격은 소군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미 8월 8일 소련군은 치스챠코프 장군 휘하의 제25군(제1극동전선군 예비였던 제88저격군단 산하)의 제393사단 중 1개 여단 규모의 기갑부대가 소·만 국경을 건너 만주 영내의 수타오포즈에 있던 일본군 1개 연대에 포격을 가하면서 진격하였고 그보다 스틸로 남쪽에서 1개 보병여단이 새벽 2시경 만주령의 토문(圖們)을 지나 조·만국경의 경흥교(慶興橋)를 건너 경흥으로 진입하였다. 연길에 있던 일본군의 제3군사령부는 소련군이 회령(會嶺) 혹은 웅기(雄基)의 2개 행로뿐인 기로에서 남향의 웅기쪽으로 행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은 적중하였다. 남하하던 소련군 지상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1개 혼성여단으로부터 가벼운 저항을 받았을 뿐이었다.[144]

소련군의 경흥, 웅기 진출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미·소간에 지상군 작전구역에 대한 합의가 포츠담회담시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소련군이 어떤 근거로써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10월 17일 스탈린[145]-해리만 회담과 2월 9일 얄타회담시 미·소간 참모총장회의에서, 소련측에서 북한 북변제항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그 계획을 통고하였고 미국측이 그를 묵인하여 양측간에 묵시적 양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전과 동시에 8월 9일 새벽 소련 태평양 함대의 해·공군기들은 북한의 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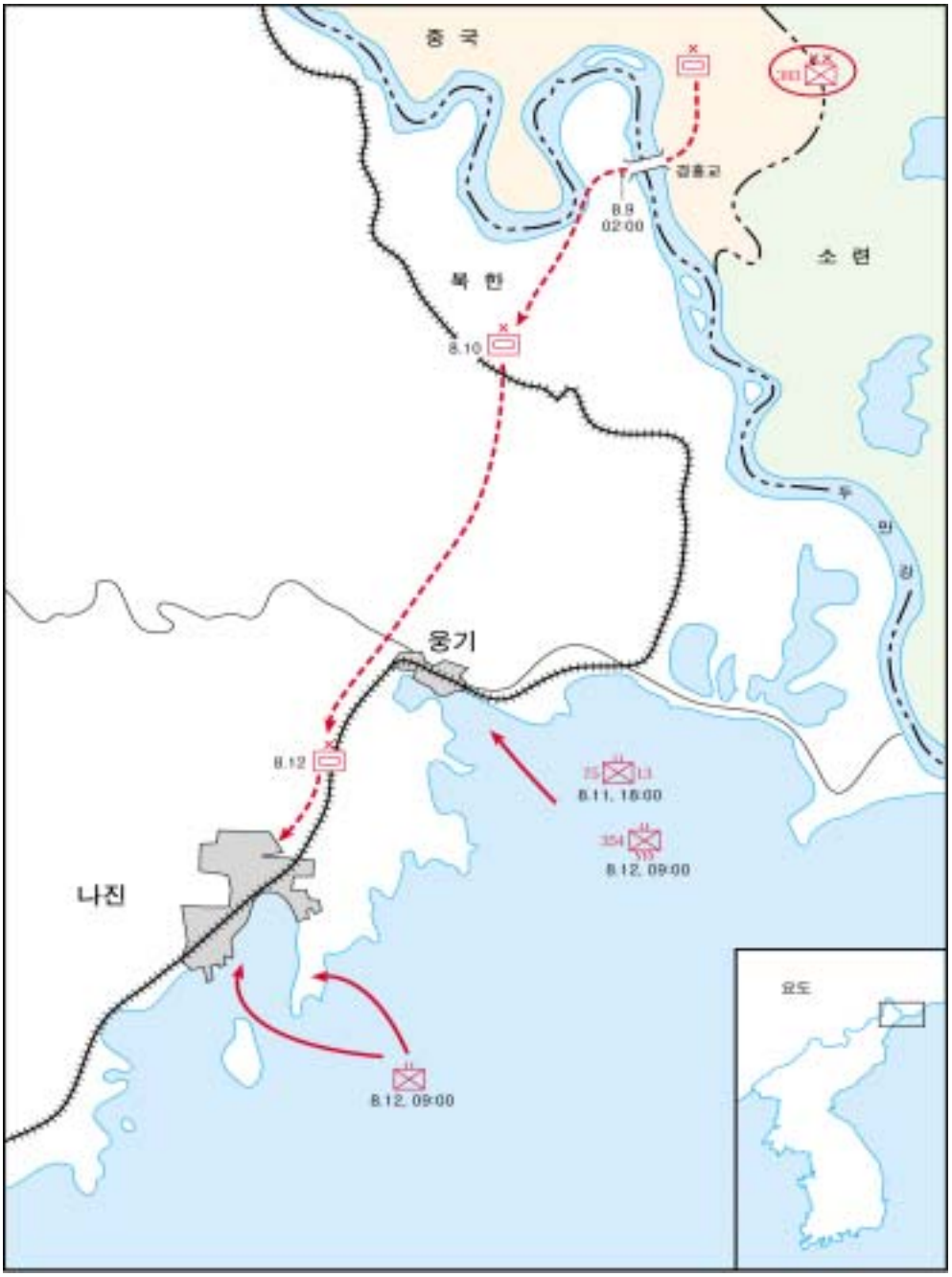
의 웅기와 나진에 있던 일본군 부대에게 강력한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전폭기들도 일본의 해상수송선들에 파상 공격을 감행하였다. 9-10일 양일간의 레미스코장군이 이끄는 소련 항공기들은 504대가 출격하여 20-30회에 걸쳐 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습으로 수송선 19척 유조선 3척을 격침시켰다. 또한 9-10일간의 야간 나진(羅津)과 청진(淸津)을 공격한 소군 초계정 부대들은 일본군 군함 11척을 격침시켰다.[146]

일본군 최고사령부인 대본영은 8월 8일 야간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와 관동군으로부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방어작전을 변경하였다. 이들은 천황의 재가를 얻은 다음 8월 9일부 <대본영(大本營)제1374호>로 8월 10일 6시를 기하여 한반도에 있던 제17전선군을 관동군의 전투서열(戰鬪序列)에 넣어 관동군 총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하였다. 일본군은 관동군의 주공작전을 대소작전으로 지향하되 "황토 조선을 보위"하는데 주력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동안 관동군의 지휘 하에 있던 함흥 소재 제34군은 다시 제17전선군 산하로 복귀되었다. 이로써 일본관동군의 주 임무는 종래의 대소작전에 의한 만주국의 방위라는 임무에서, 조선군을 예하에 넣어 조선을 방어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대본영의 작전지침은 확전(擴戰)된 본토결전(本土決戰)전략에 입각하여 조선을 일본과 똑같이 취급하여 만주를 포기하더라도 조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다. 관동군의 최초 방어전략은 통화지역에서 최후까지 옥쇄작전으로 항전한다는 것이었는데 최후의 보루를 경성지역에 형성하여 저항한다는 것이었다.

대소(對蘇)작전 준비에 대해서는 8월 9일의 최고 전쟁지도(戰爭指導) 회의에서 미처 거론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초 수립된 대소 작전계획에 따르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있던 일본군을 총동원하여 대소작전에 투입하려는 의도였으나 편성부대들의 임전태세 미비로 전력상 명령의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하였다. 8월 10일 북한 해안에 대한 소련군의 공세가 어느 정도 성공함에 따라 메레츠코프 사령관은 제25군에게 북조선의 중요 제항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고, 태평양함대도 웅기·나진·청진의 여러 항구에 대한 상륙작전을 명령하였다.

<상황도 2-1> 소련군의 웅기·나진 작전(1945년 8월 9일~12일)



소련군의 기갑과 보병부대들은 남진을 계속하였으나 폭우로 인한 악천후와 기동로의 제한 때문에 다소 둔화되고 있었으나 계속 철로를 건너 웅기(현재 선봉)를 향하였다.

그리하여 소련군은 8월 11일 저녁 무렵에도 해군 제13여단 제75대대가 웅기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웅기는 일본과 만주간의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남만주와의 철도 연결점이라는 위치상의 요충지였다. 제393보병사단도 전진부대들을 후속하여 크라스키노 남서의 조·소 국경으로 대거 쇄도함으로써 8월 12일 웅기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전날 이미 상륙한 제140정찰대 및 해병대대와 합류하였다. 8월 12일 오전 소군 태평양함대는 제354해병대대로 하여금 호위함 2, 수뢰정 8, 감시정 2척의 엄호 하에 나진항에 대한 제2차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소련군은 처음에는 약 150여명의 해병 선발대를 상륙시켰는데 일본군의 나남(羅南) 요새 수비대는 1개 연대병력으로 방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13일 아침 소련의 해병대대 본대 병력 약 1천여 명이 상륙하였는데 이 무렵 남하 중이던 지상군 부대인 제393보병사단이 도착하였다. 일본군 수비대는 나진(羅津) 교외 고지에서 저항하려 하였으나 제393보병사단 병력이 쇄도함에 14일 서방의 고무산 방면으로 퇴각하였으며 그날 나진이 점령되었다. 8월 12일 웅기 점령의 경우와 같이 14일 나진 점령 때에도 해병부대가 상륙하여 교두보를 구축할 무렵 해안을 따라 남하한 소련 지상군 부대들이 북쪽 배후에서 때를 맞추어 병행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소련군측은 당시 나진항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47]

다음 청진(淸津)공격에도 소련군은 비슷한 전술이 적용되었다. 소련군은 8월 13일 정오 무렵 청진에 대한 해병 공략을 시작하였다. 이미 이틀 전부터 태평양함대의 공군기들은 청진의 일본군 방어시설과 진지 일대에 맹폭격을 가하였으며, 아울러 포병의 공격준비 사격이 집중되었다. 상륙작전의 엄호를 위해 구축함 1·기뢰부설함 1·상륙용 주정 12·감시함 8·소해정 7·수뢰정 18·수송선 7척 등이 동원되었다. 상륙부대로는 함대 참모부 소속의 제140정찰대 해병 제355 및 제390대대, 해병 제13여단, 제1극동전선군 소속의 제335저격사단 등이 참가

하였다.

이때 상륙한 선두부대를 전투함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서둘러 상륙작전을 하였다. 청진 상륙작전에서 소군은 미군 공군기들이 투하하였던 기뢰(機雷)들을 소해(掃海)하지 않고 서둘다가 나진항 입구의 대초도 부근과 청진 회항에서 전투용 함정 수 척과 전투 병력들을 상실하였다. 이 상륙작전에 동원되어 엄호임무를 수행한 해공군의 총 전폭기의 숫자는 261여대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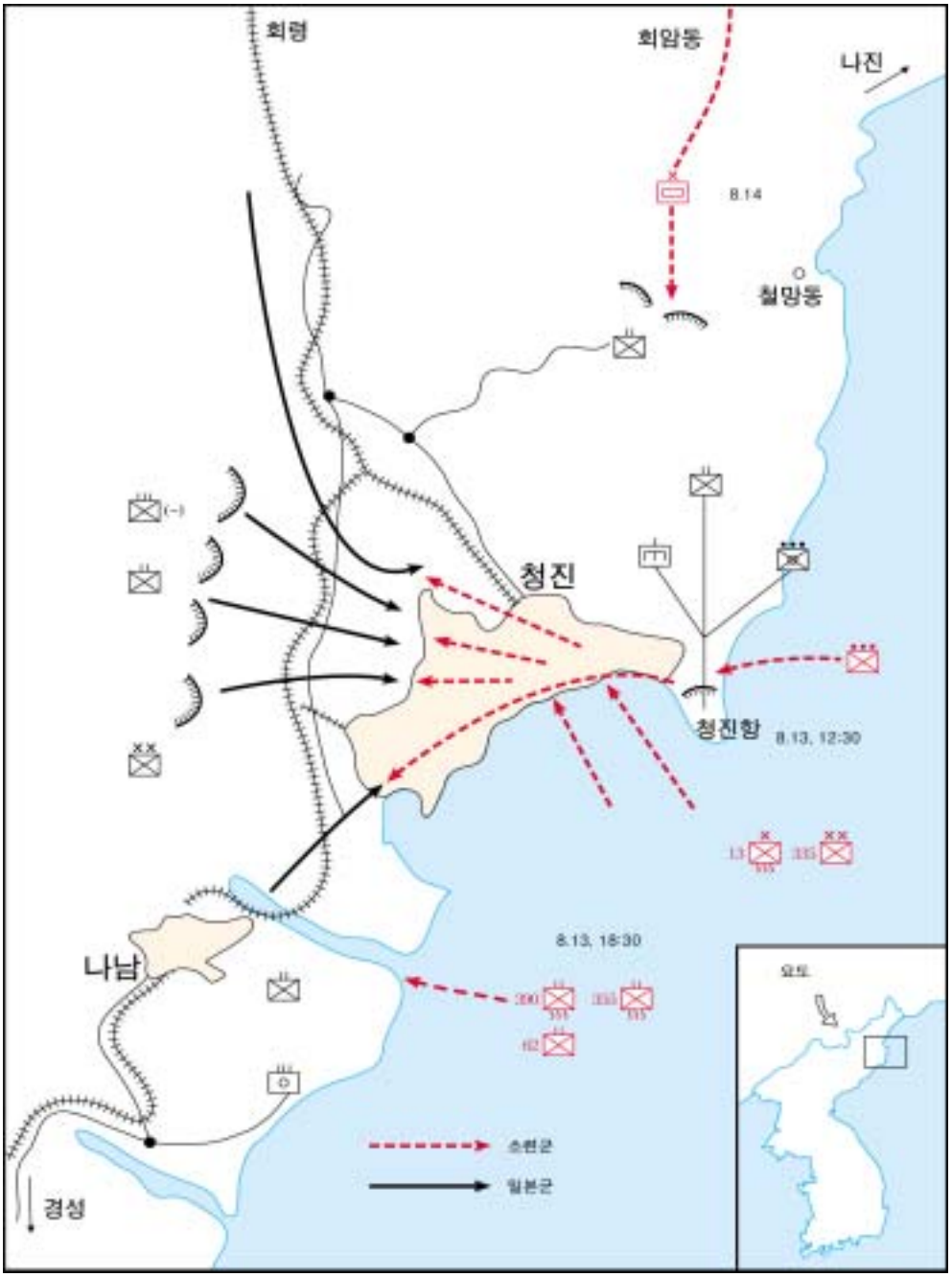
소련군은 결국 청진에서 일본군으로부터 치열한 저항을 받음으로써 남하의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일본군은 18일에 들어서서야 종전소식을 듣고 항복하게 되었다. 소련군 작전에서 북한 상륙은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측면공격에 불과하였다. 스탈린이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하기 전에 만주와 한국에 친소정권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국인과 조선인 공산당원들을 그곳에 이동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 요원들은 소련군이 진주한 후에 만주에서 지방인민위원회를 수립하는데 동원되어 활용되었다.[148]

한편 나남 방면에는 최초 소련의 해병 제390독립대대 선발대와 제140정찰대가 13일 오후에 상륙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일본군 약 2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실제 요새(要塞) 방어에는 1,5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련군은 이날 야간 제62독립기관총대대, 14일 새벽 해병 제355독립대대가 각각 상륙하여 교두보 확보작전을 수행하였다. 일본 수비대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옥쇄(玉碎)작전으로 무려 7차에 거쳐 역습을 전개하였다. 14일 오후에는 나남에서 내려오던 소련군의 기갑부대가 청진 북방으로 진출하였다.

소련의 항공대는 상륙부대에 대한 공중엄호를 강화하고, 해군 함대들이 해병 제13여단의 상륙작전을 지원하였다. 일본군의 항전으로 소련군의 희생도 늘어갔다. 나남 요새의 일본군은 종전소식을 전연 모르는 채 대소항전을 지속하고 있었다. 북에서 내려오던 소련 제25군의 지상군도 청진공략에 나섰다. 전투는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격렬하게 지속되었고 16일 14:00에야 소련군은 청진시와 항구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149]

이 작전에서 소련군이 입은 피해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군의 피해는

<상황도 2-2> 소련군의 청진·나남 작전(1945년 8월 13일~14일)



주로 포로로서 약 3천 명에 달하였다. 제25군의 주력은 4일간의 전투 끝에 16일 청진을 완전 점령하여 만주의 제3군과 조선의 제17전선군 간의 연결을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이 항복하던 8월 15일에도 청진에서는 전투 중이었다. 청진은 조·소(朝蘇) 국경에서 불과 90㎞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일본이 항복을 공표한 8월 15일 이후 약 20여 일간에 걸친 소련군의 진격은 거의 무혈 내지 평화적 진주였다. 청진 점령으로 관동군의 해안 방어망을 돌파한 소련군은 제25군의 주력부대인 제258·384·386보병사단과 제209전차여단을 훈춘·왕청·도문·연길 지역으로부터 8월 17일~18일 대거 남진시켰다.

이것이 북한지역에 대한 제2단계 공격작전이었다. 그들은 18일에 나남 점령을 위해 남하하였다. 19일에는 육군 제335사단의 제205연대도 드디어 청진에 상륙 주둔하였다. 일본군의 퇴로를 막기 위하여 해병 제13여단의 제77대대는 18일 아침 어대진에 상륙하였고, 제383사단도 어대진과 원산을 향하여 남하하였다. 8월 18일 제25군사령관은 일본군의 제3군사령부에서 그들의 정전 대표들과 투항절차에 관하여 토의하도록 지령하였다. 8월 20일 11:40시에는 약2천명의 소련 제13해병여단이 청진을 출항하여 다음날 21일 원산에 상륙하였다. 6천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원산요새의 일본군 부대는 이에 항거하다가 22일에야 투항하였다. 같은 날 소련 해군의 공수 기동타격대가 원산비행장을 점거하였고 제393사단의 선발대는 26일, 주력은 28일에 각각 원산으로 진입하였다.

소련군 제25군 일부병력은 8월 22일 함흥에 진주하였고, 24일에는 공수부대의 일부병력이 평양에 들어갔다. 8월 29일 제1극동전선군 사령관인 메레츠코프 원수는 치스챠코프 제25군사령관에게 예하 부대를 연합국간에 합의된 분계선인 38도선을 따라 북조선의 중부지역으로 진주하여 배치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88군단은 9월 3일, 제10군단은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그 일부가 38분계선에 도착하였고 나머지는 주로 평양에 주둔하였다.[150]

함경남도에서의 소련군의 초기 활동은 사실상 조선에서의 최초 활동으로서 앞으로의 소련군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었다. 8월 21일 소련군 선발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함흥에 도착했고 같은 날 원산에서도 소련군 함정이 입

항하여 점령했다. 이들은 일본군 모두 무장해제를 실시하였고, 8월 23일에는 원산과 평양을 운행하는 평원선이 소련군에 의해 운행이 중지되었다. 이어 평양에 진주하기에 앞서 24일에는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가 참모들을 이끌고 비행기로 함흥에 도착하였다. 그는 함흥이 38선 이북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평양이 아니라 그곳으로 도래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일본측과 행정교섭에 들어갔다.[151]

소련군이 평양에 최초로 입성한 것은 8월 24일이었다, 이날 오후 일단의 소련군(카멘슈코프 소령)이 3대의 대형수송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다. 또한 거의 같은 시각 원산에는 평원선을 타고 들어온 다른 일단의 소련군이 입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선발대였다. 8월 26일에는 약 3-4,000명의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였다.

그날 밤 치스챠코프 대장은 조만식(曺晩植)과 현준혁(玄俊赫) 그리고 일단의 일본인 현지 간부들을 모아 놓고 "각 기관은 인민정치위원회에 접수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신정권이 각도에 성립된 후 통일 정부를 세운다. 단 신정부의 소재는 경성에 한하지 않는다.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의 경계로 삼을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여 이외의 지역에서도 통일정부가 들어설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152]

소련군의 북한 점령은 계속 진행되어 8월 23일 개천(价川)에, 26일 순천에 각각 진주했고, 진남포(鎭南浦)에는 선발대가 8월 25일에, 본부대는 9월 2일에 진주하였고 곧바로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평양북도의 경우 소련군 선발대가 신의주(新義州)에 도착한 것은 8월 27일이었다. 이에 앞서 8월 25일 소련군이 트럭에 분승하여 평북지방인 후창, 강계(江界), 희천을 거쳐 평양으로 남하해 갔다. 치스챠코프가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8월 30일이었다. 31일 그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한국인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일본인들에게 행정권을 넘길 것을 명령하였다. 소련군은 9월 6일 정주(定州)에, 9월 11일 선천에 진주하여 평북의 주요지방에 대한 점령을 마쳤다.

소련군의 황해도 점령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양상을 띠었다. 8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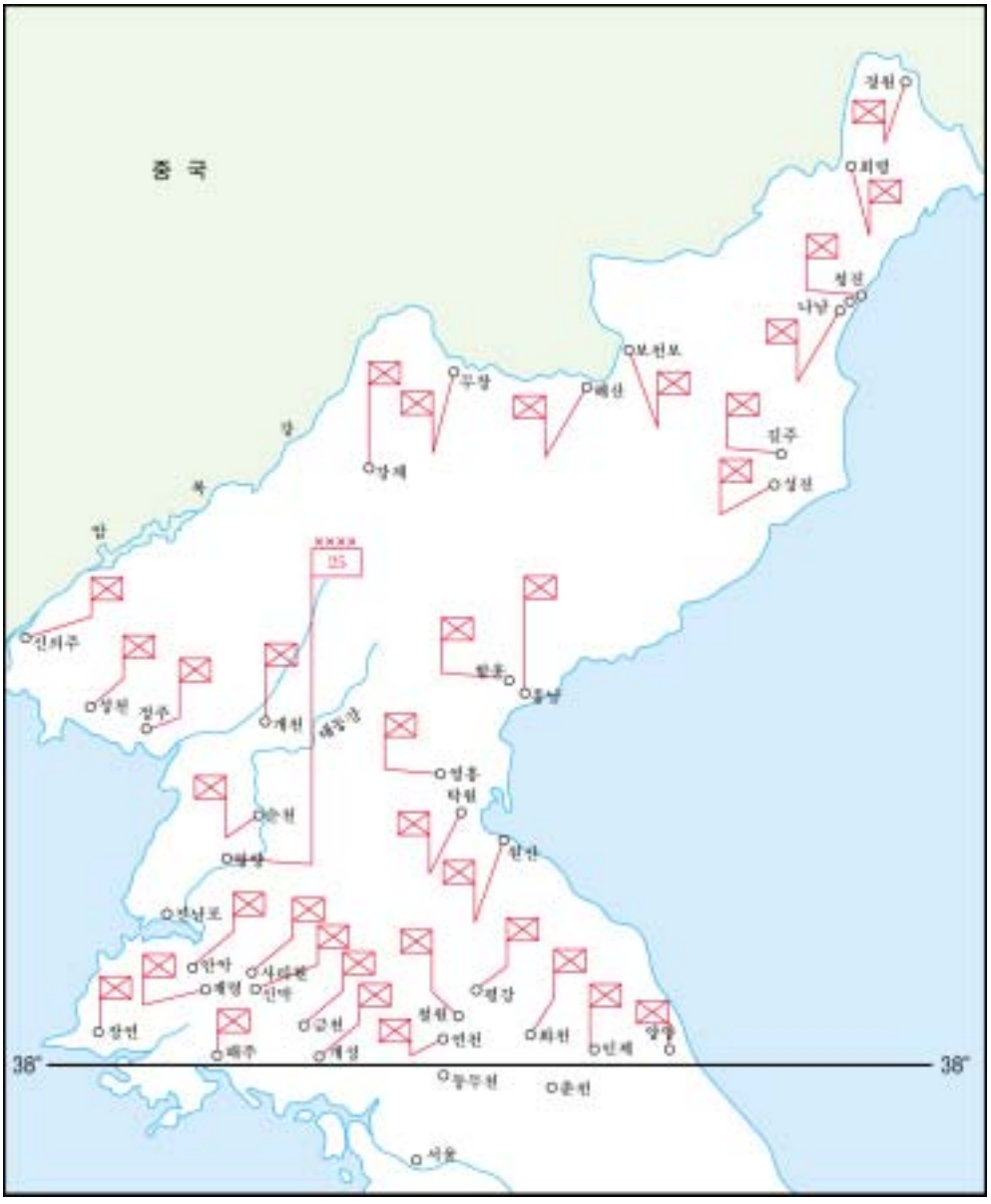
소련군은 해주(海州)로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일본군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고 있었으나, 이곳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인 지사(知事)에게 "소련군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행정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9월 2일 소련군은 도(道) 행정을 인계하도록 명령하였다. 소련군은 8월 25일 분계선 북부의 남단인 금천과 신막으로 진주하여 그날로 신막에서 경의선의 운행을 정지시켰다. 철도운행을 정지시킨 것은 분할선으로서의 38선에 대한 합의 내용이 지방 점령군에게도 시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치스챠코프가 함흥에 있는 동안 제1극동군사령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38도선 봉쇄를 위한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 부대들은 25일부터 양일간 38도선을 폐쇄하고 주요 도로상에 차단벽을 설치하였다.

황해도 지역일대에 9월 3일부터 소련군의 후속부대가 계속 진출하여 점령하였다. 9월 8일 해주(海州)에 내려온 치스챠코프는 점령된 모든 도시를 순회하였다. 9월 11일에는 소련군 대부대가 해주로 진주했다. 이후 도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인 고위관리들이 체포되어 평양의 소련군형무소로 보내졌다. 겸이포에는 9월 2일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이밖에 사리원(沙里院)은 9월 4일, 재령은 11일, 안악은 14일, 장연은 15일에 각각 진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련 점령군은 9월 중순까지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였다.

한편, 소련군은 미군이 남한에 배치되기 전에 38선 이남지역까지 내려와 주둔하고 있었다. 개성(開城)방면에는 소련군이 8월 23일 주둔하다가 미군이 개성에 진주하기 몇 시간 전인 9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38선 북쪽으로 물러났다. 그들은 또한 동두천 지역에 9월 4일 진주했다가 되돌아갔다. 소련군은 황해도에 진주하면서 38도선에서 경의선 철도를 차단하였다.

소련군은 당시 전 북한지역에 걸쳐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10월 21일 소군은 자생적 치안조직으로부터 체계적인 경찰 보안기구로의 이행조직이랄 수 있는 적위대(赤衛隊) 마저 해체하였다.[153] 보안대는 지방수준에서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경찰체제의 중앙 집중화를 계속해 나갔다. 평양학원(平壤學院)도 건설되어 군사부분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수준에서는 경찰조직이

<상황도 2-3> 소련군 북한 입북 상황(1945년 9월 초순)



* 당시 북한은 총 89개의 군이 있었으며, 소련군은 북한 전역에 4만명의 병력을 113개의 위수사령부에 배치하였다.

조직되기 시작했고 이를 시발로 각도에 도보안대를 창설하여 각도의 치안유지와 시설경비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11월 15일 경에는 최용건(崔庸健)의 제의로 경찰기구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당 관계자 합동회의가 열려 보안 사법 경찰기구의 통일이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보안국 창설이 결정되었고 각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보안부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경찰조직의 구축 및 물리력의 중앙 집중화와 초기의 자생적 초기 단체들이 해체되었다.[154]

소련의 북한 점령은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 상장,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상장, 제25군 정치부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군사회의 민정사령관 로마넨코(Andrei Alekseevich Romanenko) 소장, 민정부사령관 이그나체프(Alexander Mateevich Ignatiev) 대좌, 제25군사령관 정치고문 발사노프 등 7인이 초기 북한 점령정치의 중심이었다. 여기에 소비에트 민정사령관 참모장 이그나토프 대좌와 정제문제를 지휘한 코스톨로프스키가 추가된다.

(2) 북한 점령정책

소련의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는 1945년 8월 24일 함흥으로 들어가면서 조선인민에게 낸 포고문에서 "당신들 수중에 행복이 있다"고 해방을 선언하면서도, 38선 분할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평양에 입성한 후,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최초로 "38도선이 소・미양군의 진주의 경계로만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것이 북한에서 38도선에 대하여 최초로 나온 성명이었다.[155] 소련 점령군은 계속하여 26-28일 경에는 해주・신막・복계・김화・화천・양양까지 전개하여 38도선 이북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동년 8월 24일 전후로 평양 함흥에 소련군이 투입되면서 제25군 부대들은 메레츠코프의 명령을 받아 38도선 부근으로 접근하였다. 8월 24일 함흥으로 비래(飛來)하였던 치스챠코프는 8월 25일 메레츠코프와 함께 군참모부를 평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치스차코프는 다음날 평양으로 날아갔다. 치스챠코프는 메레츠

코프의 동의를 얻은 후 “미군이 아직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5군에게 38선을 넘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치문제를 담당할 군사회의의 필요를 절감하여, 연길에 위치한 제25군사령부에 레베데프를 수석으로 하는 군사회의 위원들을 평양에 데려오도록 하였다. 8월 28일 25군 군사회의 위원인 레베데프를 비롯한 일단의 장교들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군사위원은 정치장교로서 소련 명령체계상 전투 지휘체계의 명령을 받지 않고 군내 당 조직 군사회의 지휘체계의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다.

그러므로 레베데프는 치스챠코프의 명령이 아니라 스티코프의 명령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군사 외적인 문제, 즉 정치적인 문제의 점령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지역의 공업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병사령관 니콜라이예프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치스챠코프는 메레츠코프에게 보고하여 민간문제를 처리할 사령부내 “소비에트민정사령부”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였다. 그 책임자는 제25군의 군사위원인 로마넨코 소장이 맡았으며 제25군 부사령관을 겸임하였다. 그리하여 그와 함께 여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대거 도착하였다.

따라서 소련군의 행로는 최초에는 전투부대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군사위원들이 왔으며 세 번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뒤이어 이들을 받쳐줄 소련 한인집단이 들어왔다. 소비에트 민정은 명백히 소련 제25군 산하의 점령정책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였다. 직접적인 명령은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의 군사위원 스티코프의 통제를 받는 군사조직이다. 민정이라는 명칭은 비군사적인 문제 즉, 정치적 민간 문제를 다룬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미군정이 제24군단사령부 산하의 직접적인 점령 담당기구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제25군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 전역에 걸친 군정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군정실시 기관으로 로마넨코[156] 소장이 사령관인 민정관리총국을 설치하였다. 이 기관은 정치・경제・교육문화・보건위생・출판보도・사법지도부 등 군정에 필요한 9개의 지도부를 갖추고 군사회의(정치사령부)의 별도 통제를 받았다. 소련군 민정부(民政府)는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와 연해주군관구 정치위원 스티코프 상장의 지도 하에 로마넨코 소장이 지휘했고 지

방에서는 각 도의 고문(소련군 정치위원)과 도 위수사령부의 협조로 활동했다.[157]

이 때 소련 제25군의 지휘계통은 치스차코프 사령관이 참모장 켄코부스키 중장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북한 점령군 업무를 관장케 하고, 특히 점령에 수반되는 정치적 문제는 제2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인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소장이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당시 제25군사령부 지휘부는 <표 2－10>과 같이 구성되었다.

소련군대는 민주진영의 군대와는 달리 이원적 조직이기 때문에 레베데프 소장은 정치문제에 관한한 제25군의 상급부대인 제1극동전선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인 스티코프 상장(후에 대장 진급)의 지시를 받아 소련군의 북한 점령 정책을 시행하였다.[158]

스티코프 장군은 북한을 공산화, 소비에트화 하는 점령 정책의 입안자이며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탁통치 준비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수석대표역을 맡았다. 그는 1941년 독·소전쟁시는 북서부(레닌그라드)전선군, 서부방면군, 남서부(볼프)전선군 등의 대부대의 구사회의 정치위원으로 활약했었고, 1945년 6월에는 대일전을 준비 중인 제1극동전선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이

<표 2－10> 제25군사령부 지휘부[159]

부 서	직 책	성 명	계 급	후 임
사 령 부	사령관	치스챠코프	근위상장	코르트코프
군사회의	의 장	치스챠코프		
	위 원	레베데프	소장	
		로마넨코	소장	
		프루소프	소장	
참 모 부	참모장	펜콥스키	중장	샤닌
민정기관	부 장	이그나체프	대좌	
정 치 부	부 장	그로모프	대좌	볼디래프
정치 7 과	7 과장	바가록	소좌	코비젠코

되었으며, 1945년 9월 3일 제1극동전선군이 '연해주군관구'로 전환될 때 역시 연해주군관구 정치위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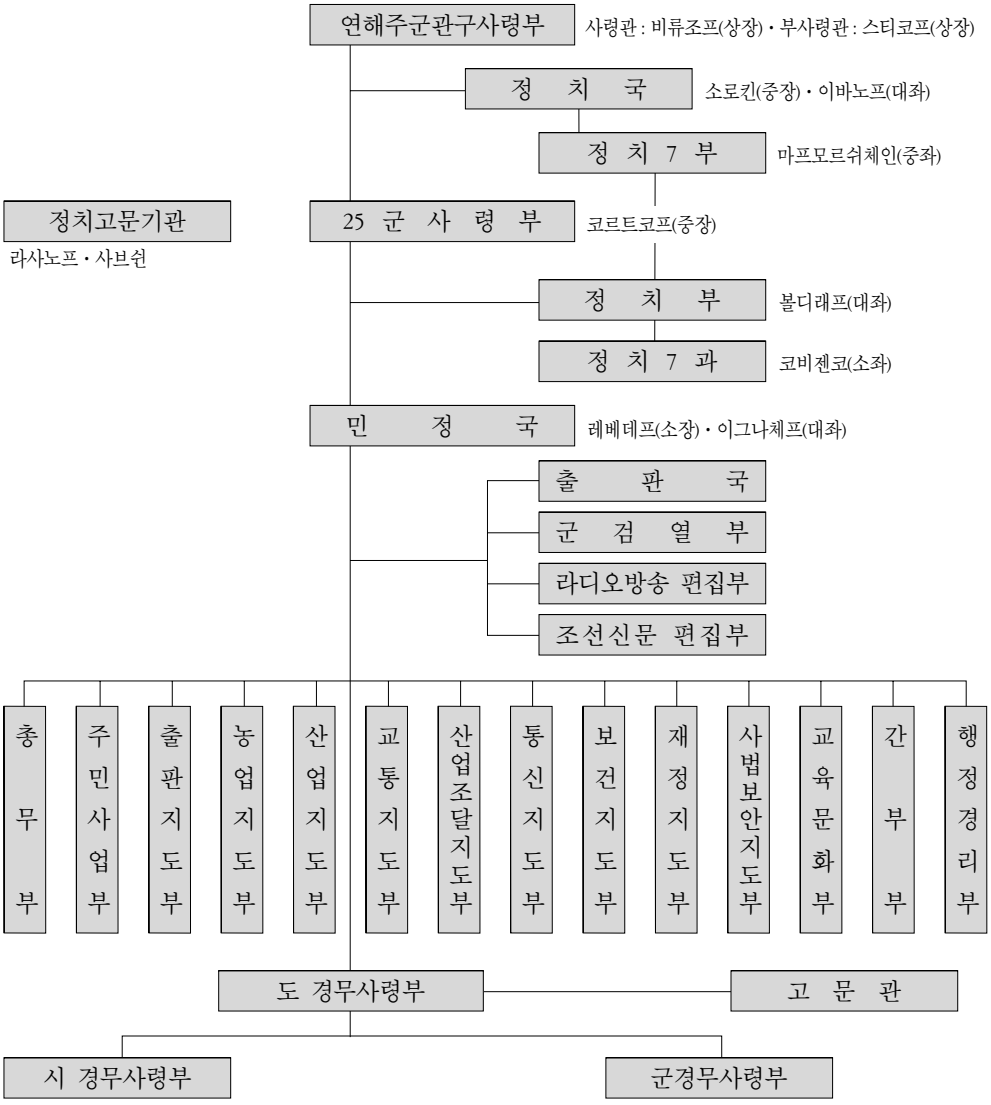
그는 후루시초프의 회고록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직업적 군인이 아니었고, '레닌그라드' 작전 시 레닌그라드 지역 중앙위원회의 제2서기(부위원장)로 부상한 인물로서 전시에 부여하는 임시 계급 중장이었다. 그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의 정책을 북한 공산당에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당시 소련의 군정조직은 <표 2-11>과 같다.

소련군의 전술군 부대 본대가 평양에 진주한 1945년 8월 26일 점령군의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의 북한에 대한 성명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60]

> 조선 인민이여. 소련군대와 동맹국군대는 조선으로부터 일본의 침략자를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새로운 조선의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심의 결과이다. 그것과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근면한 노력에 의해 달성된다. 일본 통치하에 암울했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자.(중략) 조선인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은 자유와 독립을 취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 소련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에 창조적인 노력에 착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조선 인민 자신이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해야 한다. 공장 제조소 및 공작소의 경영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일본인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하라. 새로운 생산기업을 개시하라. 소련군사령관은 모든 조선기업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기업소의 정상의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협의를 할 것이다. 조선의 노동자들이여. 노력에 의한 영웅심과 창조적 노력을 발휘하라.(중략) 해방된 조선인민만세.

이 성명문의 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 독립을 희구(希求)하는 한민족의 감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었지만, 점령군의 포고 형식과

<표 2-11> 소련 군정 조직[161]



는 다른 단순한 문학적인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적어도 성명에 의하면 소련군의 진주는 조선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금후 모두는 조선인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처럼 포고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그 성명을 통해 조선인을 표면에 세워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할 방침이었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주군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할 것을 표명하여 한국민에게 해방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였다.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또한 일본인들에 대한 식량배급, 포로문제 등에 관해 언급한 후 "새로운 정권이 각도에 성립한 후에 통일정부를 세울 것이나 신정부의 소재지는 반드시 경성에 한하지 않으며, 또한 북위 38도선은 미·소 양군 진주의 경계선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162]

그러나 소련군은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는 보안대를 조직하여 질서 유지를 맡도록 승인하고 기본적인 일체의 무장부대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치안유지는 소련군사령부가 각지에 설치한 소련군 위수사령부의 관할이었다. 위수사령부는 각도·시·군에 망라하고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하며 또는 그 감시의 역할을 맡았다. 사실 그 임무는 아직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는 경찰 군사조직으로서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위수사령부는 1945년 9월말 시점에서 북한의 주요한 지역 5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후 수는 더욱 증가하여 113개소에 달했다.[163] 각지의 인민위원회에 대하여 정책방침을 내기도하고 행정면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0월 3일 수립된 소련군 민정부였다.[164]

이를 통해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점령정책을 가시화해 나갔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 순수한 군사적 점령이었다. 민정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점령이 시작되었다. 1945년 9월 23일 스티코프 장군은 평양을 방문하여 제25군사령관 치스차프 대장, 군사 부사령관 라구치 중장, 참모장 펜코프스키 중장, 제25군 군사회의 정치위원 레베데프 소장 등 군사 및 정치 장군들과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티코프 장군은 평양에 소련 민정관리국(민정사령부, 또는 로마넹코사령부)을 설치하기로 하고, 국장에 로마넨코(Romanenko) 소장을, 부국장 겸 정치지도부장에는 이그나체프(Ignatiev) 대좌를 임명하였다. 새로 기용된 로마넨코 소장은 만주지역 갈림에 있는 제3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이었다. 1945년 9월말경 로마넹코 소장과 이그나체프 대좌는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에 대한 본격적

인 소비에트화 정책을 위한 정치공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5군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인 레베데프 소장은 해방 직후 혼란한 북한의 정치정국을 스티코프 장군의 지시를 받아 '인민정치위원회'의 발족 등 북한의 초기 점령군 정책을 시행했고, 후에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위원으로 참가, 수석대표인 스티코프를 보좌했다. 새로 부임한 로마넨코 소장은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을 소비에트화하고 친소정부를 수립하는데 항상 스티코프의 지시를 따랐다.

민정관리국의 부국장 겸 정치지도부장인 이그나체프 대좌는 항상 김일성 일파(빨찌산파)를 뒤에서 직접 조종하고 후원한 인물이다. 스티코프 장군이 후에 초대 북한 주재 소련대사로 부임하자, 이그나체프 대좌는 대사의 자문관으로 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정치 및 각 분야에 걸쳐 대사(大使)를 자문 및 보좌하였다.

스티코프는 당시 연해주 군관구의 군사회의 정치위원으로, 북한 주둔군인 제25군 군사회의 정치위원의 상급기관으로서 북한지역에 스탈린의 공산화정책 수행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어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스티코프는, 한국은 장차 대소 공격의 기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소련에 대하여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소련군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주장대로 회담이 진행되자, 이미 계획된 바에 따라 1947년 9월 26일 스티코프는, "한국에서 미·소 양군대가 철수하여 외국군의 아무런 협조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할 기회가 주어야 한다고 본 대표는 생각합니다. 미·소 양군이 1948년 초에 철수하자는 본인의 제의를 만일 미국 군대와 합동으로 동시에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의 철군제의를 발표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철군하자는 최초의 공식 발언이다. 사실상 스티코프 장군이

철군을 발언했을 당시(1947년 9월)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구성하고 예하에 2개 보병사단, 1개 혼성여단을 만들어 놓은 지 4개월 후이고 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구성된 지는 7개월 후의 일이었다. 이렇게 사실상의 친소(親蘇) 정부와 군대가 조직된 이상 10만이 넘는 소련 점령군이 북한에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민정(民政)은 각 부분의 점령정책을 담당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소련군 장교였다. 이들의 총 숫자는 1945년 9월에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점차로 줄어들어 12월에는 60명으로 줄어들었고 1947년 7월에는 30명 정도로 축소되었다. 소비에트민정의 내부구성은 임시인민위원회와 완전히 똑같이 10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소비에트 민정은 지방정부는 갖지 않았다. 지방은 위수(경무)사령부를 직접 통제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 위수사령부는 어디까지나 제25군사령부 소속이었다. 지방수준의 소비에트 민정의 활동은 포고문들과 북한에 진주한 직후에 도와 군에 설치되었던 위수사령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레베테프에 의하면 소비에트 민정은 도의 고문들을 통하여 위수사령부의 활동을 지도했는데, 고문들은 소비에트 민정에 직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도에서는 소련군사령부를 대표하여 도의 위수사령관을 예하에 두었다.

제25군 군사회의의 명령에 따르면 제25군은 전 북한지역에 113개의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여 점령정책을 집행해 나갔다. 따라서 소련군정은 지방 소비에트민정조차 설치하지 않고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군사 통치를, 나중에는 한국인 인민위원회를 통한 통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9월 28일 현재 54개의 지방 위수사령부가 가동되고 있었다.

위수사령부는 최소한 시·군 수준에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총 89개 군이 있었는데 위수사령부가 군의 숫자보다 더 많아 도와 시를 포함하더라도 113개나 되었던 것은 큰 도시에도 독자적인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군은 대략 4만 명 정도가 북한의 전국에 걸쳐 주둔하였다. 지방에는 위수사령부를 구성하여 거기에 소비에트 민정 담당 장교를 배치하였던

<표 2-12> 위수사령부 조직편제와 도별 담당관[165]

단 위	조직 구성	인 원
도 위수사령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전투부대담당부위수관, 위수관 고문 2인, 교관 2인, 급식소장, 사무장, 통역원 등	총 22명 외 경비소대
군 위수사령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전투담당고문, 통역원, 사무원 등	총 6명 외 경비소대(이후 분대로 축소됨)
시 위수사령부	업무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구성됨	

도 별	고문관	위수관	정치담당부위수관
평안남도	븨고르키(중좌) 후임 : 코발료프(대좌), 아가르코프(중좌)	무르진(대좌) 후임 : 얌니고프(대좌)	둘킨(중좌)
평안북도	그라포프(대좌) 후임 : 모스칼렌코(대좌)	기르코(중좌) 후임 : 표도로프(소좌)	모스칼렌코(중좌)
함경남도	세묘노프(중좌) 후임 : 제민(대좌)	스꾸바(중좌)	
함경북도	구레비치(중좌)	꾸트라브체프(중좌)	
황 해 도	꼬뉴호프(대좌)	노간(중좌)	찔리코프(대위) 후임 : 삐라르스키(소좌)
강 원 도	솔로비예프 (중좌) 후임 : 사로프(중좌), 스쿠스키(중좌), 꾸츠모프(대좌)	울리아노프(중좌) 후임 : 이가르코프(소좌)	브가예프(소좌) 후임 : 뿔루힌(중좌), 로진스키(소좌)

것이다.

소비에트 민정은 군사편제로는 제25군의 편제에 있으나 치스챠코프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제25군 군사회의의 통제를 받는다. 제25군 군사회의 구성은 레베데프,[166] 로마넨코, 샤닌,[167] 체렌코프, 프르소프 등 5명이었다. 이 군사회의는 제25군의 직속 상급부대인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의 지휘를 받았다.[168] 따라서 사실상의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정부를 통솔한 로마넨코 소장과 그 보좌를

맡은 이그나체프[169] 대좌 등 2인이 사실상의 소련군에 의한 민정을 통괄한 인물이었다.

한편 이것과는 별개의 기구로서 사령관 직속의 정치고문부가 설치되었다. 정치고문부에 있어서 점령통치 전반에 관한 정책작성 등을 담당한 것은 동경의 소련대사관의 근무경험을 가진 발라사노프[170]였다. 또 정치면에 있어서 소련군을 총지휘하고 민정부의 지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군사평의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이고 실질적으로 소련군의 부사령관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레베데프의 상관은 쉬티코프 대장이었다.

이러한 소련군사령부는 민정부·정치고문부 그리고 각 지역의 소련군 위수사령부를 가지고 점령통치를 행한 3위 일체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주지하듯이 소련군 당국은 "북조선에 소비에트질서를 수립할 생각은 아니고 조선을 일본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것 그리고 민족자결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에 그 진주목적이 있는 것"이라 재삼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북한을 착실하게 소비에트 구축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171]

소련군은 군정기구를 갖추어 나가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무장해제를 실시하는 한편 38도선 요소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관총을 설치하여 남·북으로 오가는 통행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남·북을 잇는 경의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는 등 교통통신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장벽을 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인민위원회의조직에 착수하였다.[172] 소련군 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평안남도에 설치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한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고 이어 각도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앞으로 통일정부를 만들되 신정부의 소재지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173]

이는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었으며 한민족이 주인이 되는 조직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여 북한지역의 인민위원회 결성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조직되기 시작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8월 24일부터 9월말까지 도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각 인민위원회는 일본인 관료로부터 행정기관, 경찰관서, 경제기구 등

모든 국가기관을 접수하여 행정권을 인수하였다. 소련군정 당국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는 한국인을 기용하되 소련군 장교를 고문역에 임명하고, 그들이 입북(入北)시 대동한 소련계 한인을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구는 외관상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군정 당국에 의해 지배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민위원회 조직은 민족진영세력이 점차 배제되면서 주로 소련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갔다.

이러한 공작은 10월 14일 소련군정 당국이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고 김일성을 북한 주민 앞에 내세움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174] 그는 이때부터 소련군정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소련군정이 김일성을 권력전면에 내세우고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들을 말살하려는 공작을 진행하자 이에 분노한 조만식 등 북한 5도 민족주의 세력 대표자들은 북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군정 당국은 11월 18일 5도 인민위원회를 통괄하는 5도 행정국을 설치하고 산업·교통·체신·농림·사업·재정·교육·보건·사법·보안의 10개국으로 된 행정체제를 정비한 후 김일성을 북조선공산당 책임비서에 앉힘으로써 그를 북한 공산당의 제1인자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소련군은 북한에 군정을 실시하면서도 남한과는 달리 공산당 조직으로 노동당 결성을 조장하였으며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접적 행정을 실시하였다. 소련의 북한 정책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위성정권을 수립하여 소련 국경의 항구적 안전보장을 확보하여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175] 소련의 군정이 실시된 지 약 4개월만에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 군정에 의한 공산화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1946년 2월에 소련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소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케 하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국제적 반동세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요소를 타파하고 민주국가로서 전 한국의 통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소련은 과거 3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장차 더욱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련은 38선 이북지역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하면서, 미국보다 먼저 소위 '확보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176]을 위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지령에 의하면, "북한의 민간행정에 대한 지도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에서 수행"[177]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소련군의 대북한 정책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78]

그리고 소련은 '한반도내 우호적인 국가수립'이라는 기본목표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 극동과에서 작성된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 한국이 장차 일본만이 아니라 극동으로부터 소련에 압박을 가하려는 임의의 다른 강대국이 소련을 공격하는 전초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독립은 효과적이어야 된다. 소련과 한국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소련 극동지역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179]

소련의 대한정책 방향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된 것이었으며, 소련에 對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수립될 정부는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0]

2) 북한군 증강계획

(1) 소련군 철수

한반도에 출현한 38도선은 한민족을 가르는 남북의 분단선인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양대 진영의 분단선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를 구체화하려는 제1·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181]

소련은 "유엔은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외국군은 통일정부 수립 전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점령국은 '즉시 군대를 철수 시킨다'는 대안으로 응수하였다.[182] 소련은 이미 북한에 소위 민주기지를 구축하여 공산기반을 강화하였음은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육성하였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를 압박하고 나섰던 것이다. 소련은 미소 공위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1947년 7월부터 북한의 38경비대에 경비임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였고 북한군이 전술상의 요지를 장악하고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국의 한국문제로의 유엔 상정(上程)은 신탁통치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유엔 주도하에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뜻하며 미국은 유엔의 도움을 얻어 소련의 의도를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이관과 단독정부안이 가시화되자 소련은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설 선언과 함께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고 북한군 총사령부의 설치를 발표하였다.[183] 북한군 창설 발표와 곧 이은 북한의 헌법안에 대한 선거 발표는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의 단독선거 실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소련군은 '북조선인민집단군'이 창설된 1947년 9월 시점 북한에 약 4만여 명 정도를 잔류시키고 있었다. 1947년 4월 5일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치코프 대장이 교대되어 그 후임으로 코로트코프(G. P. Korotkov) 중장이 부임하였고, 1948년 6월 7일 소련군 축소 발표와 동시에 메르쿠로프(Merkulov) 소장이 부임하였다. 이처럼 주둔군 사령관의 계급구조가 대장에서 중장, 소장으로 낮아지는 것은 병력규모가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련군의 철수는 스티코프 장군의 공식 철수발표 이전에 이미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공식 정부가 수립된 1948년 9월에는 증강된 1개 사단 규모 정도가 잔류하고 있었다.

소련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북한군의 훈련에 주력하는 동시에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에 대비하여 1948년 12월에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파견을 결정하였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이듬해 1월말부터 북한지역에서 정규 공산군의 편성과 전투훈련을 도와주는 동시에 각종 소요장비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북한군 건설초기부터 군사물자와 장비지원은 물론 군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하였다. 각 사단에는 대좌급 사단장 고문관을 비롯하여 중대급까지 150명을 배치하고 전차·항공부대에도 전문고문관을 파견하여 전술훈련과 장비교환에서부터 정비분야까지 담당하고 있었다.[184]

이들 군사고문관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한의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남한의 정부수립 직후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공포와 더불어 북한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격상시키고 작전국 등 11개국으로 편성하여 각 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185]

북한은 정부수립직후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소련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를 희망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186] 이에 1948년 10월 12일 스탈린이 "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소련의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그 후 15일에는 그의 특명전권대사로서 스티코프 대장을 임명하게 되자 김일성은 주영하를 소련주재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였다. 뒤이어 10월 15일 몽골인민공화국, 17일 폴란드, 22일 체코스로바키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의 승인이 이어졌다.[187]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자 이후 주한외국군 철수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188] 소련은 1948년 9월 북한정권의 외군 철수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소련군이 12월말까지 철군 완료할 것이라 발표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10월 19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12월 25일 소련은 북한에 주둔한 소군의 최종 철수를 보도하였다. 그 후 북한 내부에서는 '소련군 철퇴는 전 세계인민의 평화를 실현하고 미 제국주의의 야망을 폭로하는 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군중집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189] 또한 북한주둔 소련군 철수 보도를 접한 남한의 상당수 지도자들도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그만큼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된 이후의 주한외국군 철수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철수시 북한군에게 장비를 이양하여 1948년 9월 이후 4개 사단으로

증편하고 소련군 전차사단의 지원 하에 제105전차대대를 창설하였고, 또한 민족보위성 산하의 항공대대를 항공연대로 증편하였다.

이때 북한의 군사업무는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였다. 북한군은 민족보위성에서, 보안대와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에서 각기 관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련군의 철수 때까지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련군사사절단이 북한의 군사업무에 관여하였다.[190]

이렇게 군사업무 체계를 정비한 북한은 소련점령군의 장비를 인수받고 이어 중·소의 군사지원을 받아 급속히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 소련 군사고문관은 1948년 말 2천 명 정도까지 증강되었으나, 소련군 철수와 동시에 대대급까지만 고문관을 유지함으로써 1949년부터 군사고문관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장성 5명을 포함한 40여명 규모의 특별군사사절단이 파견되어 북한군의 전력증강을 지도하였다.

소련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북한과 소련 당국간의 명분을 위한 절차상의 진행과정을 보면 사전의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북한은 8월 25일 최고인민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1948년 9월 2~10일)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을 때 의안으로써 '미·소 양 정부에게 미·소 양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요청서를 1948년 9월 10일자로 미국과 소련정부에 발신하였다.[191]

이 요청서를 받은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쉬페르닉(N. Shevernik)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두봉(金枓奉)에게 1948년 9월 18일자로 회신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소련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에서 보내온 요청서를 검토하고 소연방 내각에서 1948년 12월말까지 소련 군대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답신이었다.

이어서 1948년 9월 20일자로 소련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요청에 의한 소련연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련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북한 영토에 주둔하고 있

는 소련군대의 소련 영토로 철수한다. 둘째, 소련 군대는 1948년 10월 중순 이후에 철수하기 시작하여 1949년 1월까지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이다. 소련 외무성의 철군 발표(1948년 9월 20일)가 있자, 그 이틀 후인 9월 22일자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 외무성의 철군 발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사의 서한을 보내게 된다.

> 경애하는 이 오씨프 위싸리오노위츠!(스탈린의 본명) 북조선에 남아 있는 소비에트군대의 철거에 대하여 소비에트정부가 채택한 결정에 관한 보도를 듣고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전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써 각하와 또는 각하를 통하여 위대한 전 소비에트인민에게 나의 무한한 경애와 감사에 넘치는 뜨거운 충정을 표하는 바입니다.(중략) 소비에트군대를 철거함에 대한 소비에트정부의 결정(중략) 각하께서 주신 고귀한 기여로서 어느 때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위대한 소비에트인민의 진정한 원조와 동정을 힘입어 조선 인민은 우리조국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중략) 결정적인 투쟁을 하여 왔으며 또한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대한 소비에트련맹과 친히 당신 이 오씨프 위싸리오노위츠께서는 우리가 민족적 및 자주적 권리를 수호함에 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발전 강화함에 있어 지지와 원조를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인민은 믿어마지 않습니다.(중략) 조선 인민의 가장 친한 벗이며 해방자이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192]

이와 같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소련군 철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조국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남북통일의 뜻)을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하겠으니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잔류 소련군의 북한 철수는 공식적으로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당초 소련 외무성이 발표한 철수 완료 시한인 1949년 1월보다 1개월이나 빠른 1948년 12월 25일 철수가 완료되었다.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소련 타스통신은 내각의 발표를 인용 보도하기를 “북한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는 12월 25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요청한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소련군의 북한 철수는 사전에 미국과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된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남북한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에 대한 보장도 없었음도 불구하고 소련군이 단독으로 철수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배경이 있었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통일문제에 대한 처리에서 북한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또 북한에는 친소 공산정권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으므로 한반도는 더 이상 대소 공격기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소련의 통제기능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야기되는 남북한간의 어떤 문제이건 소련군의 철수와 소련 군정의 종식으로 소련이 책임질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소련군의 단독철수는 세계 여론상 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 계산되었다.

소련은 김일성이 수상으로 취임한 다음날 발표한 8개 정강 중 군사관계의 2개 정강의 그 첫 번째 정강인 '양군의 철수'는 우선 소련군의 단독철수로서 김일성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성사되었고, 마지막 정강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발전시키겠다'는 정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193]

따라서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는 장차 미소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에 남한방위가 미군의 철수로 완전공백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상하여 비밀리에 추진시켜 방위력이 약한 남한의 국군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소련군 철수발표와는 달리 소련군 최근에 공개된 소련 국방문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소련군이 북한에 잔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문서에 의하면 군사고문단과 별도로 북한에 머물면서 전쟁준비를 지원한 소련의 군사전문가나 군무원은 4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 군사전문가 잔류상황은 소련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1949년 2월 18일자 보고서 '군 철수 이후 잔류인원 보고'에 총 4,298명이 북한에 남아 있으며, 이중 4,020명은 군인이

고 나머지 273명은 군무원임을 밝히고 있다.[194] 당시 같은 시점 국제적으로 철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주한미군이 1개 연대(제5연대전투단) 7천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 숫자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소련사이에 체결된 의정서에서도 북한이 소련군의 잔류를 요청하였으며 소련군의 일부가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정서 제1조에 "소련정부는 남한에 미군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해군부대를 청진항에 잠정적으로 주둔시켜 달하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소련정부는 해군부대의 주둔과 관련하여 모든 경비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195]

북한주둔 소련군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군 보고서에 의해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미 육군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12월 25일 북한으로부터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2천의 군사고문 요원과 천여 명의 경비병력이 북한에 잔류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며,[196] 또 다른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949년 2월 소련군 1,500명이 평양에서 확인되고, 이반 메시코프의 지휘를 받는 소련 공군요원 211명이 주둔하고 기타 신천・차령・양양・철원・원산・연포・함흥・나남・청진에서 소련군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97]

당시 남한 국회에서도 소련군 철수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198] 이승만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또 월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일부 소련군 잔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99] 그러나 당시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소련은 1948년 12월 25일 북한에 주둔한 소군의 최종 철수보도로서 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군 전력증강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즉 소련 국방상 주제 하에 북한・소련・중공의 군사대표자 전략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 회담에서 향후 18개월 내에 북한군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육성하기로 합의하였다.[200]

이에 따라 소련은 초대 주북한 대사로 임명된 스티코프 대장을 단장으로 5명의 장성과 12명의 대령 그리고 20여명의 중령・소령・대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군사사절단을 12월말에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때 파견된 소련군 장군들 대

부분이 기갑전문가였다. 이 사절단은 도중에 하얼빈에서 조·중 실무진과 만나 동북의용군의 입북가능성을 확인한 뒤 1949년 1월에 평양에 도착하였다.[201] 이들과 함께 세계대전 당시 참전경험이 있는 소련군출신 한인병력 약 2,500명이 입북하여 민족보위성과 북한인민군 사단에 배치되었다.[202]

이러한 사실은 소련의 대북정책이 같은 시점 미국의 대남정책의 목표가 전형적인 국내 치안확보에 있었던 점과는 달리, 북한군의 상대적인 우세 또는 적어도 열세하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2) 한반도 군사전략

① 북한군 증강 지원

소련군의 철수발표 직후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 일행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그의 소련행은 명목상 북한 경제지원과 군사지원문제로 논의한다고 하였지만 주목적은 무력통일론에 대한 스탈린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즉 1949년 2월 22일 평양을 출발한 김일성을 비롯한 사절단 일행은 3월 3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스탈린과 회견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 등 북한대표들과 북한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203] 1차 모스크바 회담에서 소련과 북한은 경제협력과 무역, 1949-50년도 무역협정,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한 광범한 협의를 가졌다.

경제문화협력협정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간이었다. 양자는 평등호혜의 원칙 하에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1년 이상에 걸친 무역고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상호간에 최혜국 대우를 하는 동시에 문화·과학·예술 등 각 부분에 걸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과 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1949-1950년도 무역고 및 지불방법에 관한 협정은 김일성정권이 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 기계 및 부속품 원유 기관차 면화 등을 소련에서 수입하고 금속제품 화학제품을 소련으로 수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일행이 제의한 무력통일안에 대한 스탈린의 반응이 주목된다.[204] 스탈린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즉 "북조선 인민군은 남조선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치 못하고 있고, 또 수적으로도 불리하며 남조선에 아직 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침을 하면 당연히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아직은 소련과 미국의 38선 분할에 관한 협정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위반하면 미군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205]

스탈린은 이 시점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38도선에서 한국군이 공격해 오는 경우 반격만을 허용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 소련이 추진하고 있던 대북한 군사정책은 북침에 대비한 방어력에 비중을 두어 북한군을 증강시킨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경제부흥발전 계획을 위해 북한에 4,000만 달러의 차관 및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의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때의 차관액 거의 대부분이 무기 및 장비구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206] 이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많은 군사장비를 인도 받게 되었으며, 특히 항공기와 전차 등의 지원은 이미 남한과 현격한 전력 격차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스탈린은 회담에서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북한의 해군과 공군 지원, 북한군중 일부를 소련군사학교에 위탁 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곧이어 3월 12일 개최된 김일성과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과의 회담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207]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골격으로 3월 17일에는 소위 '지원의 성격, 소련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소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들간에는 '경제·문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을 뿐이었

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당시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일부의 추론만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의 중점이 군사력 지원에 있었음이 밝혀졌다.[208]

김일성이 대남 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군사장비를 보유하게 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4월 7일 모스크바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돌아온 김일성은 "우리정부 대표단은 소비에트 동맹과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모든 교섭을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화국 남반부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속한 조국통일과 완전독립을 얻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광범하게 전개할 것을 나는 전 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소련과의 회담에서 큰 성과를 얻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209]

스탈린은 김일성 일행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는 양국간의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스티코프가 스탈린에 보낸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북한-중국과의 회담에서도 무력통일론이 협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10] 즉 1949년 4월 28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 겸 북한군 정치지도부 대표자 김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고강(高崗), 주덕(朱德), 주은래(周恩來) 뿐만 아니라 모택동(毛澤東)과 3월의 스탈린과의 합의내용 및 북한의 무력통일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공군 내의 한인사단의 북한군 편입 문제를 확정지었다.

모택동은 이때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빨리 끝날 수도 오래 끌 수도 있다. 지구전은 북한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끼어들어 남한정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들 바로 곁에 소련이 있고 우리들이 만주에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이 경우 "중공군을 파병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정세가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군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행동을 일정기간 유보하도록 김일성에게 권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인사단에 대하여는 2개 사단의 이관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단은 중국남부에서 국민당과 전투 중에 있으므로 후에 인계할 것

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택동으로부터 회담내용을 통고 받은 주중소련대사관의 코발료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의하면, “모택동과 김일 회담에서 중국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면 한인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지만, 아직 남침시기는 기다려야 할 것이며 만약 1950년 초 국제정세가 유리해지면 남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요약 보고한 내용에서도 재확인된다.[211] 이 회담은 만약 일본군이 투입된다면 이에 대응하여 중국군도 파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천명된 점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모택동과 김일성이 각각 1949년 5월 14일과 17일에 소련 대사를 통하여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북한, 소련, 중국간에는 1949년 3-4월 일찍부터 한반도 무력통일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다만 그것의 이행은 북한군 전력의 미비,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중국내전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유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주한미군이 철수한 직후인 1949년 8월 김일성으로부터 “미군이 철수한 이후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북한군의 전력이 우세하며, 더욱이 남한이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을 바탕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다”는 무력남침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212]

> 현 상태로는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남침에 필요 불가결한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남침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시각에서 이를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투쟁을 위한 현안의 과제는 반동체제의 파괴와 전 한국의 통일과제 달성을 위한 남한에서의 전 인민 무장봉기 확산전개와 향후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한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213]

이와 같이 소련은 남침을 위한 군사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향후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확산시키고,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소련은 남침을 단행할 정도로 군사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소련측은 곧이어 북한의 삼척 '해방구' 건설 문제와 옹진반도 점령 계획 등 제한적인 공격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214]

그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중 남한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남한에 무기 탄약 공급뿐 아니라 일본군의 파견을 통해 남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의 대남 공격은 미국에 의한 대소련 모험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 북의 공격은 남북한 인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아직 남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상당히 강한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였다"는 것이었다.[215] 이를 통해볼 때 이때까지 소련은 북한의 군사력이 승리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었고 반면 김일성은 남한전력을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이 당시의 상황을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자칫 대남 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군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9월 24일 스탈린은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소위 민주기지를 강화, 즉 남한 내에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소위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한군의 증강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전달하였다.[216] 이는 당시까지 소련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본시각이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편, 1949년 3월 모스크바회담 이후 북한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고 있었다. 이에 고무된 김일성은 1949년 8월 12일 일시 귀국하는 스티코프 대사에게 대남 선제 공격을 준비해야겠다는 문제를 제안하였다.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또 38도선 분계선 충돌로 인해 북한군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더욱이 남한이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무력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217]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인 작전으로는, 즉 옹진반도의 남한측 군대를 격파하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2개의 연대를 격파하고 옹진반도를 점거하며 그곳을 기점으로 동쪽 개성(開城)까지 영토를 차지한다는 것이었으며, 만약 남한측 군대

가 북한측의 기습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면 남쪽으로 계속 진격해도 무방할 것이고, 여전히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있다면 방어선을 단축하고 경계선의 방비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것이었다.[218]

그러나 소련은 이에 반대의 입장이었다. 즉 스탈린은 "다음은 8월 12일 면담에서 당신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의 입장이다. 현 상태로는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볼 때 남침에 필요 불가결한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남침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적인 시각에서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투쟁을 위한 현안의 과제는 첫째, 반동체제의 파괴와 전 한국의 통일과제 달성을 위한 남한에서의 전인민 무장봉기 확산전개와 둘째, 향후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한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스티코프 대사에게 지시하였다.[219]

김일성은 대남 공격이 소련의 반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자 38도선에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 건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역시 소련의 반대에 부딪히자, 또 옹진반도 점령 계획을 제시하였다.[220] 옹진 지역의 확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선을 120㎞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 역시 북한의 전력이 아직 미비하다는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 반대의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현재 한반도에는 2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중 남한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해 승인되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남한에 무기 탄약 공급뿐 아니라 일본군의 파견을 통해 남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북의 대남 공격은 미국에 의한 대소 모험전에 이용될 수 있고,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북의 공격은 남북한 인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은 아직 남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남한은 이미 상당히 강한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였다"는 것이었다.[221]

소련은 군사 작전 면에서 전쟁이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소위 민주기지를 강화, 즉 남한 내에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한군의 증강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시하였다. 또

한 소련 공산당은 중앙인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1949년 9월 24일 남한공격 시기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너무 도외시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222]

이상을 통해 볼 때 소련은 1949년 9월 시점까지도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소련은 이 시점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의 공세로 인하여 미국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단히 유의하고 있었다.

② 남침지지로의 정책전환

194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서진영은 소련의 원폭 보유, 중국공산정부 수립, 중·소회담 등의 문제로 큰 변화를 맞는다. 미국은 심각한 대공 위기감을 갖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급격히 재무장정책과 대소 강경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사원조 계획으로서 상호방위원조안을 확정한다. 이 시점 미소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역시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 때문이었다.

미국은 1949년 9월 3일 미 공군정찰 편대가 일본에서 알레스카까지 정찰하여 소련의 방사능실험 흔적을 탐지하였고, 그 실험은 8월 29일 무렵 실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223] 소련의 핵 개발은 미국이 더 이상 핵무기의 독점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소련과 동북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미국은 전반적인 대외전략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소련 중앙인민위원회는 스티코프에게 옹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의를 하달하였다.[224]

질책을 받은 스티코프는 "내무상 박일의 지령에 따라 제3국경경비여단장이 남한이 점령하고 있는 38도 이북에 위치한 주요 두개의 고지를 탈취할 준비중"이

라는 사실을 보자긴 대령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며, 또 10월 31일 보자긴 대령이 감제고지이며 38선으로의 유일한 연락로인 은파산을 탈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을 아울러 보고하였다. 그러나 소련 중앙위는 11월 20일 재차 스티코프에게 "38선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본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225]

1949년 말의 시점은 미국과 소련이 각기 유럽과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전략의 구도를 재편하고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소련의 대북한 방침은 선급한 북한의 국지적인 공세로 인하여 사태를 그릇 치지 않으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복안을 검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소련은 내부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장차 다가올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북조선에 있는 해군기지와 공군부대를 폐쇄할 것.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한 적을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시키며 전쟁이 시작될 경우 우리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226]

소련은 전쟁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외적 명분상 소련의 개입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부적으로 소련은 전쟁에 대비하여 대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 중국과도 그 문제를 협의를 하였다. 스탈린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모택동과 1950년 2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회담을 가지고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장춘 철도·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227]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 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역할 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소련외교문서에 나타난 선제공격에 관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중국 공산정부 수립에 따른 세계전략 재편과 깊은 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소·중 회담 직후 스탈린이 스티코프에 하달한 전문에 의하면, 즉 "모택동 동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군사력과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도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통보했다"[228]고 한 것으로 보아 소·중 간에 긴밀하게 북한군의 병력 증강에 대해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은 1950년 2월 북한의 추가 3개 사단용 각종 장비, 탄약, 기재재 등을 도입하기 위하여 1951년도 차관 1억 3,000만 루블을 1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하였으며,[229] 이들 장비의 도입은 1950년 4월 김일성의 제2차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더욱 촉진되었다.[230]

1950년 4월 스탈린은 김일성과의 비공개회담에서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때 스탈린의 입장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을 위한 선제 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 하였으며,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 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었다.[231]

스탈린의 조건적인 수용에 따라 김일성은 5월 13일 모택동을 방문하여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미군과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 문제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이날 김일성 일행은 모스크바 회담 결과를 설명하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232] 모택동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북한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리포프(스탈린의 가명) 동지와 그의 측근들은 현 국제상황이 변하였으므로 남북한 통일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중국동지와 북한 동지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약 북한측과 중국측이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일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미루어 두어야 함. 회담내용에 관한 사항은 북한측에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임.[233]

스탈린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창에 동의하지만,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김일성 일행은 스탈린의 조건사항인 모택동으로부터 합의를 얻었으며 그밖에 조·중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234]

이렇게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편성 훈련되고 소련에서 공급한 장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1950년 전쟁직전까지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 규모의 군대로 성장하였다.[235]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하였고, 결국 총참모장 강건(姜健)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이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이를 완성하였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 중장은 1950년 2월 23일 북한에 도착하여 '조선인민군' 수석군사고문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236] 예하에 고문단 본부요원과 총참모부 담당 고문 십여 명이 선발대로 먼저 도착하여 전쟁계획과 북한군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237] 남침 작전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 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238]

이 결정과정은 바로 북한이 왜 1950년 6월에 공격하기로 하였는가를 시사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의 보유, 중국과의 유대강화 문제 이외에도 당시 논의되던 미국과 일본사이의 평화조약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며, 전 한반도로의 공산통제 확대로 미·일 동맹체제의 전략적 가치를 상쇄하려고 의도하였다.[239]

소련이 북한·중국과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문제였다.[240] 북한정권과 소련고문관들은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 한국 새 공산정부를 수립하는데 시기적으로 알맞게 남한 점령을 완료하고 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즉 1950년 6월말에 전면 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증원되는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며,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된 인민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이다.[241]

따라서 바실리예프 중장을 비롯하여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공격 직전까지 북한군에 배속되어 전쟁준비에 참여하다가 북한군의 공격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소련의 개입흔적을 지우기 위해 후방으로 잠적하였다. 이후 1950년 말까지 평양과 소련 외무성간의 전보교신은 최소한으로 자제되고 있었다.[242] 이를 통해볼 때 소련 역시 전쟁을 통한 대한반도 공산혁명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또 전쟁의 최종결정 단계에까지 깊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

1. 중국 정세와 중공의 동북아 전략

1) 내전과 중공정권의 수립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문제는 아시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극동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중국을 세계 4대강국의 위치로 끌어올려 전후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은 그들의 군사적 개입 없이 장개석(蔣介石) 정부가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에 가장 만족스런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43]

1945년 8월 당시, 중국은 하나의 통일정부라고 할 수 없었다. 국민당 정부의 권한은 일본이 점령했던 남부 중국과 동부, 서남 지역에 한정되었다. 북부 중국 지역은 공산당이, 동북지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어서 양자강 이북으로는 중앙정부의 거점이랄 것이 없었다.[244]

1945년 8월 9일, 모택동(毛澤東)이 일본군 항복 후 그들의 점령지역을 먼저 장악하려는 의도를 선포한 이래, 주덕(朱德)이 도시 및 교통중심지를 장악하여 일본군 투항과 군사 장비를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임표(林彪)는 동북지역으로 진입하여 공산군이 장악하는 지역이 늘어났다.[245] 이러한 공산당 측의 조치에 대하여 장개석은 공산당에 독자적 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항의하였고, 1946년 1월 10일, 국민당정부와 공산당 사이에 정식으로 '정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국민당 군대가 사평, 장춘, 길림 등의 도시를 점령했고, 6월 26일 장개석은 정전협정과 정치협상회의의 결의를 파기한 후 공산당의 점령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맞서 공산당이 반격을 함으로써

내전은 본격화되었다.[246]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합의된 정전협정에 의하면 국민당군이 만주의 항복을 받게 되었다. 1946년 2월 1일, 소련은 국민당 정부와 협정을 맺고 만주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했다.[247] 하지만, 소련은 국민당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공산당에 대한 간접적·묵시적 원조를 감행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미 군함의 수송을 받아 대련(大連)항으로 상륙하려 한 국민당군을 막아주었고, 1945년 12월 3일 완료예정이었던 자국군의 철수를 1946년 4월 29일까지 지연시켜 공산당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이러한 작전은 소련이 만주를 떠나면서 이 지역을 중공에게 넘겨주려는 공작이었으며, 중공의 권력장악을 도와주는 사회주의 종주국의 역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전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로 1946년 4월에는 만주의 90%가 공산당의 수중에 넘어가 결국 장개석의 즉각적인 만주진공·휴전파기를 낳게 했다. 6월 26일 전국적인 내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248] 중국공산당에서는 항일전쟁기간에 동북지방에 국민당 병사가 한사람도 없다가 일본이 항복한 후 국민당이 '중·소우호동맹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하여 동북지방을 접수하려 한다며 이를 "동북인민들의 항일투쟁의 전취물을 강탈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249]

1946년 봄, 동북으로 들어 온 팔로군, 신사군과 동북항일연군은 동북민주연군으로 재편되었다.[250] 동북민주연군은 51만 명으로 병력이 늘어 1947년 9월부터 50일간의 추계공세를 전개하여 국민당군을 길림, 장춘, 사평, 심양, 금주 등 도시로 밀어냈다. 이어서 12월부터 3개월간, 동계공세를 취해 사평, 용양, 안산 등 도시를 점령했다. 1948년 4월 중순, 한국독립당 동북특별당부 위원장 김학규는 만주가 중공군에게 함락될 형편이라고 전했다.[251] 1948년 1월 1일, 동북민주연군은 '동북인민해방군'으로 개칭했다.

1947년초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의 대결은 심화되었다. 내전은 중국전역을 휩쓸어 공산당이 본토를 지배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臺灣)으로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국민당군은 중공보다 두 배나 많았고, 병력수송에서 미 해군의 지원과 천진과 북경지구 미 해병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

의 장비와 보급품까지 도움을 받았다. 국민당은 주요 도시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252] 국민당군은 훈련과 장비, 기동성과 전투력에 있어서 중공군에 비하면 훨씬 우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에서 화북으로, 화북에서 화중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 밀려났다. 그 원인은 관료정치의 부패와 군벌제도의 모순이 낳은 결과로 중공의 기적이 아니었다.[253]

국민당군은 미군이 훈련시킨 정예부대를 동북으로 이동시켰으나 이곳에서도 패배했다. 동북을 둘러싼 전투는 중공의 기동전 전문가인 임표가 지휘했다. 그의 부대를 송화강을 건너 동북부 만주로 퇴각시킨 후, 1947년 대여섯 번이나 강을 건너 국민당군을 기습하고 차단하는 공격을 감행했다. 국민당군은 도시 내에서 고립되었다. 공산군은 화북에서처럼 농촌을 최대한 동원하여 동북을 차지했다.[254] 1948년 10월 19일, 장춘을 점령했다. 이 때 조선의용군 제3지대가 전투에 참가하고, 장춘 점령 후 이 곳의 위수를 담당했다. 11월 2일 공산군이 심양을 점령함으로써 만주에서 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다.

1948년 11월 중순, 모택동은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의 역량대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공산당군이 질적면 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세하다고 선언하였다. 전국적인 전세는 국민당군이 290만 명으로 약화되고, 중공군이 300여만 명으로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9년 1월 21일, 공산군이 북평을 점령한 후 국민당의 패배가 현실화되었다. 1949년 말이면 공산당 군이 400만 명, 1950년 450만 명에 이르렀다.[255] 스탈린이 중공군의 도강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4월 23일, 모택동군이 양자강을 넘어 남경을 함락시켰다. 국민당이외교면에서 아직도 중국의 주권을 주장하고 국민당군의 장거리 폭격이 때때로 상해를 진동시켰으나, 1949년 5월 27일 공산군은 상해를 장악하였다. 장개석이 대만으로 피신함으로써 국공내전이 사실상 공산측의 승리로 종결되었다.[256]

중국의 곳곳에서 미국인들과 군사고문단이 서둘러 떠났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위가 거의 정반대로 바뀌었다. 1949년 8월 5일, 미 국무부의 '중국백서' 발표는 미국이 중국에서 실패하였음을 반영한 것이었다.[257] 1949년 12월 8일, 장개석 정부는 대북(大北)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중공지도자들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49년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평에서 새로운 정치협상회의 준비회를 개최하였다. 9월 21일부터 중국 각지 대표 662명을 참가시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북경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 위원회 선거, 정부조직법, 국기, 수도 제정을 논의했다.[258]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주석에 취임했다. 10월 19일, 중앙인민정부 인민혁명군사위원회를 창설해 인민해방군과 기타 무장집단에 대한 관할과 지휘를 담당케 했다.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고강(高崗)이었다.[259]

결국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모택동은 1949년 4월 양자강 도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자 자신감을 가졌으며 미국을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간주했다. 중국 공산당은 내전을 통해 형성된 모택동의 인민전쟁전략이 강대국의 군사개입 없이 중국혁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공산화는 물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던 사실은 김일성이나 박헌영 등이 6·25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260]

2) 중공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인식

1949년 10월 2일, 소련은 중국정부 승인을 발표하고, 광동(廣東)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을 결의하였다.[261]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 공산정권을 승인한다면 민주주의 진영에 정신적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262] 1950년 1월 6일, 영국정부는 중공을 승인했다.

공산당은 거대한 중국을 장악했지만 이를 통치하는데 있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였다. 아직 내전이 종결되지 않았고 국가적 기틀이나 경제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광동, 광서, 사천, 귀주(貴州), 운남, 서강(西康) 등의 대부분 지역과 산서, 호남, 호북성 일부지역, 대만과 해남도를 비롯한 연해 도서지역 등 전 중국의 약 1/3 가량이 국민당 정부 아래 있었다. 공산당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국민당 잔여 병력이

아직 저항을 하고 있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0년 4월까지 전쟁을 수행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물가가 폭등해서 국가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중공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켰기 때문에 1949년 12월, 모택동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 회담하면서 평화를 보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이 전쟁 전 수준의 경제회복과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3년 내지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63] 이처럼 중국은 공산정부가 수립된 후 경제복구, 토지개혁, '대만해방', 반공세력 토벌, 티벳 점령[264] 등의 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급선무는 경제복구였다.[265]

중공군은 '대만해방'을 위해 1949년 10월 25일, 제3야전군 예하의 제10병단 소속 제28군단, 제29군단의 1만여 명으로 하여금 국민당 전진 방어기지인 금문도(金門島)를 공격했지만 국민당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중공군의 수송수단 미비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 이듬해도 중공은 국가전략의 목표로 '대만해방'을 삼았다. 이를 위해 1950년 3월 1일, 화동군구(華東軍區)를 새로 창설하였고, 1951년 하반기쯤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었다.[266] 이러한 구상이었으므로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모택동은 중공이 대만을 해방시킨 이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중공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49년 5월, 주은래(周恩來)는 비공식적으로 미국에게 원조요청을 포함한 사실상의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공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방문하기 직전 모택동은 외교정책에서 소련측에 '의지할' 것을 발표했다. 1949년 6월 30일, '인민민주전선에 관하여'라는 연설에서 모택동은 "우리는 일방(소련)으로 경사해야 한다. 모든 중국인은 예외없이 사회주의나 제국주의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제3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대소일변도 노선을 선언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달성한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내적 필요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중공이 분명히 소련진영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외교노선의 제1방침

은 중·소우호관계를 기초로 공산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267]

내전을 거치면서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중국대륙은 여전히 각 지방에서 활동한 군부의 영향력이 컸다. 동북지방에서도 동북군사령관 겸 정치위원이었던 고강은 내전 당시부터 만주지역에 세력기반을 구축하여 중앙당을 무시하고 소련과의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산당 정부수립 후 중앙집권화 정책에 도전하는 세력들이었다.[268] 그렇지만 고강, 요수석(饒漱石)를 중심으로 한 만주지역 세력들은 친소 경향을 띠었기 때문에 중공정부의 동북아전략과 다르지 않았다.

1949년을 지나면서 중·소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 초청인사들에게 국민당과 투쟁할 때 지원하지 못한 소련의 실수를 사과하고, 중국의 경제재건과 공군력 증강을 위해 지원해 줄 것에 합의했다. 1950년 2월 14일 모택동 중공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지 2개월 후, 주은래 수상 겸 외상이 모스크바방송과 북경방송을 통해 중·소조약 체결을 정식 발표하여 미국과 극동 각국을 비롯 전 세계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269] 중국측 입장에서는 5년간 3억 달러의 차관, 방위공약을 얻어내는 대신 몽골뿐만 아니라 북부와 서북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속적인 반식민지적 활동을 감수하는 굴욕적인 것이었지만,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연대, 미국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270]

이러한 소련일변도 정책은 중공의 대외정책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련은 중공을 강력한 위성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271] 그 결과 1950년 5월 1일, 유소기(劉少奇)의 메이데이 연설에서처럼 중·소동맹조약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은 국내건설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272]

다만, 중공측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일본과 북중국을 잇는 교두보로 이해했다. 또한 미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오랜 꿈을 가졌다고 인식했다.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공이 베트남을 지원했던 것처럼 북한을 지원하려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항일전쟁

시 동북지역에서 9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과 함께 투쟁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이 군사고문단을 보내고 군수품을 지원하는 데에 중공은 불개입 입장이었다.[273] 소련이 북한과 몽골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반면, 중공은 동남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 중공은 북한에 개입하기보다 베트남의 호찌민을 지원하여 경제원조, 무기원조,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다.[274]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측의 승리가 한국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275] 중국이 소련의 정치 혹은 군사, 경제적인 범위 내에 들어간 사실은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동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1950년 1월 말경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유엔에서 중국대표로 대만정부를 대신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나, 중소동맹협정 체결로 세계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아시아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 곳이 한반도였다.

소련이 한국을 아시아에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지로서 이용하려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이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상황은 북한측이 남침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에,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에서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내에서 지반을 다지기 전에 한국의 분단상태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6]

2. 중공과 북한과의 군사관계

1) 군사교류와 조선의용군 입북 경위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과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일제시기에도 좌우익세력을 포함한 한국의 독립운동세력은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직접 항

일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거쳐 중공정권이 수립된 후에, 그들이 친북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남한측은 중국과 유대가 상실되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중국에는 일제시대 일본의 핍박을 피해 이주해 살고 있던 많은 동포들 외에 '중경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이나 모택동과 같이 항일투쟁을 하였던 조선의용군, 일본군으로 복무하던 한인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중경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 중국에 있는 일본군에 학병이나 징병으로 끌려간 한적(韓籍) 사병들을 광복군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때 한적 사병의 우대와 이들을 무기와 함께 광복군으로 인계해 달라고 국민당측에 요청했다. 이후 1945년 10월말에 이르면 한구(漢口), 남경, 항주, 상해, 북평 등 주요 도시에 한국 광복군잠편지대(光復軍暫編支隊)를 설치하였다.[277] 나아가서 건국 후 만주지역의 군관학교를 통해서 국군 장교를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에 참가하여 만주에서 근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김구는 그를 따르는 청년 8명을 국민당군 북평행영(北平行營)으로 파견하여 만주에서 소련화한 조선인활동에 관한 현지 정보를 획득하거나 또는 북한인을 중공군 휘하로부터 귀순시키려는 국민당군의 선전전을 원조하려고 하였다.[278] 그러나 미군정이 '중경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좌익과의 대결 속에 그 역량이 중국지역으로 미치지 못해 큰 성과는 없었다.

만주군에 복무했던 자들은 원용덕, 정일권을 중심으로 교민의 보호를 위해 동북대한민국보안사(東北大韓民國保安司)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이한림·최창언·최주종 등은 1945년 말에 귀국했고, 김석범·이규동 등은 1946년 4월 제2진으로 귀국했다. 열하에서 해방을 맞았던 박정희·신현준 등도 미 군정의 개별입국 방침에 따라 1946년 6월 귀국했다.[279] 이처럼 광복군이나 일본군 출신은 국내로 귀환하였으나 조선의용군 출신의 경우는 만주지역에 남아 있는 인원이 많았다.

조선의용군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북한입북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반대로 일부 간부만 북한으로 입국했다. 1945년 8월 11일, 화북에서 대일항전을 하고 있는 조선의용군은 팔로군 총사령관 주덕으로부터 조선진군을 명령하는 연안총부 명령 제6호를 받았다. "소련 붉은 군대에 배합 …… 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 나는 ……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 부사령원 박효삼, 박일우에게 즉시 …… 동북으로 출병하며 …… 조선을 해방하는 임무를 완수할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에 따라 조선의용군은 무정의 인솔 아래 동북으로 향했다. 연안에 있던 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조선혁명군 군정간부학교 요원들은 고북구, 열하를 걸쳐 심양에 도착했고, 태행산에 있던 의용군 300명, 신사군에 있던 70여 명 등은 산해관을 넘어 10월말 심양에 도착했다.[280] 김두봉, 무정 등 일부 간부만 압록강을 넘어, 12월초 평양에 도착하였다.[281] 당시 북한에서는 연안파들이 언제 귀국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김일성 세력에게 견제를 받았다.[282]

북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조선의용군은 입북이 지연되는데다가 제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입북을 미룬 채 부대를 몇 개의 지대로 확대 개편되어 만주지역에서 '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기반으로 동북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조선의용군이 모두 중공 산하인 동북민주연군과 동북군구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그들의 독자성이 제한되자, <표 2-13>처럼 박일우, 이상조 등 많은 간부들이 입북하였다.[283]

<표 2-13> 1945~1946년 조선의용군 입북자[284]

시 기	입 북 자	비 고
1차 입북자 명단 (1945년말)	김두봉, 최창익, 한빈, 방우용, 고봉기, 김민산, 진반수, 박부, 홍순관, 하양천, 장진광, 허정숙, 김영숙, 장수련, 무정, 박효삼, 김창만, 이춘암, 주춘길, 유신, 김세광, 손달, 양계, 이림, 김한중, 이지강, 이철중, 장중광, 장중진, 장지민, 장지복, 진국화, 최봉록, 최영, 하진동, 왕련, 김철원, 풍중천 등	
2차 입북자 명단 (1946년)	박일우, 이익성, 이권무, 조렬광, 김웅, 이상조, 김연, 이근산, 공호, 박훈일, 최명, 한경, 김택, 장평산, 이덕무, 이대성, 김신, 김홍, 이명선, 최계원, 이동호, 윤지평, 구재수, 김오진, 김수만, 유원천, 김종원, 김병권, 김병헌, 이원영, 조병룡, 채국반, 이명, 이유민, 왕자인 등	개별 입북 (소수병력 대동)

입북한 연안파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그들이 득세하기를 바라지 않은 소련군정이 견제해서 밀려나 있었으나,[285] 북한 정규군 창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연안파로 북한군 요직에 앉게 된 자는 무정(보안간부훈련대대부 포병사령관), 박효삼(보안간부학교장), 유신(보안간부훈련대대본부 작전처장), 김세광(내무성 국장), 이림(민족보위성 간부국장), 장지복(동해안 방어사령관), 하진동(포병학교장), 김철원(탱크사단 참모장), 이익성(나남보안훈련소 참모장), 김웅(1사단장), 김연(766부대 참모장) 등을 들 수 있다.[286]

조선의용군계열 외에 만주지역에는 일부 한국독립당 계열로 활동한 조선인들도 있었으나 1946년 4월말, 하얼빈 시내에 있는 국민당계통의 조선족 무장부대 1개 중대가 조선의용군 제3지대로 넘어온 것처럼[287] 점차 공산당 측에 가담한 경우가 늘었다. 국공내전이 공산당에게 유리해짐에 따라 만주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 규모가 한 때 중공측에서 20만 명에 이른다고 선전하기도 하였으나 최소 3~4만 명, 최대 1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288] 1949년 3월, 미국 측은 만주에서 중국 공산군에 복무하거나 훈련중인 여타 조선인 부대가 당시 북한군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들을 능가한다고 평가하였다.[289]

한 때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중국내전을 전투경험의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 1947년 6월부터 1948년 6월까지 10만 명 가량의 북한 병사가 내전에 참가하였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부인되고 있다.[290]

국공내전시기 북한은 만주지역의 중공군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기지 역할로 중공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1946년 7월 하순, 중공의 동북국(東北局)은 주치리(朱治理)와 초경광(肖勁光)을 평양에 파견하여 평양에 동북국주조선판사처(東北局駐朝鮮辦事處)를 조직하였다.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 평양리민공사(平壤利民公司)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했다. 이 기구는 경제, 북한거주 중국인문제 등을 다루었지만 군사적 역할도 컸다. 1946년 하반기 국민당 군대가 남만주로 진격해 오자, 중공군은 안동과 통화에서 철수하면서 18,000여 명의 부상병, 군인가족, 군수지원 병력을 북한 영내로 철수시켰다.

1946년 국민당군이 심양·장춘에 이르는 철로변의 대도시와 주요 교통로를 점령하자, 안동→신의주→남양→도문, 통화→집안→만포→도문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로와 대련→남포, 나진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선을 통해 1947년 7개월 동안 21만 톤, 1948년 30만 톤 이상의 물자를 만주로 수송하였다. 또한, 북한이 2만 톤 이상의 물자를 직접 지원하였다.[291]

1948년 11월 2일, 중공군이 심양을 점령함으로써 만주지역 국공투쟁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였다. 이 무렵부터 모택동은 북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겼다. 마침,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철수할 무렵이어서, 북한도 무력 증강을 크게 강조한 시기였다. 국공 내전이 끝날 무렵, 김일성은 조선인이 국민당군과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292]

모택동은 중공군이 중국을 완전 장악하기 전, 그리고 병력을 재편하기 전,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한인병사들을 북한으로 넘겨주었다. 동북지역에서 공산정부의 수립은 1949년 8월 26일, '동북인민대표회의'에서 정식 발표되었고, 고강(高崗)을 비롯한 정부위원 52명이 함께 발표되어 그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했다.[293]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그들은 정규군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1949년 10월 중순, '중공중앙동북국'에서 동북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시정방침에 관한 건의에서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정규군대를 건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 내용으로 당시 각급 군사조직을 신속히 정규군화하고 근대화할 것, 군대조직상의 정규 편제와 제도를 확정해 무조직과 유격습성을 극복할 것, 각급 정부에서는 잉여 군인과 제대군인의 안치에 주의하여 그들을 조직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있었다.[294] 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7기 3중전회를 개최할 때, 섭영진은 "인민해방군 재편문제에 관하여" 보고하고 전국적인 군대감축을 추진했다.[295]

중공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북한과 이미 통상조약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는 설이 제기되어, 유엔한국위원단도 중공이 한국문제에 개입하여 만주에 있는 중공군이 북한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설을 지적하였다.[296] 심지어 중공이 소련과의 비밀협정을 통해 북한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것을 인정하였다는

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94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의 기간 중 만주로부터 무기 및 병력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주장되었다.[297] 실제로 그러한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북한군을 강화시키려는 방안 가운데 만주에 있는 조선족 5개 사단을 북한군의 기간 병력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구체화하여 1949년 1월 하얼빈 회담에서 '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인 부대를 1949년 9월말까지 3차에 걸쳐 28,000명을 북한으로 송환시킬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298]

중국에 있는 조선적 병사의 입북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49년 4월말,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대사에게 무기 장비를 제공해주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김일을 중국에 보내 모택동에게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조선인 부대를 북한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때부터로 보인다. 1949년 5월, 김일성의 특사 김일이 북경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조선족부대의 북한군 편입을 제기하였다.[299]

모택동은 각각 1만 명 규모의 조선인 2개 사단을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그 배경에는 내전 중에 방대해진 군대를 해산할 필요도 있었다. 또한, 당시 중공군 가운데 조선족이 비율이 다른 소수인종보다 높았다. 동북 지역에서 전체 소수인종의 경우 32명 중 1명이 중공군에 입대하였으나 조선족은 17명 중 1명이었다.[300]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합의에 따라 중공군에 참가하여 봉천과 장춘에 배치되어 있는 2개 조선인 사단 사령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연락 수단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봉천과 장춘에 있는 조선인 사단은 김일성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투입한다는 것이다.[301] 그 후 1949년 7월 중순, 김일성은 중공군의 조선인사단을 북한지역으로 전환배치한다는 결정을 수용했다.[302] 이들의 북한군으로 편입은 '조선인민군' 창건 후 북한군의 양적 팽창과 전투력 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미군측은 북한군과 만주 주재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연락이 꾸준히 있었고, 군사 장비가 압록강을 넘어 유입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303]

1949년 7월부터 조선족 부대가 입북하기 시작했다. 제164사단에 소속된 병사는 7월 24일, 함경북도 나남시에서 북한군 제615군으로 편입되었다.[304] 6월 29일,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후 이동한 것이었다.[305] 입북한 조선족 병사들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조국 앞에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에 입대한다"고 선서를 했다.[306] 이미 1949년 9월 초, 1949년 8월 1일까지 약 10만 명의 무장한인이 중공에 의하여 만주로부터 북한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307]

1950년 1월 22일, 김일성은 김광협 등을 중국에 보내 항일전쟁과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조선국적의 병사를 추가로 귀국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섭영진(聶榮臻) 참모총장 대리가 김광협과 이를 협의하고 중공 중앙의 비준을 거쳐서 중공군 중 14,000명을 무기와 장비를 휴대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308] 1월 31일, 중공은 티벳을 제외한 중국 본토의 해방을 선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공이 군사비 지출과 군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다.[309] 1950년 4월, 북한군 제12사단은 중공군 15사단과 156사단으로 입국한 한인병사들로 원산에서 편성되었다.[310] 북한으로 입북한 중국공산당원들은 1950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북조선로동당으로 전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311] 이러한 북한군의 증강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증대시켰다. 이들의 규모는 63,000명에 이르러,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전쟁 도발 결심과 전쟁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312]

2) 북한의 남침 계획지지

중국의 전통적인 방어전략을 이어받아서 모택동은 "타국이 침범하지 않으면, 이를 치지 않고, 타국이 침범하면 반드시 친다(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는 방어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였다.[313]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한반도통일문제가 한반도 내부 사안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통일을 실현하든지 이는 모두 남북한 인민들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며 외부세력은 한반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314] 그러나 이와 모순되게 그들은 북한정부가 남침하려는 계획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1945년부터 전쟁시기까지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혹

은 경제적으로 소련 중심이었다. 그러나 중공의 역할도 중요한 변수였다.

중공 정권이 수립되자 1949년 10월 6일, 북한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군이 북한으로 귀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참가하고 있어서 중국인민이 미국을 몰아내듯이 조선에서도 그들을 쫓아 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15]

이미 1949년 5월, 김일과의 회담에서부터 모택동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물론, 그는 그 해 남한에 대한 공격은 삼가하도록 권했고, 다음 해라면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국내문제로 매우 바쁘고 어수선한 상태이므로 북한에 대해 성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중국의 중요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316]

그러나 모택동이 한인 병사를 인도하는데 동의하였고, 그들의 '중요한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은 김일성의 남침의사에 대해 아직 확실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았던 스탈린보다 김일성에게 적극적인 것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후에도 모택동은 "북한이 한국 전체를 해방하고자 하는 염원을 지지했으며, 또한 중국 혁명이 완성되면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북한을 돕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러한 지지는 중국이 전쟁 이후 참전 명분으로 사회주의적 연대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군이 북한영토를 침범한다면 중국안보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317]과는 달리 적극적인 전략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모택동의 독자적인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949년 8월 진해에서 열린 이승만·장개석 회담에 근거하여 국민당 정부에 공군 혹은 해군기지를 제공할 것이나 협약설이나 극동지역에서 반공기구로서 태평양동맹의 추진이 구체화되는 시점 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318]

이러한 모택동의 지지 약속은 남침을 계획하는 김일성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1950년 1월 17일, 북한 외상 박헌영이 주최한 소련과 중국대표와의 만찬석상에서 김일성은 남침문제를 제기하면서 모택동이 중국에서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19] 1950년 3~4월에 스탈린도 김일성과 대담에서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해방되어 조선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긴급사태 때에는 군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남침전쟁을 승인하였다. 이 때 스탈린은 남측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면 중공지도부의 지지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미군이 개입하면 반드시 모택동과 상의하고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강조하였다.[320]

1950년 5월 13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에게 스탈린과 회담 내용을 보고하면서 남측에 대한 침공계획을 알렸다. 비록 모택동은 이에 대해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14일 김일성에게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음날인 15일 모택동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제1단계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2단계로 평화통일에 대한 대남제의를 하며, 3단계로 남한측의 평화통일 거부 후 전투행위를 개시한다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북한군이 속전속결로 행동해야 하며, 주요 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되며, 각 사령관과 병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도시를 우회하지 말고 군사력을 집중하여 적군을 신속하게 궤멸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여 해방시킨 이후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중국과 북한 양국의 공동의 혁명 임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동의하며 아울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택동은 만약 미군이 직접 참전을 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 중공군을 배치하는 것과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모택동의 의견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321]

김일성은 모스크바가 이미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북경에 온 것은 단지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모택동에게 사

전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여겼다. 김일성은 북경을 떠난 이후 모택동과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소련의 원조 물자가 중국 동북철로를 통해 북한으로 운송되지 않았고,[322] 중공 측에 전쟁의 시작 시간마저 알리지 않아 심지어 모택동은 외국 신문을 통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했을 정도였다고 한다.[323]

그러나 1950년 5월 회담에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동북부에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미군이 개입시 군대를 보내 북한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1950년 초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하고 있을 때, 모택동은 중공군 제4군 산하 10만 명의 병력을 동북지역으로 서둘러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월과 4월에 각각 중국의 남부지역과 해남도의 점령임무를 완료한 제4야전군 산하 제42군단 6만 명과 제5기갑사단 1만 명을 중국 동북부지역으로 배치하였다. 1950년 4월 동북지역을 순시하면서 주덕이 "장병들에게 경계를 결코 늦추지 말라, 여러분들은 항상 침략자들을 쓸어버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24]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다시 6만 명의 병력이 동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지역에 40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였다.[325]

이러한 병력증강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북한과의 국경선을 지키려는 데 있었으나 중공이 북한이나 소련에게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326]

주 (註)

1)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 : Random House, 1987), p. 358.
2) Maurice Matloff, ed., *American Military History*(Washington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p. 531.
3) 미국 합동전략분석위원회에 의하면, 소련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51개 사단, 폴란드에 50개 사단, 중동 및 근동지역에 50개 사단 등을 배치하고 있었고, 소련 본토에는 152개 사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James F.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vol. Ⅰ,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6, p. 71).
4)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p. 98.
5) Department of Commerce,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lonial Times to 1957*(Bureau of the Census, 1960), p. 736.
6) James A.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50-1951, The Korean War*, vol.Ⅲ, part Ⅰ(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8), p. 21.
7)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43.
8)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43.
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p. 44-45.
10) Matloff, *American Military History*, pp. 539-540.
11)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p. 99.
1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43.
13) 南廷屋, 『韓美軍事關係史 1871-2002』, p. 315.
14)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vol. Ⅰ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6), p. 87.
15) Report of the Special "Ad Hoc" Committee of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April 21, 1947,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칭함], *1947, 3*, p. 212.
16) 『국제연합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 제1조 1항.
17) Winston S. Churchill, "The Sinews of Peace," March 5, 1946, *Vital Speeches of the Day*, vol. 12(March 15, 1946), p. 332 ; James A. Nathan and James K. Olive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World Order*, 3rd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85), pp. 53-54.
18)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p. 44.
19) James L. Gormly, *From Potsdam to the Cold War : Big Three Diplomacy, 1945-1947*(Wilmington : A Scholarly resources Inc., 1990), p. 221.
20) Thomas G. Paterson, *Meeting the Communist Threat : Truman to Reagan*(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39-40 ; Paterson, Clifford and Hagan, *American Foreign Policy*, p. 435.
21) *FRUS 1947*, vol. 3 : *The British Commonwealth ; Europe*, p. 230.
22) John Lewis Gadd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 An Interpretive History*, 2nd ed. (New York : McGraw-Hill, 1990), p. 186.
23) *FRUS 1947*, vol. V, pp. 32-37.
24) "Truman Doctrin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47(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 176-180.
25) "Truman Doctrin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pp. 176-180.
26) Richard J. Barnet, "The Misconceptions of the Truman Doctrine," in Thomas G. Paterson, 2nd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Lexington : D. C. Heath and Company, 1974), pp. 156-157.
27) *FRUS 1947*, Vol. 3, pp. 209-210.
28) George F. Kennan, *Memoirs*, pp. 325-326 ; Woods and Jones, *Dawning oh the Cold War*, p. 154.
29) Kennan, *Memoirs*, pp. 325-328.
30) *FRUS 1947*, vol. 3 : *The British Commonwealth ; Europe*, pp. 237-239.
31) Thomas G. Paterson, "The Marshall Plan Revised," in Paters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pp. 171-172.
32) *FRUS 1947,* vol. V, pp. 45-47, 56-57, 60-62.
33) Mr. X[George F.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XXV, July 1947, pp. 556-582.
34) Kennan, *Memoirs, 1925-1950*(New York : Panthon Books, 1967), pp. 354-367.
35) Arthur Krock, "A Guide to Official Thinking About Russia," *New York Times*, July 8, 1947.
36) NSC 20/4, "U. S. Objectives with Respect to the USSR to Counter Soviet Threat to the U. S. Security," November 23, 1948, *FRUS 1948*, vol. 1, part 2, p. 663.
37) "NSC-20/4", *FRUS 1948*, vol. 1. part 2, pp. 662-669.
38) *FRUS 1949*, vol. 9, *The Far East : China*, pp. 51, 70, 197.
39) 李昊宰, 『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서울 : 法文社,1988), pp. 304-311.
40) *FRUS 1950*, Part I, National Security Affairs : Foreign Economic Policy, p. 240.
41)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261.
42) Thomas G. Paterson, J. Garry Clifford, and Kenneth J. Hagan,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 3rd ed. (Lexington, MA : D. C. Heath, 1988), pp. 429-431.
43)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p. 69.
44) Schnabel,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p. 69.
45) Kenneth W. Condit,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7-1949,* vol. II(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6), p. 153.
46) Gerinkh Trofimenko, *The U. S. Military Doctrine*, p. 59 ; Gregg-Herken, *The Winning Weapon : The Atomic Bomb in the Cold War, 1945-1950*(New York : Alfred A. Knopf, 1980), pp. 219-224.
47) Roger Dingman, "Strategic Planning and the Policy Process : American Plans for War in East Asia, 1945-1950," *Naval War College Review* 32(November-December 1979), p. 11.
48) JWPC 476/2, August 29, 1947 ; Condit,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7-1949,* p. 157.
49) JCS 1644/1, March 27, 1948.
50) Condit,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7-1949,* pp. 159-163.
51) Conversation Between General of the Army MacArthur and Mr. George Kennan, March 5, 1948, *FRUS 1948*, vol. 6 : The Far East and Australia, pp. 699-702.
52) Dan G. Acheson, *Present at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1969), p. 357.
53) *FRUS 1948*, vol. 6, pp. 706, 708-709.
54)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30 ; James F. Schnabel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and National Policy*, vol. III : Korean Part 1, p. 23.
55) "Strategic Evaluation of United States Needs in Japan", Washington, 9 June 1949(Report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FRUS 1949*, vol. VII, part 2, pp. 774-777.

56) John L. Gaddis, "The Strategic Perspective : The Rise and Fall of the Defensive Perimeter Concept, 1947-1951," in Borg and Heinrichs, eds., op. cit., pp. 62-64, 74-77.
57) The Department of State, "Crisis in Asia : An Examination of U. S. Policy," *Bulletin*, vol. XXII No. 551(Jan. 23, 1950), p. 116.
58)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111.
5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48.
6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50 ;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52-54.
6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54.
6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54.
63)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55.
64)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49-50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pp. 5-6.
65) Summers, *Korean War Almanac*, p. 197.
66)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59.
67) 유류의 전투예비량은 180일분으로 그 가운데 비축창고에 75일분, 항만 하역장·화물역 유류 저장탱크 등에 15일분, 부대에 15일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60).
68)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p. 59-60.
69) Report by the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U. S. Assistance on Other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 VI, pp. 736-750.
70) JCS 1769/1, "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FRUS 1947*, vol. 1 : General ; The United Nations, pp. 738-750.
71) Memorandum by the State-War-Navy-Coordinating Committee to the Secretary, Joint Chiefs of Staff, September 15, 1947, *FRUS 1947*, vol. 6, p. 789.
72) Report by the State-War-Navy-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SANACC 176/39(1948. 3), p. 294.
73) Edwin O. Raischauer, *Wanted : An Asian Policy(*New York : Alfred A. Knopf Co., 1955), p. 37.
74)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Forrestal)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ect :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Military Occupation of South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the Military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6, 1947, *FRUS 1947*, vol. 6, pp. 817-818.
75) William Whitney Stueck, Jr., *The Wedemeyer Mission :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Athens :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4), pp. 11-15.
76) Albert C. Wedemeyer, "Report to the President : Korea"(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p. Ⅲ.
77) NSC-8, *FRUS 1948,* vol. VI, p. 1164.
78) NSC-8, *FRUS 1948,* vol. VI, p. 1164.
79) NSC-8, *FRUS 1948,* vol. VI, pp. 1164-1170.
80) NSC-8/2, *FRUS 1949,* vol. Ⅶ, part 2, p. 969, Note 1.
81)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29.
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223.
83) 外務部, 『韓國外交 20年 附錄』, pp. 292-293.

84) Robert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the Army, 1962), p. 37.
85) NSC-8/2, *FRUS 1949* Ⅶ, pp. 969-978.
86) NSC-8/2, *FRUS 1949* Ⅶ, part 2, p. 978.
87) NSC-8/2, *FRUS 1949* Ⅵ, pp. 969-978.
88) NSC-8/2, *FRUS 1949,* vol. Ⅶ, pp. 977-978.
89)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13.
90) Dean Acheson,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 S. Policy," *Department State Bulletin*, vol. 22. 551, January 23, 1950, p. 116.
91)『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 제1조』, 1948. 8. 24.
92)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pp. 52-53.
9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國防條約集』第1輯, pp. 58-63.
9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제1조』, 1950. 1. 26 서명(1949. 7. 1일 소급 발효).
95) 南廷屋,『韓美軍事關係史, 1871-2002』, p. 276.
96) 白善燁,『軍과 나』(서울 : 大陸硏究所 出版部, 1989), p. 337.
97)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1995, pp. 49-50.
98) 미 국무부, 한철호 역,『미국의 대한정책』(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p. 162 ;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101.
99)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p. 52.
10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國防條約集』제1집, pp. 64-69.
101)『韓美相好防衛援助協定 前文』, 1950. 1. 26.
102)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1, 1950, *FRUS 1950*, vol 7, pp. 14-15 ;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December 7, 1949, *FRUS 1949*, vol 7, part 2, pp. 1105-1106 ;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ubject : Request from President Rhee for Excess FEAF Aircraft," March 16, 1950, *FRUS 1950*, vol 7, pp. 34-35.
103) 소련의 군사전략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기 소련군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은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1945년 종전 이후부터 1953년 3월까지이며, 제2기는 1953년 4월부터 1962년까지, 그리고 제3기는 1962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소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나올 때까지이다. 김학준,『러시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p. 304-306.
104)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Y., Columbia Univ. Press, 1978. 참조.
105) 김학준,『러시아사』, pp. 308-309.
106)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제1권, 1967, pp. 185-186.
107)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적손실 약 2천만 명, 도시 및 도시형 부락 1710개, 촌락 7만개 이상, 공장 3만 2천여 개, 콜호즈 9만 8천 개, 소브호즈 1,876개 등 파괴, 철로 6만 5천㎞, 선박 1만 6천 척, 화차 42만 8천 량 상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국방군사연구소,『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인쇄, 1997, p. 339.
108) 이 계획은 1946년 3월 소련최고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4년 3개월 만에 초과 달성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위의 책, p. 346.
109) 김학준,『러시아사』, p. 293. 전쟁 피해복구의 기본적 자원인 노동력과 장비의 동원은 그리 어려

운 문제는 아니었다. 즉 군사분야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군사력의 감축이 이루어져 1,0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동원 해제되고 상당수의 군장비가 민간 산업분야로 이전되었다.

110) 이하 소련군 군비 축소와 재무장 정책에 관한 내용은 주로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42-350을 중심으로 정리 보완하였다.

111) 1945년 2회, 1946년 2회, 1947년 2회 등 총 6회 실시되었다. 냉전의 심화, 나토의 창설 등으로 국제환경이 악화되자 동원해제가 완료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949년부터 소련군 병력이 재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2.

112)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3.

113)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43-345. 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공업은 신속하게 재건되어 갔다. 1948년에는 산업 생산력이, 그리고 1950년에는 농업 생산력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1950년의 국내 산업생산력은 1945년 수준을 81% 뛰어 넘었다. 그러나 이는 중공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1950년 소비재산업의 생산력은 1940년과 비교할 경우 3%에 지나지 않았다.

114) 제4차 국가경제 부흥 발전 5개년 계획 기간(1946-50)중 대학교에서는 총 65만 2천명,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에서는 127만 8천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다. 위의 책, p. 347.

115) 소련의 키르얀은 『과학기술혁신과 소련 군사력』에서 "1948년에 소련 과학자들은 이미 원자폭탄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책, p. 348 재인용.

116) 乾一宇(譯), 『蘇聯軍 思想, 構造, 實力』(東京 : 時事通信社, 1986), p. 34. 1945년 소련이 핵 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117) 『프라우다』(1949년 9월 25일자),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9 재인용.

118) 스탈린은 1951년 10월 6일 프라우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계획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폭발력을 지니는 핵폭탄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프라우다』(1951년 10월 6일자), 국방군사연구소,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49 재인용.

119) 乾一宇(譯), 앞의 책, p. 34. 소련도 최초의 핵폭탄 운반수단은 TU-4폭격기였다.

120) 당시 군사조직 개편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정책 영역의 최고입법기관은 소련최고회의, 그리고 최고 집행기관은 소련장관소비에트였다.

121) 이하 소련군 지휘부 및 군 조직의 재편 내용은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2-36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보완하였다.

122) 1947년 3월까지 무력부 장관에는 스탈린이 재직하였으며, 1947년 3월부터 1949년 3월까지, 그리고 1953년 3월부터는 불가닌이, 1949년 4월부터 1953년 3월까지는 바실리예프스키(Vasilebvsky)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123) 1945-1953년 정치 총지휘부장은 쉬킨(Shikin), 크라이뉴코프(Krainyukov), 쿠즈네쪼프(Kuznetsov) 등이었다. 각 군종별 정치지휘부는 1953년 국방부로 통합된 이후 해체되었다.

124)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2-253.

125) 독소전 개전 직후 소련내 군관구는 프리발틱, 서부 키예프, 레닌그라드, 오데사, 아르항겔스크, 북카프카즈, 자카프카즈, 모스크바, 프리볼즈예(볼가), 중앙아시아, 우랄, 시베리아, 자바이칼, 하리코프, 아룔(오를로프), 극동전선 등 총 16개였다.

126) 소련극동군은 제1극동전선군, 제2극동전선군, 자바이칼전선군, 태평양함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5군은 제1극동전선군의 동측방을 담당한 조공부대로 동만주 일대의 일본군 방어지대를 돌파한 후 왕청(汪淸)·도문(圖門)·연길(延吉) 방면으로 진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1947년 5월 자바이칼-아무르 관구를 근간으로 극동군총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극동군총사령부에는 극동 군관구, 프리모르예 군관구, 태형양 함대, 아무르 군사소함대 등이 소속되었다. 1953년 4월에는 극

동지역 전체가 단일의 극동 군관구로 통합되었다.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3-354.

127) 1946년 2월 바라노비츠군관구와 민스크군관구가 백러시아군관구로 통합됨에 따라 군관구의 수가 31개로, 그리고 군사력 감축과 관련하여 일부 군관구들이 해체되어 1946년 10월에는 총 21개로 감소되었다.

128) 항상적 작전요인이란 후방의 안정, 군대의 사기, 사단의 양과 질, 군대의 장비, 지휘관의 조직능력 등이었다.

129)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5-356.

130) 1944년 1개 사단은 총 419대의 차량, 견인차량 및 장갑차를 보유하였다.

131) 이 시기 전차사단 및 기계화사단들은 보다 강력한 장갑력 및 화력, 기동력을 갖춘 신형 中型 및 重型 전차와 과거에는 보유하지 않았던 수륙양용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7-358.

132)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58-360.

133) 폭격항공부대로 구성된 장거리항공은 다양한 기종의 폭격기들을 보유하였는데, 상당수의 폭격기들은 핵무기 사용을 전제하고 실전 배치되었다. 공정수송항공은 수송공정항공으로, 그리고 그 후 수송항공으로 개칭되었다.

134)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60-363.

135) 전쟁결과 소련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등 발트3국, 핀란드의 일부 영토, 몰다비아 등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김학준, 『러시아사』, pp. 304-306.

136) 이 시기 장교요원 양성에 공헌이 컸던 교육기관으로는 프룬제 군사아카데미, 레닌군정치아카데미, 기갑아카데미, 제르진스키 포병아카데미, 주코프공군기술아카데미, 모자이스키 공군기술아카데미, 공군아카데미, 키비세프공병아카데미, 군통신아카데미, 해군아카데미 등이 있었다. 한편 작전 수준에서의 지휘관 및 참모요원의 양성은 총참모부아카데미에서 담당하였다.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 365.

137) 『소련군사정책, 1917-1991』, pp. 366-369.

138) 李景珉, 『朝鮮現代史の岐路-八.一五から何處へ』, 平凡社, 1996, pp. 321-322.

139) 치스챠코프는 1900년 농민의 아들로 출생하여 볼세비키 혁명때 적군병사로 가담하였으며, 독·소전쟁시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제25군사령관으로서 북한점령 초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1947년 3월 코르트코프로 교체되어 북한을 떠났다.

140) U.S.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u*(1946. 6. 20일자).

141) 소련군 북한 진주 상황은 김기조, 『38선 분할의 역사-미소일간의 전략대결과 전시외교 비사(1941-1945)』, 1994, 동산출판사 ; 기광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분석 : 해방-1948. 12』, 『현대북한연구』, 1999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본 항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142)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13, p. 117.

143)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29.

144) 『38선 분할의 역사』, pp. 237-238.

145) 스탈린이 보유한 주요직책들로는 당중앙위원회 총서기, 당 정치국원, 인민위원회의 의장, 국가방위원원회 의장, 국방인민위, 무력성장관, 소련군최고총사령관 등이었다. 이러한 지위와 위상이 말해주듯 소련의 모든 대외정책은 그의 절대적 권한 내에서 결정 집행되었다.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15.

146) 『38선 분할의 역사』, p. 238.

147) 『38선 분할의 역사』, pp. 239-240.

148) 『38선 분할의 역사』, pp. 240-241.
149) 『38선 분할의 역사』, p. 243.
150) 『38선 분할의 역사』, pp. 244-245.
15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고려대학교 정외과박사학위논문, 1994. p. 209.
152) 국토통일원(역), 치스챠코프, 『제25군의 전투행로』, 『조선의 해방』, 1987, p. 58.
153) 소군은 이에 앞서 10월 12일 치스챠코프와 참모장 펜코프스키 연명으로 '북조선주둔 소련 제25군사령관의 성명서'로 북한의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키고 모든 무기를 압수하였다.
154)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p. 223.
155) 『38선 분할의 역사』, p. 336.
156) 로마넨코는 제25군부상령관 겸 소비에트민정의 사령관으로서 구체적인 점령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제25군 군사회의의 군사위원이다. 1946년 7월에 김일성 박헌영과 함께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스탈린을 방문한다.
157) 국토통일원(역),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pp. 124-126.
158) 스티코프는 1907년에 출생하여 레닌그라드의 노동자로 일라면서 1929년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에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39년 스탈린이 레닌그라드 시찰 때에 발탁되어 일약 승진하였고, 1938년 소련·핀란드전쟁 시 제7군 군사회의 정치위원으로 참전하여 정치공작원으로서의 수완을 인정받았다. 그는 미·소공위 소련측 수석대표를 역임하였고 북한정권 수립이후에는 주북 소련대사로 북한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159)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33.
160) 치스챠코프의 포고문 일자에 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편이다. 미군이 발행한 최초의 포고문이 9월 7일부라고 되어있는 것도 진주직후 9월 8일에 의한 것처럼 치스챠코프가 평양에 도착한 8월 26에 최초 포고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p. 57-58.
16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 130, 소련 제25군 사령부내에 설치된 기관은 '소비에트민정사령부(Soviet Civil Administration)'였으며, 이점에서 미 군정(U.S. Military Government)과는 달리 '소군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으나 민정이라는 개념은 군대에서 민간 관련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정 역시 군정장관 밑에 민정장관을 두고 있었다. 서주석, 『한국 국가체제의 형성과정 : 제1공화국 국가기구와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1996, p. 68.
162) 치스챠코프는 이날 "1) 8월 26일 20:00시를 기하여 평안남도에 대한 일본통치권은 소멸하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 정권이 인계된다. 방송, 통일, 전화, 철도, 공장, 은행의 각 기관은 즉시 인민정치위원회에 접수된다. 2) 일체의 일본인 관리는 물러날 것이며 당분간 관사에 거주함은 상관없다. 일본인들 중에서 조선인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자나 기술자는 현상을 유지하며 일본인들의 거류문제와 취직은 동 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163)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N. Y. : Berg, 1989), p. 96.
164) 소비에트민정을 지칭할 때는 소비에트민정으로 25군, 소비에트민정 그리고 지방의 위수사령부를 포함하여 북한주둔 현지 소련점령기를 통칭할 때는 소군정이라 한다. 당시 북한 문헌들에는 쏘련민정·쏘련민정부·쏘련군 민정사령부·쏘련 민정관리국 등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pp. 224-225.
165)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pp. 141-142. 이 사령부 직위표상에는 후임자들 가운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66) 레베데프 소장은 치스챠코프 밑에서 소련 적군 제25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겸 참모직을 수행했다. 제25군 군사회의 군사위원이었고 정보조직 내무성 및 사법기구를 관장하였다. 1947년 가을

부터 로마넨코에 이어 소비에트 민정의 사령관을 맡았으며, 소련측 대표로 1, 2차 미소공위 회담에 참석하였다. 그는 소련측 수석대표 겸 제25군 정치위원인 스티코프의 주요 참모였다.

167) 샤닌은 펜코프스키에 이어 제25군 사령관 참모장으로 있었다. 또 제25군 군사회의 의원이자 미소공위대표였으며, 스티코프의 참모장을 맡았다.

168)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p. 226.

169) 이그나체프는 소비에트 민정의 부사령관으로서 정치담당이었다. 북한 정치의 상당부분이 그에 의해 전개되었고, 민주당의 창달을 허용하고 주도하였다. 스티코프와 함께 점령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에 남아 소련대사관의 참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170) 발라사노프는 제25군 사령관의 정치고문으로서 소련정보기관의 평양 책임자임였다. 미소공위대표를 맡았으며 한국문제 전문가로 소련외무부의 정책을 북한에 전달하고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71) 『朝鮮現代史の岐路-八·一五から何處へ』, pp. 259-264.

172)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한 후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정치위원회 인민위원회 등이 결성되었으나 그 역할은 대동소이하여 후에 인민위원회로 통일되었다.

173) 『朝鮮終戰の記錄』, pp. 184-185.

174)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p. 24 ; EUSA,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90.

175) 『38선 분할의 역사』, p. 337.

17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p. 190.

177)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p. 13.

178) 『하지가 맥아더에게』(1945. 11. 2), 김국태(역), 『해방3년과 미국』, 돌베게, 1984, p. 120.

179) 소련외무성 극동과, 『한국의 조사보고』(1945. 6. 29일), 소련외무성 문서보관소, Fond 0430, Opis 2, Papka 5, Delo 18, listi 18-30, 전현수, 앞의 논문, p. 10 재인용.

180) 『웨이드마이어의 보고』(1947. 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47, vol. Ⅵ, pp. 796-803.

181) 李鍾元, 『戰後美國の極東政策と韓國の脫植民地化』,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8, 岩波書店, 1993, pp. 21-24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반공체제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1945-48』,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논문, 1995, pp. 280-285.

182) 소련은 미소공위 결렬직후인 1947. 9. 26일 스티코프가 '미소양군이 1948년초 철군하자'는 미소양군 철수안을 제안한 이래 지속적으로 조기철군을 주장해 왔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한국발전연구원, 1991, pp. 484-487.

183) 육군본부, 『북괴의 6·25 남침분석』, 1970, pp. 39-41.

184) 소련 군사고문단의 총지휘는 미 군사고문단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문단장(스미르노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북한 소련대사인 스티코프에게 있었다. 『바실리예프스키가 스티코프에게』(1949. 4. 21), 대한민국 외무부(역), 『소련 외교문서』 제4권(미간행), p. 15.

185) 『조선경비대 예산』(1948), SN. 1(SN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등록 번호, 이하 같음).

186)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 p. 69.

187)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편), 『북한관계자료집』 제1집, 1969, p. 472.

188) 최초의 주한미소양군 철수제의는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에 의해서였으며, 1947년 10월 28일 그로미코 외상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그리고 11월 13일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국토통일원(역),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pp. 60-86.

189) 『북조선노동당 인제군당 당조회의록』(1949. 1-3),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SN849-1.

190) 국토통일원(역),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pp. 75-86.
191) 『북한인민군대사』, pp. 98-99.
192)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2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27.
193) 『북한인민군대사』, p. 101.
194) 소련군총참모부, 『군철수 이후 잔류인원 보고』(1949. 2. 18),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고, 자료번호 23, 목록번호173346, 문서번호73, 195.
195) 『북한·소련정부간 의정서』(1949. 3),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18. 미군철수 다음날 스티코프는 '미군철수로 소련해군의 청진항과 평양과 강계의 공군사령부 유지가 곤란하고, 이의 철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아울러 '소련 해군전문가들과 고문관들의 잔류는 필요하며, 항공기술자들과 그밖의 근무자들은 민간항공기 근무자로 위장시키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였다. 『스키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 7. 1), 같은 자료, p. 24.
196) General Correspondence Security Classified July 1947-Dec 1950, 『육군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1949. 1. 25), SN. 623.
197) FEC, Intell. Summary No. 2486(1949. 6. 30), SN. 223(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번호, 이하 같음).
198) 대한민국 국회, 『국회속기록』 제2회 24호(1949. 2. 7).
199) 『조선일보』 1949. 7. 1일 및 7. 20일.
200)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p. 95. 동 회담에서 북한대표로서 민족보위상 최용건, 포병사령관 무정, 북한노동당 중앙검찰위원장 방우용, 하얼빈 보안여단정치위원 주덕 등 6명이었다.
201) Kyrio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년 6월 호, pp. 51-65 ; 『북한인민군대사』, pp. 199-200.
202) Kyrio Kalinov,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p. 62.
203) 유문화(편),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 민주조선사, 1949, p. 237 ; 볼코고노프,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스탈린』 세경사, 1993, pp. 365-369.
204)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68회 회의 의사록』(1949. 3. 18),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15 ; 『스탈린동지와 해결해야 할 김일성의 질문』(수기로 기록), 같은 자료 제3권, p. 11.
205) 『모스크바의 새증언』(1), 『서울신문』 1995. 5. 15일자.
206) 『스탈린·김일성회담 속기록』(1949. 3. 5),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6-12.
207) 『김일성-불가닌회담록』(1949. 3. 12),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사본).
208) 『김일성·스탈린 회담 속기록』(1949. 3. 5),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8-11.
209)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1949, pp. 339-342.
210)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49. 5. 15),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19-22.
211) 『코발료프가 필리포프에게』(1949. 5. 18),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20-21.
212) 『스티코프의 보고』(1949. 8. 12),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10-11 ; 『툰킨의 전보』(1949. 9. 14), 같은 자료 제3권, pp. 31-32.
213) 『주한소련대사에게 보내는 지시』, 같은 자료 제3권, pp. 51-52.
214) 『스티코프 보고』,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4,
215) 『툰킨의 보고』(1949. 9. 12),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32.
216) 『모스크바가 스티코프에게』,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51-53.
217) 『스티코프의 보고』(1949. 8. 12),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10-11 ; 『툰킨의 전보』(1949. 9. 14), 같은 자료 제3권, pp. 31-32.

218) 『툰킨의 전보』(1949. 9. 14), 같은 자료 제3권, pp. 31-32.
219) 『주한소련대사에게 보내는 지시』, 같은 자료 제3권, pp. 51-52.
220) 『스티코프 보고』,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4.
221) 『툰킨의 보고』(1949. 9. 12),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32.
222) 『소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1949. 9. 24),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50-52.
223) Richard G Hewlett & Francis Duncan, *A History of US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9), pp. 362-363.
224) 『모스크바가 스티코프』(1949. 10. 26),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4 ;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1949. 11. 20),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7.
225) 『그로미코가 스티코프에게』(1949. 11. 20),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7.
226) 『모스크바 새 증언』(1), 『서울신문』, 1995. 5. 15일.
227) 국방군사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p. 93.
228)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 1. 19),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60-62.
229) 『스티코프의 보고』(1950. 2. 7), 위의 자료 제4권, pp. 46-48 ;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같은 자료, p. 49.
230)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の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pp. 212-232.
231)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9, pp. 23-24.
232) 『주중대사 로신이 필로포프에게』(1950. 5. 13),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70.
233) 『필로포프가 모택동에게』(1950. 5. 14),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72.
234) 『주중대사 로신이 스탈린에게』(1950. 5. 15),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24-27.
235) 소련 군사고문단은 1948년에는 북한군 각 사단에 150여 명씩 총 3,000명 정도가 있었으며, 1949년에는 각 사단에 20여명으로 감소되고 1950년에 들어 각 사단 3-8명 정도가 잔류하고 있었다.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USGPO, 1961, p. 114. 1950. 3. 1일 현대 북한군에 배속된 소군사고문단의 총수는 239명이었으나 148명만이 북한에 잔류해 있었다. 『동아일보』 1995. 6. 20.
236) 『스티코프가 바실리에프에게』(1950. 2. 23), 같은 자료, p. 48.
237) 『스티코프가 핀시에게』(1950. 7. 4), 같은 자료 제3권, pp. 76-78 ;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0. 7. 8), 같은 자료 제4권, p. 50. 이들은 1950. 3. 1일 현재 총 148명 외 2개월 내에 추가 입북되었다.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정문사, 2002, p. 415.
238) 『주중대사 로신 보고』(1950. 5. 15),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6 ;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50. 6. 21),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 전략문제연구소(역), 볼고코노프, 『스탈린』, 세경사, 1993, pp. 372-373.
239)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Staff : 1978), 국방부 전편위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1990, pp. 44-45.
240)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9-12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1.
241)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4.
242)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 『핀시가 평양대사에게』(1950. 6), 같은 자료 제3권, p. 73.
243) 해리 S 트루만(손세일역),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지문각, 1968, 72쪽, 91쪽 ; 이완범, 『중국군의 참전 이전 미중관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415-416.
244)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p. 63, p. 70.
245) 『모택동 선집』 3,북경: 1970, p. 119.
246) 중국인민해방군총부, 『제1호 공보』, 『동북조선인민보』 1949. 7. 17 ; 존 킹 페어뱅크(중국사연구회

역), 『신중국사』, 까치, 1994, p. 431 ; 廖蓋隆(정석태역), 『중국공산당사』, 녹두, 1993, p. 220.
247)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p. 63, p. 70.
248) 이완범, 앞의 논문, pp. 418-419; 브루노쇼편, 『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 2, 석탑, 1986, p. 302.
249)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88, p. 238.
250) 리희일·서명훈 주편, 『조선의용군 3지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p. 13.
251) 김우전, 『김구 주석의 남북협상과 통일론』, 고구려, 1999, p. 116.
252) 존 킹 페어뱅크(중국사연구회역), 『신중국사』, 까치, 1994, p. 429.
253) 于星, 『非戰之罪!』 1948. 12. 26, 『동란의 중국』, 삼일서원, 1949. 1, pp. 2-3, p. 15 ; 『시련과 희망의 세월』 하, p. 89.
254) 존 킹 페어뱅크(중국사연구회역), 『신중국사』, pp. 429-435.
255) 『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 2, p. 342 ; 리희일·서명훈 주편, 앞의 책, p. 17 ; 廖蓋隆, 앞의 책, pp. 237-258 ; 『기념책』, 중국인민해방군중남군구겸 제4야전군증, 1950, 『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p. 120.
256) 『자유신문』 1949. 7. 5 ; 송종환,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목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39-2, 1999. 12, p. 196.
257) 于星, 『동란의 중국』, 삼일서원, 1949. 1, pp. 77-79 ; 『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 2, p. 342.
258) 『동북조선인민보』 1949. 9. 22, 10. 16 ; 廖蓋隆, 앞의 책, pp. 259-261.
259) 김순규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국방군사연구소, 1994, pp. 89-90.
260) 황병무, 『중공의 역할』, 『한국전쟁사』 2, 전쟁기념사업회, 1990, p. 370 ; 이완범, 앞의 논문, pp. 426-427.
261) 『부산일보』 1949. 10. 5.
262) 『조선일보』 1949. 10. 16.
26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오규열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3-6.
264) 1951년 5월, 무력으로 티벳을 점령하였다(『중국혁명과 모택동 사상』 2, p. 324).
265) 황병무, 앞의 글, p. 358.
266) 서상문, 『한국전쟁과 대만 '안전'의 상관성 검토』, 미발표 논문, 2004. 5.
267) 『新中國的外交』 1949. 11. 8, 『周恩來 外交文選』, 北京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0, p. 1; 황병무, 앞의 글, pp. 372-375 ; S. 슈람(김동식역), 『모택동』, 두레, 1979, p. 240.
268) 박두복, 앞의 논문, pp. 174-175 ;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1, 2002. 5, p. 229, p. 244.
269) 『서울신문』 1950. 3. 1 ; 윌리엄 스툭(김형인 외역),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2001, pp. 73-75.
270) 박인휘, 『중국과 동북아 국제관계 : 중국의 대외정책분석과 지정학적 특성』, 『중소연구』 25-1, 2001, p. 64 ; 딕 윌슨(한영탁역), 『주은래』, 한길사, 1985, p. 237.
271) 『한성일보』, 『미국에서 대극동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 1950. 4. 11-12 ;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과 중국』, pp. 147-149.
272) 황병무, 앞의 글, p. 387, p. 391.
273)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 44.
274) 황병무, 앞의 글, p. 403.
275) 『평화일보』 1949. 4. 29 ; 『자유신문』 1949. 5. 2 ; 『조선일보』 1949. 10. 16.
276) 『李承晩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부 고문의 회담에 대한 앨리슨 동북아시아국장의 비망록』, *FRUS* 1950. 6. 19, pp. 107-109.

277) 염인호,『해방후 한국독립당의 중국관내지방에서의 광복군 확군운동』,『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p. 274 ; 한시준,『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 국민대한국학연구소,『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연구』, 2003. 5, p. 186.

278)『조선일보』 1948. 3. 5 ; 정병준, 앞의 논문, pp. 87-88 ; "G-2 Periodic Report" 12 June 1947,『주한미군정보일지』 4, p. 247.

279) 한용원,『창군』, 박영사, 1984, p. 84.

280) 리희일·서명훈 주편, 앞의 책, pp. 4-5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 1992, p. 157. 1945년 10월 초순, 의용군이 귀국을 하기 위해 안동현에 와서 대기하였다는 기억도 있다(한재덕,『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p. 142).

281) 중앙일보 특별취재반,『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 1992, pp. 157-159.

282) 한재덕,『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pp. 225-227.

283) 김광운,『전쟁 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36; 이종석,『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pp. 101-105.

284) 김중생, 앞의 책, pp. 121-135.

285) "Muccio to Secretary of State" Dec. 6, 1950, 130/319(군사편찬연구소 SN 272).

286)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pp. 121-135.

287) 리희일·서명훈 주편, 앞의 책, p. 13.

288) 于星,『동란의 중국』, 삼일서원, 1949. 1, p. 72 ; 무쵸,『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 美국무부에 상황보고』, *FRUS* 1949. 27, pp. 947-952.

289)『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FRUS* 1949. 3. 22, pp. 969-978.

290)『상해발 보도, 북조선에서의 소련의도 논평』,『조선일보』 1948. 3. 2; 백학순,『중국내전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한국과 국제정치』 10-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4 ; C. W. David Tsui,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e Uni. of Oxford, Ph. D. 1998, p. 43.

291) 김진경,『한국전쟁 직전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관계』,『전사』 3, 2001, p. 289 ; 와다 하루끼(서동만 역),『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pp. 40-42 ; 이종석, 앞의 책, p. 54 ; Chen Jian, *China's Roa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108-109.

292)『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 9. 15,『한국전쟁의 진실』, p. 66.

293)『동북조선인민보』 1949. 8. 30.

294)『동북조선인민보』 1949. 10. 12.

295) 廖蓋隆, 앞의 책, pp. 268-269.

296)『자유신문』 1949. 8. 11 ;『국도신문』 1949. 9. 9 ;『조병옥, 유엔한국대표, 유엔 제4차 총회에 한국정부의 서한을 전달』,『서울신문』 1949. 10. 2.

297)『동아일보』 1949. 5. 7 ;『경향신문』 1949. 10. 22.

298) 황병무, 앞의 글, p. 396 ;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1, 1967, pp. 689-690. 하얼빈 회담의 북한대표는 민족보위상 최용건, 포병사령관 김무정, 북조선노동당 중앙검찰위원장 방우용, 독립 제4사단장(중공군 제166사단) 방호산, 주란강 군구 독립 제3사단 수송사 단장 방덕경, 하얼빈보안여단정치위원 주덕해 등 6명이었고, 중공측 대표는 동북인민해방군 길림지구사령관 주보중, 동북정치위원회 주석 임풍, 중국공산당 동북국 정치위원 이입삼 등 5명과 소련군사대표단 전원(북한군 양성을 위한 북한주둔 소련군사사절단의 군사전문가)이 참석하였다. 이미 1948년 12월 중순, 모스크바에서 1949년 1월 하얼빈 군사작전을 논의하였고, 하얼빈 회의에서는 주보중, 임풍이 28,000명의 조선족 장병들을 1949년 9월 이전에 세 차례로 나누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담의 실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299) 그 제안은 북한군이 전투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련에서 권유한 것으로 주장한 경우도 있다(양규송, 『중국의 조선출병 시말』, 『현대 북한연구』 3-1,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0, p. 97).

300) C. W. David Tsui,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e Uni. of Oxford, Ph. D. 1998, pp. 41-42.

301) 『슈티코프 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 6. 22, 『한국전쟁의 진실』, pp. 31-32.

302) 『슈티코프 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 7. 13, 『한국전쟁의 진실』, p. 19.

303) 『애치슨 미국무장관이 북한의 무력증강 정보 등에 대하여 주한미특별대표부에 보낸 항공 우편』, *FRUS* 1949. 4. 13, pp. 987-988.

304) 『병사의 수첩』, 『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p. 90.

305) 와다 하루키, 『북조선』, 돌베개, 2002, p. 94.

306) 『기념책』, 중국인민해방군중남군구겸 제4야전군증, 1950, 『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p. 129.

307) 『국도신문』 1949. 9. 9.

308) 김순규역, 『중공군의 한국전쟁』, 국방군사연구소, 1994, p. 94.

309) 화이팅(채한국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전사편찬위원회, 1989, p. 65.

310) 『대대장 원용주 이력서』, 『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p. 92 ; GQ FEC, "Order of Battle Information, NKA," Aug. 20, 1951, 전사편찬위원회 사료 845, p. 43.

311)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명령 : 중공당원 전당을 위한 당문건 작성등기원 동원보장에 대하여』, 1950. 5. 17, 『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p. 131.

312) 장준익, 『북한군인민군대사』, 한국발전연구원, 1991, p. 470.

313) 王生榮主編, 『中國地緣戰略論』, 北京 : 國防大出版社, 2001, p. 79.

31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오규열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66.

315) 『조선인민대표단 박정애의 연설』, 『동북조선인민보』 1949. 10. 6.

316) 『툰킨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49. 9. 14, 『한국전쟁의 진실』, p. 53 ; 이병주, 『최신 구소련 비밀자료에 의한 한국전쟁 발발배경』, 군사편찬연구소, 『전사』 4, 2002. 6, 183면 ; 와다 하루키, 『북조선』, p. 94.

317) 양쿠이숭, 앞의 논문, p. 519 ; 王生榮主編, 앞의 책, pp. 159-160.

318) 『자유신문』 1949. 8. 11 ; 『조선중앙일보』 1949. 8. 16 ; 『무초 주한미대사가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진해회담의 경과』, *FRUS* 1949. 9. 19, pp. 1080-1084 ; 김학준, 앞의 책, pp. 601-602.

319)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0. 1. 19,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p. 44-45.

320) 심지화, 『소련과 한국전쟁』, 『현대북한연구』 3-1,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0, pp. 28-31; 이병주, 앞의 논문, pp. 188-189.

321) 『"미철군 후 남한 북침" 거짓정보 4차례 타전』, 『조선일보』 1993. 7. 28 ; 양규송, 『중국의 조선출병 시말』, pp. 103-105;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78-579.

322) Goncharov, *Uncertain Partner*, p. 153.

323) 양진삼, 앞의 논문, pp. 578-579.

324) Shu Guang Zhang, *op. cit.,* p. 45.

325) 황병무, 앞의 글, p. 361, p. 412 ; C. W. David Tsui, op. cit., pp. 136-140.

326) 화이팅(채한국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전사편찬위원회, 1989, p. 66.

제 3 장 북한군의 창설

제 1 절	광복 직후의 무장세력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제 3 절	군 창설 준비
제 4 절	군 창설과 확장

제 1 절 광복 직후의 무장세력

1. 치안대와 적위대

해방 직후 북한에는 치안유지를 자처하면서 자생적인 무장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즉, 민족주의 계열의 '자위대'(自衛隊),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치안대'(治安隊), 소련군 진주 후 각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결성 된 '적위대'(赤衛隊) 등 3계파의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자파의 세력 확장과 주도권 쟁탈을 벌여나갔다. 각 지역의 무장력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북한에 공산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무장력이 필요하다는 공산당의 기본 정책노선에 따라 무장조직에 착수하게 된다. 2년 6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소련의 지원과 지도로 대규모의 북한 정규군을 창설하였다.[1] 소련군은 친소세력을 위주로 치안을 담당하면서 38도선 경비임무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북한 무장병력의 정비와 무기, 훈련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등의 빨치산파는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군대 장악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정권과 국경을 유지한다는 임무외에 정권장악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계의 주요 기반이었으며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

소련 군정이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조만식(曺晩植)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북한 지방에서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사회 질서와 치안 확보를 위하여 자위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현준혁(玄俊赫)을 비롯한 국내 공산주의자들도 소련군에 호응하여 공산당의 조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민족진영의 활동은 해방 초기부터 좌익계인 치안대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련군정의 직접적인 방해 공작에 부딪치게 되었다. 무장단체들은 서로 대립하여 주도권 쟁탈을 야기하는 등 정국은 극도로 혼란해졌다.

소련 군정은 자생 무장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金日成)이 소련에서 각 도청 소재지마다 적위대를 편성하여 무장조직을 확대시키면서 소련군정을 대리하여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3] 이들은 소련군 정치사령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경찰관서를 접수하여 일본 경찰의 무기를 소지하고, 각 도·시·군·면·리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우익계의 활동에 압력을 가하여 짧은 기간 안에 북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적위대는 소련군 정치사령부의 지시아래 소련파 공산세력을 확대하자 모든 민족주의 우익세력은 약화되어 갔다.

김일성 등 빨치산파는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국내 공산주의자들보다도 소련에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그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시절 제1극동전선군 사령관 메레츠코프(Meretskov, M.A.), 군사위원 스티코프(Shtykov, T.F.)와 자주 만났으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나 집단군 레베제프(Nikolai. G. Lebedev)와도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김일성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 쥬다노프와의 토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지이다. 소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조선문제가 조선인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4]

소련군사령부는 소련군이 점령한 38도선 이북지역에 새로운 당 중앙 지도기관과 정규군을 구성하여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에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김일성 등 빨치산파들이 '공산주의의 핵심'을 자처하며 급부상 하였다. 그들은 해방 직후 북한사회에 등장하였던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한 단체이었다.

국내파 세력은 1945년 9월 28일 현준혁이 적위대원에게 암살되면서 급격히 약화되었다. 소련 정치사령부의 조종과 국내파 공산당 지도자 장시우(張時雨)의 사

주를 받은 적위대원에 의해 피살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공산당을 조직하는 한편 민족진영과 합작하여 조만식을 지도자로 추대하였고 자신은 배후로 물러나 있는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일성 일파가 입국하기 전에까지 그의 국내 지지기반은 비교적 큰 편이었다.

당시 현준혁의 정세인식은 다음의 성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지식과 능력이 없는 노동자나 빈농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건국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민족문제 해결과 독립국가 건설에 유용한 식견과 경륜을 가진 인사들에 의하여 계급과 당파를 초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다음 단계에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5]

현준혁은 초당파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혼란된 북한정국을 바로 잡고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는 현준혁의 대중적인 인기가 소련 군정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의 주변의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기도하였다. 즉, 그에게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지명도가 있는 김용범(金容範)·장시우(張時雨)·박정애(朴正愛)·최경덕(崔璟德)·이주연(李周淵)·장종식(張鍾植) 등을 분리시켜 김일성에게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김일성과 연결된 국내파들은 현준혁 살해를 모의하였고 당시 평안남도 사법국장 장시우 수하의 적위대원으로 하여금 그를 암살토록 한 것이다.[6] 1945년 9월 28일 그는 조만식과 함께 소련 점령군 정치사령관인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 소장을 만나고 같은 차로 돌아오는 도중, 평양 시청앞 백주 대로상에서 적위대에 의해 저격당하여 조만식의 가슴에 안긴 채 목숨을 거두었다.[7] 이로써 국내파 공산주의자들과 치안대는 김일성과 함께 입북한 소련파에 흡수되거나 약화되고 말았다.

한편 해방직후 북한에는 김두봉(金枓奉)을 비롯한 중국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출신들이 9월 중순경 입북(入北)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중국 연안(延安)에서 입북

한 김두봉은 자기 수하의 조선의용군(중공군에 종군한 한인부대) 약 4,000명을 입북시키기 위해 신의주(新義州) 맞은편 안동(安東: 지금의 丹東)에 이들을 대기시켜 놓고 소련 군정 당국과 이들의 입국 교섭을 하였다. 이들 조선의용군은 당시 중공군 예하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었으며 중국 내 한인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이라는 정치결사대를 조직하고 모택동(毛澤東)의 비호를 받으면서 중국 연안에 그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은 군정학교를 설립하여 정치군사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간도(間島)와 남북 만주(滿洲) 일대에 공작원을 보내 모병과 아울러 지하조직에 착수하고 있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중국공산당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들과 협의하였고 결과적으로 김두봉(金枓奉)·최창익(崔昌益)·무정(武亭)·김창만(金昌滿)·윤공흠(尹公欽) 등이 입북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공 당국은 일본군과의 항일전투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한인 간부들을 기간으로 하는 조선의용군의 조직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성격을 띤 무장 세력이었다.

이들은 소련군사령부의 보류로 입북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로 동년 11월 중순 소련군 제25군 참모장 밴꼬프스키 중장의 입국허가를 통해 입북하게 되었다. 그는 평안북도 위수사령관과 정치사령관 그라꼬프 대령에게 "조선의용군을 입국시키되 신의주(新義州)에서 한 걸음도 더 남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강 당일 무장해제 시켜라"고 지시를 하달하였다. 정치사령관 그라꼬프 대령은 공산당 평북도당 제1비서실에서 김일성 일파인 김일(金一), 이희준(李熙俊) 등과 더불어 조선의용군 무장해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는 이미 국내파는 소련파에게 실권을 완전히 빼앗긴 뒤였고 소련파 김일성 일당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입북한 조선의용군은 공산당 평북도당이 지정하는 신의주 중학교에 숙소를 정하고 각계각층의 환영도 받았으나 그날 밤 평안북도 보안부장 한웅이 지휘하는 보안대에 의해 기습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다시 안동으로 축출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련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을 장악하게 하여 그들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전 정치공작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김일성은 단시일 내에 국내파 연안파를 각기 흡수하여 소련파가 적위대의 무장조직으로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2. 보안대와 철도보안대

북한주둔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은 1945년 10월 12일 북한의 사설 무장단체인 치안대와 적위대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하고 그들이 무장했던 일제 병기와 군용물자는 소련 위수사령부에 압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 사령부에서는 동년 11월초에 새로이 제한된 병력의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즉, 치스챠코프 대장은 김일성을 위시한 소련파를 위해 국내 각종 무장세력의 해산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소지한 무기를 전부 반납할 것을 아래와 같은 요지의 명령으로 하달하였다.

① 북조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부대를 해산시킬 것
② 모든 무기, 탄약 및 군수물자를 소련군 위수사령부에 바칠 것
③ 평민 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도민위원회는 소련군 사령부와 협의 하에 지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함.[9]

동 명령의 목적은 소련군이 새로운 강력한 중앙 지도기관을 수립하고 지방의 분권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첫 조치로써 군사조직부터 정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소련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전후하여 '한반도내 우호적인 국가 수립'이라는 기본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즉 소련은 한반도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되어서는 안되며 장차 수립될 정부는 소련에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목표였다.[10]

이를 통해 김일성을 등장시키고 기타 우호 세력을 흡수한 후에 보안대를 조직

하여 북한에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기도했다. 이 명령에 따라 치안대, 자위대, 적위대가 모두 해산되었고 대신 새로운 군사조직의 보안대가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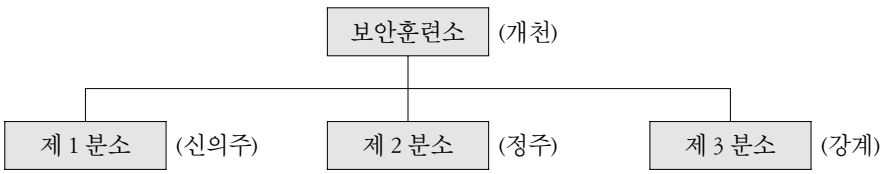
보안대는 1945년 10월 21일 진남포(鎭南浦)에서 2천명을 선발하여 창설되었고 각 도에서도 '도 보안대'가 조직되었다. 보안대는 초기 국내치안용 무장 세력으로써 후에 북한의 정규 무장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11]

이를 시작으로 1946년 초까지 북한 6개 도(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에 '도보안대'가 설치되었고 이들이 치안과 시설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각 도의 도 보안대가 창설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충과 훈련 문제가 제기되어 동년 6월에는 '보안훈련소'를 개천(价川)에 설치하였다. 이어 신의주(新義州)에 '보안훈련소 제1분소', 정주에 '보안훈련소 제2분소', 강계(江界)에 '보안훈련소 제3분소'를 각각 설치하여 보안대원의 모집·훈련을 실시하였다. 보안대는 국내치안용 무장력으로 운용되었으며 후에 북한군과 더불어 군사력의 근간을 이루는 부대의 하나로 성장해 갔다.[12]

신설된 각 분소에서는 각 지방 청년들을 입소시켜서 보안대원과 철도경비원을 육성하였는데 당시 훈련과정은 미약한 것이었으며 장비도 일본제 99식 소총뿐이었다. 초기에는 2주간의 일본식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훈련이 끝나면 각 지방의 보안서와 각 역의 '철도경비대'(鐵道警備隊)로 배속되었다. 이러한 훈련과정에 의하여 다수의 병력이 양성 배출되었다.

보안대 요원을 일반민으로 선발한 것은 노동자, 빈농 그리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뜻한 것으로 곧 공산주의자만으로

<표 3-1> 보안훈련소



무장 세력을 조직하겠다는 소련 군정당국의 계산된 조치였다. 또 소련 군정당국은 그들이 신임할 수 있는 자들을 보안기관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다시 소련계 한인 또는 소련 비밀경찰의 북한지부를 통해 감시하였다.[13]

이와 같이 해방직후 북한의 무장 세력들은 시초에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등장하였으며 정권장악을 위한 도구로서 편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부가 계획한대로 김일성을 위시한 소위 '항일유격대' 출신들이 정권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14]

한편 소련 군정장관과 김일성은 국민당 군대에 대한 대비와 수풍발전소 시설 보호, 그리고 신의주 등지에서의 반동분자들의 책동 방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대만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1945년 11월 27일 이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15] 당시 이를 추진하던 인물은 당 조직부장으로서 항일유격대 출신 정치위원 김일(金一)이었다.

그리하여 북조선 분국 제5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보안부대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에 의거하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한만국경과 38도선, 그리고 철도 등의 경비를 위한 보안대 창설을 추진하였다.[16] 따라서 1946년 1월 11일 장차 정규군으로 전환시킬 목적 아래 본부를 평양에 둔 각 도별 철도보안대가 창설되었다. 이들은 철도·터널·역 등의 경비를 전담하였으며, 일본제 99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철도보안대 간부들은 소련군 출신인 한경수(韓景洙)·박우섭(朴禹燮)·박영순(朴英順)·김문섭(金文燮)·전문욱(全文郁)·김창봉(金昌鳳)·최창덕(崔昌德)·안영(安英) 등과 연안 출신 주연(朱然)·유용구(劉龍九)·조소향(趙小鄕)·백낙칠(白樂七)·김만영(金萬永) 등 항일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철도보안대의 지도체계는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직속하여 각 도에도 보안국을 두고, 군에 군 보안서, 면에 보안지서를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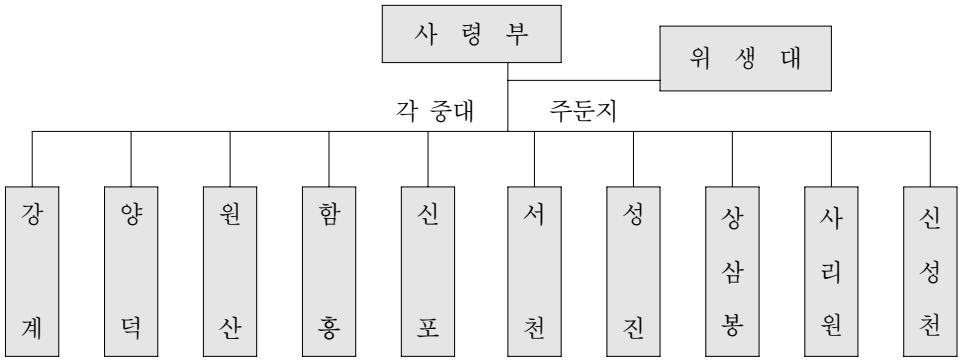
이들이 철도보안대를 창설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먼저 치안 및 경비 목적으로 창설된 보안대가 전국에 산재된 철도 시설과 교량, 터널 등을 담당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북한 인민의 사유 및 공유 재산은 소련군 당국의 보호 아래 둔다"는 포고문과는 달리 일본군에 대한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압록강 수풍발전소의 발전기를 비롯하여 각 주요 공장시설 등을 소련으로 운반해 갔고, 이런 시설물을 소련 극동지방으로 운반해 가기 위해서는 주로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 경비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7]

철도보안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병력과 기구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동년 7월 13일에는 각도에 설치된 철도보안대를 통합하여 '북조선 철도경비대'로 개편하였다. 이때에 신규로 증편된 북조선 철도경비대 예하부대의 분포 상황을 보면 사령부는 평양에 위치하고 강계(江界)·양덕(楊德)·원산(元山)·함흥(咸興)·신포(新浦)·단천(端川)·성진(城津)·상삼봉(上三峰)·사리원(沙里院)·신성천(新成川) 등지에는 각각 1개 중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철도경비대는 사령부를 평양 역전에 설치하고 예하에 13개 중대를 편성하여 북한 전역의 주요 도시의 철도, 교량, 터널 등을 경비하는 한편, 정규군 편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남(羅南)과 개천(价川)에 각각 '철도경비대 훈련소'를 설치하고 대규모로 대원을 모집하여 충원시켰다.[18]

<표 3-2> 철도경비대 편제표



이와 같이 동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 제3소가 평양에 위치한 철도경비사령부내에서 발족하여 동 철도경비사령부를 흡수하고 예하 13개 중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철도경비사령부의 병력과 장비는 보안대와 무장 세력에 비하여 우수한 편이었으며, 북한은 철도경비사령부를 훈련소로 개편하여 신병양성에 주력하였다.

이렇듯 김일성 일파는 소련 군정의 지원 아래 정규군 창설 이전의 무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국 산하에 보안대와 철도경비대를 설치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경찰수준의 보안대 창설에 머문 이유는 미·소 합의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이전까지 정규군대를 창설할 수 없었던 상황에 고려한 것이었다. 북조선 철도경비대는 그 후 1946년 8월 15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예속하게 된다.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1. 평양학원

북한군의 초기 간부양성은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북한은 정규군의 건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군과 정치 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의 창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김일성대학 전신인 평양학원이 1946년 2월 23일 정식으로 개교하였고, 그 1기생들이 이미 1월 3일에 입교하여 개교식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19] 이 학원은 진남포(鎭南浦) 동쪽에 일제시 소화전공(昭和電工)회사가 있었던 곳인 도학리(島鶴里)에서 위치하여 강의실, 훈련장,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평양학원의 설립 목적은 김일성, 김책 등 빨치산파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제반 민주기지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것은 개교식에서 김일성은 현대적 정규군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부가 필요하므로 학원을 창설하고 여기에 "정규무력의 핵심 골간이 될 군사 정치 간부들을 많이 키우라"고 지시한데서도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20]

이리하여 북한의 정당 정치기관 민중단체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선발된 600여명으로 출발하였고, 이와 함께 군 간부의 양성과 계열 및 출신을 달리하는 소위 당·군·정 간부들에 대한 통일적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였다. 교과과정은 국제정치, 조선문제, 당군정, 공작, 체조 등이었고 이 학원의 교육방침은 이론을 실천에 연계시키고 배우는 것을 실행에 연계시키자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중심구호가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자"라고 한데서도 그 설치

목적이 정치 간부 양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학원의 초대 원장에는 김책, 부원장겸 교무주임에는 기석복(奇石福, 소련 타슈겐트주 중학교사 출신), 참모장에 김동수(소련 출신)를 임명하여 처음에는 4개월 코스의 단기과정 교육부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명예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창설 작업에 김일성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고 항일유격대출신 안길(安吉)과 정치부교장 조정철, 교무주임 심태산, 김증동 등 30여명이 주동이 되었다.

그 외 김일성의 부관인 주도일도 평양학원 간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에 지휘성원으로 차출되었다. 군의였던 류한종은 1940년대 초 항일유격대에서 의료를 담당했던 자로 해방 후 김일성과 다시 만나 평양학원에서 일하였다. 최용건(崔庸健)은 북만유격대 출신으로 평양학원의 기틀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뒷날 수산상과 부수상을 역임하였다. 평양학원 당 단체는 당 중앙본부에 직속하였다. 평양학원에서 당증 수여사업을 위해 구성된 반심사위원회는 기석복 외에 위원으로 조정철과 전창철 등 항일유격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1]

특히 평양학원은 북한군 건설의 기초 작업으로 1945년 11월 17일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다. 김일성은 동년 12월 26일 직접 평양학원 건설장을 방문하고 각 도당에 파견했던 항일유격대집단을 통해 이른바 '혁명가 유자녀'들과 노동자 농민의 자녀 및 청년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원에 보낼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22]

평양학원은 개인에의 충성을 기준으로 맺어진 항일유격대집단이라는 조직에 의해 육성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절대 지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평양학원은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 출신들이 장악하고 그들 세력의 확장을 위한 저변확보를 위해 각 지방을 돌면서 각 인민위원회에서 핵심 분자들을 선발하여 입교시키고 소련군출신 한인 교관들이 정치교육을 군사훈련과 병행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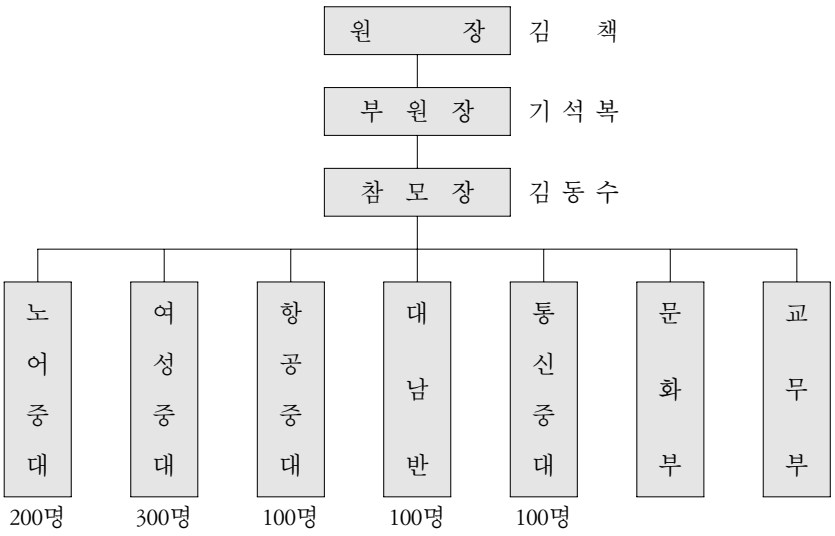
평양학원의 교육은 소련군 출신 한인과 소련군 교관에 의하여 노어를 비롯하여 정치학, 공산당사, 소련군 군사교리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군사교육보다는 정치 사상교육에 정점을 둔 정치군사학교라 할 수 있다. 군사훈련에 있어서는 신체단련, 사격술, 소련군 군사교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치 분야에서

는 정치학 노어·공산당사 등을 교육하되 사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들은 해방직후에 각지에서 입북한 군 출신들을 입교시켜 단기적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정치교육을 하여 사상통일에 주력하였고 이들을 보안간부와 당 간부 및 각급 임시인민위원회간부, 각 양성기관의 교관 등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북한군의 창설 대행자로서 육성하였다. 1946년 6월초 단기교육을 마친 이들의 일부는 군 간부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북조선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부는 철도경비대의 간부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일부는 개천(价川), 나남(羅南), 평양(平壤)에 위치한 보안훈련소에 배치되어 북한군 전신인 보안대원 양성에 진력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단기교육과 병행하여 정규과정으로서의 장기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당시 각 기관의 간부들을 순차적으로 입교시켜 단기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통일은 물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제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평양학원의 초기편성을 보면 노어중대, 통신중대, 항공중대, 여성

<표 3-3> 평양학원 편성



중대와 대남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관들은 주로 소련군 출신 한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간부양성 기관의 교관 등으로 배치되어 북한 정부기관에 핵심 분자로서 등용되었다.[23] 이러한 교육내용의 편성은 단순히 군 간부를 양성한다기보다는 북한 공산체제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빨치산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분야별 핵심요원의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장차 이러한 요원을 양산하기 위한 각급 학교와 기관을 증설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46년 6월 26일 15개월 코스의 정규과정을 신설하여 정규과정 제1기생 800여명을 선발하여 입교시켰다.[24] 이들은 노어중대 200명, 통신중대 100명, 항공중대 100명, 여성중대 300명 그리고 대남반 100명으로서 도합 8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선발된 20명은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극동군관학교에 파견하여 소련 군사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은 1947년 10월 26일에 졸업[25]하였다.

졸업생들은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노어중대 출신은 소련고문관들의 통역관과 각 군 조직에서 정치부를 담당하였고 통신중대 출신은 통신기술 및 시설 등을 담당하였다.[26] 항공중대 출신은 비행기 조종과 정비교육을 받은 후 북한군 공군 창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담당하였다. 여성중대는 정치교육만을 하였으며 당과 각 지방 인민위원회 및 여성단체에 등용될 여성 간부들을 육성하여 배치하는데 주력하였다.

대남반은 주로 남한출신인 남로당원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정치교육과 유격전술을 훈련하여 대남간첩과 유격대원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후 1949년 초에 표문이, 육남오, 강철 등 남로당원이 주동이 되어 유격대 양성학교인 '강동정치학원'을 신설하였다. 동 학원은 남한에서 입북한 남로당원들을 입학시켜 남한에 대한 적화공작 방책과 유격 훈련을 6개월간 실시한 다음 남한에 다시 침투시켜 입산공비와 합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무려 10차에 걸쳐 총원 2,385명을 양성하여 남파하였다.

그 후 평양학원의 일부인 대남반(對南班)은 강동정치학원으로 흡수되었으며 항

공중대는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이동하여 북한 공군의 모체가 되었다. 평양학원은 1949년 1월 북한군 제2군관학교로 개칭하여 평양 만경대로 이전하였다. 만경대는 김일성의 출생지이며 소위 '혁명군' 유가족 자녀들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만경대(萬鏡臺) 학원'을 세운 곳이다.

그들은 제2군관학교로 발족하면서 주로 정치군관 양성을 위한 군사부 훈련과 정치부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정치부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의 정치사상과 민족해방사,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사 등을 교육하였으며 군사부에서는 분대에서 대대에 이르는 전술훈련과 지휘관훈련 등을 실시하여 소위 문화부 정치군관을 양성하였다.

제2군관학교를 졸업한 군관들은 인민집단군사령부 인사처로부터 보직을 받았다. 그들은 주로 개천과 나남 훈련소 등에 많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문화부 대대장, 중대장으로 보직되었으며 각 부대 내에서 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대내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숙청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은 1948년 초까지 제1, 2기생을 배출했으며 '제2군관학교'로 개칭된 후 1950년 6월 남침직전까지 제3, 제4, 제5기생을 배출하여 총 2천 5백명을 양성하였다. 평양학원의 제2대 교장에는 안길이 취임하였고 만경대로 이전하여 1949년 1월 제2군관학교로 개칭된 후 제3대 교장에는 기석복이 임명되어 남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평양학원은 미소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군대 양성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군대 성격을 띠지 않고 진남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교하였고, 학원이라는 명칭하에 비밀리에 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또한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유격대 출신들은 당시 정치적 실권 장악 문제로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으로 알력이 있을 때였으므로 이들을 전부 동 학원에 입교시켜 사상통일은 물론 지도체계까지 확립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창설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평양학원 출신들은 이후 북한군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인민군 창립 2주년 경축대회'에서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김일성 장군 빨치산부대에

서 일생을 반일유격투쟁을 바쳐 온 진정한 애국자, 혁명자들은 우리 인민군대 창건의 골간으로 되었으며 그들의 고귀한 혁명전통과 투쟁경험과 애국정신은 인민군대 창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김일성은 '김일성정치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창립 30돌에 즈음하여'라는 연설에서 평양학원이 북한에 있어 최초의 정규 군사정치학교라고 하였다.

또한 평양학원은 "정규의 혁명무력 창건을 위한 당의 독창적 건군사상과 (중략)새로운 군사정치 간부로 훌륭히 육성함으로써 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적시에 창건하였다"라고 밝힌 것을 통해 볼 때 평양학원은 창군의 간부들을 양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이 형성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27]

2.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북한은 정치 간부 양성기관으로 평양학원을 발족시킨 후 5개월여만인 1946년 7월 8일 '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서군(江西郡) 성암면(城岩面) 대안리(大安里) 지역의 대안전기공장 합숙시설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였다.[28] 이는 평양학원 군사반과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합하여 군 초급간부(소대장) 양성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29]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보병, 포병, 통신병, 공병을 비롯한 여러 병종의 지휘관들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창설하였으며 북한 정규군 건설에 속도를 더해 주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직계인 항일유격대 출신 손종준, 최병열, 김준동, 박승철 등, 중국 연안파 출신 박효삼(朴孝三), 김강 등 30여명, 그리고 평양학원 단기과정 출신 10여명이 주축이 되었다. 이어 8월 10일에는 김일성·김책·안길·강건(姜健)·최용건·최충국(崔忠國)·박영순(朴英順)·오백룡(吳白龍)·무정·박일우(朴一禹)·주연(朱然) 등이 회합하여 군 창건 준비를 결정하였다. 이 학교의 정치부 교장과 교무부장 등 핵심적인 자리에 모두 항일유격대 출신을 임명하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정규무력 건설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동무들을 우선 무력건설 부문에 많이 보냈다”고 하였다.[30]

이때 학교 편성은 학교장 아래 군사 및 정치 부교장 그리고 전술, 포병, 사격, 통신의 4개 학부를 두었다. 학교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 부교장은 김웅, 군사부교장은 최용진이 보임되었다.[31] 전술학부장에는 박성철(소련군 출신), 포병학부장은 전학준(소련군 출신), 사격학부장은 박길남(소련군 출신), 통신학부장은 이종인(소련군 출신) 등이 각각 임명되었고 그외 지휘관으로 이두익, 최병열, 오찬복 등이 임명되었다. 소련군사고문은 스베레주크 소좌였다. 이때까지는 보병중대, 포병중대, 통신중대로 구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각 중대장들은 전부 소련군 출신 한인이었다.[32]

이 학교의 정원은 500명이었고 수업기한은 12개월이었다. 입학자격은 각급 인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체 건강한 30세 이하의 자로서 중등학교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였다. 학생모집은 무정, 최용건, 김책, 김웅, 장종식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학과 공부는 7월 20일 시작되었다. 교과과정은 소련 국방성 총정치국의 지시에 따라 25군 정치부가 작성했고 군사회의가 승인했으며 교원은 소련군사령부 소속인원 가운데 초빙하였다.[33]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프 대장의 구상대로 설립된 것이었다. 1946년 6월 12일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 대장은 스탈린에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활동을 결산 보고하며, 향후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결정 초안을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9항은 향후 창군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9항 연해주의 북한인 부대설립 제안을 채택할 것. 철도경비를 위한 철도경비여단, 만주와의 국경경비를 위한 국경경비사단, 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500명), 철도경비여단, 국경경비사단과 군관학교의 무장에 필요한 양의 무기를 북조선 인민위원회에게 판매할 것” 등이었다.[34]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프가 계획했던 원안대로 개교한 것이었다.

이 무렵 1946년 7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로 스탈린의 소환을 받았다. 이 회담기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 통역으로 배석한 샤브신 서울

부총영사는 회담의 요지와 분위기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북한지도부를 압도하는 스탈린의 절대 카리스마와 특유의 화법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샤브신의 기록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소련군이 얼마안가 조선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유지가 곤란하다고 스탈린이 지적하자, 북한대표들은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앞으로 도와주게 됩니까?"라고 크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스탈린은 흡족한 표정으로 "배워야죠. 러시아에 배우러 와도 좋소. 당신들이 더 많이 배우지 않으면 상어 밥이 될 수 있소"라고 하였다. (중략)
>
>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조선 공산당 관련문제이다. 스탈린은 질문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는 말을 아꼈으나 그 한마디가 천금과도 같은 무게를 지녔다. 당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북한동지들은 특히 간부양성, 신문과 잡지 발행, 의료분야에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스탈린은 묵묵히 집무실을 왔다 갔다가 일순간 멈칫하더니 "당신들에게는 이에 필요한 모든 토대가 있지 않소"라고 말했다. 그 토대라는 것이 바로 소련을 염두에 둔 말임을 다들 알고 있었다. 북한동지의 당 행동강령이 없다는 지적에 스탈린은 "도와주겠소"라고 말했다 (중략) 남한 정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스탈린은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한, 말로 안될 경우 힘으로라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 그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 또한 분명치 않았다. 하지만 누구 한사람 되물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샤브신은 전했다. (중략) 스탈린은 "조선공산당이 스스로 사회민주당 내지 노동당으로 선언하고 이에 상응한 과제를 제지해도 안될 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운을 뗐다. 북한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채 되지 않은 듯,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민들에게서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탈린은 내뱉듯 "인민은 무슨, 인민이야 흙이나 파는 거고, 결정은 우리가 내려야 하오"라고 했다.
>
> 요컨대, 스탈린은 북한지도부에게 소련군 철수 후에도 상어 밥이 되지 않으려면 소련을 토대로 열심히 소련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담의 분위기도 시사하는바 적지 않다. 스탈린은 말수가 적고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하나, 그가 가끔씩

던지는 한마디는 당시로선 정곡을 찌르며 되물어 확인할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지령이었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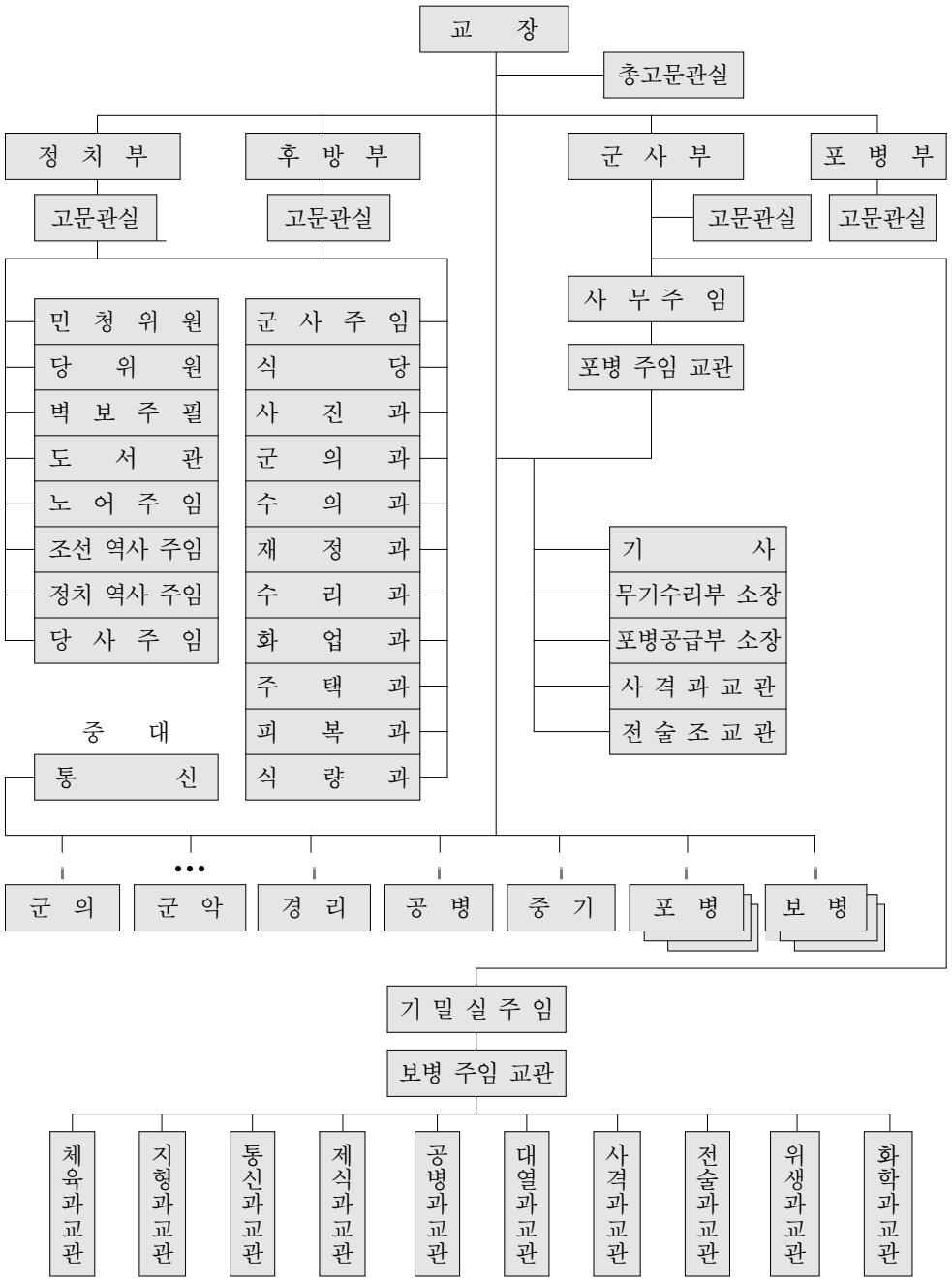
위와 같은 샤브신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앙보안간부학교는 스티코프가 계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구체화된 것이었다. 이 학교는 창설 후 4개월간은 이 곳에 보직된 교관들에 대한 교관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교육훈련 준비가 완료된 1946년 10월 22일 보안간부 제2기생 300명을 입교시켰는데, 이들은 각 지방의 보안대 및 인민위원회의 요원 중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엄선한 청년들로서 투철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제1기생의 학생은 3개 중대로 편성하였는데 제1중대는 보병중대, 제2중대는 포병중대로 각각 120명으로 구성되었고, 제3중대는 60명으로 구성한 통신중대였다.[36]

각 중대의 중·소대장은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었는데 교관도 겸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실시한 교육훈련 중 전술훈련은 소총소대로부터 연대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는데 높은 제대의 전술훈련은 소련 고문관의 지도를 받아 소련군 출신 교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제1기생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1947년 10월 26일 졸업하였는데 졸업시 대부분 본교의 교관 및 소대장(일부 우수자는 중대장)으로 잔류, 보직되었다.[37]

1947년 5월 27일 북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장병에게 일제히 계급장 수여식이 있은 후 이어서 인민집단군이 편성되어 군 체제로 개편되자, 동학교의 간부들은 인민집단군 사령부의 각 기관장으로 보직되고 그 후임으로는 제1기생 출신들이 소대장, 중대장, 교관 등에 임명되었다. 제1기생이 배출된 후, 동학교의 편제는 종합군관학교의 규모로 확장되어 위생중대, 경리중대, 통신중대가 각각 증편되었다.

1948년 12월 초순경, 규모가 확장되자 동학교는 해방 전 일본군 99부대 자리인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가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정식으로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는데 이미 이때는 북한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후였다.

<표 3-4>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제1군관학교) 편성



당시 확대된 편제를 보면 정치부, 후방부, 군사부, 포병부를 두고 동학교에는 소련군 고문관들이 배치되어 총 고문관 1명, 정치 고문관 1명, 보병 고문관 1명, 포병 고문관 1명, 지휘관 고문관 1명, 전술 고문관 1명, 도합 6명이 동학교 전반을 운영담당하고 있었다.

훈련과정은 소대, 중대, 대대와 연대 훈련에 이르는 전술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군관학교의 편제로 개편되면서 북한군에 필요한 각종 병과를 증설한 종합군관학교로서 보병과를 중심으로 포병, 공병, 중기병, 통신, 경리, 군의, 군악병과까지 양성하였다.

특히 포병부에서는 1949년 3월경에 소련제 122㎜ 포가 도입된 후부터는 본격적인 포술훈련이 실시되었다. 군관학교 포병시범훈련은 1949년 4월 22일에 실시되었는데 동 시범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각 상(장관)들과 소련고문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소련제 122㎜ 포 시범사격이 실시되었다.[38]

이 때 참관하던 김일성이 그들의 사격술을 격찬하면서 "이 122㎜ 포는 우리 인민군 사상 처음 쏘는 포다. 이 포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 포병 군관 동무들은 이 포의 사격술을 잘 배워서 보다 나은 포병군관이 되기 바란다"라는 격려사까지 아끼지 않았다. 소련고문관들과 각 상들도 그들의 사격술에 만족의 뜻을 표하면서 격려하였다.

이러한 시범사격은 비단 포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병과별로 졸업기를 앞두고 실시되어 그들의 실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1군관학교는 약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양적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실하게 성장되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이 북한군 확장시 주요 간부로 보직되었음은 물론이고 남침시 북한군 장교의 대부분이 이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제 3 절 군 창설 준비

1.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설치

소련군정 당국과 김일성 일파는 보안대와 철도경비대가 증편되고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훈련소 등에서 군 인력이 양성되자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할 것을 검토하였다.

1946년 7월과 8월, 2차에 걸쳐 김일성을 비롯한 최용건(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 김책, 강건, 안길, 오백용, 박영순 등 소련파와 무정, 박일우, 주연 등 연안파들이 한 곳에 모여 군사력 건설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그 결과, 군사력 건설과 유관한 부대들을 통합 지휘할 기구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고 해방 1주년이 되는 1946년 8월 15일 평양 서기산(瑞氣山) 무덕전(武德殿) 자리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였다. 이는 명칭상 보안간부훈련소의 지휘부인 것처럼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정규군대의 위장 명칭이자 북한군의 최고 참모부였다.[39] 이 때 훈련대대부(사령부)의 주요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훈련대대부 사령관	: 최용건
부사령관겸 문화 부사령관	: 김 일
포병 부사령관	: 무 정
총참모장	: 안 철
후방부사령관	: 최홍극
작전 부장	: 유 신
간부 부장	: 이 림
통신 부장	: 박영순(통신부 부부장 : 이청송)

공병 부장 : 황호림(공병부 부부장 : 박길남)
정찰 부장 : 최 원
사령관 총고문 : 스미르노프 소장[40]

이들은 당시 북한내 최고 실력자이자 군사 경험자들이었다. 그런데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주요 간부 가운데서도 항일유격대집단의 최용건, 김일(金一), 안길, 박영순 등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의 1947년 보고에 따르면,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은 김책이 주도했다고 하였다. 간부대대부의 최초편성은 대대부 본부와 경위대,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철도경비대, 보안훈련소를 예하에 두고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였다.

이후 김일성 등은 항일유격대집단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정규무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문화부소장에 서철(徐哲)을 임명하였으며, 1946년 초가을 중국 동부지방에서 최광을 소환해 참모장에 임명했다. 최광은 200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하여 함께 북한으로 귀환하였다.[41]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소장은 강건(姜健)이 맡았다. 1946년 9월에는 소련 군사고문단(스미르노프 소장)이 북한에 도착하여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의 임무는 군 장교들을 훈련시켜 정규군 편성을 촉진시키는데 있었다.[42]

김일성은 46년 10월 7일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간부훈련소가 “인민의 참다운 무장력이며 앞으로 건설될 인민군대의 핵심부대”라고 지적하면서 항일유격대집단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강조하였다.[43] 항일유격대집단은 김일성에게 충실한 정수분자만을 간부로 선발한 결과 보안대는 점차 항일유격대집단의 상설 무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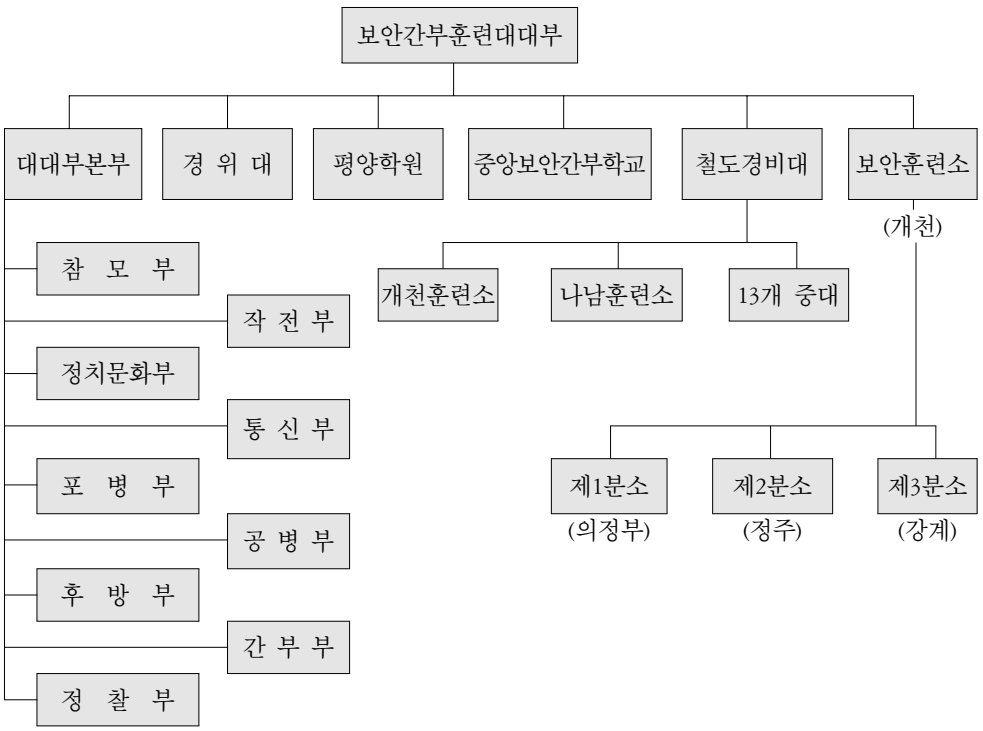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강계(江界)에 설치된 제3분소 최현은 훈련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강계군의 간부인선까지 전횡(專橫)하였지만 지방당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최현의 비서 장창호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장 탈영하여 월남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현은 아무런 책임추궁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진하였다. 사건의 책

임을 물어 강계(江界)군당 위원장 리동림이 해임당하고 군당상무위원회가 해체된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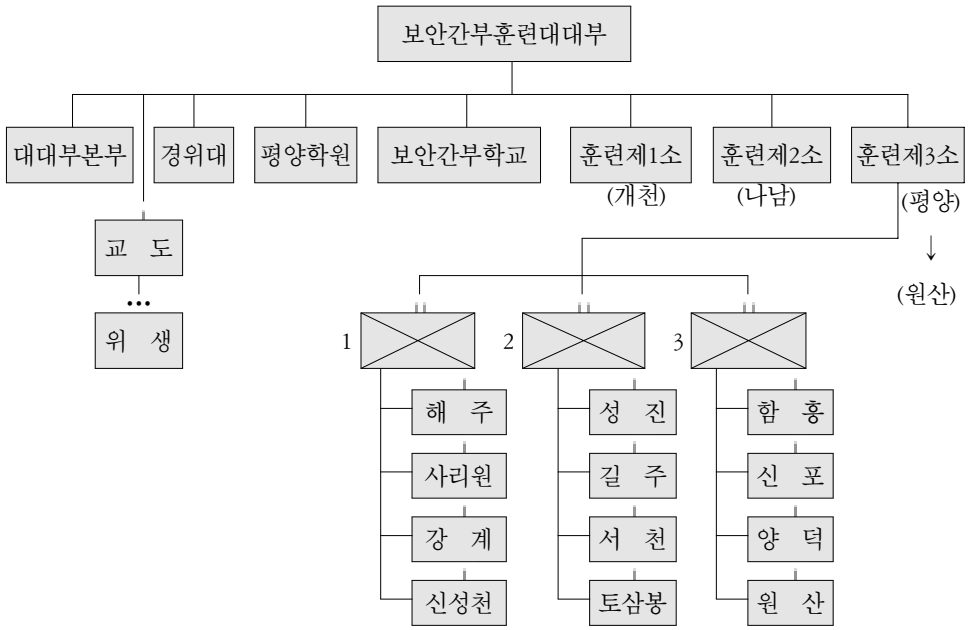
훈련대대부는 사령부 예하에 교도중대, 위생소대와 3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대대는 다시 4개 중대로 구분되어 해주, 사리원, 강계, 신성천, 성진, 길주, 서천, 상삼봉, 함흥, 심포, 양덕, 원산 등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편성을 완료한 후에는 우수한 병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간부양성기관에서는 더욱 충실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 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예하부대 중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는 몇 차례의 통합, 증·개편을 통해 정규사단의 모체로 변모해 갔다. 1946년 11월 10일에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를

<표 3-5>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8)



<표 3-6>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편성(194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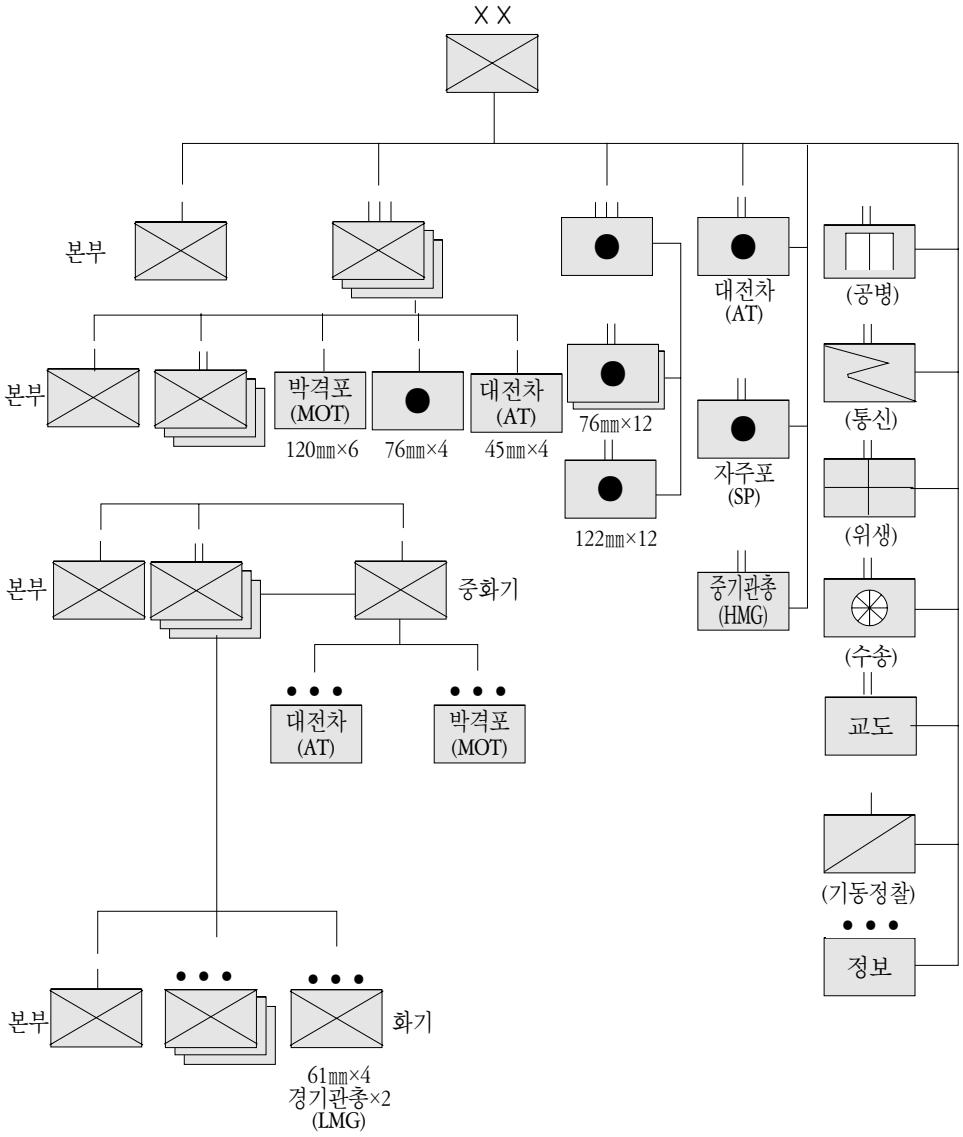


통합 개편하였는데, 개천에 있는 보안훈련소(제 1, 2, 3분소 포함)와 개천과 나남에 있는 철도경비훈련소를 통합하여 개천에 보안간부 훈련 제2소를 그리고 철도경비대를 해체 흡수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 제3소를 설치하여 철도경비 13개 중대는 3개 대대로 개편하여 훈련 제3소의 예하 부대로 되었다.[46]

당시 개천의 훈련 제1소를 개천사단 또는 제1사단, 나남의 훈련 제2소를 나남사단 또는 제2사단, 평양의 훈련 제3소는 철도경비사령부라고 호칭하였다. 1947년 3월 철도경비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었던 평양의 훈련 제3소는 해체되어 본부는 훈련대대부 사령부로 통합되고 예하의 3개 대대는 종래의 철도경비 임무를 각 도 보안대에 인계하고, 3개 훈련소에 분산 배속되었다.

즉, 제1대대는 훈련 제1소, 제2대대는 훈련 제2소, 제3대대는 훈련 제3소로 각각 배속 전환되었다. 그리고 해체된 평양의 훈련 제3소 대신으로 원산에 새로운 훈련제3소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신병훈련 기관인 3개의 훈련소가 모두 철도

<표 3-7> 북한군 보병사단 편제표



경비대를 주축으로 증·개편되었는데, 이 3개 훈련소는 북한 정규군건설의 중요한 모체가 된다.

이들 3개 훈련소와 제1, 2, 3대대의 부대배치를 보면 북한 전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분할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평양 개천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1소는 서부 지역인 해주, 사리원, 강계, 신성천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고, 함북 나남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2소는 동북부 지역인 성진, 길주, 서천 상삼봉에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함남 원산을 중심으로 한 훈련 제3소는 중동부 지역인 함흥, 신포, 양덕, 원산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3개 광역으로 분할 배치된 각 훈련소에서는 신병을 대량 모집, 훈련하여 이들 중대를 모체로 하여 하나씩 부대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 정규군 건설을 위한 출발인 것이다. 이 3개 훈련소는 얼마 후 각 지역별로 사단 및 여단으로 확장하게 된다. 최초 훈련병의 모집은 각 지역별로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지원병 형식으로 모집하다가 훈련병 소요가 증가되자 공산당원이나 민청요원 등을 집단적으로 훈련소에 입소시켰다.

이들에 대한 훈련은 최초에 일본군이 사용하던 38식 소총으로 장비시켜 제식훈련과 소총훈련을 위주로 하였으나. 그것도 소총이 부족하여 세 사람당 1정씩의 비율로 휴대하였으며, 기관총은 중대에 1정 정도가 배당될 정도로 빈약한 장비를 갖추어 훈련을 시작하였고, 복장은 북한에서 면사로 급조한 군복이었다.

1947년 1월 소련 당국과 북한당국(당시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사이에 무기인도에 대한 협정이 맺어져서 북한은 주로 농산물로 소련무기와 장비에 대한 대금을 치르게 되었다. 1947년 1월 군 장비를 실은 소련 화물선 2척이 진남포항에 입항하여 하역하였는데, 그 내용품들은 소련제 기관단총을 비롯한 소총과 경 및 중기관총, 그리고 각종 박격포였고, 소련군이 2차대전시 노획한 독일 군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1947년 4월까지에는 전차나 자주포 등의 중무장을 제외한 기본화기 및 장비들이 소련제로 구비되었으며 전반적인 무장수준은 소련군의 경보병사단에 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각종 소련제 무기들은 평양학원, 북조선보안간부학교, 각 훈련소, 각 대대에 보급되었다.[47]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하여금 북한군의 모체가 되도록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군의 창군이었으며 단일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훈련대대부는 군사시설을 점차 확충하면서 병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병행하였으며 각 훈련소들은 사단편성시 그 모체가 되었다. 대대부의 병력은 18세 이상 25세까지의 청년으로 모병하였으나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강제징집을 시행하여 민청원과 당원을 집단적으로 입소시켰다. 장비는 초기에는 일제 38식 소총으로 무장하였으나 점차 소련제 소총과 탄약을 확보하고 소련군 장교를 고문관으로 두어 조직적인 체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창군은 시간 문제였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부대는 개편과 통합을 몇 차례 거치며 정규군의 모체로 변모해 갔다. 보안간부훈련소가 신병을 대거 모집하여 각 지역별로 사단 및 여단으로 확장되면서 북한 정규군의 원형이 완성되었다.[48]

1946년 12월 25일 현재 북한의 경보병사단의 현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미 이 시점에 사단사령부 병력은 100% 충원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군관 충원비율은 총 정원 815명에서 146명의 결원을 보여 82.09%였다. 반면에 병사의 충

<표 3-8> 제1경보병사단 현황[49] (1946. 12. 25 현재)

부대명칭	군관			하사관			병사			총계			충원비율	말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정수	현재
사단사령부	71	71	–	24	24	–	63	63	–	158	158	–	100	6	6
1보병연대	170	138	32	620	178	442	1,734	650	1,084	2,524	966	1,558	38	190	182
2보병연대	170	134	36	620	180	440	1,734	729	1,005	2,524	1,043	1,481	41	190	182
3보병연대	170	134	36	620	175	445	1,734	754	980	2,524	1,043	1,461	42	190	183
포병연대	105	86	19	223	102	121	646	293	353	974	481	493	49	–	–
훈련대대	26	22	4	51	51	–	316	316	–	393	389	4	99	6	6
특수부대	103	84	19	202	104	98	555	248	307	860	436	424	51	20	14
총 계	815	669	146	2,360	814	1,546	6,782	3,053	3,729	9,957	4,536	5,421	46	602	573

<표 3-9> 제2경보병사단 현황[50] (1946. 12. 30 현재)

부대명칭	군관			하사관			병사			총계			충원비율	말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편제	실재	부족		정수	현재
4보병연대	170	155	15	620	235	385	1,734	1,129	605	2,524	1,519	1,005	60	190	47
5보병연대	170	163	7	620	267	353	1,734	723	1,011	2,524	1,153	1,371	46	190	185
6보병연대	170	165	5	620	78	542	1,734	521	1,213	2,524	764	1,760	30	190	183
포병연대	105	94	11	223	87	136	646	152	494	974	333	641	34	–	–
특수부대	200	171	29	227	121	106	1,134	382	752	1,561	674	887	43	32	31
사단총계	815	748	67	2,310	788	1,522	6,982	2,907	4,075	10,107	4,443	5,664	45	602	446

원비율은 총 정원 6,742명 가운데 3,053명만이 충원됨으로써 45.02%에 머물렀다. 여기서 병사 충원이 100% 완료된 훈련대대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42%로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래 병사를 집중 징모하여 부대를 확충하려는 조치였다.

제2경보병사단의 전체 군관보충비율은 815명중 748명으로 91.78%, 하사관 충원 비율은 2,310명중 788명으로 35.11%, 병사 충원비율은 6,982명중 2,907명으로 41.64%를 보였다. 군관의 충원비율이 92%에 이른 것은 향후 정식 군대 창설을 염두에 두고 오랜 기간 전문훈련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장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대대부의 창설 이후 증·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당시 북한에 산재된 무장부대들을 통합하여 훈련대대부라는 군사적 단일 지휘체제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일성 직계인 최용건, 안길, 김일(金一) 등으로 하여금 이 무장부대들을 장악하게 한 점이다.

둘째, 이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라는 위장 간판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남한과 미군을 의식하여 창군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셋째, 이 훈련대대부는 장차 북한군의 모체로 발전시킬 계획에 따라 정규군 편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소련군이 많은 무기와 군복을 때맞추어 보급하고, 소련 고문관을 각 군사학교와 훈련소에 배치한 사실은 장차 북한군 창설을 위해 소련군이 배후

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점이다.

1946년 8월 15일을 기하여 창설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막대한 병력증강과 군사시설의 확장을 완수하였으나 아직도 북한군에게는 정식계급이 없었다. 다만 군관(장교)과 전사(사병)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직책에 따른 상하 구별만 있었다. 여기서 그 때까지 소련군사령부에 의한 그 북한군 편성의 배후조종이 비로소 표면화되었고 그 후부터는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각 훈련소 및 간부양성기관, 사령부에 배치되어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게 되었다.

2. 인민집단군으로 개편

보안간부 훈련대대부의 창설과 거의 때를 같이 한 1946년 9월 소련 군사고문단이 북한에 도착하여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훈련과 간부교육을 지도하였다. 1947년 초에 소련의 무기와 군복을 북한으로 수송해 와서 훈련대대부 예하부대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소 대립이 심화되던 시기인 1947년 5월 17일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사령관 최용건)로 개편하였다.[51]

지금까지 위장간판을 사용해 오던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명칭을 인민집단군이라는 정규군의 명칭으로 바꾸고 정규군화한 데는 당시 남북한간의 정치적 정세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년 3월 20일~5월 8일)의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스탈린의 대 북한 공산화정책 등의 정략적 배경이 내재되어 있었다.

소련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부터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의 공백기(1946년 5월~1947년 5월) 동안 소련측이 기대하는 '민주임시정부' 수립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북한을 남한 공략의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보안간부 훈련대대

부를 설치하여 군사 지휘 기구를 일원화하고 1947년 초에는 북한에 장비를 대량 지원하는 등 군사력을 확장해 오면서 군사력의 실체를 위장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 군정당국은 '민주임시정부 수립'에 유리한 조건이 남한에서 조성되기보다는 오히려 불가능 쪽으로 기울어짐이 판단되자, 당초의 민주기지노선 정책방향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1947년 5월 17일에는 '인민집단군'이라는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창군을 선언(1948년 2월 8일)하기 전까지 인민집단군이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는 노출시키지 않았고 대내적으로만 사용해 왔다.

1947년 9월 17일 미 국무장관 마셜은 유엔사무총장(트리그브 · 리)에게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1947년 9월 24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에서 46 : 6(기권 7)으로 한국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되자 동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인 스티코프 대장은 "1948년 초에 미 · 소 양군이 한국으로부터 동시 철수하여 한국민 스스로가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 통일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이고,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 · 소 양군이 철수하여 남북한 당사국간의 해결에 맡기자는 주장이 맞서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주장의 배경에는 1948년도에 소련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고, 철수하기 이전에 강력한 북한군을 창설하여, 장차 미 · 소 외국군이 모두 철수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무력으로 단행하고자 하는 레닌의 혁명전술이 배태된 무장력 건설로 표출된 것이 바로 정규군 편성인 인민집단군이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와 군사원조의 획득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들 사단들은 소련군으로부터 76.2㎜ 야포, 82㎜ 박격포, 120㎜ 중박격포, 45㎜ 대전차포와 각종 기관총과 다발총, 소총 등을 장비하였다.[52]

김일성은 자신의 생일인 1947년 4월 1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소련군 제25군사령관에게 북한군 전력의 강화에 협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 전문내용 가운데 알려진 것은 1946년 창설된 수상보안대 구성원의 해상업무

에 대한 지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강습소 조직 협조와 비행사와 항공기술자 120명의 비행훈련과 연구를 위한 비행기 양도를 요청하는 것이었다.[53]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장비가 새롭게 도착한 것에 맞추어 북한 무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북한 당국은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로 모든 군사력을 통합하였다.[54]

이렇듯 병력과 무기가 증강됨에 따라 고위 간부들은 1947년 5월 17일을 기하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예하 전 장병에게 일제히 계급장을 수여하였다.[55] 지금까지는 상·하의 계급이 없이 다만 간부(장교)와 전사(병사), 그리고 직책으로만 상·하 구분이 있었다. 계급장 수여식이 거행되면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위장은 완전히 걷히게 되었고 정규군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때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북한 군대의 계급구조를 보면, 병과 하사관은 병, 전사, 하사, 중사, 상사, 특무장의 6개 계급으로 분류했고, 장교는 위관급, 좌관급, 장관급 장교로 구분하고, 위관급 장교는 소성 하나(소위), 소성 둘(중위), 소성 셋(상위), 소성 넷(대위) 등 네 계급, 좌관급 장교는 중성 하나(소좌), 중성 둘(중좌), 중성 셋(상좌), 중성 넷(대좌) 등 네 계급, 장관급 장교는 대성 하나(소장), 대성 둘(중장), 왕성 하나(대장) 등 세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계급장(견장)의 모양은 아래에서와 같이 소련군 계급장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계급에 대한 호칭은 소위, 중위 등의 계급을 사용하지 않고 소대장(동무), 대대장(동무) 등 직책을 부르고 있었다. 다만 기록상에는 소성 1(3급) 등으로 기록하였는데, 괄호 속에 있는 급수는 봉급 지불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군관들은 계급장을 달기 전에 비해서 걸음걸이로부터 갖가지 행동에 대해서 제법 위엄을 갖추려는 모습이었다.

계급장 수여식과 함께 예하 각부대도 고유명칭이 부여되고 확장 개편되었다. 즉, 인민집단군총사령부는 구 일본군 제97연대가 주둔하던 평양 해방산에 위치하고 인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개천 소재), 인민집단군 제2경보병사단(나남 소재), 인민집단군 제3혼성여단(원산 소재) 등을 확장 개편되었다.[56] 제3독립혼성여단은 완전한 사단 규모였으나 증강된 장비 보충 없이 장비를 혼합 편성했기 때문에 여단으로 편성되었다.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400명 정도이고 제3독립 혼성

<표 3-10> 군 직급과 급수

구 분	직 급	명 칭	급 수	직 책
위 관	소성1 소성2 소성3 소성4	소위 중위 상급중위 대위	3급 4급 5급 6급	소대장
좌 관	중성1 중성2 중성3 중성4	소좌 중좌 상좌 대좌	7급 8급 9급 10급	
장 관	대성1 대성2 왕성1	소장 중장 대장	11급 12급 13급	사단장 군단장

<표 3-11> 북한군 사단의 창설표(1947. 5. 17)[57]

부 대 명	사령부	지휘관	창설 경위 및 예하부대
보병제1사단	개 천	소장 전승화	개천 보안간부훈련소(제1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1・제2・제3연대, 포병연대
보병제2사단	나 남	소장 강 건	나남 보안간부훈련소(제2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4・제5・제6연대, 포병연대
제3독립혼성여단	평 양	소장 최민철	원산 보안간부훈련소(제3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7・제8・제9연대, 포병연대

여단은 3천 400명 정도로 총 병력은 약 3만여 명 정도에 달하였으며, 그밖에 약 1만 7천명의 훈련병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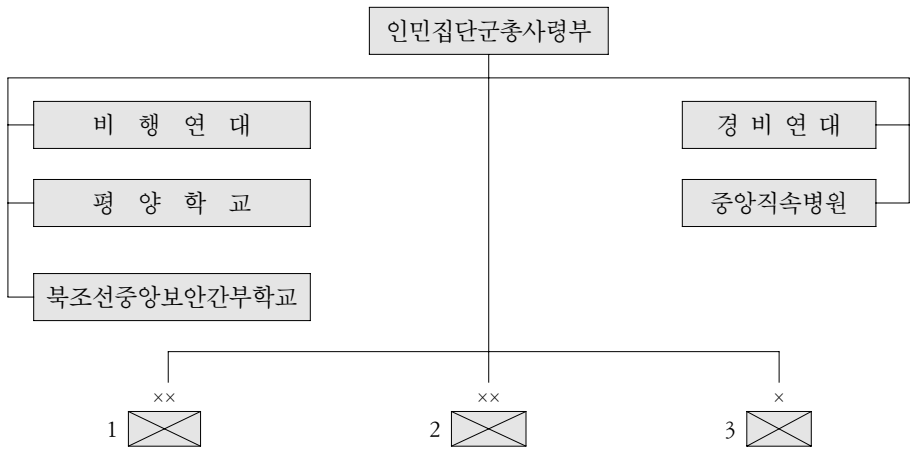
그리고 경위대를 경위연대로, 위생소대를 중앙직속병원으로 개칭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평양학원에 배속되어 있었던 항공중대를 1947년 8월 20일 배속 해제시키고 정식 비행대로 독립 창설하여 집단군 총사령부 예하로 배속시켰다.[58] 각 훈련소가 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부족 병력의 보충을 위하여 민청원과 당원의 강제추천으로 대량 모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간부양성기관도 군관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시작하였다. 진남포의 평양학원은 평양만경대로 이전하여 제2군관학교로 개편하기 위해 1947년 9월 10일 새로이 군관훈련교사를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강서군 대안리에 있던 '북조선보안간부학교'를 평양 사동으로 이전하여 '제1군관학교'로 개편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각 군 기관이 정규체제로 개편 확장하였다.

인민집단군 총사령관에 최용건이 유임되면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사령부 간부진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그리고 사단에는 신임사단장이 각각 배치되었으며 인민집단군 제1경보병사단장에는 김웅(金雄) 소장, 제2사단장에 강건(姜健) 소장이 임명되었고, 제3독립혼성여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59] 나아가 군의 주요간부는 항일유격부대, 소련군, 조선의용군 출신이었지만, 중대장과 소대장은 해방 후 양성된 사람들이 대부분 맡았다.

인민집단군은 장비에 있어서는 종래에 사용하던 일제 무기를 전부 회수하여 보안대와 경비대에 주었고, 새로 소련군에서 지원해 준 장비로 편성하였다. 여기서 각 사단에 편성된 장비를 보면, 76.2㎜ 야포, 45㎜ 대전차포, 14.5㎜ 대전자포, 122㎜ 중박격포, 82㎜ 박격포, 그리고 각종 기관총과 다발총, 보병소총 등을 인

<표 3-12> 인민집단군 편성[60]



수하여 각 사단의 장비를 일신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소련제 신무기를 갖게 되었고 그 신무기의 조작훈련을 소련군 고문관들의 지휘하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각 군관학교와 사단에 배치되어 약 3개월간에 걸쳐 소련식 제식훈련과 각개훈련, 소대·중대·대대의 전투훈련을 비롯해서 병기학, 전술학, 공산당사, 참모학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공산제국의 청년절 기념일인 1947년 7월 27일 공산제국의 친선운동경기인 국제 민청대회에 파견하기 위해서 군관학교 선수들과 북한 대표선수들의 환송경기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하였다. 북한군은 평양 시민들에게 정식 북한군 복장과 계급장을 부착하고 신식무기를 갖추고 정식 사열과 분열을 실시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이날 처음으로 군관학교와 북한군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 고위간부들은 군관양성과 병력증강을 비밀리에 강행해 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군관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학원이니 보안학교, 훈련소 등으로 사칭하여 북한군을 은밀히 육성해 왔다. 북한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한지 약 9개월 만에 완전히 북한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강력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1948년 2월 8일을 기해 소위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제 4 절 군 창설과 확장

1. 내무성 경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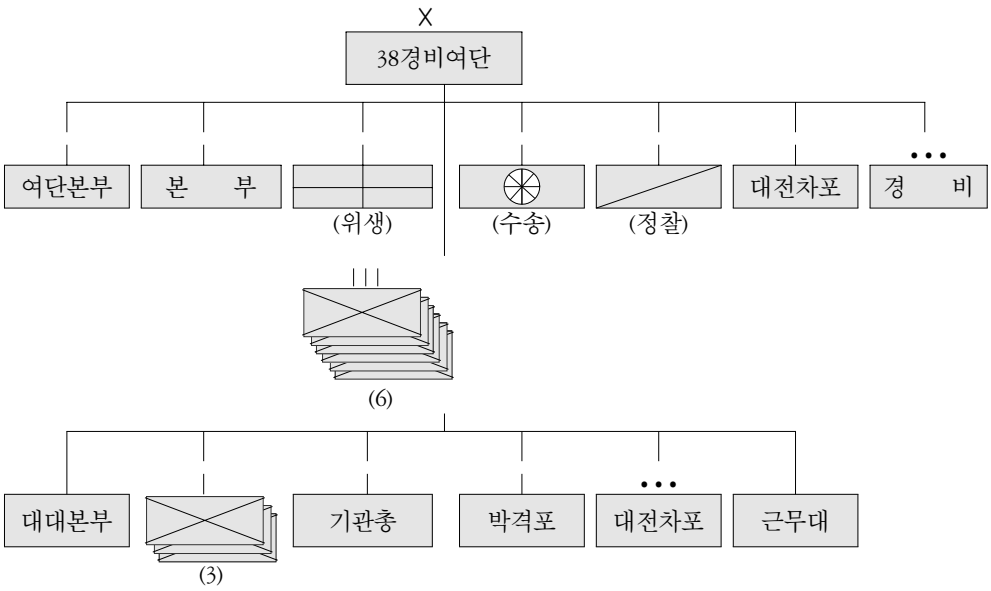
북한의 내무성(內務省) 관할 부대로는 38선 경비대와 철도경비대, 그리고 한·만 (韓·滿)국경경비여단 등이 운영되었다. 이들 경비대는 통상 공산국가들에서 독특하게 운용되는 부대로서 민족보위성에 소속된 부대들과는 달리 주로 국내 치안이나 국경수비를 담당하였다.

북한은 북한군의 증강과 더불어 내무성 관장하의 보안대도 강화하여 치안은 물론 38도선 및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1947년 7월에는 보안대를 중심으로 사리원(沙里院)에 38경비대를 창설하여 38도선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들은 1948년 초에 38보안여단으로 증편되었고 1949년에 접어들어 38도선 경비부대를 3개 여단으로 증편하여 죽천(竹川, 제3여단), 시변리(市邊里, 제7여단), 간성(杆城, 제1여단)에 전개하고 38도선 경비를 분담시켰다.

북한의 '경비대 예산(豫算)' 자료에 의하면, 1947년에는 병력 2만 5천명 규모, 총예산 1,566,133,140원이었으나, 1948년에는 1,989,854,0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948년 5월부터 병력으로 5만명으로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3,577,497,342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었다.[61]

먼저 38선경비대는 38선경비보안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다. 38선 경비를 책임진 38경비보안대는 1946년 중반 김창봉(金昌鳳)을 대대장으로 38선 경비 임무를 위해 사리원에서 창설되었고 이후 3개 연대로 확장되었다. 집단군총사령부(1947년 5월 17일)가 창설될 무렵 미·소 군정 당국은 북한의 광공업자원 및 일부 공산품과 남한의 농산물에 대한 상호 교역(交易)을 합의하여 1947년 5월 22일부터 남북교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표 3-13>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6)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38선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38선 경비를 담당할 전담부대를 창설하기로 하여, 내무국(당시 내무국장 박일우) 예하의 보안대를 주축으로 하여 1947년 7월 사리원에서 2,000명 규모의 38선 경비대를 창설하고, 경비대장에는 연안파인 윤공흠(尹公欽)을 임명하였다. 내무국은 1948년 1월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경비대를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군대의 기능을 갖추어 사리원에 '38보안여단'을 편성하였다.

동년 9월에는 진남포에 있던 보안대대가 철원으로 이동하여 새로이 2개 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로써 3개 대대의 병력으로 강원도 정면의 38선 접경의 경비에 임하였다. 이어서 1949년 2월 다시 1개 대대를 증설하여 도합 4개 대대가 되었고 1949년 5월 1일에는 이들 4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는 38선 경비 제1여단을 신설하여 본부를 강원도 간성(杆城)에 두고 철원에서 동해안까지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62]

같은 시기(1949년 5월)에 사리원(沙里院)에 있었던 38선 보안여단도 38선 경비

제3여단으로 개칭하여 철원 이서(以西)지구의 38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후에 다시 38선 경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시변리에 38선 경비 제7여단을 추가로 창설하여 철원으로부터 해주까지의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리원에 본부를 두었던 38선 경비 제3여단을 황해도 죽천으로 이동시켜 해주에서 38선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서 북한은 240㎞에 달하는 38선 경비는 내무상 박일우(朴一禹)의 관할하에 있는 3개의 38선 경비여단에 의하여 경비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내무성에는 내무성 관할하의 경비대를 관장하는 경비국이 있었는데, 이때 경비국장은 박훈일(朴勳一, 연안파)이었고, 제1여단장은 오백룡(吳白龍, 빨치산파), 제3여단장은 최현(빨치산파), 제7여단장은 경비국 참모장으로 있던 이익성(연안파)이 부임하고 경비국 참모장은 황성복(소련군 출신)이 새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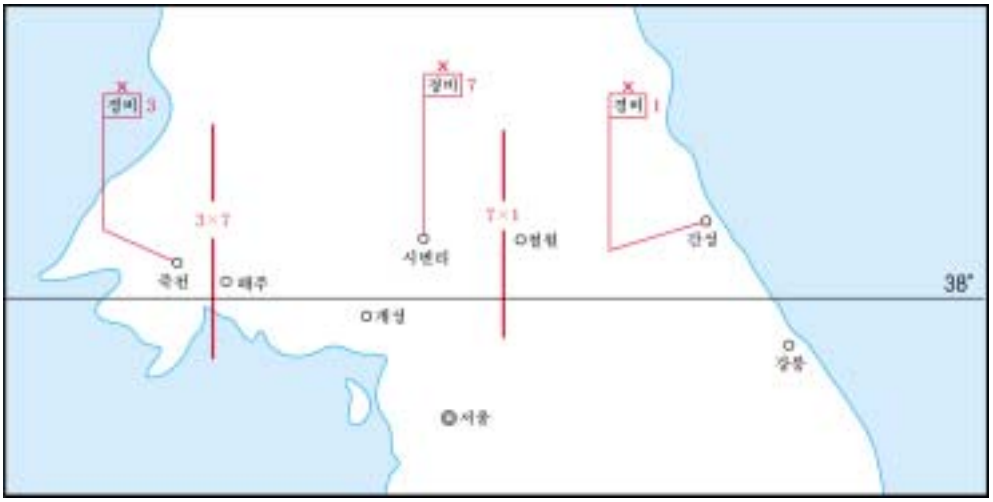
각 여단본부의 위치를 보면 제1여단이 강원도 간성에, 제3여단이 황해도 죽천에, 제7여단이 황해도 시변리에 각각 두고 38선 경비에 주력하였다. 이들 38경비대는 38선을 경비하는 한편 수시로 38선을 침범하여 국군과 충돌을 야기 시키고 동시에 아군의 전력을 탐지하여 전투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38경비 제3여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성 경비국 직속 기마대를 편입시켰다. 즉 주요 도시에 배치하여 보안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해주 제1기마대와 철원에 제5기마대가 38경비 제3여단에 배속되었던 것이다.

38선 경비여단의 편성은 여단본부 예하에 6개 보병대대와 본부중대, 위생중대, 수송중대, 정찰중대, 45㎜ 대전차포중대, 경비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보병대대는 대대본부와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 45㎜ 대전차포소대, 근무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1개 여단의 정원은 8,312명이었으나, 인원 부족으로 완전보충을 못하고 6·25 직전 병력은 제1여단이 5,000명 선, 제3여단과 제7여단은 각각 4,000명 선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전쟁 직후 제1여단은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제3여단은 북한군 제9사단(사단장 박효삼), 제7여단은 북한군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으로

<상황도 3－1> 북한의 38경비여단 배치



증편하여 내무성에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된 후 전선으로 투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철도경비대는 초기에 북조선철도보안대로 발족하여 북한의 철도를 경비해 오다가 보안간부훈련소에 흡수되어 보안간부훈련대대에 편입되어 있었다. 1947년 보안간부훈련대대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되자 북조선철도보안대는 다시 평양에다 철도보안대대를 창설하여 철도경비에 임하였다.

그 후 1948년 9월에 철도보안대대를 철도보안여단으로 증편하였고, 1949년 1월에는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개편하여 전국의 철도를 경비하고 있었다. 제5여단의

<표 3－14> 북한 경비여단의 창설(1949. 5- 9)[63]

부 대 구 분	사령부	창설시기	병 력
38경비 제1여단	간 성	1949. 5	5,000
38경비 제3여단	죽 천	1948. 9	4,000
38경비 제7여단	시변리	1949. 1	4,000
철도경비 제5여단	평 양	1949. 1	3.000
한·만 국경경비 제2여단	·	1949. 9	2,600

편제는 4개 대대(병력 3,000명)로서,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경비여단들도 소련제 기관총·박격포 등으로 장비 하였고, 편성·훈련·감독은 소련군 군사고문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정치교육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또한 1948년 9월 이후 '선·만 국경경비대'가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700㎞에 걸친 한·만, 한·소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었다.[64]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이 관할하는 경비대중 가장 늦게 창설되었는데, 북한 정권이 수립(1948년 9월 9일)된 직후인 1948년 9월 중순경에 한·만 국경경비대 3개 대대를 창설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에 배치하였다. 그 후 동 경비대는 7개의 위수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개 위수사령부의 편제는 1개 대대 300명을 구성하여 총 2,600명의 병력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을 따라 소만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경비하고 있었다. 장비는 박격포, 기관총을 가진 경장비의 경비대였다. 그 후 경비대는 7개 위수 사령부를 7개 대대로 다시 개편하였고 이를 통합 지휘하는 여단이 창설되어 국경경비 제2여단으로 개칭되었다. 내무성은 이상의 경비대 외에도 해안경비대와 각 도, 시, 군 보안대의 무장병력을 관장하고 있었다.

그 외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49년 4월 회령에서 제766부대를 편성하여 유격대를 육성하고, 1950년 4월 청진에서 모터사이클을 주장비로 기동정찰용 제12모터사이클연대를 창설하였다.

2. 조선인민군

1) 육군의 확장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당시 임시인민위원회에 14개국 중에 보안국(국장 최용건)을 두고서 보안국장이 북한의 무력부대인 보안대와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관장해 오다가, 1947년 2월 21일 북조선 임시위원

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을 때는 18개국으로 확장되었으나 보안국은 없어지고 내무국(국장 박일우)이 신설되었다.

내무국장은 보안대를 관장하였으나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인민위원회의 관장 기구(국)없이 훈련대대부 사령관(최용건)이 인민위원회 위원장(김일성)을 직접 보좌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북한군을 창설(1948년 2월 8일)하기 직전인 1948년 2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군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부서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초대 보위국장에 김책(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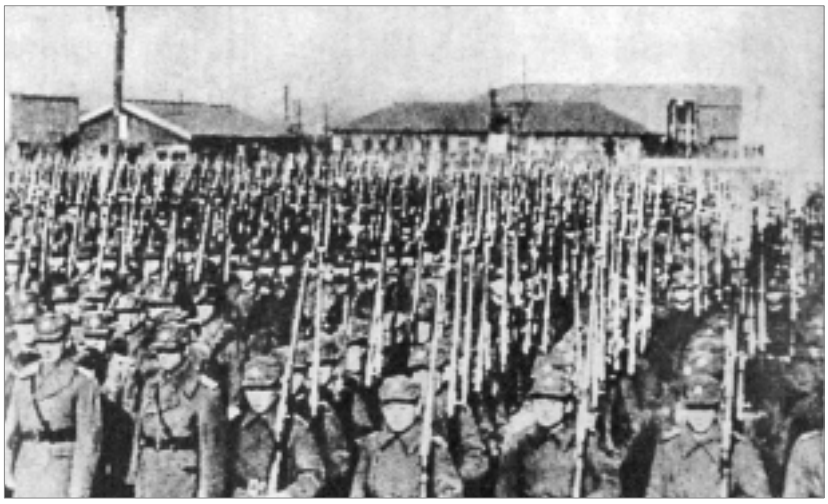
그러나 민족보위국은 그 설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당시 인민위원회 조직표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건설과 운용 업무를 담당하되 대외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조직이었다.[65]

이는 그 동안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군을 관장하는 행정기구 없이 훈련대대부 사령관(후에는 집단군사령관)이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던 것을 분리하여 행정기구로 민족보위국을 신설한 것이었으며 또 후에 북한 정부가 수립(1948년 9월 9일)될 때 조직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도 있다. 여하튼 민족보위국이 신설되긴 했으나 민족보위국과 북한군 총사령부와의 상하관계나 행정지시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 역사기록부장을 했었던 최태환은, "민족보위국이 설치되었다는 기록 보고는 있었으나, 북한군 총사령부와는 종적이든 횡적이든 어떤 지시 사항이나 보고 사항 등 상호 연락관계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아마도 민족보위국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회고하고 있다.[66]

한편 북한은 1948월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는데 이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7개월 전의 일이었다. 당시 인민집단군 예하 각 사단의 병력은 1만 400명 정도이고, 제3독립혼성여단은 3천 400명 정도로 총병력 약 3만명 정도에 달하였으며 약 1만 7천 명의 훈련병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인민집단군으로 개편되고 나서 소련제 각종



평양 역전에서 창군식을 끝내고 시가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1948.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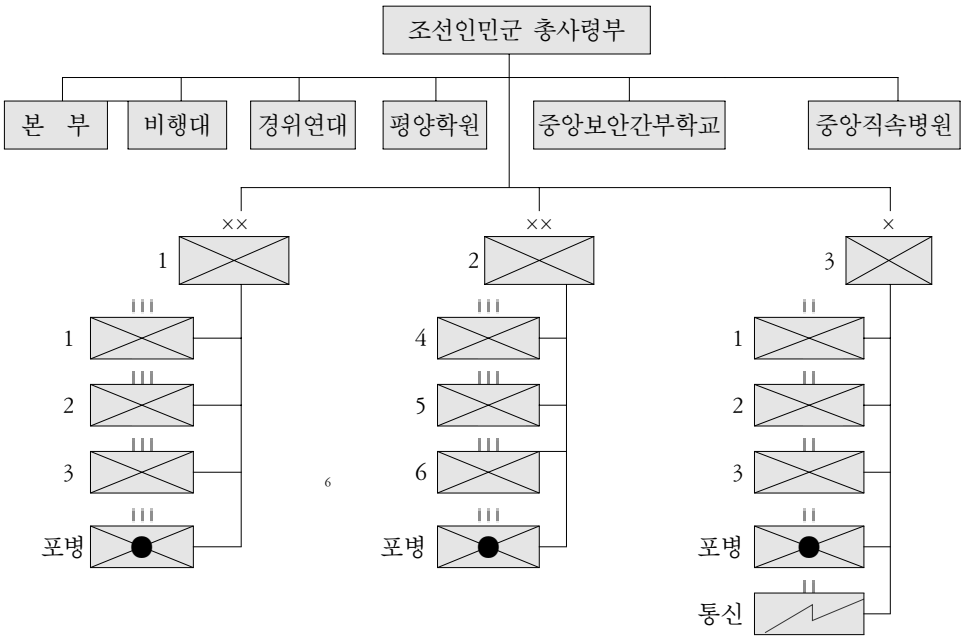
중장비로 교체되었고 소련군 고문관들의 지도하에 1947년 5월 17일 이후 1948년 2월에 이르는 9개월간에 걸쳐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자 무력수단에 의한 공산통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무력의 기초가 완료되자 그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통수권을 발동하여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에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편하여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를 '조선인민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고, 예하 각 사단의 명칭은 북한군 제1보병사단, 북한군 제2보병사단, 북한군 제3혼성여단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예하의 비행대대는 항공대대로 증편하였고, 그 외 중앙보안간부학교, 중앙직속병원, 평양학원, 경위(警衛)연대 등은 그대로 북한군총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날 평양역전 광장에서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선포하는 열병식이 거행되었고, 이 행사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67]

>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조선 완전 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서입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

<표 3-15> 조선인민군총사령부 편성(1948. 2. 8)[68]



모든 성과들을 무력으로 보위할 조선인민군대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국가를 물론하고 자주 독립 국가는 자기의 군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 조선인민은 어디까지든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들어 쥐고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완전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통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조선인민군 창설 이유에 대해 김일성은 1947년 말~48년 초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창설한다고 하였고, "오늘 조선인민군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방위하는 성벽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정부 타도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희망을 줌과 동시에 원쑤들의 침공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거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고 하여 '도발에 대응하고 통일을 위한 인민정권의 무력기관'이라고 창설취지를 밝히고 있다.[69] 요컨대 북한에서 인민군의 창설은 그전의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님을 선

포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설을 표면적으로 민족문제의 자주 자결의 해결방법에 입각하여 제시된 것으로 되풀이 설명하였고, 남한의 미 점령군으로부터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인민정권의 무력기관으로 합리화하였다. 즉, 창군의 목적을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동당의 군대로서 인민군을 창설할 필요성에 부닥쳤다"고 말하고, "조선인민의 혁명적 무장력인 것이다"라고 내세우고 있다.[70]

그들의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획득물을 수호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것이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재삼 강조한 것은 남한을 무력으로 공산화하자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지역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소련의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 역시 더욱 강화되었다.

1948년 2월 8일은 아직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내외에 선포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던 것이다. 정권 수립 이전의 창군이라면 오히려 1946년 8월 15일 김일성이 북한 내의 무장 세력을 통합하여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한 날짜가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조선인민군' 창설 이후 북한당국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에 대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필승불패를 호언하던 강대한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적을 과소평가하고 전투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여 멸망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공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항상 준비된 태세로 있지 않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면 당황망조 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적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격파할 수 있도록 준비된 태세를 견지하며 적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며 적의 음모와 책동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조선인민군 창설 직후의 열병식 광경(1948. 5. 1)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여 훈련을 적극 강조하였다.[71]

북한군의 창설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정책과 결부되었으며, 김일성 항일유격대 출신 인물들을 기간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군 편제를 모방하여 문화부를 설치하였다. 6·25 당시의 문화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군의 정치위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은 이들 정치위원들을 통하여 북한군의 정치사상 통제를 담당하여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따라서 군대를 육성함에 사상과 정치교육에 치중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에는 최용건이 유임되었고 총사령부를 평양시의 구 일본군 제44부대 자리로 이전하였다. 즉, 총사령관에 최용건, 부사령관 겸 문화부 사령관 김일(金一), 포병사령관 무정, 후방부사령관 최홍극(崔弘極), 총참모장 강건(1947년 12월 안길 사망 이후), 부총참모장 황호림(黃虎林, 새로 보임), 통신부장 박영순(朴英順), 공병부장 박길남(朴吉南, 부부장에서 황호림 후임), 작전부장에 유신(柳新)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인민집단군 제1보병사단은 '조선인민군'의 창설에 따라 북한군 제1사단으로 발족하고 예하부대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72]

제1보병사단사령부 개천(사단장 김웅 : 金雄, 참모장 최광 : 崔光)
제1연대 신의주(연대장 미상)
제2연대 재령(연대장 미상)
제3연대 강계(연대장 최현 : 崔賢)
포병연대 개천(연대장 이기건 : 李奇建)

인민집단군 제2보병사단도 '조선인민군' 제2사단으로 개편하여 사단사령부를 나남에 설치하고 있다가 1949년 초에 동북의용군이 들어오자 함흥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나남에 주둔하고 있던 제5연대만 평양 평천리로 이동하였고 제6연대는 나남에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다. 제4연대는 회령(會寧)에 설치하고 포병연대는 강덕(康德)에 설치하였다.

제4연대장에 유경수가 부임되어 있다가 제195전차연대장으로 전임되어 갔고 제5연대장에 최용진이 부임한 후 동 연대가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이인철이 부임하였다. 그리고 제6연대는 이영호, 포병연대는 한진덕 등이 부임하였으며 제2사단의 배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보병사단사령부 함흥(사단장 이청송 : 李青松, 참모장 이익성 : 李益城)
제4연대 회령(연대장 유경수 : 柳京洙)
제5연대 평양(연대장 최용진 : 崔容鎭)
제6연대 나남(연대장 이영호 : 李英浩)
포병연대 강덕(연대장 한진덕 : 韓鎭德)

인민집단군 제3독립혼성여단은 인민군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발족하였다. 여단 본부는 원산(여단장 김광협, 참모장 오진우 : 吳振宇)에 위치하였다. 여단 예하의 3개 보병대대와 포병대대는 연대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948년 9월 북한군 총사령부가 민족보위성으로 승격될 때 제3혼성여단은 북한군 제3사단으로 증편하게 된다.

이 여단은 1948년 9월 9일 소위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제3

사단으로 승격되었고, 동년 10월 제2사단에서 제6연대를 편입시켜 제8연대로 개편하고 사단 직할부대와 3개 보병연대 그리고 1개 포병연대로 사단편성을 완료하였다. 사단사령부를 처음에 평양에 두었다가 함흥으로 이동하고 다시 원산(元山)의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이동하였다. 사단장에 최민철이 부임하여 전투훈련에 치중하였다. 제7연대는 덕원(德源)에 주둔하고 있었고 제8연대는 평강(平康)에, 제9연대는 흥남(興南)에 그리고 포병연대는 원산에 각각 배치하여 화천(華川), 철원(鐵原), 복계(福溪), 양양(襄陽) 등지의 38선 경비에 대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3사단사령부	원산(사단장 김광협, 참모장 오진우)
제7연대	덕원
제8연대	평강
제9연대	흥남
포병연대	원산

1948년 10월 15일 북한군 제4독립혼성여단을 창설하고 여단본부를 대동군(大同郡) 유사리(柳沙里)의 이연(理硏)공장 자리에 두고 직할부대와 3개 보병대대로 편성하였다. 제1대대와 직할대대는 진남포에, 제3대대는 신의주에, 제3대대와 포병대대는 평양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 후 1949년 말 동 여단은 북한군 제4사단으로 승격되어 보다 강력한 사단으로 육성되었다.[73]

2) 병과별 부대 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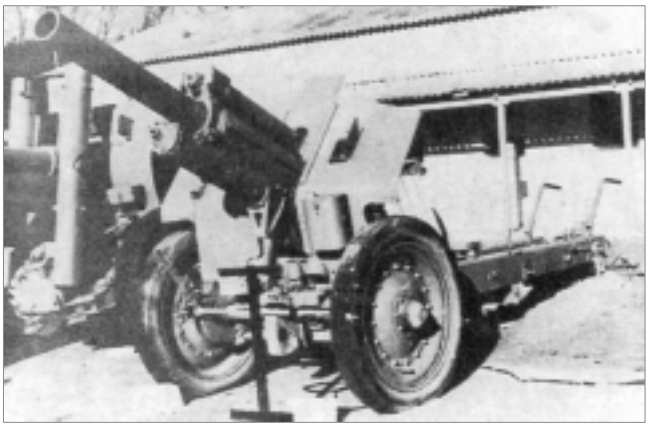
북한은 먼저 전문적인 유격대를 양성하기 위해 제766보병연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4월 함경북도 회령에 유격대원 전문양성 기관으로 통상 제766부대라 하며, 대외적으로는 제3군관학교라 했다. 부대장(학교장)은 김일성과 같은 빨찌산 출신인 오진우(吳振宇)을 임명하였고, 참모장 겸 군사 부교장은 강동정치학원의 군사 부원장이며 같은 빨찌산 출신인 서철(徐哲) 소좌를 임명하였다.

부대 창설 당시는 강동정치학원 출신 53명과 민청 소속 학생 100여명으로 약 200명에 불과한 대원이었으나, 같은 해 5월 말경은 중국으로부터 중공군 소속이었던 1,000여명의 병력이 도착하였고, 7월에 북한군 정규군 2개 대대 300여명이 전속되어 왔는데 이들 양개 대대는 1949년 5월에 남한에서 월북한 표무원과 강태무가 인솔하는 대대였다.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1,000여명의 중공군 소속 병력 및 포병 병력이 도착하였고, 이 때 부대의 편성은 3개 보병대대와 포병대대, 통신대대, 그리고 월북한 강·표 대대로 구성되어, 제766부대의 총 병력은 약 3,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말경 함북 유선으로 이동하여 훈련하였고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원산 호도반도로 이동하여 상륙전 훈련을 1개월 전 실시 후 같은 해 6월 21일 수십 대의 어선에 분승하여 원산항을 출항, 6월 24일 속초(束草)로 와서 속초 부두에서 정박 대기하다가 같은 날 오후 늦게 다시 출항하여 6월 25일 02 : 00에서 03 : 00시경 동해안의 주문진 앞바다를 지나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하여 아군 후방을 위협하는 남침 대열에 참가하게 된다. 상륙전에 참가하지 않은 부대는 양양지역에서 6월 25일 이전에 38선을 넘어 상륙 예상지역에 도착, 상륙부대의 상륙을 엄호하였다.

다음으로 북한군은 제12모터싸이클 정찰연대(일명 제603모터찌크 연대)를 창설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8월 중국으로부터 입북한 조선의용군 출신의 전투 경험을 가진 약 2,000명을 병력을 기간으로 1950년 4월 청진에서 창설된 부대이다.[74] 54대의 모터찌크와 각각 16문의 45㎜ 대전차포와 120㎜ 박격포로 장비된 총 병력 3,500명에 달하는 북한군 유일의 기동화 된 독립 연대이다.

1950년 5월 23일 김일성이 이 부대를 방문하여, “모터찌크는 추격전과 시가전에 큰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중략) 동무들은 지난날에 중국 혁명을 위하여 잘 싸웠다면 이제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잘 싸워야 합니다”라고 격려한 바 있을 만큼 김일성이 비중을 두는 기동성 있는 부대이다. 이 모터찌크는 오토바이 측면에 1인용 보조좌석을 부착하고 그 곳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기동하면서 기관총사격이 가능한 장비로, 소련군이 제2차대전시 추격전과 시가전에 유용하게 사용하던



한국군의 곡사포에 비해 사정거리가 배나 되었던 북한군의 122㎜ 곡사포

장비이다.

또한 1949년 중순 북한군은 122㎜ 야포연대를 창설하였다. 1949년 7월 15일 개성(開城) 북방 송악산(松嶽山) 488고지 쟁탈전에서 북한 북한군이 처음으로 122㎜ 야포를 사용하였다. 당시 한국군 제11연대장은 그 위력에 놀라 불발탄을 수거하여 즉각 새로운 병기의 출현을 보고하였으나 육본에서도 122㎜ 야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122㎜ 야포는 소련군의 신형장비로 1949년 3월말 제1군관학교 포병부에 보내 교육하도록 하였다. 122㎜ 포를 인수한 군관학교에서는 1949년 4월 22일 김일성이 참석한 가운데 실탄사격시범을 실시하였다. 이 시범을 참관한 김일성은 "122㎜ 포는 인민군의 보배다. 이 포야말로 조국과 인민에 최대의 공헌을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 포병군관동무들은 이 포의 사격술을 잘 배워서 보다 나은 포병이 되기 바란다"는 격려사를 보낼 만큼 122㎜ 야포의 도입은 북한군 포병에게는 최대 성능의 신무기였다.[75]

당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구경 포는 105㎜ 포로 사거리가 6,252미터인데 비해서 122㎜ 포의 사거리는 배나 되는 11,710미터의 장거리 포였다. 122㎜ 야포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으며 1개 대대는 122㎜ 포 12문으로 장비되어 연대는 총 36문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다.[76]

북한군은 이외에도 새로이 공병연대를 창설하였다. 1949년 3월경 평양 북방 15.6㎞ 지점에 있는 간리에 총 병력 1,000명 수준의 공병연대가 창설되었다.[77] 연대장에는 장인호 대좌가 임명되었고, 연대 예하에는 공병 1개 대대(약 250명), 중(重)도하대대, 경(輕)도하대대, 전기중대, 급수(給水)중대, 자동차수리소, 기계수리소 등이 있었다. 장비는 트럭 20대, 발전기 2대, 항타기 1대, 모터보트 4척, 조립식 주정 몇 십 정 등이 있었고, 불도저나, 덤프트럭도 없는 취약한 공병연대였다.

1950년 4월에 소련으로부터 공병장비 일부가 도착하여 보강되었으나, 경도하장비 1개 세트를 비롯하여 조립식 철주, 발전기, 지뢰탐지기, 폭파기, 유자철조망, 위장망 등 일부가 있었다. 연대는 공병여단으로 증편되었으나 남침시 한강도하작전이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공병여단의 장비 부족에 있었다. 이외에도 1949년 9월 평양에 방공포연대가 창설되었고[78], 1950년 6월초 나남에서 새로운 독립전차연대가 별도로 창설되었다.[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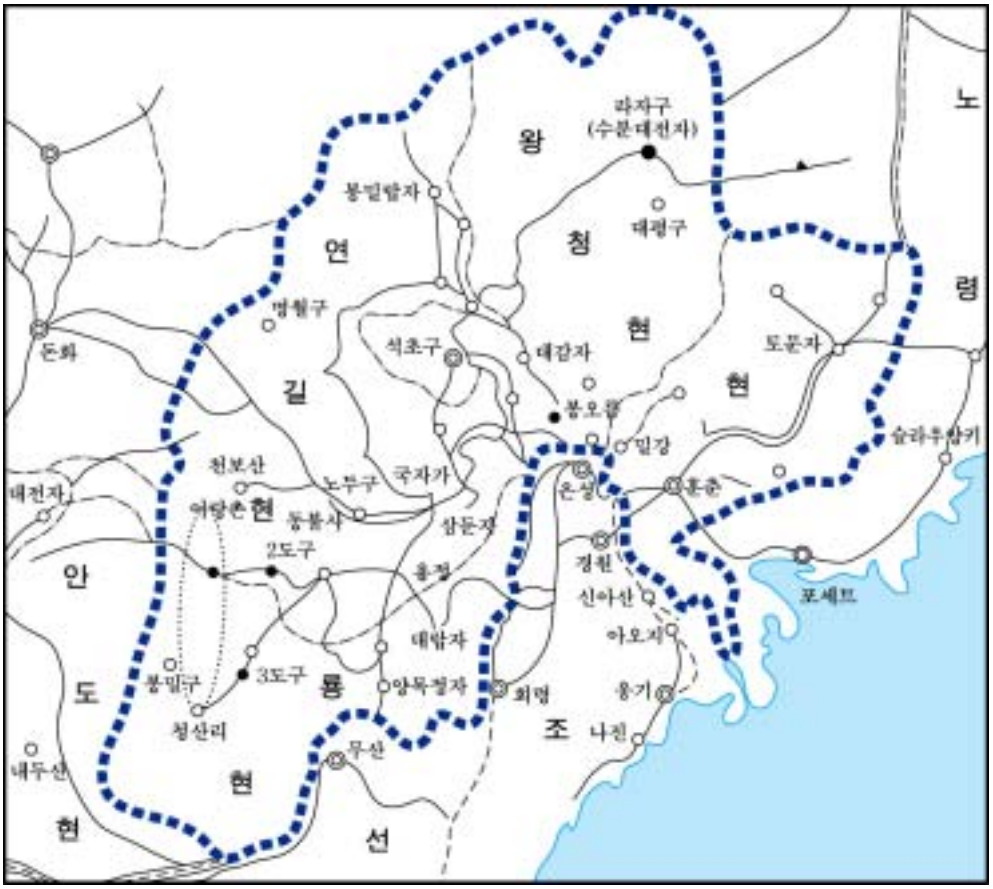
3) 조선의용군 사단의 입북 재편

1949년 4월 조·중(朝·中) 회담에 따라 중공군 제166사단(방호산 : 方虎山), 중공군 제164사단(金昌德) 그리고 중공군 독립 제15사단(全宇)과 중국 각지의 조선의용군(韓人義勇軍) 약 50,000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 북한지역으로 입북하였다.[80] 먼저 북만주에 있는 중공군 제4야전군에 소속된 2개의 한인계 사단(제164, 제166사단)이 1949년 7월에 북한으로 이동하였다.

중공 동북군구 제166사는 1949년 7월 입북(入北)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중공군 제166사는 당시 사단에 편성되어 있던 사단 정치위원 방호산의 지휘하에 심양을 출발하여 1949년 7월 25일 신의주에 도착하여 북한군 편제에 따라 사단으로 재편성하게 되었다.

제166사가 도착한 직후 크게 고무된 김일성은 1949년 7월 27일 신의주의 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제655부대 장병들은 프롤레타리아 제국주의에 참으로 충실하였으며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조하였다.[81]

<상황도 3-2> 간도 지방



사단은 신의주에서 제166사(제6사단), 제496단(제13연대), 제497(제14연대), 제498(제15연대)로 개편되어 소련장비로 무장한 후 10월 제13연대 재령(載寧), 제14연대 사리원(沙里院), 제15연대가 신의주(新義州)에 각각 주둔하였다.

제166사는 사단장 방호산 소장, 참모장 노철룡 총좌, 문화부사단장 홍림 총좌, 포병부사단장 심청 총좌, 후방부사단장 박민 총좌, 작전과장 표구서 상좌 등

제13연대는 연대장 한일해 상좌, 참모장 장훈 중좌, 문화부연대장 최진작 중좌

제14연대는 연대장 황석상좌, 참모장 김성일 중좌, 문화부연대장 주룡 중좌

제15연대는 연대장 조관 상좌, 참모장 현파 중좌, 문화부연대장 신학균 중좌, 포병부연대장 이빈 중좌, 후방부연대장 김성춘 중좌, 사단포연대장 장우철 상좌, 문화부연대장 지기철 중좌 등[82]

또한 동북군구 제164사는 1949년 7월 하순 북한으로 입북하라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당시 제164사의 부사단장이었던 김창덕(金昌德)이 약 7,500여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장춘을 출발 열차 편으로 함북 회령을 경유 1949년 8월초 나남에 도착하여 인민군 제5사단, 제10, 제11, 제12연대로 재편성한 후 소련장비로 무장하게 되었다.

사단장 김창덕 소장, 문화부사단장 장복 총좌, 포병부사단장 박송파 총좌, 후방사단장 관건 총좌
제10연대 연대장 박정덕 상좌, 참모장 계우섭 중좌, 문화부연대장 정길운 중좌
제11연대 연대장 김봉문 상좌, 참모장 정범 중좌
제12연대 연대장 와후 상좌, 참모장 윤명환 중좌, 문화부연대장 김도룡 중좌 등[83]

이리하여 1949년 후반에 들어서자 북한군의 지상병력은 기존의 3개 사단(북한군 제1, 2, 3사단)과 새로이 편입된 2개의 전 중공군계 사단을 합쳐서 도급 5개의 전투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중 나남에서 개편된 제5사단과 2개의 기존사단은 수백 대의 트럭과 모터찌크 등으로 장비된 기계화부대로 등장했다.

중·소의 지원에 따라 북한은 1949년 말까지 제4독립혼성여단을 제4사단으로 완편 하고, 제5·제6사단을 추가 창설하여 6개 사단으로 증편하였으며, 제115전차연대도 제105전차여단(1949. 5. 16)으로 개편하였다. 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1개 연대 전차 40대), 기계화보병연대, 교도연대, SU-76대대 등으로 편성되어 사실상 사단급 전력을 보유하였다.[84] 이러한 내용은 1948년 말 모스크바 전략회의 결정내용과 평양에서 조·소 제2차 회의내용을 보완하고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김일성은 1950년 1월 김광협(金光俠) 소장을 중공에 파견하여 아직도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 장병 1만 4천여명을 추가로 입북시켜 줄 것을 모택

동에게 요청하였다. 이때는 대체로 이미 국공 내전이 종료되고 모택동은 당시 중국 인민 해방군 총참모장 대리로 있던 섭영진(攝榮臻)에게 지원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모택동의 지시를 받은 섭영진은 중공군 각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 장병들을 하남성 정주로 집결할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1950년 3월 중순경 정주에 집결된 병력은 대부분 중국 인민해방군 제156사 8천여명, 제113사 1천여명, 제15병단 2천 5백여명 등 총 1만 2천여명이었고, 제4야전군 제47군 각 사단 한인 5천여명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들 병력의 사단편성은 김광협 소장의 지휘하에 북한군 편제대로 편성하였다. 3월 20일 정주에서 원산으로 이동하여, 북한군 제12사단, 제30, 제31, 제32연대로 개편하였다. 제12사단은 3개 보병연대, 1개 포병연대, 경위중대, 통신, 반탱크공병대대 등을 갖춘 완편 사단이었다.[85]

사단장 전우, 참모장 지병학, 정치주임 약근, 작전과장 최봉준, 공급부장 김윤식
제1단장 최학훈, 참모장 이모출, 정치주임 계홍
제2단장 이원성, 참모장 김철, 정치주임 이성진
제3단장 황동화, 참모장 장준, 정치주임 김하석

또한 제4야전군 제47군 한인독립단도 북한군 제18연대로 개편되었다. 제139, 제140, 제141사에 소속되었던 한인 총 5,400명이 정주에 도착하여 1개 독립단과 독립대대를 편성하였고, 이들은 4월초 황해도로 이동하여 독립단은 제18연대, 독립대대는 기계화연대로 각각 편성되었다.[86]

이외에도 남침직후 한인 약 4천여명으로 편성된 철도병단 조선독립단이 6월 27일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1950년 7월 5천여명의 동북군구(東北軍區) 심양 한인 혼성단이 입북 후 제17기계화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이 남침 전까지 중국에서 입북한 마지막 부대였다.[87]

중공군에서 편입된 고참병들은 전 북한군 군관의 1/3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북한군의 골간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북한군 제1, 제4, 제5, 제6, 제12사단에 집중

되고 있었고 제5, 제6, 제12사단에는 대부분이 동북의용군들이 많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1사단과 제4사단은 각각 의용군 출신 1개 연대씩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 들어온 대부분의 의용군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소련군의 전술교범에 의하여 재훈련을 받았다.

중국군 출신 한인부대인 제5・제6・제12사단・제4사단 18연대 등 5만여명의 병력은 부대검열시 일반전투훈련, 즉 사격, 소대공격, 백병전 등의 전술을 포함하여 결함이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시기 실전이 없는 사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88]

이와 같이 무정을 필두로 한 조선의용군 출신은 김웅・방호산・이권무・김창덕・박일우・장평산・박훈일・김창만・이상조・박효삼・이익성・김강・전우 등으로 대표되며 이들은 중국 국공내전시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핵심사단의 사단장직에 있었다. 중공이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인부대를 대거 입북시킨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즉, 첫째, 국공 내전이 종료하게 되자 한인부대를 북한으로 파북시키는 것은 중공으로서는 전후 처리(복원)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고, 둘째, 군사비 삭감이라는 중공의 이익과도 부합되기 때문이었다. 셋째, 북한과의 혈맹의 관련을 고려하고 북한군 내부에 친중 인사를 부식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 조선의용군이 참전하여 남한을 무력 통일하게 되면 친중파의 비중이 높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중공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넷째, 공산권내 중국의 비중(국제주의)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89]

북한군은 급속도로 군비를 강화하고 재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북한의 청장년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제2보충 병력을 양성하였다. 또한 모든 고급중학교 이상에는 배속장교를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당 열성분자들은 소위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강제 헌납하게 하면서 만 17세 이상 만 40세까지의 남녀를 총동원하여 이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북한군은 10개의 보병사단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북한군의

주요한 목표가 북쪽지역에서 공산주의 체제 수립의 기반강화에 있었고, 이는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민주기지'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전략은 물론 소련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이후 소련의 군사지원 역시 더욱 강화되어 갔다.

4) 민청훈련소의 사단 편성

북한은 1949년 초부터 북한군 확장과 국민 총동원을 위하여 군 징집제도를 자원입대에서 공개 강제징집으로 전환하여 보안대의 주관 아래 병력을 취합하였고, 모든 북한의 고급중학과 대학에 배속장교를 배치,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17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북한 주민에게는 기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민청훈련소를 개편하여 3개 예비사단으로 편성하였는데 신의주에 제13예비사단, 숙천에 제10예비사단, 평강에 제15예비사단을 각각 신설 배치하였다.[90] 즉, 1949년 10월 북한은 3개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17세부터 30세까지의 청장년을 강제 징집하여 이들 예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지방 청년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훈련소는 실질적으로 보병사단에, 훈련지소는 보병연대에 상당하였다.[91]

제1민청훈련소는 평안북도의 징집자를 대상으로 신의주에 본부를 두고 예하에 제1훈련소(신의주), 제2훈련소(남 신의주), 제3훈련소(용암포)를 설치하여 신병을 훈련, 1950년 3월에 여기서 양성된 병력과 중국에서 조선의용군 출신 1개 대대를 인수받아 사단편제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중순에 정식으로 북한군 제13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빨치산파의 최용진이 보임되었다.

제2민청훈련소는 평안남도의 황해도 지역의 징집자를 대상으로 숙천에 본부를 두고 예하의 제4, 5, 6훈련소에서 신병을 훈련, 1950년 3월부터 사단편제로 편성하기 시작하여 1950년 6월 중순에 사단편성을 완료하여 북한군 제10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이방남이 보임되었다.

제3민청훈련소는 함경북도의 회령에 본부를 두고 예하의 제7, 8. 9훈련소에서 신병을 훈련하였고, 1950년 3월부터 사단편제로 편성하기 시작하여 1950년 6월 중순에 사단편성을 완료하여 북한군 제15보병사단이 되고 사단장에 박성철(朴成哲)이 보임되었다.

신편된 3개 사단은 모두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 및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어 타 전투사단에 비해 편제는 동일하나, 장비와 병력 수, 훈련면에서 전력이 떨어지는 예비사단 수준으로 남침작전 초기에는 직접 참전하지 못하고 7월 이후에 참전하게 된다.[92]

한편 1948년 10월 15일 진남포(鎭南浦)에서 창설되었던 제4독립혼성여단은 1950년 4월 제2사단에서 1개 연대와 조선의용군 출신 1개 연대(중국 정주에서 중공군 독립 제15사 편성시 별도로 1개 독립연대를 편성 입북한 연대)를 인수받아 북한군 제4보병사단으로 승격하였다. 예하에는 제16, 17, 18연대와 포병연대로 구성되어 완편 사단이 되었고 사단장에는 연안파인 이권무(李權武)가, 사단 참모장에는 허봉학(許鳳學)이 보임되었다.

이리하여 북한군은 증강되었고 특수부대인 제105전차여단, 122㎜ 포병연대, 고

<표 3-16> 북한군 사단의 증편표(1948.10-50. 6)[93]

부 대	사령부	지휘관	창설 시기	창 설 경 위	예속 부대
제 4 사단	진남포	이권무	1948.10	총사령부직할부대	제16·17·18연대
제 5 사단	나남	마상철	1949. 8	중국 제164사	제10·11·12연대
제 6 사단	신의주	방호산	1949.10	중국 제166사	제13·14·15연대
제12사단	원산	전 우	1950. 5	중국제15사 동북의용군	제20·31·32연대
제10사단	숙천	이익성	19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와 평남지역 병력	제25·27연대·제107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최용진	19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지역 병력	제19·21·23연대
제15사단	화천	박성철	19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북지역 병력	제45·49·50연대

사포연대, 기동보병연대, 공병여단, 통신연대를 비롯하여 제1, 제2군관학교 및 북방유격대 등 그 병력은 총 14만 8,680명에 달하였고 그밖에 내무성의 각종 경비대와 보안대의 병력이 34,000명에 이르렀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3개 사단의 신편과 4사단의 완편, 중공군에서 1개 사단(제12사단)이 추가 편입됨으로써 북한 인민군은 총 10개의 보병사단(제1·2·3·4·5·6·12·10·13·15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군 보병사단은 제5, 제6, 제12사단 외에도 중공군이나 소련군에서 입국한 자들이 보충되어 전체 병력의 1/3이 전투유경험자들이었고, 완전 편성은 11,000명이었다. 이들은 소련제 61㎜/82㎜/120㎜ 박격포, 76.2㎜/122㎜ 야포, 45㎜ 대전차포, SU-76 자주포 등으로 장비되어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였다.

5) 전차부대의 창설과 확장

해방 후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 제25군 예하에는 10기계화사단이 있었다. 이 사단은 평양 사동(寺洞)에 주둔하면서 북한군 기갑부대 창설의 모체 역할을 하였다.[94] 1947년 5월경 소련군 제10기계화사단은 북한군 전차 승무원의 훈련을 위해 북한군 각 부대에서 선발된 요원 400명을 소집하였다.

북한군의 전차부대의 창설은 북한군의 건설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평양에 배치된 소련 제10기계화사단에 전차장, 운전병, 포장, 기술병 등과 자주포 분야 및 전차 전문군관 등의 전문분야에 따라 전차병 양성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들은 장차 북한에 창설될 전차부대의 기간요원으로써 3개월 훈련을 수료하였고 이 병력을 근간으로 1947년 12월 북한군 최초의 전차부대인 제203독립교육전차연대를 창설하였다.[95]

북한군은 1947년 말부터 각 지방당과의 연락 하에 주요도시 고급중학교에 체육교원 명목으로 전차 기술병을 위장 침투시켜 유능하고 체격이 좋은 재학생들을 선발했다. 이 학생은 전차운전, 포 조종, 수리, 지휘, 통신 등 전 분야에 걸친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5월에는 제203교육전차연대에서 최초의 교육생들이 배출되어 전차부대 창설에 투입되었다. 제203연대는 전차부대 병력뿐만 아

니라 각 보병사단을 위한 6개 자주포대대 병력과 차량화연대 운전병들도 배출하였다.[96]

이때 잔류한 소련 전차연대는 150대의 T-34전차[97]와 3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한인 2세인 뾰돌(최표덕 : 崔表德) 중좌가 지휘하고 있었고, 동 연대내에는 약 70명의 통역관(모스크바 동양대학 조선어과 출신)을 배치하고 있었다. 소련군 전차연대장 뾰돌 중좌는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 및 동만주, 대일전에도 참가하여 소련정부에서 전투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후에 북한군으로 편입되어 소장까지 승급된 인물이었다.[98]

한편 북한군은 1949년부터 전차부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1948년 12월 3일 뾰돌 전차연대가 군사고문관 15명을 잔류하고 마지막으로 철수할 때 T-34전차 60대, 76㎜ 자주포 30대, 사이드카(모터찌크) 60대, 차량 40대를 북한군 제105전차대대로 인계하였다. 이 장비를 인수한 북한군 제105전차대대는 제115전차연대로 증편 및 개편된다. 이때 연대는 2개 전차대대와 1개 자주포대대를 중심으로 하여 공병, 통신, 수리중대와 군의소(軍醫所)가 편성되어 있었다.[99]

1948년 12월 25일 모스크바 전략회의에 따라 소련 특별 군사사절단이 입북하여 전차부대의 창설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사절단의 대부분이 기갑전술의 권위자들로 남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전에서 기갑부대의 활약에 의한 전과가 컸었기 때문에 지상군에 있어 기갑의 비중을 중시하고 있었다.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군 사절단 40여명은 대부분이 기갑분야 전문가였다. 스티코프 대장을 수반으로 하는 사절단은 장군 5명, 대령 12명, 중령~대위급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군 5명 중 자하로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카투노프와 쿠바노프(Kubanov) 등은 모두 기갑전문가였다.

1949년 5월 초순에는 군관강습소 졸업생을 대량으로 임관시키는 한편 전차연대를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으로 개편하여 유경수(柳京洙)를 소장으로 승진시켜 여단장에 보임하였다.[100] 교육연대 교육생들을 바탕으로 3개 전차연대로 편성된 제105전차여단, 1개 차량화연대 및 수색대대(모터사이클) 등이 창설되었다.

전차반입과 장비문제는 쿠바노프가 지휘하고 연료문제는 크리크프와 코트레프

가 담당하였다. 소련 군사사절단은 북한군 기갑부대를 무력 남침의 주력부대로 육성하고 전차부대를 비롯하여 자주포 싸이드카, 자동차, 수송부대와 해군선박, 그리고 공군에 이르기까지 전군의 원활한 기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료문제 해결을 서둘렀다.[101]

그러나 북한에 도착한 이들은 한국 지형을 분석하여 산악과 하천이 많아 전차부대 운영이 부적합하며, 또 한국군의 대전차 장비가 빈약하므로 구태여 많은 전차를 보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계획했던 전차 500대를 그 반으로 감소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소련군 철수시 인수한 장비로 편성된 전차연대(2개 전차대대+1개 자주포대대)는 부대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 동 연대내에 군관 및 전사강습소를 개설하여 전차병 및 전차군관을 대량 양성하여 1949년 5월초에 졸업시키는 한편, 1945년 말 현대전의 기술훈련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련으로 유학 보낸 약 1,000명의 인원이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자 이들을 전차연대의 기간요원으로 배치하였다.

소련군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차를 지원 받아 1949년 5월 16일에 전차연대를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으로 증편하게 되어 3개의 전차연대, 1개의 기동화연대, 1개의 자주포대대를 주축으로 편성하고, 120대의 전차와 병력 6,000명을 갖는 여단으로 증편하였다.[102]

여단의 편성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34전차 40대씩을 보유하는 3개 전차연대(제107, 제109, 제203연대)와 2,500명의 병력과 차량으로 구성되는 제603차량화연대, 76.2㎜ 자주포(SU-76) 64대로 구성되는 자주포대대, 200대의 모터싸이클로 구성되는 모터사이클대대, 통신대대, 공병대대, 운수대대(수송대대), 그리고 전차 수리소와 군의소가 추가적으로 창설되어 배속되었다.[103]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은 예하부대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다.

여단본부 및 직할대대 : 평양 사동
제107전차연대 : 평양 사동
제109전차연대 : 황해도 남천

제203전차연대 : 강원도 철원
제603차량화연대 : 평양 사동

제105전차여단의 편제상 전차 대수는 120대로 1개 전차중대 편제상 4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1개 전차대대는 3개 전차중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중대 전차 12대(3개 중대×4대)와 대대장 전차 1대로 총 13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1개 전차연대는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대대 전차 39대(3개 대대×13대)와 연대장 전차 1대로 총 4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차여단은 3개 전차연대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3개 연대의 전차 총 대수는 120대(3개 연대×40대)가 된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 편성된 제208교도연대는 전차 교육연대로 잔여 30대의 전차를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 이 교도연대는 새로운 전차부대 창설의 모체가 되었다.

제105전차여단은 날로 병력과 장비가 증강되어 1949년 8월초까지는 모터찌크 300대, 트럭 200여대, 지프차 100여대가 새로 소련에서 반입 증강되었고 동월 말에는 여단직속 교도연대가 신설되어 각 사단에서 고급중학 중퇴이상 건강한 자들을 차출하여 훈련시켜 동 여단에 배치하였다.

소련제 T-34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

동 여단은 1949년 10월에 동 여단 주력부대인 제109전차연대가 황해도 남천 38선 접경으로 이동 배치되었고 제203연대는 강원도 철원에 주둔하게 되었다. 평양 사동에는 여단본부와 주력부대인 제107연대와 제208교도연대만이 남게 되었고 제105전차여단은 1949년 8월 이후 학술적인 실내교육을 대폭 줄이고 주로 야전에서 전술훈련에 치중하였다. 1949년 10월 하순 북한 민족보위성에서 실시한 전군 대기동 작전훈련에서 동 여단이 가장 우수하다는 표창을 받았고 전투부대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군 모터 싸이클 정찰대

1950년 4월말에 소련에서 장비가 청진항을 통해 도입되었다. 즉, 중형전차 100대, 싸마호트 60대, 트럭 150대 그리고 각종탄약, 부속품, 유류 등이며 동시에 병력보충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 4월말까지 제105전차여단은 8,800명의 병력과 T-34형 전차 258대, 싸마호트 154대, 모터찌크 560대, 트럭 380대 등의 막강한 병력과 장비로 증원되었다. 이 무렵인 동년 5월 장갑차량 및 모터사이클 등으로 장비된 제603경기계화(모터사이클) 연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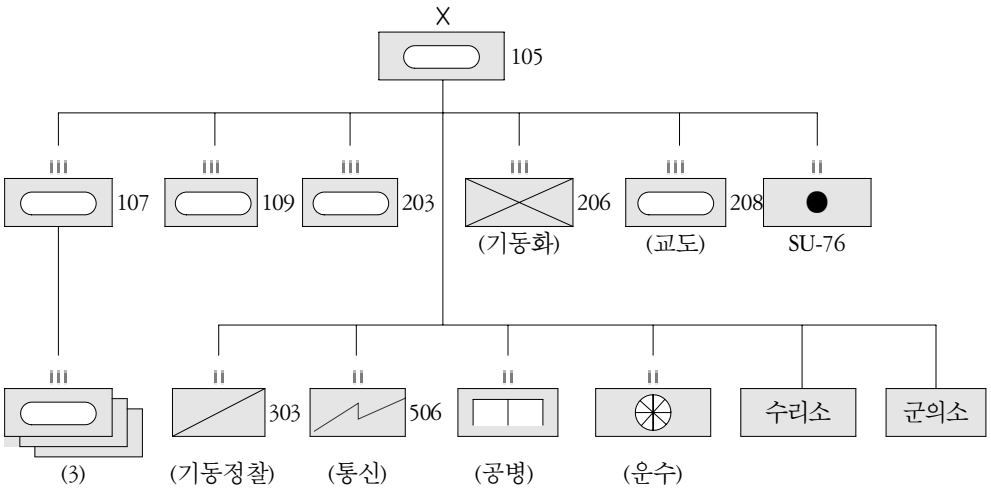
북한군 장갑차 싸마호트

창설되었다.[104]

그리하여 1950년 6월 초 나남에서 T-34전차 30대로 독립전차연대를 창설하였고.[105] 이후 약 90여대의 전차로 제16, 제17전차여단 등 2개 여단을 추가로 창설하게 된다. 1950년 6월 6일 철원에서 제16전차여단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이 여단은 각각 21대의 T-34를 보유한 2개 전차대대, 각각 450명의 병력을 보유한 2개 차량화 저격대대, SU-76 8문을 보유한 1개 포병대대, 76㎜ 대전차포중대, 자동소총중대, 공병중대, 통신중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전차 여단의 병력충원은 전차병은 제204교육전차연대에서, 차량화저격병은 징병자들로부터, 포병 및 박격포병은 23일에서 30일간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연대에서 각각 충원되었다. 제16전차여단에는 T-34 전차 44대가 동년 6월 16일에 지급되고 7월 28일까지 단계적으로 조직되었다.[106]

T-34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 육군의 표준 중형 전차로 그 제원은, 중장갑 철판으로 보호된 중량 32톤(완전 탑재시 35톤)이며, 85㎜ 전차포 이외에 7.62㎜기관총 2정이 장착, 전차포탄은 55발을 탑재, 전차 엔진 출력은 디젤기관 493마력, 속도는 시간당 30~40마일, 전차승무원 탑승은 5명 등이다. 이 T-34전차에

<표 3-17> 북한군 전차여단 편성



소련제 SU-76 자주포

대해서 당시 한국군이 장비하고 있었던 대전차화기인 57㎜ 무반동총과 2.36″로켓포로 이 전차의 전면을 명중시켜도 파괴되지 않았다.

북한 기갑부대 운용은 소련군 개념을 모방하였다. 이에 한반도의 지형여건, 기갑여단의 규모, 소련군의 보전협동 전술개념 등을 고려하여 보병사단의 지원개념으로 사단에 배속 운용되었다. 그러나 이 여단은 소련군 편성에 비하여 50% 이하의 수준이었고, 중전차연대, 박격포연대, 대공포연대, 로켓발사연대가 없는 상황이었다.[107] 전쟁개시 전까지 북한은 T-34전차 총 258대를 비롯하여 자주포 142대, 모터찌크 560대, 트럭 380대의 기동화 장비를 보유하게 되어 제105전차여단에 추가하여 새로운 전차부대를 창설할 능력을 보유하였다.[108]

6) 해·공군의 창설과 확장

(1) 해·공군의 창설

1945년 10월 하순 이후 각 보안대 창설과 함께 북한의 동서해 각 해안지대에는 북한 해군의 모체인 수상보안대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46년 7월 원산에 수상보안대 사령부를 정식으로 설치하면서 동서 양 해안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동해 수상보안대, 서해 수상보안대를 예속시켰다.

수상보안대 사령부는 창설 1개월 후인 1946년 8월에 동서 해안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양으로 이동하여 사령부를 확장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다. 동해 수상보안대 예하에 속초(束草), 장전(長箭), 서호진(西湖津), 신포(新捕), 고저(庫底) 등의 7개소에 동해 수상보안지대를 설치하였다가 원산·경비위수사령부로, 서해 수상보안대는 진남포 경비위수사령부로 각각 개칭하고, 청진에 추가로 청진 경비위수사령부를 신설하였다.

해안경비대의 초기 간부 충원은 평양학원과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출신자였으나, 해상 근무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근무 중에 많은 기술적 문제가 야기되자 1947년 7월 8일에 해안경비대 간부를 양성하는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창설하여 항해, 기관, 함상포, 해안포 등에 대한 전문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가 장차 인민해군 군관학교의 모체가 된다. 해안경비대는 북한군이 아닌 내무성 관할하의 해안경비대로서 존속하고 있다가 1949년에 가서야 민족보위성 예하로 예속변경(1949년 8월 20일부)되면서 북한군 해군으로 발족하게 되었다.[109]

해안경비대는 내무국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의 창설시 6천여명으로 증강되었다. 교육기관은 1947년 6월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가 설치되었으나 '조선인민군'이 창설되면서 북한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병력보충은 지방당원 또는 당 간부의 추천에 의하여 모집하였고 교도대에 입대시켜 사상교육과 제식교련 전투훈련, 사격술 등을 연마시켰으며, 1947년 5월에는 대원을 20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동안 해안경비대의 간부들은 평양학원 단기출신과 북조선중앙간부학교출신들을 임용하여 배치하였으나 기술문제가 대두하게 되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1947년 6월 16일 원산에 신설하였다. 이것이 다시 발전하여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에 따라 병력도 6,000명으로 증가되고 간부학교도 북한군 해군 군관학교로 개칭되면서 원산에다가 훈련소만 남기고 청진시 신암동으로 이전하였다. 초대교장에 김광연 소장, 부교장에 김원무, 기술부교장(성명 미상), 군사부교장(성명 미상), 후방부교장(성명 미상), 정치부교장 소정철 총좌가 각각 임명되

었다.

해군군관학교 내에 기술훈련소를 설치하고 초대소장에 김엽 중좌, 후방부소장(성명 미상), 교육부소장 서덕철 중좌, 군사부소장 김명호 총위, 정치부소장 김웅빈 상위가 각각 임명되었다. 1949년 9월 제1기생 250명이 1950년 5월에, 제2기생 750명이 각각 졸업하고 기술병도 배출되었다.

한편 북한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로 출발하였다. 실제, 신의주 항공대의 시발은 1945년 9월부터였고, 1945년 10월 25일은 신의주항공대 제1기생의 입대일을 기준한 것이다. 신의주항공대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항공학교 출신인 이활(李闊)과 중국 비행학교출신 왕연(王連)이 중심이 되어 임운봉(林雲峯), 김명하(金明河), 강대용(康大鏞), 윤응열(尹應烈), 이세영(李世英), 이영일(李英一) 약 50여명을 규합하여 일본 항공학교 출신 20명과 중국 비행학교 출신 약 10명, 만주군 출신 및 기타 각 항공계에서 근무한 기술자 20여명을 포함한 약 50여명이 주동이 되어 당시 소련 점령군 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민간조직기구로 신의주에서 발족하였다.

이활은 신의주에 소년항공대(少年航空隊)를 조직하면서 평양 대동문 옆에 민간항공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과거 항공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규합하여 입대시키기 위한 사전준비였다. 이활은 제2차대전 종전 당시 비행시간 2,000시간의 기록을 가졌고 북한 항공계에서는 가장 비행기록이 많은 인물이었다. 신의주비행장 소련공군 주둔사령관 막시노프 소좌는 북한의 각 비행장에 있는 사용 가능한 95식 고급연습기(구 일본군비행기)를 모아 신의주항공대에 인계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평양을 비롯한 함흥, 청진, 회령 등 여러 곳에 조선항공협회(朝鮮航空協會)를 결성하였는데, 이를 북한의 공식 전사기록에서는 항공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공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규합하여 신의주 항공대에 입대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민간 조직체인 신의주 항공대를 장차 북한 공군의 창설 모체로 이용할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110]

신의주항공대의 편제는 조종교육대, 정비교육대, 통신교육대로 편성되었다 항

공관계에 경험이 있는 자와 학력이 우수한 자 80명을 선발하여 입대시켜 본격적인 교육에 임했다. 이들이 인계받은 일본제 95식 고급연습기 3대를 수리하여 동년 11월에 신의주, 평양, 정주, 진남포, 청진간 비행훈련을 개시하였다.

당시 이 신의주항공대는 공산당과 소련군사령부와는 관계없이 이활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민간성격을 띤 항공대였다. 신의주항공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년항공대는 이미 흡수되고 말았고, 한편 소련 군정당국과 북한 공산당은 점차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신의주항공대 간부들에게 민청에 가입토록 강요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에 진주하고 있던 소련공군 맥심 소좌를 신의주항공대에 초대 고문관으로 취임시켜 이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제1기생으로 입대한 인원은 전국 각지의 조선항공협회 회원 및 열성분자 중에서 학력이 우수한 80명을 선발하여, 조종과에 30명 정비과에 30명, 통신과에 20명을 각각 입대시켰으며, 동년 2월 23일에 제2기생 160명을 모집하였다.

그간 일본, 중국, 소련 등지에서 귀국한 항공관계자들이 입대하여 인원이 400명에 이르게 되자 훈련장소와 경비관계로 1946년 5월에 신의주에서 평양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평양으로 이동한 신의주항공대는 1946년 6월에 제2기생이 졸업하고 이어 제3기생을 모집하였다. 1946년 2월 23일 제2기생 160명이 입대했을 때는 신의주 항공대 총 인원이 400여명으로 늘어나 시설과 훈련장이 부족하여 1946년 5월에 평양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평양 비행장으로 이동한 신의주 항공대는 그 다음 달인 1946년 6월 26일에 제2기생을 졸업시킨 후 평양학원의 항공중대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민간단체 성격의 신의주 항공대는 군사조직의 평양학원 항공중대로 변모하였다.[111]

신의주 항공대가 평양학원에 편입된 직후인 19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500명을 대량 입교 졸업시켰다. 평양학원내에 훈련용 활주로가 있었고, 종전에 사용하던 일본제 95식 고급연습기 3대만으로 훈련하였다. 그들은 주로 이론교육에 치중하였고 자연 1기생 졸업이 늦어졌다.

1947년 5월 17일 인민집단군 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평양학원 항공중대의 기

간요원과 항공과 요원들을 기간으로 하여 1947년 8월 20일 정규 비행대를 창설하고 평양학원에서 독립하여, 집단군 총사령부 예하의 항공학교 체제에서 정식 항공부대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항공과장에 왕연, 부과장에 이활이 부임되었다. 비행훈련은 연습기의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반면에 사상교육과 기술이론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 날을 기념하여 1982년 이래로 8월 20일을 '공군절'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북한군이 건군되던 1948년 2월 8일 비행대대로 증편되었다.[112]

(2) 해·공군의 확장

북한 해군은 북한군이 창설된 후 일년이 지난 1949년 8월까지도 내무성 산하의 해안경비대로 존속하다가 1949년 8월 20일 민족보위성으로 관할이 이관되면서 북한군 해군으로 공식 발족하게 되었다.[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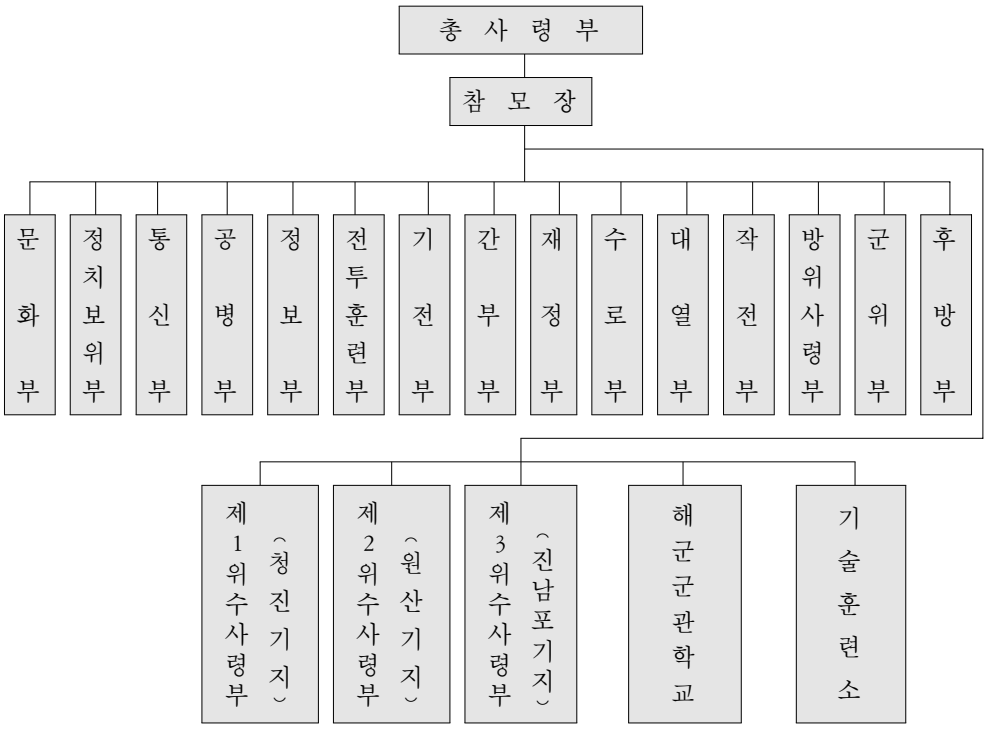
청진기지에 제1위수사령부를, 원산기지에 제2위수사령부, 진남포기지에 제3위수사령부를 두었고, 해군군관학교, 기술훈련소 등을 총사령부 산하에 두었고, 소련의 지원으로 30여 척의 대·소형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병력은 총사령부에 약 1,000명, 원산기지에 4,750명, 청진기지에 3,920명, 진남포기지에 5,000명, 해군군관학교에 500명, 기술훈련소에 200명, 정대에 200명, 총 15,270명이었다.

장비도 초기에는 일본 경비정 및 발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49년 12월에는 소련군의 군사원조로 대·소형 35척(5,560톤)의 소형함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군의 면모가 갖추어지자 해군장비와 해군기지를 경비할 목적으로 1950년 5월 중순 원산과 진남포에 각각 1개 대대병력으로 육전대를 신설하였다.

원산기지에 있던 제2위수사령부 직속 육전대는 원산 송도에 1개 대대병력으로 원산기지의 경계업무를 맡아 왔으며 남침이 개시되자 남해여단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진남포기지에 있던 제3위수사령부 직속 육전대도 진남포 기지를 경비하는 임무에서 남침 직전에 북한군 제4사단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50년 5월 1일부터 원산과 진남포의 2개소에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표 3-18> 북한 해군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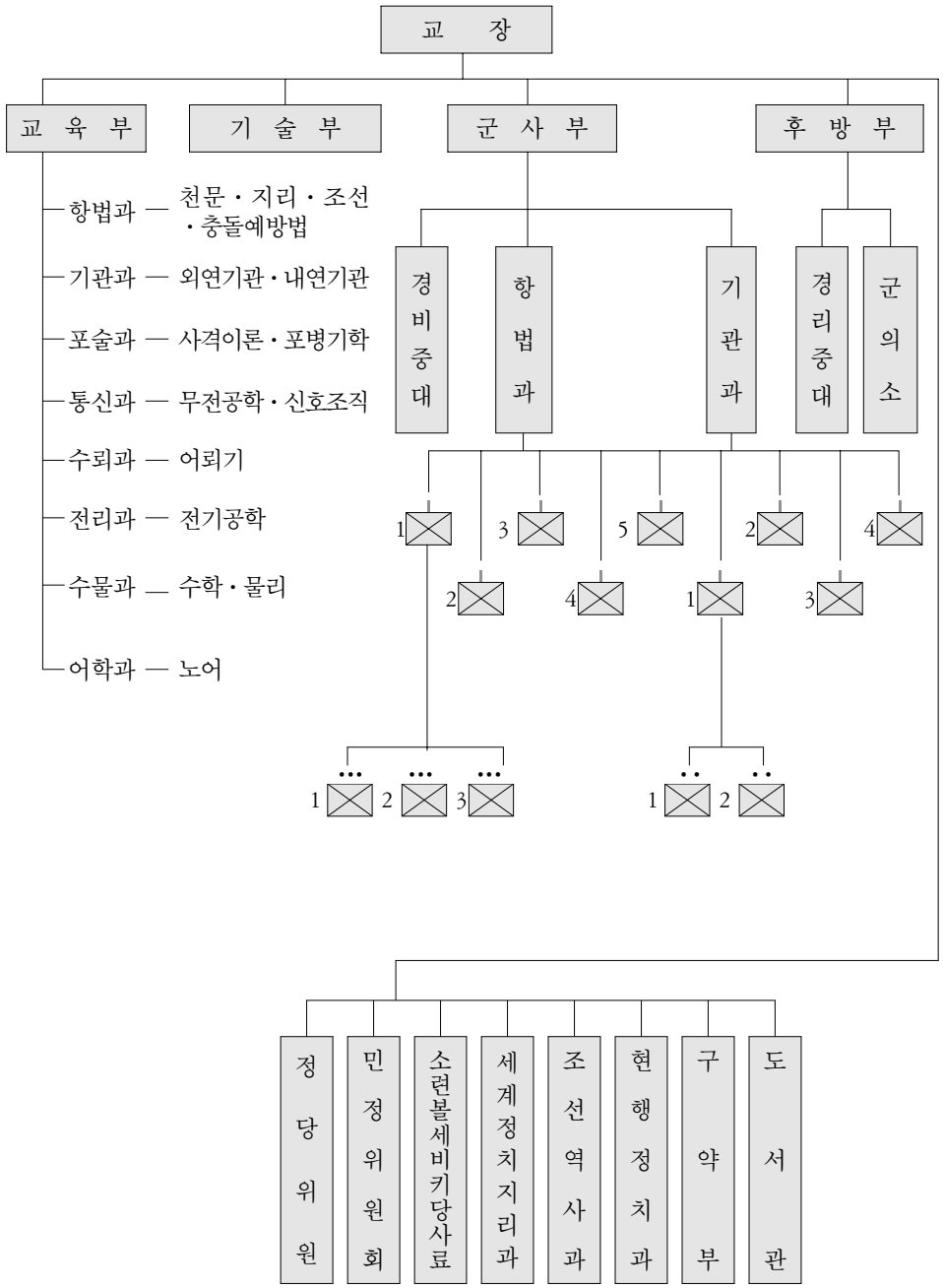


육전대(한국의 해병대와 동일)를 창설함으로써 총 병력은 15,27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북한군 해군은 6.25당시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그리고 남해안의 백령도에 제549 육전대와 유격대를 해상으로 침투 상륙시키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북한 공군은 '조선인민군' 창군 이후 평양학원 내에 속해 있던 비행대대는 공군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민족보위성에 배속되게 되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이 1949년 1월에 도학리에서 평양 만경대로 이전하면서 제2군관학교로 개편되자 평양학원에 속해 있던 비행대대도 독립하여 평양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

평양학원에서 완전 독립한 비행대대는 비행연대로 증편하여 습격기대대, 추격

<표 3-19> 북한 해군군관학교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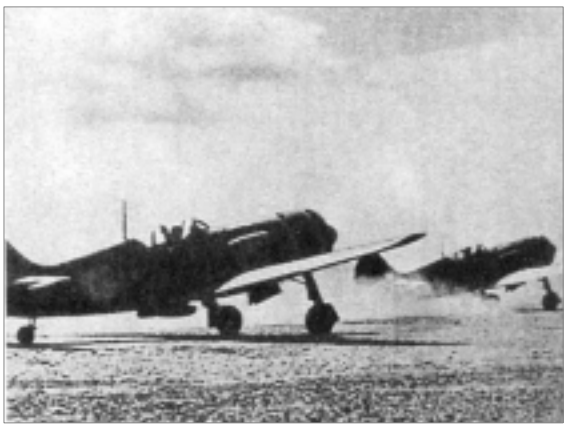
기대대, 교도대대, 후방지원대대 등으로 재편하였다. 비행연대장에 왕연, 지휘부연대장에 이활이 임명되었고, 정치부연대장·기사부연대장 김영수 등은 과거 소련공군에서 복무하던 소련 2세들이 임명되었다. 참모장에는 김만용, 습격기대대장은 최현옥 등이 배치되어 조종사 양성에 주력을 두었다.

소련군 당국은 본격적인 북한공군의 육성을 위해 고문관을 파견하였는데 연대에 수석고문을 두고 각 대대에 2명의 고문관을 배치하여 비행연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하였고 소련군 정비하사관들은 정비사들을 양성하였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소련 방문시 총 150대의 항공기(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를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항공부대를 확장하였다. 또한 교육요원 40명을 소련으로 재 파견하기도 하였다.

북한 공군은 먼저 1차분으로 1949년 8월 중순 IL-10형(전폭격기)과 YAK-9형(전투기) 항공기 총 30대를 지원받아 같은 해 12월에는 항공연대를 항공사단으로 증편하였다. IL-10 전폭격기는 승무원 2명, 중량 6,350㎏ , 최대속도 456㎞/h, 무장 23㎜ X 2, 폭탄 1,000㎏의 제원을 갖고 있었다.[114] 그리고 공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한 무선통신은 RAF 무전기, 폭격기용 무전기, LBM 무전기, US 무전기, 충전기, TAI-43 무전기, 야전전화, PK-30, K-10 무전기 등이었다.[115]

이리하여 장비증강과 병력증가로서 드디어 1949년 12월에 비행연대를 항공사단으로 증편하기에 이르렀다. 사단편제를 보면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 교도연대, 공병대대로 편성되었고 각 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공병대대는 3개 중대로 조직되어 주요 항공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평양비행장, 습격기연대는 연포 및 평강기지,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



북한 YAK-9 전투기

기지, 교도연대는 연포기지 등에 각각 배치되었다. 사단장에 왕연, 비행부사단장에 이활이 각각 임명되었다.

습격기연대의 임무는 야전 비행장으로부터 2대씩 이륙하여 편대를 이루고 단전투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순환 전투대형으로부터 항공기 1대씩 급강하하여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총사격을 실시하며, 통상적이 기상조건하에서 주간에 중·저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추격기연대는 제한된 규모의 비행장에서 2대씩 편대를 이루어 집단 전투대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폭격기들을 동반하여 항로비행을 실시하며 편대단위로 중고도에서 육안정찰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통상적인 기상조건하에서 주간에 중고도로 편대를 이루어 항로비행 및 공중전 수해훈련을 실시하며 비상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비상출격을 실시하고 매복 비행장으로부터 적 비행기에 대처할 작전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었다.[116]

사단사령부를 평양비행장에 두고, 비행 행동반경을 넓히기 위하여 대남공격기지를 38선 근처인 평강 및 신막에 비행장을 신설하여 습격연대는 연포 및 평강기지에 배치하고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 기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리고 교도연대는 습격기연대와 같이 연포비행장에 있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시키는 훈련부대인 것이다. 그래서 동 연대 내에 이론교육대대와 YAK-18 교육대대가 있어 전투병력 증가에 주력을 두었다.

동년 12년 월말에 비행사단으로 확장하는데 따르는 항공관계병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소련에서 북한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양성하였다. 동년 10월에 졸업한 제1기생들은 비행시간이 40시간 정도였으며 겨우 조종할 정도였다. 이들이 졸업하자 성적이 우수하고 소위 당의 열성분자 40명을 선발하여 소련 우라실로프에 유학을 보내어 습격기 조종과 추격기 조종훈련을 받았다. 한편 교관들도 소련 키에프(Kiev)에 있는 연합공군사령부에 보내어 지휘관과정을 받고 1949년 말 입북(入北)하였다.

이리하여 1950년 4월부터 IL-10, YAK-9 등 약 60대를 새로 소련에서 지원을 받아 추격기연대와 습격기연대에 배치하였고, 동년 6월 18일 남침을 1주일 앞두고

6·25당시 운용된 IL-10 전폭기

소련에서 연포비행장에 IL-10, 60대를 소련군조종사들이 직접 몰고 와서 인도해 주었다.[117] 주공격전력인 야크전투기와 일류신폭격기는 제트기의 출현 이전에는 상당히 우수한 항공기로 평가되고 있었다.[118]

1950년 4월에 들어서 북한의 비행사단에 소련제 작전용 항공기가 대거 지원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1949년 3월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는 공군전력 지원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북한 공군은 1950년 봄까지 편제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군병력도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훈련되었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소련의 공군기지와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당시 이들은 평양을 비롯하여 신의주·안주·청진·연포·평강·신막 등 10여개 기지를 운용하였다. 북한 공군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IL-10 62대, Yak-3 Yak-7B 70여대, 전투기 132대, 수송기 3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포(신포)비행장에 YAK-7B, 10대, YAK-11 12대, IL-10 18대 그리고 신막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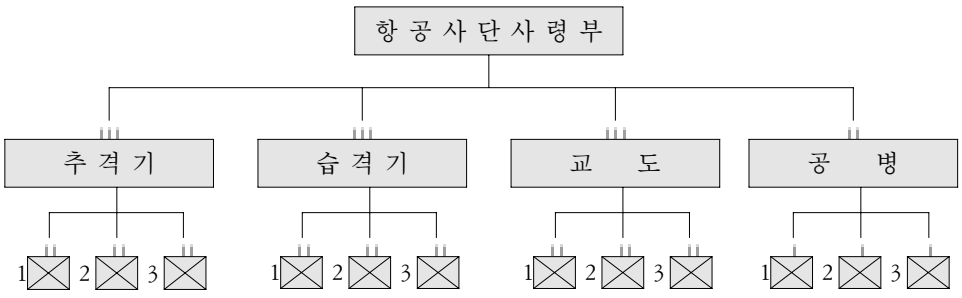
장에 YAK-7B 10대, IL-10이 2대, 평양비행장에 YAK-7B 20대, YAK-11 2대, IL-10 48대 총 122대가 배치되었다. 습격기연대는 연포비행장에 배치되었고 추격기연대는 평양 및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전투비행사단의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로 훈련은 신의주비행장에서 YAK기로 전투비행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 비행군관학교 생도들의 훈련은 평양비행장에서 소제연습기 Y-2형과 YT-2형으로 조종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군 공군의 전투기 총 수를 보면 YAK형 100대 중 60대는 훈련기(물론 전투기로 사용도 가능하다)이고 40대가 전투기이다. 그리고 전폭기(IL형) 70대와 정찰기 10대를 합하면 실 전투기 총 수는 120~180대 정도의 규모이다. 이 전투기 총 수가 지상군의 전차와 보병 10개 사단에 비교해 보면 소련이 북한 공군에 대해서는 제한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공군의 열세한 전력(연락기 22대 보유)에 비해서 그 이상의 공군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차부대를 보유한 북한의 지상군만으로도 충분히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은 북한 공군이 막강한 공군력을 갖춘다면 일본까지 공격하게 되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의 자칼로프 장군의 지적에 잘 드러나 있다. 즉, 그는 북한에 강력한 공군을 창설하지 않은 이유를 "만일 인민군이

<표 3-20> 항공사단 편성



강력한 공군력과 유수한 기갑부대를 함께 보유한다면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해협을 건너 대마도 나아가 사세보까지 갈 지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본입장을 밝혔다.[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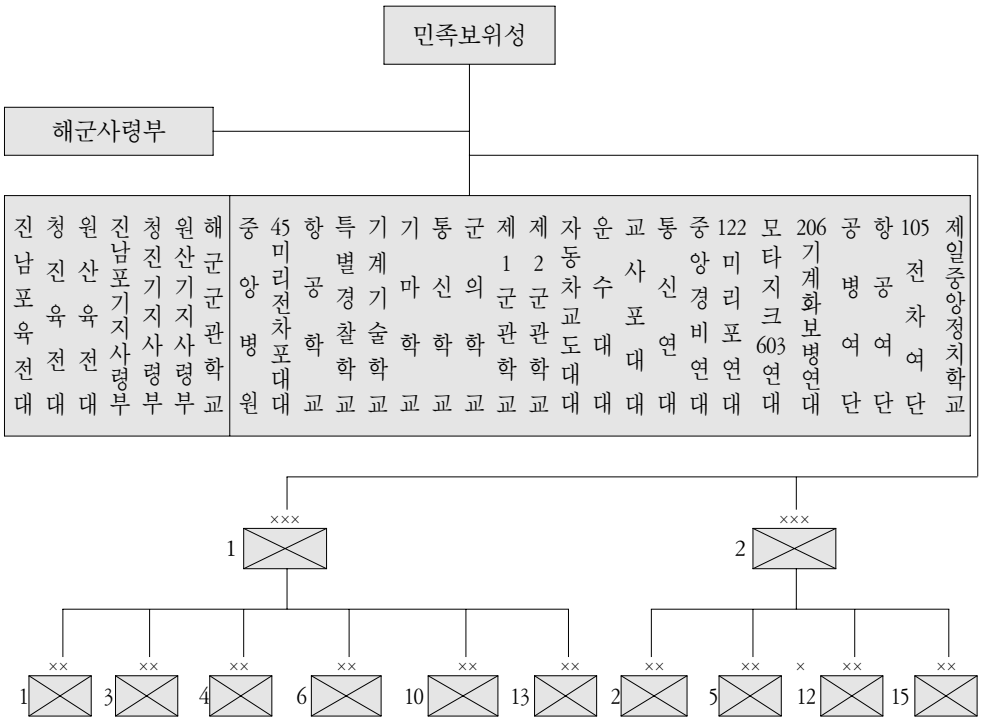
3. 민족보위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구체적인 침략방식을 내부투쟁에서 무력침략으로 방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의 공포와 더불어 북한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격상시키고 작전국 등 11개국으로 편성하여 각 군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날 김일성은 민족보위성 장관에 총사령관 최용건을 임명하였다.

이때 북한의 군사업무는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어 북한군은 민족보위성에서, 보안대와 국경경비대는 내무성에서 각각 관장하였다.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련군의 철수 때까지 소련군 정치사령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에는 소련군사사절단이 북한의 군사업무에 관여하였다. 민족보위성의 창설시 편성과 각 부서장은 <표 3－21>과 같다.

북한정권 수립 후 민족보위성이 조직되면서 북한군 전투서열은 민족보위상 최용건 대장, 부상겸 문화부 사령관 김일(金一) 중장, 포병부 사령관 무정 중장, 총참모장 강건 중장, 부총참모장 최인(崔仁, 왕자인) 소장 (황호림 : 黃虎林 후임), 전투훈련국장 김웅 소장, 총후방국장 최홍극(崔弘極) 소장, 작전국장 유성철(兪成哲) 대좌, 정찰국장 최원 대좌, 통신국장 박영순 대좌, 공병국장 박길남 대좌, 간부국장 이림(李林) 대좌, 군의국장 이동화(李東華) 대좌, 문화부국장 김일(金日) 소장, 포병부국장 김봉률(金鳳律) 대좌, 전투경험연구부장 유신(柳新) 대좌, 정치보위처장 석산(石山) 대좌, 민족보위성 고문단장 스미르노프(Smirnov) 소장 등이었다.[120]

<표 3-21> 민족보위성 편성



민족보위성으로 승격하면서 부참모장과 작전국장도 바뀌었다. 부참모장 황호림 소장(소련군 대위 출신)은 강건 총참모장과 소련 고문관들과의 마찰로 소련으로 귀국 당하고 그 후임으로 최인 소장(조선의용군 출신)이 임명되었다. 작전국장에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 시부터 류신 대좌가 작전부장에 보직되어 오다가 전투경험연구부장으로 전보되고 작전부장은 황호림 소장(부총참모장)이 겸직하고 있다가 소련으로 귀국함에 따라 겸직하고 있던 작전국장이 공석이 되자 당시 보안간부학교 군사부교장 겸 전술학부장 유성철 대좌가 1948년 9월 작전국장으로 보임되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석상에서 김일성은 정부의 시정방향인 소위 '정부의 정강'을 발표 하였는데 그 중 첫째 정강과 마지막(여덟

째) 정강이 주목된다. 즉, "그 첫째 정강(과업)으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 조선인민들을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 완정과 민족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 철거에 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정강으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북한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21]

이와 같이 김일성은 수상으로 취임 후 첫 과업으로 급속한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소 양군을 철수시킬 것과 북한군대를 최우선으로 강화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시정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렇게 군사업무 체계를 정비한 북한은 소련점령군의 장비를 인수받고 이어 중·소의 군사지원을 받아 급속히 군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전쟁물자와 장비의 지원은 물론 북한군 건설초기부터 군수뇌부, 각 부대 및 학교기관을 지도하였으며 각 사단에는 대좌급 사단장 군사고문관을 비롯하여 중대급까지 150명을 배치하고 전차부대·항공부대에도 전문고문관을 파견하여 전술훈련, 장비교환에서부터 정비 분야까지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북한군은 소련 군사교리로 무장되어 갔고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에트화로 촉진되어 갔다. 소련 군사고문관은 1948년 말 2천명 정도까지 증강되었으나, 소련군 철수와 동시에 대대급까지만 고문관을 유지함으로써 1949년부터 군사고문관을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대신 특별군사사절단이 파견되어 북한군의 전쟁준비를 직접 지도하였다.[122] 이들 군사고문관들은 평양의 소련대사관에서 각 부문사절단을 통제하며 본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북한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북한의 무력증강과 전쟁 구상은 김일성 정권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스탈린 ·모택동 3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당초 군정을 실시하면서 북한을 공산기지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한의 민중봉기와 폭동 및 반란을 유발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하였으나, 이러한 폭력적 방법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력수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그 사전 단계로서 이루어진 것이 소련군 철수문제였다.

소련군은 북한에 진주한 이래 1948년 말까지 3년 여간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 굳히기' 내지 소비에트화 하고 친소(親蘇)정부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력을 7만 7천명 수준으로 확장하고 탱크, 자주포, 항공기 등 현대화된 장비를 지급해줌으로써 북한을 대남한 무력혁명 기지로서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 놓고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

사실상 소련군은 1947년 9월을 전후하여 은밀히 철수하여 약 4만명 정도 유지하였으며, 북한주둔군사령관으로 치스차코프 대장에서 코르트코프(G.P Kortkov) 중장(1947. 4. 5), 메르쿠로프(Merkulov) 소장(1948. 6. 7)으로 각각 교대되었고, 1948년 9월 현재에는 증강된 1개 사단 정도가 잔류하고 있었다.[123]

1948년 12월초 소련군이 최종적으로 철수하자 국립예술극장의 소련군 환송 기념식을 비롯하여 각종의 환송행사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소련군의 철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회고담이 참고가 된다. 소련군 철수시 가장 마지막으로 철수한 소련 제25군 정치위원 레베데프 소장과 초대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간의 있었던 회고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치스챠코프 : 북한은 우리 소련군을 어떻게 환송했습니까?

레베데프 : 문자 그대로 모든 주민이 깃발과 꽃을 가지고 나와 소련군을 환송했습니다. 마지막 제대가 1948년 12월 1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역 광장에 소련군을 환송하는 수 만명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환송대회는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31일 마지막 제대는 한·소 국경도시인 홍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곳에 또 하나의 집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2시 30분 공식적으로 국경을 닫는 마지막 동작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의 중간에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 최용건이 서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단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편에는 우리 국경 수비대원들이, 맞은편에는 조선의 국경 수비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동지들이 꽃으로 가득 채운 차에 올라 조국의 강가를 향해 갔습니다.

치스챠코프 : 도로변에서도 우리 부대를 환송했습니까?
레베데프 : 수 천명의 주민들이 나오고 모든 것이 꽃에 묻혔습니다.[124]

이와 같은 소련군의 북한 철수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들끼리 통일문제에 대한 처리에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점이다. 소련군의 철수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무력통일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련군의 공식 철수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12월말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소련군의 장비를 북한군에게 이양함으로써 북한군은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했다.[125] 1948년 2월 8일 북한군 창군 당시 2개 사단, 1개 여단, 항공대대를 보유했었는데, 1948년 12월말까지 10개월 사이에 북한군은 소련군 철수시 인수한 장비로써 제3독립혼성여단이 제3사단으로 증편되고 제4독립혼성여단이 창설되었으며, 항공대대가 항공연대로 증편되는 등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북한군의 전력증강은 소련의 사회주의 구축 또는 소비에트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즉, 1948년 12월초 김일성은 소련군 완전철수를 앞두고 북한 군비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스티코프 대사는 동년 12월 9일 김일성의 요청 내용을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26]

1) 기존 1개 보병여단은 1만명 병력 수준의 사단으로 확충.
2) 경비여단을 토대로 6천명 병력 수준의 보병사단 신설.
3) 38선 경비여단을 각 3천 6백명 수준의 2개 보병여단으로 재편.
4) 정원에 맞춰 독립 탱크 및 자주포연대와 혼성비행연대에 물자 보충.
5) 북한 해안(동해와 황해) 경비부대 편성지원, 이를 위해 필요한 물자와 경험이 풍부한 소련 해안 경비군관 배정.

<상황도 3-3> 북한군 지상군 배치(1948. 10 현재)

이밖에도 김일성은 “당신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북한군에서 복무중인 217명의 소련 군사고문과 기술 인력을 잔류시키고, 새로 확충될 부대준비를 위해 182명을 추가로 증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일성은 확대, 재편되는 부대의 보충에 필요한 무기 탄약 차령 기술 및 통신장비 마필 짐마차와 개인장비에 대한 유상양도를 요청했다.

위의 스티코프 보고서에는, “현재 남한정권의 결정으로 가까운 시일 내 남조선군 수를 10만명으로 확충하기 위한 추가 군대소집이 진행 중이며, 남한은 해군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수와 무기에 대한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김일성 수상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북한군 부대를 위해 요구되는 무기와 동산에 대한 세부자료와 결산은 소련군 총참모부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스탈린의 결정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127]

이 전문에 스탈린이 여단급 부대를 사단으로 확대할 것을 염두에 둔 듯한 간단한 자필메모도 확인된다. 즉, 그는 소련군 총참모장 쉬체멘코 대장에게 “1개 여단을 사단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개 여단을 편성하며 자주포연대, 탱크연대, 비행연대를 각각 보충하고 이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고 지시하였다.[128]

스탈린은 김일성의 군사지원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쉬쩨멘코 총참모장이 즉각 이 지시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군사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물론 주요 사안의 경우 차후에 소련공산당 정치국이나 내각회의에서 추인 혹은 결정문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주 (註)

1) 북한군 창군과정에 관해서는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1967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한국발전연구원, 1991 ;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1・2, 정문사, 2001・2002 등이 주로 참고 되었다.
2)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1945년 8월 20일자 연설인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26.
3) 적위대는 경찰기능을 수행하다가 조직적인 보안기관이 출현하게 되는 10월 21일까지 존속하였다.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1(미간행), pp. 8-9.
4) 김광운, 『전쟁 이전 북한 인민군의 창설과정』,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p. 7-8.
5)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p. 66.
6) 평양 혁명열사능에 있는 현준혁의 묘비에는 김일성이 평양에 도착(1945. 9. 22)하기 이전인 '1945년 9월 3일 사망'이라 되어 있으나(『중앙일보』 1991년 9월 3일자), 이는 사후에 조작된 것이다.
7) 『북한15년사』, p. 68. 장시우는 공산당원으로 현준혁과는 일제시기부터 친구사이였으나 김일성의 빨치산파에 매수되었고 후일 산업상 및 북한군 중장까지 승진한다.
8) 『북한인민군대사』, pp. 37-38.
9)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년판), p. 58.
10) 이것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구상된 것이었다. 소련 외무성 극동과, 『한국의 조사보고』(1945. 6. 29), 전현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 1995, p. 10 재인용.
11)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는 1945년 말 1만명의 한인 무장력이 김일성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것이 '적위대'일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북한정보요약』, NO. 1(1945. 12. 1),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제1권,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pp. 13-14.
12) 이 보안대는 국내 차안용 무장력이지 결코 군사목적의 군대는 아니었고, 소련의 내무성 관할의 군대나 한국의 전투경찰과 유사한 성격의 부대로 1950년 6월 한국전쟁 직전까지 약 5만명으로까지 확장되어 간다.
1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8-9.
14) 소련군사령부는 1946년 1월 15일 북조선중앙은행 조직과 관련한 명령서 발표를 끝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공개적 관여를 중단하였다. 이후 공개적인 정치과정은 북한인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소련군사령부는 배후에서 개입 관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p. 3.
15) 『1945년 11월 27일 김일성의 지시』, 『김일성전집』 제2권, pp. 351-352.
16)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9.
17) 일부 연구에서는 철도보안대가 북한 정규군 창설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철도보안대를 북한군의 모체로 보았다. 그는 철도보안대가 합법적인 위장간판 아래 은밀히 군사 목적의 병력을 확보,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북한인민군대사』, pp. 45-47.
18)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5-16.
19)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김남식,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제12권, 돌베개, 1986 ;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75-677.
20) 『김일성저작집』 제1권, pp. 412-419.

2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17 ; 『북한인민군대사』, pp. 48-49.
22) 김일성이 혁명자유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처음 발언한 것은 1945년 10월 15일이었다. 『김일성전집』 제2권, p. 147 ; 이날 김일성은 "최근 남포시에서 반동분자들이 멸공단이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평양학원 일군들을 해칠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되었다"고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같은 책, pp. 471-472.
23) 평양학원은 정치반 군사반으로 구성되었는데 후에 정치반은 북조선공산당 중앙당학교로, 군사반은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로 분화 발전됨으로써 향후 북한 정치, 군사 분야의 신간부 양성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위와 같음.
24) 김일성은 조카 김원주와 그의 부인, 외삼촌 강용석, 할머니 리보익의 조카 김병렬을 비롯한 친척들을 제1기로 입학시켰다. 평양학원 출신자들을 통해 항일유격대집단을 핵으로 한 그룹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18.
25)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81.
26) 고문관의 숫자는 시기에 따라 일정치는 않으나 1947년 말 현재 약 150명이 각 사단에 배치되어 있었다.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4-15.
27)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p. 16-19.
28)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 665-666.
29) 북한은 정규군 창설을 위한 작업으로 1946년 6월 평남 개천에 보안간부훈련소를 설치하여 보안대원의 모집과 훈련을 담당하였다. 이어서 신의주에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나남에 제2소, 강계에 제3소를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였다.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77-680.
30) 『김일성전집』 제4권, pp. 109-110.
31) 일부 연구에서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와 중앙정치보안간부학교를 혼돈하고 있다. 박효삼은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장이 아니라 중앙정치간부학교의 교장이었다.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 pp. 661-662.
32) 이정희, 『북한요론』, 문현사, 1987, p. 245.
33) 『북한관계사료집』 제5권, pp. 665-666 ;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20.
34) 안승환, 『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정문사, 2002, p. 404.
35)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p. 405-406.
36) 기존 전사에는 보병, 포병, 공병중대로 편성되었다고 시술하고 있으나, 당시 전술학부장 유성철의 증언에 따라 보병, 포병, 통신중대로 수정하였다. 『북한인민군대사』, p. 51.
37) 제1기생 졸업날짜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여기서는 『김일성선집』 제1권, p. 481에 의거하였다.
38)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50년 10월에는 다시 강건종합군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토통일원편, 『북괴의 권력구조와 군당 숙청관계 연구』, pp. 9-10 ; 『북한인민군대사』, p. 123.
39)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80-682 ;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22.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설립은 당시 극비사항으로 추진되었으며, 1947년 2월 22일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 회의록에도 언급이 전혀 없다.
40) 국토통일원, 『북괴의 권력구조와 군당 숙청관계 연구』, 1977, p. 18 ; 한홍구(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돌베개, 1986, pp. 513-514 ; 간부부장은 최태환과 박창암의 증언에 따라 조훈을 이림으로 보완한 것을 따랐다. 『북한인민군대사』, p. 54.
41)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p. 293.

42)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pp. 93-100.
43) 『김일성전집』 제4권, p. 298.
44) 북조선보안국은 10월 4일 보안대원들에게 추수를 도우면서 "농촌에 잠복한 반동분자와 파괴분자를 적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23.
45)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집(1946. 9-1948. 3)』, pp. 66-67.
4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연구』 제1집, 1996, p. 23.
47)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3-15 ; 『북한인민군대사』, pp. 55-56.
48) 기존 전사에서는 1947년 5월에 이르러 미·소의 대립이 심화되어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자 보안간부훈련 제1소를 보병 제1사단, 제2소를 보병 제2사단, 제3소를 제3독립혼성여단으로 승격시켰다고 하였으나,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사단 승격은 이미 인민집단군 창설 이전인 1946년 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49) 제2군사령부가 실시한 『경보병 사단 검열 결과 총결자료』(1946. 12. 22), 러시아연방 국방성 문서보존소 소장자료(문서번호 불명),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25 재인용.
50)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25.
51)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94-95 ;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82-684 ; 『북한인민군대사』, pp. 63-64.
52)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95.
53) 북한에서는 해방직후부터 군사와 외교 등 주요 부문에 관한 문헌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문서의 경우에도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4.
54)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42.
55)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6, pp. 52-59 ; 『북한인민군대사』, p. 60 ; Kook-Hun Kim,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 Its Rise and Fall*, University of London, King's College, 1989, p. 64.
56) 제1, 제2경보병사단은 1946년 말에 창설되었으나 그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48년 3월 24일에 전투훈련국장 김웅이 제1사단장으로, 1947년 8월에 김책이 제3여단장으로 보직되었다.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94-95 ; 국토통일원(편), 『북괴의 권력구조와 군당 숙청관계 연구』, p. 19.
57) 육군본부, 『北傀 6·25 南侵分析』, 1970, pp. 39-41. 1948년 3월 24에 전투훈련국장 김웅이 제1사단장으로, 1947년 8월에 김책이 제3여단장으로 보직되었다.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94-95.
58)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 1981, p. 132.
59) 일부에서는 제1사단장 전승화, 제3여단장에 최민철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집단군사령부 대열과 출신인 최태환, 제1사단 3연대 포병연대장 출신인 정봉욱의 증언에 따라 수정하였다. 『북한인민군대사』, p. 62.
60)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1권, 부록 1-6.
61) 『조선경비대 예산』(1948), SN. 1(SN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번호, 이하 같음).
62)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9 ; 『북한인민군대사』, pp. 69-72.
6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9-75.
64)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p. 59.
65)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김남식,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제12권, 돌베개, 1986, p. 149. "제58차 북조선인민위원회 개최 48년도 종합예산 및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민족보위국을 설치할 것 등을 결정, 초대국장 김책 부위원장 겸임"이라고 하였다 ; 『북한인민군대사』, p. 75.
66) 『젊은 혁명가의 초상』, pp. 55-56.
67)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인민군』, 1948, pp. 2-6,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49 재인용.

68) 『북괴 6·25 남침 분석』, pp. 39-41.
69)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제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1949, pp. 76-77.
70)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4권, 1954, p. 346.
71) 『김일성 선집』 제4권, pp. 485-486.
72) 『젊은 혁명가의 초상』, pp. 58-59. 이기건은 후에 월남하여 국군 준장까지 승진한다; 『북한인민군대사』, p. 87-88에는 김웅을 사단장, 최광을 사단 참모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73)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85-686 ; 『북한인민군대사』, pp. 87-88.
7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11.
75)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0, p. 490.
76)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연구』, p. 40.
77) 『조선인민군의 남침과 패퇴』, pp. 154-157 ; 『북한인민군대사』, p. 123.
78)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연구』, p. 33.
79) 『북괴 6·25남침 분석』, p. 348.
80)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 7. 13), 외무부(역), 『소련외교문서』 제3권(미간행), p. 26.
81)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제655군부대 군관회의에서 한 연설』(1949. 7. 29), 『김일성저작집』 제5권, 1980, p. 201.
82)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2-63, p. 146.
8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148.
84) 중국군 출신 5만여명의 병력은 부대검열시 일반전투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시기 실전이 없는 사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1권, p. 167.
85)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p. 156. 이들은 소련무기로 교체할 시간이 없어 중국에서 가져온 무기로 참전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38경비 제7여단을 기초로 증편된 북한군 제7사단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전쟁발발 당시는 북한군 제7사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전 직후인 7월 초 제7사단이 창설된다(『여정수기』, 『동아일보』 1990년 4월 29일자). 3개의 국경경비여단이 개전 직후 3개의 사단으로 각각 증편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6·25전쟁보고서』 제1권, 신오성, 2001, 참조.
86)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154.
87)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56-158. 1951년부터는 북한군 장교들이 직접 만주한인 지역에 가서 병력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1951, 1952년 각 5~7천명 정도 모병 하였다.
88) 『내가 겪은 조선전쟁』, p. 167.
89) 염인호,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75-194 ; 『북한인민군대사』, p. 117 ;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41-52.
90)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18-119.
91) 민청훈련소 3개 예비사단 개편에 관해서는 『제3지소 1950년도 하기전투정치훈련계획표』 참조,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북한노획문서 ; 『북한인민군대사』, pp. 117-118. 사단으로 창설되기 이전 제1민청훈련소장으로 이익성이 보직되어 있었다.
92)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21-25, pp. 69-75. 민천훈련소의 사단화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훈련소가 사단으로 지정된 시기는 그 이후부터 전쟁이전 사이(6월 18일 무렵)이며, 그 후 제1·제2·제3 민청훈련소는 제13·제10·제15사단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93)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9-75.

94) 기갑부대는 전차를 주축으로 기계화 보병 등 제 병과가 통합된 부대를 의미한다. 기계화부대는 기계화 보병이 주축이 된다. 차량화부대는 도보보병을 차량으로 기동화 시킨 것이다. 전차부대는 순수한 전차로 편성된 부대이다. 한국전시 북한군은 기갑부대, 기계화부대, 차량화부대, 전차부대가 혼합 운용되었다. 박기련, 『북한군의 기갑부대 운용』,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193.

95)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0.

96)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1.

97) 북한 제105여단에 지원된 T-34형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군의 표준장비였으며 이것은 1941년 6월 대독전 당시 최초로 사용하였다. 주포 85㎜, 중량 32톤, 속도 55㎞/h, 포탄휴대량 56발, 항속거리 200㎞, 보조무장 7.62㎜ 기관총 2정, 승무원 5명 등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2권, p. 17.

98)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

99)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79-80 ; 『내가 겪은 조선전쟁』, pp. 165-166.

100)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196.

10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p. 195-196.

102) 소련군 뾰돌(최표덕) 중좌가 지휘하는 1개 전차연대가 잔류시 보유했던 총 150대의 전차 중 잔여분을 인계하였다.

103)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p. 11-12 ;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691-692.

104)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 12.

105) 『북괴 6·25남침 분석』, p. 348.

106)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pp. 27-28 ; 『북한인민군대사』, pp. 128-129.

107)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198.

108) 1개 연대에 36대의 전차를 보유하였으며, 64대의 자주포로 장비된 대대와 모터부대인 제206연대, 경기관총으로 무장된 모터찌크 200여대를 장비하고 있는 제303기동정찰대·제506통신대대·공병대대·운수대대 등이 배속되어 있었다.

109) 『조선전사』 제24권, p. 127.

110) 『조선전사』 제24권, p. 131.

111) 1946년 3월 17일 신의주항공대는 평양학원으로 흡수되었다. 19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졸업하였다. 사회과학원, 『조선통사』 하권,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675.

112) 평양학원이 창설되면서 항공반이 설치되었고 1946년 3월 17일 신의주항공대는 평양학원으로 흡수되었다. 46년 6월 26일 평양학원 정규과정 제1기생 800명의 입교 인원 중에는 항공중대 제1기생으로 100명이 포함되어 훈련을 받고 1947년 10월 5일 졸업하였다.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14 ; 『북한인민군대사』, p. 68.

113) 북한 해군에서는 이 날을 해군절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북한인민군대사』, p. 130 ;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20. 북한 해군 함대는 1949년 12월 소련으로부터 지원된 4척의 어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 초계정과 수송선들이었으며, 병력도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보병대대 병력들이었다.

114)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6.

115)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43.

116)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8.

117)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2, p. 138.

118)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47.
119)『모스크바가 소련대사에게』(1949. 6. 4),『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28 ;『북한인민군대사』, p. 133.
120)『내가 겪은 조선전쟁』, p. 126 ;『북한인민군대사』, pp. 90-91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p. 51.
121)『김일성선집』 제2집, pp. 263-271.
122)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상), 1995, p. 28.
123) 서대숙,『김일성』, 청계연구소, 1989, p. 56 ; 북한총람간행위원회,『북한총람』,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p. 1925.
124)『제25군의 전투행로』, p. 78.
125) 타스 통신은 1948년 12월 25일 철수 완료하였다고 하였고, 김일성의 신년사에는 1948년 12월 26일 소련군이 최종 철수하였다고 하였다. 김일성,『김일성선집』 제2권, p. 305.
126)『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07.
127)『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p. 407-408.
128)『스탈린이 쉬체멘코에게』(1948. 12. 20),『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08.

제 4 장 국군의 창설

제 1 절	광복 이후 건군 활동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제 3 절	미 군정기 경비대 창설
제 4 절	건군과 발전

제1절 광복 이후 건군 활동

1. 자생적인 군사단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군사경력자들은 모두 13만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과거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자생적(自生的)인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치안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수립되면 건군(建軍)에 참여하고자 활동하였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에 등록된 각종 정당·사회·군사단체는 모두 205개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군사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자생적인 군사단체의 수는 약 30개에 달했다.[1)]

그러나 광복 이후 날이 갈수록 좌·우익 진영간에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광복이후 건군의 꿈을 안고 자생적인 군사단체에 참여
일본군의 학병 출신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학도대가 결성됐으나 곧 학병동맹(좌익)과 학병단(우익)으로 갈려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남한지역에서 점령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미 군정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군사경력자들은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군사경력자들은 정치적 성향 및 이데올로기의 편향에 따라 좌우익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는 무력 충돌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군사경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남한지역에서 조직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들 가운데 좌익 성향의 대표적인 군사단체로는 학병 출신의 이혁기(李赫基)[2]가 이끄는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왕익권(王益權)[3]이 주도하는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이 있었다. 우익 성향의 자생적인 군사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이응준(李應俊)[4] 장군 등 일본 육사출신의 친목단체인 계림회(鷄林會)가 주도한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와 우익 학병들이 결성한 학병단(學兵團) 등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광복군 출신이 뒤늦게 결성한 군사단체로는 임시정부 군사부 참모총장을 역임한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주도한 대한국군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 조성환(曺成煥)이 총재로 활동한 대한민국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가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해군 창설을 위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로는 손원일(孫元一)[5] 제독이 이끄는 해사대(海事隊)가 있었고, 공군 창설을 위한 자생적인 군사단체로는 최용덕(崔用德)[6] 장군이 주도한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 등이 있었다. 이들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그러나 이들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은 명분과 이념의 차이로 대립과 분열, 유혈충돌 사태를 일으키자, 주한 미 군정청은 국방경비대 창설을 계기로 이들 군사단체들에 대해 해산령을 내리게 되었다. 군사단체 해산령 이후 이들 단체에 소속되었던 우익 성향의 군사 경력자 가운데 많은 인원이 건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건군 운동에 참여한 군사경력자들은 군사영어학교 및 경비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로 임관된 후 건군의 초석을 마련했고,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 활동하여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선 조국을 수호하였다.

<표 4-1> 8·15 광복 이후 자생적인 군사단체[7]

단 체 명	대 표	설치일자	주요 내용
조선임시 군사위원회 (우파)	위원장 이응준	1945년 8월말	• 일본 육사출신 친목단체 계림회 중심(원용덕 등 만군 출신 참여) • 국군편성초안 기초하여 미 군정청에 제출 • 치안대총사령부를 결성하여 활동
조선학병동맹 (좌파)	왕익권	1945. 9. 1	• 좌익계열이 대부분 • 1946. 1 삼청동 반탁학생연맹 습격사건 야기
학 병 단 (우파)	총사령 안동준	1945.12.16	• 학병동맹에서 탈퇴한 우익 37명이 동지 3,000여명을 모아 결성 • 민기식, 안동준, 김형일, 최홍희, 김완용, 임선하, 백남권 등이 주도 • 미 군정청 톰슨 중령에게 창군요원으로 동 단원 추천
조선국군준비대 (좌파)	총사령 이혁기	1945. 8.17	• 간부들이 북한출신 공산당원으로서 좌익계열 • 각 도별 지대(6만여명), 태릉에 국군준비대 훈련소 설치(15,000명 군사훈련)
대한국군준비 위원회(우파)	유동열 (오광선)	1945.11. 1	• 광복군계 중심으로 결성 • 군사단체 해산령 이후 광복청년회로 변신
대한민국군사 후원회(우파)	총 재 조성환	1945.12. 9	• 광복군계인 조선군사후원회(1945. 9월 결성), 한국광복군후원회(1945. 11월초 결성), 한국광복군군사원호회(1945. 11. 27일 결성)를 통합
해사대(우파)	손원일 정긍모	1945. 8.21	• 손원일과 정긍모가 중심이 되어 해군 창설을 위한 군사단체 • 해안경비대 모체
한국항공 건설협회 (우파)	위원장 최용덕	1946. 8.10	• 1946년 8월 10일 조선항공기술연맹(朝鮮航空技術聯盟), 중앙활공연구소(中央滑空硏究所), 조선학생항공연맹(朝鮮學生航空聯盟) 대표자들이 모여 결성한 군사단체이다.

1)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는 일본군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응준, 김석원(金錫源),[8] 신태영(申泰英),[9] 백홍석(白洪錫),[10] 이대영(李大永),[11] 박승훈(朴勝薰),[12] 김준원(金俊元), 유승렬(劉承烈),[13] 안병범(安秉範)[14] 등이 발족시킨 친목단체이다.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응준, 부위원장에 김석원, 병기부대에 채병덕(蔡秉德), 주계부장(主計部長)에 이영순(李永純)을 선출하였는데, 김석원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당면한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대총사령부(治安隊總司令部)를 설치하고 서울의 치안을 목표아래 과거 장교 출신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편성한 후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 이 때 치안대총사령부에서 조선임시군사위원회의 행동대 역할을 했던 창군 요원으로는 이치업(李致業),[15] 김창규(金昌圭), 강문봉(姜文奉) 등이 있었다.[16]

한편 조선임시군사위원회가 치안 유지 등 눈부신 활동을 하자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의 위원장인 여운형(呂運亨)이 동 위원회를 그 산하단체로 흡수하고자 이응준과 몇 차례 만나 논의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불순하다면서 여운형의 요구를 거절하였다.[17]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일본육사출신 장교들의 친목단체인 계림회의 중요 멤버들이 모여서 학병·지원병출신들의 치안활동을 지도하였다. 이들은 국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 군정당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金九) 선생의 군사자문을 받고, 이응준, 김석원, 신태영, 최경록(崔慶祿)[18] 등이 국군편성안을 작성하여 미군정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조선학병동맹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은 1945년 9월 1일 조선학도특별지원병(朝鮮學徒特別支援兵) 출신의 귀환 장병들이 서울 종로 한청(韓靑) 빌딩에 모여 결성한

군사단체이다. 이들은 위원장 왕익권(王益權), 부위원장 이춘영(李春榮)[19]을 지도부로 선임하였다.[20]

조선학병동맹의 강령에는 치안 유지에 협력하고 장차 있을 국가 건설에 참여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학병동맹에는 많은 학병출신들이 참가하여 당면한 치안유지에 협력하였다.[21]

그러나 조선학병동맹 간부들이 점차 좌익 성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우익 진영의 학병들과 반목을 빚게 되자, 김완용(金完龍)[22]을 비롯한 우익 학병을 대표하는 37명이 왕익권·이춘영 등의 좌파와 결별하고 새로운 학병단(學兵團)을 결성하면서 학명동맹은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단체로 남게 되었다.

3) 학병단

학병단(學兵團)은 학병동맹과 결별하고 나온 우익 성향의 학병(學兵) 대표 37명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 대표로는 최영희(崔榮喜)[23]·안동준(安東濬)[24]·김완용(金完龍)·임선하(林善河)·백남권(白南權)·김병휘(金炳徽)·김형일(金炯一)·김종갑(金鍾甲)·이희권(李喜權)·민기식(閔機植)·김영환(金永煥)·김익열(金益烈)·김계원(金桂元)·함준호(咸俊鎬)·심언봉(沈彦奉) 등 37명이었다.[25]

학병들은 일제말기에 강제로 전쟁에 끌려 나간 전문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이었다. 학병들이 학병동맹에 참가하게 된 것은 같은 이념아래 건국과 건군의 역군이 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학병동맹이 점차 공산당의 전위부대로 좌경화 되어가자, 1945년 12월 16일 우익성향의 학병들이 그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학병단을 결성하였는데, 그 인원수가 3,000명에 달하였다.

학병단은 국가의 승인을 촉구하고, 국방의 간성(干城)과 국내건설의 초석이 될 것을 맹세하는 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지침으로 삼았다.[26]

학병단은 대표로 총사령에 안동준(安東濬), 참모장에 김근배, 참모에 박성화와 김학천을 선임하였다. 조직 개편 후에는 위원장에 김완용, 부위원장에 김근배와 박성화, 총무부장에 안동준을 선임하였다.[27] 학병단 소속의 학병들은 미 군정청이 군 간부육성을 위해 설치한 군사영어학교에 많은 인원이 입교하여 건군 활동

에 앞장섰고, 6·25전쟁 당시에는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서 활약하였다.

4) 조선국군준비대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는 광복 이후 귀환한 일본군 출신 장병들이 치안유지를 위해서 1945년 8월 17일 서울 교동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가진 귀환장병대(歸還將兵隊)와 그 해 8월 30일 발족한 귀환군인동맹(歸還軍人同盟)을 통합한 것이었다. 총사령에는 학병출신인 이혁기(李赫基)가, 그리고 부사령에는 박승환(朴承煥)이 맡았다.

조선국군준비대는 서울 명동에 본부를 두고 과거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 자리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남한 각도에 지대를 설치하고 60,000여명의 대원을 포섭하여 일제시대 일본군 부대막사인 태릉훈련소에서 15,000명을 훈련시키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광복 이후 설립된 어떤 군사단체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갖

조선 국군준비대
광복을 맞아 귀환한 장병들을 중심으로 국군준비대가 결성되었고, 1945년 12월 26일에는 중앙학교 강당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미 군정은 1946년 1월 21일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령을 내렸다.

추고 있었다. 간부들은 공산당의 전위대인 '남한인민항쟁유격사령부(南韓人民抗爭遊擊司令部)'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김두한(金斗漢)의 대한민청 청년대원들의 조직적인 습격을 받고 조직이 분쇄되었고, 여기에 미 헌병대가 김두한 부대의 무장 해제와 함께 국군준비대의 무기를 압수하면서 와해되었다.[28]

조선국군준비대에 속했던 대원들은 미군정 당국에 의해 군사단체가 해산된 이후 남로당의 지시에 의해 많은 인원이 경비대를 창설할 때 사병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 제6연대 및 제14연대 반란의 불씨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군준비대 출신으로 군에 침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종석(金鍾碩),[29] 하재팔(河載八),[30] 표무원(表武源)[31] 등이 있었다.[32]

5)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韓國將校團軍事籌備會)는 1945년 12월 27일 결성되었다.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는 건국 이후 국방과 치안을 책임질 사관(士官)을 양성하고 병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항식(李恒植)·신하균(申河均)·김사억(金思億) 등이 조직한 군사단체이다.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는 회장에 이항식을 선임하고, 총무부장에 신하균, 군무부장에 김사억, 교육부장에 오승근(吳承根), 참모부장 윤병호(尹炳皓), 기획부장 신진균(申晉均), 경리부장 한학수(韓學洙), 지방부장 민영재(閔泳宰), 선전부장 허곤(許璭), 그리고 고문에 조성환(曺成煥)·황학수(黃學洙)·성두헌(成斗憲) 등이 있었다.[33]

6) 대한민국 군사후원회

대한민국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는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결성한 군사단체이다.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임시수도 중경에서 창설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도처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대한의용병들과 중국군내에 편입되었던 이들을 통합하여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이청천(李靑天)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한국광복

군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에 항전하는 등 조국 광복을 위해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최초 5개 지대로서 총 5,000명이었으나, 8·15 광복 후에는 20,000명으로 늘어났다. 광복후 남한에 수립된 미군정이 광복군을 국군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자 대원들은 모두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오광선(吳光鮮)[34]이 광복군 국내지대를 결성하고 광복군에서 복원된 이들과 기타 출신들을 규합하여 장차 국군의 편입을 준비하였다. 광복군 출신들은 1946년 2월 9일 대한민국군사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단체는 1945년 9월에 조직된 조선군사후원회(朝鮮軍事後援會), 11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후원회(韓國光復軍後援會), 12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사원호회(韓國光復軍事援護會) 등 3개 단체를 통합한 군사단체이다. 총재에는 조성환, 부총재는 안재홍(安在鴻), 그리고 회장에는 서정희(徐廷禧)를 선임하였다.[35]

7) 해사대

해사대(海事隊)는 광복 직후 귀국한 손원일(孫元一)과 정긍모(鄭兢謨)[36]에 의해 설립된 군사단체이다. 이 두 사람은 광복 직후 해군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을 갖고 각각 동지를 모집하던 중 1945년 8월 21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해군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1945년 8월 16일 중국 상해(上海) 중앙대학 항해과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활동한 후 만주에서 귀국한 손원일은 윤치창(尹致昌), 민병증(閔丙曾), 한갑수(韓甲洙),[37] 김동준 등과 함께 서울 안동교회(安東敎會)에서 해군 건설을 위해 동지와 대원을 모집하였다.

이때 일본에서 일등기관사의 자격을 획득하고 해방 전에 귀국해 있던 정긍모는 서울에서 홍순진, 서상웅,[38] 오학철 등과 함께 뜻 있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던 중 권태춘, 이시정, 민홍기 등을 알게 되었다.

양측은 서로 같은 취지의 벽보를 부친 것이 인연이 되어 손원일과 정긍모는 1945년 8월 23일 안동교회에서 해사대를 조직하고 해군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

딛게 되었다. 8월 30일에는 해사대 본부를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구 표훈전(表勳展)[39]으로 옮겼다. 그 후 해사대는 80여명을 선발하여 70일간의 해양기술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로 하고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손원일은 항해과(航海科)와 해사대 전체 운영을 맡고, 정긍모와 한갑수는 기관을, 윤치창은 영어를, 김동준은 훈련을, 민병증은 행정을, 김영철[40]은 항해술을 각각 분담하였다.

해사대는 일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입하였으나, 1945년 9월 9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군정을 선포하자, 9월 30일 건국준비위원회와의 관계를 끊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교통국 해사과 산하단체였던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保國團)의 대표인 석은태(石銀泰)와 상의하여 두 단체를 합치기로 하고 명칭을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로 정하였다. 새로 발족한 조선해사협회는 본부를 관훈동 구 표훈전에서 회현동(會賢洞)에 있는 조선해사보국단 사무실로 이전했다. 그 후 조선해사협회는 미군정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약 20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조직할 것과 본부를 진해에 설치할 것에 합의하고, 1945년 11월 11일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그 명칭을 해방병단(海防兵團)이라 하였다.[41]

8) 한국항공건설협회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는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 국내·외 항공계에 종사하던 항공인들이 공군 창설을 위해 1946년 8월 10일 조직한 군사단체이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조선항공기술연맹(朝鮮航空技術聯盟)[42], 중앙활공연구소(中央滑空硏究所)[43], 조선학생항공연맹(朝鮮學生航空聯盟)[44]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진 후 중국 공군 출신으로 공군의 원로인 최용덕(崔用德) 장군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결성하였다.[45]

광복 직후 한국인 항공인력은 비행경험을 가진 조종사 100명 정도를 포함하여 약 500여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항공대 출신인 박범집(朴範集),[46] 김창규(金昌圭),[47] 이근석(李根晳),[48] 장덕창(張德昌),[49] 김정렬(金貞烈)[50]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귀국한 최용덕, 이영무(李英茂), 미국에서 귀국한 김신(金信),[51] 그리고 육군

정보국 출신의 김영환[52] 등 항공계 간부들이 협회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 항공계 지도자들은 공군 창설을 위해 군정청 당국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46년 9월 유동열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의 미 고문관 프라이스(Terill E. Price) 대령을 만나 공군 창설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53]

2. 군사학교

광복 이후 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학교에는 김구(金九) 주석이 교장으로 있는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가 있었다. 좌파 성향의 군사학교로는 임시정부의 좌익계인 김원봉(金元鳳)이 주도하는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學校), 그리고 오정방(吳正邦)이 이끄는 육군예비사관학교(陸軍豫備士官學校)가 있었다.

1) 대한무관학교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1945년 11월초에 서울 창신동(昌信洞)에서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만든 군사학교이다. 교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金九)를 추대하였고, 부교장에는 전성호(全盛鎬),[54] 교관에는 이춘경(李春景)[55] 등이 임명되었다. 대한무관학교는 1946년 1월 25일 제1기 사관에 장경석(張庚石)[56]과 남철(南鐵),[57] 하사관 등 334명을 입교시켰다.[58]

2) 조선국군학교(중앙육군사관학교)

조선국군학교(朝鮮國軍學校)는 1945년 8월 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파계가

결성한 군사학교이다. 이 학교는 확대강화를 위하여 학교 건물을 서울 광장리에 있는 일제시대의 일본군 병사(兵舍)로 이전하여 1,000여명을 훈련시켰다. 1946년 1월 10일에는 학교 명칭을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學校)로 개칭하였다. 교장에는 상해임시정부 군무부장(軍務部長)을 지낸 김원봉을 추대하였고, 부교장에는 임철재(任喆宰), 총무부장에는 심재은(沈在殷), 교무부장에는 박만(朴萬), 연구부장에는 권태형(權泰衡), 경리부장에는 전덕원(田德元), 고문에는 이병희(李炳熙)을 선임하였다.[59]

3) 육군사관예비학교

육군사관예비학교(陸軍士官豫備學校)는 1946년 11월 초 조선건국청년회(朝鮮建國靑年會) 회원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서울 당인리에 설치된 좌파계 군사학교이다. 조선건설치안대 총본부는 광복과 함께 치안유지를 해오다가 미군이 진주하자, 이를 해산시키고 1945년 9월 29일 조선건국청년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엄홍수(嚴泓銖), 부위원장에 오병철(吳炳哲)을 선임하였다. 1946년 1월 11일에는 기증 받은 800만원과 전답 2천만원 상당의 돈으로 육군예비사관학교를 당인리(唐仁里)의 전문학원(前文學院) 자리에 설립하고 교장에는 건국청년위원장 오정방(吳正邦)을 임명하였다.[60]

이들 군사단체 및 군사학교는 민족의 정치적 구심점을 제시할만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던 현실에서 설립되어 좌우익으로 갈라져 대립하다가 1946년 1월 21일

<표 4-2> 광복당시 군사학교 현황

학교명	대표	설치일자	내용
조선국군학교 (좌파)	김원봉	1945. 11월초	• 임정의 좌파계 학교, 1,000여명 훈련 • 1946년 1월 10일 중앙육군사관학교로 개칭
대한무관학교 (우파)	김 구	1945. 11월초	• 임정의 우파계 학교, • 1946년 1월 25일 제1기 사관/하사관 334명 입교
육군사관예비학교 (좌파)	오정방	1946. 11. 1	• 조선건국청년회 회원훈련 목적

미 군정청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내려진 군사단체 해산령에 따라 해체되었다. 이들 군사단체들 중 학병단과 대한무관학교 출신들은 군사영어학교 및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 임관한 후 창군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활동한 군사경력자들 중 귀국이 늦어지거나 북한에서 뒤늦게 월남한 군사경력자들이 군사단체나 군사학교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곧바로 군사영어학교나 경비사관을 통해 건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사로는 정일권(丁一權), 백선엽(白善燁), 김백일(金白一), 원용덕(元容德), 이한림(李翰林), 최주종(崔周鍾) 장군 등이 있다.

제 2 절 간부양성기관

1. 군사영어학교(MLS)

군사영어학교(MLS : Military Language School)는 경비대 창설을 앞두고 미 군정청이 군 간부요원을 확보하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학교였다. 미 군정청의 군사담당 기구의 책임자인 국방사령부의 초대 부장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경비대를 창설하기에 앞서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가르칠 학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의 감리교신학교(監理敎神學校)에 설치된 것이 바로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이다.

군사영어학교의 모집은 한국군의 인재를 육성하는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모병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한국인에게 일반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군사영어를 가르쳐 창군에 필요한 장교와 미군지휘관의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군사영어학교의 입교 자격은 과거 군사경력을 지닌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 장교 및 준사관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영어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구비한 자를 선발하였다.[61] 최초 계획은 각 출신별로 20명을 선발하여 총 60명을 입교시키려고 하였으나, 좌익계 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한국광복군은 법통을 고집하여 응시 자체를 기피했기 때문에 추천을 의뢰 받은 중국군 대좌 출신 조개옥(趙介玉)[62]은 이성가(李成佳)[63]와 유해준(兪海濬) 등 2명만을 추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만주군 출신의 원용덕[64]과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이 대부분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 출신간에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였다.[65] 특히 미 군정하 '경비대창설계획'인 뱀부계획

군사영어학교
군사영어학교는 서대문구 냉천동에 소재한 감리교 신학교에 위치했다가 1946년 2월 27일 태릉의 현 육군사관학교 자리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의 일부 병사로 이전하였다.

(Bamboo Plan)에 의해 경비대 창설이 진행되어 장교소요가 급증하게 되자, 최초 계획과는 달리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될 때에는 입교생이 200명에 이르렀다.

개교 당시 군사영어학교의 교장은 그린(Green) 중령이 임명되었는데, 리스(L. W. Reese) 소령이 그를 보좌하였다. 한국인으로서는 만주군 중좌 출신의 원용덕이 부교장으로서 보좌관 역할을 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2월 27일 교사(校舍)를 태릉(泰陵)에 있는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 제1연대의 서쪽 건물로 이동하였으나, 그해 4월 30일 폐교되었다. 학교가 폐교되자 임관하지 못한 학생들은 경비사관학교(警備士官學校) 제1기로 편입되어 임관하였다.[66]

군사영어학교에서는 영어회화 수준을 참작하여 A~D 4개 등급으로 편성된 학급을 운영하였다. 교육과목은 군사영어, 한국사, 자동차 교육, 소총 분해 등이 있었고, 교재는 미국의 초등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영내생활을 하였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의 교육을 그리고 토요일에는 4시간

동안 시험을 치렀다.[67]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한 자는 200명의 입교자 중 110명이었다. 이는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익간의 충돌 속에 발생한 탈락자, 재학 중 신분이 불분명한 자에 대한 퇴교자, 그리고 졸업 후 임관을 포기하고 군정청 관리로 진로를 바꾼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68]

군사영어학교 수료자는 원칙적으로 참위(參尉)로 임관했다. 그러나 예외로 창군 주역인 이응준(李應俊)은 정령(正領), 군사영어학교의 부교장으로 있던 원용덕(元容德)은 참령(參領), 군번 1~5번 임관자인 이형근(李亨根)[69]·채병덕(蔡秉德)[70]·유재흥(劉載興)[71]·장석륜(張錫倫)·정일권(丁一權)[72]은 정위(正尉)로 임관하였다. 중국군 참령 출신 이성가(李成佳)와 연대창설요원으로 부임한 백선엽(白善燁)[73]·김백일(金白一)·최남근(崔楠根)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곧 바로 부위(副尉)로 임관하였다.[74] 그리고 연대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자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임관한 자로는 오덕준(吳德俊), 박진경(朴珍景), 송요찬(宋堯讚),[75] 함병선(咸炳善), 유흥수(劉興守) 등이 있었다.

이들 임관자들의 연령은 23~30세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최고령자로는 대령으로 임관한 이응준이 56세, 대위로 임관한 장석륜이 54세였고, 최연소자로는 소위로 임관한 정래혁(丁來赫)[76]과 오일균(吳一均)[77]이 20세였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 이전에는 건군의 주역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연대장급 이상의 고급 지휘관 및 참모로서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군사영어학교의 출신자들은 준장(准將)으로 추서(追敍)된 5명의 장군을 포함하여 모두 78명이 장군으로 진급하였다.[78]

그 중 대장(大將)까지 오른 분으로는 이형근, 정일권, 장창국(張昌國), 민기식(閔機植), 김종오(金鍾五), 김계원(金桂元), 백선엽, 김용배(金容培) 등 8명이고, 중장(中將)에는 양국진(楊國鎭), 최경록(崔慶祿), 강문봉(姜文奉), 박병권(朴炳權), 백인엽(白仁燁), 김종갑(金鍾甲), 함병선, 정래혁, 원용덕, 최영희(崔榮喜), 이한림(李翰林), 민병권(閔丙權), 김상복(金相福), 장도영(張都暎), 김일환(金一煥), 최창언(崔

昌彦), 송요찬, 강영훈(姜英勳), 박경원(朴璟遠), 이응준 등 20명이다. 육군의 정상인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분으로는 이형근, 채병덕(蔡炳德), 정일권, 최경록, 민기식, 김종오, 김계원, 최영희, 백선엽, 김용배, 장도영, 송요찬, 이응준 등 13명이다. 합동참모의장에는 이형근, 정일권, 유재흥(劉載興), 백선엽, 최영희, 김종오, 장창국 등 7명이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으로는 유재흥, 장도영, 박병권, 최영희, 정래혁 등이 있다.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의 태릉으로 이전하여 60여명을 교육하고 있던 중 4월 30일 폐교되어 20여명은 소위로 임관되었고, 40여명은 5월 1일부로 명칭을 바꾼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南朝鮮國防警備學校)의 제1기생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다.

2. 조선경비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는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된 후 1946년 5월 1일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태릉에 설치한 사관학교이다. 조선경비사관학교의 당시 명칭은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Korean Constabulary Academy)였다. 그러나 1946년 6월 15일 국방부의 명칭에 대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소련 대표가 미국 대표에게 항의함에 따라 '국방'이란 용어를 배제하고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로 부르게 되었다.[79] 그 후 조선경비사관학교는 정부가 수립된 한 달 후인 1948년 9월 5일 학교 명칭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Korea Military Academy)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 조선경비사관학교 및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출된 장교는 10개 기(期)에 총 4,962명이 임관하였다. 이중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임관한 자는 제1기부터 제6기까지 6개기에 총 1,254명이었고, 육군사관학교로 임관한 기수는 제7기에서 10기까지로 총 3,708명이었다.[80]

초대 육군사관학교 교장
참령(參領) 이 형 근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교문 정경(위)과 초창기의 학교 전경(아래)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된 후 그 해 5월 1일 현 육사가 위치한 태릉에서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로 개교하였다. 경비사관학교는 군사영어학교에서 남조선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그리고 1948년 9월 5일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경비사관학교 입교자의 성분을 보면, 제1기부터 제4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군사경력자 출신으로써 귀국을 늦게 하여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제5기부터 제8기까지는 대부분 단신으로 월남한 이북 출신 반공 청년들이었다. 제5기는 초기 순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력이 5년제 중학졸업 이상인 자로

자격을 규정하였는데도 이북 출신이 대거 입교하였다. 제6기는 각 연대 우수하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는데도 대부분이 월남한 이북 청년들이었다. 제7기도 절반을 민간인을 모집하였는데도 많은 인원이 북한 출신 청년들이었다. 제8기도 3/4를 민간인으로 모집하였는데도 절반이 남한의 우익 단체에 속했던 청년이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북한출신 청년들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입교했던 제7기 특별반과 제8기 특별반은 군사영어학교와 제1기 및 제2기에 입교하지 못했던 군사경력자들이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군 창설을 계기로 대거 입교하였다.[81]

사관학교 교육기간은 제1기생은 45일, 제2기부터 제6기생까지는 3개월, 그리고 제7기부터 제9기까지는 6개월, 그리고 제10기는 1년이었다. 교육내용도 제1기부터 제7기까지는 군사교육 위주였으나, 제8기부터 일반학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다.

제1기는 1946년 5월 1일 88명이 입교하여 40일간의 단기교육을 받고 그 해 6월 15일 40명이 참위로 임관하였다.[82] 입교생 중 60여명은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했다가 학교가 폐쇄된 관계로 뒤늦게 들어왔고, 나머지 20여명은 각 도의 8개 연대 하사관 중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들이었다. 당시 교장은 이형근 참령이었다.

군사영어학교에서 제1기로 들어온 사람은 이상근(李尙根), 예관수(芮琯壽), 우병규(禹炳圭), 김학림(金鶴林), 남철(南鐵), 안영길(安永吉), 이창정(李昌禎), 황엽(黃燁) 등이었고, 연대하사관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는 임부택(林富澤), 김종원(金宗元), 임충식(任忠植), 서종철(徐鍾喆), 김용주(金龍周) 등이었다. 이중 20여명은 해군으로 갔는데, 남철, 김교식, 김세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한국전쟁시 제1기생은 대부분 중령으로 진급하여 연대장 또는 사단 참모장 등으로 군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제2기는 1946년 9월 23일 263명이 입교하여 80일간의 교육을 받고 그해 12월 14일 196명이 소위로 임관하였다. 제2기생은 각 연대의 우수사병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공개 모집하였다. 전국의 8개 연대와 군사경력을 가진 민간인 등 500여명이 추천을 받아 지원하였다. 이들은 국사, 영어 등 필기시험과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제2기생으로는 박정희(朴正熙), 한신(韓信),

석주암(石柱岩), 문형태(文亨泰), 이세호(李世鎬), 심흥선(沈興善), 송호성(宋虎聲), 서정철(徐廷哲), 김희덕(金熙德) 등이 있었다. 한국전쟁시 제2기생은 소령 및 중령으로 대대장 또는 사단참모로 활약하였다. 특히 제2기생부터 1946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계급 호칭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 4-3>은 1946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계급 호칭이다.

제3기는 1947년 1월 13일 338명이 입교하여 그 해 4월 19일 296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소령으로 진급하여 대부분 대대장이나 사단 또는 연대 참모로 활동하였다. 제3기에는 군사경력자로 중국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83] 출신인 박시창(朴始昌),[84] 박기성(朴基成),[85] 최덕신(崔德新),[86] 그리고 일본군 출신인 김진위(金振暐) 등이 있었고, 전쟁 중 활약한 분으로는 김종수(金鍾洙), 노재현(蘆載鉉), 고광도(高光道), 송호림(宋虎林), 송대후(宋大厚) 등이 있었다.

제4기는 1947년 5월 16일 120명이 입교하여 그해 9월 10일 107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중대장이나 연대 참모로 활동하였다. 제4기의 대표로는 김종환과

<표 4-3> 국군 계급 현황

구분		1946년 12월 1일		구분		1946년 12월 1일	
		이 전	이 후			이 전	이 후
장교	준사관	-	준위	사병	병	이등병사(二等兵士)	이등병(二等兵)
	위관급	참위(參尉)	소위			일등병사(一等兵士)	일등병(一等兵)
		부위(副尉)	중위		하사관	참교(參校)	하사(下士)
		정위(正尉)	대위			부교(副校)	이등중사
	영관급	참령(參領)	소령			특무부교(特務副校)	일등중사
		부령(副領)	중령			정교(正校)	이등상사
		정령(正領)	대령			특무정교(特務正校)	일등상사
	장관급	-	준장			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	특무상사
		참장(參將)	소장				
		부장(副將)	중장				
		정장(正將)	대장				

이병형이 있다.

제5기는 1947년 10월 23일 420명이 입교하여 1948년 4월 6일 380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대위로 중대장 또는 대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5기생으로는 정승화(鄭昇和), 채명신(蔡命新), 이용(李龍), 최대명(崔大明), 김용배(金龍培), 김학원(金學洹), 장경석(張庚石), 장철부(張哲夫), 손관도 등과 육군항공대 창설요원으로 왔다가 공군으로 간 박원석(朴元錫)과 장지량(張志良)이 있다.

제6기는 각 연대 우수 하사관과 사병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1948년 5월 5일 282명이 입교하여 그 해 7월 28일 235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중대장 또는 대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6기에는 박경원(朴敬遠), 박현식, 김판규, 박태준, 박정인 등이 있다.

제7기는 정기(正期)와 특별 및 후기로 구분하여 총 1,096명이 임관하였다. 정기는 1948년 8월 9일 602명이 입교하여 561명이 임관하였고, 특별은 이주일(李周一), 윤태일(尹泰日), 방희(方熙), 김풍익, 고정훈, 문중섭, 유양수, 유병현, 조문환, 이기건(李奇建),[87] 안동준, 홍국선, 김관오, 김국주, 김묵(金默) 등 군사경력자 190명이 1948년 10월 12일 임관하였고, 후기는 각 연대 하사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과 의무, 법무, 통신 등 각 특과 분야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1948년 12월 21일 345명을 임관시켰는데, 여기에는 김태청(金泰淸), 박영수 등이 있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중대장 또는 연대참모로 활동하였다. 제7기에는 이대용, 이훈섭, 김영선, 이건영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수립된 후 뒤늦게 귀국한 군사경력자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임관 형식을 빌어 장교로 임관시켰는데, 김홍일, 이종찬, 신응균(申應均), 이형석(李炯錫), 박승훈(朴勝薰), 이용문(李龍文), 이선근(李瑄根), 김동수(金東洙), 김응조(金應祚), 박창암(朴蒼岩),[88] 손성겸(孫聖兼), 이호(李澔) 등이 있었다.

제8기는 정기와 특별 제1・2・3・4기로 구분하여 총 1,848명이 임관하였다. 이 중 정기는 1949년 5월 23일에 1,264명이 임관하였고, 특별기수는 4개기로 구분하여 임관하였는데, 이때 특별 1차로 임관한 사람은 김석원, 유승렬(劉升烈), 안병범(安秉範), 백홍석(白洪錫) 등 일본군 출신과 안춘생(安椿生), 이준식(李俊植), 오

광선(吳光鮮), 권준(權畯), 전성호(全盛鎬) 등 광복군 출신의 군사경력자들이 있었다. 특별 제4차에는 백석주(白石柱), 박임항(朴林恒),[89] 강태민, 박영준(朴英俊), 신학진, 장호강, 엄주명, 안광호, 이대영(李大永), 유원식(柳原植) 등이 있었다. 제8기에는 김종필, 차규헌, 진종채, 유학성, 윤흥정, 이재전, 이희성 등이 있다.

제9기는 1949년 7월 15일 674명이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580명이 임관하였다. 전쟁 발발시 이들은 중위로 소대장이었다. 제9기에는 윤성민, 문홍구, 정병주, 천주원 등이 있다.

제10기는 2년제 과정으로 모집되었으나, 입교 후에 다시 1년으로 교육과정이 단축되었다. 제10기생은 생도 제1기생으로 1949년 7월 15일 313명이 입교하여 전쟁 발발시 전투에 투입되었다가 1950년 7월 10일에 134명이 임관하였고, 7월 15일에 50명이 임관하였다. 생도1기에는 황영시, 김윤호, 채항석 등이 있다. 생도 제2기는 4년제 정규과정으로 모집되어 1950년 6월 1일 330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전쟁을 맞이하였다. 이들은 입교한지 20여 일에 밖에 안된 생도 2기생들은 1950년 8월 15일 경남 동래에 설치된 육군종합학교에 175명이 편입되어 종합 1기 혹은 종합 2기로 임관하였다.[90]

3. 해군병학교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는 미 군정기 해군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학교로서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 해군 장교 양성의 요람지인 해군사관하교(海軍士官學校)의 전신이다.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는 1946년 1월 17일 해군의 장교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1946년 6월 15일에는 해안경비대사관학교(海岸警備隊士官學校)로, 그리고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으로 개칭되었다.

<표 4-4> 해군병학교 명칭 개칭 현황

해군병학교	해안경비사관학교	해안경비대학	해사대학	해군대학	해군사관학교
1946. 1. 14	1946. 6. 15	1946. 8. 10	1946. 8. 14	1948. 11. 16	1949. 1. 15

그 후 1947년 8월 14일 대학령에 의해 해사대학(海士大學)으로 개칭하였다.[91] 해사대학은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 16일 다시 해군대학(海軍大學)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1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로 정식 발족되었다.

해군병학교는 손원일(孫元一), 정긍모(鄭兢謨), 한갑수(韓甲洙) 등 해사협회 요원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11일 창설된 해방병단(海防兵團)이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자, 1946년 1월 17일 진해기지에 간부양성을 위해 설치하였다. 해군병학교는 1946년 2월 8일 제1기생 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 113명을 입교시켜 1년간 일반학 및 해양술 등을 교육시킨 뒤 1947년 2월 7일 61명이 임관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163명의 간부를 배출하였다. 제1기생으로는 김영관(金榮寬), 장지수(張志洙), 이맹기(李孟基), 김광옥(金光玉), 함명수, 현시학(玄時學), 김상길, 김윤근 등이 있었다.

제2기생은 1947년 2월 7일 입교하여 1년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1948년 12월 25일 48명이 임관하였다. 이들이 임관할 때 학교명칭은 해군대학이었다. 제2기생으로는 김규섭(金圭燮), 고경영, 차수갑, 이상호, 박승도, 홍관식 등이 있었다.

제3기생은 1947년 9월 2일 입교하여 2년 6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1950년 2월 25일 54명이 임관하였다. 이들이 졸업할 때 학교 명칭은 1949년 1월 15일부로 해군사관학교로 바뀌었다. 제3기생으로는 황정연(黃汀淵), 오윤경, 유병봉, 신태영(申泰榮), 안병기, 정태석 등이 있었다.[92]

해방병학교의 교육은 기술교육과 일반교육 그리고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본래 교육기간은 4년으로 규정되었지만, 장교양성의 긴급성에 비추어 교육기간을 단축하여 3기생까지 배출하였다. 이들 3개 기수는 병과·기관과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은 정부수립 전후로 점차 완전한 정기교육과정을 목표로 졸업 후 장기간에 걸친 함상훈련(艦上訓練)을 받았다.[93]

1946년 6월 17일 해군병학교는 해안경비대사관학교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해안경비대사관학교의 교육내용은 병과, 기관과, 통신과 등 3개 과목을 강의하였다. 병과에는 포병학, 기상학, 측기학이 있었고, 기관과에는 박(舶)운용기관학, 전자공학이 있었고, 통신과에는 전기공학, 자기학, 군법이 있었다. 일반 공통학과로 개설된 과목은 해병학, 대수학, 물리학, 국사, 국어국문학, 영어, 훈육, 지정, 군사, 통신, 항해, 항해기업, 운용학, 체육, 기관학 등이었다.[94]

또한 1948년 6월 29일 정부수립을 목전에 두고 해군의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과정인 특교대(特敎隊)를 설치하였다. 특교대는 하사관을 포함한 군사경력자와 항해유경험자를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임관시키는 군사학교 기능을 하였다. 특교대는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9개기에 거쳐 총 415명을 임관시켰다. 특교대 출신으로는 정긍모, 정광호(鄭光鎬), 김용국(金龍國), 이봉출(李鳳出), 오범식, 오원선, 이수봉, 여현수, 문석수, 조남철 등이 있었다.

1949년 5월에는 해병대가 창설되자 그 해 7월 15일 해병간부후보생 과정을 설치하여 보병교육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수료케 한 후 해군단기교육을 실시하여 임관시켰다. 전쟁 발발 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해병 장교는 2개기에 거쳐 71명이었다. 이들은 이병문(李丙文), 김연상(金然翔), 이동호(李東湖), 이동용(李東用) 등이 있었다.[95]

특히 사관학교나 간부후보생 교육을 거치지 않고 군사경력 및 항해경험만으로 특별 임관한 해군 장교로는 손원일, 박옥규(朴沃圭), 이성호(李成浩), 이용운(李龍雲), 김성삼(金省三), 김일병(金一秉), 김영철(金永哲), 김충남(金忠男), 남철(南鐵), 김교식(金敎植), 한갑수(韓甲洙) 등이 있었고, 해병 장교로는 강기천(姜起千), 김대식(金大植), 김동하(金東河), 김두찬(金斗燦), 김석범(金錫範), 김성은(金聖恩), 신현준(申鉉俊), 고길훈(高吉勳) 등이 있다.[96]

4. 육군항공사관학교

육군항공사관학교(陸軍航空士官學校)는 1949년 10월 1일 발족한 공군사관학교의 전신이다. 1948년 12월 1일 육군항공부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정식 개편되자,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김포에 설치하게 되었다.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에 따라 1949년 2월 15일 초대 교장에 김정렬(金貞烈) 중령이 임명되었고, 그 해 3월 15일 제1차 소집학생에 대한 입교가 있었다. 입교학생은 육군 이등상사(二等上士) 민영락(閔泳洛) 등 45명이었다. 이들은 부대 현역 하사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들 가운데 선발되었다. 항공교육에 소집된 학생들은 1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4월 15일 42명을 육군항공소위로 임관시켰다.

이로써 육군항공의 장교 수는 150명으로 늘어났다.[97] 항공사관학교는 김포에서 5월 31일 김포비행장 내에 있는 병사로 이동한 후인 6월 10일, 제1기 간부후보생으로 김중보(金重寶) 등 97명이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다. 교수부장에는 박원석 대위, 생도대장에는 서한호 대위, 중대장에는 전명섭(全明燮) 중위와 이갑록 중위가 보직되었다.

간부후보 제1기생으로는 최용덕(崔用德), 김정렬, 장덕창(張德昌), 박법집(朴範集), 이근석(李根晳), 김영환(金英煥) 등이 있었고, 제2기에는 김신(金信), 장성환(張盛煥), 박원석(朴元錫), 장지량(張志良) 등이 있었고, 제3기에는 전명섭, 오점석(吳占石), 윤응열(尹應烈) 등이 있었고, 제4기에는 김성룡(金成龍)과 김병택 등이 있었고, 제5기에는 김두만(金斗萬), 김성배, 전봉희 등이 있었다.[98]

정부 수립 이후 육군항공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전신)는 1949년 6월 10일 입교한 제1기 및 그 후 입교한 제2기는 2년제, 1951년 11월 10일 입교한 제3기는 3년제, 그리고 1952년 5월 5일 입교한 제4기부터는 오늘날과 같은 4년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제1기 사관생도들은 20세 미만의 중학교 6학년 졸업생 및 재학생 중에서 우수

한 자를 선발했다.[99] 6·25전쟁이 발발하자, 교육 중이던 제1기 사관생도 36명은 1949년 6월부터 3차에 거쳐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F-51 지상교육을 받았다.[100]

육군항공사관학교는 정부수립 이후 항공부대가 대한민국 공군으로 독립되면서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정식 개칭되었다.[101] 당시 공군사관학교 교장에는 이근석(李根晳) 대령이 임명되었다가, 1950년 5월 14일 최용덕 준장으로 교체되어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제 3 절 미 군정기 경비대 창설

주한미군정청(駐韓美軍政廳)은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朝鮮總督)과 주조선일본군사령관(駐朝鮮日本軍司令官)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1945년 9월 7일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에 따라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최초 미 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여 남한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조직에는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이는 일본이 조선총독부에 주조선 일본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고, 대본영(大本營)에서 직접 지휘 감독하였기 때문에 군사기능을 담당할 군무국(軍務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정 초기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였던 미군정청은 국방기능을 담당할 군사기구를 다른 부서보다 늦게 편성되었다. 미 군정청 내에 군사담당 기구로 설치된 국방사령부는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른 조치였다.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하면, 주한미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ODND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와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군무국(軍務局) 내에는 육군부(Army Department)와 해군부(Navy Department)를 두고, 기존의 경무국과 군무국은 국방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하였다. 특히 국방사령관의 지시 없이는 어떠한 자도 경찰 또는 군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102]

국방사령부는 이후 국방부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명칭만 바뀌었지 임무나 기능 면에서 달리진 것이 없었다. 미 군정청에서는 통위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IS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하였으나, 창군 주역들이 대한제국의 군사기구인 통위영(統衛營)을 본떠 통위부(DIS)로 호칭하면서 이는 정부수립 이후 국방부가 설치될 때까지 사용되었다.[103]

실제로 미 군정하에서 군 창군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는 통위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방업무를 인수할 때 통위부의 편제와 인원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통위부는 미 군정하에서 실질적인 '국방부'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통위부는 1946년 6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방부가 정부의 중앙행정부서로 정식 설치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미 군정청과 협력하며 남한에서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1. 통위부(統衛部)

통위부(DIS : Department of Interior Security)는 미 군정기에 설치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통할(統轄)하는 국방에 관한 최고 군사기구였다. 통위부는 미 군정청의 중앙행정부서로서 국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104]

통위부의 전신은 1945년 11월 3일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설치된 국방사령부였다. 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다시 국방부(DND :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로 개칭되었는데,[105] 이는 194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가 미국 대표에게 국방부라는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장군이 러치(Archer L. Learch) 군정장관과 의논한 끝에 군사기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1946년 6월 15일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국방부를 국내경비부(DIS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군 주역들은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 군제(軍制)였던 통위영(統衛營)을 본떠 통위부(統衛部)로 호칭하였다.[106] 이와 동시에 군무국을 폐지하여 조선경비국(Bureau of Constabulary)과

통위부청사와 간부들
1946년 6월 통위부는 서울 중구 남산동 2가에 위치한 청사로 이동하였다. 그 위치에는 현재 '퍼시픽 호텔'이 들어서 있다. 통위부 간부들은 국군이 발족하면서 간성이 되었다(1946. 6. 15).

통위부장(統衛部長)
유동열(柳東悅) 장군

조선해안경비국(Bureau of Coast Guard)으로 분리하고, 모든 군사조직에서 '국방'이란 명칭을 없앰으로써 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조선국방사관학교는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107]

통위부에는 오늘날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통위부장(統衛部長)이 있었고, 그 밑에 경비대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참모총장(參謀總長)이 있었다. 그 당시 참모총장은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편제상의 국군참모총장(國軍參謀總長)과 오늘날 국군의 합참의장(合參議長)과 같은 직위(職位)였다. 통위부 내의 부서 편성은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재정국, 의무국 등 6국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본부사령실이 있었다. 통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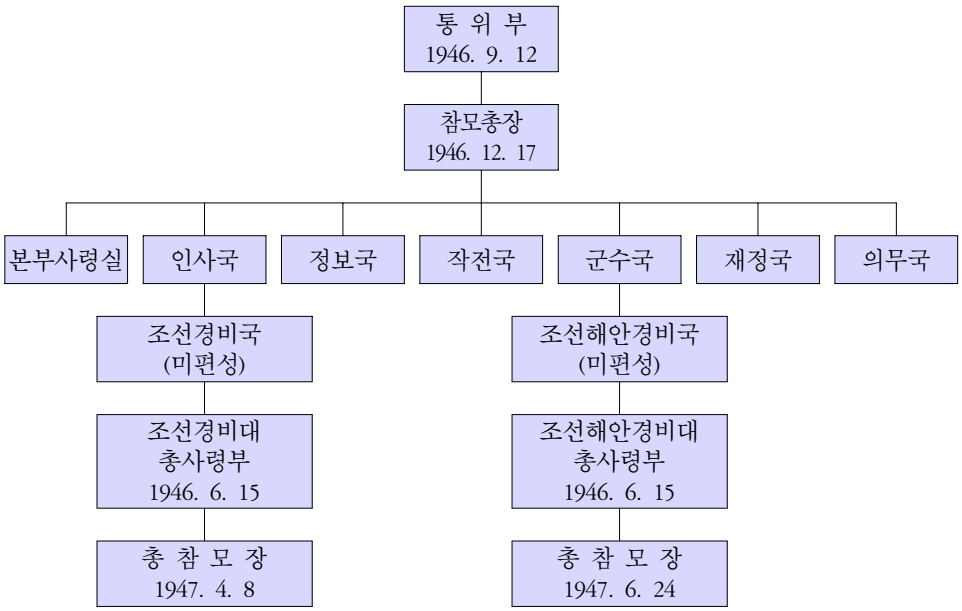
에는 조선경비대총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오늘날 육군과 해군의 기능을 가진 경비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였다.

통위부의 지휘를 받는 조선경비대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사령부에는 각각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이 편제되었다. 통위부의 편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의 편성과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위부의 편성은 <표 4-5>와 같다.[108]

통위부장(統衛部長)의 명칭도 국방담당 군사기구의 변천에 따라 바뀌었다. 국방사령부 시기에는 국방사령부장이었고, 국방부 시기에는 국방부장, 그리고 통위부로 개칭된 후에는 통위부장이었다. 통위부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부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1946년 9월 12일 임명되었다. 그 동안 국방사령부장과 국방부장에는 미군 장교가 임명되었다. 즉, 국방사령부장으로는 미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hick) 준장이 1945년 11월 14일 취임하

<표 4-5> 통위부 편성

(1947. 6. 24 현재)



였고,[109] 후임으로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이 1945년 12월 20일 취임하였다.[110] 국방부장에는 베르나드(Lyle W. Bernard) 중령이 1946년 4월 11일에,[111] 톰프슨(Loren B. Thompson) 대령이 1946년 5월 18일 각각 취임하였다.[112] 통위부장에는 프라이스(Terrill E. Price) 대령이 1946년 6월 8일에 취임하였다.[113]

그러나 1946년 9월 12일 통위부 고문으로 있던 유동열 장군이 통위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프라이스 대령과 부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다가, 1947년 2월 15일 프라이스 대령이 해임되면서[114] 유동열 장군이 단독으로 부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동열 통위부장은 경비대 창설이래 군내에 잠입한 공산주의자의 제거와 군·경간의 대립으로 발생되는 불상사를 해소하려 노력하면서 창군을 서둘렀다.[115] 통위부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실상 군의 지휘권이 한국인에게 이양되고 미군은 고문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를 비롯한 각 연대의 지휘권도 한국인이 행사하였다.[116] 미 고문관은 통위부내에 약 20명,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산하에 10명 이내의 인원을 배치하였고, 연대급에는 2개 연대에 고문관 1명을 두어 모병·행정·조직·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대표에 의해 한반도에서 점령군 철수문제가 제기되자,[117] 미군측에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주관이 되어 맥아더 장군이 하지 장군과 함께 한국의 국방과 국방군의 창설 방안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의 경제사정, 신병의 훈련, 유능한 지휘관의 확보, 언어장벽,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감소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고 경비대를 50,000명으로 증원하되 필요시 보병·포병 화기 및 장갑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국내치안 유지능력의 개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군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통위부는 장차 정부수립 후의 국방을 고려하여 1947년 12월 1일부로 기존의 9개 연대를 3개 연대씩 묶어 3개 여단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모병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4월과 5월에 추가로 연대와 여단을 증편하였다. 이렇듯 국군의 건군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자 각종 군수품의 보급과 군지원을 위

한 부대의 설치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6년 7월부터 통위부의 보급지원을 원활하기 위해 병기, 병참, 공병, 의무, 통신 등의 지원부대를 편성하면서 전투부대에 대한 군수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위부는 1946년 7월 1일 이후 제반 보급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대를 창설하였다.[118] 보급부대로는 1946년 7월 1일 서울 영등포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연대 보급중대 중 1개 중대를 근간으로 통위부 직할부대를 설치하고, 부대장에는 채병덕 참령이 임명되었다. 1947년 4월 1일 이 부대는 다시 병기부대사령부(兵器部隊司令部)로 개칭된 후 예하에 병기·자동차·창고 및 보급중대 등을 두었다.[119] 1948년 1월 1일에는 부대명칭을 통위부 후방부대사령부(後方部隊司令部)로 개칭하고, 그 예하에 제1병기대대, 제1병참대대, 제1공병대대를 창설하였다. 사령관에는 채병덕 대령이 유임되는 한편 초대 참모장으로 유재흥 중령이 보임되었다. 그해 5월 1일 후방부대사령부를 다시 통위부 후방사령부(後方司令部)로 개칭하였다가, 7월 10일 특별부대사령부로 다시 개칭한 후, 예하에 제1병기단, 제1병참단, 제1의무단, 제51통신대대, 제1공병대대, 통신학교, 수색단 등을 창설하거나 증편하였다.

특별부대사령부는 1948년 10월 23일 초대사령관인 채병덕 대령이 해임되고 소병기(蘇炳基) 중령이 사령관직을 대행하다가 1949년 1월 7일 제2대 사령관으로 백홍석(白洪錫) 대령이 취임하였다. 그 후 6월 30일 부대는 주둔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경기도 인천시 부평(富平)에 있는 미군의 군수사령부(ASCOM) 지역으로 이동한 후, 1949년 7월 30일 특별부대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예하 부대는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시켰다.

이렇게 경비대가 군의 모습과 체제를 점차 갖추어 가게 되자 통위부는 정책수립을 전담하고 경비대총사령부는 작전통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분담하게 되었다.[120]

2. 조선경비대

1) 국방군 창설 계획안과 뱀부(Bamboo)계획

건군의 공로자 이응준 장군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으로 최초 창설의 목적은 국립경찰의 보조였다. 조선경비대의 명칭도 최초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였다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 대표가 국방이라는 용어 사용에 항의하자,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할 때 조선경비대로 변경하였다.

조선국방경비대는 1945년 11월 3일 미군정법령 제28호에 의해 군정청내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국방사령부가 창설되고, 미 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 준장이 초대 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창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8일 국방사령부는 한국의 군사지도자 이응준(李應俊) 등이 제시한 국방계획안을 기초로 국방군(國防軍) 창설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국방군 창설 계획안에 의하면, 국방군은 국립경찰의 보강을 위해 창설하여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병력 수는 전체 50,000명 수준으로 하고, 그 중에서 육군과 공군은 45,000명으로 하되, 육군은 3개 보병사단으로 된 1개 군단규모로 편성하고, 공군은 1개 수송비행중대와 2개 전투비행중대 및 근무부대로 편성하도록 계획하였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5,000명으로 제한하였다.[121]

미 군정에서는 한국군 창설계획을 맥아더 장군에게 발송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군 창설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를 「국무·전쟁·해군부의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에 회부하였다. 이에 대해 동 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 창설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점령군의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을 미군 무기로 장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신임 국방부장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보다 규모를 축소시킨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게 되자, 참페니 대령은 군 기능 보다 경찰기능에 가깝게 병력과 장비를 축소한 경찰예비대(警察豫備隊) 창설안을 작성하여 건의하였다.[122] 이때 건의한 경찰예비대 창설계획안이 바로 '뱀부계획(Bamboo Plan)'이다.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

뱀부계획(Bamboo Plan)[123]은 국방군 창설 계획안보다 그 규모 면에서 훨씬 축소된 계획이었다. 뱀부계획에 의하면, 국방경비대는 각 도에 1개 연대씩 모두 25,000명 규모로 8개 연대를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으로 있던 이응준 장군은 뱀부계획 수립시 각도에 1개 사단 규모를 유지할 것을 조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뱀부계획에는 경비대의 창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남한의 각 도에 1개 중대씩 먼저 8개 중대를 설치하되, 편성은 중화기가 없는 미군 보병 중대를 기준으로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편성하고, 장교는 중앙에서 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 중대를 편성할 때는 정원의 20%를 초과 편성하도록 하여 그 중대의 편성이 완료되고 훈련이 끝나면, 그 초과병력을 기간으로 다음 중대를 추가 편성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연대를 편성하여 각도에 1개 연대를 편성한다는 계획이었다.[124]

2) 조선경비대 창설과 편성

뱀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비대 창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초 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였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군의 모체라는 의미에서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라고 불렀다. 조선경비대

창설이 시작되면서 광복 이후 설립된 30여 개에 달하는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은 해산되었고, 그 단체에 소속된 요원들은 조선경비대로 흡수되었다.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의 예하로 창설된 조선경비대는 뱀부계획과 미군정법령 제42호(1946. 1. 14)에 기초하여 최초 국방군계획안 보다 25,000명이 적은 규모의 조선경찰예비대 25,000명과 조선해안경비대가 설치되었다.[125] 전국에 8개 연대를 창설하기 위해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1946년 4월 1일 춘천(春川)에서 제8연대가 창설되어 뱀부계획에 의한 경비대 창설이 완료되었다.

제1연대는 1946년 9월 18일 편성을 완료하였고, 다른 연대도 1947년 초까지 편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구에 있던 제6연대만은 1948년 6월 15일에 가서야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126]

이렇게 부대편성이 지연된 것은 초창기의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의견의 대립과 입대 전 소속 군사단체와 군 출신별 간의 상호대립 및 갈등 등으로 탈영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127]

연대 창설시 간부는 주로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을 배치하여 병력을 모집하고 충원하였으나, 미군정의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에 따라 좌익계 인원이 다수 입대하여 군내 큰 문제로 남게 되었다. 조선경비대는 대대 및 연대순으로 점차 부대를 확대해 나가 1947년 3월까지 당초 목표한 부대와 추가로 도(道)로 승격된 제주도의 제9연대를 포함하여 8개 연대를 완전 편성하였으나, 대구의 제6연대는 구성원 중 좌익세력이 물의를 일으켜 편성이 늦어졌다.[128] 다음 <표 4-6>은 뱀부계획에 의한 각 도별 연대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대는 3개 대대, 대대는 3개 중대 등 3각 편제였으며 계급 구조는 장교·하사·병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장교는 만 단위의 군번을, 사병은 백만 단위의 군번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최초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일본군 38식 및 99식 소총으로 무장하였고 복장은 일본식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1946년 9월 이후 점차 미국제 병기와 피복으로 전환해 갔다. 교육훈련은 전투훈련이 아닌 주로 총검술, 집총훈련, 폭동진압법 등 치안유지 위주로 실시하였다.[129]

한편 남한에서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경비대 병력을 50,000명 수준으로 증원

<표 4-6> 뱀부계획에 의한 조선경비대 창설 현황[130]

구 분	창설일	지휘관	창설 요원	주둔지
제1연대	1946. 1.15	정위 채병덕	정일권, 장석륜, 강문봉, 백인엽	경기도 양주
제2연대	1946. 2.28	정위 이형근	심언봉, 정진완, 신상철	충남 대전
제3연대	1946. 2.26	부위 김백일	김종오, 이한림, 정래혁, 백인기	전북 이리
제4연대	1946. 2.15	부위 김홍준	조암, 최홍희	전남 광산
제5연대	1946. 1.19	참위 박병권	이치업, 오덕준	경남 부산
제6연대	1946. 2.18	참위 김영환	하재팔, 김완용, 장도영	경북 대구
제7연대	1946. 2. 7	참위 민기식	문용채, 오일균, 이희권, 최창언	충북 청주
제8연대	1946. 4. 1	부위 김종갑	황헌친, 김형일	강원 춘천
제9연대	1946.11.16	부위 장창국	안영길, 윤춘근, 김득룡, 김복태	제주 모슬포

하고 미군 철수에 따라 제한되었던 무기와 장비가 이양되자, 조선경비대 증강계획을 추진하였다.[131] 미 국무부는 1948년 말의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의 경비대를 무장하고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32] 경비대를 군대로 전환하는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을 앞두고 취해진 조치였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조선경비대는 통위부 일반명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이미 편성된 9개 연대를 근간으로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편성한 후 3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이들 3개 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제1여단), 대전(제2여단), 부산(제3여단)에서 창설되었다. 여단사령부는 미군의 보병사단 사령부 편제를 모방했지만 병력은 감소 편성되어 운용되었다.[133] 1948년 4월 29일 서울(제4여단)과 광주(제5여단)에 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5월 1일부터 4일 사이 제10연대(강릉)를 비롯하여 제11(수원), 제12(군산), 제13(온양), 제14(여수), 제15(마산)연대 등 6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하여 여단에 편입시켰다. 당시 여단창설 현황은 <표 4-7>과 같다.[134]

이렇게 신설된 여단사령부는 당시 미군의 경보병사단 사령부 조직을 모방하였고, 병력이나 장비는 남한 실정에 맞도록 감소 조정된 것으로 3개 연대를 통할하는

<표 4-7> 조선경비대의 여단창설 현황

구분	역대 지휘관			창설일자	비고
	역대	계급/성명	재임 기간		
제1여단	초대 2대 3대	준장 송호성 대령 이응준 대령 김석원	1947.12. 1~48. 2. 5 1948. 2. 5~49. 1. 7 1949. 1. 7~49. 5.12	1947 12. 1	1947.12.28 수색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제2여단	초대 2대	대령 원용덕 대령 채원개	1947.12. 1~49. 1.15 1949. 1.15~49. 5.12	1947.12. 1	1949. 5.12 사단 승격
제3여단	초대 2대 3대	대령 이응준 대령 채원개 대령 최덕신	1947.12. 1~48. 2. 9 1948. 2. 9~49. 1.14 1949. 1.14~49. 5.12	1947.12. 1	1949. 2.24 대구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제4여단 (제6여단)	초대 대리 2대 3대	대령 채병덕 중령 김종석 중령 유재흥 대령 김백일	1948. 4.29~48. 8.16 1948. 8.16~48. 9.12 1948. 9.12~49. 1.24 1949. 1.24~49. 5.12	1948. 4.29	1948.11.20 여단해체, 제6여단으로 개칭 1949. 5.12 사단 승격
제5여단	초대 대리 2대	대령 김상겸 중령 김백일 대령 원용덕	1948. 4.29~48.10.23 1948.10.23~49. 1.15 1949. 1.15~49. 5.12	1948. 4.29	1948. 5. 4 광주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지휘기구였다. 조선경비대는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된 후 후방지원부대가 보강된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9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으로 잠정 편입되었다. 당시 조선경비대의 병력은 장교 1,430명에다 사병 49,087명으로 총 50,490명이었다.[135]

그렇지만 당시 국군은 부대 편성에 치중했을 뿐 실제로 장비는 1947년 9월부터 지급된 M-1 소총과 일본제 99식 소총이 전부였다. 물론 미군 당국은 미군 철수에 따른 장비이양에 대비하여 대구(제1훈련학교), 서울(제2훈련학교) 및 진해(제3훈련학교)의 3개소에 훈련학교를 세우고, 이미 6월 27일부터 조선경비대 화기요원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양도할 지원화기 즉, M-3 105㎜ 야포, 57㎜ 대전차포, 2·36″ 로켓포, 60㎜ 박격포, 81㎜ 박격포 및 경기관총 등의 운용 요령을 교육하였다.[136]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의 군사안전에 관한 잠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던 화기들이 점차 이양되기 시작하여 그 해 11월까지 M-3 105㎜ 야포 90문 중 52문이 양도되었다. 그러나 전량 양도된 57㎜ 대전차포는 쌍안경 및 조준기 등의 부속품이 없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박격포와 중기관총은 인계되지 않았으며, 지급된 소총과 자동화기는 일본군이 사용하던 것이 20~40%를 차지하고 있었다.[137]

3)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설치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최초 당시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였다가 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바뀜에 따라 조선경비대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경비대총사령부에는 총사령관과 총참모장이 있고, 그 밑에 참모부가 있었다. 참모부로는 최초 고급부관실·인사과·정보과·작전과·보급조달과 등 과(課)로 출발하였다가, 1946년 후반기에 참모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각 과는 처(處)로 승격되었다. 당시 참모부로는 고급부관실·인사처·정보처·작전교육처·군수처가 개편되었다. 참모부는 다시 국(局)체제로 확대되면서 고급부관실·인사국·정보국·작전교육국·군수국으로 개편되었다.

경비대 초대 사령관에는 1946년 2월 7일부로 마샬(John T. Marshall) 중령이 임명되었다. 이어 2월 22일 원용덕(元容德) 참령이 임명되었다. 제2대 사령관으로는 바로스(Russell O. Barros) 중령이 1946년 4월부로 임명되었다. 1946년 6월 15일에는 조선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로 개칭되면서 조선경비대총사령관 대리로 이형근(李亨根) 참령이 1946년 9월 28일로 부임하였다가 1946년 12월 23일 송호성(宋虎聲) 중령으로 교체되었다.[138] 다음 <표 4-8>은 조선국방경비대 및 조선경비대 총사령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경비대총사령관 대리
참령 원 용 덕

<표 4-8> 역대 경비대 총사령관

구 분	역대	계급 및 성명	재직기간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관 (1946. 2. 7)	초 대	중령 마샬(John T. Marshall)	1946. 2. 7- 2.22
		참령 원용덕(元容德)	1946. 2.22- 6.24
	제2대	중령 바로스(Russell O. Barros)	1946. 4.
조선경비대총사령관 (1946. 6. 15)	대 리	참령 이형근(李亨根)	1946. 9.28-12.23
	제2대	중령 송호성(宋虎聲)	1946.12.23-1948.11.20
육군총사령관	제3대	대령 이응준(李應俊)	1948.11.20-1948.12.15
육군총참모장	초 대	준장 이응준(李應俊)	1948.12.15-1949. 5. 9

이로써 초대 원용덕과 이형근 참령에 의한 총사령관 대리직 수행에 이어 제2대 총사령관으로 송호성 중령이 정식 취임하게 되었다. 이형근 참령은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대리에서 조선경비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송호성 사령관은 경비대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되고 육군본부에 총참모장제가 시행되자, 그 직책을 초대 총참모장 이응준 장군에게 물러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송호성 사령관은 1948년 11월 20일까지 총사령관으로 재직하였다.

조선경비대총사령관
중령 송 호 성

경비대 총참모장에는 1947년 4월 8일 초대 김상겸(金相謙) 대령이 취임한 이래, 제2대에는 정일권 대령, 제3대는 이형근 대령이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인사국(人事局)은 1946년 2월 9일 인사과로 시작하였는데, 과장은 김현수 참위였다. 1946년 9월 인사처로 개편되었고 처장에는 김종석 중령, 박진경 중령, 최영희 중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1948년 8월 20일 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강영훈(姜英勳) 대령과 신상철(申尙澈)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정보국(情報局)은 1946년 1월 14일 정보과로 시작하였는데 과장에는 미 육군의 가스 소령이었다. 1947년 6월 1일 통위부 정보국과 총사령부 정보과가 통합되어 정보처로 개편되어 처장에는 최홍희 소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9월 15일 정보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백선엽 대령, 이용문(李龍文) 대령, 신상철 대령, 장도영(張都暎) 준장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작전교육국(作戰教育局)은 1946년 1월 14일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시 국방부사령부내에 작전교육국을 설치하였는데, 국장은 미군 장교가 맡았다. 1946년 2월 7일 국방부사령부의 작전교육국을 경비대총사령부 작전교육과로 이관하였고, 과장에 김종석 대위가 보직되었다. 1947년 2월 1일 작전교육처로 개편되면서 처장에는 김종갑(金鍾甲) 소령과 장창국(張昌國) 중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12월 8일 작전교육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강문봉 대령과 장창국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군수국(軍需局)은 1946년 1월 14일 경비대총사령부 내에 군수조달과를 설치하였고, 과장에는 양국진(楊國鎭) 정위가 임명되었다. 1946년 8월 1일 군수처로 개편되면서 처장에 유재흥 대위가 보직되었다. 1948년 5월 1일 군수국으로 개편되면서 전쟁 이전까지 국장에는 김동영 중령, 최홍희 중령, 양국진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고급부관실(高級副官室)은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내에 설치되었다가 1946년 2월 7일 경비대총사령부로 편입되었다. 전쟁이전까지 역대 고급부관에는 임선하(林善河) 참위, 황헌친(黃憲親) 대령, 최경만(崔慶萬)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헌병감실(憲兵監室)은 1946년 3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 내에 군감대(軍監隊)를 설치하였고, 군감대장(軍監隊長)에는 이병주 소령이 보직되었다. 1947년 7월 20일 경비사관학교에 군기과를 설치하고 군기병을 양성하였는데 과장은 김종갑 소령이었다. 1947년 10월 30일 경비대사령부 내에 군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군기사령관에 김종갑 소령과 이형근 대령이 보직되었다. 1948년 3월 11일 통위부의 군기사령부를 조선경비대의 군기사령부에 통합하여 개편하였는데 사령관에는 최석(崔錫) 소령, 신상철 중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 1949년 3월 1일 군기

사령부를 헌병사령부로 개칭하였고, 전쟁 이전까지 사령관에는 장흥(張興) 대령, 전봉덕 대령, 최영희 대령, 송요찬(宋堯讚) 대령이 차례로 보직되었다.[139]

3. 해안경비대

해군 창설의 원로인 손원일(孫元一)과 정긍모(鄭兢謨)는 1945년 8월 21일 군사단체인 해사대(海事隊)를 조직하였다. 해사대는 미 군정하에서 일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였으나, 해안경비와 해양발전에 목표를 두고 순수한 군사단체 편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1945년 9월 30일 해사대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의 관계를 끊고 석은태(石銀泰)가 대표로 있는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報國團)과 통합하여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를 만들었다.[140] 조선해사협회에는 미 군정청 내에 해사국(海事局)이 설치되자, 해사국을 방문하여 군정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선해사협회는 이후 미 군정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약 200명 규모의

손원일 제독

정긍모 제독

손원일과 정긍모는 해사대를 조직하여 가장 먼저 창군활동에 나섰다. 손원일은 해방병단 및 해안경비대 총사령관(1945. 11. 11~1948. 9. 4)을 거쳐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 해군총참모장(1948. 9. 5~1953. 6. 30)이 되었다. 정긍모는 3대 해군참모총장(1954. 11. 1~1959. 2. 23)을 역임하였다.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경남 진해에 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945년 11월 11일 군사단체인 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는데, 해군 창설 요원들은 그 명칭을 해방병단(海防兵團)이라 하였고, 미 군정청에서는 이를 '코스트 가드(Coast Guard)'라고 하였다. 해방병단은 1945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손원일과 단원들은 이동근(李東根) 고문과 미군정청 운수부(運輸部) 해사국장인 카스텐(Carsten) 육군소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18번지에 위치한 구 표훈전에서 창설식을 가졌다.[141] 해방병단은 1894년 7월 15일 조선 수군(水軍)이 폐지된 지 51년 3개월 27일만의 일로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이며 해군 역사의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

해방병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6년 1월 14일 미 군정법령 제42호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해방병단은 합법단체로 인정받고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해방병단은 손원일 단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였는데, 일반행정에 민병증(閔丙曾), 항해교육에 김영철(金永哲), 기관교육에 정긍모(鄭兢謨)와 석은태, 군사훈련 변택주(邊宅周)와 김정주(金廷柱)가 있었다.

그 당시 해방병단 단원으로는 김동준, 이춘영, 신만균, 노진석, 임우빈, 김명진, 남영출, 김순기, 오세동, 박정기, 조길광, 이덕환, 안인규, 서상태, 채수항, 노찬숙, 이능래, 연정흠, 백창평 등 62명이었다.

해방병단 단원들은 창설된 지 약 3개월 후인 1946년 2월 1일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로부터 장교 계급과 군번을 부여받았다. 해방병단의 장교 계급은 조선경비대와 동일한 위관급(參尉・副尉・正尉)과 영관급(參領・副領・正領)으로 구분되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병단 총사령관인 손원일은 소령 계급인 참령(參領)과 해군 군번 '1번'인 80001번을 부여받았다.

하사관과 병 계급은 4개월 후인 6월 1일부로 제정되었다. 하사관과 병은 견습수병(見習水兵 : 이병), 이등수병(二等水兵 : 일병), 일등수병(一等水兵 : 상병), 이등병조(二等兵曹 : 병장), 일등병조(一等兵曹 : 하사), 상등병조(上等兵曹 : 중사), 병조장(兵曹長 : 상사/원사)으로 제정되었다. 이 계급제도는 1946년 12월 1일 조선경비대의 계급 명칭 변경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시행되었다.

해방병단(海防兵團)
조국광복 직후 손원일을 중심으로 해사대와 해사보국단이 통합, 해사협회로 개칭한 후 대한민국 해군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을 결성하였으며, 1946년 1월 14일 국방사령부에 편입되었다.

미 군정청은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1946년 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진해(鎭海)에 해방병단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초대사령관에 손원일 참령이 취임하였다. 1946년 6월 15일 미 군정법령 제86호에 의해 해안경비대는 1946년 1월 14일부로 소급 적용되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되었다.[142]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1946년 10월 1일 진해에서 서울의 통위부내로 이전하였다.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사령부내에 일반 및 특별참모부를 편성하고, 예하에

<표 4-9> 해안경비대 변천과정

해사대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	국군으로 편입	해군으로 개편
1945. 8. 21	1945. 11. 11	1946. 6. 15	1948. 9. 1	1948. 9. 5

기지부대를 설치하여 운용하였다.[143] 임무는 경찰권을 행사하여 해상과 해안경비를 담당하였다. 인천, 묵호, 목포 등의 각 기지와 진해에 훈련소를 설치하고 군정 당국의 위관급 미 육군장교들을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1946년 9월 1일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와 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이 맥케이브(George E. McCabe) 대령을 수석고문관으로 하여 한국에 도착했다. 군사고문단은 중령 1명, 소령 1명, 대위 5명, 하사관 7명 등 15명이었다.[144] 미 고문단 가운데 맥고윈(Gordon McGowan) 중령과 대위 3명, 하사관 5명 등 9명은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가 있는 진해로 내려가고, 맥케이브 대령 등 6명은 서울에 배치되었다.

해안경비대는 미 고문단 요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946년 9월 15일 미 해군으로부터 최초로 상륙정(LCI) 2척의 인수를 비롯하여 진해, 인천 및 묵호기지에서 디젤함과 증기함 수 척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145] 함정 인수를 시작으로 1948년까지 상륙정 외에도 유조선(YO-1)과 소해정(JMS・AMS) 등 모두 36척의 함정을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았다.[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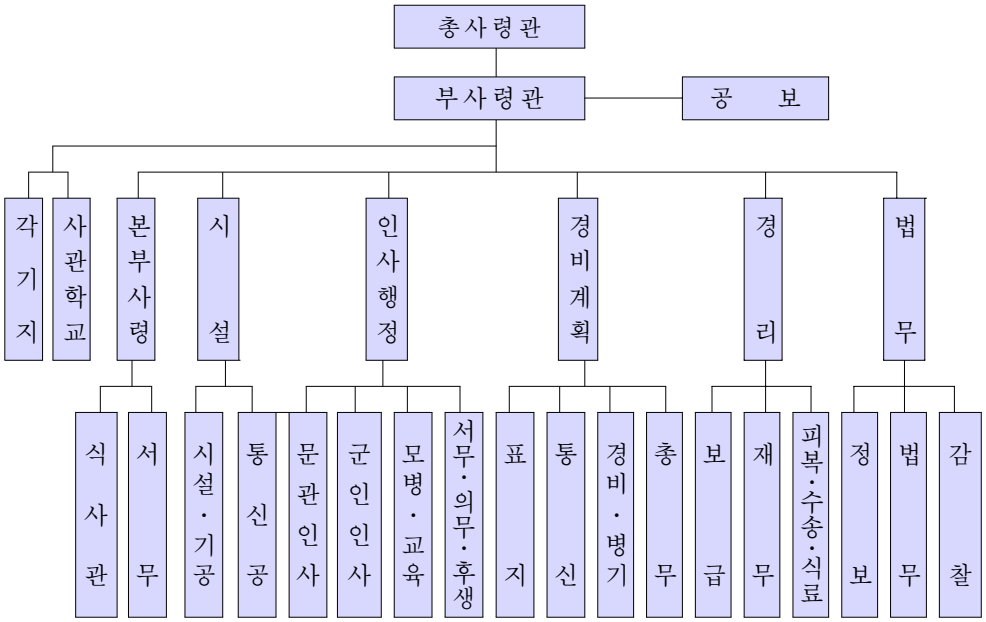
해안경비대사령부는 1946년 9월 12일 미 군정 당국이 행정권을 남조선과도정부에 이양하자 총사령부를 서울로 이전하고 진해에 특설기지사령부(特設基地司令部)의 설치 문제를 추진하였다.[147] 그해 10월 1일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진해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의 기구 편성은 다음 <표 4－10>과 같다.[148]

1946년 10월 10일에는 특설기지사령부를 진해기지에 설치하였다. 특설기지사령부는 해안경비대 총사령부 편성에 준하여 1946년 11월 1일 기구를 개편했다가 1947년 1월 20일 다시 개편하였다. 초대 사령관에는 김성삼(金省三) 부위가 보직되었다. 그해 9월 1일 특설기지사령부는 진해특설기지의 7개 교육대를 항해, 기관, 공작, 통신, 위생학교 등으로 개칭하고, 1948년 3월 11일에는 진해기상대를 추가로 설치하였다.[149]

해군 기지 설치는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와 진해 특설기지사령부가 설치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1946년 8월 16일에는 김포에 저장된 유류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기지에 김포파견대를 설치하였다. 8월 18일에는 목포기지를

<표 4－10>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부 기구

(1947. 10 현재)



설치하고 사령관에 왕홍경(王弘慶) 부위를 임명하였다. 8월 22일에는 묵호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정긍모 부위를 임명하였다. 1947년 1월 6일에는 군산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이상열(李相烈) 대위를 임명하였다. 2월 8일에는 포항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한갑수 중위를 임명하였다. 9월 24일에는 부산기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박진동(朴鎭東) 대위를 임명하였다.[150]

또한 1947년 3월 26일에는 묵호기지 소속으로 주문진 파견대를 설치하고, 6월 21일에는 목포기지 소속으로 제주도에 제주수영(濟州水營)을, 7월 11일에는 여수수영을 설치하여 부산기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151]

이렇게 조선해안경비대는 대소 함정과 함께 동·서·남 해안에 7개의 기지, 2개의 수영(제주·여수), 2개의 파견대(김포, 주문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안경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해상방위력을 증대시키면서 1947년 8월 30일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대로부터 38도선 이남의 해상 경비임무를 인수

하였다. 해안경비대의 임무 수행이 확대되자 그 해 10월 15일 부산을 근거지로 하여 제1특무정대(特務艇隊)를 편성하고, 정대사령관(艇隊司令官)에 이희정(李熙晶) 대위를 임명하였다. 그 해 12월 9일에는 여수를 근거지로 하여 제2특무정대를 편성하고, 정대사령관에 최용남(崔龍男) 소령을 임명하였다.[152]

해안경비대는 1946년 11월 30일 장교 165명, 사병 1,026명에서 정부 수립 직전에는 3,000명의 병력에 함정 105척으로 발전하였다. 해안의 경찰권이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197호」에 의거하여 해안경비대에 부여되었다.[153] 조선해안경비대에도 조선경비대와 마찬가지로 총참모장제(總參謀長制)가 실시되었다.[154] 이렇게 조선해안경비대는 통위부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총사령부 산하에 총참모장제를 신설했는가 하면 그 예하에는 특별기지를 포함하여 7개 기지와 2개의 특무정대를 보유하면서 해상방위와 정규 해군창설을 위한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정부 수립 후에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조선해안경비대의 병력 및 함정수는 병력 3,000명과 대소 함정 105척(1만 3천톤)에 달하는 수준이었다.[155]

1948년 8월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은 손원일 준장이었고, 사령부 참모장은 김영철(金永哲) 대령이었다. 통위부 해안경비대참모장은 김성삼(金省三) 대령이 보직되어 있었다. 진해특설기지사령관은 김일병 대령, 인천기지사령관은 연정(延楨) 소령, 목포기지사령관은 정긍모 중령, 부산기지사령관은 김장훈(金長勳), 묵호기지사령관은 김석범(金錫範) 소령, 포항기지사령관은 이상열 중령, 군산기지사령관은 계병락 소령, 제1정대사령관은 최용남 소령, 제2정대사령관은 황운서(黃雲瑞) 소령이었다.[156]

4. 항공부대

1945년 11월 13일 설치된 미군정 군사담당기구인 국방사령부 내에는 공군 창설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광복 이전부터 항공계에 종사해 왔던 항공인들이 뜻을 모아 1946년 8월 10일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를 조직하고,

미 군정청과 교섭하였다.[157] 1946년 9월 김정렬과 최용덕을 비롯한 항공계 지도자들은 먼저 유동열 통위부장을 방문하여 공군 창설을 위해 교섭하는 한편, 통위부 정보국장 대리로 있던 김영환(金英煥) 부위(副尉)에게는 미 고문관 프라이스 대령을 만나 공군 창설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미군정 당국도 장차 조선경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락기나 경비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미 군정당국은 항공계의 지도급 인사들은 과거 일본군에 종사하였거나, 중국 공군 출신임으로 미국식 훈련을 위해 먼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결과 1948년 4월 1일 최용덕(崔用德)[158]·김정렬(金貞烈)·박범집(朴範集)[159]·이근석(李根晳)[160]·장덕창(張德昌)[161]·김영환(金英煥)·이영무(李英茂)[162] 등 항공부대 창설요원 7명은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1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다시 5월 1일 육사 6기생과 함께 입교하여 2주간의 훈련을 받고 5월 14일 소위로 임관하였다.[163]

공군 창설요원들은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통위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를 창설하였다. 항공부대 사령관에는 육군 소령 백인엽(白仁燁)[164]이 보직되었다. 같은 해 6월 23일 항공부대는 통위부 직할에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로 예속 변경되었다.

항공부대에는 이미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였던 일본항공사관학교 출신인 박원석(朴元錫)[165]과 장지량(張志良)[166] 소위가 전속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항공출신 하사관도 추가로 보충되었다. 이로써 항공부대는 장교 9명과 일본군·중국군 출신, 그리고 민간항공 출신자 105명을 주축으로 육군항공기지사령부를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항공부대가 통위부에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에 예속되고 나서 항공병 모병이 실시되었다.[167] 항공부대 사령부는 조선경비대 내의 항공계 출신 장병을 전입시키면서 사회의 항공분야 경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105명을 선발하였다. 1948년 7월 12일에는 이들 가운데 78명이 선발되어 육군보병학교에서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항공병 제1기생으로 정식 입대하였다.[168]

항공부대 창설요원 7명

항공병력이 확충되자 1948년 7월 27일 항공부대는 부대 명칭을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로 개칭하였다. 부대도 경기도 수색에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하였다.[169] 사령관에는 최용덕 중위, 부사령관에는 이영무 중위가 보직되었다. 다음 <표 4－11>은 항공기지부대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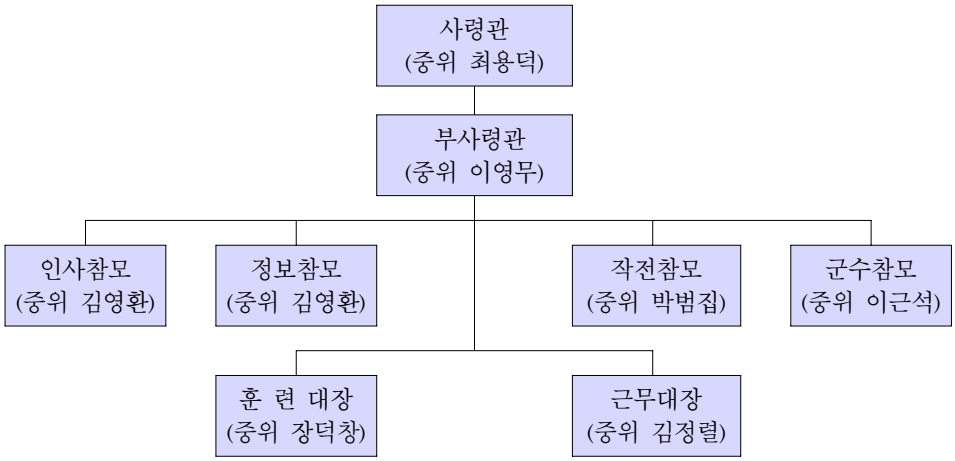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사령관 최용덕 대위는 1948년 8월 16일부로 국방부 차관으로 전임되었고, 항공총감(航空總監)으로 있던 이영무(李英茂) 대위가 제3대 사령관이 되었다. 1948년 9월 1일 항공기지부대가 김포비행장으로 이동하면서 김포기지는 한국 공군의 발상지가 되었다.

항공기지부대는 1948년 9월 8일 미군으로부터 L-4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9월 13일 여의도기지(汝矣島基地)에서 편대비행을 실시하였고,[170] 9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L-4 연락기 10대의 전시비행(展示飛行)을 실시하였다.

1948년 9월 13일 항공기지부대는 연락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육군항공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사령부 예하에 비행부대(여의도 기지)와 항공기지부대(김포기지)를 새로 창설하고 비행부대장에 김정렬 대위,

<표 4-11> 항공기지부대 편성

(1948. 7. 9 현재)



항공기지부대장에 장덕창 대위를 임명하였다. 비행부대는 2개 소대로 편성하고 제1소대장에 장성환 소위, 제2소대장에 김신 소위를 임명하였다.[171]

비행부대는 '여순 10·19사건'이 일어나자, 부대장인 김정렬 대위 등 19명이 L-4 10대를 비행하여 10여일 동안 공중지원작전을 실시하였다.[172] 1948년 말 항공부대는 L-5형 경비행기 1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후방지역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주로 영남지구, 제주도, 옹진반도, 개성, 송악산 지구 등 38도 분계선과 공비출몰지역에서 관측·통신·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제 4 절 건군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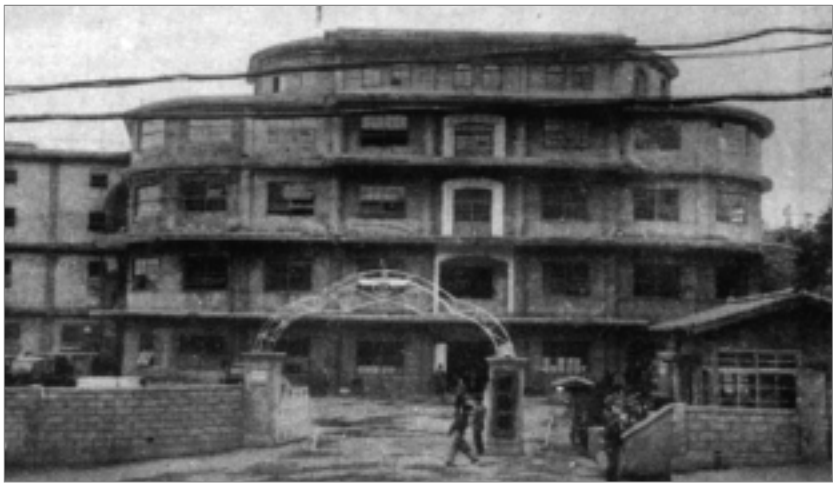
1. 국방부

1) 국방관계 법령 제정

국방부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국방부장관 취임식은 정부수립 다음날인 8월 16일 조선경비대사령부 영내에서 거행되었다. 또한 이날 통위부 건물에서 국방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식이 있었는데, 인계하는 쪽은 통위부장 유동열과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육군 대령이었고, 인계를 받는 쪽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범석 장군, 국방부 차관 최용덕 장군, 국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채병덕 육군 대령이었다.[173] 국방부 창설은 1948년 8월 31일 이루어졌고, 미군으로부터 조선경비대에 대한 지휘권 인수도 9월 1일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해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편입되면서 국군도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국군관계법령에 대한 제정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나왔다. 즉, 1948년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 그리고 1949년 병역법이 그것이다.[174]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날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됨에 따라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구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은 총 6장 19조로 이루어졌다. 정부조직법에 나타난 행정부서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총 11개 부(部)로, 국방부에 대한 설치는 제3장(행정각부) 제1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제3장 제17조에,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악한다”라고 규정하였다.[175]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국군조직법(國軍



건국 직후 국방부 청사
현 외환은행(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이 위치한 지역에 있던 당시 국방부 청사인데, 서쪽을 국방부가 동쪽을 육군본부가 사용하였다.

組織法)이 법률 제9호로 제정되었다. 국군조직법은 총 6장 23개조로, 그 편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편으로 이루어졌다.[176] 그 후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는 공군이 추가됨에 따라 총 7장 23개조로 이루어졌고,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공군, 제6장 군인의 신분, 제7장 기타로 나누어졌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각각 발족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7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37호로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을 공포하고, 국방부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의 직제(職制)를 규정하였다. 국방부직제령은 총 3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국방부에는 국방부본부·육군본부·해군본부·연합참모회의(連合參謀會議)를 두고, 국방부본부에는 비서실, 제1·2·3·4국 및 항공국을 두었다. 육군본부에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호군국 및 11개 감실을 두며, 해군본부에는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 호군국 및 5개 감실을 두었다.[177]

정부 수립 이후 창설된 해병대와 육군으로부터 독립된 공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해병대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공포된 해병대령(海兵隊令)에 따라 창설되었다.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로 공포된 공군본부직제령(空軍本部職制令)에 따라 창설되었고, 공군본부에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및 3개 감실(監室)을 두도록 규정하였다.[178]

정부는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으로써 국군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1949년 7월 15일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兵役法)이 법률 제41호로 1949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국민 개병 병역의무제를 확립하였다.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게 되었다. 병역은 상비병역(현역 및 예비역), 호국병역(護國兵役), 국민병역(제1 및 제2국민병역) 등으로 구분되었고, 상비병역의 복무연한은 현역은 육군이 2년, 해군이 3년이고, 예비역은 육군이 6년, 해군이 5년으로 규정되었다.[179] 다음 <표 4－12>는 병역구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병역법에 의하면, 징집은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8월 31일까지를 징집연도로 정하여 실시하고, 징집연도에 만 20세에 달한 남자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실역(實役) 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순서에 따라 징집되었다. 소집은 호국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시에 동원하도록 규정되었다.

<표 4-12> 병역 구분[180]

역 종 (役種)	복무 연한		내 용
	육군	해군	
현 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현역병은 재영한다.
예비병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후비병역	10년	10년	예비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호국병역	2년	3년	현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로서 특별한 명령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그 연소요(年所要)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兵員數)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무한다.
제2보충병역	14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역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무한다.
제1국민병역	—	—	후비병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역으로 해병역을 필한 자.
제2국민병역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

2) 국방조직의 편성과 국방부 본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 제75조에 근거를 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자 이에 따라 국무원과 행정부가 조직되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의 직무는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掌理)하는 것이었다.[181]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 11월 30일 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이 법률 제9호로 통과되어 국방조직이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되었다.[182]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은 전문 24조로 되어 있었

다. 「국군조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부, 제3장 육군, 제4장 해군, 제5장 군인의 신분, 제6장 기타, 그리고 제7장 부칙으로 이루어졌다.[183]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最高國防委員會)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국방자원관리위원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을 설치할 수 있었다.

국군조직법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해군본부의 편성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군참모총장 및 참모차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어 통할하도록 하였다.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제1대 국방부장관
이 범 석(1900-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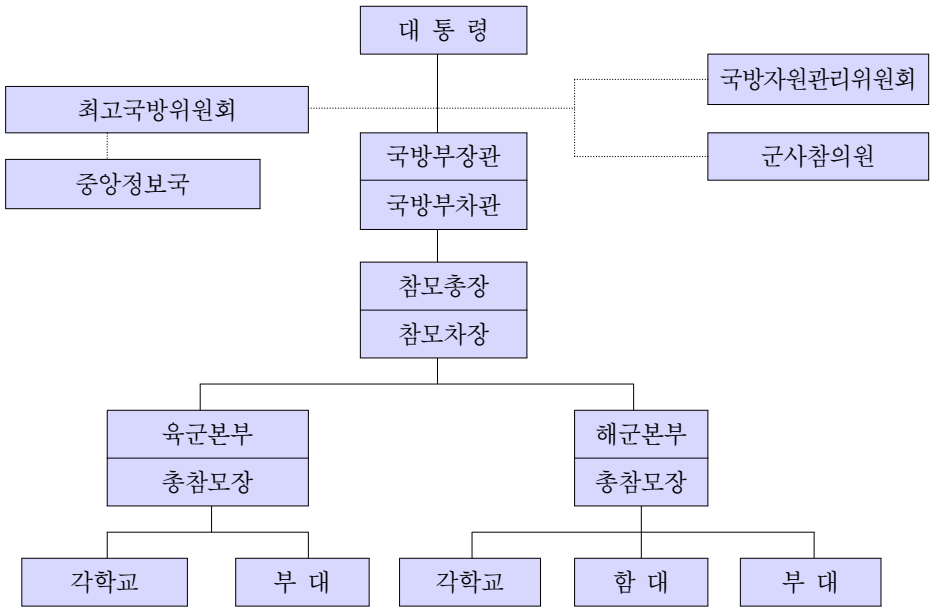
이범석 장관과 육군 수뇌들이 초도 순시를 위해 용산역으로 향하는 모습

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초대 국방부 장관에는 국무총리를 겸직한 광복군 출신의 이범석(李範奭) 장군이 임명되었고, 국방부 차관에는 중국 공군 출신으로 광복군에서 활동한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임명되었다.

국군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국군 현역장교 중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였다. 국군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 최고 장교로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하였다. 국군참모차장은 국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였다.[184] 정부수립 이후 국군참모총장 후보로 채병덕·이응준·김석원 장군 등이 거론되었으나, 채병덕 장군으로 낙착됨에 따라 육군총참모장에는 이응준 장군이 임명되었다. 해군총참모장에는 손원일 제독이 임명되었다. 다음 <표 4-13>은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국방기구의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3> 대한민국 국방기구 편성[185]

(1948. 11. 30 현재)



국방기구의 편성에 이어서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國防部職制令)이 대통령령 제37호로 공포되어 국방부 본부와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의 편제를 규정하였다. 국방부직제령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에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그리고 별도로 항공국을 두었다.[186]

특히 적극적인 대북 첩보활동과 탐색공작을 위해 설치된 특수정보국인 제4국의 설치는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밖에 국방부는 육군·해군의 작전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였다. 연합참모회의에는 국군참모총장이 의장이 되고, 참석대상은 국군참모차장, 육군·해군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국방부 제1국장·제2국장·항공국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육·해군 장교가 참석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기구편성은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 작업으로 국군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됨으로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육·해군 총참모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군령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1948년 12월 10일 정부는 이응준·채병덕·송호성 육군 대령과 손원일 해군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곧 이어 정부 수립 이후 뒤늦게 귀국한 김홍일도 특별임관 형식을 거쳐 곧바로 준장으로 임관시켰다. 그리고 이들 5명의 준장(准將) 진급자에 대한 승진식이 1948년 12월 22일 중앙청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또한 1949년 2월 24일에는 송호성 준장을 제외한 이응준·채병덕·김홍일·손원일 준장 등 4명의 장성(將星)이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이때 육군에서는 정일권·이형근·원용덕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초대 공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김정렬 대령은 전쟁 불과 1개월을 앞둔 1950년 5월 준장으로 진급하여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 직전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을 제외한 육·해·공군 총참모장은 모두 장성급으로 보직되었다.

3) 국방 목표와 방향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방부는 건군(建軍)의 이념적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자주독립정신, 의병·독립군·광복군의 민족 항쟁정신, 그리고 반공정신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범석 국방장관은 군이 나아갈 방향으로 국방군(國防軍)을 지향하며 진충보국(盡忠報國)과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건군이념은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군 지도지침으로서 정병양성(精兵養成)을 위한 사병제일주의(士兵第一主義)로 제시되었다. 사병제일주의란 사병 개개인의 자질을 조속히 향상시켜 국군 전체의 질적 수준을 평준화함으로써 선진 민주국가의 우수한 군대와 대등한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187] 이를 위해 반공민주주의의 군대로서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훈국(政訓局)을 설치하였다.

이범석 국방장관은 국군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장교의 질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를 우선으로 사병제일주의와 정신면에서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며, 강병 육성의 장래를 학병 출신의 장병에게 건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188]

이범석 장관은 군내부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발호로 여순 10·19사건이 터지자 숙군(肅軍)을 단행하면서 정신전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이는 1948년 12월 1일 여·순지구 전몰장병 합동위령제에서 전장병들에게 실천구호로 반포된 「국군3대선서문」이었다. 국군3대선서문은 죽음으로써 민족과 국가를 지키며, 우리의 상관과 전우를 죽인 공산당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국군3대선서는 1949년에 국군맹서(國軍盟誓)로 개칭되어 시행되었다. 1950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282호로 「군인복무령」이 제정되어 군인복무에 관한 정신적 토대가 법제화되었다. 군인복무령은 군인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게 하며, 군인생활의 군기유지, 상호간의 신의와 군인으로서의 무용, 그리고 청렴 정신에 뜻을 두도록 군대윤리와 실천강령을 명문화하였다.[189]

또한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가 추진한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의 연합을 뜻하는 연합국방(聯合國防)이었다. 연합국방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

은 물론 해·공군의 건설에 있어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쟁상태가 발생하면 작전상 미군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190]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밝힌 "3·1독립정신으로 재건된 민주독립국가로서 항구적인 국제평화유지와 자손만대의 자유 행복을 확보하는 국제간의 친선유지와 평화애호의 국시(國是)를 중심으로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문과 합치되는 것이었다.[191]

연합국방은 이범석 초대 국방부장관의 취임사에서 국방의 정책적 목표로 강조되었다. 이 장관은 장관직 취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당면한 국제적인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것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국방을 기본 축으로 한 지상군 육성이라고 말했다.[192]

연합국방이란 개념은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대강(大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우방들의 호의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바로 한·미간의 친선이 민족생존의 관건이라는 인식이었다. 국제공산주의를 가상적으로 상정한 만큼 이에 대처하려면 미국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국방이 절실하였던 것이다.[193]

국방부 제2국장을 지낸 김홍일(金弘壹) 장군도 그의 저서 『국방개론』에서 현대전의 특성을 단순한 무력전(武力戰)이 아니고 정치·경제·무력·문화·외교·사상의 전체성 총력전이라고 하면서 현대 국방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국제적으로 침략전선이 생기면 반침략 전선이 생겨 경제·정치·군사 세 가지를 종합한 대립적 국제연합전투체제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현대전쟁은 2개 국가간의 단순전쟁에서 집단과 집단간의 연합전쟁(聯合戰爭)으로 변천하여 일국의 총력국방(總力國防)은 국제간의 연합국방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194]

이렇듯 건국 직후의 국방정책은 국군조직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행정적인 조치와 연합국방을 토대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결집되었다.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의 군사역량을 규합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고려하여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정병배양(精兵培養)과 사병제일주의에 입각하여 반공정신을 토대로 한 전력육성에 힘썼다.

2. 육 군

1) 육군본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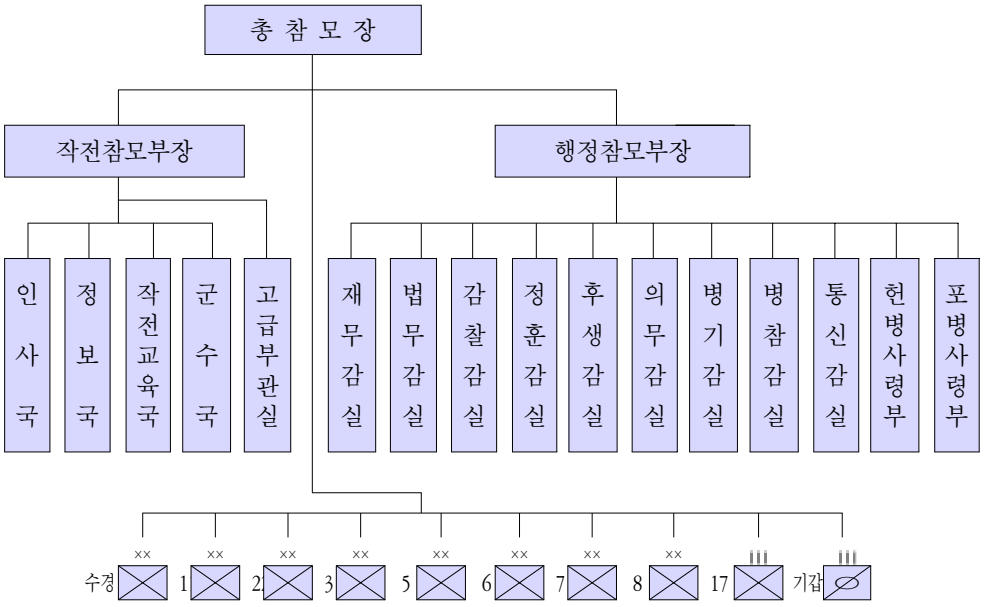
대한민국 육군은 미 군정하 조선경비대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따라 발족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의 11개 부서가 구성될 때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8월 15일 국방부장관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경비대의 국군 편입과 국군조직법의 공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수립 직전까지 국군의 지위는 경비대라는 명칭과 같이 공식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대한민국으로 군의 통수권이 이양되었다. 통수권의 이양과 함께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되었다.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에 따라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그 명칭을 육군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에는 보병 5개 여단(15개 연대)과 지원부대가 편성되었고, 병력은 장교 1,403명, 사병 49,087명 총 50,490명이었다.[195]

육군총사령부는 다시 1948년 12월 15일 육군본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육군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된 후에는 육군총사령관도 육군총참모장으로 개칭되었다.[196] 다음 <표 4－14>는 육군 편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4> 육군 편성

(1949. 5. 31 현재)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을 두되, 육군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육군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본부를 통리(統理)하며 예하 육군관아학교(陸軍官衙學校)와 부대를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였다. 육군본부에는 육군총참모장(초대 이응준 육군준장)과 참모부장(參謀副長 정일권 육군대령) 밑에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의 일반참모부와 호군국, 그리고 고급부관실, 감찰, 법무, 헌병, 재무, 포병, 공병, 병기, 병참, 의무의 각 감실(監室)이 설치되었다. 1949년 5월 9일부로 제2대 총참모장으로 채병덕(蔡秉德) 소장이 보직된 데 이어, 그 해 10월 1일 채병덕 소장이 해임되고 총참모장에 신태영(申泰英) 소장이 보직되었다. 채병덕 소장은 1950년 4월 10일 제4대 총참모장으로 다시 기용되어 한국전쟁을 맞이하였다.[197]

2) 육군 부대 증편

육군의 조직 및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다.[198]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護國軍)으로 이루어지는데, 육군 정규군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의미하고, 호국군은 예비군을 의미한다. 육군의 병종(兵種)은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기갑병, 항공병, 방공병, 통신병, 헌병으로 구성되고, 육군에는 참모, 부관, 감찰, 법무, 병참, 경리, 군의, 병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평시에 사단(師團)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두도록 규정되었다. 육군은 사단 단위로 편성하며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 개의 사단 관구로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육군은 육군본부의 편제가 완성되고 군 수뇌부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위해 연대의 증편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여단(旅團)체제를 확대하면서 사단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육군의 부대 증편은 초대 이범석 국방부장관의 재임 기간중에 6개 보병연대(제16, 17, 18, 19, 20, 21연대)와 기갑연대의 전신인 육군특별부대수색단을 비롯한 6개 특수부대를 증설하였다.

1949년 1월 육군은 제7여단을 창설함으로써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되었다. 예하 여단을 지원하는 부대편성도 급진전되어 1949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각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었고, 6월20일에는 제8사단과 수도

<표 4－15> 정부수립 이후 연대증편(1948. 8. 15～1949. 6. 10)

연 대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연 대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6연대	1948. 10. 28	마산	중령 박시창	제21연대	1949. 2. 1	광주	중령 박기병
제17연대	1948. 11. 20	시흥	중령 백인엽	제22연대	1949. 4. 15	대구	중령 오덕준
제18연대	1948. 11. 20	포항	중령 최 석	제23연대	1949. 4. 20	마산	대령 김종평
제19연대	1948. 11. 20	광주	소령 민병권	제25연대	1949. 6. 20	대전	중령 유해준
제20연대	1948. 11. 20	광주	중령 이성가	기갑연대	1948. 1. 1	수색	소령 이용문

경비사령부를 추가로 창설하여 육군은 전쟁 직전 총 8개 사단, 22개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199]

전쟁당시 보병사단은 3각편제 개념으로 3개 보병연대 및 1개 포병대대, 각 연대는 3개 보병대대, 각 대대는 3개 소총중대 및 중화기중대, 각 소총중대는 3개 소총중대 및 중화기소대로 편성되었다.

편제상 사단병력은 10,561명(장교 : 625명, 사병 : 9,936명)이고, 연대병력은 2,809명(장교 : 153명, 사병 : 2,656명), 대대병력은 786명(장교 : 76명, 사병 : 710명), 중대병력은 166명(장교 : 6명, 사병 : 16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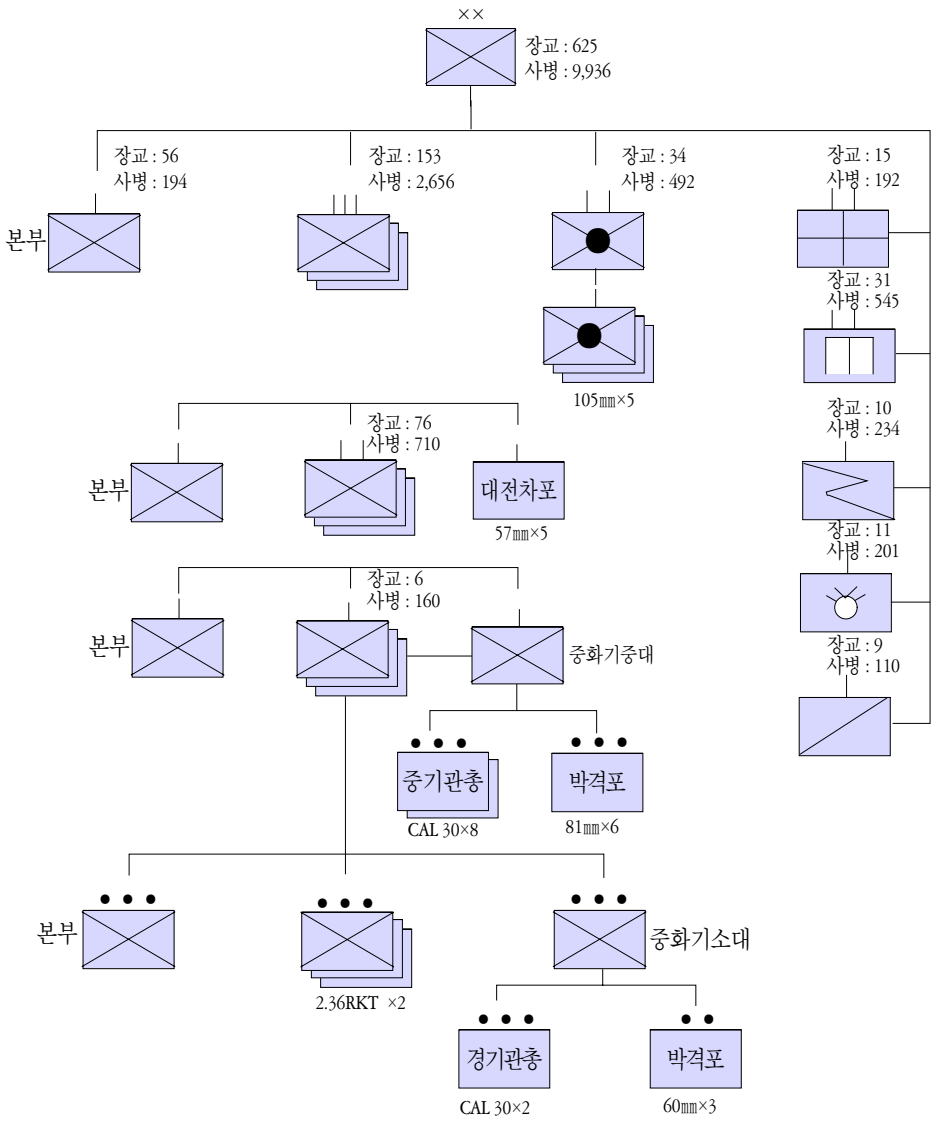
이 중 제1・6・7・8사단과 제17연대가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였고, 그밖에 사단은 후방지역방어, 특히 공비토벌작전에 임하였다. 육군은 지원부대 증편에도 노력하여 통위부 당시의 대대급 후방지원부대를 포병단 등 단급(團級) 병과부대로 발전시켰으나, 장비의 부족으로 기능상 많은 제약을 받았다.

육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예비병력 확보를 위해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령령으로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군 복무를 희망하는 애국청년들을 근간으로 육군호국군도 창설하였다. 이로써 제4・9・12연대를 제외한 제1연대～제13연대는 호국군고문부(護國軍顧問部)를 설치하여 그해 연말에 편성을 완료했으며, 다음 해인 1949년 1월 10일 호국군은 총 10개 연대에 약 2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다.[200] 그밖에 대북 첩보수집을 위해 육군수색학교, 호림부대, 그리고 보국대대 등 특수부대를 창설하였다.[201]

특수부대는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의 '인민유격대'가 남한의 후방지역에서 교란작전을 전개하자 이에 대비하여 당시 국방부장관 이범석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이들 특수부대는 일종의 유격부대로서 그 규모는 연대급 병력 수준이었다.

육군수색학교로서 발족한 독립 제1대대는 주로 서북 출신 장병들로 편성되었다. 1948년 11월 25일 서울의 수색에서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창설된 이 학교의 초대 교장은 김용주(金龍周) 소령이었다. 북한의 대남(對南) 정치공작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그해 11월 6일 독립 제1대대를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지리산

<표 4－16> 국군 보병사단 편제표(1950. 6. 25 기준)



<표 4－17> 6·25전쟁 당시 사단 현황[202]

사 단		창설일	사단장	예속 연대	비 고
전방사단	제1사단	1949. 5. 2	대령 백선엽	제11, 12, 13연대, 제6포병대대, 공병대대	제1여단의 승격
	제6사단	1949. 5.12	대령 김종오	제2, 7, 19연대, 제16포병대대, 공병대대	제6여단의 승격
	제7사단	1949. 6.20	준장 유재흥	제1, 9, 25연대, 제8포병대대, 공병대대	수도사단 개칭
	제8사단	1949. 6.20	대령 이성가	제10, 21연대, 제18포병대대, 공병대	
후방사단	제2사단	1949. 5.12	준장 이형근	제5, 16연대, 포병대	제2여단의 승격
	제3사단	1949. 5.12	대령 유승렬	제22, 23연대, 보국대대, 포병대	제3여단의 승격
	제5사단	1949. 5.12	소장 이응준	제15, 20연대, 제1독립대대, 포병대	제5여단의 승격
	수도경비사령부	1949. 6.20	대령 이종찬	제3, 8, 18연대	

지구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1949년 5월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을 끝내고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그해 6월 4일 옹진지구에 출동하여 통상명칭을 '38선 부대'라고 불렀다. 6월 20일 육본일반명령 제7호로 육군수색학교를 독립 제1대대라 개칭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하였다.

그해 7월 5일 다시 옹진지구에서 수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달 15일부로 육일명 제44호에 의해 제5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어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그해 12월 다시 제주도에서 경남 진주로 이동하고 육본특별명령 제42호로 초대 대대장 김용주 소령이 전출과 동시에 제2대 대대장으로 조재미(趙在美) 중령이 보임되었다. 1950년 3월 5일 제3대 대대장 박승일 중령이 보임된 데 이어 6월 15일 김종순 중령이 제4대 대대장으로 보임되었는데, 이때부터 제5사단에서 제3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호림부대(虎林部隊)는 서북 출신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공비 토벌 등에 참가하였다. 이 부대는 1949년 2월 25일 367명의 서북 출신 장정들이 서울의 영등포

에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으로 창설되었다. 총사령관에는 육본 정보국 특무과장인 한왕용 소령이 임명되었다. 부대는 창설과 동시에 영등포에서 경북 대구 주둔의 제18연대 건물로 이동하여 부대 편성을 완료하고 그해 5월 2일 유격전술 교육을 위해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육군수색학교에 입학하였다.

호림부대 대원들은 육군수색학교에서 약 5개월간의 유격전훈련을 받고 2개 대대로 편성되어 북한의 침투루트인 설악산지구에 투입되었다. 대원들은 제5대대 180명, 제6대대 13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복장은 전부 북한군의 복장을 하고 무장은 일본군 99식 장총을 가지고 작전을 제5대대와 제6대대가 분산하여 수행하였다. 1948년 8월경 대대장 백의곤의 지휘하에 해발 1,700m의 고지인 설악산 천봉에서 북한의 대남 공비 근거지를 습격하고 결사전을 벌였다. 약 1개월간에 걸친 전투를 통해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호림부대는 북한의 38선 경비여단에 포위되어 제6대 대원들과 함께 심대한 타격을 받기도 하였다. 호림부대는 다시 영등포 학원으로 재편된 후 호국군에 편입되었으며, 잔여병력은 현역으로 정식 입대하였다.

보국대대(제803독립대대)는 북한에서 귀순한 장병(장교 52명, 사병 약 500명)들로 구성되었다. 초대 대대장에는 예비역 소령 안병식이 보임되었다. 부대는 보병 제3사단에 배속되어 주로 영남지구 공비토벌작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선무활동 및 심리전 활동을 주로 하였다. 보국대대는 1950년 5월에 1개월간의 대북 침투훈련을 마치고 그해 6월초 침투할 계획이었으나, 미 군사고문단에서 이를 알고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계획이 좌절되었다. 대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해 7월 10일부로 해편되었고, 그 병력은 제1군단에 편입되었다.

그밖에 특수부대로서는 1948년 12월 31일 반란군 및 공비소탕작전을 위해서 잠정편성으로 각 여단 예하에 1개 유격대대를 편성했으나, 각 여단별 유격대대는 1949년에 해체되었다.

3) 육군 교육훈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북한간의 군사관계는 1949년 전반기를 넘어서서

38도 선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의한 국지도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국군은 정규군으로 편성된 8개 사단 중에서 무기와 전투장비가 크게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에 가까운 3개 사단은 후방작전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949년 1월경에 이미 태백산·옹진·지리산 등에서 제3·제5·제7사단 등 3개의 사단이 공비소탕을 위한 게릴라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1949년 말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암약하던 공비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전개한 공비소탕작전으로 대부분 섬멸되었지만,[203] 그러한 작전으로 국군은 정규작전 능력을 배양할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 1월 「교육각서(敎育覺書)」(제1호)가 하달되어 8개 사단의 육군부대는 분대전술로부터 시작하여 대대전술훈련을 그해 3월까지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전에 전군에 대한 군사훈련이 모두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보병 8개 사단 약 9만 8천명의 병력 가운데 6만 5천명이 소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게다가 우리 군은 38도선과 후방에서 동시에 북한군과 공비들의 위협에 대처해야 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각 연대에서는 산을 이용하여 1개 대대씩 훈련을 실시했다.

「교육각서(敎育覺書)」(제1호)의 교육계획에 별다른 진전이 없게 되자, 1950년 3월 14일 육군본부는 「교육각서(敎育覺書)」 제2호를 하달하게 되었다. 교육각서 제2호에 의하면, 각 부대는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완료하고 9월까지는 연대훈련을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6월 15일에 가서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개 연대와 제7사단 2개 연대 제8사단의 1개 대대만이 대대훈련을 완료하였다. 다른 연대의 30개 대대는 중대훈련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17개 대대와 5개 연대의 참모들은 대대지휘연습을 실시했고, 다른 14개 대대는 1주일간의 기동훈련을, 그리고 6개 대대가 57㎜ 대전차포훈련을 실시하였다.[204]

한편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군사교육과 훈련은 주로 미 군사고문단이 담당했다. 고문단들은 정부 수립 당시 100명 정도였으나 그해 말에는 약 240명으로 증원되었고, 그 이듬해 1월 미 제24군단이 철수하고, 이어 마지막까지 잔류하던 미

제5연대전투단이 6월 29일 떠나게 되자 1949년 7월 1일을 기해 임시 군사고문단은 그 명칭을 바꾸고 5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의 공식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205]

고문단은 정보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단 수준의 교육 내용으로 한 군사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전투정보학교를 1949년 6월 25일 설치하였는데, 이는 남산정보학교로 개칭하여 6개월 기간의 교육과정으로 개설하였다. 정보국에 있던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군에게 정보업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보교육을 받은 한국군 정보장교들은 각 사단에 배치되어 군에 침투한 좌익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국방부는 고급지휘관과 사단급 이상의 참모들을 위해 참모학교를 설치하였다. 참모학교는 1949년 7월 1일 미 군사고문단측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일종의 지휘참모대학(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이었다. 교육 내용은 지휘관과 참모를 8주간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최초 3주간은 보병학교의 고급간부반에서 미 보병학교 과정의 미국식 전술과 화기학을 배우고, 나머지 5주간은 참모학교로 돌아와 전술교리 및 참모업무 교육을 받았다.[206]

국군 장교의 해외 군사교육을 위한 유학은 미 군사고문단이 주선하여 이루어졌다. 1948년 8월 6명의 영관급 장교가 미국의 포트 베닝(Fort Benning)에 있는 보병학교의 고급과정에 입학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은 이형근 대령을 선임으로 한 민기식, 이한림, 임선하, 김동영, 장창국 중령이었다. 1949년 6명의 영·위관급 장교가 포트 릴리(Fort Riley)에 있는 지상군학교(Ground Forces School)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포트 베닝의 기초과정을 교육받았다.[207] 최덕신 대령과 최홍희 대령을 비롯하여 심흥선(沈興善) 중령, 장은산 소령, 강관용 대위, 이승호 중위가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심흥선 등 5명은 다시 포트 실(Fort Sill)에 위치한 미 포병학교 고급과정에 곧바로 입학하였다.[208]

미국 국방부는 1950년대 들어와서 상호방위원조에 의해 보병, 포병, 일반 참모대학 등 총 27개 군사교육기관에 한국군 유학생에 대해 할당제를 적용하였고, 미 점령군의 행정, 훈련방법 등의 숙지를 위해 옵저버 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미

군부대에 33명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일본 유학팀은 1950년 4월 1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여 일본 주둔 미군 4개 사단에 배치되어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그밖에도 병과학교로서 육군보병학교를 비롯하여 포병·병기·병참·통신·헌병·군의·정보·수색·군악학교에서 병과교육을 실시하였다.[209]

3. 해 군

1) 해군본부 설치

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족하여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단행하였다.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재출발한 법적 근거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국군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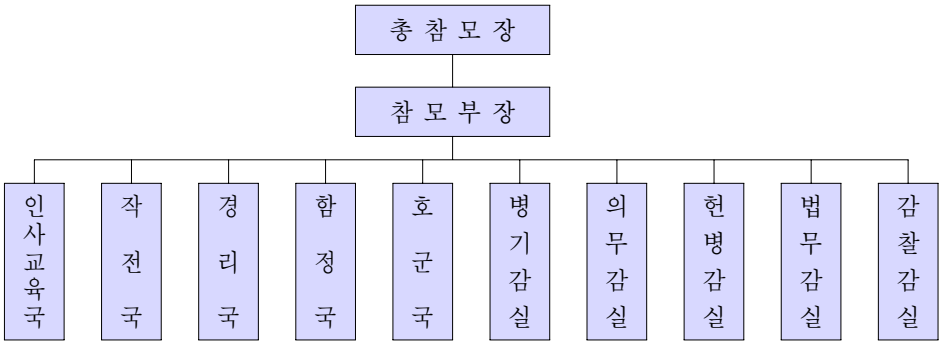
해군의 개편은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9호(국군조직법)에 이어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국방부 직제령)에 의거하여 해군 기구의 강화로 나타났다. 해군 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군의 용병작전인 해상작전을 통할하고, 예하부대·학교·함대를 지휘 감독하며 군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다.[210]

초대 해군총참모장으로는 해군 준장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임명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안경비대총사령부는 해군총사령부(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었고, 다시 12월 15일 해군본부로 기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해군본부의 편성은 다음 <표 4－18>과 같다.

해군본부의 조직편성은 1948년 8월 31일 인사교육국 신편으로부터 시작되어 1949년 4월 1일 호군국(護軍局)과 헌병감실을 편성함으로써 완료되었다. 해군총참모장 밑에 참모부장을 두고 인사교육국, 작전국, 경리국, 함정국(艦政局), 호군국과 병기·의무·헌병·법무·감찰감실 등 5개 감실(監室)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해군본부 예하부대에 대한 편성은 해안경비대의 기구 및 편제를 그대로 계승

<표 4－18> 해군본부 편성

(1948. 12 현재)



하였다. 인사교육국은 해군의 군인과 군속의 보임, 상훈과 기타 인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작전국은 해군의 작전·정보·통신·수로(水路)·보도, 기타 해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여 수행하였다. 경리국은 해군의 재정, 군수, 의류 및 의량(衣糧), 재산관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함정국은 해군 소속의 함정, 선박과 항만시설에 관한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다. 그리고 호군국에서는 해군 호국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였으며, 그밖에 감찰감실을 비롯한 5개 감실은 별도로 기능을 분장하여 운용하였다.[211]

그 후 해군본부는 조직을 일부 신설하거나 개편하여 운용하였다. 총참모장 밑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두고, 작전참모부장 밑에는 작전국, 함정국, 정보감실, 병기감실을 두었고, 행정참모부장 밑에는 인사국, 경리국, 호군국, 교육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헌병감실, 정훈감실, 시설감실, 의무감실, 총무실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한 명으로 된 참모부장을 2명의 참모부장으로 증원하고, 인사교육국은 인사국과 교육감실로 분리했으며, 정훈감실, 시설감실, 총무실, 통신감실을 신설하였다.

2) 해군 부대 증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안경비대에서 해군으로 독립한 해군부대들은 각종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1949년 5월 5일 공포된 해군사관학교령(대통령령 제87호)을 비롯하여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 5월 7일 해군기지설치령(대통령령 제100호), 그리고 6월 25일 통제부직제령(대통령령 제135호)[212]과 경비부직제령(대통령령 제136호) 및 1950년 3월 2일 해군기지법(법률 제102호) 등 해군 관련 법규였다.[213]

1949년 2월 14일 해군은 인천기지에 제1정대, 부산기지에 제2정대, 목포기지에 제3정대, 진해기지에 훈련정대를 설치하였다. 제1정대는 서해 38도선으로부터 군산, 제2정대는 동해 38도선으로부터 진해, 제3정대는 군산으로부터 여수, 그리고 훈련정대는 여수에서 진해에 이르는 해상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해 4월 15일에는 인천에 제2해군병원이 설치되었다가 5월 15일 인천 해군병원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6월 1일에는 진해특설기지(鎭海特設基地)를 진해통제부(鎭海統制府)로 개편하고, 각 해군기지도 해군경비부로 개편하였다.[214]

해군의 요람지였던 진해특설기지에는 통제부가 설치되어 사령장관이 취임하였다. 진해통제부 예하에는 진해해군병원, 조함창, 항해·기관·통신·공작·경리·위생학교 등 6개 학교를 두었다. 통제부사령장관은 군항구역의 방어를 위하여 진해만 해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경비와 출사(出師)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해안경비대 이후 해군기지로 사용되던 목포·포항·묵호 등 각 기지에 설치된 경비부(警備府)에도 경비부사령관이 임명되어 부대를 지휘하였다.[215] 경비부사령관은 육상과 해상으로 경비책임구역을 확정하여 맥아더 라인 내 불법 선박의 침입방지 등 연안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듯 해군은 194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군본부 예하에 진해통제부를 비롯하여 인천경비부·목포경비부·묵호경비부, 부산기지·군산기지·포항기지, 제1정대·2정대·3정대·훈련정대, 해군사관학교, 인천해군병원, 해병대를 두게 되었다. 1950년 4월 15일에는 부산기지와 포항기지를 해체하여 부산경비부와 포항경비부를 창설했다.

한편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고유명사로 된 함정 이름을 1948년 8월 30일부로 숫자로 된 번호명칭을 추가 제정하여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LCI와 YO 함정은

묵호경비부

목포경비부

진해 해군통제부

100단위, JMS 함정은 300단위, 그리고 YMS 함정은 500단위를 부여하여 운용하였다.

6·25전쟁 당시 해군은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미국 출장 중)을 비롯하여 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216] 인사국장 김일병 대령,[217] 작전국장 박옥규 중령(미국 출장 중),[218] 작전국장 대리 김용호 소령, 경리국장 김경선 중령, 함정국장 이종간 중령[219] 등이 보직되어 있었다. 예하부대 지휘관에는 진해통제부사령관에 김성삼 대령,[220] 인천경비부사령관에 유해거 중령, 목포경비부사령관에 정긍모 대령, 군산경비부사령관에 김종기 소령, 포항경비부사령관에 남상휘 중령,[221] 묵호경비부사령관에 김두찬 중령[222]이 보직되어 있었다.[223]

3) 해군 교육훈련

해군은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장교 양성 과정 외에 장교, 하사관 및 병에 대한 양성 및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해안경비대는 실전의 경험이 있는 하사관을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하는 특별교육대(特別敎育隊)를 설치하였다. 1948년 6월 29일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의 제1차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별교육대의 교육은 처음에는 병조장(兵曹長)으로서 병과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설치한 것이었으나 후에는 점차 일보진전하여 특과의 장교를 교육시키는 기관이 되었다. 당시 특과(特科)로는 법무·경리·군의·선박기술·정훈·항해·기관·시설·병기·통신·수로·기상 등이 있었다.

특별교육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목적은 특과에 해당되는 특기를 가진 인재를 장교로 임명하기 직전에 해군장교로서 필요한 군사지식과 지도능력을 단기간에 교육하여 습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1950년 전쟁 직전까지 제9기까지 배출하였고, 제10기는 교육 중에 있었다.

하사관교육을 위하여 1947년 9월 1일 항해교육대(航海敎育隊)를 비롯하여 기관교육대, 공작교육대, 통신교육대, 위생교육대, 경리교육대, 표지(標識)교육대 등 각 교육대를 학교로 승격시켰다. 당시까지 실시해오던 해군하사관의 교육을 정비하여 기술분야에 치중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능을 세분화시킨 것이었다. 그 후 1949년 11월 포술학교(砲術學校)와 12월 신호학교(信號學校)를 증설하여 해군

간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였다.[224]

사병교육을 위해 설치된 신병교육대(新兵敎育隊)에서는 입대 지원자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두뇌가 명석한 자를 선발하여 기초학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신병들의 소질과 희망을 고려하여 수병(水兵)들을 갑판과(甲板科), 기관과(機關科), 통신과(通信科) 등으로 구분하여 3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1950년까지 16개 기 6,137명을 배출하였다. 그밖에 간호장교후보생(看護將校候補生) 교육대가 설치되어 1950년까지 2개 기의 장교 27명이 배출되었다.[225]

정부수립 직전까지 설치된 해군의 군사학교는 해군병학교, 항해학교, 기관학교, 공작학교, 통신학교(해안경비대), 위생학교, 경리학교, 표지학교, 통신학교(조선경비대), 군기학교, 보병학교, 자동차학교, 제1훈련학교, 제2훈련학교, 제3훈련학교 등이 있었다.[226]

해군의 부대훈련인 함정편대훈련이 1947년 8월 17일 인천 근해에서 실시되었다. 훈련 지휘는 이희정(李熙晶) 대위가 맡았고, 훈련에는 기함(旗艦) 충무공정을 비롯하여 각 기지에 배속된 함정들이 참가하였다. 묵호기지에서는 '강계(江界)', 포항기지에서는 '김해'·'춘천', 부산기지에서는 '개성', 진해특설기지에서는 '충무공'·'광주'·'강릉', 목포기지에서는 '청주'·'진남포', 인천기지에서는 '경주'·'금강산' 등 여러 함정이 동원되었다.[227]

1949년 8월 16일 인천 외항에서 함정편대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 이희정 중령이 탑승한 기함 509정을 비롯하여 502·505·506·507·510·512·513·516정 등 각 함정이 다양한 편대행동과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228]

해군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대부분 소해정(掃海艇)이었고, 함정에는 포·장비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이 없었다. 이에 1949년 6월 해군은 자체적으로 함정건조기금 갹출위원회(醵出委員會)를 결성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1949년 10월 17일 구잠함(驅潛艦) 1척을 구입하였다.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입항한 구잠함은 4월 27일 백두산호(白頭山號, 701艦)로 명명되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제702함, 제703함, 제704함을 추가로 구입하였는데 이들 함정은 6·25전쟁 이후인 7월 14일 진해에 입항하였다.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호(PC-701)
백두산호(PC-701)는 우리 해군이 최초로 구입한 전투함으로서 6·25전쟁 기간중 한국 해군의 주력함으로 크게 활약하였다(1949. 10. 17).

이로써 해군은 함포(艦砲)를 장비한 전투함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이 6·25전쟁 초기에 기함(旗艦)이 되어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해권을 담당하였다.[229]

4. 공 군

1) 공군본부 설치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12월 1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로 개칭되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항공사령부(본부 및 본부중대), 항공기지부대, 항공(군)비행부대, 그리고 항공사관학교로 편성되었다.[230]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각각 육군과 해군이 개칭을 하게 되자, 육군항공사령부 간부들도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31] 공군

독립의 필요성은 정부 고위층까지 인식이 확산되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측과 일부 군 수뇌부에 의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증강된 공군과 대등한 수준의 공군력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군 독립을 강조하였지만,[232] 미 군사고문단측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미 군사고문단측은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의 초안작성을 위한 회의에서 당시 육군항공사령부가 공군으로 독립할 정도로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233]

국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육군의 채병덕 장군도 공지합동작전(空地合同作戰)을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 예하에 두는 것이 작전에 효과적이라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은 국군조직법 제23조에 별도의 유보조항을 두어 필요한 시기에 공군으로 독립하는 절충안에 합의하게 되었다.[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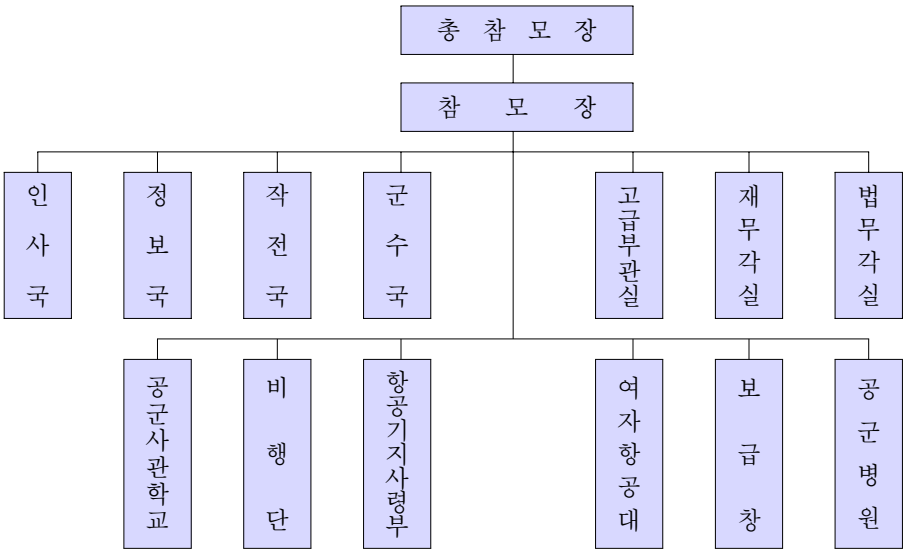
그 결과 1949년 10월 1일 공군은 국방부의 항공국(航空局)과 육군항공사령부를 통합하여 공군본부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공군은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를 갖고서 정식으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공군총참모장에는 육군항공사관학교장을 지낸 김정렬(金貞烈) 대령이, 참모부장으로는 항공국장을 지낸 박범집 대령이 보직되었다.

독립 당시 공군의 편성은 총참모장과 참모부장, 그리고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 등 4개의 일반참모부와 고급부관실, 재무감실, 법무감실 등 3개의 특별참모부로 구성되었다.[235] 육군의 항공병과로 존속해오던 항공부대가 공식적으로 공군으로 독립함에 따라 국방조직은 육·해·공군의 3군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독립 당시 공군의 편성은 <표 4－19>와 같다.[236]

6·25전쟁 당시 공군은 총참모장 김정렬 준장을 비롯하여 참모부장 박범집 대령, 인사국장 한용현 중령, 정보국장 김형진 대위, 작전국장 김신(金信) 중령, 군수국장 박두선 소령, 고급부관 한해남 소령이 보직되어 있었다. 예하 부대 지휘관에는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 공군사관학교장 최용덕 준장, 항공기지사령관 장덕창 대령[237], 여자항공대장 이정희 대위, 공군 헌병대장 김득룡 중령이 보직되어 있었다.[238]

<표 4－19> 공군 편성

(1949 10. 1 현재)



2) 공군 부대 증편

공군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예하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이미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로, 육군항공비행부대는 공군비행단(飛行團)으로, 육군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되었고,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女子航空隊)로 개편되었다.[239] 육군항공사령부의 의무처는 공군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육군항공사령부 보급중대와 자동차중대가 통합되어 보급창이 신설되었다.[240]

1949년 12월 17일에는 공군본부 청사를 서울 용산 소재의 국방부 별관 내에서 서울의 중구 회현동으로 이동하고, 비행부대의 증편에 따른 항공작전지원(航空作戰支援)과 유사시의 기동성 유지를 고려하여 수원·군산·광주·대구·제주 기지 등 총 7개의 기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항공사령부는 여순 10·19사건의 작전경험과 북한의 공군력 증강을 감안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공기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이승만 대

통령은 주한 미 대사관과 미 고문단에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12월 7일 군사고문단장은 무초 대사를 통해 미 공군이 한국에 있는 고문단에 2명의 조종교관과 8명의 전문기술자를 할당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미국내의 반응은 군사고문단측의 견해와 달랐다. 한국 정부는 국회, 언론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아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힘으로 구입하자"는 구호 아래 항공기 헌납운동(獻納運動)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정부는 모금한 3억 5천만원으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T-6 10대와 0.5″ 기관총 20정, 실탄 5,000발, 1년 분 부속품 3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무기를 구입하였다.

모금으로 구입한 항공기에 대한 명명식이 1950년 5월 14일 여의도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항공기의 명칭은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건국기(建國機)로 명명(命名)하였다.[241] 즉, 건국 제1호(교통 제1호), 건국 제2호(전남학도 제1호), 건국 제3호(전북 학도 제1호), 건국 제4호(전매 제1호), 건국 제5호(충남 제1호), 건국 제6호(체신 제1호), 건국 제7호(국민 제1호), 건국 제8호(농민 제1호), 건국 제9호(전남 제1호), 건국 제10호(경북 제1호) 등이다.

이렇듯 1948년 4월 육군항공부대로 출발한 공군은 정부수립 이후 건국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하였다. 건국기(T-6)는 한국전쟁 당시 그나마 부족한 국군의 공군력을 메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건국기는 전쟁 당시 대전기지 2대, 제주기지 2대, 대구 동촌기지 1대, 서울기지 1대씩 각각 배치되어 주로 한국지상군의 전선 정면 및 적 후방공격, 전투기에 대한 공격목표유도, 긴급한 작전연락, 지휘관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 정찰한 내용을 육군본부와 미 제5공군사령부에 보고하는 등 작전도 지원하였다.[242] 전쟁 발발 당시 공군은 뒤늦게 창설되고, 또 미국의 공군전력 증강에 제한을 두는 등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북한 공군처럼 전투기나 전폭기를 갖추지 못했다. 그 당시 공군은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L-4와 L-5 연락기 22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군병력도 1,800여명으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243]

건국기 명명식
국민이 헌납한 충남1호, 전매1호 등 T-6기 10대의 건국기 명명식이 여의도기지에서 거행되었다. (1950. 5. 14)

T-6 훈련기(건국기)
건국 초기 1950년 5월 14일, 전 국민의 헌금으로 10대를 캐나다에서 도입한 2인승 훈련기로서 전술정찰, 대지공격 및 조종사 훈련용으로 사용하였으며, 1962년 12월 1일 퇴역하기까지 588명의 조종사를 양성한 역사적 항공기다.

5. 해병대

해병대 창설 시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순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사건에 출동했던 해군 임시정대의 실전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여·순작전에 참가했던 이상규 소령은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에게 보고한 작전결과보고서에서 육전대(陸戰隊)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해군 간부들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했고, 특히 이상규 소령과 교체하여 잔당 소탕작전에 출동했던 신현준(申鉉俊) 중령도 같은 내용을 손원일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손원일은 해병대 창설에 관한 임무를 진해 특설기지사령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에게 부여하고, 여기서 나온 구체적인 창설안을 갖고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1개 대대 규모의 해병대 창설에 대한 결재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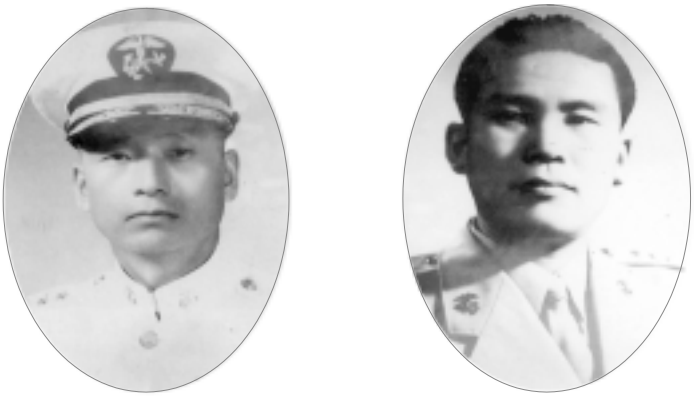
해병대는 이러한 여순 10·19사건의 교훈에 따라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에 의해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고, 필요시 일반 지상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며 수륙

해병대 창설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군 장병 380명의 병력으로 해병대를 창설하였다(1949. 4. 15).

양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244] 1948년 10월 19일 여순 10·19사건 당시 해군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월 22일부터 해안봉쇄 및 해안공격임무를 맡게 되어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창설 작업은 1949년 2월 21일 진해특설기지사령부 참모장으로 있던 신현준(申鉉俊) 중령[245]을 해병대사령관에, 진해특설기지사령부 교육부장인 김성은(金聖恩) 중령[246]을 참모장에 각각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49년 4월 15일에는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그리고 병 300명 등 총 380명의 병력을 근간으로 하여 1개 보병대대를 편성단위로 하여 해병대를 창설하였다. 해병대가 창설된 장소는 진해 덕산비행장(德山飛行場)이었다.[247]

해병대 창설의 법적 근거는 1949년 5월 5일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의 공포였다. 해병대령의 공포로 1949년 4월 15일 이미 창설된 해병대를 국군의 한 조직으로 추인(追認)하였다. 해병대령은 총 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령의 조항에는 해병대의 임무와 소속, 편성과 배치에 관한 지휘권 문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 법령의 제1조에 의하면, 해병대는 해군에 설치되어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 전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둔지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해병대의 수장은 해병대사령관이었으나, 해병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해군



해병대 창설의 산파역할을 한 신현준(좌)과 김성은(우)
신현준은 초대 해병대사령관(1949. 4. 15~1953. 10. 15)을 역임하였고, 김성은은 제4대 해병대사령관(1960. 6. 25~1962. 7. 1)을 맡아 해병대를 지휘하였다.

총참모장에게 있었다.[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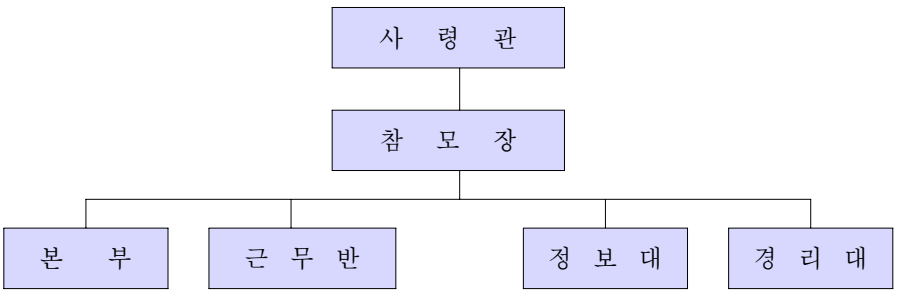
창설 당시 해병대는 사령관 신현준 중령 참모장과 김성은 중령을 비롯하여 인사참모 소령 강대형, 정보참모 대위 김용국(金龍國),[249] 작전참모 소령 김동하(金東河),[250] 군수참모 대위 이병희(李炳喜), 헌병대장 중위 정광호(鄭光鎬), 제1중대장 대위 고길훈(高吉勳),[251] 제2중대장 대위 김재수(金載洙), 정보대장(情報隊長) 강점복 소위 등으로 편성되었다. 창설 당시 해병대 편성은 다음 <표 4－20>과 같다.[252]

해병대는 창설 초기 해군으로부터 편입한 장교 및 하사관 80명과 신병 300명으로 소총 2개 중대와 사령부(15명), 경리대(15명), 근무중대(70명), 정보대(10명)를 편성하고 비행장의 격납고를 수리하여 막사로 사용하면서 강력한 해병대를 육성하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그 후 1949년 8월 1일 다시 해군 신병 제14기 중에서 440명을 해병대 신병 제2기생으로 특별모집하여 훈련함으로써 2개의 소총중대를 3개 중대로 증편하였다. 편성과 훈련은 육군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미 해병대와 같은 부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전대(陸戰隊)라고 하지 않고 해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253]

부대를 증편한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은 대구에서 1949년 8월 26일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과 군사협의를 갖고 경남 진주에 소총 1개 대대를 파견하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함으로써 해병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254] 그 해

<표 4－20> 해병대 편성

(1949. 4. 15 현재)



8월 1일 편성된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던 부대 역시 8월 29일 병력 550명으로 진주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1949년 12월 27일에는 2개 대대로 구성된 제주도부대(濟州道部隊)가 편성되어 4·3사건 이후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작전과 치안유지를 하고 있던 육군 독립 제1대대와 교대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전쟁 당시 해병대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고, 편성도 작전에 필요한 제주읍부대(濟州邑部隊)와 모슬포부대로 편성되었고, 제주읍부대는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과 참모장 김성은 중령을 지휘부로 하여 본부와 하사관교육대, 제3중대, 대전차포소대, 근무중대로 편성되었다. 모슬포부대는 부대장 김동하 소령의 지휘하에 제1대대(대위 김병호)와 제2대대(대위 김재주)로 편성하였다. 병력은 장교 66명과 사병 1,100명으로 총 1,166명이었고, 장비는 소총(99식, 38식, 칼빈)과 권총을 제외하면 경기관총 6정, 중기관총 3정, 60㎜ 박격포 4문, 80㎜ 박격포 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255]

6. 호국군과 청년방위대

1) 호국군의 창설과 편성

호국군(護國軍)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기 위해 1948년 11월 30일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된 예비군(豫備軍)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정책으로 결정되자 이범석 국방장관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병력증강에 노력했다.[256]

호국군 창설은 1948년 11월 30일 국군 조직법 제12조(법률 제9호)에 육군과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 조직한다는 법규에 의거 창설되었다. 호국군 지원절차 등 세부규정은 1949년 1월 20일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제정된 대통령령 제52호인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에 명시되어 있다. 호국군의 신분은 장병(將兵) 공히 예비역으로서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거주지에 주둔

하고 있는 연대에 소속하여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호국군 장교는 특별채용과 보통채용으로 구분되고, 연령은 대대장급 이상은 60세까지 중대장급은 50세까지, 그리고 소대장급은 40세까지로 제한하였다. 현역장교의 특별채용에 대한 연령은 장관급이 65세, 영관급은 60세, 그리고 위관급은 50세까지로 제한하였다.[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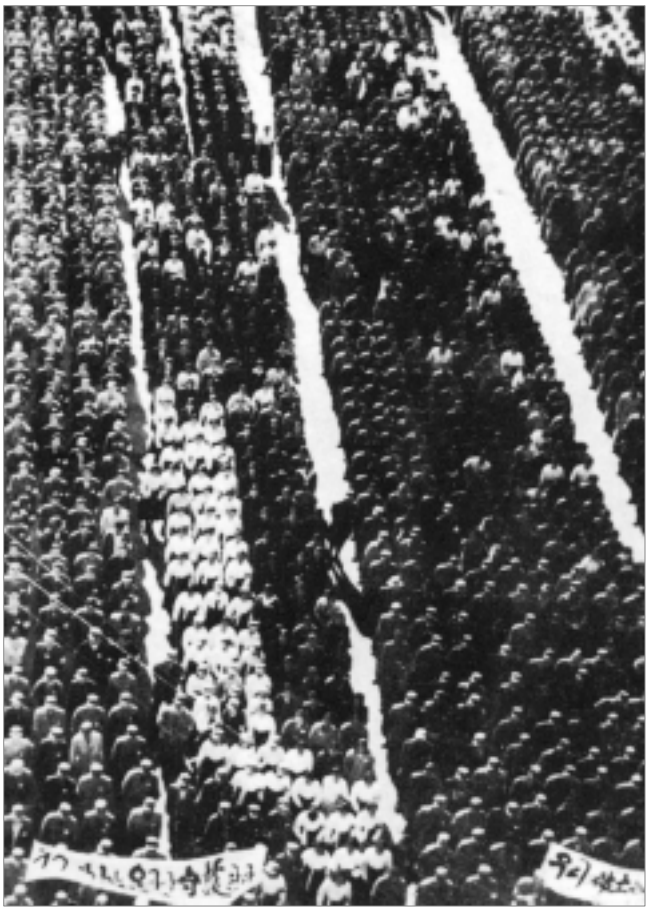
호국군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로 각 지역별 현역 연대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호국군사관학교(護國軍士官學校)에 입교하여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호국군 소위로 임관하였다.[258]

호국군 편성은 시·군·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중대·대대를 편성하고, 그 조직을 현역부대에 준하여 1개 연대에 3개 대대, 대대는 4개 중대, 중대는 4개 소대, 소대는 4개 분대, 1개 분대는 12명으로 편성되었다. 연대·대대에는 일반참모부로 인사·정보·작전교육·군수 등을 두었고, 연대에는 일반참모부외에 특별참모로 부관, 정훈관, 재정관, 수송관, 의무관 등을 두었다.

연대장 및 대대장은 주로 군사경력자를 임명하였고, 연대장 요원은 호국군사관학교 이수 후 보직을 받고 곧바로 현역 중위로 진급하였다. 기타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요원은 호국군 소위 또는 사관학교 입교 대기 중인 간부후보생들이 보직되었다. 일반 병사는 1949년 1월 20일 공포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초모구(병사구사령부 전신)에서 신체검사 후 합격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 및 호국병역으로 구분하였다.

호국군 창설과 더불어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 내에 호국군군무실(護國軍軍務室)을 설치하고 호국군 창설에 관한 계획수립과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초대 실장에는 신응균 중령이 보임되었다. 1948년 12월 29일에는 12월 7일 공포된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제10조에 따르면 육군본부에 호군국(護軍局)을 둔다는 법규에 따라 호국군무실을 호군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48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 호국군군무실 설치와 동시에 현역 10개 연대에 호국군고문부(護國軍顧問部)를 두어 편성에 착수하였다. 고문부의 활약으로 1948년 말까지 호국군의 편성은 거의 완료하고 1949년 1월 7일까지 제101, 102, 103,



호국군 창설(1948. 11. 20)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병력 확보 목적으로 창설되었다가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106여단 등 4개 여단을 편성하였고, 1949년 1월 10일에는 제101·102·103·105·106·107·108·110·111·113연대 등 10개 연대를 창설하였다.[259]

호국군 여단장은 1949년 1월 1일 육사 제8기 특별 제1반 출신인 일본 육사 제26기인 유승렬 대령이 제102여단장에, 안병범 대령이 제103여단장에, 그리고 광복군 출신인 오광선 대령과 권준 대령이 각각 제101여단장과 제106여단장에 보직되었다. 1949년 5월 24일 제2대 102여단장에 박시창 중령이 보직되었다. 1949년 4월 22일 제105여단이 전남 광주에 창설되고, 여단장에 김관오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해 6월 16일 제2대 105여단장에 김정호 대령이 보직되었다.[260]

호국군의 부대편성이 완료되자 국방부는 지휘체제의 강화책으로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호군국(護軍局)으로 승격시켰다. 1949년 3월 4일에는 호국군간부훈련소를 서울 용산 이태원에 설치하였다. 1949년 4월 1일에는 호군국을 해체하고 육군총참모장 직속으로 호국군사령부(護國軍司令部)를 설치하였다.[261] 호국군사령부는 사령관(초대 사령관 송호성 준장) 밑에 참모장을 두고, 예하에 군수처, 교육처, 정보처, 인사처 등 4개 처를 두었다. 또한 동일부로 호국군간부훈련소를 호국군간부학교로 개칭하고, 7월 16일에는 호국군사관학교로 다시 개칭하였다가, 호국군 해체에 따라 8월 15일 폐교되었다. 호국군사관학교는 4개기에 걸쳐 1,080명의 호국군 장교를 배출하였다.[262]

그러나 호국군사령부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다. 호국군이 해체되자, 호국군 장병들이 현역으로 편입하였는데, 이중 호국군 장교의 현역편입은 전체 임관자 1,080명중 60%에 해당하는 640명이었다.[263]

2) 청년방위대의 설치와 편성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법률 제49호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31일 호국군이 해체되자 당시 긴박한 국내정세에 비추어 민병 20만명의 편성을 역설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병역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었다. 병역법 제77조에는 "청년에 대하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264]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49년 11월 초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설치되어 리(里) 단위까지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편성하여 1950년 4월 조직을 완료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분산되었다. 그러나 청년방위대는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에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후방의 치안 유지 및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고,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표 4-21> 청년방위대의 지역별 편성

구 분	도(道)	군(郡)	면(面)	리(里)	
편 성	방위단(사단급)	지대(연대급)	편대(대대급)	구대(중대급)	소대
지휘관 계급	방위 중령	방위 소령	방위 대위	방위중위	방위 소위

청년방위대의 편성은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하되 그 간부요원은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해체된 호국군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보수교육을 필하게 한 다음 임명하였다. 방위대의 편성은 전국 시도에 지구별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防衛團)을 설치하고 그 밑에 군(郡) 단위로 지대(支隊, 연대급), 면(面) 단위로 편대(編隊, 대대급), 리(里) 단위로 구대(區隊, 중대급) 또는 소대를 편성하였다. 지구별 방위단장에는 방위중령을, 지대장에는 방위소령을, 편대장에는 방위대위를, 구대장에는 방위중위를 소대장에는 방위소위를 각각 임용하였다.

육군에서는 1949년 12월 15일 청년방위대를 육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교도국(敎導局)을 청년방위국(靑年防衛局)으로 개편하고,[265] 각단, 지대, 편대에는 고문단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에 임하였다. 이리하여 청년방위대 기구 편성은 1950년 3월 15일에 완료되었으며,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17개단 및 3개 독립단 등 20개 청년방위단(靑年防衛團)의 창설 함께 이들을 지도할 현역 소령~대령급으로 편성된 훈련지도관을 임명했다.

청년방위대 각 시도의 방위단장은 대부분 대한청년단 지방단부의 단장급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방위대 편성과 별도로 대한청년단 총단부를 비롯하여 20개 단(團)에 소령~대령급 현역장교를 훈련지도관으로 임명되어 훈련을 지도하였다.[266]

청년방위단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9년 12월 1일 충남 온양(溫陽)에 설치하였던 청년방위대간부훈련학교를 1949년 12월 22일 경기도 수원에 있던 구 육군보충대 건물로 이전하였다. 방위대간부훈련학교의 교장에는 박승훈 대령이 보임되었고, 대원을 훈련하는 이외에 보수반을 설치하고 방위대 고급간부가 될 대

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 장교들을 2주간 교육 후 방위 장교로 배출하였다.[267]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는 6·25전쟁 발발 2주전인 1950년 6월 10일 폐교되었다.[268]

이렇듯 청년방위대는 1950년 6월에 이르러 겨우 편성을 끝내고 훈련에 들어갔으나, 6월 25일 전쟁 발발로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분산되었다. 그러나 간부요원과 일부대원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현역에 편입되어 싸웠고, 전쟁 중 국민방위군 창설시에는 기간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주 (註)

1) 陸軍本部,『創軍前史』, 1980, p. 263.
2) 이혁기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과 2학년 때, 학병으로 나가 일본군 상등병으로 군대 쇼생활을 하였고, 광복 이후 귀환하여 조선국군준비대 결성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3) 왕익권은 일본 동경제대 법과 출신으로 일본군 상등병으로 서울에서 군대 생활을 하였다.
4)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초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고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5) 해군에서 특임으로 임관하여 해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6)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7)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76-295 ; 空軍本部,『空軍史』第1輯, 1962, p. 63 ;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1978, p. 10.
8) 육군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여 초대 제1사단장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9) 정부수립후 특별임관하였고 제3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고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0) 육군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여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11) 육군 제8기 특별 4차로 임관하여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12) 특별임관하여 여순 10・19사건시 제14연대장이었으며,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13) 육군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여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14) 육군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였고, 1950년 7월 29일 자결하여 육군 준장으로 추서되었다.
15)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전쟁 발발당시 육본 작전국차장이었으며,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16)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76-280.
17) 陸軍本部,『創軍前史』, p. 280.
18)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전쟁발발 당시 제11연대장이었으며,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9) 이춘영은 경성법전 출신으로 일본 동부의 고사포부대에서 하사로 근무하였다.
20)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80-281.
21)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80-283.
22)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3)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전쟁 발발당시 제15연대장이었으며,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4) 육사 제7기 특별로 임관하였고,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였다.
25) 이들 학병 대표들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임관하여 국군의 주역이 되었다.
26) 陸軍本部,『創軍前史』, p. 284.
27) 陸軍本部,『創軍前史』, p. 284.
28)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88-292.
29)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중령까지 진출하였으나, 1949년 숙군시 사형되었다.
30)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1949년 숙군시 파면되었다.
31) 경비사관학교 제2기 출신으로 숙군의 위협을 느끼고 1949년 월북하였다.
32) 張昌國,『陸士卒業生』(서울 : 中央日報社, 1984), p. 222.
33) 陸軍本部,『創軍前史』, p. 292.
34) 정부 수립이후 육사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였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35) 陸軍本部,『創軍前史』, pp. 292-293.
36) 해군 특교 제1기로 임관하여 제3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해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37) 해군에서 특임으로 임관하여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38) 해군에서 특임으로 임관하여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39) 표훈전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때까지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써 훈장이나 포장 등에 관한 상훈업무를 관장하던 곳이었다.
40) 해군에서 특임으로 임관하여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4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p. 548-552.
42) 광복 이후 군 출신 항공인들이 1946년 3월 20일 결성한 단체이다.
43) 1946년 3월 15일 항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44) 1946년 3월 20일 항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45) 空軍本部, 『空軍史』 第1輯, p. 63 ; 韓鎔源, 『創軍』, p. 115.
46)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공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47) 공군에서 현입(現入)으로 임관하여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48)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1950년 7월 4일 전사하여 공군 준장으로 추서되었다.
49)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50)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51) 공군 간부 제2기로 임관하여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52) 공군 간부 제1기로 임관하여 한국전쟁시 전사하여 공군 준장으로 추서되었다.
5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p. 591-593.
54) 육사 제8기 특별 1차로 임관하였고, 1950년 9월 14일 전사하여 육군 준장으로 추서되었다.
55)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여 소위로 임관하였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56) 육사 제5기로 임관하였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57) 해군에서 특별임관하였고,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58) 陸軍本部, 『創軍前史』, p. 288.
59) 陸軍本部, 『創軍前史』, p. 287.
60) 陸軍本部, 『創軍前史』, pp. 287-288.
61)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p. 9.
62) 육사 제4기로 임관하였고, 1950년 7월 15일 육군 중령으로 전사하였다.
63)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전쟁 발발 당시 제8사단장이었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64)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소령으로 임관하였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65) 李應俊, 『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汕耘紀念事業會, 1982), p. 225.
66) 陸軍本部, 『創軍前史』, p. 308.
67) 陸軍士官學校, 『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pp. 63-64.
68) 韓鎔源, 『創軍』, p. 73.
69) 초대 합참의장과 제9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70) 제2대・제4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였다.
71) 제1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였다.
72) 제5대・제8대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였다.
73) 국군 최초로 육군 대장에 진급하였고, 제7대・제10대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였다.
74) 張昌國, 『陸士卒業生』, p. 65.
75) 한국전쟁시 헌병사령관과 수도사단장을 역임하고, 4・19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76)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임관하였다가 미 고문단과 불화로 경찰에 투신하였다가 정부수립 이후 다시 육사 제7기 특별로 임관하여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77) 일본 육사 제61기로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임관하였다가 1949년 숙군시 사형되었다.
78) 韓鎔源, 『創軍』, p. 74.
79) 陸軍本部, 『陸軍發展史』 第1卷, 1970, p. 7.
80) 韓鎔源, 『創軍』, pp. 82-83.
81) 韓鎔源, 『創軍』, pp. 84-85.
82) 國防部, 『國防史』 1, 1984, p. 213.
83) 황포군관학교는 손문(孫文)이 광동정부(廣東政府)를 수립한 후 국민혁명에 필요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군관학교로서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中國國民黨陸軍軍官學校)였으나, 광동성(廣東省) 주강(珠江)의 장주도(長洲島) 황포(黃埔)에 위치하고 있어 황포군관학교로 통칭하였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6일 장개석을 교장으로 하여 개교하였다. 한국학생들은 3기부터 입교하였는데, 대표적인 한국인으로는 3기의 이일태, 4기의 권준, 5기의 박시창・장흥, 10기의 최덕신・김동수, 11기의 박기성, 15기의 유해준, 17기의 박영준 등이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는 개교 당시에는 中國國民黨陸軍軍官學校, 國民革命軍中央軍事政治學校, 國民革命軍軍官學校, 國民革命軍黃埔軍官學校 등으로 개칭되다가, 1930년 남경(南京) 中央陸軍軍官學校에 흡수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
84) 중국 황포군관학교 제5기 졸업,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85) 중국 황포군관학교 제11기 졸업,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86) 중국 황포군관학교 제10 졸업,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87) 이기건 장군은 만주 신경군관학교 제1기생으로 북한군에 입대하여 북한군 소좌(少佐)까지 진급하였다가 남한으로 귀순하여 육사 제7기 특별로 임관하여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88) 박창암 장군은 함남 북청 출신으로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특수공작을 위해 북한군에 잠입하였다가 탈출한 후 1950년 7월 특별임관하여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89) 박임항 장군은 만주 신경군관학교 제1기생으로 광복 후 북한군에 들어갔다가 정부 수립 후 월남하여 육사 제8기 특별로 임관하여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90) 陸軍士官學校, 『大韓民國 陸軍士官學校 30年史』, p. 69.
91)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1954, p. 57.
92) 韓鎔源, 『創軍』, pp. 89, 252-253.
93)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58.
94) 國防部, 『國防史』 1, pp. 213～216.
95) 韓鎔源, 『創軍』, pp. 88, 258.
96) 韓鎔源, 『創軍』, pp. 255-256.
97)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1954, p. 5.
98) 韓鎔源, 『創軍』, pp. 259-260.
99) 空軍本部, 『空軍發展略史』, p. 5.
100) 空軍本部, 『空軍史』 第1輯, p. 226.
101) 空軍本部, 『空軍史』 第1輯, p. 223.
102) Ordinance No. 28, HQ USAF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13 November 1945.
103) 韓鎔源, 『創軍』, p. 71.
104) 韓鎔源, 『創軍』, p. 97.
105) Ordinance No. 64, HQ USAF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29 March 1946.
106) 韓鎔源, 『創軍』, p. 71.
107) Ordinance No. 86, HQ USAF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15 June 1946.

108) 白奇寅, 『建軍史』(서울 :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2002), p. 107.
109) Appointment No. 31, HQ USAFIK, OMG, 13 Nonember 1945.
110) Appointment No. 57, HQ USAFIK, OMG, 27 December 1945.
111) Appointment No. 89, HQ USAFIK, OMG, 18 May 1946.
112) Appointment No. 99, HQ USAFIK, OMG, 8 June 1946 ; Removal No. 88, HQ USAFIK, OMG, 8 June 1946.
113) Appointment No. 99, HQ USAFIK, OMG, 8 June 1946.
114) Removal No. 101, HQ USAFIK, OMG, 28 March 1947.
115) 陸軍本部, 『創軍前史』, pp. 327-328 ; 李應俊, 『回顧 90年 1890-1981』, pp. 242-245.
116) 陸軍本部, 『6・25事變 陸軍戰史』 第1卷, pp. 266-267.
11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1988, p. 29.
118) 陸軍本部, 『陸軍發展史』 (上), 1969, p. 141.
119) 國防部, 『國防史』 [1], p. 306.
120) 陸軍本部, 『陸軍發展史』 (上), p. 127.
121) 國防部, 『國防史』 [1], p. 292.
122) 陸軍本部, 『創軍前史』, p. 321.
123) 뱀부계획은 맥아더가 필리핀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경찰과 같은 경찰예비대 지역별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그 임무는 경찰 지원 및 국가비상시에 출동이었다(陸軍本部, 『創軍前史』, p. 321).
124) 國防部, 『國防史』 [1], p. 294.
125) 군정법령 제42호(46.1.14) 제1조.
126) 陸軍本部, 『創軍前史』, pp. 324-325.
127) 韓鎔源, 『創軍』, p. 92.
12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육군역사일지』 (1), 1945-1950, pp. 19-29.
129) 陸軍本部, 『陸軍發展史』 (上), pp. 111-116.
130) 韓鎔源, 『創軍』, p. 95.
131) MEMORANDUM FOR RECORD : Withdrawal from Korea [MSB/P&PGp/P&o Div./Lt Col Seedlock/2283/mn(10 November 1947)].
132)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30.
133) Young-woo Lee,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45-1950", p. 134.
134) 國防部, 『國防史』 [1], p. 303 .
135) 國防部, 『國防史』 [1], p. 305.
136)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31 ; 國防部, 『國防史』 [1], p. 305.
137)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38 ; 國防部, 『國防史』 [1], p. 305.
138) 『朝鮮警備隊總司令部 特命 第七十五號』, 1946. 12. 17.
13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pp. 273-276.
140) 海軍本部, 『海軍30年史 1945～1975』, 1978, p. 10.
141) 손원일 제독이 해방병단 창설일을 11월 11일로 정한 것은 '신사(紳士)' 해군을 염원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11월 11일의 한자 표기, '十一月 十一日'을 조합하면 '士士', 즉 선비 '사(士)'자 두 개가 나란히 겹쳐서 신사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손원일은 11월 11일 이날 창설식을 가졌다.
142) 國防部, 『國防史』 [1], p. 197

143) 國防部,『國防史』 1, p. 310.
144)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18.
145) 國防部,『國防史』 1, p. 310.
14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海防과 建軍』, p. 558.
147) 海軍本部,『海軍編制史』 제1권, pp. 4-1.
14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561.
14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562.
150)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1954, pp. 36-37.
15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1, p. 562.
152)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39.
153)『朝鮮海岸警備隊의 船舶搜索權』(軍政法令 第197號, 1948. 5. 25).
154) 國防部,『國防史』 1, p. 199.
155)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50 ; 國防部,『國防史』 1, p. 313.
15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海防과 建軍』, p. 566.
157) 空軍本部,『空軍史』 第1輯, p. 63.
158) 최용덕은 중국 보정(保定)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위 때 중국 공군조종사로 활약하다가 중령 때 비행기 사고로 부상당하여 조종사를 그만두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장군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
159) 일본 육사 제52기로 일본항공정비학교를 경유하여 정비대대장을 역임하였다.
160) 일본 소년 비행병 제2기 출신으로 일본 육군항공대에서 활약을 하다가 태평양전쟁 때 미얀마에서 격추당하여 4년 동안 인도에서 포로생활을 하였다.
161) 장덕창은 일본항공이라는 민간 항공회사가 국내에 설치한 김포비행장의 비행장으로 근무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는 조종사로서 해방 당시 비행시간은 9.820시간에 달했다.
162) 중국 공군 중령으로 부대장을 역임하다가 광복 후 귀국하였다.
163) 空軍本部,『空軍史』 第1輯, p. 63.
164)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전쟁 발발시 제17연대장을 역임하고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65) 공군 간부후보 제2기로 임관하여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공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66) 공군 간부후보 제2기로 임관하여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공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167) 國防部,『國防史』 1, p. 202.
168) 空軍本部,『空軍史』 第1輯, p. 63.
169)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 第1卷, p. 3.
170) 國防部,『韓國戰爭史』 1, p. 595.
17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596.
172) 空軍本部,『空軍25年史 1948～1972』, p. 13.
173) 金貞烈,『金貞烈 回顧錄』(서울 : 乙酉文化社, 1993), p. 102.
174) 兵務廳,『兵務行政史』 (上), 1985, pp. 817-818.
175)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第1輯, pp. 22-28.
176)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pp. 115-119.
177)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153 ;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第1輯, pp. 125-130.
178)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第1輯, pp. 139, 147.
179)『兵役法 第3條』, 1949. 8 .6 ;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第1輯, p. 279.
180)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pp. 280-281.

181)『政府組織法』 제14조.
182)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17.
183)『國軍組織法』(法律 第9號, 1948. 11. 30).
184)『國軍組織法』(法律 第9號, 1948. 11. 30).
185) 國防部,『國防史』 1, p. 223.
186) 國防部,『國防史』 1, p. 224 ;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p. 153-154.
187)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1995, p. 33.
188) 白奇寅,『建軍史』, p. 53.
189) 國防部,『國防史』 1, pp. 257-258.
19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310.
191)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pp. 31-32.
192) 國防部,『國防史』 1, p. 147.
193)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161.
194) 白奇寅,『建軍史』, pp. 266-267.
195) 國防部,『國防史』1, pp. 229-230.
196) 陸軍本部,『陸軍發展史』 第1卷, p. 21.
197) 陸軍本部,『陸軍發展史』 第1卷,『日誌篇』, pp. 32, 39.
198)『國軍組織法』 第3章.
199) 陸軍本部,『陸軍發展史』 第3輯, p. 63.
200)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163.
201) 國防部,『國防史』 1, p. 131.
202)『部隊略歷』(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所藏 部隊略歷表(A).
203)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p. 45.
20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372.
205) 白善燁,『軍과 나』, pp. 333-334.
20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368.
20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371.
20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88.
209) 國防部,『國防史』 1, pp. 278-279.
210)『國防部職制令』(大統領令 第37號, 1948. 12. 7 ; 改正 大統領令 第814號, 1953. 7. 28).
211)『國防部職制令』(大統領令 第37號, 1948. 12. 7) 第28～38條.
212) 海軍本部,『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2輯), p. 129.
213)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25.
214)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p. 16.
215)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56.
216)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17)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18)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해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19)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220)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21) 해군으로 특임하여 진해기지사령관을 역임하고 해병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222)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하고 해병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2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585.
224)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59.
225)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59.
226) 國防部,『國防史』 1, p. 218.
227)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 38.
228)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pp. 38-39.
229)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p. 20.
230)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 p. 4.
23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1, p. 598.
232) 空軍本部,『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p. 49.
23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599.
234)『國軍組織에 關한 法令』(법률 제9호, 1948. 11. 30) 제23조.
235)『空軍本部職制令』(大統領令 第254號, 1949. 10. 1).
236) 國防部,『國防史』 1, p. 228 ;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p. 15-29.
237) 공군 간부후보 제1기로 임관하여 공군총참모장을 역임하고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3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626.
239) 空軍本部,『空軍日誌(1948～1953)』, 1949년 10월 1일조.
240) 空軍本部,『空軍25年史 1948～1972』, p. 17.
241) 空軍本部,『사진으로 본 공군20년사 1948～1969』, p. 23.
242)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 p. 54.
243)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95.
244)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p. 18.
245) 해군으로 특임하여 초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학 해병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46) 해군으로 특임하여 제4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하고 해병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47)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1961, p. 7.
248)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pp. 8-9.
249) 해군 특교 제1기로 임관하여 해병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50)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병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251) 해군으로 특임하여 해병 소장으로 예편하였다.
252)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p. 222 ;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p. 18.
253)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p. 9.
254)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p. 189.
25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662.
256)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경희정보인쇄, 2001, p. 21.
257)『國軍組織法(法律 第9號) 第18條』.
258)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 33.
259)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p. 163 ;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 26.
260)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 27.
261)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 28.
262)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 80.
263)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pp. 65-66.
264) 兵役法 第77條.

265)『國本一般命令(陸) 第72號』, 1949. 12. 17.
266)『陸本特別命令(甲) 第70號』, 1950. 3. 16.
267) 兵務廳,『兵務行政史』(上), p. 276.
268)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 變遷史』, 1994, p. 43.

제 5 장 군내 좌익사건과 북한의 도발

제 1 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제 2 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제 3 절	북한 유격대의 남파와 국군의 토벌작전
제 4 절	38도선상의 국지 도발

제 1 절 미 군정기 군내 좌익사건

1. 남로당의 군내 침투

광복 직후 좌익세력은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 등을 통해 자체의 무력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내에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가 설치되고 19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 예하에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가 창설됨에 따라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해체되었다. 이는 미 군정청이 1946년 1월 21일 군정법령 제28호에 근거하여 모든 '자생적 군사단체'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1] '자생적 군사단체'의 해산은 곧 좌익세력의 독자적인 무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 이하 '남로당')은 국방경비대가 점차 군대의 면모를 갖추어 가자 군에 대한 침투 공작을 시도하였다.[2]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 공작은 1947년 7월 당 중앙에 군사부(軍事部)[3]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어 1948년 5·10선거 과정에서 좌익세력의 피검자가 많아지자 본격화하였다. 지역적으로 좌익 활동이 왕성했던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4]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 공작은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여 방법을 달리하였다. 장교의 경우는 주로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내에 이미 침투해 있거나 포섭된 조직망을 통하여 남로당 추천자를 입교시키는 방법과 임관된 장교를 통하여 지인(知人)들을 포섭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인 실력으로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는 방법, 둘째 정부·군·정계의 유력 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아 경비사관학교에 입교시키는 방법, 셋째 남로당 수뇌부가 군내 당조직에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침투시키는 방법, 넷째 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당 세포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매수하여 입교시키는 방법, 다섯째 기성 장교의 신원과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 접근할 소지나 잠재 성분을 내재하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방법, 여섯째 기성 장교들의 대인 관계, 지연, 혈연, 인연, 동기동창 관계 등 다양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었다.[6]

한편 국방경비대의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출신으로 광복 후 좌익단체에 가담했던 자들이 많았다. 이들 중에는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겨 경비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비대 사병층에는 경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로당에서는 경비대와 경찰간의 반목대립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경비대에는 미 군정청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원칙에 따라 모병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좌익청년들이 대거 군문(軍門)에 들어올 수 있었다.[7] 사병의 경우 첫째 부락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둘째 좌익계 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리·면·군·도당을 거쳐 각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입대시켰다. 셋째 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켰다. 넷째 기성 사병의 경우 부대 내의 남로당원인 장교나 하사관을 통해 포섭하도록 했다. 다섯째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시키지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가 있는 사병들에 대해서는 군내의 조직원들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동조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8]

이와 같은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만한 것은 당 중앙 군사부가 장교를 관리하고, 각 지방 당부가 사병을 관리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장교의 경우 선발과 교육, 배치 등 모든 인사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 보직관계로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에 당 중앙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섭된 장교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병의 경우에는 각 도당위원회에서 직접 공작했다. 각 도(道)에 있는 연대는 도가 모병단위였고 부대 이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9]

당시 남로당은 미군과 맞설만한 군사력을 가질 엄두는 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미군이 철수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국방경비대가 권력 쟁취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교두보로서 경비대내에 좌익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로당의 군내 침투 공작은 장교조직과 사병조직간, 그리고 도당 지도부와 장교 조직간의 분절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 군내 좌익세력의 활동

1)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은 1946년 5월 23일 제1연대 제1대대 사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데모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등포 보급중대에서 차량 2대 분량의 보급품을 부정처분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경비대 창설이래 누적되어 온 각종 불만과 사상적 대립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었다.[10]

제1연대는 창설 초기부터 대내에 계급 불만과 함께 대원간의 좌·우파 대립이 존재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었다. 계급 불만은 사병들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병 모집은 일본군 하사관 출신자나 군사경력자, 구제(舊制) 중학교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제각기 긍지를 갖고 있었으며, 장교를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도 많았다. 그런데 상병 계급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내무반장을 집단 구타하거나 탈영하는 자가 속출했다.

그리고 대내의 좌·우 대립은 신병 모집 당시 미 군정청의 방침에 따라 사상검열 없이 신체검사와 구두시험만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배를 피해 좌익세력들이 대거 입대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내에서는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우익간에 주도권 싸움이 심했다.[1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이 바로 제1연대 제1대대 소요사건이다.

사건은 1946년 5월 23일 점심식사 직후에 발생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각 중대 사병들이 연병장에 집합하자 하사관들이 지휘대에 올라가 영등포 근무중대의 장교 2명이 차량과 보급품을 민간인에게 빼돌려 거액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구속을 요구했다. 또 입대이래 품고 있던 불평불만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장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12)]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대대주번사령 겸 선임중대장이던 정일권(丁一權) 정위(正尉)가 사병들 앞에 나서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정정당당히 상관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교들에 대해 불만이 컸던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서 "너도 물러가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마침 이날은 토요일이라 대대장 이하 장교들이 점심 식사 후 모두 외출한 상태였다. 이에 경비대총사령관인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은 사태의 위급함을 느끼고 일부 미군들을 출동시켜 대기시키는 동시에 사병들 앞에 나가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사병대표들과 회담할 장소를 약속한 후 해산시켰다. 그 후 사병 대표 5~7명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베로스 중령은 곧바로 이들을 경비대총사령부 안에 연금(軟禁)시켰다. 이렇게 되자 하사관들은 교섭현장에 입회하고 있던 B중대장 정일권 정위와 대대부관 강문봉(姜文奉) 부위(副尉)의 숙소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숙소의 전구를 깨는 등 7~8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후 자정을 넘어서 해산하였다.[13)]

연병장에서의 데모주동자들과 지휘관 숙소에서 난동을 부린 주모자 및 폭행가담자 20여명은 경비대사령부에 구금되어 미 제24군단의 가스 소령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대장 채병덕(蔡秉德) 참령(參領)은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건 다음날인 5월 24일 아침에 건강이 나빠 자택에서 정양(靜養) 중이던 최경록 참위를 찾아가 "너희 A중대에서 난동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대대장은 사건의 전말을 몰랐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의 장교들이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의심을 받았다. 우선 제1대대 근무중대장이던 장석윤(張錫倫) 정위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이는 소요사건이 근무중대 장교 2명의 횡령사건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중대 책임자였던 중대장이 의도적으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통위부 고문이던 이응준(李應俊)은 장석윤을 찾아가 사건 수습을 적극 독려하였으나 장석윤은 입을 다문 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군 출신의 대선배인 이응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석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장석윤이 직접 소요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장석윤의 행동이 인사문제에 불만을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제1대대 창설 당시 장석윤은 이응준의 추천을 받아 초대 대대장에 내정되었으나 미군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미군측은 일본군 소령 출신인 채병덕을 제쳐놓고 예비역 중위였던 사람을 대대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이렇듯 미군측의 반대에 부딪힌 장석윤은 일본 육사 후배인 채병덕에게 밀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14]

당일 보급중대의 주번사관이었던 유흥수(劉興守) 참위도 배후조종자로 주목받았다. 유흥수 참위는 사병들의 연병장 데모 이후 대대장 이하 간부들이 3/4톤 차량으로 퇴근하면서 대대부관인 강문봉 부위로부터 주번사령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유흥수 참위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 진압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번사령이었다는 이유로 배후 조종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후에 유흥수는 "사건 주동자들이 좌익계로서 똑똑한 장교들을 배척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었다"고 회고하였다.[15]

그리고 광복군 출신인 이성가(李成佳) 부위와 유해준(兪海濬) 부위도 만주군 출신 장교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이러한 오해는 광복군측에서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자들을 친일파로 낙인 찍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 일본군·만주군계를 축출하려고 기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6]

하지만 배후 세력으로 지목될 만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장교들도 있었다. 당시 좌익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병주(李丙胄) 정위와 이상진(李尙振) 부위

가 그들이었다. 이들은 사건을 배후에서 직접 조종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하더라도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그대로 중대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군내 최초의 하극상 사건인 제1연대 제1대대 소요 사건은 경비대사령부로 연행된 20명의 사건 주동자 중 대부분 석방되고 핵심 인물로 분류된 하영수(河榮壽), 위재설(魏在卨), 이광윤, 홍관표(洪官杓), 김동훈(金東勳) 등 5명만이 미군정재판에 회부되어 2~5년형을 선고받고 종결되었다.[17]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채병덕 참령은 보급부대장으로, 정일권 중대장은 제4연대 대대장으로 각각 전출되었으며, 보급품을 부정처분한 2명의 장교는 파면되었다.[18]

이와 같이 일부 하사관들의 구속과 지휘관들의 전출로 제1연대사건은 일단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당국의 경비대 관련 정책과 경비대간부들의 지휘 통솔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즉 미군정당국의 '불편부당' 방침은 경비대내로 좌익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경비대내에서 좌·우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경비대 간부들의 일본군대나 만주군대식 통솔방법은 대원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경비대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후 군내 각종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2) 경비사관학교 생도대장 폭행사건

경비사관학교 생도대장 폭행사건은 1946년 12월 4일 밤에 생도대장이면서 경비사관학교 교장 대리를 겸하고 있던 이치업(李致業) 대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취침 중 사관후보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제2대 교장이었던 원용덕(元容德) 중령이 춘천의 제8연대장으로 전임한 상태라 생도대장인 이치업 대위가 교장 직무 대리를 겸하고, 김형일(金炯一) 대위가 A중대장, 오일균(吳一均) 대위가 B중대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경비사관학교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들간에 군사교육의 경험, 연령, 그리고 학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간부

들은 후보생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민간인 출신들의 경우에 정규 군사경력이 없었을 뿐, 중학교 시절에 학도군사훈련(學徒軍事訓練)을 받았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의 교육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19]

이런 상황에서 경비사관학교의 교육방침은 후보생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후보생들은 경비사관학교라는 이미지에서 한국군 장교로서의 교육과 한국적인 예의범절을 기대하고 입교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사관학교 수뇌부는 대부분 교관 교육을 받지 않고 일본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후보생 교육은 기합 위주의 일본군식 교육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제식훈련, 99식·38식 소총의 취급법과 사격, 독도법, 분대와 소대전투 등으로 이루어져 경험을 가진 후보생들에게는 진부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관후보생으로서의 대우가 형편없었던 점도 후보생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특히 주·부식(主副食) 문제로 인해 후보생들의 불만이 컸다. 1946년에는 홍수로 인한 수해와 농지개혁의 미비점 등이 겹친 데다가 비료와 농기구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전례없는 큰 흉작이 들었다. 일반가정에서조차 좀처럼 쌀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쌀의 타도반출(他道搬出)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식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대용식(代用食)으로 고구마를 구입하여 식사 때마다 2~3개씩 주었고 1주일에 쌀밥 한두 번 먹기가 힘들었다. 20대의 청년들이 하루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고구마 2~3개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20]

이렇듯 식량사정의 어려움과 사관양성의 뚜렷한 이념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후보생의 훈련과 생활을 담당하던 생도대장과 구대장(區隊長)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본군대의 통솔개념에 의거해 후보생을 통솔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후보생들의 경우, 나름대로 사관학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이념문제와 생도대장의 통솔에서 빚어진 갈등이 일부 과격한 후보생들을 자극하여 급기야 한밤중에 생도대장을 습격하여 얼굴을 뒤집어씌우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구타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1]

여기에는 5월의 제1연대, 6월의 제4연대, 10월의 제3연대에서 발생한 하극상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

도 좌익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보이는 B중대장 오일균과 교관 조병건(趙炳乾) 같은 사람들의 감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1949년에 있었던 숙군 과정에서 제2기생이 무려 1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22]

생도대장 폭행에 가담한 생도들은 유유히 내무반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범인은 좀처럼 알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1주일쯤 지난 뒤에 서모라는 후보생을 비롯해 5~6명의 후보생이 가담했던 것으로 판명되어 가담자는 퇴교 처분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23] 폭행 가담 후보생의 퇴교조치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생도대장이 구타를 당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과 경비대가 처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였다.

3) 제2연대 부정사건

대전 주둔 제2연대의 공금횡령과 보급품 부정처분 사건은 남로당의 인민혁명군사건과 더불어 남로당의 군내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대장이 직접 관여한 이 사건은 광복군계와 일본군계의 암투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로당의 군내 활동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1947년 2월 29일 제5대 연대장으로 취임한 김종석(金鍾碩) 중령은 일본 육사 56기생으로 일본군 대위 출신이었다. 광복 후 국군준비대에 가담하였다가 경비대 창설과 함께 군에 들어와 군내 좌익 조직인 인민혁명군의 조사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군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보급품을 부정처분하여 남로당의 군내 활동자금을 조달하였다.

당시 연대의 후방 주임 또한 좌익계인 이상진(李尙振) 소령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상진은 후방 주임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식 조달 남품업자인 최원락(崔原洛)과 공모하여 부정납품으로 생기는 막대한 공금을 횡령하였다. 또 그는 미군이 공급하는 C레이션을 횡령 처분하여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이주하(李舟河)계에 공작금으로 제공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연대장인 김종석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24]

이러한 부정사건은 1947년 9월 22일 최덕신(崔德新) 소령이 후임 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최덕신 신임 연대장이 부정사실을 경비대총사령부에 보고하자 경비대에서는 감찰총감(監察總監)인 오동기(吳東起) 대위에게 정식 조사를 지시하였다.

오동기 대위는 대전, 공주, 유성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2,000만원이 넘는 공금과 보급품이 부정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대 검수관, 본부중대장, 하사관 최수암(崔守岩), 그리고 납품업자 최원락 등은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심지어 김종석계의 본부중대장이 오동기 대위가 작성한 사건조사서류를 훔치려고 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조사를 마친 오동기 대위는 송호성(宋虎聲) 경비대총사령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의 구속을 건의하였으나 총사령관으로부터 재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오동기 대위는 통위부장인 유동열(柳東悅)에게 보고하여 구속조사의 재가를 받고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을 제1연대 영창에 수감하였다.[25]

그런데 김종석과 이상진을 구속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오동기는 행방불명된 납품업자 최원락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그의 형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이 자리에서 최원락의 형은 “자신의 동생이 도피중이라 함께 못 왔다”고 하면서 사건 무마비조로 10만원의 돈을 건넸다. 오동기는 최원락의 형으로부터 받은 돈을 통위부장에게 보고하고 장물로 영치하였으나, 이것과 관련해 통위부장 앞으로 투서가 계속 들어와 곤혹을 치렀다. 이런 와중에 경비대사령부 고문관인 하우스만(James Hausman) 대위와 통위부 특별부대장인 채병덕 대령으로부터 사건 무마 압력이 계속되었다.

사건 조사 또한 납품업자인 최원락의 증인심문 없이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시일은 2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경찰이 최원락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남로당에 공작금으로 500만원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통위부에서는 경비대에서 사상범을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미고문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원락의 신병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오동기는 사상조사가 아니라 부식납품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원락의 신병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통위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측에서도 통위부에서 신병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최원락을 석방하였다.

부정사건의 핵심인물인 납품업자가 없는 가운데 군법회의가 개정되어 혐의자들에게는 무죄가 언도되었다. 당시 관선변호인으로 총사령부 인사처장인 박진경(朴珍景) 중령이 선임되었는데, 그는 오동기 대위를 파벌의식과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프라이스(Terrill E. Price) 중령 또한 박진경 중령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석 중령과 이상진 소령은 무죄로 석방되어 오히려 각각 제5여단 참모장과 제8연대 부연대장으로 영전하였다. 이에 오동기 대위는 분노에 못 이겨 군복을 벗겠다고 하면서 제4연대 부연대장 발령 자체를 거부하다가 송호성 경비대총사령관의 권고로 제14연대장에 부임하게 되었다.[26]

이렇게 일단락된 제2연대 부정사건은 인민혁명군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인민혁명군사건은 김일광(金一光)[27]과 이혁기(李赫基)[28]를 중심으로 1948년 5・10 총선거를 앞두고 비밀군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경무부(警務部) 수사국(搜査局)에 의해 1948년 2월 22일 일제히 검거된 사건이었다.

1947년 북한은 남로당과는 별도로 대남 특별공작 기관으로서 북로당남조선특별정치위원회(北勞黨南朝鮮特別政治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1947년 5월 북한에서 남파된 성시백(成始伯)이 반(反)박헌영파인 강진(姜進), 서중석(徐重錫), 이정윤(李廷允)과 만나 조직한 기구였다. 이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비합법 군사조직체로 청년특별지도부(靑年特別指導部)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 산하에 일명 '인민혁명군'이 있었다.[29]

인민혁명군의 조직기반은 전 국군준비대 출신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원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직은 각 지방의 청년지도부 산하에 반(班)→분단(分團)→단(團)의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5~6명이 1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 반이 1개 분단으로, 3개 분단이 1개 단으로, 3개 단이 1개 지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30]

이혁기와 김일광의 만남은 1947년 9월 초순 남로당원인 박대식(朴大植)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이혁기는 김일광으로부터 남한내 군 출신자와 국방 및 해안경비대원을 포섭하여 비밀군사단체를 조직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후 이혁기는 조직내의 교육을 담당하다가 외선(外線) 책임자가 되었으며, 김일광과 더불어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들은 1948년 2월 15일 조직 개편을 실시해 김일광이 최고책임자 겸 제1지구(대전 이북지역) 총책임자가 되고, 이혁기가 부책임자 겸 제2지구(대전 이남지역) 총책임자가 되었다. 이때 강원도는 박용국(朴容國), 경기도는 김철구(金哲九), 경상북도는 하재팔(河在八), 충청남도는 임모(林某), 전라북도는 오영주(吳永柱)가 각각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제1지구 내선 책임자로 조영원(趙永遠), 국방경비대 책임자로 최창률(崔昌律), 해안경비대 책임자로 이조승(李祚承)이 각각 임명되었다.[31] 이들에 의한 군내 프락치 활동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이밖에 이혁기는 이승조를 통해 부산, 목포의 각 경비대에도 연락망을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전(前) 국군준비대 출신이거나 사상적으로 교

<표 5－1> 좌익세력의 군내 조직건설 관련 주요 활동

연 도	주요 내용
1947. 9	춘천연대 소속 최용국 소위를 포섭, 경비대내 세포조직 확대 지시
1947. 12	대전 제2연대 전주대대 소속 이문교 소위와 연대본부 하사관 남일주를 제2연대 부정사건으로 도피 중이던 하사관 최수암과 교체하여 자금 확보 지시
1947. 12	통위부 인사국 특무상사 김인중을 포섭, 통위부내 전 국군준비대 출신자들을 규합하도록 지시
1948. 2	조영원과 최창률을 통해 경비사관학교와 각 경비대의 주요 인물들을 포섭할 것을 지시하고, 대전연대의 최창근 중위(경비사관학교 제1기) 포섭을 계획함
1948. 2. 21	영등포경비대 소속 하사관 이영을 포섭

분이 있던 통위부 인사국장 이영섭(李英燮), 통위부 군기대장 나학선(羅學善) 소령, 통위부 하사관 윤기옥(尹起玉), 경비사관학교 민모(閔某) 소령, 인천파견경비대 이모(李某) 소위, 태릉경비대 특무상사 박용식(朴容植), 수색파견대장 이원둔(李源屯) 대위, 부산연대 김창봉(金昌鳳) 중위, 최상빈(崔相彬) 소위, 김포해안경비대 연정(延禎) 대위, 청주연대 김용배(金容培) 대위, 대구연대 최창식(崔昌植) 대위, 포항해안경비대 기지사령 이상렬(李相烈) 소령, 묵호해안경비대 기지사령 김석범(金錫範) 소령 등을 포섭 가능한 인물로 지목하고 포섭 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32]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경무부(警務部) 수사국(搜査局)에 의해 발각되어 1948년 2월 22일 관련자들이 모두 검거됨으로써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1948년 9월에 있었던 이들의 1심공판에서 김일광과 이혁기는 징역 1년 6월, 권혁주・김철구・오영주・박용국은 징역 1년, 남충렬・이강수는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되었다.[33]

4) 영암 군경 충돌사건

영암 군경 충돌사건은 1947년 6월 3일 전남 영암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 제1대대와 영암 경찰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이었다. 광주 주둔 제4연대는 창설 초기부터 대원들의 자질 문제 때문에 전국의 경비대 중에서 말썽이 많은 연대 중의 하나로 꼽혔다.[34]

사건은 1947년 5월 초 한 경비대원의 친형이 좌익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광양경찰서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이 부대내에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던 제4연대 대원들은 5월 11일(토요일) 외출을 나간 대원들이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사찰계 형사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후 철수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도 보복 차원에서 그 다음주에 외출 나온 경비대원들을 무차별 폭행하였다. 외출 나갔던 경비대원들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복귀하자, 흥분한 제1대대 병사들이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광양경찰서로 몰려가 경찰서를 쑥 밭으로 만들었다.[35]

이 사건은 즉시 경찰에 의해 미군정에 보고되었으며, 경비대총사령부에서는

미군정 당국의 유감 표시에 따라 조암(趙岩) 소령을 즉각 해임하고 이한림(李翰林) 소령을 연대장으로 발령(1947. 5. 21)하여 사건 수습을 지시하였다. 이한림 소령은 광주로 부임한 즉시 광양 경찰과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을 보고 경비대와 경찰간의 친선을 적극 도모한다는 데 약속하였다. 이로써 광양에서의 마찰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4연대와 경찰간의 반목은 오히려 커져만 갔다.[36]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6월 1일 영암경찰서 신북지서에서 제4연대 소속의 김형남(金亨南) 하사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김희준(金熙濬) 중위와 군기대장 정지웅(鄭址雄) 중위는 군기병 4명을 데리고 신북지서로 갔다. 이들이 신북지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김형남 하사를 영암경찰서로 압송한 뒤였다. 사건은 김형남 하사가 외박 후 부대복귀를 위해 신북지서 안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경찰관과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시비의 원인은 경찰이 무궁화 모양인 경비대의 모표(帽標)를 사꾸라 같다고 비아냥거린 데에서 비롯되었다. 김하사가 먼저 경찰들을 공격하자 지서순경들이 본서에 경비대원의 경찰 폭행 사실을 보고하고 본서에서 형사들이 출동해 김하사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죄목으로 연행했다.

한편 지서밖에서 군기병들은 외출 사병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한 나머지 보초를 서고 있던 순경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를 하였다. 당시 김중위와 정중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암본서로 가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경비대원들이 보초 순경을 구타하고 본서로 향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경계 근무를 강화한 상태였다.

일행은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경찰 간부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경비대측의 원만한 해결 요구에 경찰측은 경비대가 경찰의 보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중위와 정중위는 귀대 길에 올랐다. 이때 경찰 10여명을 태운 차량이 먼저 출발하고 300m 뒤에서 김중위 일행의 차가 달렸다. 차가 신북지서 앞을 통과할 즈음에 갑자기 앞서가던 경찰이 공포를 쏘면서 김중위 일행의

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사병들을 하차시켰다. 수적으로나 무장면에서 경비대를 압도한 경찰은 군기대원들을 지서안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고 김중위와 정중위를 지서장 앞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 경찰로부터 뭇매를 맞은 군기대 선임하사관은 광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의 폭행 이유는 보초를 서고 있던 경찰을 군기대원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이때만해도 김중위와 정중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때 도경찰청 미고문관이 통역관을 데리고 신북지서에 나타나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 이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도 있었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선임하사관이 운전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부대원들에게 전했다. 흥분한 300여명의 대원들은 김은배(金恩培) 중사의 지휘하에 무기고를 열어 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차량 7대를 이용해 출동했다. 제1대대장 최창언(崔昌彦) 대위가 급보를 받고 부대에 들어와 장교들을 불러 심하게 꾸짖고 사태 수습을 위해 장교들도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연대장 이한림 소령도 밤중에 미고문관의 방문을 받고 함께 연대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원들이 떠난 뒤였다.

부대원들의 뒤를 따라간 장교들이 영암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비대가 경찰로부터 사격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경비대원들은 경찰서 돌격을 감행했으나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춘 경찰의 저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경찰은 망루에다 경기관총을 걸어 놓고 사격을 가하는 반면에 경비대원들은 99식 소총과 각자 몇 발의 탄약만을 소지하고 있어서 교전은 경비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새벽에 현장에 도착한 이한림 연대장은 영암교회에서 부상병 상황과 사태 파악에 나선 후 경찰과의 담판을 시도했다. 연대장은 우선 대원들의 사격을 중지시키고 경찰서 앞 200m 지점까지 접근해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연대장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고 심지어 수류탄까지 투척해 연대장 호위병들이 사상을 당함으로써 양자간의 사격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건은 6월 2일 10시경 이한림 연대장이 영암군수와 함께 서장을 만나 '유혈방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사건으로 경비대측은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반면에 경찰측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 또 군기대원 3명이 경찰관 폭행죄로 군정재판에 회부됨으로써 경비대는 사기가 저하된 반면에 경찰은 경비대를 더욱 우습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비대사령부에서는 이한림 연대장에게 원만한 사건 수습의 공로로 특별 표창장을 수여했다. 반면 사건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주번사령이었던 이관식(李寬植) 중위가 파면되고 대대 선임하사관 김인배 상사가 병력 지휘책임, 최석기(崔錫基) 상사가 수송부 선임하사관으로서 차량을 동원한 책임으로 각각 10년형을 선고받았다.[37]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라남도에서의 군·경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경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좌익세력은 제4연대내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이 사건은 제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여수의 제14연대에도 영향을 미쳐 1948년 10월 '여순 10·19사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3. 제주 4·3사건

1) 사건의 배경

(1) 광복 후 제주도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조선총독부는 항복선언 직전에 패전 후의 치안문제와 정치범 석방, 일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내 지도급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접촉 대상 인물로는 중도 좌파 성향의 여운형(呂運亨), 중도 우파 성향의 안재홍(安在鴻), 우파 성향의 송진우(宋鎭禹)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여운형과 안재홍은 건국사업의 불간섭 등 5개 조건을 달아 수락한 반면 송진우는 "일본이 연합군에 정권을 인도해 줄 때까지 움직이면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

에 따라 여운형과 안재홍을 중심으로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 이하 '건준')'가 결성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건준이 결성된 것은 1945년 9월 10일이었다.[38] 건준이 결성되기 전에 이미 제주도에는 자치적으로 치안 및 행정·경제 조직의 결성이 착수되었다. 청년학도단 결성을 필두로 보안대, 치안대, 자위대 등이 결성되었으며, 각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에서 복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들 단체들을 규합한 것이 건준이었다.[39] 제주지방의 건준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지·명망가들로 구성된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조직 내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대립하는 일이 크지 않았으며, 소문난 친일세력만 배제되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는 추세였다.[40]

제주도 건준은 9월 22일 제주농업학교에서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결성식을 갖고 해체되었다. 제주도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9월 6일 중앙에서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이 설립되고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우파진영 인사들이 일부 이탈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치안활동에 치중하였는데, 일부 지역의 지서건물에는 지서 간판과 인민위원회 간판이 나란히 걸리기도 하였다.[41]

미군정 현지 지휘관들은 인민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치안활동의 협력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42]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과 인민위원회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1947년에 들어서면서 인민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자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5년 12월 9일 창설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제주도위원회의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결성되었다.[43]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창당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당원배가운동(黨員倍加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당원배가운동은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 이하 '민전')', '조선민

주청년동맹(朝鮮民主靑年同盟 : 이하 '민청')', '부녀동맹(婦女同盟) '등 외곽조직의 결성·확대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또 이들 남로당원들은 인민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겸하면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에 주력하였다.[44]

이와 같이 좌익 정당 및 단체가 활발하게 결성되어 활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익 정당 및 단체들의 조직 기반은 대단히 취약했다. 제주도의 우익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제주도본부'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제주도지부'가 있었으나 조직이 빈약하고 자금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1946년 7월 14일 김구(金九)가 제주도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한국독립당 제주도지부의 세력이 조금 확대되었다.[45] 하지만 남로당에 비해 세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특히 면·리 단위로 내려 갈수록 우익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미미하였다.[46] 이러한 현상은 우익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1947년 '3·1사건' 이후 좌익세력이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피해 지하로 스며들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주도에서 좌익계가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경제사정의 악화와 미군정 초기 행정체제의 미비로 인한 다소간의 사회 혼란을 남로당이 적극적으로 이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광복 후 제주도의 경제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복이 되자 일본·조선·만주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연관이 끊어지고 국내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한국경제는 재생산 기반의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였다.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으로 인한 남·북간의 경제적 유대관계 단절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위축은 육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주도는 육지와의 경제적 연계까지도 일정정도 단절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해졌다. 1947년도 제주도의 공업 생산량은 광복 전의 약 30%에 불과하였다.[47] 또한 제주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은 열악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수확량이 매우 적었다. 특히 대흉작이 들었던 1946년의 경우, 도민들의 주요 식량이었던 맥류(麥類)의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48] 여기에 광복 후 약 55,000명에 달하는 해외귀환동포와 월남민의 급격한 증가, 미군정

의 미곡수집정책 실시, 모리배의 매점매석행위 등은 제주도의 식량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49]

이렇듯 산업 전반에서의 상황 악화는 행정 부재 상태에서의 실업률 증가, 식량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1946년 8월 현재 제주도 전체 인구 중 약 8.3%인 23,080명이 실업자였다.[50] 게다가 1946년에 접어들면서 제주도에는 천연두와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51]

이러한 경제·사회 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행정 기능은 1947년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비록 미 제59군정중대(軍政中隊)가 1945년 11월 9일 제주도에 도착해 행정 기능 복원에 주력했지만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체제가 정비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했다.[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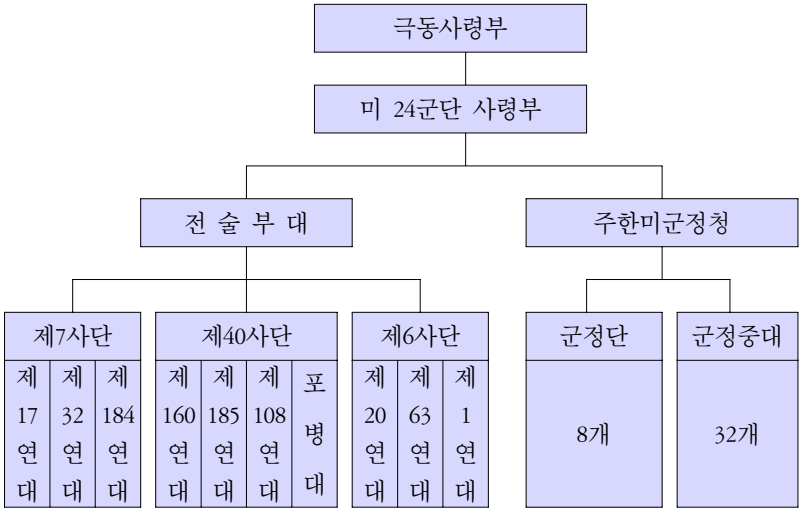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8월 1일 제주도(濟州島)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된 이후였다.[53] 제주도(濟州島)가

<표 5-2> 미 제59군정중대 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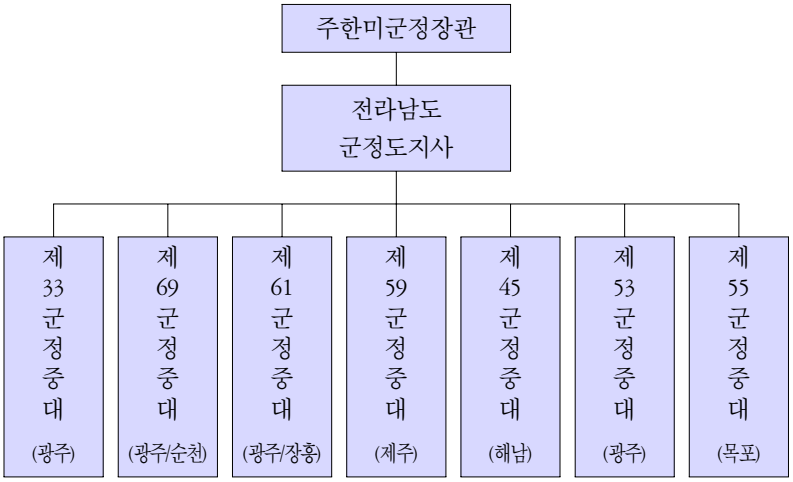
년 / 월	장 교	사 병
1945년 9월	9	35
1945년 12월	7	40
1946년 12월	9	59
1947년 1월	9	57
1947년 3월	10	48
1947년 5월	7	32
1947년 7월	9	41
1947년 9월	7	32
1947년 11월	8	18
1947년 12월	8	16

출처 : Hq. 59th MG Hq. & Hq. Company, “Letter of Transmittal”; “Unit History for Calandar Year 1947”.

<표 5-3> 주한미군 지휘계통



<표 5-4> 제59군정중대 지휘체계



도(道)로 승격됨에 따라 주한미군정청은 8월 1일부로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을 제주도지사에 임명하고, 박경훈(朴景勳)을 한국인 도지사로 임명하였다. 또 제주도군정청 각 국(局)과 과(課)의 책임자도 임명하였다[54] 나아가 1947년에

들어 미군정청은 미군정청의 한국인화정책(Koreanization Policy)에 의거해 도지사를 한국인으로 교체하고, 군정부대장을 수석민정관(首席民政官), 즉 고문으로 후퇴시켰다.[55] 이와 더불어 미 군정청은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조직의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광복 당시 101명(일본인 50명, 한국인 51명)이었던 제주도의 경찰관 수는 1947년 1월 현재 345명으로 증가하였다.[56]

이러한 행정체제의 정립 과정에서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소위 '3·1사건'은 제주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2) 제주도 좌익세력의 활동과 경찰의 대응

1947년에 접어들면서 미군정은 남한내 좌익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 이하 '미소공위')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어려워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미 한국 문제에서 세계 문제, 남·북한 문제에서 동·서간 문제로 변전되어 가는 냉전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3·1절 제28주년 기념일이 다가오자 남로당은 3·1절 기념일을 무기휴회에 들어간 미소공위의 재개투쟁과 결부시켰다.[57]

당시 좌익세력은 1946년 이른바 '9월 총파업'과 '대구 10·1 폭동'을 계기로 많은 조직 군중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로당 중앙에서는 '미소공위의 재개'와 '조직 정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3·1운동 제28주년 기념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각 지방당에 투쟁 준비를 지시하였다.[58] 이때 남로당은 3·1절 기념투쟁의 목표로 '모스크바 3상회의의 총체적 지지', '미소공위의 재개', '친일파·민족반역자 청산'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구호 이외에 남로당은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59]

남로당 중앙의 투쟁 방침과 지시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투쟁'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2월 16일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명의로 각 읍·면 인민위원회 및 조선민주청년동맹(朝鮮民主青年同盟) 등에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이 하달되었다.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에는 기념투쟁준비위원회의 조직 방침 및 투쟁 방향, 투쟁 지침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60]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1947년 2월 17일에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결성식은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제주읍(濟州邑) 일도리(一徒里) 김두훈(金斗壎)의 집에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安世勳)을 비롯하여 약 30여명이 모여 치렀다.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이틀 후인 2월 19일 오후 1시경에는 위원회 소속 위원 약 25명이 김두훈의 집에 모여 3·1절 당일 군중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을 목표로 하여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하였다.[61]

한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하에 3·1절기념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당시 제주감찰청에서는 2월 21일 좌익계의 수뇌이며 3·1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 위원장인 안세훈 외 5인을 초치해 상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3·1절 기념집회를 각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시위는 절대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감찰청에서는 관하 각서(各署)와 좌·우익 각 단체 및 각 요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였다.

○ 각 관공서, 기타 각종 단체의 기념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행할 것.
○ 가두행렬, 데모행위를 전적으로 금함.
○ 기타 일반의 기념행사는 리·동, 주민은 읍·면 단위로 하고, 타 리·동·읍·면 거주자의 참가를 금함.
○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기념행사를 감행할 시는 필히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62]

이상 4개 항목을 경고·통첩함과 동시에 강인수(姜仁秀) 감찰청장이 도내를 순

시하면서 좌담회를 통해 평화적으로 3·1절 행사를 치르도록 설득하였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군정당국은 제주도의 정규경찰력 345명만으로는 사태 악화 때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월 23일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응원경찰관 100명(각 50명)을 제주도로 파견하여 사태진전에 대비하였다.[63]

미군정과 경찰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1947년 2월 25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당일 오전에 결성식을 가진 민전 제주도위원회의 의장단을 제주도군정청에 보내 집회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주도 미군정청 경찰고문관 패트릿치 대위를 만나 집회 허가를 요청하였다.[64] 이에 대해 2월 28일 제주도 미군정청은 3·1기념 투쟁위원회 대표 안세훈 외 수명을 재차 초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 군정관 스타우트 소령은 "시위행렬은 절대 금지하며 행사는 제주서비행장(濟州西飛行場)에서 할 것"을 최후 통첩하였다.[65] 하지만 3·1기념투쟁위원회는 3월 1일 오전 10시 기념식을 갖고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투쟁에 참가한 인원은 25,000명 정도였는데, 이중 남로당·민전·인민위원회·민청·부녀동맹 등 좌익단체에서 동원한 인원이 17,000명이었고 기타 군중이 8,000명이었다.[66] 그런데 오후 2시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의 발포 상황을 놓고 "시위대가 경찰관 내지 경찰관서를 공격해 오려고 해 자체방위상 발포하였다"는 경찰측 주장과 "평화적인 군중 내지 관람군중을 향하여 발포하였다"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67]

이 사건은 당시 제주도를 관할하던 미 제6사단은 물론 미 제24군단까지도 주목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미군은 경찰의 진상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거쳐 3월 20일 사건의 경위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결론지었다. '3·1사건'은 첫째 제주도 미 군정청의 불법집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지도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둘째 시위 과정에서 기마경찰에 의한 어린이 부상자 발생과 이에 따른 시위자들의 경찰서 습격 위협, 그리고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공산주의자가 지배한 조선민주청년동맹의 잠재적 잔인성을 경험한 응원경찰대"의 적극적인 시위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68]

그런데 '3·1사건'은 경찰이 가해를 하고 민간인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민심수습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기회를 이용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반(反)미군정·경찰 투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산하 단체에 "이번 사건에 발포한 것을 포착하고 적대심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민중이 지금 무조건으로 공포심을 가진 것을 해소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투쟁방침으로 "각 외곽단체 및 양심적 유지로 하여금 피해자와 부상자에게 물질 또는 정신적인 위로를 하도록 부추기고, 강동효(姜東孝) 서장 및 악질 경관을 극형에 처하도록 선전하는 동시에 삐라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주도 전역에는 '경찰은 인민을 죽였다'라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었다.[69]

1947년 3월 7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각 읍·면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라는 지령문을 하달하고 당내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투쟁위원회'를, 당외 투쟁조직으로서 '3·1사건 대책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읍·면·리·구에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70]

이러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3월 10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에는 행정기관, 학교, 회사, 은행, 교통·통신기관 등 약 160개 단체, 40,000여명이 참가하여 제주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연일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71] 도내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각 직장은 전부 총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파업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청을 비롯한 23개 기관 516명
○ 제주농업학교를 비롯한 13개교 교직원·학생 3,999명
○ 제주북국민학교를 비롯한 92개교 35,861명
○ 제주우체국을 비롯한 8개 우체국 136명
○ 제주여객 및 남진운수를 비롯한 7개 업체 121명
○ 남전 출장소를 비롯한 15개 단체 542명[7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총파업은 3월 14일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의

제주도 방문을 계기로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6일간의 제주도 시찰을 마치고 조병옥 경무부장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는 경찰의 증원병력과 식량이 도착하였으며, 독립촉성청년동맹을 비롯한 우익계가 질서 정립을 위해 나섰다. 그 결과 4월 8일에는 각급 치안책임자를 비롯하여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민합동수습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한달 가까이 끌어온 공백 끝에 4월 15일경부터는 파업의 주동자 중 이미 잠적해 버린 몇 사람을 제외하고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73]

그러나 이것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하는 투쟁이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3·1투쟁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직확대에 주력하였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3·1투쟁 이후 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검거됨에 따라 조직이 다소 와해되는 국면을 맞게 되지만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면서 조직의 재건·확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미소공위가 개최되는 동안에 좌·우익 정당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온건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남로당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당원5배가운동(黨員 5倍加運動)'을 전개하였다.[74]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에서도 이 시기를 이용하여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48년 초에 제주도의 남로당원수는 약 5,000~6,000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500~700명의 남로당 핵심 인자들이 감언이설을 동원한 '당원확장운동'을 전개하여 약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을 남로당에 가입시키고, 이들을 자신들의 투쟁에 동원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75]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1사건과 3·10총파업 사태이후 조직 강화와 더불어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태세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노선 전환으로 6월 6일에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원들로부터 경찰관 3명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76]

이에 경찰은 제주도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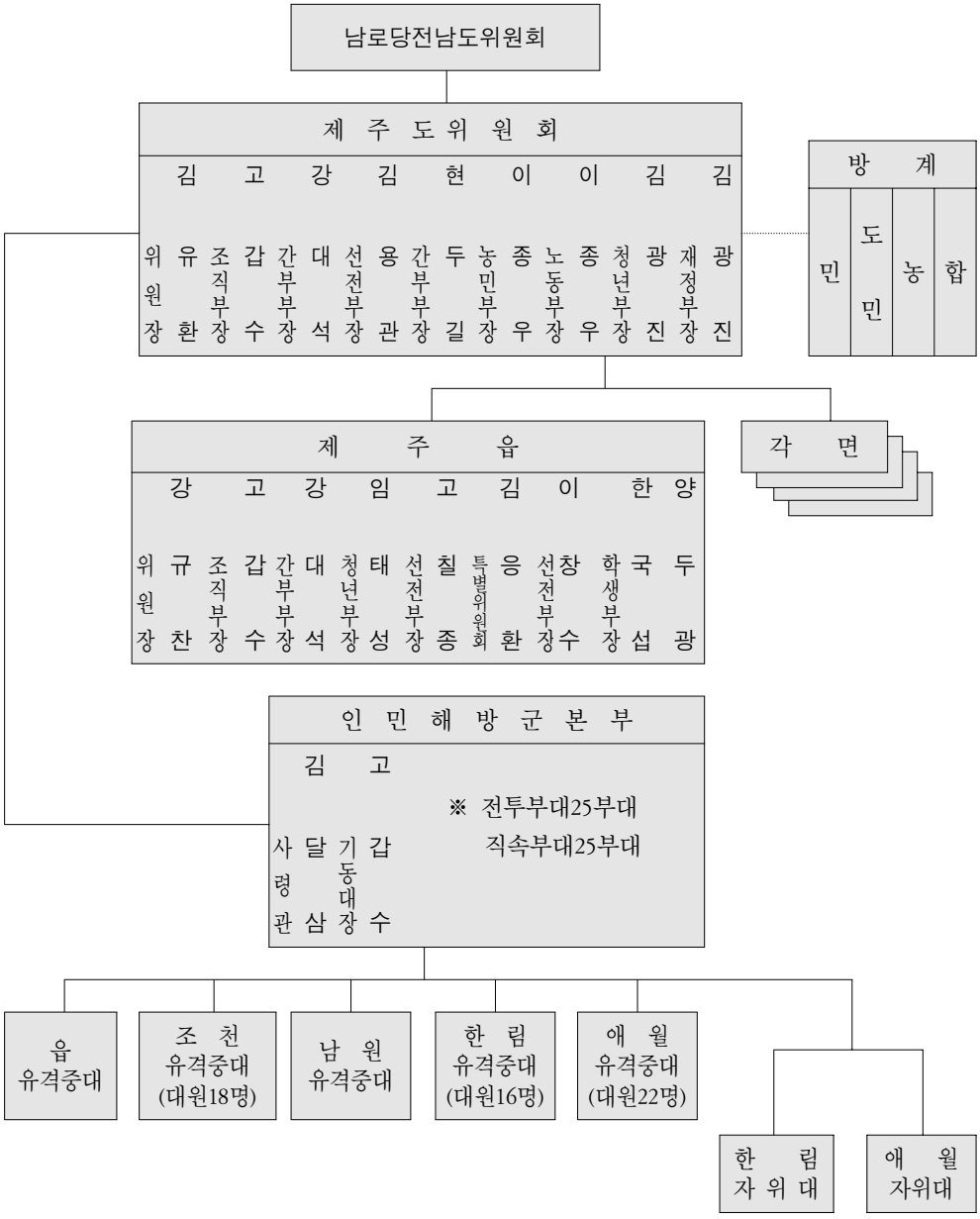
기로 제주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대진(吳大進), 김택수(金澤銖) 등이 일본으로 도피하고, 민전 제주도위원회 의장으로 3·1사건을 주도한 안세훈이 목포를 경유해 서울로 탈출하였다가 월북하는 등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제주도를 탈출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8월에 조직을 군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위원회 산하에 '인민유격대(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기도 함)'를 창설하였다.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에 김달삼(金達三), 특별경비대장(기동대장)에 이덕구(李德九)가 임명됨으로써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젊은층의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누르고 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당시 인민유격대사령부 예하에는 전투부대 25부대와 직속부대 25부대가, 그리고 각 읍·면 단위로 1~2개의 유격중대와 자위대가 각각 편성되었다. 인민유격대는 한라산에 본부를 설치하고 북제주군 환경면 샛별오름 하단의 들판에 훈련장을 설치하여 무장투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77]

2) 4·3사건의 발생과 초기 경찰 및 군의 대응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한라산 정상과 주요고지에 일제히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인민유격대 및 자위대원 350명은 도내 16개 경찰지서 중 외도, 구엄, 애월, 한림, 대정, 남원, 성산, 세화, 함덕, 조천, 삼양, 화북 등 12개 지서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관, 서북청년단원, 대동청년단원, 독립촉성국민회 소속 회원 등 우익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면서 제주도를 유혈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갔다. 제주도는 사회질서가 무너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고,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태로 빠져들게 되었다.[78]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던 김달삼이 1948년 8월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 의하면, 인민유격대는 "45회 이상의 지서습격 및 야외전투를 통해 57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는 한편, 다수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무장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79] 이들 인민유격대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각 부락마다 '투쟁격문'을

<표 5-5> 제주도 인민유격대 계도(系圖)[80]



붙이고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1948년 4월 10일자 인민해방군 제5연대 명의의 「포고문」에는 당시 인민유격대가 지향했던 투쟁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야 단선단정을 죽엄으로써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UN조선위원단(朝鮮委員團)을 국외로 모라내고 양군(兩軍)을 동시철퇴시켜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一. 인민해방군의 목적 달성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할여는 극악반동 분자는 엄벌에 처함.

一. 인민해방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야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一. 친일파 민족반역 도배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찰관, 대청원(大靑員)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一. 전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

우(右)와 여(如)히 전인민에게 포고함.

4283년 4월 10일 인민해방군 제5연대"[81]

제주도에서 대규모 무장폭동이 발생하자, 4월 5일 경찰에서는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皓) 경무관을 제주도로 보내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명의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였다.[82] 당시 경찰에서는 제주도 출신 경찰관들이 인민유격대와 지연 및 혈연 등으로 얽혀져 진압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 본토경찰관들을 증원시켰다. 이와 더불어 대정·성성(城成)지서를 경찰서로 승격시켜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대정경찰서, 성산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확대·정비했다.[83] 그러나 인민유격대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경찰로는 많은 희생자만 발생할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의 초기대응작전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국방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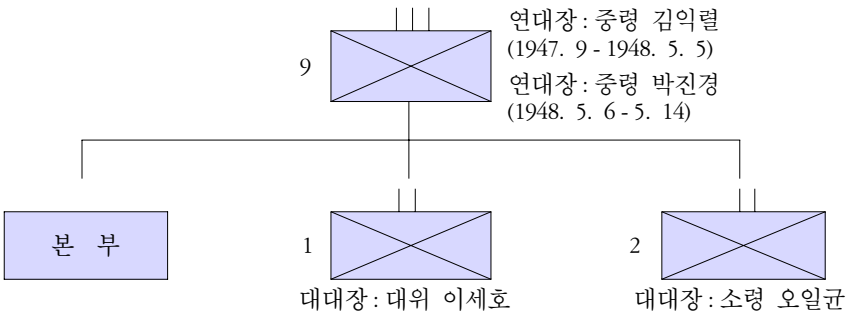
비대 총사령부에서는 4월 17일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제9연대에 진압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84]

당시 제주도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85] 제9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은 사건의 발생 원인을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폭발 정도로 파악하고 상부의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립태세를 유지한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86] 더욱이 부산 주둔 제5연대로부터 4월 10일 증파된 제2대대장 오일균(吳一均) 소령은 약 1개월간 정비, 교육만을 실시하고 경찰의 출동 요청이나 주민들의 제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장병들에게 공공연히 경찰을 비난하고 경·민간의 충돌사건에 경비대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하였다.[87] 이 무렵 제9연대내에는 이미 남로당의 세포조직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으며, 오일균 소령 또한 남로당원이었다.[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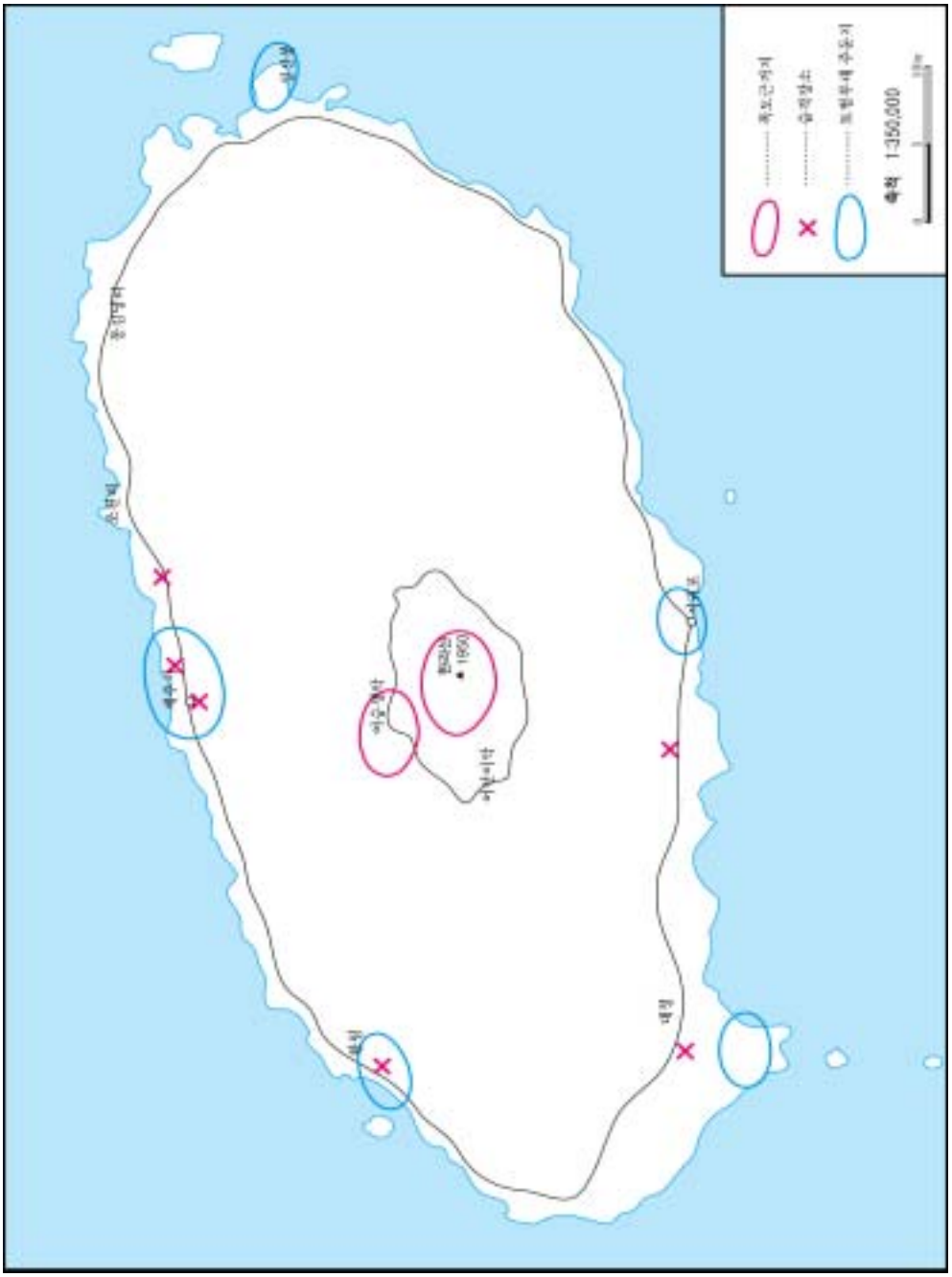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경비대총사령부로부터 진압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제1단계 인민유격대와 주민의 분리, 제2단계 인민유격대 소탕작전 전개'라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압작전에 임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병력 출동에도 불구하고 제9연대는 인민유격대와 접촉조차 할 수 없었다. 이는 연대내 남로당원인 오일균 소령과 문상길 중위가 조종하는 좌익계 하사관들이 작전계획을

<표 5-6> 제9연대 편성

<1948. 4. 3~5. 14>



<상황도 5-1> 제주 4·3사건 발발시 경비대 및 인민유격대 배치도



접이식

인민유격대에게 사전 누출시켰기 때문이었다.[89]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에서 5·10선거를 열흘 앞둔 4월 30일 제9연대장은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 이윤락 중위와 함께 대정면(大靜面) 구억리(九億里)에서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인 김달삼과 협상회합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없었으나 김익렬 연대장은 "무기를 버리고 하산하는 자는 생명과 생업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김달삼이 이를 전면 거부하지 않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월 3일 소위 '위장귀순사건'으로 평화적 해결의 기대는 무산되었다.[90] 이를 계기로 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제9연대장에서 해임되고, '좌익'이라는 오해까지 받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함께 동행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는 이에 대한 문책으로 파면되었다. 그러나 회합 성사를 주도한 남로당원 오일균 소령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보직만이 변경되었다.[91]

3) 군의 단계별 진압작전

(1) 제11연대의 작전(1948. 5. 15~7. 23)

1948년 5월 5일 오전 7시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진압작전을 위한 최고 수뇌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柳海辰) 제주도지사,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 최천(崔天) 제주경찰감찰청장, 딘 장군 전속통역관 등 모두 9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제9연대장과 경무부장간에 싸움이 벌어져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는 중단되었다.[92] 이튿날 경비대총사령부는 진압작전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였다. 박진경 중령은 일본군 학병출신으로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한라산에 구축한 동굴진지의 구조와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비대총사령부는 5월 1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5

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경비대총사령부는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함으로써 제11연대를 3개 대대 규모로 대폭 증강하고 박진경 중령으로 하여금 이 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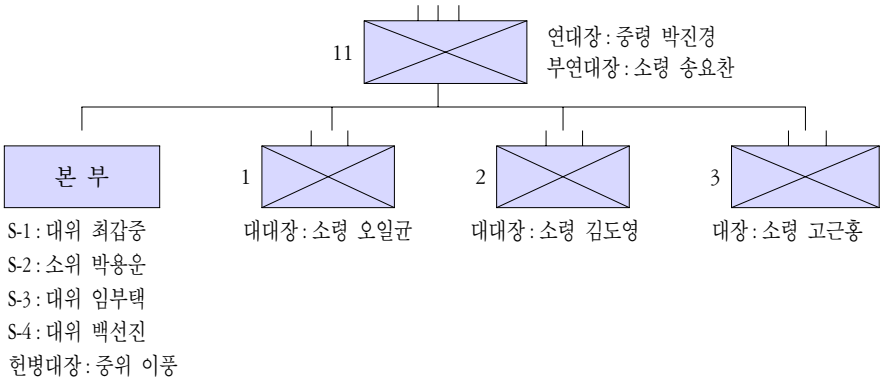
제11연대장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도 처음에는 김달삼과 만나 투항을 권고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달삼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제11연대의 토벌작전이 본격화되었다. 제11연대장은 모슬포에 집결되어 있던 연대병력을 대대 및 중대 단위로 한림, 성산포에 분산 배치하여 경비와 소탕작전을 병행하기로 계획했다. 제11연대는 경찰과 더불어 서쪽으로 애월, 한림, 한경을 공략하고, 동쪽으로 구좌, 성산을 소탕했다. 또한 한라산 전면 소탕전을 펴 포위망을 좁힌 결과 수백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11연대는 이러한 강경책과 더불어 온건책도 병행하였다. 좌익 조직이 약한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 선무공작으로 민심이 인민유격대와 합류하는 것을 막았고, 군경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 주위에는 돌로 방벽을 쌓도록 했다. 그리고 민보단을 조직해 인민유격대의 내습에 대비했다.[94]

토벌부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돌담을 쌓고 낮에만 농사일을 하게 했다.

제11연대의 강력한 소탕작전에 직면한 무장대는 적극적인 교전을 벌이는 한편, 군내의 당세포로 하여금 연대장을 암살하게 하였다. 1948년 6월 18일 연대장의 대령 진급 축하연이 있던 날 밤에 연회장에서 돌아와 영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박진경 대령이 남로당원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하사관에 의해 암살되었다.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은 국군이 토벌작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군내 좌익계 색출을 위한 숙군(肅軍)작업의 시초가 되었다.[95]

<표 5-7> 제11연대 편성

<1948. 5. 15>



박진경 대령의 후임으로 제11연대장에 임명된 최경록 중령은 전임연대장의 살해범 체포에 전력을 기울여 7월 초순 문상길 일당을 체포하였다. 살해범이 체포된 뒤 제11연대는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작전개념하에서 토벌작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제11연대는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여 폐허화된 지역의 주민과 선무공작으로 하산한 피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경찰위주로 실시되던 토벌작전을 경비대가 주도하는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경비대는 인민유격대의 주력이 있는 내륙지역의 소탕작전을 담당하고 경찰은 인구가 조밀한 해안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11연대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토벌작전을 실시하게 되자, 인민유격대는 투쟁방향을 장기항전으로 전환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면서 유격활동을 일체 중지하기에 이르렀다.[96]

이 무렵 인민유격대는 점점 수세에 몰려 곤경에 빠지게 됐다. 주민 부락과 연계가 완전히 두절된 인민유격대는 자연굴, 방공호, 잣밭, 숲속, 풀막, 우물집, 흙집 등에서 비바람을 피해야만 했다. 처음에는 부락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7월에 접어들어 식량보급마저 끊어져 아사(餓死) 지경에 빠지게 됐다. 특히 비상계엄령 아래에서 부락민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경비망을 확대, 강화시

킨 결과 산속에 있는 인민유격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유격대는 종래의 지구별 지휘부로 국군의 토벌공세를 피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서 점차 산악지대로 옮기게 되었다.[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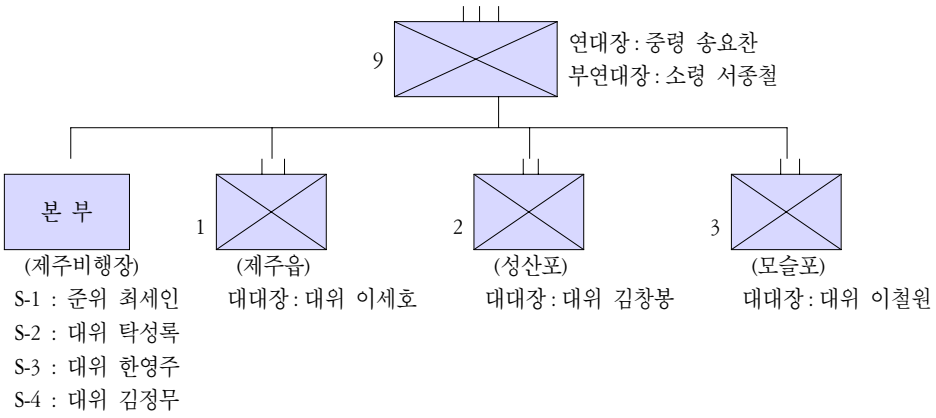
이렇듯 인민유격대의 활동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이자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7월 24일 제11연대(연대본부 및 1개 대대)를 수원으로 복귀시키고 제9연대를 재편성하여 제1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98]

(2) 제9연대의 재편성과 토벌작전(1948. 7. 23~12. 29)

경비대사령부는 제11연대가 복귀함에 따라 제5연대의 1개 대대, 제6연대의 1개 대대로 제9연대를 재편성하고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이던 송요찬(宋堯讚) 중령을 임명하였다.[99]

재편성된 제9연대는 8월 한달 동안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고 9월 초부터 제11연대의 작전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당시 인민유격대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사방의 능선을 따라 동으로는 어승생악－관음사－송당－당오름－신촌 경계선, 그리고 어승생악－산천당－오라－월평－노형 경계선, 서쪽으로는 성판악－웅악－산방산－창산－모록밭－남송악 경계선 등으로 활동무대를

<표 5－8> 재편 제9연대 편성



좁혔다. 이처럼 대열을 정비하고 전술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한라산의 자연조건은 장기화하면 할수록 인민유격대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국군이 해안선을 봉쇄하고 주민과의 연계만 두절시키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한라산 봉우리는 수목이 거의 없어 압축할 경우 자연동굴이 많다 하더라도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특히 주민들은 한정된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나마 토착적이며 혈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군경에 의한 당조직 파괴와 인적 추적 및 검거가 유리하였다. 더욱이 군경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자 인민유격대는 좌익계 주민들과의 연계가 두절되고 식량과 무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자조달이 매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인민유격대의 수를 줄이는 한편 일부를 하산시켜 부락과 산속에 있는 인민유격대와의 연계를 맺게 하여 소위 '식량생산 확보투쟁'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100]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남부지역에 할당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도 대표로는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달삼을 비롯해 고진희, 강규찬, 문등봉, 이정숙, 안세훈 등이 참가했다.[101]

김달삼의 해주인민대표자대회 참가로 인민유격대는 이덕구가 이끌게 되었으며, 1948년 10월 1일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해 또다시 기습 폭동을 일으켰다.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함덕, 조천, 서귀포, 모슬포, 남원면 일대의 지서가 습격을 받았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인민유격대의 활동이 재개되고 이로 인한 혼란상태가 계속되자 경비대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여단장 김상겸(金相鎌)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작전을 개시한 지 10일만에 제5여단 소속 여수 주둔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지휘 책임을 물어 파면되고,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후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작전개념은 대대별로 작전책임지역을 할당하여 지역경비와 토벌작전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당시 부대배치는 제1대대가 중앙지역인 제주읍에, 제2대대가 동쪽지역인 성산포에, 제3대대가 서쪽지역인 모슬포에 각각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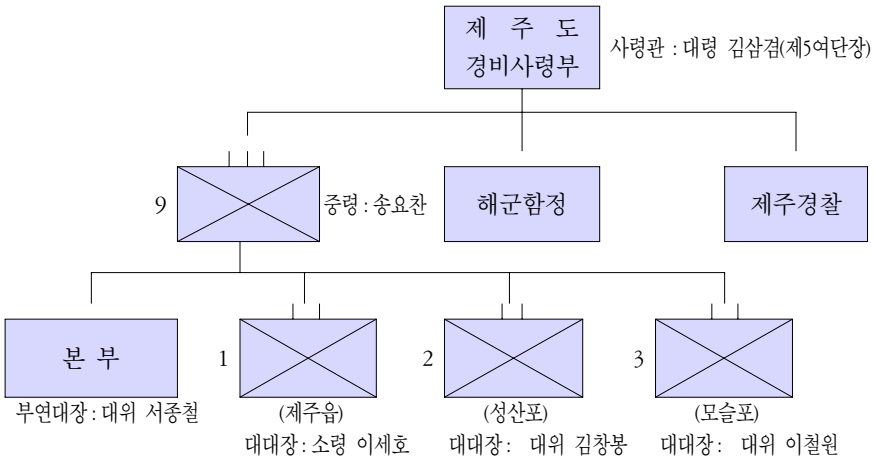
치하고 중대별로 전술책임지역을 할당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유격대의 출현 규모에 따라 중대 단독 또는 대대 단위로 작전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인민유격대는 제14연대 반란사건에 크게 고무되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로 인해 작전의 주도권을 잃은 경비대는 오히려 수세로 몰리게 되어 방어태세를 강화하면서 제14연대 반란군의 제주도 침투에 대비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해안 봉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102]

이 작전기간 중 제9연대는 일부병력을 제14연대 반란군으로 가장해 조천지구에 상륙시켜 이에 동조하는 무장대를 소탕하려는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 작전계획은 제주읍에서 동쪽으로 10㎞ 떨어진 조천지구의 인민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수립되었는데, 이근양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의 일부병력이 해상에서 제14연대 반란군으로 가장해 상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작전계획이 경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대내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존재가 드러나 80여 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03]

연대내의 좌익세포 검거가 있은 후 제9연대는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하산을 권고하는 포고문을 살포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104]

<표 5-9> 제주도경비사령부 편성

<1948. 10. 11 현재>



<표 5-10>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작전 현황

일 시	작 전 상 황
1948. 10. 30.	제주읍을 기습하기 위해 제주 서쪽 10㎞ 지점에 위치한 고성에 집결 중인 인민유격대를 군·경 합동작전으로 소탕하여 200여명 생포
1948. 11. 2.	한림에 주둔하던 제2대대 제6중대가 유격대로부터 습격을 받아 중대장 이하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연대에서는 제5중대를 긴급 출동시켜 유격대의 집결지를 포위 공격해 100여명 사살
1948. 11. 3.	경찰토벌대가 남제주군 중문면 어두운 마루에서 유격대의 매복 공격을 받아 경찰관 8명이 죽고, 민가 30여 채가 전소됨. 무장대 사살은 3명
1948. 11. 6~7.	서귀포를 점령하려는 유격대의 공격 저지
1948. 11. 7.	남로당내에 침투한 첩보원의 제보로 지하조직 적발
1948. 12. 28.	무장대 100여명이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마을을 습격하여 월동 식량과 의류를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운 뒤 도주함. 급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토벌대가 도주하는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

이 시기 제주도경비사령부의 주요 작전을 정리하면 <표 5-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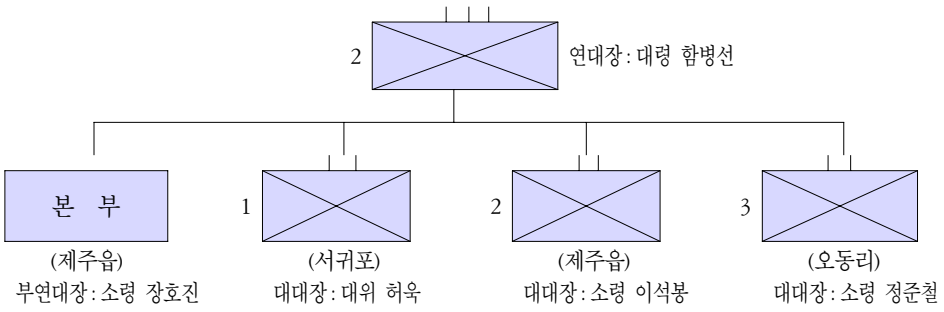
제9연대와 경찰의 효율적인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인민유격대의 활동은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최후의 소탕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1948년 12월 29일 대전에 주둔하던 제2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해 제9연대와 임무교대 시켰다.[105]

(3) 제2연대의 토벌작전(1948. 12. 29~1949. 2. 28)

제9연대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은 제2연대는 연대본부를 제주비행장에 위치시키고 제1대대를 남쪽 서귀포에, 제3대대를 북쪽 오동리에,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제주읍에 각각 배치하여 필요시 신속히 증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계속적인 소탕작전으로 인민유격대는 상당수가 귀순하거나 사살되어 표면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106] 정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제주도에 발령했던 계엄령을 1948년 12월 31일부로 해제하였다.[107] 그러나 표면상 활동을 중단했을 뿐 당시 제주도 내의 인민유격대는 내부적으로 조직을 강화해 가고 있었다.

<표 5-11> 제2연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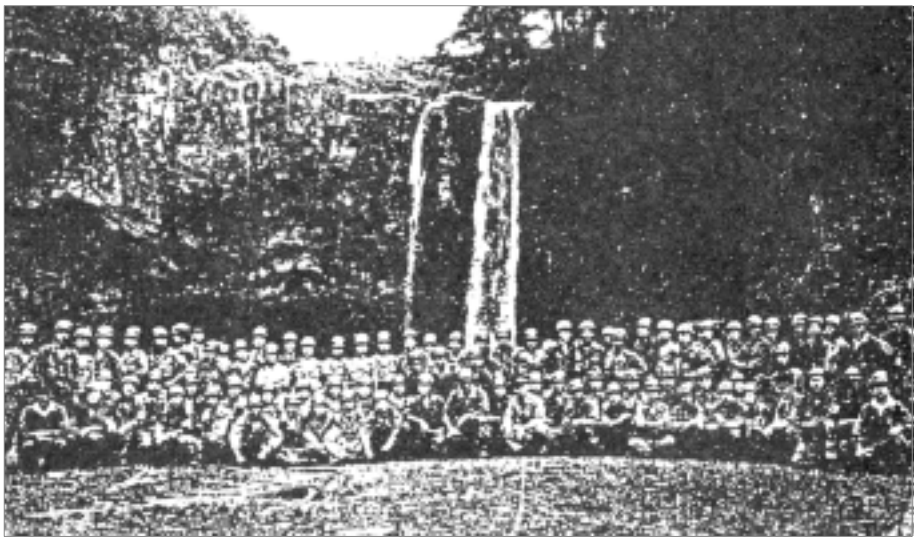
<1948. 12. 29>



이덕구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는 부대 교체기의 경계 소홀을 틈타 제2연대가 제주도에 도착한지 3일 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1949년 1월 1일, 제주읍 남쪽 한라산 기슭의 오동리 화엄사에 주둔하고 있던 제3대대가 인민유격대 주력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아 제3대대원 7명이 전사하였다. 제2연대장은 제3대대를 기습한 인민유격대의 규모를 1개 대대로 판단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1월 4일부터 해군함정과 항공대의 경비행기를 지원받아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 각 대대는 한라산을 포위하고 지역수색을 전개하였으나 지형 미숙으로 인해 인민유격대의 은거지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108]

오히려 1월 8일에는 인민유격대가 심야에 제주읍을 급습해 도청에 불을 지르고 심양지서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토벌부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으로써 도민들이 토벌부대에 선뜻 협력할 마음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109]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주민들이 한라산일대의 동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토벌작전보다는 선무공작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제주도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군·경의 계속된 토벌작전으로 인해 해안에서 한라산쪽으로 4~8㎞ 이내의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락이 폐허가 된 상태였다. 때문에 주거지를 잃은 주



정방폭포 앞에서 제2연대 제2대대원들의 기념촬영

민들은 인민유격대를 따라 산중으로 들어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토벌부대의 선무공작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에서 내려와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산속에 남아 있었다. 제2연대는 이들 주민들을 인민유격대와 분리시키기 위해 갱생원(피난민 집단수용소)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주민 선무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에서 내려온 주민이 1,500명에 달하였다. 연대는 이들을 갱생원에 수용하여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한편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고 사상계몽을 통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갱생시켰으며,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 조치하였다.[110]

이 밖에도 제2연대는 주민홍보를 위해 제주읍, 모슬포, 성산포, 한림 등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연대는 인민유격대의 만행을 규탄하고 새로 도입된 대전차포, 박격포, 중기관총, 로켓포, 소총 등의 신예무기 전시와 화력시범을 통해 인민유격대의 귀순을 종용하였다. 귀순한 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를 배급하고 1주일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제2연대장의 민심수습대책이 주효하여 군부대를 믿고 의지하게 되자 산중에 남아있던 피

인민유격대의 선도에 힘을 쓰고 있는 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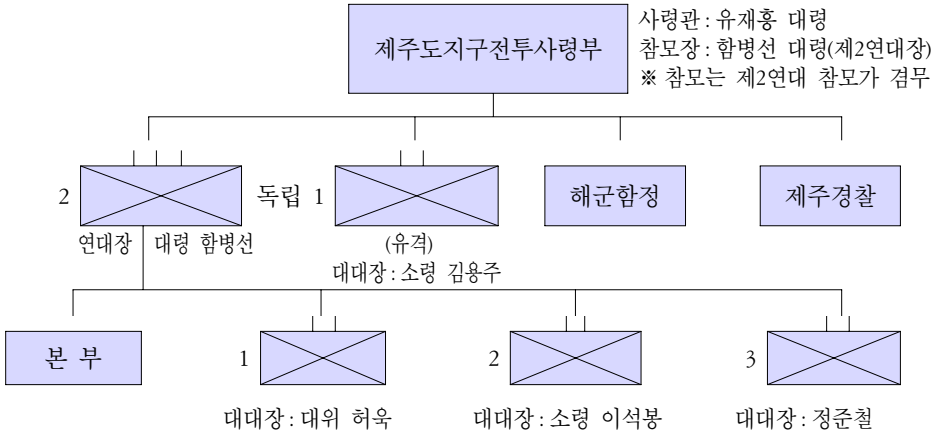
난민도 인민유격대가 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을 지어 하산하였다. 난민들이 늘어나 갱생원만으로는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제2연대는 중산간 부락을 재건해 함명리(咸明里)와 같은 '재건부락'을 만들기도 했다.[111]

한편, 제2연대는 잔여 인민유격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조로 1949년 1월 31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을 사살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군, 항공대의 지원을 받아 2월말까지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112]

(4)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2~5. 15)

제9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지형파악도 하기 전에 기습을 받았던 제2연대는 1949년 1~2월 선무공작으로 산에 올라간 주민들 상당수가 하산함으로써 귀순할 사람은 대부분 귀순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3월 초부터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전개되었다. 당시 육군본부는 봄이 되어 한라산의 초목이 무성해 지기 시작하면 토벌작전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해동과 동시에 인민유격대를 소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에 유재흥 대령이 지휘하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이 전투사령부에는 제2연대를 비롯

<표 5-1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편성



해 대유격전 전담부대인 독립제1대대(대대장 김용주 소령)가 배속되었다.[113]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먼저 선무공작을 전개하여 인민유격대와 주민을 분리시킨 후에 토벌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개념에 의거해 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제1단계 작전인 선무심리전은 제2연대가 펼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었는데, 도내의 지도급 청년들로 선무공작대를 편성해 산으로 올려 보내 하산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하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수용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주도청의 협조 하에 구호미와 의류품들을 분배하였으며, 생활자금도 2배로 늘려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귀순전단을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선무공작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1단계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 후에 제2단계 소탕작전이 전개되었다. 제2연대를 주축으로 한 토벌부대는 각 대대별로 작전지역을 할당하여 책임지역 내에 인민유격대가 출현하면 각 대대가 그 규모에 따라 중대, 대대별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L-4, L-5 비행기가 사제 폭탄과 수류탄을 투하하고 해군 함정이 대전차포로 한라산에 위협을 가했다.[114] 그리고 해안지역의 부락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마을마다 15~16세의 주민들로 민보단을 편성하여 낮에는 농민을 보호하고 밤에는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방

위하게 하였다.

유재흥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은 효율적인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하에 민보단 1개 소대(25명)와 경찰 1개 분대, 군 1개 분대로 구성된 민·관·군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민보단 소대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면사무소와 군청 직원, 청년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에 걸쳐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필요시 소집하여 소탕작전에 참여시켰다. 이들 혼성부대는 인민유격대에게 매우 위협적인 부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2연대 제1대대의 정수정 상사가 지휘하는 혼성부대는 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조직책 김민성을 비롯해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핵심 간부들을 사살하고 각종 무기들을 노획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115]

1949년 3월에 창설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본격적인 토벌작전 개시 후 약 2월 반만에 전투사령부를 해체해도 될 만큼 큰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제주도의 무장대 조직은 거의 와해되어 제기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49년 5월 18일부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116] 제2연대는 8월 13일 제주도경비임무를 독립제1대대(대대장 소령 김용주)에 인계한 후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제주도전투사령부의 해체는 사실상 제주4·3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이후에도 독립제1대대(1949. 8. 13~12. 28)와 해병대사령부(1949. 12. 28~1950. 6. 25)의 소탕작전이 있었지만, 작전의 성격은 인민유격대의 소탕보다는 민심을 수습하여 도민들의 재기를 돕는 대민활동에 맞추어졌다. 이러한 작전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남침이 있기 전까지 지속되었다.[117]

제 2 절 정부수립 이후 군내 좌익사건

1. 여순 10·19사건

1) 사건의 발생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여수에서 창설되었다. 창설 요원으로는 당시 광주에 주둔하던 제4연대의 1개 대대가 차출되었으며, 초대 연대장은 제4연대 제1대대장이던 이영순(李永純) 소령이었다. 연대 주둔지는 일제 말 일본해군항공기지가 있었던 여수 신월리였다. 제14연대 창설요원으로 차출된 1개 대대 병력 가운데는 제4연대의 이른바 문제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비사관학교 3기생인 김지회(金智會), 홍순석(洪淳錫) 중위와 제4연대 1기생인 지창수, 정낙현 상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다.[118]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는 곧 신병모집에 착수했다. 다른 연대에서도 그렇듯 제14연대의 신병모집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온사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자는 무조건 입대시켰다. 게다가 제14연대로 차출된 김지회 중위가 제1대대 제1중대장을, 홍순석 중위가 순천파견대장을 각각 맡았으며, 지창수 상사가 인사처 선임하사, 정낙현 상사가 정보처 선임하사로 있으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당시 남로당에서는 국방경비대내에 자파(自派) 세력을 침투시키기 위해 활발한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3~4월의 미군정보고서에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국방경비대 침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비대가 남한에서 권력 탈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19] 군내 침투를 위해 남로당은 각 시·군당에 사병 추천을 지시하고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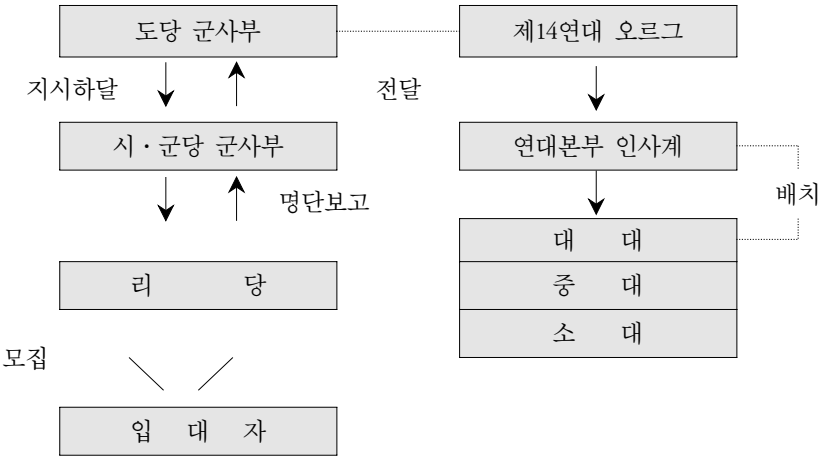
된 사병들은 연대 공작을 담당하는 도당 파견 조직원을 통해 각 대대, 중대, 소대에 배치했다.[120]

제14연대의 경우에는 전남도당(全南道黨) 군사부에서 지도원이 파견되어 있었고 연대 내에 당의 오르그(조직지도원)가 침투하여 조직의 확대·강화에 주력하였다. 당 오르그는 연대내의 군조직책인 연대인사계 지창수와 유기적이고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당(道黨)에서 추천한 청년들의 입대와 배치, 우익계 청년들의 입대 저지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부 과장이었던 박춘석(朴春錫)의 증언에 의하면, 제14연대의 좌익계 사병 침투 방법은 <표 5－13>과 같다.[121]

다른 연대와 마찬가지로 제14연대의 경우도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장교와 사병간의 마찰, 일부 장교들의 부정에 대한 불만 등이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낮은 대우, 수직적 상승기회의 결여 등으로 불만을 가진 사병들은 자신들과 지연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병들의 군 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인사계 하사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122]

이런 가운데 1948년 6월 18일에 발생한 제주도 주둔 제11연대장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경비대내에서는 좌익 성향의 장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

<표 5－13> 제14연대 남로당 조직 건설 과정



되었다. 제14연대의 경우도 연대장이던 오동기 소령이 1948년 10월 1일 '혁명의용군(革命義勇軍) 사건'으로 구속되자 연대 전체가 심한 혼란상태에 빠졌다. 특히 제14연대내 남로당 관련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제14연대에는 육군총사령부로부터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를 조속히 편성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대 참모부에서는 극비리에 1개 대대를 편성하였는데, 남로당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남로당 제14연대 조직책이었던 연대 본부의 인사 담당 선임하사관 지창수는 이러한 사실을 남로당 관련 하사관들에게 전하고 15~16일 밤에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책회의에서 남로당 관련 하사관들은 '일단 제주도로 가서 총부리를 돌리자'는 방안과 '출동을 거부하고 영내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방안, '제주도로 가는 도중 선상(船上)에서 반란을 일으키자'는 방안 등을 논의한 끝에 선상 반란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123]

10월 19일 연대는 07 : 00에 여수우체국 일반전보로 하달된 "19일 20 : 00를 기해 LST를 출항하라"는 육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LST 선적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연대장 박승훈 중령과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은 출항전문 지시가 여수우체국을 통해 일반전보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기밀이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서 출항 예정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124] 이 무렵 연대내 반란 주모자들도 반란 정보가 누설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선상 반란에서 영내 반란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125]

영내 반란으로 계획을 수정한 반란 주모자 지창수 상사는 이날 저녁에 열릴 예정이던 출동부대 환송식을 이용해 봉기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환송식을 이용한 봉기 계획은 장병들의 이목 때문에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날의 환송식은 19 : 00경에 끝났고, 연대장 이하 지휘부는 먼저 항구쪽으로 가서 화물의 탑재를 감독하였다.[126] 그리고 출동부대인 제1대대는 수송 요원을 제외하고 전 병력이 대대 막사 옆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환송회식에 참가했던 장교들은 회식이 끝난 후 출동 부대 장교와 야간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내·외 숙소로 돌아갔다.[127]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주둔지

연대 내에 총소리와 비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영내 출발시간인 21 : 00보다 1시간 전인 20 : 00경이었다. 출동 대대의 사병들은 출동 예정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 연병장에 집합하여 소총 지급을 기다렸다. 사병들은 곧 김일영 대대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단상에 나타난 것은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였다. 연대내의 무기고와 탄약고는 이미 남로당 관련 병사 40여명에게 탈취된 상태였다.[128]

단상에 오른 지창수 상사는 "경찰이 우리를 습격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최대한 실탄을 나눠 갖고 응전태세를 갖추자. 동족을 살상키 위한 제주도 파병에는 절대 반대한다. 경찰을 타도하고 남북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궐기하자. 실은 지금 북조선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민해방군이 된다. 조국 통일을 위해 미국의 괴뢰들을 쳐부수자. 제국주의 앞잡이인 장교들도 모두 죽이자"라고 외쳤다.[129] 이를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이후 총성과 나팔소리에 놀란 제2대대와 제3대대 사병들이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으로 나오다 경찰이 공격해 왔다는 지창수의 말

과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다.

한편 여수항의 LST에서 점검과 부대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연대장과 부연대장은 23 : 00경 연대수송장교의 보고를 받고서야 반란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대장 박승훈 중령은 반란보고를 받고 사태 파악을 위해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과 정보주임 김래수 중위를 귀대 조치시키고, 자신은 제14연대 제1대대의 제주도 출항을 환송하기 위해 여수에 머물고 있던 제5여단 참모장 오덕준(吳德俊) 중령을 찾아가 사건 발생을 보고하였다. 연대장과 제5여단 참모장은 즉시 연대로 향했으나 반란군들의 기세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판단하고서 연대를 빠져나와 여수항에서 해군경비정을 타고 목포로 갔다. 목포에 도착한 참모장 오덕준 중령은 진상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고 연대장은 제5여단사령부가 있던 광주로 갔다.

이에 앞서 사태 파악을 위해 먼저 연대로 갔던 부연대장 이희권 소령과 정보주임 김래수 중위는 연대에 도착한 직후 반란군들의 공격을 받아 김래수 중위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이희권 소령만이 사태 수습을 시도하다 불가능하자 여수 시내로 빠져나왔다. 이휘권 소령은 즉시 헌병파견대에 들러 제14연대 순천파견대(2개 중대 규모) 선임중대장인 홍순석 중위에게 전화로 즉각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순천지구 반란의 주모자였던 홍순석 중위는 항명하였다.[130]

연대병력을 반란군으로 조성하는데 성공한 지창수는 자신이 '해방군'의 연대장임을 선언하고 반란군의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여기서 남로당의 고급당원이며 장교인 김지회가 반란군을 지휘하지 않고 하사관인 연대조직책 지창수가 지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당시 지창수와 당 오르그는 김지회를 사살하려고까지 했다. 이는 사병과 장교조직이 이원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즉, 남로당 중앙에서 관리하는 '장교그룹'과 도당에서 관리하는 '사병그룹'이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누가 당원인지 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131]

이렇듯 제14여대의 반란사건은 김지회를 비롯한 장교그룹이 아니라 지창수를 비롯한 하사관 그룹의 주도하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 하사관들은 연대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하자 무장한 세포들을 연병장 주변에 배치하고 선동 연설과 반대하는 하사관들을 현장에서 총살하는 위협을 섞어 삽시간에 좌익 반란군으로 탈바꿈시켰다. 지창수는 특히 병사들의 반(反)경찰 감정을 교묘히 자극했다.[132] 제14연대 병사들은 연대내의 반경 분위기, 총성과 비명, 선동 연설, 곳곳에 박혀 있던 좌익 세포들의 맞장단 등이 한데 뒤섞여 빚어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내 반란 동조자로 변했던 것이다.[133]

2) 반란군의 여수·순천 점령

지창수 상사의 지휘하에 약 3,000명의 반란군이 여수 시내로 향한 것은 20일 01 : 00경이었다. 반란군은 미리 연락을 받고 영내에 들어와 있던 민애청(民愛靑) 소속의 서종현(徐鍾鉉)을 비롯한 23명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다.[134] 여수 시내로 들어선 반란군은 봉산(鳳山)지서 출장소를 공격한 것으로 경찰과의 접전을 시작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약 200명으로 저지선을 쳤으나 02 : 00경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시내 곳곳에서는 반란군의 '경찰 섬멸전'이 아침까지 계속 됐다.[135] 05 : 30경 반란군들은 시내 주요 기관들을 점령하고 처음으로 인공기를 내거는 한편 좌익 청년단체와 좌익계 학생들을 동원해 경찰, 국군 장교, 우익 인사 등에 대한 검거와 테러 활동을 본격화하였다.[136] 20일 오전에 여수를 완전히 장악한 반란군은 09 : 30경 1개 대대 병력만을 여수에 잔류시킨 채 2개 대대 규모의 주력이 열차를 이용해 순천으로 북상했다.[137]

여수에서는 오전 10시 읍사무소에 인민위원회와 보안서가 설치되었고 오후 3시에 중앙동 광장에서 '인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인민대회는 "한 집에 꼭 한 사람씩은 나와야지 안나오면 큰일 난다"는 붉은 완장을 찬 좌익계 청년들의 강요에 못 이겨 따라온 1,000여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지창수 상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남로당 여수지구당 위원장 이용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안서장으로 내정된 유목윤의 격려사, 지창수의 인사말, 민주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등 단체 대표들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인민대회에서는 이용기, 유목윤, 박채영, 문성휘, 김귀영, 송욱 등 6인이 의장단에 선출되었고, 혁명과업 6개항의 결

여수시가 전경

의문이 채택되었다.[138] 이 대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지하에 숨어 있던 민애청, 민청, 학생동맹, 여성동맹, 합동노조, 교원노조, 철도노조 등 좌익단체 청년들 6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해 무기를 들고 경찰과 우익인사들의 체포와 재산몰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내에는 긴장과 공포분위기가 확산되었다.[139]

한편, 순천에서는 20일 새벽에 여수 철도경찰서의 여자교환수로부터 순천경찰서에 제14연대의 반란 사실이 전해짐으로써 경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순천경찰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으며, 순천의 각급 기관장과 유지들도 단순한 군경충돌사건 정도로 인식하였다. 이는 20일 09 : 00경 순천의 각급 기관장과 유지들이 순천 시내의 승주(昇州)군청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술과 안주를 군인들에게 제공해 군・경・민의 화해를 도모하자"라고 결론을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다.[140]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0 : 30경 반란군이 순천역에 도착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09 : 30경 열차 6개의 차량에 분승하여 여수역을 출발한 반란군은 10 : 30경 순천에 도착하였는데, 순천에는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가 북상중인 반란군의 주력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천에 도착한 반란군은 홍순석 부대와 합류해 3개 방면에서 순천을 압박해 들어왔다. 반란군의 공격으로 삼가리방면의 경찰소대가 일격에 격파되고 10여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당시 순천경찰서의

주력은 순천교 제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광주에서 출동한 제4연대 선발 파견중대가 순천교－역전에 이르는 도로와 남초등학교－시청에 이르는 도로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경간에는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과 군의 연락 책임을 맡았던 남초등학교장 김경호의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태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경찰서장과 협의해 경찰과 청년단도 개별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각각 분산됨으로써 반란군과의 교전은 종료되었고, 15 : 00경에 순천은 완전히 반란군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141]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4연대 선발 파견중대의 좌익계 하사관들이 중대장과 반대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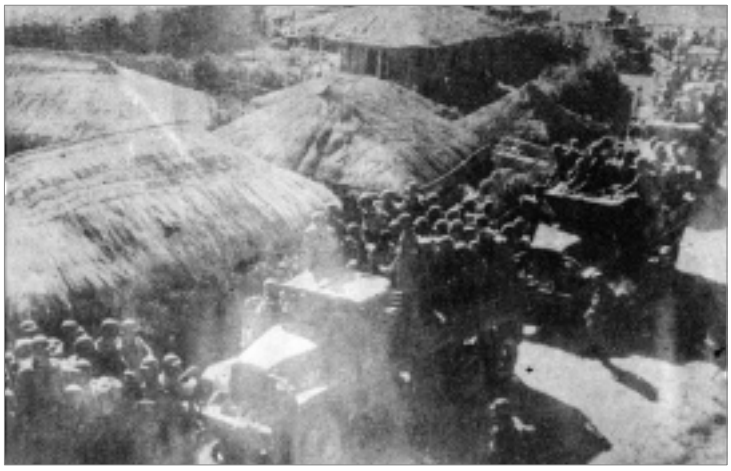
반란군 주력은 순천이 점령되자 3개 방면으로 병력을 분산하여 학구(鶴口), 광양(光陽), 벌교(筏橋)로 진공하면서 경찰서와 지서를 파괴하고 경찰관들을 살해했다. 반란군들은 21일 새벽 순천경찰서 관내 별양(別良)지서, 벌교서 관내 조성지서를 점령하고 창성지서에서는 약 30명의 경찰관을 나체로 총살하기도 했다.[143]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광양, 남원, 구례, 보성의 경찰서들이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144] 정부에서 여수·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작전을 본격화한 22일, 반란군 세력은 서쪽으로 보성, 동쪽으로 광양, 북쪽으로 구례·곡성까지 뻗쳐 있었다.

3) 국군의 여·순지구 탈환작전

제14연대의 반란 소식이 육군총사령부에 전달된 것은 20일 01 : 00가 넘어서였다. 철도경찰대의 경비 전화망을 통해 올라온 반란의 급보를 접한 이범석 국방장관은 09 : 00에 국방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범석 장관을 비롯해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부장, 백선엽(白善燁) 정보국장, 로버츠(William Roberts) 군사고문단장, 참모총장 고문관 하우스만 대위, 정보국 고문관 리드(John Reed) 대위 등이었다. 사태 파악도 안된 상황이라 별다른 결론 없이 이범석 장관은 채병덕 총장에게 "조사단을 인솔해 현지로 내려가 사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채병덕 참모총장, 정일권 참모부장, 백선엽 정보국장, 하우스만 대위, 리드 대위, 통역장교 고정훈(高貞勳) 중위로 구성된 조사반이 미군 특별기편으로 즉시 광주로 갔다. 채병덕 참모총장과 정일권 참모부장은 현황 파악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진압군을 편성하는 한편 38선 경계 강화 조치를 취했다.[14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의 제14연대 반란은 중앙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어서 38선 경비 병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용 병력을 진압작전에 투입하였다. 21일 육군총사령부는 광주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송호성 준장을 진압군 총사령관에 임명하는 한편 제2여단(여단장 원용덕 대령) 예하의 제12연대(군산)와 제2연대(대전), 제5여단(여단장 김백일 대령) 예하의 제3연대(전주)와 제4연대(광주)를 진압부대로 순천방면에 급파했다.[146]

진압군에 편성된 부대들이 순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광주 주둔 제4연대에서는 20일 01 : 30경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반란 소식을 듣고 부연대장 박기병(朴基丙) 소령의 신속한 대응 조치가 있었다. 당시 광주의 제5여단장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 경비사령관으로 나가 있었고, 참모장 오덕준 중령은 여수 제14연대의 출동을 보기 위해 여수출장 중이었으며,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도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 이에 따라 부연대장이 미 고문관과 협의해 1개 중대를 순천에 투



반란군 토벌을 위해 출동하는 진압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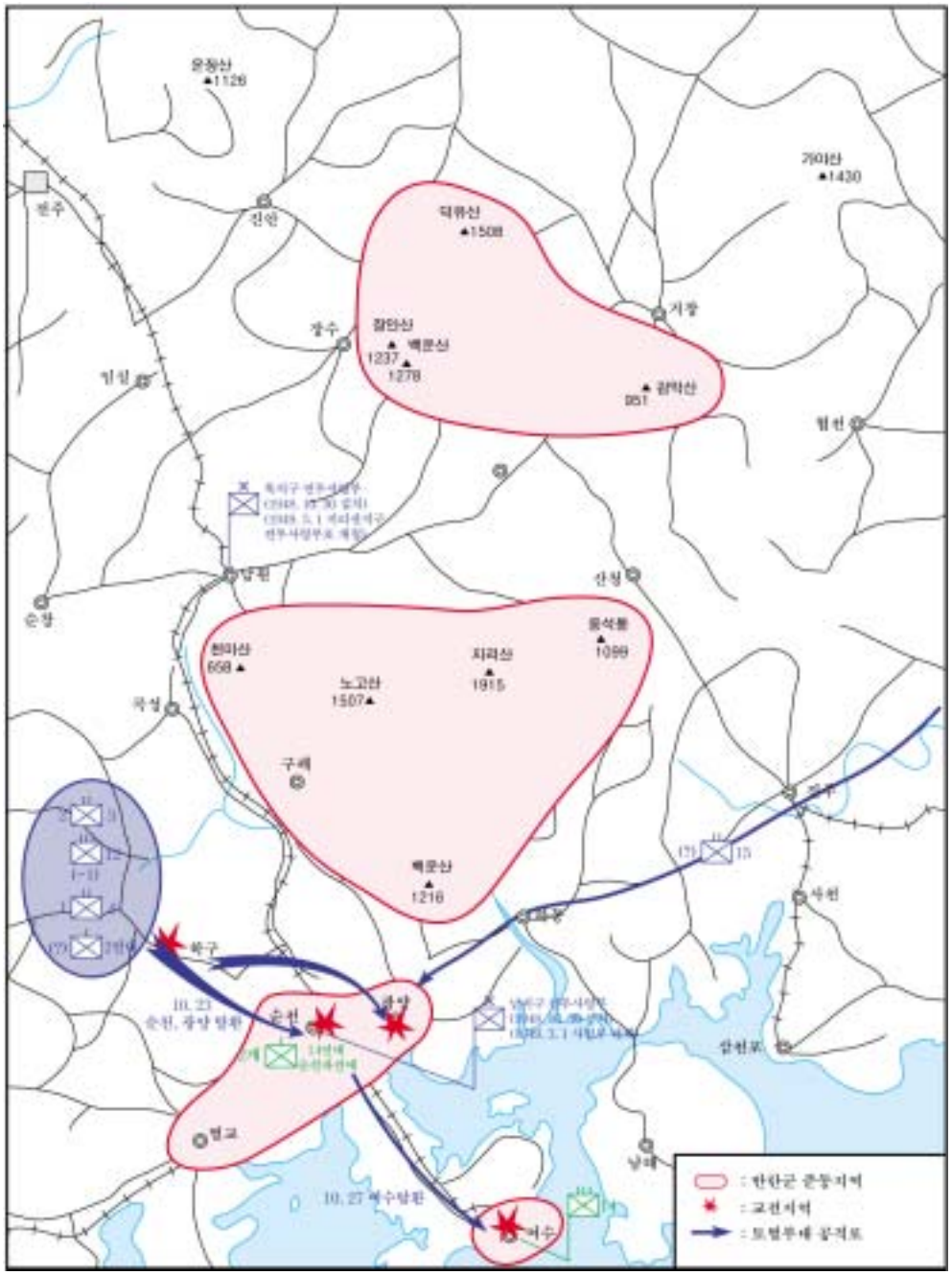
입했다. 그러나 선발 중대는 학구를 경유해 순천으로 진격하라는 부연대장의 명령과는 달리 보성과 벌교를 경유해 10 : 00에야 순천에 도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발 중대는 이미 하사관들의 반란에 의해 장교들이 피살되고 반란군과 합류한 상태였다.[147]

각 진압부대가 순천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은 반란군이 순천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였다. 진압작전은 순천에서 광주로 향하는 북상로(北上路)와 백운산・지리산으로 향하는 도주로(逃走路)를 차단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협공으로 여수반도 일대를 압박해 들어간다는 개념이었다. 진압부대 주력은 학구로 모여들었다. 학구는 화순 경유 광주, 남원, 하동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반군의 북상이 예상되는 지점이었다. 제4연대 1개 대대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제3연대의 1개 대대와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뒤를 이었다.[148]

순천 탈환작전은 학구 공방전으로 막이 올랐다. 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이 지휘하는 제3연대와 제12연대의 여단하사관교육대원, 조재미(趙在美) 대위가 지휘하는 제3연대 제2대대,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이 지휘하는 제4연대 1개 대대가 반란군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반란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조기 진압이 어려웠다. 이때 20일 군산에서 광주로 이동해 순천으로 향하던 제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白仁燁) 소령이 지휘하는 제12연대 예하 제2대대(대대장 김희준 대위)와 제3대대(대대장 이우성 대위)가 학구부근에서 진압군과 반란군의 공방전을 목격하고 하차해 합동공격을 벌려 반란군을 소탕하였다. 이 공격으로 반란군 일부가 투항하고 주력은 광양 방면으로 퇴각했다. 순천의 관문인 학구를 완전히 장악한 진압부대는 제4연대를 학구에 주둔시키고, 제3연대와 제12연대가 순천으로 향해 16 : 00경 순천 외곽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149]

순천 진공 계획은 순천과 광양으로 분리되는 삼가리(강청리)에서 동천강을 경계로 제12연대 제2대대가 봉화산 하단부를, 제3대대가 가곡동고지와 남봉산고지로 진출하고 제3연대의 제2대대가 조공으로 외곽고지를 차단하면서 축차적으로 전진을 한다는 것이었다.[150] 제3연대와 제12연대는 21일 날이 밝으면서 일제히 시가지 소탕전에 들어갔다. 또한 대전 주둔의 제2연대 제1대대(대대장 최종윤

<상황도 5-2> 국군의 호남지구 반란진압작전(1948. 10. 19~1948. 10. 30)



대위)가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의 지휘하에 20일 남원초등학교에 제2여단사령부를 설치하고 21일 소탕전에 참가했다. 약 2개 대대 병력으로 추산되던 반란군의 주력은 이미 시내를 빠져나간 상태였고 경찰 무기나 죽창으로 조잡하게 무장한 좌익 학생이나 각종 좌익단체 단원들의 저항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순천은 완전히 진압군 수중에 들어왔다.[151]

순천을 장악한 진압군은 제12연대의 2개 대대를 비롯해 제4연대의 1개 대대, 제3연대의 1개 대대, 제2연대의 1개 대대 등 총 5개 대대 규모였으며, 수색대의 장갑부대와 전투사령부가 포함되었다. 이들 진압군은 곳곳에서 게릴라식의 기습을 벌이는 좌익 무장 단원들의 기도를 차단하며 치안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152]

진압군은 우선 주민들을 남초등학교에 소집해 놓고 반란군 잔당과 좌익 부역자들을 색출했다. 3일간의 인공 기간 동안 순천에서 행해진 좌익계의 만행은 여수에서보다도 더 심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진압군이나 피해를 입은 우익계의 감정은 크게 격앙되어 있었다. 곳곳에서 즉결 처형이 잇따르고 한동안 살벌한 분위기가 순천을 지배했다.[153] 긴장의 분위기는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22일 밤 순천군청에 위치하던 전투사령부에서 헌병보초가 너무나 긴장하여 고양이가 담 넘어 가는 것을 보고 무장대로 착각해 사격을 가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경찰서와 군청 등에 배치된 우군간에 23일 04 : 00까지 사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154]

한편, 진압군의 본격적인 순천 공격이 있기 전에 순천을 빠져나간 반란군 주력은 광양을 거쳐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유격전 태세를 갖추었다. 이 같은 반란군의 전략은 남로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유격전 근거지를 물색하기 위해 산악 지형을 정찰하고 있던 이현상(李鉉相)은 반란의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순천에 들어가 홍순석을 총사령관, 김지회를 부사령관으로 하는 반란군 지휘 체계를 새로 갖추고 최대한 신속히 산악지역으로 이동하여 장기적인 무장투쟁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던 것이다.[155]

전투사령부는 순천을 완전히 회복시킨 후 여수탈환작전과 각 지역으로 분산된 반란군의 소탕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획득이 어려워

기동성 있는 작전을 계획하지 못한 채 단지 광양방면과 여수방면으로 진공한다는 것만을 결정했다. 우선 전투사령부는 22일 제4연대의 일부병력을 광양에 투입해 적정을 수집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날(22일) 정부에서는 여수와 순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告)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156]

최초의 광양 공격은 뜻밖에도 순천에 주둔하던 부대가 아니라 진주를 경유해 강동방면에서 반란군의 퇴로를 차단하던 마산 주둔의 제15연대 소속의 1개 소대였다. 당시 제15연대는 연대장 최남근(崔楠根) 중령이 지휘하는 1개 대대가 강동방면에서 반란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중 제1소대와 제4소대가 광양 공격에 차출되었다. 그러나 제4소대는 소대장을 비롯해 대원의 대부분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각자 부대를 이탈해 흩어져 버렸다.[157] 이에 문중섭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만이 23일 아침에 독자적으로 광양 공격을 개시했다.[158]

순천 방향에서는 23일 김희준 대위가 지휘하는 제12연대 제2대대가 차량을 이용해 광양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제12연대 제2대대는 광양에 먼저 진입한 문중섭 소위의 부대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교전은 문중섭 소위의 부대를 반란군으로 착각한 제12연대 제2대대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함으로써 벌어졌지만 곧이어 태극기와 철모의 백선(白線) 표식이 확인됨으로써 쌍방간의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여수탈환작전을 위해 곧바로 순천에 복귀했다. 그러나 24일 반란군들이 광양에 진입한 부대가 소수임을 알고 이를 역습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전투사령부에서는 제4연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을 지휘관으로 2개 중대를 광양에 투입하였다. 이후 광양은 완전히 진압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박기병 부대는 여수공격을 위해 26일 순천에 복귀하였다.[159]

광양 공격과 더불어 전투사령부에서는 24일 제1차 여수탈환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3연대의 1개 대대와 서울서 파견된 강필원(姜珌遠) 대위 지휘하의 장갑차 20대를 동원해 송호성 전투사령관이 진두지휘하여 여수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진압군은 여수 입구 장군봉(將軍峰) 부근에서 반란군들의 기습을 받고 급히 후퇴

했다. 여기서 반란군의 사격으로 제1호 장갑차에 타고 있던 송호성 사령관이 차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고 고막이 상해 순천으로 후송 당했다. 이날의 공격은 "반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수를 탈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창피냐"는 정부측의 채근과 송사령관의 개인적 공명심이 결합해 빚어진 무모한 작전이었다.[160]

제1차 여수 탈환 공격이 실패하자 전투사령부에서는 백운산방면의 반란군 주력을 추격하던 제12연대를 25일 순천으로 전진시켜 26일 아침 차량으로 여수방면에 투입하였다. 제2차 공격에는 해군의 충무공호를 비롯해 7척의 경비정이 동원되었으며, 부산 주둔 제5연대의 1개 대대병력의 여수 상륙작전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순천방면의 진압군 부대는 미평 방면에 집결해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주공이 되어 시가지 동측을 담당하고, 제3연대 1개 대대가 옹호부대로서 종고산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2연대의 일부병력이 제2여단군수참모인 함병선 소령의 지휘하에 예비대로서 해안방면을 경계하면서 시가지로 진격하도록 계획되었다.

한편, 진압군의 제1차 공격 이후 반란군의 주력은 24일 야음을 이용해 여수에서 탈출하기 시작하였고 25일에는 시민들도 앞으로 닥쳐올 반란군과 진압군간의 결전을 피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진압군은 26일 15 : 00에 구봉산, 장군봉, 종고산 등 외곽고지를 점령하고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기갑연대의 장갑차를 앞세워 시내로 돌입하였고 포위부대는 포위망을 축소시키면서 민가와 시민들을 수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에는 이미 반란군의 주력이 시내에서 빠져 나갔으며, 해상 탈출을 기도하던 선박들도 해군경비정의 봉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내에는 좌익계 학생들과 단체원들만이 날뛰고 있었을 뿐 조직적인 저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압군의 여수 시가지 소탕전은 27일 새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세진 중위가 지휘하는 장갑차 12대가 시가지에 돌입하였으며 제12연대와 제3연대, 제2연대의 각 대대가 소탕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산에서 해군 LST로 27일 여수 신항 앞바다에 도착한 제5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는 반란군의 사격으

로 부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제5연대 제1대대는 부두로부터 500m 떨어진 해상에서 81㎜ 박격포 2문으로 부두를 향해 공격하였다. 하지만 선상에서 조준기도 없는 박격포로 수십 발의 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아군 포격에 의해 제12연대 소속 제5중대장과 안성수 하사가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5연대 제1대대는 부두의 반란군들이 완전히 소탕된 이후에 무혈 상륙하여 제12연대의 후속 소탕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3연대 1개 대대가 종고산 방면에서 시가지 소탕전을 전개하였으며, 제4연대가 광양방면에서 급거 여수탈환작전에 참가하였다. 제4연대의 경우 박기병 소령이 여수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나 광주지역의 사태가 험악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광주로 복귀하고 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 소령이 여수지구 후방사령관이 되었다.[161]

반란 9일째인 27일 오후 여수는 완전히 진압군에 장악되었으나 그 상처는 의외로 컸다. 작전지휘체계와 통신망의 미비, 지휘능력과 전투기술의 미숙, 인접부대와의 협조 부재 등으로 포위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압부대는 각개 종대별(縱隊別)로 여수로 진입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수에 잔류하던 반란군은 진압군이 들어오기 전인 24일 밤에 이미 대부분의 병력이 시내를 빠져나가 김지회·홍순석 부대와 합류한 상태였다. 이러한 진압부대의 작전상 오류는

여수를 탈환하고 있는 진압군

반란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회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던 정부가 정치적인 돌파구로서 군사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조속한 시가지 점령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162] 이러한 조급한 작전은 시가지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상당수의 민간인 희생자들을 낳기도 했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좌익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 시민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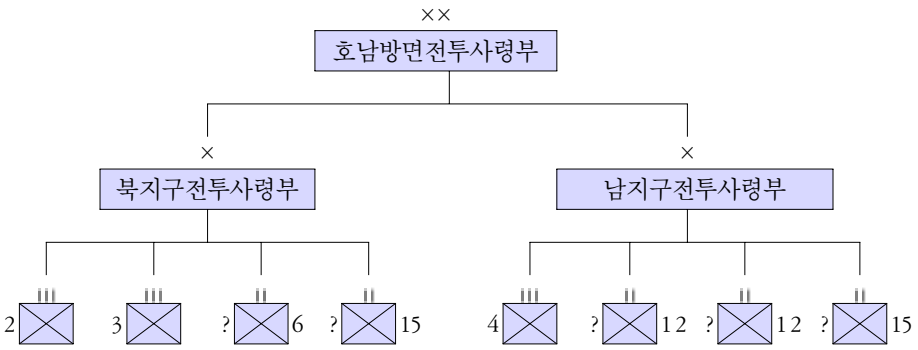
참모총장의 미 고문관이었던 하우스만이 회고하듯이 국군의 여순 탈환작전은 지나친 '속도전'이었다. 정부 수립 2개월에 겨우 군대 형태만 갖춘 한국군으로서는 여수·순천의 신속한 탈환이란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 여순 탈환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반란군들이 산속으로 스며들 퇴로를 열어줘 이후 정부의 오랜 골칫거리가 되는 지리산 게릴라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164]

4) 국군의 호남·지리산지구 토벌작전

1948년 10월 27일 진압군이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사건 9일만에 반란은 일단 진압되었지만 상당수의 반란군 잔여병력이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게릴라 활동을 위한 근거지를 형성하였다. 이에 육군총사령부는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군 토벌사령부 예하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전투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였다. 북지구전투사령부(北地區戰鬪司令部)는 남원에 사령부를 두고 제2여단장인 원용덕 대령의 지휘하에 제2연대와 제3연대, 그리고 제6연대의 1개 대대 및 제15연대의 1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지구전투사령부(南地區戰鬪司令部)는 순천에 사령부를 두고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의 지휘하에 제4연대와 제12연대의 2개 대대 및 제15연대의 1개 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당시 남·북지구 전투사령부의 전투지경선은 섬진강－구례－압록－삼지－담양－고창을 연하는 선에 결정되었다.[165]

지리산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개념은 소위 4F전술, 즉 '찾아서－고정시킨 후－싸워서－끝낸다(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는 것이었으며, 작전은 제12연대가

<표 5－14> 호남방면전투사령부 편성



주축이 되었다. 제12연대는 순천를 경유해 구례로 이동하여 반란군 주력인 김지회 부대를 포위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166] 그러나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제12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의 반란군 토벌작전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대 정비를 위해 11월 1일 군산 원대로 복귀하였다. 그 대신 군산에 잔류하던 제1대대(대대장 허암 대위)가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의 지휘하에 구례로 이동하여 반란군 토벌작전을 수행했다.[167]

그러나 11월 4일 북부지구사령관 원용덕 대령이 소집한 지휘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원으로 향하던 백인기 연대장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68] 당시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은 헌병 1개 분대와 함께 15 : 30에 구례에서 남원으로 출발하였는데, 16 : 00경 구례 동북방 15㎞ 지점에 위치한 산동지서 부근에서 반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헌병들이 죽거나 모두 도망쳐버려 연대장 혼자 남게 되자 백인기 중령은 한 농가에서 권총으로 자결하였다.[169] 백인기 중령 일행이 반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은 통신시설을 반란군들이 점거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남원사령부에서는 구례경찰서를 경유해서 제12연대에 작전회의 소집을 전달하였는데, 산동지서를 점령하고 있던 반군들이 이 사실을 도청했던 것이다.[170]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이 연대장 대리로서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부연대장이 구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제12연대는 김지회 부대로

백인기 제12연대장 등 전몰 장병의 영령 11위가 군산시에 있는 제12연대 본부로 옮겨지고 있다.

부터 3일 동안 피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장병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11월 8일 04 : 00경 김지회 부대 주력이 야음을 틈타 구례초등학교 앞산인 봉성산(170m)에 배치된 1개 중대(중대장 이동호 중위)를 기습한 후 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제12연대 본부를 포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반란군의 기습공격을 받자 부연대장은 약간 당황하였지만 반란군들의 사격술이 미숙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중화기중대장 송호림 중위로 하여금 81㎜ 박격포 8문으로 봉성산에 화력을 집중하게 하는 한편 각 소총중대를 진두지휘하여 반격을 감행했다. 반란군들은 박격포의 집중사격과 각 중대의 공격이 강화되자 05 : 00경 일제히 퇴각하였다. 제12연대의 강력한 반격작전으로 반란군은 40여명의 피해를 내고 도주하였다.[171]

구례 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김지회 부대는 지리산으로 퇴각하여 입산 후 전술을 장기항전으로 바꾸고 병력을 분산시켰다. 즉 일부는 백운산에 근거지를 정하였고, 일부는 태석봉 · 둔철산 · 정수산 · 감악산 일대에, 나머지는 달궁 · 장안산 · 덕유산 · 천마산 · 칠봉 · 삼도봉을 연하여 유격근거지를 형성하였다. 반란군들은 근거지를 전전하면서 구례, 곡성, 광양, 무주, 장수, 남원, 거창, 산청, 함양, 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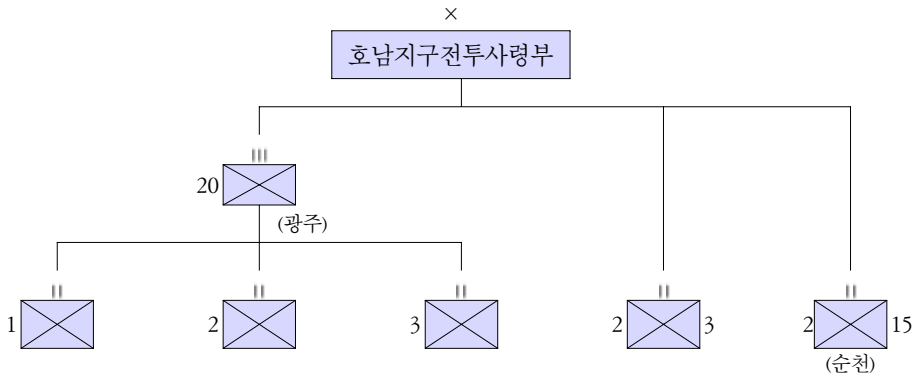
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의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전남·북과 경남 일부지역에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지역의 민간인들은 낮에는 대한민국 치하에 살고 밤에는 반란군들의 치하에서 생활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172]

1948년 10월 30일 남북지구로 분할하여 반란군 토벌작전을 지휘하던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는 1949년 3월 1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로 강화되었다. 광주에 사령부를 둔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에 원용덕 준장이 임명되었으며, 예하에 제20연대, 제15연대 1개 대대, 제3연대 1개 대대를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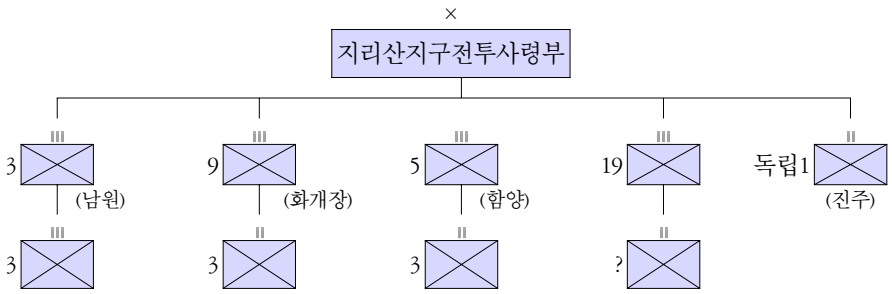
남원에 사령부를 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사령관에 정일권 준장이 임명되었으며, 예하에 제3연대 1개 대대, 제5연대 1개 대대, 제9연대 1개 대대, 제19연대 1개 대대, 독립유격대대를 배속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반란군 소탕작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제1단계로 사령부는 3월 초순 작전부대를 남원·구례·화개장·하동·진주·산청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1주일간에 걸쳐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산악지역의 추위를 피하거나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 야산지대로 하산한 반란군들을 지리산으로 쫓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야산 주변의 수색작전을 중심으로 전개

<표 5-15> 호남지구전투사령부 편성



<표 5－16>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편성



되었다. 제1단계 작전기간 중에는 소규모의 접전밖에 없었지만 화개장 전투에서 제9연대 제3대대가 김지회 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의 제2단계 작전은 1949년 3월 11일부터 전개한 작전으로 야산지대에 산재한 반란군들을 지리산 일대로 몰아넣은 다음 이들을 격멸한다는 작전개념이었다. 작전부대는 노고단·반야봉·천왕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맥의 남과 북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반란군의 은거지를 집중 수색하였다. 이에 따라 반란군들은 근거지를 버리고 분산하여 함양·안의·거창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진압부대는 이들을 추격해 북상하였으나 접촉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지었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과 참모일동

제3단계 작전은 3월 16일부터 실시되었다. 진압부대는 거창·함양 등지로 이동하여 반란군의 색출, 소탕하는데 중점을 둔 작전을 전개했다. 지리산 북동쪽 40㎞ 지점의 거창에 진압부대의 거점을 둔 제3연대 제3대대(대대장 한웅진 대위)는 매일같이 산청·안의·위천 방면에 병력을 투입하여 수색을 반복하였다. 대대장은 수시로 대대병력을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탐색활동을 계속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며, 타지역을 담당한 대대 또한 이와 엇비슷한 정황 속에서 작전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다.[173]

한편, 김지회와 홍순석은 3월 21일 지리산에 은거하던 게릴라 500여명을 이끌고 덕유산으로 이동하였다. 그 중의 일부병력이 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부락을 점령하였으며, 22일에는 목재운반 차량 2대를 강탈하였다. 이들 중 60명은 국군으로 가장하고 강탈한 트럭 2대를 이용해 24일 위천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거창으로 진출하기 위해 거창 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홍순석은 "우리는 국군 제3연대의 선발병력이다. 지금 덕유산의 반란군 토벌을 마치고 거창으로 이동 중에 있다. 현재 우리는 위천지서에 있는데 주력부대 500명이 거창에 들어갈 것이니 식사와 숙소를 1시간 안으로 준비하고, 차량 8대를 징발하여 20분 내로 위천에 보내라. 그리고 차량인솔은 경찰서장이 직접 하라"고 명령조로 요구하였다.

당시 거창에는 제3연대 제3대대 본부가 있었으나 산청 방면에서 수색작전을 펴고 있었다. 거창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 경위는 대대본부에 와서 통화 내용을 알려주고 위천지서에 있는 부대의 정체확인을 요청하였다. 때마침 작전을 마치고 귀대한 대대장(한웅진 대위)은 정보장교(김철순 중위)와 함께 거창경찰서로 가 위천지서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 통화 결과 대대장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반란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3대대 본부에는 경비 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출동이 불가능하여 경찰과 함께 거창 방어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제10중대가 수색작전을 마치고 복귀하자 대대장은 중대를 직접 지휘해 위천으로 출발했으나 반란군들은 이미 위천지서를 떠난 상태였다. 제3대대는 계속 반란군들을 추격해 우마차에 약탈품을 싣고 가는 반란군 일부를 발견

해 10여명을 사살하고 수명을 생포하였다. 이때 생포한 반란군을 심문한 결과 김지회, 홍순석 부대가 덕유산으로 입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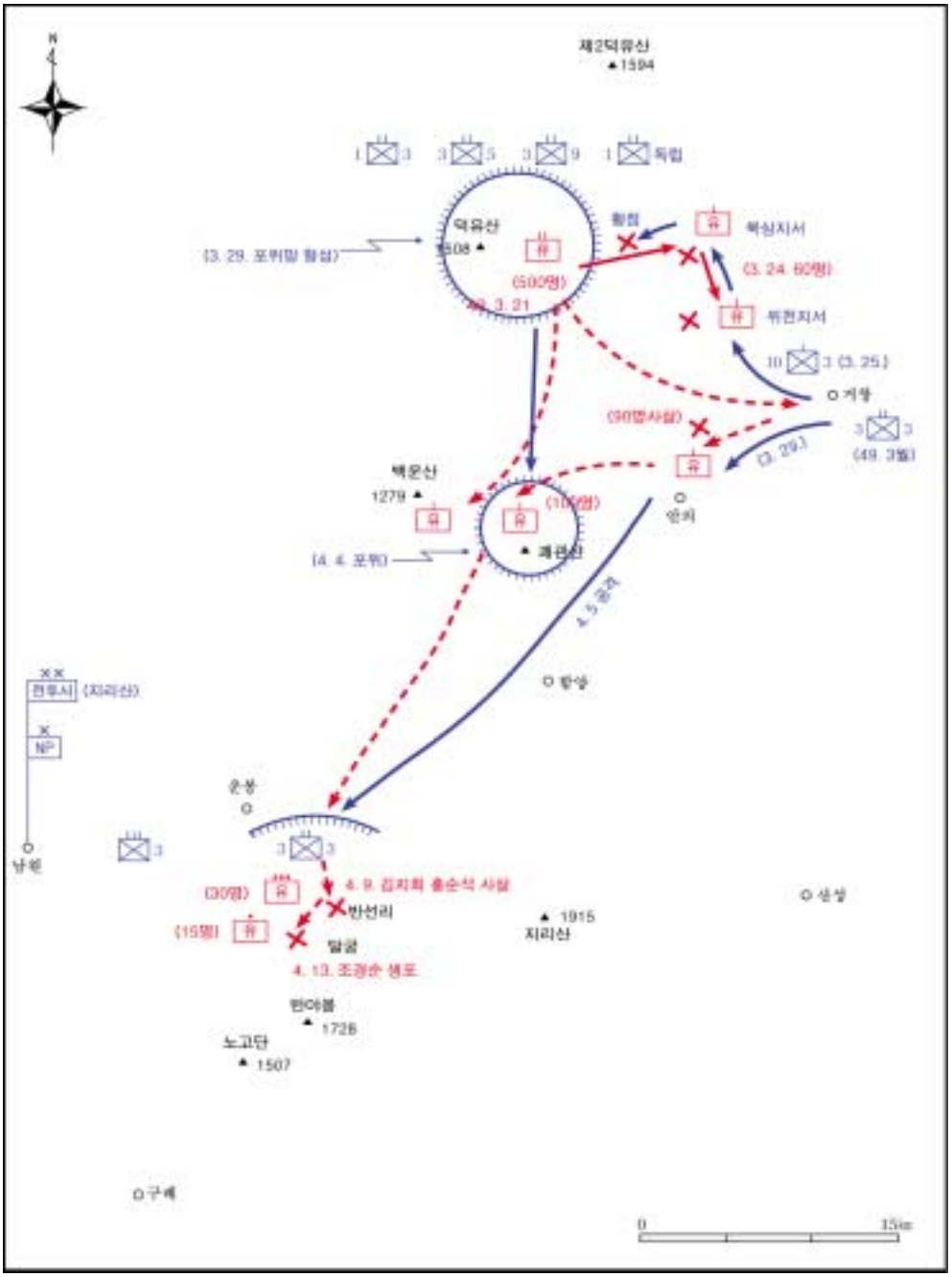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즉시 예하 전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군·경 합동으로 덕유산을 포위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포위작전에는 제3연대 제1대대, 제3대대, 제5연대 제3대대, 제9연대 제3대대, 그리고 독립제1대대(일명 서울유격대) 등 5개 대대와 경찰부대가 참가하였다. 3월 28일 밤 분산되어 있던 각 대대와 경찰부대는 함양에 집결하여 다음날 밤 덕유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30일 정일권 전투사령관은 작전부대를 진두지휘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란군들은 토벌작전이 시작된 후 2차에 걸쳐 거창을 습격하기도 했다. 전투사령부에서는 반란군의 거창 습격이 토벌부대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양동이며, 이들은 반드시 괘관산에서 잠시 휴식한 후 지리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75]

3월 29일 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덕유산을 포위하려고 부대를 배치하고 있을 때, 현지주민으로부터 안의 근방에 반란군들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받았다. 제3연대 제3대대는 안의에 출동하여 이들을 추격한 끝에 90여명을 사살하고 반란군 주력이 괘관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전투사령부는 지체없이 괘관산 포위를 계획하고 주력부대를 이동시켰다.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거창에서 함양으로 이동하여 괘관산에서 지리산으로 연결된 통로의 길목인 남원군 운봉면 피바위고개를 차단하였다.

4월 4일 토벌부대는 괘관산을 포위·압축하여 천정동에서 반란군의 숙영지에 박격포를 동원한 공격을 가했으며, 다음날에도 산발적인 공격을 가해 반란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 전투에서 지휘체계가 와해될 만큼 큰 타격을 받은 반란군들은 이후부터 중대·대대 단위의 작전행동을 하지 않고 소규모 병력으로 흩어져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괘관산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김지회·홍순석 일당이 지리산으로 잠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계속 추적해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176]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4월 9일 03 : 00에 반선리 부락 청년단장이 “지금 반

<상황도 5-3>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1~5. 9.)



김지회, 홍순석을 사살하고 상금을 받는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과 한웅진 소령

지리산지구전투부대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표창장

제16연대 제1대대의 4용사 합동 장례식(진주에서)

란군 30여명이 와서 술과 밥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대장이 직접 본부요원 60명과 함께 출동하여 반란군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홍순석을 비롯해 정치부장, 후방부장 등 17명이 사살되었으며, 반란군 문화부장 외 7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김지회는 부상을 당하여 도주하다가 반선리 부근에서 죽었다.[177]

1949년 4월 1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정일권 준장은 김지회 일당을 섬멸함으로써 서울로 복귀하는 동시에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동 지구사령관에 임명되어 계속 잔당의 토벌작전에 임하였다. 1949년 9월 28일에는 김백일 대령이 지휘권을 인수하여 잔당들을 거의 섬멸함으로써 1950년 1월 25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해체되었고 1950년 2월 5일에는 호남일대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호남 및 경남 일부지역에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이현상을 중심으로 한 인민유격대가 활동하면서 북한군의 남침을 기대하고 있었다.

2. 제6연대내 반란사건

1) 제1차 반란사건(1948. 11. 2)

대구 주둔 제6연대는 창설이래 5명의 연대장 가운데 김종석, 최남근 등 2명이 좌익 관련 장교였으며,[178] 사병들 또한 소위 '대구폭동사건(1946. 10. 1)'의 관련자들이 대거 도피처로 삼아 입대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1개 대대가 제주도 토벌부대로 출동하였고, 8월 14일에 추가로 350명이 출동함으로써 연대병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순 10·19사건이 발생하자 1개 대대가 다시 연대장 김종갑(金鍾甲) 중령 지휘하에 함양방면으로 반란군 진압차 출동함에 따라 연대에는 본부요원들만이 잔류하게 되었다. 연대본부는 부연대장 최경만(崔慶滿) 소령이 지휘하였고 헌병대장인 김진위(金振暐) 대위가 정보주임대리를 겸하고 있었다.[179]

당시 제6연대에는 남로당의 군조직책으로 연대인사계 곽종진(郭鍾振) 특무상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정보과 선임하사관 이정택(李正澤) 일등상사가 곽종진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곽종진과 이정택은 제14연대 반란의 '호응투쟁(呼應鬪爭)'으로 연대내의 반란을 계획하였다. 11월 2일 이정택 일등상사는 헌병대장인 김진위 대위에게 곽종진 특무상사가 남로당 세포 책임자임을 계획적으로 밀고(密告)하였다.[180] 이에 김진위 대위는 보좌관인 조장필(趙章弼) 소위에게 곽종진 상사를 헌병대로 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 00경 조장필 소위는 이정택 상사와 함께 짚차를 타고 연대본부 인사과에 도착해 곽종진 상사를 찾아 헌병대까지 임의동행(任意同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무렵 본부 사병들은 병기고 밖에서 기관총과 기타 무기들을 손질하고 있었다.[181]

곽종진 상사는 조장필 소위에게 모자를 쓰고 나올 테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하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조장필 소위는 곽상사가 나오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짚차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차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짚차에는 수송관(輸送官) 이갑(李甲) 소위와 이정택 상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야전점퍼에 45구경 권총을 숨기고 사무실에서 나온 곽종진 상사는 곧바로 배후에서 조장필 소위와 이갑 소위를 저격해 사살하였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이정택 상사가 "여·순 반란군들이 대구에 쳐들어 왔다"고 외치면서 본부 사병들을 탄약고 앞에 집합시켰다.[182]

사병들이 집합하자 이정택 상사는 평소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던 하사관 10여명을 불러내 권총으로 사살하였다. 이때 부연대장과 군수주임 등 장교들은 한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태를 목격하였다. 부연대장 최경만 소령은 단신으로 연대를 탈출해 연대 앞에 기지를 두고 있던 미 제1연대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시내에 위치한 연대헌병대에서는 반란 사실을 듣고 헌병대장 김진위 대위가 헌병 40여명을 이끌고 연대본부로 향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연대본부 100m 전방에 도달했을 때 제3대대 소속의 배상수 중사를 비롯해 10여명이 정문에 차를 세워놓고 기관총 사격을 가해 헌병 6명이 죽고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183]

반란군은 헌병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과 박격포 공격을 가한 후 3/4차량과

GMC차량 5대에 분승해 영문(營門)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때 최경만 소령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한 미군들이 기관총 사격을 가하자 반란군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반란군 중 상당수는 연대 안으로 되돌아갔지만 40~50명은 연대를 탈출해 김천방면으로 도주했다.[184] 이들 반란군들은 소수의 지방 좌익세력과 합류해 칠곡군(漆谷郡)의 동명(東明), 가산(加山) 지서를 습격하고 김천에 파견되어 김천-왜관의 철도경비를 맡고 있던 1개 중대와 합류를 시도했다. 그러나 김천파견대가 오히려 반란군을 공격함에 따라 이들은 그대로 퇴각해 팔공산(八公山)으로 들어갔다.[185]

한편 연대 안으로 되돌아갔던 반란 동조자들은 헌병대에 무장 해제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3일 반란 진압을 위해 청주 주둔 제7연대(연대장 심언봉 중령) 제2대대(대대장 박광혁 소령)가 대구에 투입되었다. 04 : 00에 대구에 도착한 제7연대 제2대대는 연대내 경비를 위해 2개 중대를 배치하고, 제6중대(중대장 김재강 중위)를 제6연대 김천파견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 김천으로 보냈다. 다소간의 충돌이 예상되었지만 김천파견대는 순순히 무장해제에 응하고 대원들 모두가 대구의 연대본부로 호송되었다.[186]

제1차 반란사건 이후 제6연대에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이루어졌다. 숙군은 부산의 제3여단 참모장 이영순(李永純) 중령의 지휘하에 법무장교 황필용(黃弼用) 조병일(趙炳日)·황철신(黃哲信), 헌병대위 김진위, 신철(申澈) 대위 등이 헌병 1개 소대를 동원해 이루어졌다. 헌병대는 400여명의 장병을 조사해 11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고 나머지는 유기형을 언도 받았다.[187]

2) 제2차 반란사건(1948. 12. 6)

제1차 사건을 계기로 연대본부와 제2, 제3대대는 숙군이 진행되었지만 지리산 지구에 출동중인 연대 하사관교육대와 제1대대의 2개 중대에는 아직 숙군 작업이 미치지 못했다. 이에 숙군당국(肅軍當局)에서는 토벌부대도 일단 복귀시켜 조사를 실시하고자 지리산지구의 제3연대 제3대대 병력으로 제1대대의 무장을 해제시켜 비무장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1대대가 무장에 불

응함으로써 계획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고, 타부대를 통한 무장해제를 계속 강행할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부에서는 제1대대장에게 실탄만을 회수해 복귀하도록 명령했다.[188]

제1대대장 차갑준 대위는 함양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실탄 회수를 지시했으나 대대내의 좌익분자들이 항명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189] 대대장은 즉시 경비통신을 이용해 실탄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연대본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대본부에서는 대대장 책임하에 복귀하라는 명령만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은 고령에 도착해 또다시 연대본부에 실탄회수가 이루어지 않았으니 연대 병력이 출동해 실력으로 회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대본부에서는 이마저 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190]

12월 6일 16 : 00에 복귀부대가 달성군(達城郡) 월배(月背) 부근의 성당지(城塘池)에 이르렀을 때 17대의 차량 중 후미차량 7대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대대장은 행군을 멈추게 한 후 후미차량(後尾車輛) 확인에 나섰다. 한참 후에 라이트를 켜고 후미차량이 서서히 달려왔는데, 이것이 반란의 신호였다. 대대 인사계 이동백(李東伯) 상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좌익계 병사들이 각기 흩어져 앞차에 승차한 조익학(趙翊鶴) 중위와 정주석(鄭柱錫) 소위를 사살하였다. 이어서 이동백 상사는 전원하차를 명령하고 탄약을 싣고 있던 제4번 차에 가서 실탄을 분배받으라고 하였다.[191]

함양을 출발하기 전에 이동백 상사는 복귀 후 숙군될 것을 예상하고 대대내 좌익계 사병들과 대구 근교 월배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192] 이동백 상사는 대원들에게 “우리는 연대에 돌아가면 모두 숙군된다. 우리는 죽으러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모두 나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이에 하사관교육대의 하사관 28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가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분산하여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연대부대로 복귀하였다.[193]

한편 반란 사실을 접한 연대본부에서는 헌병대와 특별경찰대 100여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1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 반란군을 추격하게 했다. 반란군 토벌부대는 12월 7일 02 : 00에 낙동강을 도하하는 반란군을 포착하고 사격을 가했으나

야음으로 인해 타격을 주지 못했다. 반란군들은 유기시체(遺棄屍體) 1구와 자동소총 1정을 버리고 달성군 하빈면(河濱面) 신동(新洞)을 거쳐 팔공산으로 들어갔다.[194]

3) 제3차 반란사건(1949. 1. 30.)

제3차 반란은 포항 교외 조천비행장 경비를 맡고 있던 제4중대(중대장 이영삼 중위)가 원대 복귀 명령을 받고 임무 교대를 위해 잔무를 정리하고 있던 1949년 1월 30일에 발생했다.[195]

제4중대 재무대(財務隊) 선임하사관이 주도한 제3차 반란은 연대본부 연락병이 극비로 되어 있던 중대 교체의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 1월 30일 저녁 재무대 선임하사관은 이영삼 중대장을 계획적으로 요정에 유인해 만취시킨 후 혼자 중대로 돌아와 좌익계 병사들을 규합해 재무관 겸 소대장인 백달현(白達鉉) 소위와 하사관 1명을 사살하였다. 이들 반란군은 포항지구의 일부 좌익세력과 제1차 반란시 도주한 병사들을 대내로 진입시켜 무기고를 점령하는 동시에 전 중대원에게 동조할 것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의 반란사건과 대대적인 숙군 선풍을 듣고 있던 대원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렇듯 중대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자 약 30명의 반란군은 부근의 산악지대로 달아났다.[196] 당시 반란군들은 중기관총 1정, 경기관총 5정, 다수의 소총과 실탄 500발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97]

3차에 걸친 반란사건을 거치면서 제6연대 장병들은 무조건 구속되어 한차례 이상씩의 조사를 받았으며 좌익 혐의자들은 숙군되었다. 숙군이 일단락되자 제6연대는 1949년 4월 15일 반란연대의 오명을 남기고 해체되어 제22연대로 개칭되었다.[198]

결론적으로 제6연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란사건은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의 여파로써 발생했으며, 2, 3차 반란은 본격화된 숙군 바람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좌익세력들의 탈출극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연대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반란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팔공산으로 입산한 반란

군들이 1946년 10월에 발생한 대구폭동 이후 일찌감치 산악 근거지를 마련했던 대구 지역 야산대와 합류해 팔공산 일대를 유격전 근거지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팔공산지구의 게릴라들은 세력면에서 지리산지구에 비해 보잘 것 없었지만 전략 요충지인 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199]

3. 숙군(肅軍)과 군의 재정비

1) 숙군의 배경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미군정청 군사국(軍事局) 차장 아고(Reamer Argo) 대령은 군사국 고문이었던 이응준의 신원조사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내의 파벌 경계와 정보기구의 활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각 연대별로 진행된 모병과정에서 좌익계 사설군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대거 입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0] 부산 제5연대의 경우, 국군준비대 부산지대 부위원장 오덕준(吳德俊)이 장교로 임관할 때 그의 부하들도 사병으로 입대하였으며,[201] 대구 제6연대에서는 국군준비대 경북지부 간부였던 하재팔(河在八)이 창설 요원으로 부임하면서 과거 그의 부하들도 함께 입대하였다.[202] 이밖에도 경찰의 수배나 탄압을 피해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1946년 '대구 10월 폭동' 이후 대구 제6연대에는 경비대를 은신처로 생각한 수배자들이 대거 입대했다.[203]

미군정은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국방경비대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그들에게 국내 치안확보에 전력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좌·우의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인들이 정부보다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충성하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조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군대 창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인들의 정치이념을 변형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과 불편부당'이 군대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204]

그러나 미군정의 '불편부당·정치적 중립'과는 상반되게 좌익 성향의 세력들이 국방경비대에 참여하였다. 제1연대 장교였던 이병주(李炳胄), 이상진(李尙振)을 비롯한 제1연대 대원들은 공산주의자 회합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인민당의 김세용(金世鎔)도 국방경비대내에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

1947년 9월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서 각종 사건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숙군을 전개했다. 이미 이전부터 미군 방첩대는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를 감시하고 있었다. 미군정 방첩대에서는 각 지역 지부에 담당 지역의 국방경비대와 남로당과의 관계를 감시하고, 국방경비대의 좌익 수(數)와 범위를 측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국방경비대에서 좌익 세력이 확대되면 좌익에 의한 소위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방경비대를 동원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205]

1947년 10월 송호성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은 군내의 사상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남조선 상태로 봐선 어느 기관에든지 그거 없는 데는 없을 줄 내 안단 말야. 경비대에라구 내 부인 못하지요. 허나 덮어놓고 그거라고 모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단 말야. 장삼이사(張三李四)하지 말구선 어디에 어떤 놈이라고 꼬집어보란 말야. 그렇지는 못하구서 그걸 보는 것은 사람을 그걸루 맨드는 거나 다름없단 말야."[206]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경비대내에서는 '공산주의자의 추방', 나아가 5·10총선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대대적인 군내 좌익 세력 척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숙군의 전개과정

1948년 6월 18일 제주도 주둔 제11연대 연대장 박진경 대령의 암살사건은 숙군의 단초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경비대에서는 전군 차원의 사상검열을 실시했다. 1948년 8월 16일자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번 주 동안에 전복행위의 혐의가 있는 국방경비대원들의 검거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부산 부근에서는 11명의 국방경비대 장교가 전복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석방될 것이다. 제10연대에서는 68명이 체포되었다. 제1연대는 지난주의 85명 이외에 4명이 더 체포되었고, 제15연대는 102명을 체포하였다. 다른 연대의 보고는 완료되지 않았다."[207] 이외에도 광주의 제4연대에서는 8월 15일 기념행사를 앞두고 불온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죄목으로 하사관들이 구속되었다.

당시 새로 취임한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장병들의 사상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역설하였다.[208]

숙군은 정부수립 직후 정부의 핵심 현안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빨랐다. 주한미대사는 미 국무성에 "9월 이래로 육군 정보국원들은 육군에서 공산주의자들로 의심되는 대략 1,600명을 체포하였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09] 또 1948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이범석 국방장관은 숙군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군은 사상·명령·계통 등 전부가 일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위반되는 군의 존재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는 공산분자가 군에 침입하여 단순한 청년 군인을 유혹하여 이에 감축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군 당국은 건전한 숙군을 위하여 정권 이양과 동시에 숙군을 단행하여 지금까지 5~600명에 가까운 장병의 불순분자를 면제한 것이다"[210]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숙군이 확대되자 임시군사고문단장은 이범석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복행위로 처벌된 군인들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군 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조사업무를 담당할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48년 7월 1일부로 통위부에서는 국방경비대 정보국에 김점곤(金點坤) 대위를 비롯한 총 24명을 발령하였다.[211] 그리고 주한 미군 제24군단 G-2에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하여 주한미군 방첩대의 임무를 계승할 군 방첩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9월 일군의 국군 장교와 사관후보생들에게 1개월의 특무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하라는 명령이 하달되

었다. 40명의 장교와 장교후보생들이 9월 20일 시작된 6주 과정의 특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212] 이들에게는 교육이 끝난 후 소속 부대로 돌아가서 각 부대의 방첩대 지부를 조직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213] 또한 이 시기에 국방경비대에서는 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채취를 실시했다. 미 군정청의 한 자료에 의하면, 1948년 8월 1일 이후 경찰의 협조아래 지문채취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9월 초순까지 국방경비대원 중 약 절반 가량에 대한 지문채취작업이 완료되었다.[214]

1948년 여순 10·19사건은 숙군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8년 10월 22일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거나 혹은 선동하는 분자에게 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대대적인 숙군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0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서 공작하여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분자들을 단호하게 숙청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1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숙군 문제에 대해 "우선 사상이 불순한 장병의 국군은 물론, 물질적으로 좌우되는 불순분자도 적발할 것"이라고 말하며, 숙군의 철저한 진행을 예고하였다.[215]

숙군의 필요성은 당시 행정부와 대립하고 있던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여순 10·19사건 직후 열린 국회 수습대책회의에서 이청천 의원은 국군이 공산주의자들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국방부 책임자들을 질책하며 군대내의 숙청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216]

여순 10·19사건 직후 육군에서는 대대적인 숙군을 전개하였다. 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백선엽 육군 정보국장은 송호성 총사령관의 참모장으로 진압작전에 참여하였다. 이때 광주의 제4연대에서 반란군에 합류하는 자가 나타나고, 다른 연대에도 토벌에 소극적인 자가 나타나자 백선엽 정보국장은 육군 정보국 소속의 조사반을 광주로 소환하여 숙군을 전개하였다. 빈철현(賓哲顯) 대위를 반장으로 한 조사반은 단기간에 약 1,000명을 조사하여 남로당 계열 150명을 적발하였다.[217]

이와는 별도로 11월 17일까지 제1여단사령부 관할하의 경기도 주둔 부대에서

불순분자로 약 600명이 검거되었으며, 11월 27일까지 숙군으로 약 100여명의 장교와 약 1,000여명의 병사가 구금 취조를 받았다.[218]

1949년 3월 3일 채병덕 참모총장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숙군이 일단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전한 사상과 우수한 장비임은 재언을 불필요한 바인데 과거 3년간 군정의 지도 불충분으로 공산분자의 잠입이 없지 않아 상당히 세포망이 조직됐었으나 여순반란 사건 이래 그 숙청에 착수하여 반란에 직접 참가한 자 이외의 장교 326명, 사병 1,170명, 합계 1,496명을 숙청하였다. 특히 이재복, 이용수, 김영식과 김종석, 최남근, 오일균 소령 등을 체포함에 따라 세포망이 완연히 드러났으므로 숙청은 완전하였다. 그러나 공산사상의 침입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도 없지 않을 것임에 비추어 본관은 남북통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의 관건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며 한편 미소양국의 세기적 알륵(謁勒)이 해결됨으로서 문제는 더욱 신속한 해결을 볼 것임을 부언한다."[219]

그러나 그 후에도 숙군은 계속되었다. 1949년 4월 7일 육군에서는 "좌익활동으로 의심되는 108명의 장교와 560명의 사병이 체포되지 않았고, 이 용의자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20] 특히, 1949년 5월 4~5일 제8연대 2개 대대의 월북사건 이후 숙군은 계속되었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국방군이 금후로는 여사한 반란이 없도록 숙군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을 취하겠다"[221]고 하여 숙군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3) 숙군의 결과

대대적인 숙군 작업은 1949년 7월에 일단 막을 내렸다. 이 시기까지 숙군의 결과 총 4,749명의 장병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군 병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 숙군 대상자의 처리는, 반란 주모자와 적극적인 활동자, 폭력·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좌익 경력은 있으나 소극적인 가담자들은 정상을 참작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재판 결과 90% 정도는 불명

예제대를 시키는 선에서 형을 면했고 나머지는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에 처해졌다.[222]

그런데 위와 같이 대대적인 숙군은 1949년 7월에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소규모의 숙군 작업은 계속 되었다. 1949년 8월 5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서울 주둔 부대에서는 총 163명(장교 28, 하사관 73, 사병 62)이 공산주의자로 체포·구금되었다. 1949년 9월 육군 기갑연대에서는 숙군 계획에 따라 6명의 장교를 체포하였다. 또한 1950년 2월 16일에는 1949년 9월이래 은밀한 수사의 결과로 군에 침투한 북한 간첩망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육군 58명, 공군 12명, 해군 5명 등 75명이 간첩으로 보고되어 이중 육군 49명과 공군 7명이 체포되었다.[223]

한편 숙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군내의 좌익 조직은 전군에 걸친 세포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과정은 난관이 많았다. 우선 명단에 나타난 계보에 의하여 당사자를 검거하고 이어서 연루자를 각 부대별로 색출 구속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사상적인 문제라 증거를 보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확보의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고문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동기생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숙군 대상자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224]

숙군의 총 지휘자였던 백선엽 정보국장이 회고하듯이 상부의 성화에 시달리며 시작된 숙군의 칼날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냈는지 분명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225]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대적인 숙군 작업의 결과 군내의 좌익 세력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한국전쟁시 국군의 성공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숙군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북한 유격대의 남파와 국군의 토벌작전

1. 남로당의 유격투쟁 목표

정부 수립 이후 남로당은 투쟁전술을 무장유격투쟁으로 전환하고 1949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남로당의 노선변화는 남한내의 각종 좌익사건을 계기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입법되고, 1949년 10월 남로당에 대한 불법화조치가 취해지면서 활동영역이 축소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226] 이 시기부터 남로당은 북로당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하위 부서간의 위치에 서게 되어 종전의 단독투쟁노선에서 점차 평양노선의 한 하급단위로서의 역할로 그 지위가 전락되어 갔다.[227]

이에 따라 남로당은 자신의 존립기반이 남한 정부를 약화시키고 북한으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남로당은 국군의 병력 분산을 통해 38선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제2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을 투쟁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북한 정권은 남로당의 혁명역량을 단지 보조적인 가치로 밖에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1948년 7월 '남북노동당연합중앙위원회'의 구성,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조국전선')의 창설, 1949년 7월 1일 남로당과 북로당의 '조선로동당'으로의 통합 등 일련의 기구 창설 및 통합을 통해 완전히 평양주도의 권력 체계가 확립되었다.[228] 이로써 대남(對南) 공작의 중심은 완전히 북으로 전이되어 갔다.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이후 대남투쟁노선의 일환으로 유격투쟁은 남로당계의 주요 투쟁수단이 되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소위 '평화통일노선'과 '무력통일노선'의 배합배치에 따른 조치였다.[229]

조국전선의 결성과 남·북 노동당의 합당 후인 1949년 7월초 남로당계는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여 정치투쟁의 최고 형태인 무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남로당계는 1949년 9월 25일을 기해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믿고 이에 대한 '호응투쟁'으로 소위 '7월 공세'와 '9월 공세'를 감행하였다. 남로당은 이 투쟁 과정에서 세포 중 열성 당원들을 무장시켜 유격 거점으로 입산하게 하였고 지방당의 조직을 군사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남한의 정권 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에 시달하기까지 하였으며, 도당의 일부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독립된 '지리산전구'를 설치하여 유격거점으로 개편하였다.[230] 또 각 도에는 1~2개의 '해방지구(解放地區)'를 설치하여 북한군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확보하도록 결정하고 북한정권에 무장투쟁을 위해 필요한 무기와 탄약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38선 접경인 오대산지구에 일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31]

이 시기 무력투쟁의 특징은 외견상 남·북 노동당의 합작 형태를 띠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남·북 노동당의 주도권 쟁탈전이 대단히 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북로당은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력통일, 즉 전쟁 역량의 축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무장투쟁을 단지 무력 통일 투쟁노선의 일익 또는 단순한 한 단계 정도로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로당은 남한 혁명 투쟁의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남·북 노동당간에는 외견상의 결속·협동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갈등·괴리 관계가 심화되었던 것이다.[232]

당시 남로당은 김삼룡, 이주하가 당 조직을 지도하던 이른바 '서울지도부'만이 남한에 존재할 뿐 박헌영을 비롯한 대부분의 당 수뇌들은 월북한 상태였다. 북한정권은 이들 월북한 남로당 수뇌부들을 권력에서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귀찮은 식객 정도로 취급해 멀리 해주에 집결시켜 놓았다.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박탈당한 남로당 계열의 불안, 불평과 초조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내의 남로당계가 자파(自派)의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은 남한에서 괄목할만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내의 남로당계는 남한에서의 투쟁성과가 바로 북한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투쟁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의 물리적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남로당은 북한정권이 남침전쟁을 결심하게 하기 위해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이미 남한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권력층에 납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장투쟁이었던 것이다.

결국 남로당은 남한내의 무장투쟁을 북로당계 세력과 동등 내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로당은 남한에서 희망이 없이 지루한 투쟁을 전개하던 유격대나 당원들에게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야 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결정적 시기'의 도래와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남로당은 현실적으로 당내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233]

2. 유격대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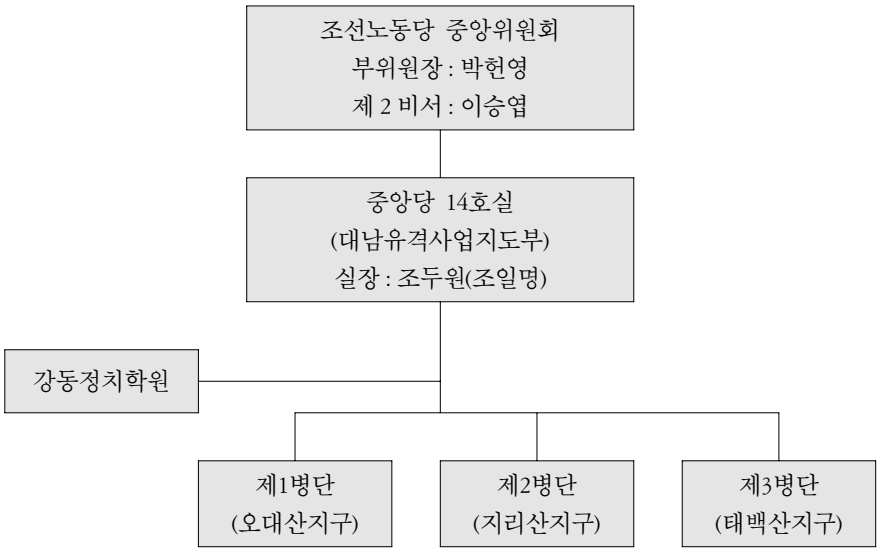
'인민유격대'는 남·북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결정한 후인 1949년 7월에 조직되었다. 인민유격대가 조직된 것은 이전까지 남한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유격투쟁'을 조직적이며 좀더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민유격대는 각 지구별로 3개 병단(兵團)이 편성되었는데, 오대산지구를 제1병단, 지리산지구를 제2병단, 태백산지구를 제3병단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하에 '중앙당 14호실'로 통칭하는 '대남유

격사업지도부(對南遊擊事業指導部)'가 설치되었다. 대남정치공작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헌영과 제2비서 이승엽(李承燁) 등이 전담하였다.[234]

이로써 산발적이었던 각 지역 단위 유격투쟁은 첫째 북로당의 주도하에, 둘째 남한내의 한정된 지역 투쟁으로부터 남북 투쟁 국면의 한 부분으로, 셋째 투쟁의 기본 성격이 남북정권간의 대결로 발전하여 갔다. 따라서 이 단계의 무장투쟁은 통일된 지도하에서 통합되고 통제된 조직 체계를 갖추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제 양상은 반드시 계통적이고 조직적인 투쟁만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특히 직업적 유격부대인 3개 병단과 지역 조직인 도당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격부대와 도당 소속 유격대간에는 반목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는 당내 파벌분쟁과 남·북 노동당간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격대의 지휘계통과 조직, 편성, 인적배치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235]

실제로 1949년 11월경부터 1950년 6월까지 '서울지도부', 유격병단, 도당간에는 통신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적절한 통합 지휘가 불가능하였다. 특히 북한에 있던

<표 5-17> 인민유격대 지휘체계



남로당 수뇌부와 남한의 남로당원들 사이에는 지역적인 장벽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휘는 남한 정세와 현지 감각이 완전히 무시된 채 하향일변도였다. 따라서 당초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그들의 유격투쟁은 산만하고 비조직적인 것이 되어 협동에 의한 통합된 성과나 정치와 군사의 배합과 상호협력의 상승효과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236]

이러한 지휘계통상의 문제점은 조직과 편성면에서도 나타났다. 남로당은 3개 병단을 중심으로 세 개의 유격전구(遊擊戰區)를 편성하는 방안 이외에 각 도당별로 무장대를 편성해 활동하도록 지시했다.[237] 1949년 7월 '조국전선'의 이른바 '평화통일선언서'를 전달받은 남로당 서울지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지시'를 하달하였다. "결정적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당은 정권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1~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238]

이 지시에 따라 각 도당에서는 기존의 '야산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해방지구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도당 유격대는 순군사적인 직업적 유격대와는 달리 당조직의 정치적 토대를 기반으로 책임지역 내에서 정치 우선 투쟁을 전개하는 반정치적(半政治的)·반군사적(半軍事的) 조직체였다. 만약 산악 거점의 병단과 야산 지대의 도당 유격대가 전자의 군사력과 후자의 정치적 조직력을 배합하여 융통성 있게 기동적인 협동 작전을 감행하였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상호협력 부족으로 인해 남한 전역에 대한 정군(政軍) 배합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39]

병단이나 도당유격대를 불문하고 이들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이른바 '해방지구'의 설치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해방지구' 건설은 유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목표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갖춘 해방지구를 설치하지 못했다. 비록 그들은 일부 산악지대를 거점화했지만 소수의 농가만이 산재하고 인구가 희박해 인적자원의 충당조차 어려웠다. 여

기에 국군과 경찰의 기동공간이 점차 신장됨에 따라 유격거점에 대한 공격이 수시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해방지구 건설의 꿈'은 점차 요원해져 갔다.[240]

한편, 남로당은 무장투쟁 단계에서 병단과 지방 유격대 이외에 도시의 당조직을 무장투쟁조직으로 개편하여 극한투쟁을 강행하였다. 1949년 9월 서울시 당원들은 6,000여개의 사제 수류탄까지 준비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폭동의 결과 "정치적으로 전당(全黨)의 85%의 비중과 권력을 가졌으며 조직적으로 전당의 60%의 세력을 갖고 있던 서울시당"의 약화와 붕괴를 초래하여 남로당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241]

남로당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무장투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 정권은 남로당에 대한 지원에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남로당에서 조직한 자생적 유격대의 역할보다 북한 지역에서 훈련되고 장비된 기성 무장부대의 남파에 보다 큰 의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유격대 남파와 토벌작전

북한은 소위 '민주기지론'의 차원에서 남한의 '적화(赤化)'를 위해 군사력 증강과 병행하여 유격대를 계획적으로 양성 남파하였다. 인민유격대의 양성은 1948년 1월에 설치된 강동정치학원에서 담당하였으며, 강동정치학원에서 양성된 유격대원들은 남파되기 직전 양양 인민유격대훈련소에서 재교육을 받았다.[242]

인민유격대는 여순 10·19사건으로 진압부대가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후방경비가 허술해지고 남한 사회가 혼란해지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인민유격대는 제1차로 약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양양－오대산지구로 침투하였다.[243] 이들은 산맥을 따라 평창(平昌)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泰岐山)까지 남하하였으나 국군토벌대에 의해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병력은 충청북도 제천방향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제1차 인민유격대 침투가 봉쇄되자 194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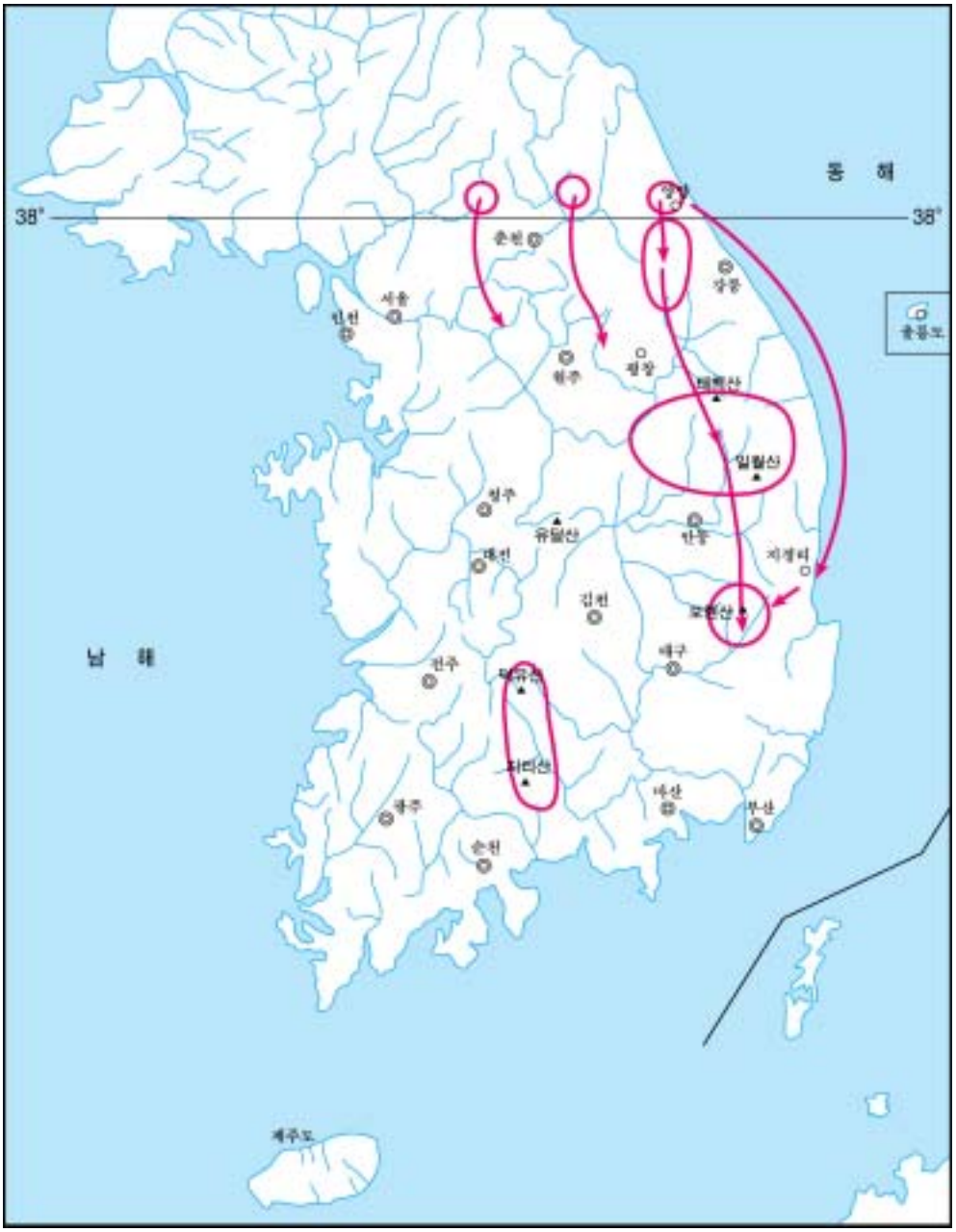
1일 약 400명의 유격대를 재차 오대산으로 침투시켰는데, 1차 침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섬멸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세번째로 약 200명의 유격대가 오대산까지 침투하였으나 토벌대에 쫓겨 사살되고 나머지 30여명만이 중봉산(中峰山)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북한은 3차에 걸친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4차로 김달삼(金達三) 부대 약 300명을 1949년 8월 4일 일월산(日月山)으로 침투시켰는데, 이 부대는 더 이상 진출할 수 없게 되자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경상북도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후 동해여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토벌되었다. 이후 철원지구에 근거지를 둔 유격대가 1949년 8월 12일 선발대 15명을 용문산까지 남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본대 40여명이 1949년 8월 15일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으로 침투하였으나 군경토벌대에 포착되어 20여명이 사살되고 나머지 병력은 도주하였다. 이렇게 계속 비정규군의 침투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제7차로 1949년 8월 17일 당시 강동정치학원장이던 이호제(李昊濟)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약 360명을 태백산으로 남파시켰다. 이들도 대부분 토벌되었으나 100여명이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여 경상북도 일원에서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1949년 9월 28일 약 50명의 유격대가 양양군 금옥치리(錦玉峙里)로 침투하였으나 국군에 의해 저지되어 북상 도주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유격대가 영일군 지경리로 해상 침투하여 보현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였다. 이후 유격대의 침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0차로 1950년 3월 28일 양양·인제·양구에서 대기 중이던 김상호, 김무현 부대 약 700명이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정예부대였으나 역시 토벌작전으로 소탕되었다.[244]

북한의 인민유격대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2,400명 가량이 침투하였으나 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에 의해 2,000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400여명의 유격대만이 잔존한 것으로 나타났다.[245] 미국은 1950년 3~4월간 국군의 게릴라 토벌작전을 성공적인 것으로

<상황도 5-4> 북한 인민유격대 남파경로(1948. 11~1950. 3)



접이식

<표 5-18> 북한의 인민유격대 남침 상황

구분	침투지역	침투 일시	병 력	활동상황 및 결과	비 고
제1차	양양-오대산지구	1948. 11. 14	180명	양양에 침투 오대산맥을 타고 평창 북쪽 30㎞ 지점의 태기산까지 남하. 대부분 소탕되고 나머지는 제천 방면으로 도주	강동정치학원 1차 수료생으로 구성
제2차	오대산지구	1949. 6. 1	약 400명	오대산으로 침투, 아군의 공격을 받고 대부분 섬멸됨. 나머지는 태백산으로 북상하던 지방 유격대와 합세,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	
제3차	오대산지구	1949. 7. 6	약 200명	대부분 섬멸 당하고 약 30명만이 중봉산 방면으로 도피	
제4차	일월산, 지경리	1949. 8. 4	김달삼 외 300명	김달삼부대 약 300명이 일월산으로 침투하였으나 전진이 좌절되자 지경리로 이동, 보현산 일대의 게릴라와 통합 유격전 전개	김달삼(제주도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제5차	철원지구-용문산	1949. 8. 12	선발대 15명	침투로 변경, 철원에 근거지를 두고 명지산 부근으로 침투기도, 선발대 15명이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까지 침투	
제6차	명지산-용문산	1949. 8. 15	약 40명	5차의 본대로서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까지 침투, 아군은 약 20명 사살, 나머지 약 20명은 매봉산을 거쳐 월북	
제7차	태백산-경북일대	1949. 9. 28	약 360명	이호제가 지휘하는 인민유격대가 태백산에 침투, 대부분 섬멸되고 약 100명만이 분산 도피 중 보현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	

구분	침투지역	침투 일시	병력	활동상황 및 결과	비고
제8차	금옥치리	1949. 9. 28	약 50명	북한군 38경비대의 엄호하에 침투, 대부분 섬멸당함	남에서 패주 월북한 일부 유격대의 재남파
제9차	경북 지경리 일대	1949. 11. 6	약 100명	해로로 침투 보현산부근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여 병력보충 및 세력확장을 기도하였으나 실패	
제10차	홍천지구 오대산 일대	1950. 3. 28	약 700명	김무현부대, 양양－양구－인제 부근서 대기중 침투, 강력한 화력과 무력으로 침공, 아군의 토벌작전은 1개월만에 김무현을 비롯하여 완전 소탕	

평가하였다. 이는 “지난 주말 국군은 3월 25일경 오대산 지역으로 침투한 600명 이상의 게릴라를 토벌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이틀간 게릴라 70명을 사살하고 지도급 인사 김무현 등을 포함해 24명을 체포하였다. 같은 기간 강릉지역에서 38도선을 넘어 침투한 대규모 부대도 격퇴하였으며, 남으로 침투해 온 600명 이상의 게릴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토벌되었다. 현재 38도선 북쪽에 500여명의 게릴라들이 주둔 중에 있다”고 평가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246]

그러나 국군은 게릴라 토벌작전에 전방사단의 일부와 후방의 3개 사단 등 총 4개 사단 규모와 경찰병력 일부를 투입하여 대비정규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38도선의 방어력과 후방경계가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247]

인민유격대의 남파는 북한군이 특히 강조한 배합전술(配合戰術)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배합전술은 주전선에서의 전투와 병행하여 후방지역에서 비정규전에 의한 또 다른 전투를 강요함으로써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적의 동원 및 증원을 방해하는 등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전의를 상실

하게 하고 적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정규군의 남침을 앞두고 제2전선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이 소탕됨으로써 본래 의도한 배합전술의 목표달성은 실패하였지만 국군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남침전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248]

제 4 절 38도선상의 국지 도발

1. 38도선 경비 상황

정부수립 초기 한반도의 국제환경은 냉전의 성격과 그 변화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남·북한의 갈등은 미·소의 후원하에 체제강화와 군사적인 경쟁양상을 띠게 되었다. 38도선 경계선에서 분쟁이 발발할 소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말로 거슬러 올라가 미·소군이 38도선 일대에 초소를 설치한 데 연유한다. 38도선 부근에 초소가 설치된 이후부터 미·소군이 38도선에서 철수하기까지의 분쟁은 대체로 미군과 소군, 미군과 북한의 38경비대, 남·북한 청년단체 대원들의 충돌이나, 경계초소를 사이에 둔 경찰간의 총격전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249]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38도선 접경지에서 약탈·납치·보복 등 이질적 체제에서 오는 대항의식과 경쟁심·적대감이 가열되자, 이에 국군은 북한의 게릴라 침투와 민간인의 월경을 봉쇄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였다.[250] 북쪽에서는 이미 38도선 경비를 맡고 있던 북한 주둔 소련군이 1948년 10월 12일을 전후하여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북한경비대가 그 경비를 인수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251] 이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직후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특별경비단을 38도선에 배치하여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였고,[252] 또 주한미군이 1948년 말까지 대부분 철수하면서 한국 군·경이 부분적으로 초소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253]

38도선 충돌은 1949년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부터 격화되었다. 대부분 경찰간의 소규모 충돌이었지만, 일부의 경우 보병대대 규모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254] 충돌이 격화된 것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이

었다.[255]

이 무렵 국군과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가 빈약하였기 때문에 전투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북한군의 경우 38도선에 2개의 경비여단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소총으로 무장하였으며 그나마 개인당 3～10발의 실탄을 지급하고 있었다.[256] 국군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38선 충돌과 관련해 소련 정부는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스티코프에게 한국의 38도선 경비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257]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게릴라 침투는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국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258]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단합해야 공산주의를 격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응준 참모총장은 '북에서 침습(侵襲)하면 정당방위로서 대항할 따름'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259] 당시 한국정부는 북한의 공세를 위기로써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문제로써 인식하는 등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의 반대입장에 있던 한국정부는 1949년 4월 12일 철군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주한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와 협의하여 군사원조를 통해 국군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철수에 동의하였다.[260] 그러나 4월 18일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와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등 외신을 통해 철수설이 국내에 알려지자 한국정부는 내부적으로 이에 동요되지 않도록 여론을 안정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철수 이후 힘의 불균형을 우려하여 집중적으로 미국에 안보공약을 요구하였다.[261] 이승만 대통령은 철수설 보도 직후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던 남침 위기감에 대해 만일 북한이 남침하면 강경한 입장으로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침위기설과 강경한 대북 입장이 집중적으로 표명되던 1949년 5월초 개성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였다. 특히 무초에 의하면, 개성전투는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고 평가될 만큼 크게 격화되었다.[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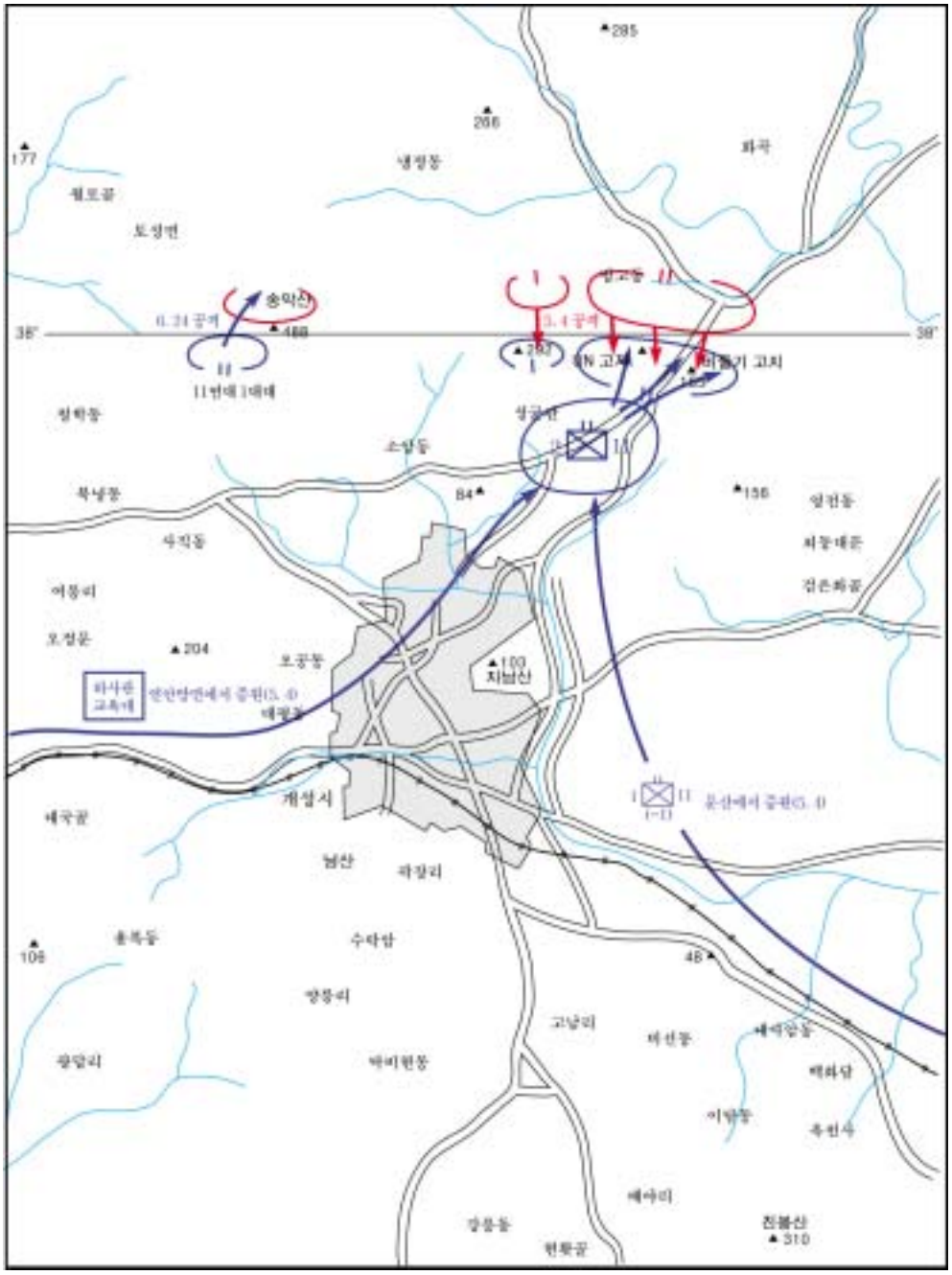
2. 개성-옹진지구

1) 개성지구

개성지구에서의 충돌은 송악산(488고지)과 292고지로 집중되었다. 송악산은 개성 시가지를 감제하는 주요 고지이며 292고지는 송악산의 동측을 감제하는 고지였다. 이 지역의 방어를 맡은 제11연대(최경록 중령)는 문산에 본부를 두고 제2대대(김종훈 대위)가 청단, 연안, 배천, 송악산 일대에 배치되어 진지구축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는 신병교육, 제3대대는 제5연대에 배속되어 파견 중에 있었다.

개성부근 전투는 1949년 5월 4일 개성 북서쪽의 292고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투의 발단은 국군이 북한군의 진전에 진지를 구축하자 북한군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대대는 이날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292고지뿐만 아니라 그 남쪽의 유엔고지, 비둘기고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개성이 위협에 처하자 제11연대장은 즉시 문산에서 교육 중인 제1대대의 제3, 제4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하는 동시에 연안방면으로 교육수료를 앞두고 행군훈련을 나간 하사관교육대(김영목 대위)를 개성으로 복귀시켜 반격태세를 준비하였다. 다음날 미명 연대장은 제2대대의 제7중대와 제1대대의 제3, 제4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켜 정면을 공격하도록 하고, 하사관교육대는 신관지서 후방에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문산의 제11연대에 배치되어 있던 포병중대(한광선 중위)의 105㎜포 5문과 영등포의 제6포병대대 15문, 57㎜ 대전차포 2개 중대가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 정면을 공격하던 제2대대는 급경사로 인한 지형의 불리로 많은 인명 손실을 내면서 11 : 30경 7부 능선에서 공격이 돈좌되었다. 더구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비둘기고지, 유엔고지, 292고지에는 유개 특화점 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명손실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타개책을 논의하였다. 북한군의 특화점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사관교육대로 특공대를 투입할 것을 결정하였다.[263]

<상황도 5-5> 개성지구 작전(1949. 5. 4~6. 24)



특공대로 자원한 용사들이 12 : 00 포병의 지원사격하에 비둘기고지로 분진하였다. 북한군이 각 토치카에서 기관총으로 치열한 사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목표지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각 특공대원들은 14 : 00 지정된 특화점으로 박격포탄을 들고 돌입하여 장렬하게 자폭함으로써 마침내 북한군의 특화점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후속한 하교대 병력이 14 : 00 비둘기고지를 탈환하였으며,[264] 뒤이어 292고지도 무난히 탈환하였다.

송악산 일대의 침공에 뒤이어 북한군은 배천지구에 대한 탐색전을 전개했다. 금천 방면에서 남하한 북한군 대대병력은 38선 남방 장대동(場垈洞) 후방의 210고지와 비봉산(202고지) 하단의 103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정찰공격을 가하였다.

5월 17일 북한군 1개 소대 병력이 103고지에서 봉수동(鳳樹洞)에 내습하자 이를 격퇴하였으나 18일에는 중대병력이 양정지서를 점령하고 19일에는 배천읍을 점령하였다. 당시 국군은 제11연대 제2대대의 제5중대(배덕진 중위)가 연안에, 제7중대(이긍하 대위)가 배천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군의 정찰공격이 있자 제7중대장은 제5중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연안지역 경비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대장(최경록 대령)의 만류에 부딪혀 제5중대의 출동이 잠시 보류되었다. 하지만 제5중대 배덕진 중대장은 사지에 빠져 있는 제7중대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1개 소대만을 연안에 잔류시킨 채 배천으로 급진하여 반격전에 가담하였다.[265]

한편 개성의 대대본부에서도 대대장 우병욱(禹炳旭) 소령이 직접 지휘하는 1개 중대가 도착하여 19일 북한군을 치악산(雉岳山) 북방으로 격퇴시켰다.

5·4전투와 배천전투 이후 개성 부근 전투는 크게 비화되기 시작하였다.[266] 6월 9일, 292고지의 국군은 북한군의 반격을 한 차례 물리쳤으나, 24일경 다시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이에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제11연대 제1대대에 개성 동북방의 송악산(488고지)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송악산은 국군이 방어하고 있는 475고지와 불과 200m 거리에 불과하며, 개성시내를 감제할 수 있는 고지였다. 공격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송악산의 특화점에서 사격하는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무릅쓰고 접근하여 동고지를 점령하는

<상황도 5-6> 배천지구 작전(1949. 5. 17~5. 19)

접이식

데 성공하였다. 이 고지의 공격전을 지원화력이 불가능하여 보병의 돌격전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북한군의 특화점은 105㎜포로는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부대의 희생도 클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1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공방전은 반복되어 결국 제11연대는 송악산의 하단 등대고지와 비둘기고지를 확보한 채 사격전을 반복하였다.[267]

개성전투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선제공격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월 하순에 열린 국군 지휘관회의에서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국가나 군을 모욕해서는 안되며 북괴가 38도선을 넘어 침범해오면 그것을 상회하는 무력과 빈도로 보복하여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보복할 것을 표명하였다.[268]

개성부근에서의 전투가 크게 확산되었던 것은 5월 4일~5일 발생한 국군 제8연대 제1대대(표무원 소령)·제2대대(강태무 소령) 등 2개 대대의 집단 월북사건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당시 좌익 혐의를 받고 있던 강·표 소령은 숙군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훈련을 위장하여 38도선으로 접근한 뒤 대대를 이끌고 월북하였다.[269] 이 무렵 국군 제8연대(김형일 중령)는 제6여단에 배속되어 본부를 춘천에 두고 있었으며, 제1대대가 춘천에, 제2대대가 홍천에, 제3대대가 제6여단 직할 유격대대로 개편되어 영월에 배치되어 남파된 북한유격대의 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5월 4일 야간행군 훈련차 13 : 00에 대대병력 455명이 춘천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였으며, 19 : 00 38교인 모진교를 건너 38도선을 넘어 북한경비대가 배치된 말고개에 이르렀다. 월북과정에서 제1중대장 김관식 중위는 표 소령을 따랐으며, 제2, 3중대장 최동섭, 한정희 중위는 월북에 반대하여 탈출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절반은 결사적으로 탈출하여 부대에 복귀하고 절반은 월북을 택하였다.[270]

한편 제2대대는 홍천 북방 상남지구에서 진지구축을 전개하고 있었다. 대대장 강태무 소령은 5월 4일 오후 3개 중대를 지휘(제7중대는 신병교육중대로 교육 중)

하여 상남에서 현리로 이동하였다. 강 소령은 38도선에서의 전투를 가장하여 부대를 이끌고 월북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북에 반대한 제8중대는 탈출하여 복귀하였고, 제5, 6중대도 50~60명이 탈출하였다.[271]

이러한 국군의 집단월북 사건은 북한에게는 대단한 호기가 온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일성이 북한인민군 창설 1주년 연설에서 국군은 여순 10·19사건, 강·표 월북사건, 해군함정 월북사건 등으로 거의 붕괴직전에 있다고 선전할 만큼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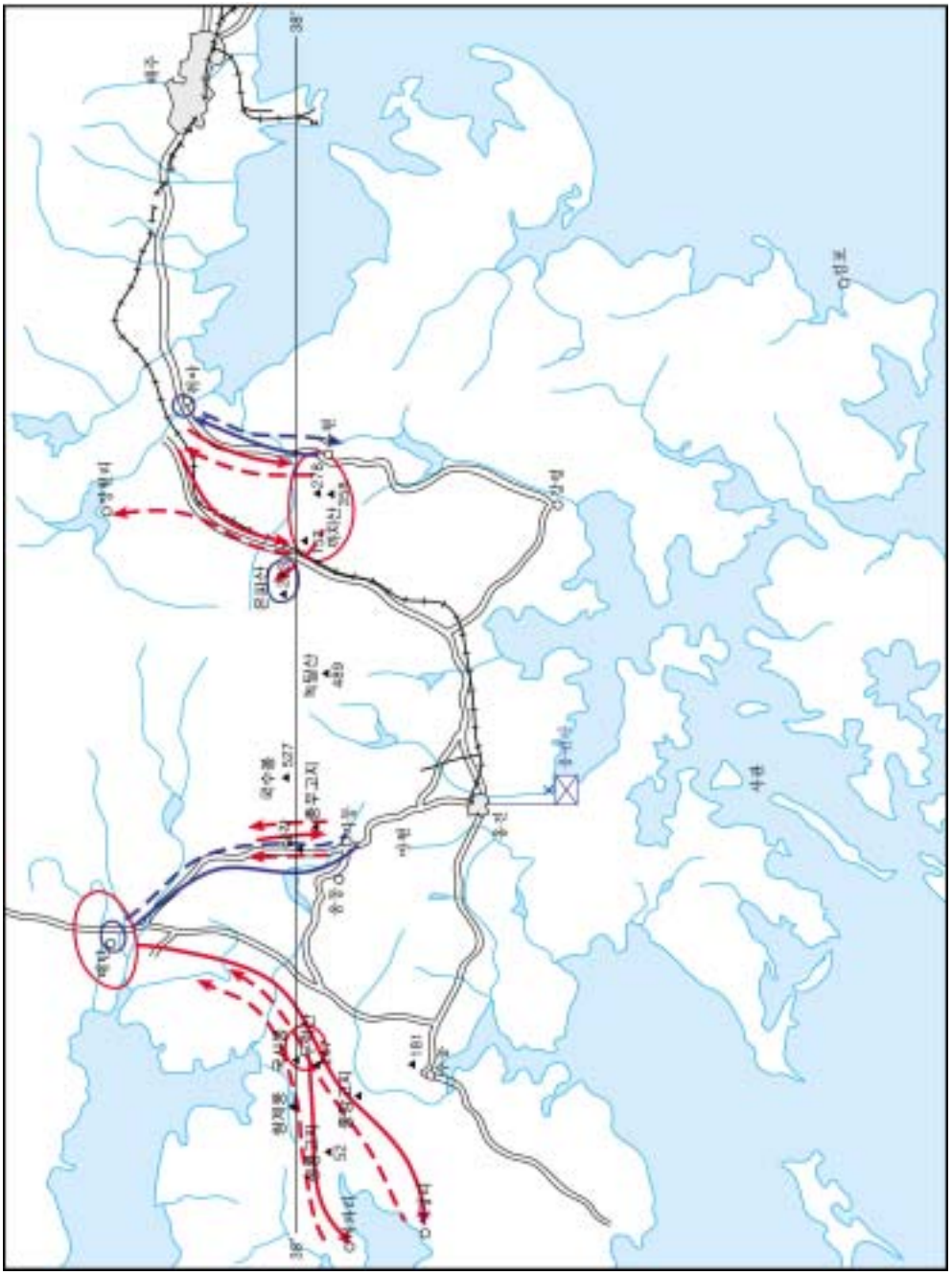
> "남조선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인민유격대와 경비대들에게서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부단한 동요로 와해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려수에서의 소위 국방군 제14련대가 폭동을 일으키고, 또 춘천대대와 홍천대대가 의거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부대에 편입되었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소위 해군 함정들도 의거하여 북반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매국노 리승만 도당들이 근로인민들의 자제들을 강제징모하여 군대에 편입시키고 동족상쟁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조선청년들이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을 위하여 동족상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거행동이 부단히 일어날 것입니다."[272]

강·표 소령은 월북 후 북한의 여러 지역의 환영집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혁명적 열기'를 강조하고 반 이승만 성토연설을 하였으며 월북자 모두는 북한군에 다시 편입되었다.[273] 강·표 월북사건은 북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이응준 참모총장이 경질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 옹진지구

개성전투는 다시 북한의 옹진지역 공격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옹진전투는 1949년 5월 21일 북한군의 국사봉(國師峰)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23일 국군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북한군의 공격은 당시 국군의 전술과 사기를 시험한 전력탐색전으로 평가되었다. 28일 북한군 1개 대대가 공격을 재개하자 국군 제12연대

<상황도 5-7> 옹진지구 작전(1949. 5. 21~1949. 11. 22)



(강영훈 대령) 2개 대대가 인천에서 선편으로 증원됨으로써 이 전투는 연대급 규모의 작전으로 크게 격화되었다. 강대령이 수동지구에서 국사봉과 두락산에 대한 탈환작전을 전개하였으므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31일에 38도선 이남 두락산을 점령한 북한군은 38이남 5㎞ 일대인 옹진군의 서경리·남교정·염불리·원초리·오남리 등 5개 리를 장악하였다.[274]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기마대까지 동원하였고, 6월 4일에는 2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화력, 장비면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6월 5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탈환하도록 하였는데,[275] 사령관에 전 제6여단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이 임명되었으며 참모장에는 제12연대장 강영훈(姜英勳) 대령이 보임되었다. 동시에 제12연대는 제3대대를 옹진지구에 증원하였고 제13연대 제2대대(고근홍 중령), 독립제1대대(일면 38부대, 김용주 소령), 57㎜ 대전차포 1개 중대(6문)와 제18연대 제1대대(한신 소령)를 동사령부에 배속시켰다.

한편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옹진공격에 대한 보복을 위해 1개 대대로 하여금 6월 7일 옹진 이북 10㎞ 태탄지역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독립제1대대는 제12연대의 일부 병력이 계명산(38이북 2,000m)을 점령 확보한 후에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단독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조는 전진하면서 04 : 00 목표지점 남방 500m까지 접근하였다. 북한군은 국군이 38도선 이북에 침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계가 소홀하였고 또한 침투부대는 북한군으로 가장함으로써 무난히 목표지역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유격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만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과 교전에 들어가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동부대는 전사자 22명 부상자 50여명의 피해를 입으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276]

한편 옹진지구전투사령부는 6월 10일까지 두락산을 제외한 옹진지역의 피탈된 대부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3일 두락산과 국사봉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두락산 탈환전에 투입되었던 제13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말미암아 동 고지의 탈환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12연대에 임무를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25일까지 남북간에는 은파산을 놓고 치열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제18

연대장 최석 중령은 까치산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은파산(283)을 확보하여야만 적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2대대(안문일 대위)로 하여금 은파산을 공격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동 부대는 은파산 동남방에 위치한 153고지를 미명에 공격 점령하여 옹진에 이르는 주도로와 철도선의 감제고지를 확보하고 은파산을 공격하여 무난히 점령하였다. 결국 옹진지역 전투는 7월 초 일단락되었으며, 총참모장이 유엔한국위원단과 함께 옹진을 순회한 후 전선에서의 우위권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277]

그러나 1949년 7월 하순 38도선 지역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투의 시발은 7월 20일 국군이 점령한 개성 북방 292고지를 북한군이 다시 공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북한군이 이 고지를 장악하자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25일 제11연대로 송악산과 292고지를 공격하여 재점령하였다.[278] 그러나 이틀 후 북한의 반격으로 다시 물러났으며, 8월초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거듭되었다.

이 전투는 1949년 8월 4일 북한군의 옹진공격으로 연이어 확대되었다. 개성지역 전투가 옹진지역 전투로 확산된 것은 지난 5월 전투와 거의 유사하였다. 북한군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국군 제18연대 2개 중대를 전멸시키고 은파산을 점령하였다.[279] 국군은 이 전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으며 방어작전에 실패한 제18연대장 최석 대령이 파직되었다.

북한의 옹진공격이 있던 8월 초, 채병덕 총참모장은 국민들의 내부적인 위기감과 동요를 고려하여 “전선에 이상이 없으며, 적진을 완전 봉쇄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280] 내부적으로는 옹진지구의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8월 5일 김백일 대령을 옹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재임명하고 제2연대장 함병선 중령에게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옹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김백일 대령은 국군 내에서 가장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지휘관 중의 하나였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저항이 종식되자 여기에 투입되었던 제2연대를 곧바로 옹진으로 파견하였다.

최고지휘부인 육군본부의 이러한 조치는 38도선 지역에서의 충돌이 곧바로 서울과 평양의 대결로 직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현지부대의 수준에서

가 아니라 직접 최고 군 수뇌부에서 결정하고 대응하는 수준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였다.[281] 육군본부의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게 약세를 보이지 않으려는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국군 옹진지구전투사령부는 다시 제2연대로 8일 대대적인 재반격을 가하여 옹진지역의 북한군을 몰아내고 원진지를 회복하였다.[282] 옹진지구사의 재투입으로 간신히 옹진지역의 전세를 만회하긴 하였지만 국군은 그 동안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다.

1949년 9~10월간 한국정부는 북한의 소위 '9월 공세설'에 대비해 38도선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조치 상황에 돌입했지만 소규모의 몇몇 교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49년 10월 14일 다시 2개 대대병력으로 옹진지구 은파산을 공격하여 유린하였다.[283] 북한의 의도는 은파산이 옹진-해주 일대의 주요한 감제고지이므로, 겨울에 우측전선과 관계유지를 위해 그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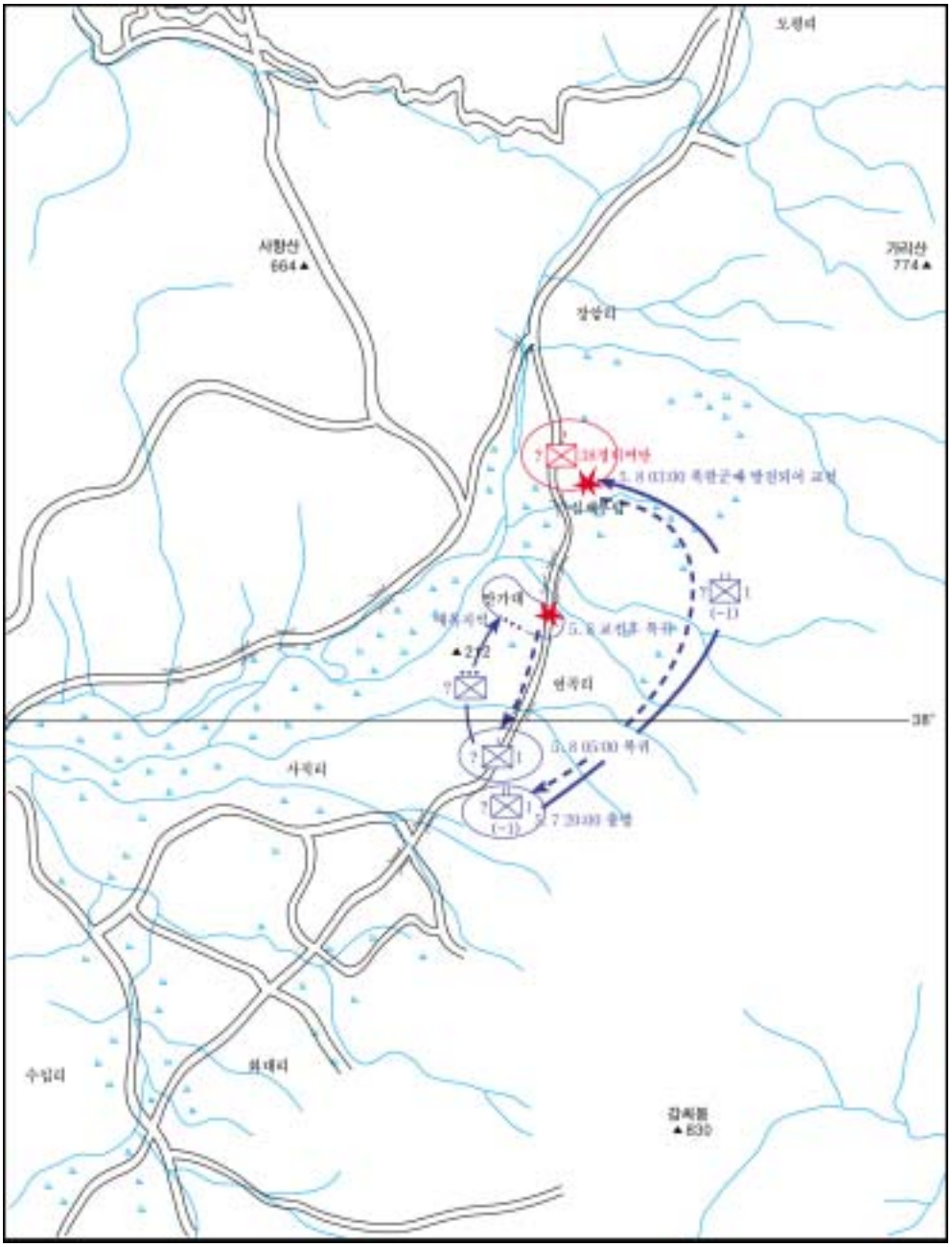
공격을 받은 다음날인 10월 15일 국군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가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였으며, 그들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은파산을 재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285] 은파산을 점령한 제2연대는 이후 소규모 전투와 포격전을 반복하다가 11월 22일 다시 북한의 공격을 받아 물러나게 되었다. 북한은 11월 말의 은파산 전투 이후 연초부터 격전지였던 국사봉, 292고지, 은파산 등 주요 고지를 모두 장악하였으며,[286] 이러한 상황은 전쟁발발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4. 의정부-춘천지구

1) 의정부지구

춘천 주둔 제8연대의 강·표 대위의 월북사건과 계속되는 북한군의 산발적 침공에 충격을 받은 제1연대(연대장 김종오 대령)는 기회만 있으면 북한군을 유인해

<상황도 5-8> 의정부 지구 작전(1949. 5. 7~5. 8)



섬멸하고자 했다. 연대장 김종오 대령은 정보국 소속의 연대 정보주임인 김창룡 대위와 논의 끝에 38선을 왕래하는 이중첩자에게 제1연대의 1개 중대가 1949년 5월 8일 월북하겠으니 엄호병력을 연곡 방면에 대기시켜 달라고 통첩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강·표 소령의 월북사건이 있던 직후라 첩자가 제공한 첩보를 그대로 믿고 평양의 정치보위부 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엄호부대를 배치하고 보도진이 대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김종오 대령은 1개 중대를 차량화하여 사직리방면에서 월북하는 양 기만하고 2개 중대는 국망봉 하단 능선을 우회 침투하여 심재부락에서 북한군의 엄호병력을 차단하고 1개 소대가 만가대 부근에 매복하여 기습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연대장의 단독 계획으로 상부에 건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5월 7일 20 : 00에 2개 중대는 경장비로 국망봉에 침투 우회하였는데 야간훈련의 미숙과 방향유지의 곤란으로 인해 얕게 우회하다가 03 : 00에 북한군에게 발견되어 교전이 전개되었다. 그 무렵 사직리에서는 1개 중대가 차량의 라이트를 명멸시키면서 월북하는 양 행동을 하고 있었고 북한군측에서도 신호를 하여 서로 무언의 협조가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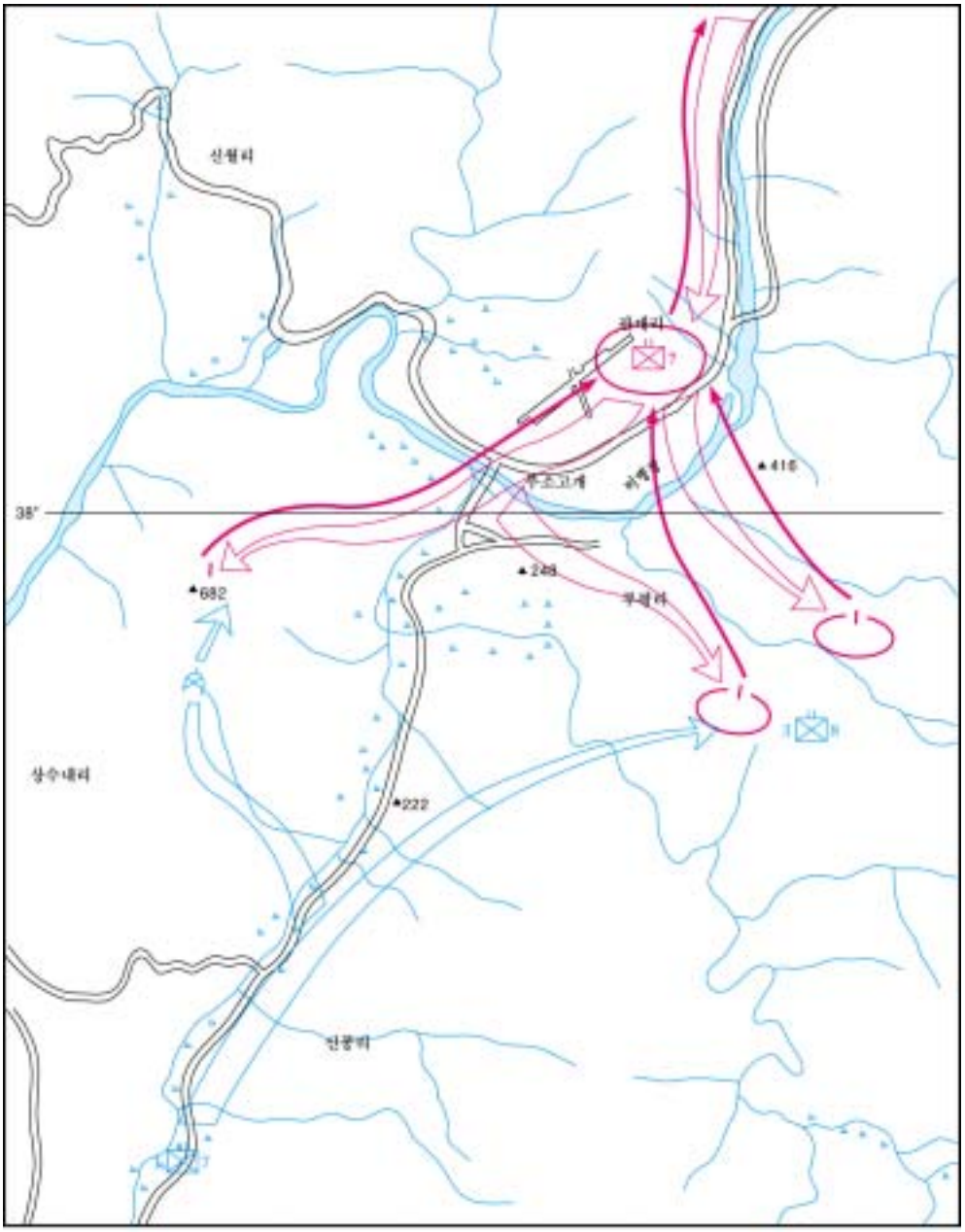
그러나 38선 북방 3㎞ 지점에서 교전이 전개됨으로써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연대장은 무전으로 침투부대에 후퇴명령을 내렸는데 3명이 전사하고 수명의 부상자를 내고서 05 : 00에 복귀하였다. 한편 만가대에 매복 중이던 1개 소대(최영두 소위)는 교신 불능으로 후퇴를 하지 못하고 보리밭에 음폐하고 있었는데 날이 밝기 시작하자 북한군측이 퇴각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위의 1개 소대는 최소위의 판단하에 200m 거리에서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여 북한군 1개 중대병력을 섬멸하였다. 이 공격으로 최소위의 소대는 104명을 사살하고 13명을 생포하였으며 총기 100여정, 기관총 1정을 노획하였다.[287]

2) 춘천지구

38경비 제1여단 오백룡 지휘하의 대대병력이 인제에서 남하하여 관대리에서

<상황도 5-9> 춘천지구 작전(1949. 8. 6~8. 21)



접이식

대기 중 1949년 8월 6일 02 : 00에 음양동 후방의 248고지 일대에 82㎜ 박격포의 집중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하여 왔다. 북한군은 구만리의 682고지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신남 및 262고지 일대에 제압사격을 가하였다.

춘천주둔의 제7연대는 홍천지구의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대위)를 출동시켜 반격케 하였는데 이곳에는 1개 소대와 경계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8월 7일 제1대대는 682고지를 공격 점령하였고 8일에는 704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704고지 우전방의 600고지는 7차에 걸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탈환하지 못하였다.

8월 15일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16일에는 원주주둔의 제8연대(이춘경 중령)가 출동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장 유재흥 대령의 직접 지휘하에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지형이 급경사라 실패를 거듭하였다. 20일에야 제3대대가 공격을 하여 제11중대(장석록 중위)의 박영극 소위의 소대가 600고지를 점령하였다.

고지전투에서 제7, 제8연대의 희생이 많았지만 적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은 옹진지구, 개성지구 등지에서의 침공과 병행하여 제7연대의 전력을 탐지하는 동시에 소양강을 연한 38선상의 감제고지를 확보하려고 기도하였으나 결국 15일만에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하였다.[288]

3. 강릉지구

북한의 38경비 제1여단 예하의 경비대대가 양양에 본부를 두고 38선 이남에 수시로 침공하여 주민의 농우 약탈, 우익 단원 납치, 부락 방화 등을 자행하였다. 동부지역을 방어하는 제10연대는 오대산방면의 소위 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정면 26㎞에 걸친 경비구역에는 간격이 많았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의 38경비대 1개 병력이 서림방면으로 침공하고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을 남하, 천교리로 침공하였다. 제10연대장 백남권 중

령은 연대에 배속된 105㎜ M3 곡사포 2문을 노재현 대위 지휘하에 38선에 급파하였다.

노대위는 인구리 북방의 해안선에서 기사문리의 적 해군파견대를 목표로 하여 포격을 가하였는데 포경이 없어서 직경조준으로 5발을 발사해 건물을 파괴하였다. 이 포격은 38이북지역에 대한 최초의 105㎜포격이었다.

이 포격사건을 탐지한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이를 중대시하고 직접 조사를 하여 육군본부 참모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 포병단장 장은산 중령이 정당방위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미 고문단측에서는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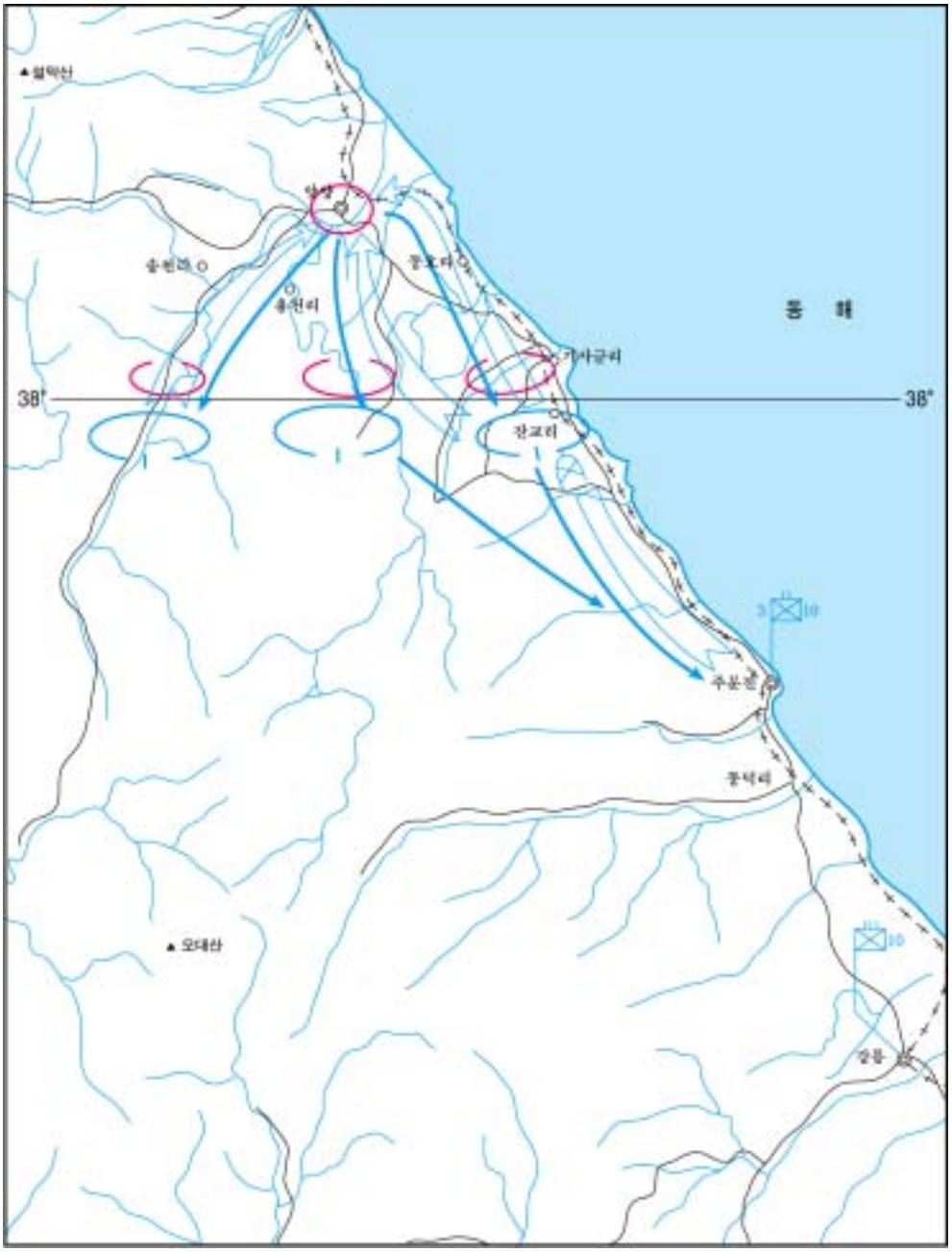
한편, 양양에는 인민유격대를 재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설치되어 이미 제3차에 걸쳐 유격대가 남파되었다. 강릉지구를 방어하고 있던 제10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양양의 소위 인민유격대 훈련소를 공격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분쇄하려고 결심하였다.

1949년 7월 3일 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주문진에 주둔하고 있는 제1대대장 고백규 소령을 불러 7월 4일 양양을 공격해 북한군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였다. 7월 4일 고백규 소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처음으로 보급된 M1소총을 장비하고 09 : 00시에 양양 남대천 부근의 8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양양에서 후퇴한 북한군은 어선에 분승하여 해상으로 침투하고 일부병력이 우회하여 협공을 가하여 왔다. 후퇴명령을 받지 못한 제1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서 분산하여 각개 후퇴함으로써 상당한 인원, 병기손실을 초래하였다.

양양 공격사건은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측에서 중대시하고 진상조사를 하여 사문(査問)에 회부하였다. 격론이 벌어진 끝에 남파 유격대 근거지를 파괴하고자 했다는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얻었지만 지휘체계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연대장이 해임되었다.[289]

<상황도 5－10> 강릉지구 작전(1949. 7. 3～7. 4)



접이식

주(註)

1) 陸軍本部,『創軍前史』, 1980, pp. 295-301.
2) 국군준비대가 해산된 이후 좌익세력은 창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국방경비대가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자 조직적인 침투 공작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적인 침투 이전에 이미 국방경비대내에는 경비대를 '정치적 피난처'로 삼아 개별적으로 입대한 좌익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김남식,『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p. 379).
3) 당 중앙 군사부에는 장교책(將校責)과 사병책(士兵責)이, 그 하부에 육군책(陸軍責)과 해군책(海軍責)이 있었다(金安一 증언. 金點坤,『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博英社, 1983, p. 174 재인용). 장교와 사병의 두 공작부서가 당 중앙 군사부내에 병립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교만을 당 중앙 군사부에서 직접 공작책임을 졌고, 사병은 도당에서 담당하였다(같은 책, p. 179).
4)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1948. 3. 3 ; 1948. 4. 8.
5) 김남식, 앞의 책, p. 380.
6) 金雲石,『北韓傀集戰術文獻集』, 韓國亞細亞反共聯盟, 1957, p. 468.
7) 김남식, 앞의 책, p. 379.
8) 金雲石, 앞의 책, p. 469.
9) 김점곤, 앞의 책, pp. 179~180.
10) 陸軍本部,『創軍前史』, p. 441.
11)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韓國戰秘史』上卷, 병학사, 1977, pp. 134-137.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1, 1967, p. 339.
13) 육군본부,『창군전사』, p. 445.
14)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앞의 책, p. 140.
15) 유홍수(군번 10039) 장군 면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면담자료 101.
16) 육군본부,『창군전사』, p. 443.
17) 하영수, 위재설은 후에 정일권의 주선으로 경비사관학교 제7기 특별로 입교하였다가 구보훈련에 대한 항의사건으로 퇴교 당했다.
18) 육군본부,『창군전사』, p. 446-454.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1, 1967, p. 423.
20) 육군본부,『창군전사』, pp. 461-462.
21) 육군본부, 위의 책, p. 462.
22) 佐佐木春隆 著・姜昶求 編譯, 앞의 책, p. 114.
23) 육군본부,『창군전사』, p. 462.
24) 육군본부, 위의 책, p. 471.
25) 육군본부, 위의 책, pp. 471-472.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1, pp. 405-406.
27) 김일광은 북경 輔仁大學 정경과 제2학년을 중퇴하고 21세 때에 中國保定軍官學校 간부훈련반을 졸업한 후 국민정부의 중앙군에 편입되어 1946년 3월까지 종군하였다. 동년 7월 귀국한 후 1947년 2월부터 조선통신사 사회부 기자로 종사하다가 동년 7월경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군 공작활동에 투신하였다.
28) 이혁기는 1944년 1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과 2학년 재학중 학병으로 끌려가 상등병으로

일본 名古屋 포병부대에 배속 중 동년 9월경 일시 귀향을 가장하고 탈출도피하였다가 광복과 동시에 여운형의 권고로 귀환장병대의 후신인 조선국군준비대를 조직하고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장관의 자생적 군사단체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거부하여 결국 1946년 1월 4일 미 CIC에 검거되어 법령 제28호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1947년 6월 미소공위의 건의로 실시된 정치범 석방시에 출옥하였다.

29) 大檢察廳 搜査局, 『左翼事件實錄』 第一卷, 1965, pp. 323-324.
30) 大檢察廳 搜査局, 위의 책, p. 324.
31) 大檢察廳 搜査局, 위의 책, pp. 328-331.
32) 大檢察廳 搜査局, 위의 책, pp. 340-342.
33) 大檢察廳 搜査局, 위의 책, p. 353.
34) 당시 광주 제4연대에는 제1대대장 조병건, 제2대대장에 오일균, 제1대대 부관 홍순석, 제1대대 정보관 김지회 등 좌익계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대장이던 이한림 소령은 조병건, 오일균 등이 자신을 축출하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서 타부대로 전출시켰다고 회고하였다(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pp. 94-95).
35) 육군본부, 『창군전사』, p. 388.
36) 이한림, 앞의 책, pp. 94-95.
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09-412.
38)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1993, p. 48.
39)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봄호, 1991, 역사비평사, pp. 192-193.
40) 濟州道, 『濟州道誌』 第2卷, 1993, p. 49.
41) 예를 들어 서귀면 건준위원장인 오용국, 치안대장 강성건, 훈련부장 한천일, 한림면 건준 산업부의 양병직 등이 이탈하였다. 한천일과 강성건은 이후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에서 활동하게 되며, 오용국과 양병직은 1948년 5·10선거에 출마하였다(김동만, 앞의 논문, p. 200).
42) 10월 말 미군지휘관이 제주도내 치안대 간부들을 소집하여 일본군의 물자매각이나 소각행위 등을 치안대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전라남도 미 군정청 정보국장이었던 그란트 미드(E. Grant Meade)가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유일한 정당인 동시에 유일한 정부였다"고 회고하듯이(그란트 미드/안종철 역, 『주한미군정연구』, 공동체, 1993, p. 241), 인민위원회의 세력이 워낙 커 미군정부대인 제59군정중대가 독자적인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였다(申相俊, 『濟州四三事件』上卷, 韓國福祉行政硏究所, 2000, p. 315).
43) 金奉鉉·金民株,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p. 17. 文國柱, 『濟州島の四·三鬪爭』, 『朝鮮社會主義運動史事典』, 東京, 評論社. 조선공산당은 1945년 9월 12일 서울에서 박헌영이 중심이 되어 재건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일제하 사회주의운동 경험을 가진 인물들의 주도하에 서울보다 3개월 늦은 12월 9일에 결성되었다.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등 3개 좌익 정당이 통합하여 남조선노동당이 되자, 당시 제주도의 유일한 좌익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 제주도위원회도 1946년 12월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44) 鄭錫均, 『新資料에 의한 4·3事件의 實際』, 『軍史』 第45號,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2002, p. 7.
45) 濟州道, 『濟州道誌』 上卷, 1982, p. 439.
46) 미 CIC는 당시 제주도 우익진영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의 우익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독립당 제주도지부는 조직도 빈약하고 자금도 충분하지 못하다. 각 당은 섬

전체에 단지 1,000명의 당원이 있을 뿐이다. 두 당은 좌익분자들의 심한 반대로 정치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89, 1947. 3. 26).

47)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p. 地7.

48) 제주도의 농업 종사자는 전체 주민의 약 85%에 해당하였으며, 주요 농업 생산물은 맥류였다. 쌀의 경우 광복 이후에도 생산량이 줄지 않았지만 전체 농산물 중 3%에 불과했다. 따라서 맥류가 제주도의 주식이었다(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 pp. 地4-5, 201-202).

49) 1946년 2월 1일 미 군정은 경제전반에 걸친 '통제'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식량문제의 경우 그 해결 방안으로 곡물 수집과 배급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 골자는 미곡(일명 秋穀)이나 하곡(夏穀)의 생산량을 미리 예상하여 설정해 놓고 예상 생산량 중 일정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출케 하고, 공출한 곡물을 가지고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리 예상한 생산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실제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집가격이 실제 시장에서의 시장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미곡수집에 응하고 난 후 식량이 부족한 농민은 수집가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출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곡물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하였다(신상준, 앞의 책, pp. 462-463).

50) 조선은행조사부, 앞의 책, p. Ⅰ-5 ; 地3. 당시 남한의 실업자 평균비율은 5.5%였다.

51) 1945년 12월 19일자 미 제6사단 일일정보보고서에서 천연두가 발병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1946년 중반에는 콜레라까지 만연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62, 1945. 12. 19 ; No. 241, 1946. 6. 16).

52) Hq. USAFIK, 『Procession and Evacuation』,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Ⅰ, Chapter Ⅶ. 제59군정중대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미 제24군수사령부 소속의 제749야전포병대대 분견대가 파견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전술부대로써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주된 임무였다. 미 제749야전포병대대 분견대는 1945년 10월 22일 제주도에 도착해 11월 29일 제주도를 떠났다. 미 제749야전포병대대 후속부대로 미 제6사단 제20연대 소속의 제51야전포병대대 분견대가 11월 10일에 진주하였다(『The 6th Division Joins the Corp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d in Korea』, Part Ⅰ, Chapter Ⅵ).

53) 제주도(濟州島)는 1946년 8월 1일을 기해 군정 법령 제94호에 따라 2개 군(郡), 1개 읍(邑), 12개 면(面)으로 구성된 도(道)로 승격되었다(內務部治安局, 『美軍政法令集』, 1956, pp. 162-163).

54) Hq. USAMGIK, Appointment No. 113, 1946. 11. 13 ; Appointment No. 107, 1946. 9. 12.

55) 1947년 2월 15일부로 제주도지사에는 박경훈이, 수석민정관에는 스타우트 소령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러나 박경훈 도지사는 1947년 '3·1사건' 당시 경찰 발포에 의한 人命死傷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월 12일 해임되었으며, 후임으로 4월 10일에 유해진이 새로운 도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수석민정관에는 1947년 4월 2일 스타우트의 후임으로 베로스(Russel D. Barros) 중령이, 1947년 12월 3일에 베로스 후임으로 맨스필드(Mansfield) 중령이 각각 부임하였다(신상준, 앞의 책, pp. 378-383).

5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26, 1945. 10. 5. ; GHQ, CINCFE,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18, 1947. 3.

57) 濟州道, 『濟州道誌』 下卷, 1993, p. 68.

58) 『獨立新報』, 1947. 2. 4, 2. 9. 김남식, 『남로당연구 Ⅰ』, 돌베개, 1984, pp. 275-276 재인용.

59) 『3·1鬪爭敎訓 살리자』, 『獨立新報』, 1947. 3. 1, 김남식, 위의 책, p. 276 재인용.

60)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의 서한, 『3·1운동기념투쟁의 방침』,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pp. 161-164.

61) 제주도경찰청, 『제주경찰사』, 2000, p. 681.

62) 제주도경찰청, 위의 책, p. 681.
63) 『한성일보』, 1947. 3. 4, 4. 5.
64) 『濟州新報』, 1947. 2. 26.
65) 제주도경찰청, 앞의 책, p. 682.
66) 『3·1 記念行事의 眞相報告(布告令 違反 嫌疑者 金完培 押收品 第23號)』, 제주도경찰청, 위의 책, p. 684. 당시 김완배(金完培)는 민청 조천면 의장이었다.
67) 제주도경찰청, 위의 책, pp. 683-684 ; 『남조선노동당 제주읍위원회가 각 야체이카에게 보낸 서한』, 1947. 3. 7.
68) Hq. 6th Inf Div, G-2 Perodic Report, No. 474, 1947. 3. 2. ;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7, 1947. 3. 6 ; 같은 문서, No. 79, 1947. 3. 20.
69) 『남조선노동당 제주읍위원회가 삼양 1구 각 야체이카에게 보낸 서한』, 1947. 3. 5. ; 『남조선노동당 제주도위원회 명의의 전단』, 1947. 3. 5.
70)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각 면위원회 읍위 각 야체이카 앞으로 보낸 서한』, 1947. 3. 7.
71) 『獨立新報』 1947. 4. 5.
72) 제주도경찰청, 앞의 책, p. 689-699.
73) 제주도경찰청, 위의 책, p. 691-692.
74)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 1984, p. 37.
75) 『1948년 7월 1일자 브라운대령 보고서』, WEEKA, 1948. 7. 17.
76) 제주도경찰청, 앞의 책, p. 694.
77) 고재우, 앞의 책, p. 26 ; 高文昇, 『제주사람들의 설움』, 신아문화사, 1991, p. 318. 미 CIC도 한국과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 산간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Hq. USAFIK, CIC, *Weekly Information Bulletin*, No. 16, 1947. 8. 7).
78) 정석균, 앞의 논문, pp. 27-28.
79)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4, 1988, pp. 201-207.
80) 고재우(당시 제주경찰서 근무) 소장 자료. 정석균, 앞의 논문, p. 23 재인용.
81) 1948. 4. 21. 경찰이 수거한 인민해방군 포고령 삐라.
82) 『제주신보』, 1948. 4. 8.
83) 김남식, 앞의 책, p. 373.
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 1945~1960』, 1988, pp. 29-30.
85)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모슬포(구 일본군 비행장 막사)에서 창설되었으며, 초대 연대장에 장창국(張昌國) 부위가 임명되었다가 이치업 소령을 거쳐 3대 연대장으로 김익렬 중령이 부임했다. 4·3사건 발생 당시 제9연대의 병력 보유 수준은 1개 대대규모 밖에 되지 않았다.
86) 白善燁,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p. 116.
87) 김남식, 앞의 책, p. 373.
88) 백선엽, 앞의 책, p. 116.
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p. 54.
90) 백선엽, 앞의 책, p. 117.
9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54.
92) 『서울신문』, 1948. 8. 7.
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58.
94) 백선엽, 앞의 책, p. 118.
95) 백선엽, 위의 책, p. 119.

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58.
97) 김남식, 앞의 책, p. 374.
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58. 제11연대의 복귀 전인 7월 18일 타도(他道)에서 제주도로 증원된 경찰병력 2,000여명이 원대 복귀하였다.
9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p. 250.
100) 김남식, 앞의 책, pp. 374-375.
101) 정석균, 앞의 논문, pp. 38-41.
1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p. 62-63.
10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2.
104) 『조선일보』, 1948. 10. 20.
10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3.
106) 제9연대가 제2연대로 교체될 즈음 제9연대는 '이제 공비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으며, 미 군사고문단장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송요찬 제9연대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이덕구는 건재해 있었고 다소 무리한 소개작전으로 인해 민심의 이반이 일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나친 장담이었다(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32).
107) 『대통령령 제43호』, 1948. 12. 31.
108)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3.
109) 백선엽, 앞의 책, p. 132.
110)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4.
111) 백선엽, 앞의 책, pp. 133-134.
112)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4.
113)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위의 책, p. 255.
1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p. 68 ;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36.
115)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55.
11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위의 책, p. 256.
117)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 제1부, 1953, pp. 21-2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662.
118) 전남일보사, 『광복30년』, 1975, p. 18. 제14연대의 기간이 된 제4연대 1개 대대의 대대장 안영길(安永吉) 대위도 좌익계로서 후에 숙군(肅軍)의 대상이 되었다.
11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3. 3, 4. 8.
120)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 조직부 과장이었던 박춘석(朴春錫)의 증언.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학사, p. 104 재인용.
121) 金點坤, 『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博英社, 1983, p. 195.
122)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p. 105.
123) 이태, 『여수병란』 (상), 청산, 1994, pp. 157-158.
12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19일 아침 연대장 박승훈 중령은 출항과 관련한 행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17 : 00~19 : 00 출동부대 환송회, 21 : 00 영문(營門) 출발, 22 : 00 출항.
125) 이태, 앞의 책, pp. 161-162.
1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127) 백선엽,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p. 151.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2.

129) 제1대대 작전교육관 전용인(田溶寅) 소위의 증언.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53 재인용.
1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3-454.
131) 반란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지회는 사병 당원들에게 자신이 남로당원이며, 지리산에 가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였지만 사병 당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당시 김지회의 신분을 확인해 준 사람은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었다. 이현상은 10월 21일~22일 사이 순천의 반란군 지휘본부에 나타나 김지회 등 중앙당 파견 장교들을 찾았다. 그러나 김지회와 홍순석 이외에 남로당원 장교들은 이미 반란 주도 하사관들에 의해 사살된 뒤였다. 이현상은 사건 발생에 대해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인 유격전을 위해 반란군을 인근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이태, 앞의 책, pp. 250-251; 김점곤, 앞의 책, p. 197; 백선엽, 앞의 책, p. 169).
132) 당시 병사들과 경찰간의 알력은 곳곳에서 소규모 유혈 충돌로 번질 정도로 극심했다. 14연대에서도 9월 말경 구례에서 휴가병과 경찰의 충돌 사건으로 연대 사병들의 반경 감정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133)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155-156.
134)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비평사, 1991, p. 255.
135)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62.
136) 김계유, 앞의 글, p. 255.
137) 벡선엽, 앞의 책, p. 16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5.
138) 김계유, 앞의 글, pp. 256-261. 여수인민위원회가 내세운 혁명과업 6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위원회가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셋째, 대한민국 분쇄를 맹세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한다. 다섯째, 경찰관·친일파·모리간상배·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민족청년당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단한다. 여섯째, 무상몰수·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139) 김계유, 위의 글, pp. 262-263.
140) 백선엽, 앞의 책, p. 166.
1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6-457.
142) 백선엽, 앞의 책, p. 168.
143) 백선엽, 위의 책, p. 168.
144) 구례와 보성은 반란군이 도착하기 전에 지방 좌익세력에 의해 경찰서가 점령되었다.
145) 백선엽, 『군과 나』, 대륙출판사, 1989, p. 340 ;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164-165.
146)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995, p. 17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59. 진압작전사령부의 편성은 전투사령관 송호성 준장,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 비행대대장 김정렬(L형연락기 10대) 대위, 수색대장 강필원(장갑차) 대위, 제4연대(3개 대대) 연대장 이성가 중령, 제3연대(2개 대대) 연대장 함준호 중령, 제6연대(1개 대대) 연대장 김종갑 중령, 제15연대(1개 대대) 연대장 최남근 중령, 제12연대(3개 대대) 연대장 백인기 중령 등이었다.
1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58-459.
148)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72.
1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62.
150) 제2연대는 20일 수색대의 장갑부대가 남원에 도착하여 장갑부대와 함께 순천 진공작전에 참여했다.
1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62-463.

1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64.
153)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180-181.
1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464.
155)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69.
156) 『서울신문』, 1948. 10. 23.
157) 당시 제4소대장은 부하들에게 "소대장은 소대를 위한 소대장이기 때문에 좌우익을 논하지 않는다. 소대장은 너희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대원들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전에 동참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제4소대가 광양읍 약 200m 앞까지 도달했을 때 소대원은 4~5명밖에 남지 않았다. 제4소대는 광양 공격을 포기하고 소대장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15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65.
1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466.
160)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85.
1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66-471.
162) 당시 정부에서는 여수·순천이 탈환되기 전에 이미 점령하였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작전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김점곤, 앞의 책, p. 199).
163)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186-187.
164)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p. 179.
1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 77.
166) 하우스만 저/정일화 역, 앞의 책, p. 184. 전투사령부에서는 구례를 출발하여 화엄사, 노고단, 심원, 와울리, 삼정리, 신흥을 거쳐 화개장으로 빠져 나오는 작전을 3일간에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작전에는 제3, 제4, 제5, 제15연대가 외곽지대를 포위하고 제12연대의 2개 대대가 타격부대로 선정이 되었다.
167) 10월 29일 제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은 제2대대(대대장 김희준)와 제3대대(대대장 이우성)를 지휘하여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향하였다. 와울리에서 하루를 숙영하고 31일에는 삼정리를 경유하여 11월 1일에 화개장으로 빠져 나왔지만 반란군의 행적을 포착하는 데는 실패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74-475).
168) 10월 30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는 남부, 북부로 구분하여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을 남부지구사령관에, 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을 북부지구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169) 백인기 대령은 전라북도 전주출신으로서 학병으로 출정하여 일본 육군방공학교를 거쳐 광복 후 귀국하여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3월 23일에 참위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제3연대 대대장을 거쳐 1948년 5월 1일 군산에서 창설된 제12연대의 초대연대장으로 보직되었고, 자결 당시 25세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p. 476).
17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77.
1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p. 78-79.
172)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186-187.
1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워회, 『대비정규전사』, pp. 80-84.
17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79-480.
1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p. 87-88.
1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88-89.
1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81-482.
178) 1946년 2월 18일 창설된 제6대는 김영환(金英煥)－최남근(崔楠根)－김종석(金鍾碩)－심언봉(沈彦

俸)－최남근(崔楠根)－김종갑(金鍾甲) 등이 연대장을 맡았으며, 좌익계로 분류되는 최남근과 김종석이 약 20개월간 부대를 지휘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pp. 349-351).

17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19. 나머지 1개 대대 또한 2개 중대 병력이 포항, 영천, 김천 등지의 지역 경비를 위해 파견되어 있던 상태였다.

180) 김남식, 『남로당연구』, 1984, p. 390; 육군본부, 『창군전사』, pp. 520-521.

181) 육군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19.

182)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948. 12. 8.

183)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22.

184)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198.

185)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22. 팔공산으로 입산한 곽종진과 이정택은 그 후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게릴라 토벌작전 때에 사살되었다.

186) 김천파견대의 무장해제 당시 중대장 안경준(安慶峻) 중위는 겁을 먹고 도망갔다가 후에 자수하였다. 또한 김천파견대와 더불어 영천파견대도 무장 해제되었다. 그 후 제7연대 제2대대는 부산 주둔 제5연대 1개 대대(대대장 배정호 대위)가 대구로 증원되자 임무를 제5연대에 인계하고 청주로 복귀하였다(육군본부, 『창군전사』, p. 522).

187) 『국제신문』, 1948. 11. 6.

188) 당시 제6연대 제1대대(2개 중대)와 하사관교육대는 대대장 차갑준(車甲俊) 대위 지휘하에 지리산 함양방면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p. 534).

189) 대부분의 병사들은 실탄을 반납하였지만 일부 좌익계 병사들이 실탄 반납을 거부함으로써 대대 내의 분위기는 살벌해지고 장교들의 통솔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190) 육군본부정보참모부, 『공비연혁』, p. 221.

191)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34.

192) 이동백 상사를 비롯한 좌익계 사병들이 월배를 반란지로 택한 것은 대구 출신으로 지리에 밝았다는 점과 거사 후 팔공산으로 입산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19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492-493.

194) 『세계일보』, 1948. 12. 8 ;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24.

195)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201. 제4중대의 임무교대는 숙군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차 제3중대와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196)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26. 이 사건으로 중대장 이영삼 중위를 비롯해 장교들이 대구로 소환되어 개인 심사를 받았다. 이영삼 중위는 지휘책임으로 파면되었다.

197) 『수산경제신문』, 1949. 1. 31.

19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494.

199) 백선엽, 『실록 지리산』, pp. 201-202.

2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265-266. 숙군에 관해서는 노영기, 『육군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201) Hq. H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61, 1946. 2. 25.

2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294.

203) 佐佐木春隆 著・姜昶求 編譯, 앞의 책, pp. 187-188.

204)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pp. 3-4, 정용욱 편, 『해방직후 사회사자료집』 제2권, 다락방, pp. 261-262. 노영기, 앞의 논문, p. 9 재인용.

205) *Weekly Information Bulletin*, No. 14, 1947. 7. 24.

206) 『새한민보(1-12)』, 1947년 10월 하순(『한국현대사자료총서』 7권, pp. 502-503)

207)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8. 16.
208) 이범석장군 기념사업회편, 『철기 이범석 평전』, 삼육출판사, 1992, pp. 106-107 ;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ts and Lee Bum Suk at 1600 9 August 1948*, 1948. 8. 10.
209) *JOINT WEEKA* 제2권, 영진문화사. p. 322.
210) 『동아일보』, 1948. 11. 13.
211) 『통위부특명』 제90호, 1948. 7. 8.
212) CG PMAG, *Weekly Activities of PMAG*, 1948. 9. 13.
213) 『CIC 보고서(1945. 9～1949. 1)』 1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 199-200. 정보 요원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노영기, 앞의 논문 참조.
214) CG, USAMGIK, *Current Constabulary Affairs*, 1948. 7. 20 ;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9. 13.
215) 『자유신문』, 1948. 10. 22 ; 대한민국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1953, p. 7 ; 『동아일보』, 1948. 10. 29 ; 노영기, 앞의 논문, p. 35 재인용.
216) 제헌의회속기록』 제1회 91호, 1948. 10. 29.
217) 사사키저 · 강창구 편역, 앞의 책, pp. 406-407.
218) 『자유신문』, 1948. 11. 20, 12. 7.
219) 『자유신문』, 1949. 3. 4.
220) G-2 P, No. 1103, 1949. 4. 15.
221) 『자유신문』, 1949. 5. 11.
222)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210.
223) JOINT WEEKA, 2권, p. 322 ; JOINT WEEKA, 3권, p. 101, 233, 239.
224) 육군본부, 『창군전사』, p. 512.
225) 백선엽, 『실록 지리산』, p. 210.
226) 정부는 1949년 10월 남로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중앙선관위, 『대한민국정당사』, 1968, p. 123).
227)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2권, 1990, p. 275. 인민유격대의 활동 목표, 조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1983, 박영사 참조.
2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772.
229)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pp. 205-208.
230) 김점곤, 위의 책, p. 209.
231)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p. 22.
232) 이는 이후 북한 정권내에서 한국전쟁의 실패 책임론과 이로 인한 당내 파벌 분쟁에 따르는 숙청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된다 .
23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278.
234) 김남식, 『남로당연구』 1, 돌베개, 1984, p. 412.
235)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pp. 214-215.
236)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2권, p. 280.
237) 육군본부, 『공비연혁』, 1956, p. 7.
238) 김남식, 앞의 책, p. 413.
239) 김점곤, 앞의 책, pp. 217-218.
240) 김점곤, 위의 책, p. 218.
241) 양한모, 『제3세력의 본질론』, 박문각, p. 16.

242) 중앙일보(편),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p. 129. 전쟁발발 전까지 양성된 유격대원은 약 3천명에 이르렀다. 북한은 강동정치학원 폐쇄 직전인 1949년 4월 회령에 제3군관학교를 설치하여 남침시 투입할 비정규전 부대(제766부대)를 양성하였다(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pp. 148-149).
2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p. 44-45.
2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pp. 44-46.
245)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pp. 235-237.
246) 『드럼라이트 대리대사가 국무장관에게』(1950. 4. 20). FRUS 1950.
247) 육군본부, 『6·25사변 육군전사』 제2권(부록), 1953, p. 7.
248)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 1945~1950』, 국방군사연구소, 1999.
249) 주한미군정보일지(Hq. USAFIK, G-2 Periodic Report)에 의하면, 이 시기 대표적인 분쟁사건은 배천경찰서 피습, 연안경찰서 장곡천지서 피습, 옹진 서청납치 등이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코르트코프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미소군의 관계증진 및 침범사태를 막기 위해서 확실한 38도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하지는 월경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였다(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es in Korea, Vol. 3, 돌베개, 1989, p. 10).
25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11, 1948. 8. 16 ; No. 925, 1948. 8. 31 ; No. 935, 1948. 9. 13.
25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36, 1949. 1. 13.
252) 위의 자료, No. 951, 1948. 10. 1.
253) 『국무부차관보가 국방부차관에게』(1949. 1. 25), FRUS 1949, Vol. Ⅷ, pp.944-945.
254)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1949. 4. 20), 『소련외교문서』 제3권, p. 17.
255) 『조선일보』, 1949. 3. 11; 3. 20.
256) 『스티코프가 몰로토프에게』(1949. 2. 3), 『소련외교문서』 제4권, pp. 4-5.
257) 『푸르카예프가 스티코프에게』(1949. 2. 24), 『소련외교문서』 제4권, p. 12.
258) 『조선일보』, 1949. 2. 4.
259) 『조선일보』, 1949. 2. 15 ; 2. 19.
260)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49. 4. 12), FRUS 1949, Vol. Ⅶ, pp. 986-987.
261) 『주한미대사 무초의 비망록』(1949. 5. 2), FRUS 1949, Vol. Ⅶ, pp. 1000-1022.
262)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49. 7. 26), FRUS 1949, Vol. Ⅶ, pp. 1066-1067.
26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520-521.
26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22.
2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25-526.
2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12, 1949. 5. 6; 『조선일보』, 1949. 5. 6.
267) 국사편찬위원회, 『38도선 무장충돌 조사결과에 관한 조국전선 조사위원회 보고서』, 『북한관계사료집』 제6권, 1988, p. 323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528-529.
268)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pp. 224-225.
269)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p. 537.
270) 육군본부, 위의 책, pp. 529-530.
271) 육군본부, 위의 책, pp. 530-531.
272) 김일성, 『김일성선집』 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53, pp. 410-411.
273) 『로동신문』, 1949. 7. 13.
274) 『국회속기록』 제3회 8호.
2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 508.

27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11.
277) FEC, *Intelligence Report*, No. 2480, 1949. 7. 8.
2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508-509.
279) KMAG, *G-2 Periodic Report*, No 159, 1949. 8. 4, No. 163, 1949. 8. 11.
280) 『조선일보』, 1949. 8. 5.
28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고려대 정외과 박사학위논문, 1994, p. 461.
2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516-517.
2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18-519.
284) 『스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1949. 11. 20. 『소련외교문서』 제3권, pp. 55-57.
285) KMAG, *G-2 Periodic Report*, No. 199, 1949. 10. 18.
286) KMAG, *G-2 Periodic Report*, No. 274, 1950. 3. 6.
2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pp. 529-530.
28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30-535.
28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535-537.

제 6 장 북한의 남침준비

제 1 절	북한·소련·중공의 군사회담
제 2 절	전시동원체제로의 전환
제 3 절	위장 평화공세와 전쟁계획
제 4 절	전투배치와 전투명령 하달

제 1 절 북한 · 소련 · 중공의 군사회담

1. 전략회담과 군사지원

1) 북 · 중 · 소 군사대표자 회의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한 1948년 12월 중순 모스크바에서는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 원수의 주재 아래 5명의 소련군 장성과 중공, 북한의 군사대표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북한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회담이 개최되고 있었다.

이 회담에는 소련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함에 따라 북한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시 불가닌이 북한 및 중공 군사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이루어진 회의였다. 이 날 회의는 소련측 대표로는 극동군사령관 말리노프스키(Malinovsky) 원수, 지상군사령관 코네프(Konev) 원수, 바실레프스키(Vasilebvsky) 원수, 해병대사령관 골로우코(Golouko) 제독, 제1부수상 마렌코프(G. M Malenkov) 등이었고, 이 외에 소련군 기술병과 대표들도 참석하였고, 북한 및 중공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 회담에서 3국 군사대표들은 18개월 내에 북한군을 남한 침략에 충분하게끔 증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군사협정에 합의하는 한편 소련군 특별사절단의 파견 등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였다.[1)]

1)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편성한다.
2) 돌격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중공은 한인계 중공군 20,000～25,000명을 입북시켜 북한군의 기간요원으로 제공한다.
3) 돌격사단 외 8개 전투사단과 8개 예비사단을 편성한다.
4) 기갑부대는 소련이 제공하는 500대의 전차로 2개의 기갑사단을 편성한다.

5) 공군은 국제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까지 당분간 보류한다.
6) 상기 항을 강력히 추진 감독하기 위하여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철군 완료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북한군을 14개 보병사단과 2개 기갑사단으로 편성 강화하고, 그것도 18개월 이내라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더구나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특별군사사절단까지 파견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시점에서의 목표설정은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유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지만 남침을 위한 전쟁동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단계에서의 계획은 북한군 증강계획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2)]

회담의 결정에 따라 초대 주북한 소련대사로 임명(1948. 10. 8일)된 스티코프 대장을 단장으로 5명의 장성과 12명의 대령 그리고 20명 가량의 중령·소령·대위 등 40여명으로 편성된 군사사절단이 12월말에 북한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파견된 소련군 장군들 대부분이 기갑분야 전문가였다. 기계화부대 전술가인 카투코프(Katukov) 대장, 쿠바노프(Kubanov) 중장, 정보전문가 자카로프(Zakalov), 코로테예프(Koroteyev) 장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포괄적으로 북한군 및 중국 공산군내 한인부대에 대한 평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경제 평가, 그리고 이에 기초한 북한군 증강계획, 스미르노프(Smirnov) 소장이 이끄는 소련 군사고문단을 보강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직접적인 임무는 모스크바 결정을 18개월 안에 완수하는데 있으며 돌격사단 및 전투사단의 편성, 전차부대의 장비, 훈련, 연료문제의 해결, 공군부대의 지원, 합동기동연습 등이었다.[3)]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중 독일전에서 전차부대의 활약에 의한 전과가 컸기 때문에 소련 군사사절단도 북한군의 전차부대를 강력하게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사절단은 북한으로 오는 도중에 하얼빈에서 조·중 실무진과 만났다. 북한측에서는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스크바 전

략회의에서 논의된 중국 '인민해방군'(중공군) 소속 한인 2만~2만 5천명의 병력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가능성을 길림성의 마량도(Malingdao) 장군과 논의하였다. 이 때 마 장군의 견해는 이곳에 2만~2만5천명의 한인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강력한 저항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한인부대를 1949년 3월 이전에 북한으로 파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피력하였다.[4)]

또한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부 군사혁명위원회에서도 이 조선민족부대의 파북(派北) 문제를 포함하여 조·중 군사동맹에 관해 평양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소련 군사사절단의 쿠바노프(Kubanov) 중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인부대의 시범훈련을 길림에서 참관한 결과, 보병 및 포병의 기량은 대단히 우수하였으나 기갑부대의 훈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150명 규모의 기술병 차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5)]

이어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 사절단은 조·소 공식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모스크바 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 북한측은 부수상 홍명희(洪命憙)가 참석하였다. 특히 북한은 모스크바 전략회의의 결정사항 가운데 공군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당분간 편성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공군 확장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일 공군 확장이 여의치 못하면 중공과 협의하여 약 1,000대의 항공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불가능하면 스웨덴, 스위스, 체코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협상 실무책임자인 쿠바노프 중장은 공군에 관한 문제는 김일성 수상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1차 회의를 종료하였다. 1차 회의 후 소련 특별 군사사절단은 항공기 지원문제에 관해서 소련 외상 몰르토프(Molotov)와 사전 협의한 후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소련은 추가로 150대의 항공기를 북한에 지원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제2차 회의는 북한의 요청대로 진행되었다.

비류조프 장군의 전문에 의하면, 동년 2월 4일 스티코프 대사가 요청한 소총

탄 250만발, TT-3용 탄약 320만발, 82㎜ 박격포탄 1만 5천발, 소총 1,500정, 자동소총 1,200정, 권총 400정, 중기관총 100정, 82㎜ 박격포 40문 등을 적재한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로미코(Gromiko)는 스티코프의 요청을 고려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박으로 5톤의 장비와 탄약을 발송하며, 나머지 장비는 운송선이 허용되면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6]

이후 이 군사사절단은 그들이 부여받은 임무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수송되는 군수물자의 수송 및 인수방법과 절차, 유류의 저장시설과 정유시설의 신설, 추가적인 돌격 및 예비사단의 편성과 훈련, 중공으로부터의 조선인 부대의 파북(派北) 조치 등 제반 문제를 추진하면서 북한군을 강화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전차 공급문제에 관해서는 사절단의 간부인 쿠바노프 중장이 처리하였으며, 소련은 본래 모스크바 결정에서 500대의 전차를 공급하여 2개 기갑사단을 편성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지형이 산악지대와 하천이 많다는 이유로 전차전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여 500대에서 그 반수로 줄였다. 소련군사사절단은 전차부대를 무력남침의 주력부대로 육성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연료문제의 해결책도 아울러 강구하였다.

전차부대를 비롯해서 싸마호트, 모터지크, 자동차수송부대와 해군의 선박 및 공군의 항공기 운용은 연료문제 해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강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한 공군은 1949년 4월 20일 현재 스티코프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에는 전투기를 보유한 연대가 설립되어 있었으나, 지난 7개월간 80명 피교육자 중 8명의 조종사만을 양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조종사 양성은 훈련기(Ty-2)기미보유 및 비행연료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이 보유한 300톤의 비행연료는 소연방 대외무역성(對外貿易省)에서 구입했으나 B-70, B-74, B-78의 혼합연료라 사용이 불가능하다. 북한관계자에 따르면, 소 연방 대외무역성은 현재까지 쓸만한 비행연료를 공급하지 않았다.[7]

당시 소련은 태평양을 향한 연안지방에 정유공장과 유류 저장소가 없었고, 블라디보스토크 군수창에도 연료가 고갈되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이 사절단은

망산에 정유공장과 수송관을 설치하고 생산에 주력하였으나 정유능력이 연 10만 톤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스티코프는 북한군 소요 연료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북 천길호 부근에 또 하나의 정유공장을 신설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주로 그 일대에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역청탄을 액화하여 정유하였다. 연 생산량은 12만 5,000톤이었고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정유원료인 역청탄 채굴에 수많은 북한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목표량 돌파에 혈안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 초순까지 북한군의 기계화부대에 사용될 유류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그래도 충분치 못하여 동년 4월초에 외국석유회사에서 10만톤을 수입하여 망산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에 의하여 연료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공격력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련군 총참모부는 현지의 스티코프 지원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였다. 미 군사고문단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휘권은 고문단장(스미르노프 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북한 소련대사인 스티코프에게 있었다.[8] 총참모부의 지시로 2월 9일 태평양함대 비행 부사령관인 세르빈 소장은 원산(元山)에 도착해 소련 전투비행연대 배치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모스크바는 김일성의 요청을 수용해 소련군 철수 후 북한에 잔류할 군사고문을 포함한 소련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규모와 체류방식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1949년 2월 24일 소련 내각회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 무력성은 북한군 고문관, 여순항 해군기지 문제, 해상과 항공교통, 고문과 대사관의 연락 확보를 위한 소련군의 인원과 기자재의 잔류문제, 그리고 북한 잔류 인원의 소·북 국경선 통과방식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북한군의 군사고문 자격으로 복무중인 236명의 소련장군과 군관의 잔류요청을 충족시킬 것, b) 북한군 고문으로 잔류하는 소련 장군과 군관에게 현지통화로 받는 급여액과 입북 전 최종직책에 의거 수령한 급여액(직책, 군 계급과 복무연한에 따른 급여액) 사이의 차액을 소련 무력성 예산에서 소련통화로 지불할 것.

2. 북한 내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잔류시킬 것 a) 청진항 : 어뢰정 24척, 대형 어선 7척, 소형 어선 8척, 소해정 6척, 초계정 6척, 보조함 7척, 수로연구용 선박 3척, b) 원산항 : 수로연구용 선박 2척, c) 나진항 : 해안구조선 6척, 총 3,530명의 군인과 264명의 군무원을 잔류시킬 것.
3. 북한영공 항로보장을 위해 별도의 지시 전까지 다음과 같이 잔류시킬 것. a) 청진, 함흥, 평양의 기술제공 그룹, b) 나남의 통신 및 방송국 작업그룹, c) 평양의 전신국, d) 평양의 소련국가안정성 고주파 송수신소, 총 326명 인원을 잔류시킬 것.
4. 소련 무력성 예산으로 본 결정의 2, 3항에 열거된 인원을 부양할 것.
5. 소련 무력성 기준에 의거해 소련으로 소환 전까지 북한의 소련병원 복무를 위해 잔류한 180명의 군인과 군무원에게 모든 식량공급을 보장할 의무를 소련 무력성에 부여할 것.
6. 1946년 6월 10일 No. 1206-497 소련 내각회의 결정에 의해 비준 받은 훈령에 따른 소-북한 국경선 통과방식을 유지할 것. 본 결정을 근거로 북한에 위치한 소련 무력성 인원이 북한과 소련사이를 다니도록 통행증을 교부할 권리를 조선인민군 총 군사고문과 청진해군기지 사령관에게 부여할 것.
7. 주북한 소련특명 전권대사 스티코프 동지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조선정부와 합의하도록 임무 부여할 것. 즉, 북한 내 기존 최소생계비와 담당직책을 고려하여 소련고문에 대한 현지 통화로의 급여지급 규모 문제, 북한 내 근무처 도착과 파견근무를 마치고 소련으로 귀국할 경우에 수당 증액 문제, 그들에게 조선 정부예산으로 이들 지출 변제와 함께 식량, 주택, 공공요금을 무료 보장과 또한 북한에 해상 및 항공 교통의 확보를 위한 인원과 기자재 잔류와 본 결정에 의거 북한에 복무요원들의 소북 국경선 통과절차 문제 등[9]

이로써 소련군 철수 후 잔류한 주북한 군사고문단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다. 군사고문의 편제인원이 236명(장군과 장교)으로 확정되었고, 7항도 특기할 만하다. 소련 군사고문의 현지급여와 식량배급, 주택, 공공요금 등 체재비용을 과거 일부 분담과 달리 북한정부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재원방식의 전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련과 북한정부 모두 종전까지 일회성 단기과제 해결을 위한 임시적인 소련요인에서 탈피해 북한군에 상시적인 소련요인으로 군사고문단이 필요하다는데 공식 합의했다.

스티코프 대장은 1949년 4월 20일 북한군 전투준비태세를 심히 우려하며 군사고문단장의 교체와 사단장 고문관 배치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북한군 전력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다음날 모스크바에서 스티코프에게 "스탈린 동지의 지시에 의거, 북한군 군사고문단장은 당신이다. 스미르노프 소장은 빠른 시일내 교체될 것이다"라는 지시문이 하달되었다.[10]

2) 북 · 중 · 소 비밀 군사회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3월 5일 김일성－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되었다. 김일성은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소련방문을 요청했고 동년 1월 17일 스티코프가 스탈린의 동의의사를 전하였다.

1949년 3월 3일, 북한 정부 사절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김일성은 박헌영(朴憲永) 부수상겸 외상, 홍명희(洪命憙) 부수상, 정준택(鄭準澤) 국가계획위원장, 장시우(張時雨) 상업상, 백남운(白南雲) 교육상, 김정계(金廷桂) 체신상, 김일(金一) 민족보위성 부상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인솔하여 회담에 참석하였다. 3월 4일 김일성과 몰로토프, 비진스키, 멘쉬코프 및 스티코프 등과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3월 5일에는 김일성이 스탈린과 만났다.

3월 5일 회담에서 소련 국가안전성(KGB) 소속 소련한인 김이노켄치도 배석하였다. 그는 정치고문 발라샤노프 대좌 휘하에서 근무하다 소군 철수 후 평양주재 소련대사관 통역관 그룹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사절단과 같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소련측 통역으로 참여한 후 현재 공개된 대화록을 스티코프와 함께 작성한 장본인이다.[11]

김일성 일행이 스탈린을 방문한 시점은 동서 냉전의 격화로 어제의 연합국 전우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 베를린 · 터키 · 그리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는 공산군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던 무렵이었다.

이러한 때에 김일성은 스탈린과 통일문제, 경제협력과 무역, 1949~50년도 무역협정, 기술지원, 문화교육 분야의 협력, 북한 아오지-소련 크라스키노 사이 철도건설, 전쟁준비와 군사력 건설 등에 관해 광범하게 협의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중 남북 통일문제, 경제지원, 군사력 증강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12]

통일문제에 있어 양자는 김일성이 제기한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전략적으로 김일성보다 우위에 있는 스탈린은 그 방안에 관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와 남한의 도발을 유도한 후 소위 다시 받아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당시로서는 후자의 방안을 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위 '반격'(反擊)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스탈린은 선제공격의 경우 북한군이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직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음과 미·소간에는 38도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한국에 대한 공세적 군사 활동은 남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당시 선제공격은 시기상조로서 군사력을 강화할 단계이며 무력침공은 남한의 도발을 다시 받아치는 형식을 빌리라는 것이었다. 경제지원에 있어서는 북한이 수립한 경제부흥발전계획 지원을 위해 약 2억 루블(4,000만 달러)의 차관제공,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에 합의하였는데,[13] 이 금액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주로 전쟁준비에 필요한 북한군의 무기 및 장비를 구입하였다.

스탈린이 남한의 군사력, 주한미군, 38도선 무력충돌 등에 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남한의 군사력이 60,000명이라는 김일성의 설명에 가소롭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국군 내에 공산 세포조직을 침투시켰는지에 관하여 문의하고, 박헌영이 침투해 있으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자,[14] 지금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남한에서 북으로의 침투도 경계하라고 강조하였다. 한국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무부에 심어놓은 북한 첩자에 의해 소상하게 파악되고 있었으며, 그 정보 분석을 토대로 북한은 남한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15]

이어서 스탈린은 북한의 해군과 공군지원, 소련 군사학교에 위탁교육 실시 등을 약속하였다.[16] 3월 12일의 김일성 · 불가닌 회담에서는 북한군의 지상군 창설 및 증설에 따른 무기 공급, 해군창설에 필요한 소해정과 전투함, 해군고문관, 그리고 항공력 증강을 위한 훈련용 항공기의 공급을 약속받았으며, 특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청진(淸津)의 소련 해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17]

이 자리에서 총참모장 쉬체멘코 대장, 하를라모프 해군중장, 슬라빈 중장, 미하일로프 소장과 스티코프 대사, 박헌영과 문일(文日)이 배석했다. 소련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상군, 해 · 공군 그리고 내무성과 경찰부대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와 군사기술을 북한에 공급할 것을 보장했다.

그 내용은 6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부대 편성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추가 원조, 7개 기동보안대대 편성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 원조, 공군의 충분한 훈련 후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등 추가 원조, 120명의 특별군사고문단을 1949년 5월 20일까지 파견, 10억원에 해당되는 물자지원 등이었다. 회담과정에서 일부 최신 소련 전투기와 해군함정을 비롯해 각종 무기 세부목록이 검토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련 군사교육기관에서의 북한군 간부 교육계획에 합의하고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문제를 논의했다는 대목이다.[18]

스탈린은 3월 12일 회담 논의사항을 김일성, 박헌영과 별도로 만나 결정하였다. 스탈린 집무실내 방문객 일지에 따르면, 3월 14일 북한 정부사절단 가운데 김일성과 박헌영, 문일이 스티코프와 함께 재차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회담시간도 1시간 40분으로 3월 5일 회담보다 길었으며, 이 자리에서 남침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19]

그 다음 3월 17일에는 이와 같은 합의내용을 골격으로 '전쟁지원의 성격, 소련에서의 북한군 교육 및 경제관계의 발전과 기타 문제들에 관한 조 · 소협정(朝蘇協定)'이 체결되었다 당시 이들간에는 '경제 · 문화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을 뿐이었다.[20] 그러나 군사비밀협정도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에 의해 당시 회담과 협정의 중점이 전쟁지

원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회담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무력남침에 의한 통일방안에 합의를 보고 소련이 그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증강지원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모의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의 소련방문 때 그를 수행했던 교육상 백남운은 그의 책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방문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3월 17일 조인을 마친 후 있었던 축하연에서 스탈린이 당시 소련군 참모총장이었던 쉬체멘코와 해군사령관 우마세프, 공군사령관 베르시닌 등을 소개한 것을 들면서, 이는 북한이 유사시 소련의 군사원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스탈린이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었다.[21]

그 직후 북한은 조·소 협정에 따라 1949년 5월 1일에 1차년도 분으로 소총·전차·야포 등 장비와 함정, 항공기 그리고 탄약, 무전기 등 각종 전쟁물자 110여 종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는 6월 4일에 승인되었다.

스티코프 대사는 5월 3일 김일성의 서한을 모스크바에 전달하면서 "김일성의 요청은 북한측이 2개 전차연대(각 전차 33대)와 자주포대대(SU-76 16문)로 편성된 기존의 전차여단과 별도로 전차사단, 기동보병연대 외 모터싸이클 대대를 창설하고자 하며, 각 보병사단에 별도의 탱크연대(각 탱크 33대)와 자주포대를 소속시키고 24문의 ZIS-3 대포로 편성된 포병연대, 폭격기와 전투기(각 43대)로 편성된 비행사단을 창설하고자 한다"는 김일성의 요청을 지지한다는 메모를 첨부했다.[22]

북한측은 장비지원에 대한 비용지불로 김일성이 불가닌에게 보낸 서한에 명기된 대로, 금년 9~10월까지 소련에 정미 쌀 3만톤을 공급할 것을 제시하였다.[23] <표 6-1>에 의하면, 소련이 제1차로 지원한 것이 주로 기갑 장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소협정에 의한 지원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장비가 입북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1949년 8월 1일 현재 북한 전차보유는 33대로 집계되었으나 9월 소군의 지원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소협정에 따른 결과였다.

<표 6-1> 조·소 협정에 의한 1차년도 지원 장비(1949. 6. 4 승인)[24]

장 비 종 류		수 량
공군 장비	일류신-10	30대
	일류신 연습기-10	4대
	야크-9	30대
	야크-11	6대
	야크-18	24대
	PO-2	4대
	예비모터 AM-42	6대
	낙하산	250개
	예비부품가격	35만 루블
기갑 장비	전차 T-34	87대
	자주포 SU-76	102대
	장갑차 BA-64	57대
	사이드카 M-72	122대
	예비부품가격	20만 루블
소총 및 포병 화기	7.62㎜ 소총	10,000정
	7.62㎜ 저격소총	1,000정
	7.62㎜ 카빈소총	4,000정
	45㎜ 대전차포	48문
	76㎜ ZIS-3야포	73문
	122㎜ 야포	18문

1949년 8월 현재 북한군 장비는 45㎜ 대전차포 192정, 76.2㎜ 야포 45문, 120㎜ 야포 18문, 120㎜ 박격포 119문, 37㎜ 고사포 46문, 85㎜ 고사포 12문, 전차 T-34 64대, 자주포 SU-76 16대, 장갑차-67 2대, 전투기 YAK-9 24대, 지상공격기 IL-10 24대, YAK & YIL 18대, YAK-18 8대 등이었다.[25] 또한 소련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공급받을 총 무기와 장비는 T-34 전차 87대, CY-76 102대, 장갑차-67 57대, IL-10 30대, YAK-9 30대, YAK-18 16대, YIL 및 YAK 10대 등이었다.

북한군 출신 최태환에 의하면, 1949년 8월 13일 흥남 부두를 통해 소련의 경기관총, 탄약, 무전기, 모터싸이클, 탱크, 군용차량 등에 이르는 엄청난 군수물자

가 유입되었고 이는 새로이 편성되는 부대를 위해 필요한 물자들이었다고 하였다.[26] 동년 9월 시점 북한 병력도 80,00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중공군 의용군이 대거 입북한 결과였다.

따라서 1949년 9월 현재 북한은 육·해·공 병력 97,500명, 경비대 병력 42,000명, 전차 64대, 장갑차 59대, 비행기 75대 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949년 말까지 소련으로부터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많은 장비를 인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련제 전차도 북한에 제공되었는데 당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것은 T-34였다. 전차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전투장비여서 육체적으로나 기술면에서 단기간 내에 조종법을 숙지할 수 있는 병사들을 차출해야만 했다. 그렇게 차출된 북한 병사들은 전차 조종법과 사격법을 주로 익히게 되었다. 전차와 함께 포병훈련에도 주력했다. 76㎜·122㎜·152㎜ 구경의 소련제 포는 조작이 매우 복잡했다. 조종사의 훈련이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45명이 호롤리스크 특수비행학교에서, 45명이 치칼로프 군사비행학교에서, 30명이 이르쿠츠크 비행기술학교에서 각각 훈련과정을 거쳤다.

소련전문가들은 만주의 북한 비행학교에서 조종사 양성에 참여했다. 창군 초부터 군사고문단의 간부양성에 힘쓴 결과 군관학교를 통해 많은 간부들이 새로이 배출되었다. 1950년 1월 1일 현재 북한 소재 각급 군사교육기관에서 총 4,150명이 훈련받고 있었고, 이 교육과정은 군사고문의 지원하에 소련식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 진행되었다.[27]

한편 북한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자, 1949년 8월 12일과 14일 김일성은 일시 귀국한 스티코프 대사에게 대남선제공격을 준비해야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38도선은 의미가 없고, 38도선 무력도발을 통해 북한군의 전력우세가 입증되었으며, 게다가 조국전선의 평화제의를 남한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인민봉기가 뒤따를 것이며, 만일 대남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인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특히 남한정부가 38도

선 부근에 일종의 마지노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북한군의 반격기회가 상실될 것이므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8]

소련 대사가 1949년 3월 '김일성－스탈린' 회담에서 논의된 스탈린의 지령을 상기시키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은 38도선 가까운 강원도 삼척에 '해방구역' 건설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의 결행도 더욱 철저한 준비와 상황판단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련측의 답변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옹진반도 점령계획을 제시하였다.[29]

이는 장차 공격작전에 유리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옹진반도를 점령함으로써 전선을 120㎞나 축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군의 전력과 사기를 판단하여 사기가 저하된 경우에는 남침으로 치닫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단기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하나 북의 능력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련의 판단과 반대에 부딪혀 이는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30]

이때 소련은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 지구전이 될 경우 미군의 개입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였으며, 남한 내에서 빨치산 활동을 강화하고 반동체제의 파괴와 남한에서 인민봉기의 확산, 북한군의 강화에 최대한 힘을 집중하도록 스티코프 대사를 통하여 지령하였다.[31] 김일성과 박헌영은 해방구 설치와 옹진반도 점령계획에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망하였지만 남한에서의 빨치산 투쟁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주도할 요원을 증파하였다.[32]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소련은 북한이 스탈린의 방침과 무관하게 1949년 10월 14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옹진을 공격하자, 이 사태처리에 대해서 미국보다 훨씬 더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다. 즉, 소련중앙 인민위원회는 스티코프에게 옹진공격의 사전계획과 행동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몇 차례 주의를 하달하였다.[33] 이 시점까지 스탈린은 북한에게 공세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정세를 관망하면서 유리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북한 내부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었다.

한편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1950년 2월 17일까지 2

개월 동안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수뇌들과 회담을 가지고 '중·소 우호동맹상호협정', '장춘 철도·여순, 대련에 관한 협정', '차관협정' 등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다.[34]

1949년 10월 1일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것은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승리였다. 4억 5,000만명이라는 방대한 인구와 대지가 모택동의 손에 들어갔다. 소련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실제로 중공의 거대한 전략적 제반요구를 침략정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택동을 스탈린의 제70회 생일에 초청하였다.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1950년 1월 21일에는 주은래 일행이 합세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약 1개월간에 걸친 회의 끝에 1950년 2월 14일 중·소 30년간의 우호동맹과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크레믈린은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소 양국은 "일본 또는 그와 협력하는(미국을 지칭) 직접 또는 직접적인 침략에 있어 그 침략의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투쟁의 첫 포석으로 중·소의 동맹을 평가함에 있어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위대한 우호에 의해서 용기를 얻었고, 더욱 이승만 도당의 전멸과 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세력을 국외로 축출하는데 승리할 자신을 얻었다"고 대 남한침략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2월 14일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소련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 장춘철도, 여순 및 대련에 관한 협정, 소련정부가 소련에서의 공업 및 철도시설여부에 대한 대가지불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장기경제차관을 부여하는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중·소 동맹에 의하면 아세아에서의 공산세력 확대에 있어 주요한 장애가 될 일본, 한국 및 그의 배후자인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동방위란 미명하에 침략의도를 엄폐한 조약이었다.

여기에서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체류한 2개월간에 극동정세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고, 스탈린은 세계 공산투쟁을 위해 모택동을 아시아의 신생 국가군인 인도

지나, 버마,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적화를 분담시켰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탈린·모택동'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발표된 바와 같이 중·소 양국간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당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로 보아 냉전체제하의 양국간 결속다짐은 물론, 세계 공산화를 위한 역할분담이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 나타난 김일성의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의 전쟁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북·소·중의 비밀회담과 전쟁 결정

김일성은 중공이 내전에 승리하여 정권을 수립하게 되자 "이제 남조선 해방의 차례"라고 하며 중공과 소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1950년 1월 17일 외상 박헌영 주재 만찬에서 선제공격에 관한 소련의 승인을 얻기 위해 스티코프 대사와 참사관들에게 스탈린과의 회담을 주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남한 인민은 나를 믿고 있으므로 우리의 군사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 빨치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남한 인민은 우리에게 좋은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최근 아주 고심하고 있으며 밤잠을 못 이루며 통일문제를 생각한다. 북침시 남침은 불필요하며, 이승만이 북침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군 공격행동을 허락받기 위해 방문이 필요하다.[35]

김일성은 무력통일 방안에 대해, "1949년 3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남조선이 먼저 공격할 경우 반격할 것을 승인 받았지만, 이승만이 침략을 기도하지 않아 반격을 시행할 기회가 없어, 남조선 인민의 해방과 국가통일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민군의 선제공격 행동에 관한 토의를 갖고 허락을 받고자 스탈린과 면담이 필

요하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탈린과의 면담이 어려우면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모택동과 면담을 이루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중국내전이 끝나면 그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며,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모든 문제에 관한 지시를 받아 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발언은 북한이 소련의 '북침시에만 반격 허용'이라는 제한적 공세허용을 받은 이후부터 남한이 북침(北侵)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기대의 내면에는 대남 전력에 자신감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무렵 소련도 내부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이를 중공과 협의하고 있었다. 즉, 스탈린은 스티코프에게 "모택동 동지와의 회담에서 우리는 북조선의 군사력과 방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를 도울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했음을 통보했다"고 하였다.[36]

결국 스탈린은 1월 30일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김일성의 방문요청을 수락하였다. 바로 이 시점이 스탈린이 가시적으로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한 관심을 보인 태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동년 2월 4일 스티코프를 방문하여 3개 보병사단을 새로 편성해 총 10개 사단 증강 문제를 놓고 조언을 구했다. 스티코프는 이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자가 충분한지 따져봐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장비와 보급물자 충당방안으로 스탈린에게 1951년 용도의 소련 차관 전용이 가능할지를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2월 9일 신속히 평양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스티코프에게 "김일성을 찾아가 구두로 추가 3개 사단편성에 착수할 수 있으며, 1951년도 차관을 1950년에 전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통보하였다.

이것은 1949년 9월 24일 소련 정치국 결정으로 남한에 대한 여하한 군사도발의 금지를 지시한 후 몇 개월 사이에 소련지도부, 특히 스탈린의 인식전환은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런 인식전환으로 향후 소련의 북한 군사원조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민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소련군 총참모부와 군사고문단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전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었다.

1950년 2월 23일에는 실전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Vassyliev) 중장이 도착하여

'조선인민군' 수석군사고문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도착으로 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직을 인계하였다.[37] 바실리에프 중장 예하의 새로운 고문단은 전쟁계획 수립과 북한군 운용을 위해 투입된 것이었다.[38] 군사고문단장과 함께 그의 직속기구인 고문단 본부요원과 총참모부 담당 고문 십여 명이 선발대로 도착했다.[39] 스티코프 대사는 "바실리에프 중장이 도착해 북한군 군사고문단장 직무수행에 착수했다. 각 군의 참모부와 부대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내가 군사고문단장직에서 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확인해 주길 요청한다"[40]라는 전문을 본국에 전달하였다.

실로 1949년 4월 스티코프가 임시로 군사고문단장를 겸직한 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군 지휘관 인사교체였다. 바실리에프는 도착즉시 전쟁 사전 정비작업에 주력하였다. 그의 임명은 지금까지 훈련위주의 고문에서 작전과 실전 위주의 고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북한군의 증강을 감독하고 지원하던 고문단의 역할이 본격적인 군사작전 지도가 바뀌었다. 이들 새로운 참모지휘그룹의 입북은 스탈린의 동의, 무기 및 장비의 지원과 함께 한국전쟁 발발에 소련의 개입정도를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요소이다.[41]

바실리에프는 이후 소련고문의 활동과 역할을 조정 지휘하였다. 고문단의 임무와 역할은 시기별로 훈련 증강 작전 혹은 전투에 대한 비중은 상이하였다. 그러나 군사고문단은 다양한 군관들의 총체적 집단을 의미한다. 240~250명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는 총참모부 중앙부서 담당 작전참모고문, 각 병종부대나 사단 여단 경우에 따라 연대 대대고문, 군사학교나 아카데미 담당고문, 북한군 지휘부의 사상 동향을 정탐하는 정치고문 등으로 편성되었다. 물론 5월에는 소수의 총참모부 소속 작전고문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6월에는 짜여진 작전에 따라 전쟁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병종부대 사령부, 사단, 여단본부에서의 고문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42]

바실리에프의 임명은 원래 1950년 2월 훨씬 이전인 1949년 12월 7일에 결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착 당시 소수의 선발대만 대동했다. 이런 점에서 작전참모 및 전투지휘 그룹의 입북은 소련의 한국전쟁 개입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

한 핵심요소이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 극비리에 모스크바의 스탈린을 방문하였다. 그는 스티코프 대사의 주선으로 평양을 떠나 비밀리에 스탈린을 방문하여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 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 선제남침을 개시하는데 동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전쟁의 남침전략은 1950년 4월 김일성과 만나 확정된 것이었다. 스탈린 집무실 방문객 일지에는 1950년 4월 10일 한차례 김일성, 박헌영, 문일(文日)이 스티코프와 함께 회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러시아 외교사』에 스탈린 남침전략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국제정세가 바뀌어 한국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도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국제적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국민당과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필요로부터 해방된 데다, 이제 한국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중략) 소련이 핵 열강이 된 정세변화까지 가세해 미국내에는 한국문제에 개입치 않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여건은 북경이 한국에서의 해방전쟁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
> 이어 스탈린은 북한군대의 질과 양 모두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격세부계획이 반드시 요구된다. 작전은 3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단계에서 38도선 지역내 부대를 집결시킨다. 그 다음 북한정부는 새로운 평화통일 제의를 발표한다. 서울이 이를 거부할 것이므로 바로 그때 공격하면 된다. 옹진반도 타격 구상은 옳다. 계획에 동의한다. 누가 최초로 전투 혹은 군사행동을 시작했는지 진실을 엄폐하는데 유용하다. 남측의 반격이 있은 후 전선을 확장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전쟁은 반드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이 제정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제기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이 직접 관여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동양의 사정에 정통한 모택동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빨치산이 공격을 지원해 주며 20만 당원이 남한정부에 맞선 봉기에 참여할 것임을 단언했다.[43]

위의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 시점에 스탈린이 변화된 국제정세를 고려해 남침전략과 최초의 작전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스탈린의 남침 구상은 38도선 부근으로 부대집결, 북한정부의 새로운 평화통일 제의와 남한정부의 거부, 옹진반도 타격과 남한군의 반격에 이은 전격전 돌입과 같이 3단계였다.

스탈린의 최초의 작전구상에서 핵심은 "적이 제정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전격전"이었다. 전격전은 초전 3일 이내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부대로 적의 제1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으로 진격해 적을 양단시켜 적의 전력 대부분을 궤멸시킬 정도로 화력과 기동력, 파괴력을 일시에 조직적으로 폭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전차나 야포, 공군이 잘 무장되고 압도적 우세와 더불어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고도로 세밀한 초기 공격세부계획이 필수적이었다.[44]

모스크바회담에서의 북·소 비밀정상회담 직후 소련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수뇌와 가진 회담에서 공군력의 지원을 강조한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항공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반면 지형을 고려하여 전차를 1개 사단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김일성·스탈린 회담의 합의사항을 현지실정에 부합되게 조정하면서 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45]

이와 함께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46] 스탈린은 김일성과 만나 남침계획에 대해 동의했음에도 모택동의 동의와 위의 양자간의 약정의 확인 후로 최종승인을 미룬 것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 일행은 4월 25일에 귀환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약정대로 도착 즉시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姜健)에게 여름까지(즉 5월말까지) 전격전을 위한 북한군 총동원태세 완비와 남침작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장 쉬쩨멘코를 통해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에게 북한군에 이어 상응하는 참여를 하도록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그 약정은 대체로 시간표대로 준수되었다.

김일성 일행의 방소 직전인 1950년 3월 27일자 『프라우다』지에 의하면, 북한

부수상 박헌영은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제를 '북조선에서의 평화적 민주건설, 남조선에서의 대중 내 정치활동 및 식민지 수탈자에 대한 무장투쟁 – 이것은 통일독립민주건설의 수립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북로당의 무력통일정책에 편승하고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쟁을 강요하고 있었다.[47]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김일성은 1950년 5월 13일 북경으로 모택동을 방문하였다. 이날 저녁 늦게 북한 지도자들은, 스탈린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현 국제환경이 과거와는 다르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모택동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음을 설명하자, 모(毛)는 동 문제에 관하여 스탈린 자신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다.[48] 모택동의 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북한 동지들과의 회담에서 필로포프(스탈린의 가명) 동지와 그의 측근들은 현 국제상황이 변하였으므로 남북한 통일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중국동지와 북한 동지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약 북한측과 중국측이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일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어 두어야 함. 회담내용에 관한 사항은 북한측에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할 것임.[49]

모스크바의 메시지를 받은 모택동은 5월 15일 김일성 및 박헌영과 구체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였다. 김일성은 북한이 전쟁계획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수립했다고 언급하였다.[50]

> 제1단계 : 군사력을 준비하고 이를 증강함
> 제2단계 : 평화적 통일에 관한 대남 제의
> 제3단계 : 남한측의 평화통일 제의 거부 후 전투행위 개시

모택동은 한국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계획에 찬성하고, 계획

된 작전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수불가결하며 각개 병사와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북한군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중요한 도시를 포위하되 이를 점령하기 위해 지체해서는 안되며 병력은 적군을 섬멸하는데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일본군 참전문제에 관하여 김(金)은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미국이 2~3만의 일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며 이 경우 북한군은 더욱 맹렬히 전투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모택동도 2~3만의 일본군이 참전하는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일본의 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택동은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공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하였다. 모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 후에 남쪽에 대한 작전을 시작하면 북한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시점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 작전이 양국간 공동의 과제가 되었으므로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미 모택동은 주중 북한대사 이주연(李周淵)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통일은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전쟁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은 영토를 위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었다.[51]

1950년 7월 주은래가 중국 주재 소련대사 로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이 회담에서 모택동은 미군의 직접참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金)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우호동맹상호원조 조약은 통일 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일성 일행은 5월 16일 평양으로 복귀하였다.[52]

제 2 절 전시동원체제로의 전환

1. 인력 동원

북한의 동원체제 기반은 이미 소련 군정(軍政)시기부터 시작된 사회 각 계층의 구성원들의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학생 및 청소년 조직을 통합하도록 하였으며, 지식인과 문화인들로 하여금 선전전과 문화전(文化戰)에 나서도록 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켰다. 그 결과 주민들은 누구나 공산당 예하조직에 편입되어 인민증을 교부받아 인민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는 하나의 당에 의한 획일적인 지휘아래 놓이게 되었다.

북한 정권은 1949년 초부터는 총동원령을 발동하여 군 병력 충원제도를 지원에서 징병으로 바꾸고 북한의 고급중학(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도에는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병력보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제2보충 병력을 확보하는 등 거국적으로 전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53]

북한 인민에 대한 군사훈련은 1948년까지는 만 17세부터 50세까지의 전 남성을 직장에서 일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다가 1949년 초부터는 한 주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여 다가올 군 확장과 총동원에 대비하였다.

군 입대자에 대한 징집연령은 1948년 말까지는 만 18세로부터 22세까지 매년 2만 명씩 소위 '자원입대제'로서 적령자를 보충해 왔으나 소련군 철수 이후 1949년부터 북한군의 급격한 확장으로 군 징집인원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입대자로 채우지 못하자 반 강제로, 그리고 1949년 여름부터는 징집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북한 남녀학생의 군사훈련 모습

북한의 징집제도는 민족보위성에서 징집 소요인원을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에 할당하면 각 도·시·군에서는 노동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각 기관장으로 구성되는 '모병위원회'를 구성하여 18세부터 22세까지의 적령자를 선발하였다. 각 마을마다 이들 징집대상자를 포함한 공개 집회를 개최하게 하고, 이 곳에서 모병 선전원을 등장시켜 "조국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행동이며, 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더 없는 영광입니까!"라고 선전하였다. 징집에 불응하는 자는 마을주민(당원)들로부터 비공개적인 협박을 받아 입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7월부터는 상기 징집제도로도 군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각 지역 경찰력과 당 인민위원회를 이용하여 강제로 소요인원을 충원하였다.

1949년 이후 고급중학 이상의 모든 학교에는 장교를 배치하여 학생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전 인민을 1949년 여름까지 신체검사를 완료하는 등 북한 인민이 병력동원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의 고급 당원이나 정부 관리, 선생, 의사, 기술자들은 북한 인민생활

에 긴요한 존재라는 구실에서 징집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남침 직후인 1950년 7월 1일 전시총동원령(戰時總動員令)이 선포되자 징집에서 제외되었던 이들까지도 모두 징집되었고, 또 징집연령은 낮아져서 17세부터 30세까지는 군에 입대시키고 31세부터 50세까지는 군 노무자 및 군수산업 공장으로 동원하였다.

2. 물자 동원

김일성(金日成)은 북한 전 인민으로 하여금 전쟁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1949년 7월 15일에는 북한군과 그 가족을 원호한다는 기치아래 조국보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였다.[54] 이들은 이른바 조국보위사업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공산당의 후원단체로서 북한군 가족의 원호[55]와 더불어 비행기·전차·함정 등 북한군의 현대화 장비를 위하여 기금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56]

이 후원회는 도·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지도부를 설치하고 리 단위까지 조직에 편성하였다. 1949년 8월말 각 도·시·군·면에 이르기까지 2만 5천여개의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되었고, 북한 전국에 걸쳐 269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목적이 전쟁준비에 있었음은 다음의 김일성의 언급에 잘 드러나고 있다. 1949년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 1주년에 관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과 경비대 보안대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며,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의 전사, 하사, 군관들의 가족들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며, 물심양면으로 인민군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김일성은 조국보위후원회로 하여금 군인가족 지원으로부터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전쟁준비 지원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당시 조국보위후원회가 중요하게 추진하였던 사업형태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대별된다.[57]

첫째,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선전사업이었다. 전 북한 인민에 대한 선전사업으로, 북한 인민은 남한의 인민들을 구원하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대의 무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선전사업을 전개했다. 1949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 자신이 북한 국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남조선에서 소위 국방군을 강화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야기시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중략) 침략자들의 침습을 방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장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략)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중략) 전체 인민들은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과 경각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설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선전사업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군의 강화 지원사업으로 비행기, 전차, 함정 구입을 위한 기금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평양시 상인들은 1949년 11월 4일 비행기 17대와 현금 55만원을 헌금했다. 같은 해 12월말에 총 모금액은 2억 8천 백여만원에 이르렀고, 또 12월말부터는 '애국채'(愛國債)라는 것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조국보위후원회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인민들에게 구입하도록 하여 이 자금으로 북한군 장비의 현대화 및 군수공업의 자립성 강화에 투자하였다.

셋째, 농민들을 이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소위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였다. 1949년 말까지 총 4만 8천 4백여 가마가 헌납되었다. 이렇게 헌납된 '애국미'는 전쟁에 대비한 군량미 확보는 물론 군사장비 구입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군대에 아들을 보낸 후방 군인가족들에 대한 원호사업(援護事業 : 내각결정 제45호)을 선전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직 북한군에 입대하지 않은 장정들에 대하여 군에 입대하도록 유혹하였다.[58] 당시 북한에 있어서 북한군에 대한

<표 6-2> 애국채 및 애국미 헌납 현황(1949년 12월말 현재)[59]

구분 / 도별	헌 금(애국채)	양 곡(애국미)
평 양 시	8,343,8000	226
평 안 남 도	46,613,000	10,926
함 경 남 도	45,510,000	8,739
함 경 북 도	28,272,000	1,893
평 안 북 도	25,320,000	11,248
강 원 도	27,466,000	5,327
황 해 도	19,978,000	7,494
자 강 도	3,764,000	2,611
직 접 헌 납	712,000	-
합 계	281,073,000	48,464

대우는 예외적으로서 병사들의 식사는 일반 직장의 간부급 식사보다 훨씬 좋았고, 북한군 소좌(소령)의 봉급은 2,300~2,400원 정도로 정부의 국장이나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전쟁을 1년 앞둔 군 확장과 사기를 위한 북한당국의 계획된 선전적 조치였다.

다섯째, 직장 및 농촌 단위로 17세부터 45세까지의 청장년들을 모아 '청년훈련대'를 조직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이들을 통제, 지도하여 군사훈련과 체력단련을 실시, 장차 군사동원에 대비하였다.[60]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강화는 물론이고, 군사동원체제를 운용하고 선전사업을 실시하였고, 1950년 3월이 되자 남한에서 북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38선으로부터 5㎞ 이내의 주민을 모두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등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민족지도자 조만식(曺晩植)과 공산주의자 김삼룡(金三龍), 이주하(李朱河) 등을 교환하자는 방안도 제시해 왔으며, 전쟁 직전인 6월 19일 다시 남한 국회가 동의한다면 국회에 의한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남한이 평화제의를 거부하였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전쟁계획

의 제2단계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61]

한편 북한정권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사회의 조직화, 경제개혁의 실시와 군수산업의 육성, 계획경제의 시행을 거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위장하기 위해 1949년 4월 세계평화옹호대회에 참가하여 군비경쟁 및 전쟁예산 증액 반대를 주장하였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사장비와 군수품의 자체 생산에 주력하여 1946년부터 이미 군수산업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라는 내각을 구성한 후 같은 해 8월 10일 '주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비하여 북한 전역에 건설했던 군수공장(육군조병창 등)을 모두 국유화하여, 정비하기 시작하였다.[62]

이는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 공산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북한을 남한에 대한 '민주기지'(民主基地)를 축성해야 된다고 선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전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것을 결심하고, 1946년에 포병기술훈련소라는 병기 기술자 양성소를 설립하였다.[63] 이어서 평양 교외에 위치한 평천에 첫 병기공장을 세우고 이듬해인 1948년 3월에 기관단총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고 전문 분야별로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권총, 박격포 등 여러 가지 화기와 탄약·포탄·수류탄 등도 생산하였다. 1948년 12월 12일에는 기관단총(일명 다발총)에 대한 국가 시험사격 행사가 김일성의 참석하에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1948년 12월 12일 다발총 생산 기념 국가시험 사격대회에서의 기념 촬영. 우로부터 최용건, 김책, 김일, 김일성, 강건

이 행사에 참석한 김책(金策 : 부수상 겸 산업상), 최용건(崔庸健 : 민족보위상), 강건(姜健 : 총참모장), 김일(金

一 : 민보성 부상 겸 문화훈련국장) 등에게 무기를 수여하고 기념촬영까지 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박격포와 수류탄 그리고 소총탄과 포탄 등도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1949년 2월에는 평천 공장을 제65호 공장으로 확장 발전시켜 전쟁 전에 이미 소화기와 탄약 등을 생산하여 전쟁에 대비하였다.

1949년에는 원산조선소(元山造船所)에서 자체 생산한 경비함의 진수식을 가졌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남포조선소에서도 같은 종류의 경비함을 생산하였다. 1949년 8월 30일에는 원산조선소에서 북한 최고의 철제경비정(경비함 제41호)을 제작 진수시키고 '로동호'라고 명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소리가 작고 속도가 빠른 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64]

이어서 남포조선소에서도 '경비함 제51호'를 제작, 진수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반 농업용이기는 하나 '트랙터'를 1948년 5월에 자체 생산함으로써 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전차 생산의 모체가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여 무기 및 군수품 자체 생산에 착수하여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1950년에 접어들어 북한은 전쟁준비를 위한 병력 및 장비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 1950년 중 무기를 원조해 달라는 요청 메시지를 스티코프에게 전하였고, 그는 김일성의 메시지를 1950년 1월 7일 모스크바에 전달하였다.[65] 이 요청은 수락되었고 차후 북한은 소련의 차관형식을 통한 1억 3천만 루불 어치의 추가 장비・탄약・기자재 등에 대한 상환을 1950년 말까지 금 9톤(53,662,900 루블), 은 40톤(4,887,600 루블), 모나자이트 정광 15,000톤(79,500,000 루블) 등 비금속철(非金屬鐵)로 갚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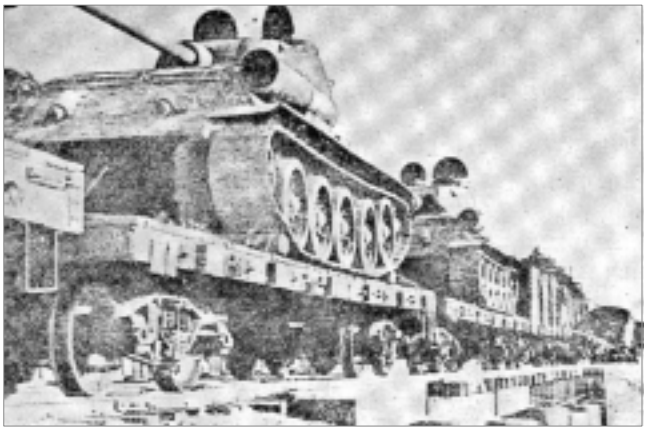
이어 김일성은 2월 4일 지상군을 10개 사단으로 증편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소련에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이것의 골자는 "첫째, 공채발행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하도록 한다. 둘째, 보충적으로 3개 사단 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 셋째, 1951년분 차관을 1950년에 이용하는데 대한 요청을 제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66]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조·소 군사비밀협정'(朝蘇軍事秘密協定)에 따라 지원될 군사장비 및 훈련용 기동장비와 일부의 경장비 및 중장비가 지원되고 있었으나, 대량의 기동장비(전차 및 자주포 등)와 중장비와 항공기 등의 대대적인 지원은 전쟁개시 3개월 전부터 본격화되었다.

1950년 4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비밀방문을 계기로 촉진되어 4~5월에 청진(淸津)항에는 T-34 전차·SU-76 자주포, 수백문의 박격포·곡사포·고사포, 무전기 등 통신장비, 도하장비 등의 공병장비, 탄약 등 하역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각종 전쟁 물자를 실은 소련선박이 입항(入港)하였다.[67] 5월 29일 김일성은 스티코프 대사에게 4월 모스크바 회담시 합의된 무기와 장비가 이미 대부분 북한에 도착했음을 통보하였다.[68]

이러한 사실은 북한 수상실 직속 무력후방위원회(武力後方委員會 : 위원장 김책)에서 책임지도관이었던 소련계 한인 이황룡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소련에 보낸 무기원조요청 계획서 작성에 참여했으며, 1950년 3월초부터 4월초 사이 한 차례에 15만톤씩 모두 네 차례 60만톤의 85㎜ 고사포, 76㎜ 직사포, 105㎜ 직사포, 전차, 수뢰어뢰, 어뢰정 9척, 공병기재, 포탄 등 각종 무기가 소련에서 반입되어 38선 전방에 배치되었다고 하였다.[69]

이때 반입된 무기는 100대의 T-34 전차, 60대의 자주포, 60대의 IL-10 항공기를 비롯한 중무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막대한 수량의 유탄포, 대포, 박격포, 대전차포, 기관총과 소총, 자동차, 모터사이클, 폭약, 기술장비, 통신자재, 군사부품, 의약품, 유류, 말, 수레 등이 반입되었다.



당시 전쟁 준비를 위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소련제 T-34전차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은 북한의 차관이나 현물상환 형태인 유상판매(有償販賣)였다. 예컨대 1950년 3월 북한정부는 북한군의 무장과 증강을 위해 소련정부에 1억 2천~1억 3천만 루블 상당의 군사기술장비 공급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당해년도 금 9톤, 은 40톤, 모나즈석 농축광 1만5천톤 등 1억 3천 8백 5만 5백 루블 어치를 소련에 공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군사고문의 현지급여 및 숙박 음식 등 체제비도 북한측이 전담했다. 또한 전쟁 중 소련 군사학교에 파견된 조종사, 통신 등의 북한 수련생의 훈련비도 모스크바 계좌를 통해 정식 지불되었다.[70]

물론 훗날 계수를 마친 결과 북한의 미지불 채무액이 상당히 남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 프롤레타리아 정신에 입각한 무조건적인 원조 선전과 실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현대전에 필수적인 해군과 공군도 새로 무장되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유능한 군사고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950년 3월 8일 스티코프 대사는 장교 54명을 북한 해군 고문으로 파견할 것도 요청해 놓고 있었다.

스티코프가 요청한 북한군 해군함대 고문 인원규정안에 따른 주요 직책과 계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함대본부는 모두 13명으로 함대사령관 고문(해군소장), 함대 참모장 고문(대좌), 작전국장고문(중좌), 전투준비국장 고문(중좌), 공병국장 고문(중좌), 재정국장 고문(대좌), 좌타함장 고문(소좌), 포병함장 고문(소좌), 기계함장 고문(소좌), 함대사령관 고문 비서(소위), 기밀업무책임자(준사관), 운전사(준사관)이며 이외에 문화교육국장 고문(대좌), 선전선동국장 고문(중좌), 문화교육전진기지소장 고문(중좌) 등이다. 1950년 2월 소련정부의 유일한 중앙군사기구인 무력성은 각각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양분되었다. 동년 3월의 북한 해군함대 고문단 파견과 관리는 이때부터 소련 해군성이 직접 담당하였다.

소련에서 지원되는 무기수송은 해상과 육로 수송망이 이용되었는데, 해상수송은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민간 상선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나진·청진·원산항에 하역하였고, 당시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나진과 청진) 병력이 동원되었다. 하역된 전차를 비롯한 자주포와 각종 포 및 중화기, 통신기재, 공병 도하장비 등 각종 장비를 다시 열차로 각 부대 또는 계획된 38선 지역으로 수송하였다.

육로수송은 만주철도를 이용하여 도문(圖們)에서 남양(함경북도), 안동(중국)에서 신의주로, 또 하나의 수송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홍의(함경북도)로 수송되었다. 이 때 무기의 인수인계는 당시 북한군 부총참모장 최인 소장과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의 쿠바노프 장군과 카투코프 장군 사이에서 이루어졌다.[71]

유류문제는 본격적인 기동장비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추진되었다. 즉, 1949년 초부터 특별군사사절단의 코로테예프 장군과 스티코프 대사는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가 사용할 유류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한 결과, 소련으로부터 원유수송이 용이한 원산 부근에 정유능력 연산 10만톤의 정유공장을 건설하였고, 역시 원유수송을 고려하여 함흥항으로부터 수송이 용이한 장진호 부근 지하에 12만 4천톤의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1950년 초까지 이들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연료만으로 북한군이 사용할 양이 비축되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1950년 4월 초 루마니아의 앵글로 더취 회사로부터 휘발유 10만톤을 수입하여 저장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한 유류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항공기는 몇 차례로 나누어 은밀히 지원하였고, 전쟁이 임박한 1950년 6월 18일에는 IL-10형 폭격기 60대를 소련 조종사들이 직접 연포비행장까지 수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체 생산한 소화기와 탄약, 소련에서 지원 받은 전투기를 비롯한 기동장비와 중장비 그리고 전쟁동안 사용할 비축 유류 문제까지 해결함으로써 남침전쟁을 수행할 모든 준비는 1950년 5월말까지 완료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인력동원 체제를 마련하고 또 경제건설에 우선하여 군수산업에 여러 기술을 동원하여 국가 총동원체제를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제 3 절 위장 평화공세와 전쟁계획

1. 북한군의 군사훈련과 남침회의

1) 북한군의 군사훈련

북한군의 각 부대는 1948년 전까지는 각 부대 단위별로 기초 군사훈련을 완성하였고, 소련군이 철수한 후 특별 군사사절단이 도착하면서부터 주로 공격전투에 중점을 둔 부대전투훈련이 시작되었다. 1949년 7월 전반기까지는 사단 또는 여단별로 훈련이 실시되어 오다가 1949년 7월부터는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국장 김웅 소장)에서 통제하는 대부대 훈련이 실시되었다.

1949년 7월 초순, 북한군 창설 후 최초의 민족보위성 주관의 '전차 및 포병을 동반하는 보병 사단 공격에 대한 지휘관 및 참모의 야전훈련'이라는 '군단급 지휘조 야외기동훈련'을 평양 남방 중화로부터 황주 사이의 구릉지대에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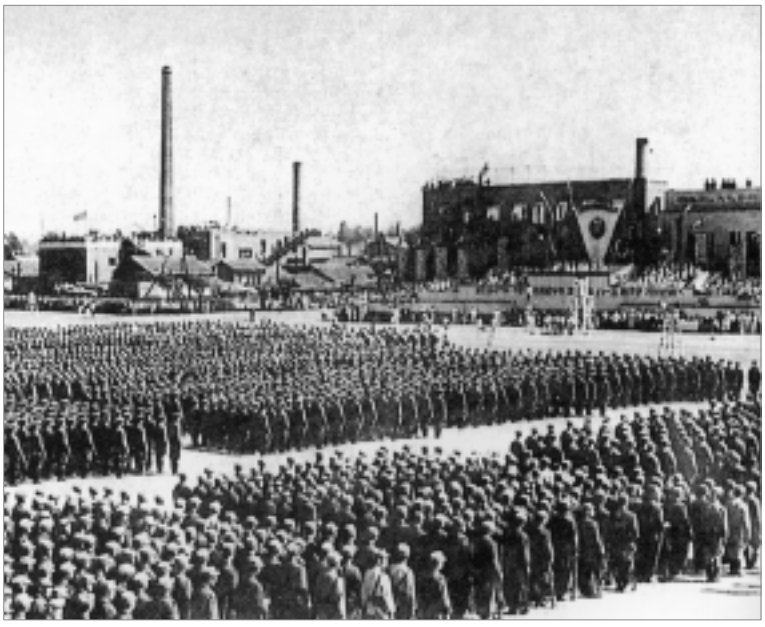
이 훈련에는 각 부서의 소련 고문관 10여명과 총참모장 강건 중장, 포병 사령관 무정(武亭) 중장, 문화 부사령관 김일(金日) 중장, 전투훈련국장 김웅(金雄) 소장 등 고급군관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군단장에는 강건 총참모장이, 군단 참모장으로 김광협(金光俠) 소장이 임명되었다. 사단 단위의 전투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단의 상급기관인 군단에서 사단의 작전을 지도할 지휘관 및 참모활동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야외에서 각 제대 지휘부를 기동시키고 사단의 진출에 따라 군단사령부도 이동하면서 상황처리를 해 나가는 훈련이 실시되었다.

당시 북한군에는 군단 편성이 없었을 시기였음에 비추어 군단 지휘훈련을 시도한 것은 장차 전쟁시 10개 사단이 넘는 부대를 지휘할 것에 대비하여 중간 지

휘기구로 군단을 편성할 것을 고려한 시험적 훈련의 의미를 띤 것이었다. 이 훈련에 직접 참가한 전투훈련국장 김웅 소장과 김광협 소장이 1950년 6월 10일 새로 편성되는 제1, 제2군단의 초대 군단장으로 각각 임명된다.[72] 제105전차여단은 1949년 8월부터 야외기동훈련으로 전환하여 화력과 기동, 충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1949년 9월 전군 기동연습시에는 최우수 부대로 선발되기도 하였다.

한편 소련 군사고문단은 1949년 늦가을부터 각 사단과 특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들이 파견된 지 약 1년을 경과하면서 육성해 놓은 북한군의 능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데 있었다. 첫 단계는 각 부대별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고 다음 단계로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의 작전계획에 의하여 합동훈련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9년 12월 소련 군사고문단과 북한군의 지휘하에 실시된 훈련은 중공군에서 입북되어 신편 제5사단과 제6사단에 대한 '보병사단 공격 훈련연습'이 민족보위성 주관하에 실시되었다. 이 훈련을 위해 김웅(金雄) 소장을 단장으로



해방 4주년 기념식
사열중인 북한군
(1949. 8. 15)

하는 약 50명의 훈련강평단(講評團)을 구성하였고 소련 군사고문관들도 참여하였다.[73]

신의주에서 실시된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 훈련은 2일간 실시되었는데, 첫 날은 사단사령부에서 훈련부대의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강평단에서 훈련사단에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작전국 작전과장 이학구 대좌는, "공격전투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 방면으로 이동하다 공격하는 전투, 적과 대치상태에서 공격하는 전투, 적의 진지방어에 대한 공격전투, 도하공격인데, 제6사단의 공격은 '대치상태로부터의 공격전투'를 상정하여 훈련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6사단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오후 10시경에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공격개시는 다음날 조기 공격으로 실시되었으며, 강평단은 사단지휘부와 함께 신의주 남방에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았고, 사단은 오후 늦게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훈련이 종료되었다. 훈련결과에 대한 강평은 19시부터 사단사령부에서 실시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제6사단의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투경험이 많은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작전의 조직적 계획성과 군사이론 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강평단장인 김웅 전투훈련국장은, "타 사단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훈련 성적을 보여준 제6사단에 대해서 더 없는 기쁨과 만족을 표해 마지않으며, 특히 신속성과 열성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지휘, 그리고 각 병과간의 협동작전에 있어서는 다소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미비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현대전에 있어서 작전계획과, 협동작전의 불완전이란 패배로 연결되는 최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평하였다.

그는 이어서, "우리 인민군은 소련군의 가장 근대화된 군사과학과 경험, 그리고 군사 제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세계 어느 군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군대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리고 창군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인민해방군은 초창기 모택동의 십육자 전법인 게릴라 전법으로 전투를 하였고,

점차 근대무기로 무장한 장개석군과 전투할 때는 비교적 고도의 군사이론인 '군사 10원칙'에 입각하였다. 이처럼 군관 동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진 군사과학지식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선진 군사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강평에서 남침 직전 북한 북한군대가 적용하는 군사교리와 훈련 수준, 그리고 고급장교의 수준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즉, 중공군에서 국민당군과 몇 년간의 전투경험을 가진 제6사단(전 중공군 166사단)병사들의 훈련 상태는 소련 고문단이나 강평단의 강평처럼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급장교들의 작전계획 능력이나 전투지휘 능력, 제반 협동작전 능력 면에서는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북한군이 적용했었던 전술은 전적으로 기초적인 소련군 전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일부 연안파 출신들은 모택동의 유격전술과 군사 10원칙에 의한 중공군 전술은 다소 익숙하였지만 현대전에 대한 소련군 대부대전술은 미처 체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74]

북한군 제6사단에 대한 강평이 끝난 후 곧 이어서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5사단에 대해서도 같은 요령으로 사단공격 훈련연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5, 6사단에 대한 별도의 사단공격 훈련연습은 중공으로부터 입북된 사단의 훈련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각 사단의 공격훈련시 부여한 '적과 대치상태에서의 공격', 또는 강력한 '방어진지에 대한 공격'이라는 훈련 임무는 남침을 고려한 공격훈련이었다.

훈련을 통해 대체로 조선의용군 출신 등 한인부대인 제5・제6・제12사단・제4사단 18연대 등 5만여명의 병력은 부대 검열시 일반 전투훈련, 즉 사격, 소대공격, 백병전 등의 전술을 포함하여 결함이 없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시기 실전이 없는 사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75]

한편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제2사단은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대공포 훈련과 정찰훈련, 각개전투부터 대대전투 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제1사단은 함평(함남 북청부근) 중심으로 도로파괴와 지형정찰연습 등에 주력하였다. 북한군 공병부대는 동년 2월 평양북방의 '간리'(평양북방 15.6㎞ 지점에 위치

남침을 앞두고
군사훈련 중인
북한군의 모습

하고 있고, 1949년 봄 공병연대가 창설된 곳)에서 축성지대의 돌파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계속해서 대동강 상류에서 실전적인 도하작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월말에는 '적진 돌입과 적 배후에의 침투'라는 합동연습을 실시하였다. 이 연습에 참가한 부대는 2개 보병사단과 전차부대 및 기계화된 1개 보병사단이었다.

훈련내용은 진지전면에 설치된 장애물과 지뢰를 제거하고 적의 영구진지(방카)를 폭파하기 위하여 공병으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적의 강력한 축성진지를 돌파하게끔 하는 훈련이었다. 이를 위해서 각 사단(당시 5개 사단)의 공병대대에서 1개 소대씩 차출하여 3일간 훈련시켜 귀대시킨 후, 사단별로 전 공병에게 이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훈련성과는 매우 우수하였으며 소련 고문관들도 그들이 육성한 북한군 전술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축성진지 돌파 훈련에 이어서 공병연대는 평양 북방 대동강 상류에 있는 북차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소련군 공병연대에 비하면 기자재 면에서 1/10 정도로 빈약하였지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도하장비를 총동원하여 최초의 도하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비록 좋은 기상 조건과 대안에 상대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부교를 만들어 전차나 포를 도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 훈련에서 1일 1개 사단 정도는 도하시킬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도하장비는 그 후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1개 세트가 도착하여 다소 보완되었다.

한편 195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민족보위성에서는 매일 아침에 실시하는 정치

학습(소련 공산당사, 유물론, 마르크스 자본론, 대조국전투 등) 외에 총참모부 소속의 상급군관 약 40명을 대상으로 「특별군사문제연구반」을 편성하여 4일간에 걸쳐 강의 및 토의가 실시되었는데 모두 남한의 지리와 군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모두 상급부대의 참모장교들에게 남한 지역의 지형 분석과 남침용 작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로 남한의 지형, 산맥, 하천, 도로, 철도망, 교량 등 특히 한강과 임진강에 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의정부, 평택, 수원 등의 지리를 연구 검토하였다. 당시 훈련에 사용된 지도는 소련에서 제작된 1/25,000의 군사작전지도였다.

1950년 3월까지는 대부대 야외기동훈련을 일단락 하고, 1950년 4월부터 소련에서 긴급 수송된 각종 장비를 수령하여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시사와 시운전 등을 실시하면서, 동계간에 실시한 대부대 훈련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대별로 보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련은 무력남침을 위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육성하였고 이와 동시에 소련 군사당국자들은 소련의 영웅칭호의 소유자이고 야전 전투경험이 풍부한 바실리에프(Vassyliev) 중장을 새로 군사고문단장에 임명하여 남침준비에 총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2) 남침회의

북한에서 평화옹호투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남침을 앞두고 당과 정부 그리고 군 수뇌들과 통일문제에 관해 토론하자고 제기하였다. 이에 1950년 5월 17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소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한 회의'라는 위장된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76]

여기에는 김일성을 위시하여 부수상겸 외상 박헌영, 민족보위상 겸 북한군 총사령관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민족보위부상 겸 북한군 문화부사령관 김일, 북한군 포병부사령관 무정, 문화선전상 허정숙, 북한군 참모장 강건, 그리고 각 사단장(전원)들이 참석하였다.

의제는 물론 평화적 통일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무력침공을 위한 예비회의 성격이었다. 여기에서 박일우는 평화적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자기에게 무력통일을 맡겨준다면 내무성 군대(내무성 예하의 38경비여단과 기타 경비대)만으로 20일 내에 부산까지 함락시키겠다고 장담하였으며, 무정도 "우리 북한군은 강합니다. 전차도 있고 대포도 있고 비행기도 함정도 있습니다. 침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토론에 최용건은 "그렇게 간단히 이길 수 있을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무력침공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발언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여러 사람이 발언하였는데 거의 이구동성으로 무력수단에 의한 통일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었다. 이러한 발언을 주도한 사람은 주로 현직 사단장들이었다. 허정숙도 빠지지 않고 자기도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무력침공은 내무성 군대나 인민군 어느 한쪽만이 할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합쳐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일성이 회의를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화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무력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시기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군사관계자들은 무력통일의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는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끝까지 평화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전쟁 직전 어느 시점까지 무력침공계획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시키기 위한 위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 앞서 김일성은 이미 1949년 12월 18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정세가 더 이상 통일을 지연시킬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해방 5주년을 맞는 1950년 8월 15일에 남북한을 망라한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77]

박헌영으로서도 소련이 김일성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남한의 전면침공 주장에 동조하여 자기의 입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남북노동당 합당당시 남한에 잔존하는 남로당 세력이 20만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남노당 간부들이 북에 가서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바로 이 남로당 20만명이라는 과장보고 때문이었다. 그것은 북한에서 전면전쟁을 개시하고 남한각지에서 남로당지지 세력이 들고일어나 궐기하면 2주일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박의 주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한 부분이 있었다.

김일성은 1950년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라고 하면서 "통일된 조선인민 만세!"를 외치면서 전쟁구상을 구체화 하였다.[78]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위장평화공세

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

북한은 정권을 수립한 이후 이를 혁명의 근거지로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남북한의 정치세력을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1949년 3월 모스크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일성은 앞으로의 남침을 위해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그는 정치적 실권을 자기파(빨치산파)에 집중시키는 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것은 결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결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제의는 먼저 1949년 5월 12일 남로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근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전국노동조합평의회 등 8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기되었다. 즉, 이들은 "전조선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을 역설하고 "미군철퇴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로 일치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79]

이에 지지를 표명한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다시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1차 회의를 5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남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갖추도록 하였다.[80]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는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제의대로 1차로 평양에서 5월 25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이 참여하였으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허헌·홍명희·김달현·이영 등이 선출되었으며, 이어 6월 7일 2차 회의에서 결성안이 결정되었다.[81] 2차에 걸친 준비회의에 이어 조국전선결성대회는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한의 71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 704명이 선출되었고 그 중 676명이 참석하였다.[82]

조국전선의 공식적인 창설대회는 6월말에 열렸으나 이미 6월초부터 북한의 매체들은 조국전선의 창설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평화적 통일방책 선언서지지 궐기대회가 계속되었는데, 그 예로 함경북도만의 경우 1개월간에 3,500여회, 39만여명이 참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는 선전을 대내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좌익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월북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80여명이 월북하였다. 그 밖에 남로당을 비롯한 정당·사회 대표들은 1948년이래 북한 정권에 참여 중이거나 활동 중이었다.[83]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문제는 '현하 국내외 정치정세와 우리의 임무' 보고, 조국전선 계획에 관한 보고, 조국전선의 조선인민에 대한 관심표명, 위원회의 보고, 중앙위원 선출 등이었다.[84] 준비위원장 김두봉은 개회사에서 투쟁목표로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남한정부를 타도하고 국토완정(國土完整)과 통일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41명의 주석을 선출하였다.[85]

조국전선결성대회는 27일 강령 초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위원회 의장단으로 김두봉·허헌·김달현·이영·유영준·정노식·이극로 등을, 조국전선 중앙상무위원으로, 김일성·김두봉·허헌·박헌영 등 27명을 선출하였다.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김일성·김두봉 등 99명이 구성되었다.[86] 조국전선 의결기관으로 조국전선대회·중앙위원회·중앙확대위원회·상무위원회·의장단회의가 중심이었으며, 의결사항은 지방의 각도 위원회와 시군 위원회를 통해 하달되었다.

조국전선은 미군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철수, 조국통일, 민주개혁 강화, 인민공화국 절대지지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열세 가지의 기본강령을 발표하였다.[87] 조국전선이 제시한 강령은 미군과 유엔 한국위원단의 철수, 조국의 반역자 반대, 조국통일, 민주개혁 강화, 인민공화국 지지 협조, 반제노선 등이 중요한 실천 강령이었다. 즉, 조국전선은 북한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목표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결집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조국전선은 결성대회의 보고에서 "어느 당과 단체이고 조국전선에 참가하였다고 해서 자기들의 독자적 활동에 있어 조국전선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하였지만,[88] 강령에서 나타나듯이 조국전선에 참가한 정당 사회단체는 북한 정부를 지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국전선의 결성은 남북한의 모든 진보적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북한 정권 지도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강령은 직접적으로 북한정부의 정강 실현과 연결되어 그것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대남 제의는 한국정부에게 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국전선은 결성 당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한국정부에 제시하였다.[89] 이 제의의 요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우리인민 자체로 실천, 주한미군 철퇴, 유엔 한국위원단 철수, 남북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 동시실시,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 실시 등에 있다.

물론 전술적 의미였지만, 이 제의는 남북한 정부와 기관들이 선거준비를 지원하되, 결과에 따라 기존 정부는 해체하고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북한 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민족반역자의 배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4월 최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반동매국노들의 정권타도'를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제안이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면서 대외정당성을 얻기 위한 전술적 고려였다.

북한 정치지도자들은 남한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양면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당시 북한이 자체 내에서는 북한에서 80%, 남한에서 70%의 득표를 통한 좌파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음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90] 또 김구와 김규식 세력을 조국전선 내에 끌어들이지 못하더라도 평화적 통일과 협상이라는 틀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보다 쉬운 일일 것이므로 북한 지도부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91]

조국전선이 결성된 후 북한은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당시 북한이 남파한 유격대는 1948월 11월 4일~1950년 3월 28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2,400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 중 2천여명이 사살 또는 생포된 것으로 나타났다.[92]

이와 같이 북한이 각 정당 사회단체를 결합하여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투쟁을 전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국전선의 결성은 북한의 평화통일 제안과 남한의 거부로 이어지는 결과인 대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무력통일을 위한 대내 명분확보 및 전시 동원체제 강화를 위한 이중의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김일성은 조국전선 결성식에서부터 그 후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표명하고, 또 1949년 8월 북한정부가 조국전선의 선언서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평화적 통일방책을 실현함에 있어 제 정당·사회단체들에게 온갖 협조를 다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93]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무렵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평화통일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력통일론을 견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 확보뿐 아니라 소련으로부터의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조국전선의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일만한 세력들이 월북했거나 아니면 조직이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었다. 또한 조국전선이 북한정권 절대 지지 강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 그 실현가능성이 애초부터 고려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조

국전선 호소문 지지운동에 대하여 군중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었다. 북노당 인제군당 회의록에 의하면,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면에 33명을 파견하여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출판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94]

한편 북한군은 1950년 3월 중순부터 38선에서 북방 5㎞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후방에 소개(疏開)하도록 명령하였다(단, 38선 경계 주민 제외). 이리하여 동 지역의 가옥에는 부대와 유격대들이 점령하였다. 그 목적은 빈틈없는 전쟁준비로서 남한의 정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술이었다.

또한 그들은 38선에 배치된 한국군에게 심리적인 선전 전단(삐라)을 항공기로 살포하였다. 그러던 중 항공기 1대가 동년 3월말 황해도 평산군 누천리(平山郡 漏川里)에 기관고장으로 추락한 적이 있었다. 기체 내에 남아 있던 많은 전단에는 "친애하는 국방군 장병들에게! 미제에게 과감히 항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극 지지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평양방송도 대남 방송시간을 이용하여 국군 장병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총과 군수품을 사용하여 누구를 타도하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인민의 악독한 적인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여 당신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를 위하여 그 무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속히 무기를 가지고 빨치산부대나 인민부대로 넘어오라! 그리하여 매국노를 타도하기 위한 애국적 투쟁에 참가하라!" 등의 선전공세에 주력하였다.

북한 부수상겸 외상인 박헌영도 남노당의 재건사업을 위하여 4월 24일 월북당원을 소집하여 그들이 미구에 남침시 남한 내에서의 무장봉기와 지하당 복구사업 계획을 검토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중업(李重業)을 남파시켜 모든 준비를 지령하였다.[95]

한편 국내적으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북한은 농민조합연맹, 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 등으로 후원회를 조직하여 소위 비행기와 전차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금품을 모금하는 강권을 발동시켰다. 그밖에도 평양방적공장 건설, 신안주 관개공사, 평양역사 건축 등의 구실 하에 15억원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하여 노동당원 전 당원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수탈하였다.

또한 소위 북한군대를 위한 <육류성출대금(肉類誠出代金)>이라 하여 인민대중들에게서 현금을 수탈하고 그밖에 재봉틀을 비롯하여 무명버선, 도토리 등에 이르기까지 강제 공출케 하였다. 이러한 공출물자와 무기수송으로 차량은 통제되고 여행도 통제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남조선 이승만의 군대들이 북조선에 쳐들어온다"고 기만선전하고 이에 대한 대비라고 연막전술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2) 전쟁은폐를 위한 위장평화 제안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3차 UN총회(제87차회의, 1948. 12)에서 채택한 통한(統韓) 원칙의 지지를 거듭 표명하자, 1950년 신년사에서 남한 '해방'과 무력통일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은 무력통일 방안을 강조하면서 공격개시 직전까지 사단급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종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은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귀국 후 전쟁계획 시나리오에 따라 북한군을 38선 지역으로 전투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침략에 관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갖추는 한편, 대한민국의 6월 위기설 분위기를 이용하여 전쟁 은폐를 위한 평화적인 연막공세를 취하였다.

전쟁의 직접적인 빌미와 명분이 없는 가운데서 무력침략을 하면 국제적인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결원칙에 위한 남북한 총선거 제안으로 연막을 치고자 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사전에 대한민국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전선은 전쟁 직전에 실시된 남한의 5·30선거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선거전부터 무소속과 중간파후보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었다. 5·30선거에는 무소속후보들이 대거 등록하였으며, 이들의 득표는 예상대로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이 당선되었다.[96] 또 중간파 인사로 김규식·조소앙·여운홍·장건상·원세훈·안재홍이 출마하여 이들 가운데 조소앙·원세훈·장건상 등이 당선되었다.

특히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조소앙은 서울 성북에서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을 전국 최다득표로 눌러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민족자주연맹의 원세훈이 윤치영과, 장건상이 경찰국장 출신 김국태과 대결하여 당선되었다. 중간파의 후보들이 조국전선에서 주장한 소위 민족반역자라고 지칭한 후보들을 꺾고 당선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6월 3일 평양방송을 통해 "530만의 북한인민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치하에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서명하였다"고 방송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에 대한 공세는 대한민국의 5·30총선거에 대한 항변으로서 이에 대한 결과가 무소속이 과반수(정원 210명중 130명)를 차지하자 이를 남한국민들의 반정부적 징후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조국전선은 6월 5일 제5차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어 7일 다시 거의 1년 만에 중앙확대위원회를 소집하여 평화통일을 제의하는 호소문 등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국국민들의 통일을 갈망하는 정서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지난해 6월에 조국전선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안을 제시한 바 조선인민이 불원간 역사적인 제5차 해방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동 제안이 실현되지 못하게 된 그 책임이 남한측에 있다"고 비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자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이승만 도당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중앙위원회는 조국전선의 통일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할 목적으로"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97]

이 호소문에서는 1949년 6월 결성 당시 평화통일 제의와는 격차가 있음이 발견된다. 이때의 주장이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이승만 등 9명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한 국회와의 타협 가능성을 일정하게 열어 놓고 있다는 데 그 차이가 있었다.[98]

이들의 계속된 방송(6. 7~8)에서 "3인의 북한대표가 대한민국의 정당사회단체의 지도자 및 유엔한국위원단에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10일 10 : 00시부터 17 : 00시까지 38선 북방의 여현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다. "1년 반 동안 유엔한국위원단은 38선을 제거하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토의할 목

적으로 북한 인민들과 접촉할 것을 기도하여 왔다. 이 임무수행에 있어 위원단 의장으로서 나는 1950년 5월 1일 한국인 전체에 호소하여 통일달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단은 귀측이 파견한다는 대표와 접촉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게일라드 위원단 사무국장대리가 6월 10일 16 : 00시에 여현역에서 귀측대표와 회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위의 희구를 직접 전달할 것이니 회견할 용의가 있는가를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방송하였다.

10일 유엔한국위원단 대표 게일라드 사무국장 대리는 여현에서 북한대표와 접촉하여 호소문을 받았다. 북한측의 대표 3명(이인규 · 김태홍 · 김재창)은 호소문을 전달하고 38선을 월경(越境)하여 남하하다가 한국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후송되었다.

이날 평양방송에서는 돌연히 조만식(1946. 1. 1부터 감금)과 노동당 남한총책 김삼룡 및 이주하(1950. 3 서울에서 체포)와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민족지도자 조만식 부자(父子)와 대한민국에 체포된 남노당의 지하공작 지도책 거물인 김삼룡, 이주하를 38선상에서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에서는 북한측의 상투적인 선전수단이라고 하지만 성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절차 일체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일임하였고 위원단에서는 이것을 신중이 고려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6월 19일 밤, 서울중앙방송을 통하여 조만식을 개성까지 보내면 건강을 진단한 후에 김 · 이 양인을 이북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6월 22일까지 회답을 하라는 요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이후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회답 없이 묵살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토통일을 위해서 UN의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가 행해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일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의 제안에 호응하는 자는 매국도당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고 북한의 저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북괴가 이 제안을 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가 지난 4월 7일에 북한에게 명한 것이다. 전 국민은 이 점에 깊은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99]

이와 같은 북한의 첫 시도는 대한민국의 거부로 끝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들은 제2단계의 공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대담하게 3인의 조국전선 특파원을 서울에 파견하여 조국전선의 6월 7일부 호소문을 남한의 반이승만과 반김성수계 정치인들에게 일일이 수교할 뜻을 표명했다. 동 특파원은 6월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38선을 월경 남하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한국경찰에 즉각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같은 날 저녁 서울방송은 이 사실을 보도했으니 이로써 북한은 또 하나의 선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약 1주에 걸친 악에 찬 비난과 욕설은 마침내 이들 특파원의 구명을 위해 무력의 사용도 고려해야 하겠다는 그들의 의사를 표시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6월 16일 아침 이승만 대통령은 UN감시하에 이북도 선거를 실시한다면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라도 포섭할 용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니 남북협상이니 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 다만 UN감시하에 어떤 날을 작정해서 선거를 하겠다면 10만명에 대하여 한 사람씩 100명이든 80명이든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면 선출된 사람이 김일성, 박헌영, 허헌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고 포섭할 용의가 있다. 이리하여 남북통일이 외국의 간섭 없이 UN승인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머지 2년 동안 대통령임기를 민주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바이다. 최근 이북에서 조만식 선생을 남으로 보내는 대신 경찰에 체포된 김삼룡, 이주하를 대신 보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만약 진실로 그들이 1주일 내로 조만식 선생과 그 수행원 한 사람을 남으로 보내 준다면 우리는 전기 두 사람을 살려서 보낼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김삼룡, 이주하에 대한 취조를 1주일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

이 무렵 6월 13일 소위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위협적인 언사와 미구에 전개될 무력침공에 대한 돌파구의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을 감행하였다. 조국전선은 허헌의 보고를 통하여 남북협상에 참여한 조소앙·여운홍·원세훈 등이 5·30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표명하도록 촉구하였다.[100]

조국전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두봉)에 평화통일 대책을 문의

하였고, 상임위원회는 그 가능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0년 6월 19일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8개항으로 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서를 제시했다.[101]

이 결정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 국회를 단일 입법기관으로 연합하고, 입법기관은 공화국의 헌법과 공화국 정부를 구성하며, 입법기관 총선실시를 주장하고, 그 실천조건으로 민족반역자 체포 등의 조국전선확대중앙위원회 호소문의 내용보다 강도 높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소위 민족반역자들을 대표자협의에서 단순히 제외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체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남한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간 통일문제에 관한 협의의 주체를 '국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6월 21일 자기 대표단을 서울로 파송한다든지 혹은 남조선 국회 대표단을 평양에서 접견하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듯이 국회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무렵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 국회가 조국전선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고 있었다.[102]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상임위원회의 통일방안에 대해 국회로부터 아무런 구체적인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김두봉은 6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평화적 통일을 위해 조국전선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남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북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103]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통일방안을 제시한 때에 맞추어 북한군 총사령부는 공격부대의 이동과 동시에 극비리에 남침명령을 차례로 해당부대에 하달하고 있었다.[104] 그러나 남침이 개시된 다음날인 26일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장 김두봉의 명의로 군사위원회 조직 강령에서, "남조선 이승만 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이 38선 이북 전 지역에 대한 불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국내에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또는 동족상잔의 내란을 일으킨 이승만 매국역도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105] 조국전선에서도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쟁을

“미제 지시에 의한 동족상잔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106]

따라서 조국전선은 결의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6월 19일 다시 대한민국 국회가 동의한다면 국회에 의한 통일방법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남한의 평화제의 거부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전쟁계획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남북인사교환 제의에 대해 6월 22일 밤에 대북 방송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위와 아울러 24일 여현에서 교환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조만식을 구하기 위해 방송을 통해 다시 26일 14 : 00시~16 : 00시 38선 이남 1㎞ 철로선 즉 여현 역에서 3㎞이남 지점을 교환 장소로 정해서 교환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음모로 보고 어떠한 수단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 6월에 들어와서 불과 2주 사이에 두 차례의 평화통일 제의와 조만식 교환제의 등을 연발하는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였다. 북한이 제의한 1949년 6월 30일의 ‘평화적 통일방책선언서’를 발표한지 불과 보름 만에 김일성은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여 온 국민이 전쟁준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가 하면, 1950년 6월 7일의 ‘평화적 통일호소문’을 제의한지 3일 후이고, 또 조만식과 교환하자고 제의한 6월 10일과 바로 같은 날 북한군 참모총장 강건은 비밀군사 작전회의를 소집하여 6월 23일까지 전투개시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남한의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의 이목을 ‘전국 선거 실시 호소문’이니 ‘남북 인민교환’이니 하는 위장된 평화적 통일방책 제의로 기만하여 남한 침공계획을 위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제적 위장평화공세

(1) 소련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세계대전 후 소련의 적화정책에 대하여 미국은 봉쇄정책(封鎖政策)으로 대항,

유럽지역에 경제원조와 군사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부닥친 소련은 각국 공산당을 동원하여 세계적인 일대 선전공세를 전개하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침략적 군비를 대폭 확장하고, 대외적으로 평화정책을 소리높이 외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각국 공산당 중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을 동원하여 평화옹호와 전쟁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1948년 8월 25일 폴란드 브로츨라프(Vrozlav)시에서 공산주의 문화인들을 규합하여 세계평화옹호문화인대회를 열게 하고 프랑스 파리(Paris)에 본부를 두는 평화옹호문화인 국제연락위원회를 조직하였다.[107]

이리하여 동위원회를 통하여 소위 평화옹호세계대회의 소집을 호소케 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1949년 3월 갑자기 대회를 조직하여 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발표하였고, 동년 4월에 파리 및 프라하(Prague)에서 열린 평화옹호세계대회 등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음에는 1950년 3월 중순에 스웨덴(Sweden)의 스톡홀름(Stokholm) 평화대회를 소집하고 원자무기의 사용금지와 군비축소를 제의하였고 원자무기를 사용한 나라(미국)를 전범으로 규정할 것 등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찬성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북한정권은 서명운동에 가장 먼저 참가하여 조선평화옹호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민중들에게 동 대회의 평화호소문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 1950년 4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한 지방의 평화옹호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북한전역에서는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들은 북한민중들에게 "당신은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원하십니까?"라는 설문을 배부하여 그 답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여 명분을 얻고자 하였다. 약 2개월간의 서명운동을 끝낸 5월말 현재로 570만명이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자는 남녀성인과 아동, 유아까지도 포함시켜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의 북한 인구를 900만으로 추정할 때 이와 같은 북한의 기만은 앞으로 남한을 침략하는데 있어 구실과 명분을 찾는데 있었던 것이다.

소련은 극동의 중국, 한국, 인도 등지의 공산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고차적인

수단으로 국제기구를 마비시킴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UN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북한의 남침과 중공의 대만침공으로 야기될 국제적 분쟁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을 불법화시키며 기술적인 도피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들을 차례로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련대표 말리크(Malik)는 돌연 중화민국 정부의 대표가 참석하고 있는 회의에 같이 동석할 수 없으며 앞으로 그들의 관여 하에 의결된 여하한 결정도 무효임을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말았다.[108] 이에 대한 세계여론은 소련의 또 다른 정치적 술책으로 간주하고 중·소 회담이 한참인 때에 중공에게 행해진 우호적 의사의 표시인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소련이 실제로 노린 효과는 그것이 아니었다. 소련은 고의적으로 유엔 안보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극동에 있어서의 소련의 계획에 대한 외부에서의 비난과 압력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그 주안이 있었다. 소련이 1939년 12월 국제연맹의 참석을 거부하고 핀란드를 공격한 것과 유엔 참석 거부와 남침과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었다. 유엔기구에 파견된 소련과 그 위성국가의 대표들을 1950년 1월 16일을 기하여 순차적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마침내는 워싱턴에 있는 13개국 극동위원회와 도쿄의 4개국 동맹위원회에까지 확대되었다. 이 소동은 1950년 6월 1일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에서의 소련대표의 퇴장을 고비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소련은 1950년 봄부터 북한, 미국,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 및 군사전문가들을 순차적으로 모스크바로 소환시키고 있었다. 이들의 소환은 앞으로 극동에서 전개될 새로운 침략에 대한 모종의 상호협조와 유익한 조언을 얻기 위한 저의가 게재되어 있었다.

스티코프 대사는 4월초 대한민국 정부가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월 30일에 실시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있자 곧 모스크바로 떠났다.[109] 그간의 소련의 외교관례로 보아 그의 귀국은 분명히 소련 국방성과 극동군사령부가 짜낸 남한침략에 대한 군사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그것은 스티코프가 소련에서는 한반도문제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충고는 소련의 극동 전반에 걸

쳐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의 저명한 소련의 극동전문가들이 동년 5년 중순을 기해 축차적으로 소환되었다. 즉,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의하면 파니프스킨(Panyvshkin) 주미 소련대사 겸 극동위원회 소련 수석대표는 동년 5월 12일에 미 국무차관 웨브(Webb)를 방문하고 동 16일에 귀국하게 되었다고 통보했다.[110] 같은 날 16일 그는 워싱턴을 떠남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여행은 자기 주치의의 권고에 의해서 약 2개월간 본국에 가서 요양할 목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여행의 목적이 정무연락에 있지 않다고 위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 남침으로 인하여 제기될 미국이 소련에 대한 항의를 둔화시키자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보다 약 10일 후 『뉴욕타임스』지는 동경에 상주하고 있는 4대국 동맹위원회의 소련대표인 데레프양코프(Derevyankov) 중장이 그의 수석보좌관인 키스렌코프(Kislenkov) 소장을 포함한 약 50명의 주일소련대표부 직원을 인솔하여 돌연 5월 27일 요꼬하마를 떠나면서 이스포리쉬프코프(Espolyshivkov) 소장을 임시대표로 정했다고 보도했다.[111]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 동경에서는 어수선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나 수일 후 데레프양코프의 공보비서인 세르겐코프(Sergenkov)는 아래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여 항간의 소문을 부인했다. "데레프양코프 장군은 휴가 차 떠났다. 아마 2, 3개월 걸릴 것이다.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의 주일 사명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아직 이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군은 휴가를 마치면 곧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레프양코프 중장이 소련의 극동정보망의 총책임자이며 주일소련대표부가 그 본산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대규모 소환은 그저 평범한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소환은 남침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에 주류하고 있는 소련의 주요 이사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요직에 있는 자들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의 소련체류 기일을 정하고 모스크바로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은 아니었다.

(2) 일본 공산당의 동향

중국본토가 적화되자 일본공산당의 기본노선인 평화혁명에 대한 외부 공산권에서의 비판의 소리는 날로 격증되었다. 때마침 1950년 초 모스크바에서 중·소 회담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소련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코민포름(Cominform)의 기관지는 '원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For a Lasting Peace and for a people's Democracy)라는 기사에서 발표하고 초점을 유럽에서 극동으로 돌렸다. 일본공산당을 비판하여 폭력전술로 노선을 바꿀 것을 성토한 것이었다.[112]

즉, 1950년 1월 6일자 '일본정세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의 코민포름 불리틴의 논설은 종전 후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전략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본화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그의 전술을 반마르크스, 반사회주의적 이론이라고 공격했다.[113] 이 보도가 외신을 타고 동경에서 발표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돌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노사카와 그의 국내파는 당황의 빛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관한 일본 공산당의 의견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따라서 일본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적하여 공산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적(우익계)의 모략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 비판이 재차 모스크바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고 1월 11일에는 주일소련대표가 코민포름 기관지 동 사설의 원문을 일본공산당에 인도하게 되자 당내 국내파는 처음으로 초조한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114] 그 다음날 이 문제토의를 위해 일본공산당은 정치국회의를 소집했으나 국내파와 국제파가 심각한 대립을 보여 결국 다수파인 국내파(노사카는 국내파의 2인자임)의 의견대로 동 비판을 재차 부정하고 일본공산당의 특수성을 재강조했다.

이러한 일본 공산당의 결의에 대한 외부에서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모스크바가 아닌 북경 인민일보는 1950년 1월 17일자 논설 '일본인민 해방의 길'에서 나타났다.[115] 동 논설은 1월 6일부 코민포름 기관지의 논설을 지지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공산당에게 중국인민이 걸어온 길을 택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 두 차례의 비판을 받은 다음 국내파도 극동을 싸고도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동년 1월 25일에 개최된 월례중앙위원회의에서는 이 두 차례에 걸친 비판을 긍정하고 노사카는 소위 자기비판을 통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함으로써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이다.[116] 여기서 일반의 관심은 무엇이 노사카와 그의 국내파로 하여금 모스크바와 북경의 지령에 복종케 하였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사카가 자기비판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명이 일본공산당에게 부여되었다는 점과 코민포름 비판이 시간적으로 볼 때 모택동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남침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행해졌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즉, 소련은 북한이 남침에 성공하면 그 여세를 몰아 일본에서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심산아래 그 중심역할을 일본공산당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1950년 1월 25일 이후 합법에서 비합법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현저하게 그 조직을 전환하게 되었다.[117]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도처에서는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좌익계 학생의 데모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테러가 성행하여 마치 무력투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공산당은 동년 5월 18일에 이르러 새로운 당헌을 발표하게 됨으로써 전환한 제1단계 과정을 완료했다. '혁명에 있어서의 일본공산당의 기본적 의무'라는 '1950년 논제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소위 '사랑 받는 공산당'은 무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적 공산당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서 일본공산당의 폭력투쟁은 5월 이후 지하로 숨어들게 되고 그중 정치국원이며 조총련(朝總聯) 김천해(金天海)는 6월 15일 북한으로 도피하여 전쟁 중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118]

5월 하순경에는 벌써 일본공산당은 새 이념에 부합되는 새 조직의 구축을 완료했다. 소련의 극동정보책임자인 데레프얀코프 중장이 모스크바로 떠난 지 3일만에 일본공산당은 공공연하게 미군에 도전했다. 그들은 5월 30일 궁성 앞 광장

에서 행한 “공산당을 수호하고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시위행사에서 조총련을 포함한 공산폭도들이 4명의 미군헌병에게 투석전을 벌린 결과 8명의 공산폭도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 점령하에 최초의 불상사였다.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점에서 그 동기에 관한 의문이 있다. 시기상으로 보아 이 사건은 소련이나 중공에 대하여 일본공산당이 그 임전태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로서 판단된다.

이 5・30소동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맥아더 장군은 즉시 일본공산당의 합법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참모회의를 마친 맥아더 장군은 일본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게 보낸 그의 서한에서 7명의 일본공산당 정치국원을 포함한 24명의 중앙위원을 공직에서 추방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익일인 6월 7일에는 17명의 적기(赤旗 : 일본공산당 기관지) 간부들이 여기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 내리기 수 일전에 이들 모두는 이미 지하로 잠입하고 특히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쿠다 큐이치(德田球一)는 데레프양코프 중장이 일본을 떠날 때 그와 동행하였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공산당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수반하여 구 조련계의 동향도 매우 활발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1950년 4월부터 북한은 이들에게 빈번히 지령과 실천요강을 수교하더니 마침내 남침을 10일 앞둔 6월 15일에 이르러 구 조총련이 재건되어 조국방위위원회(祖國防衛委員會)라는 간판으로 재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부터 북한과 조총련 간에는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3. 전시 편성과 남침 작전계획

1) 북한군의 전시 편성

북한군은 1950년 3월~6월에 3개의 민청훈련소를 주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3

개 사단(제10・13・15사단)을 편성함으로써 모두 전투준비를 갖춘 10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119] 뿐만 아니라 이때 도입된 전차로 독립전차연대를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북한군의 기갑능력은 1개 여단과 1개 연대로 증강되었고, 총 240여대의 T-34를 보유하게 되었다.[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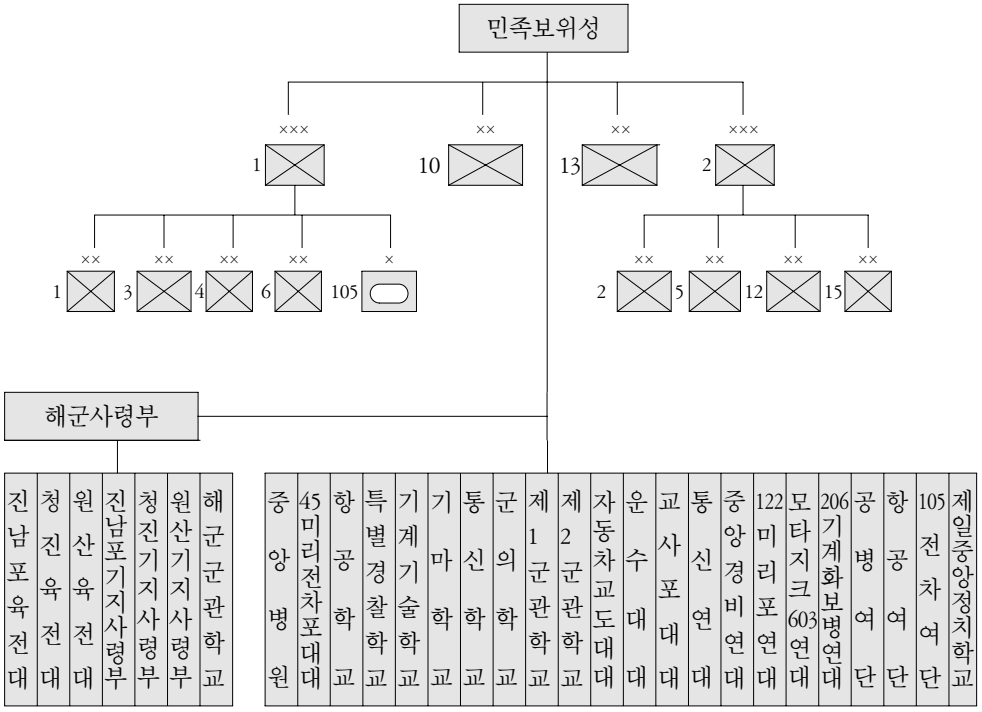
이렇게 소련군 장교들에 의해 훈련되고 소련에서 공급한 장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쟁 직전까지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로 성장하였다. 전쟁 직전 북한군의 사단 창설현황과 편성을 정리하면 <표 6-3>과 <표 6-4>와 같다.

위와 같이 북한정권의 수립이후 북한군 보병사단은 제5・제6・12사단 외에도 중공군이나 소련군에서 입국한 병력들이 보충되었다. 그런데 이들 전체 병력중 1/3 가량이 전투 유경험자들이었으며, 북한사단의 편제 인원은 11,000명이었다.

<표 6-3> 북한군 사단의 증편(1948. 10~50. 6)[121]

부 대	사령부	지휘관	창설시기	창설 경위	예속 부대
제 4 사단	진남포	이권무 (李權武)	1948 .10	총사령부 직할부대	제16・17・18연대
제 5 사단	나남	마상철 (馬相哲)	1949 .8	중공 제164사	제10・11・12연대
제 6 사단	신의주	방호산 (方虎山)	1949. 10	중공 제166사	제13・14・15연대
제12사단	원 산	전 우 (全宇)	1950. 5	중공 제15사	제20・31・32연대
제10사단	숙 천	이익성 (李益成)	19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와 평남 병력	제25・27연대・제107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최용진 (崔勇進)	19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 병력	제19・21・23연대
제15사단	화 천	박성철 (朴成哲)	19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북 병력	제45・49・50연대

<표 6-4> 전쟁 직전 북한군 전투편성(1950. 6. 24일 현재)



새로 증편된 북한군 7개 사단은 예하 3개 연대의 완편 사단으로서 소련제 82㎜/122㎜ 박격포, 76.2㎜/122㎜ 야포, 45㎜ 대전차포, SU-76 자주포 장비되었다. 다음의 표는 전쟁 직전 당시 한국군 정보국이 북한군 병력과 장비를 판단한 것이다.[122)]

<표 6-5>와 <표 6-6>과 같이 당시 국군은 북한군 병력 및 장비에 대해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한국군에 비해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월등한 공격력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소련군 장교 및 고문관들에 의해 훈련되고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장비로 무장하는 등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전쟁직전 육군 10개 보병사단, 해군 3개 위수사령부, 공군 1개 비행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로 증강하였던 것이다.

<표 6-5> 북한군 병력 판단(1950. 6. 25일 현재)

구 분		부 대 명	규 모
민족보위성 직속 인민군	육 군	보병 10개 사단	120,880
		전차	8,800
		122㎜ 야포연대	1,300
		고사포연대	1,200
		모타지크 연대(603)	3,500
		기계화보병연대(206)	3,000
		공병여단	2,500
		통신연대	1,000
		제1군관학교	1,500
		제2군관학교	2,500
		유격대	2,500
		계	148,680
	공 군	공군	2,000
		계	2,000
	해 군	기지	2,100
		육전대	9,000
		해안포	2,600
		계	13,700
	합 계		164,380
내무성 직속 경비대	38경비대		22,600
	철도보안대		2,600
	조·만 국경경비대		2,800
	각도 보안대		2,800
	중앙경비연대		2,000
	평양시 보안대		1,200
	계		34,000
총 계			198,380

<표 6-6> 북한군 장비 판단(1950. 6. 24일 현재)[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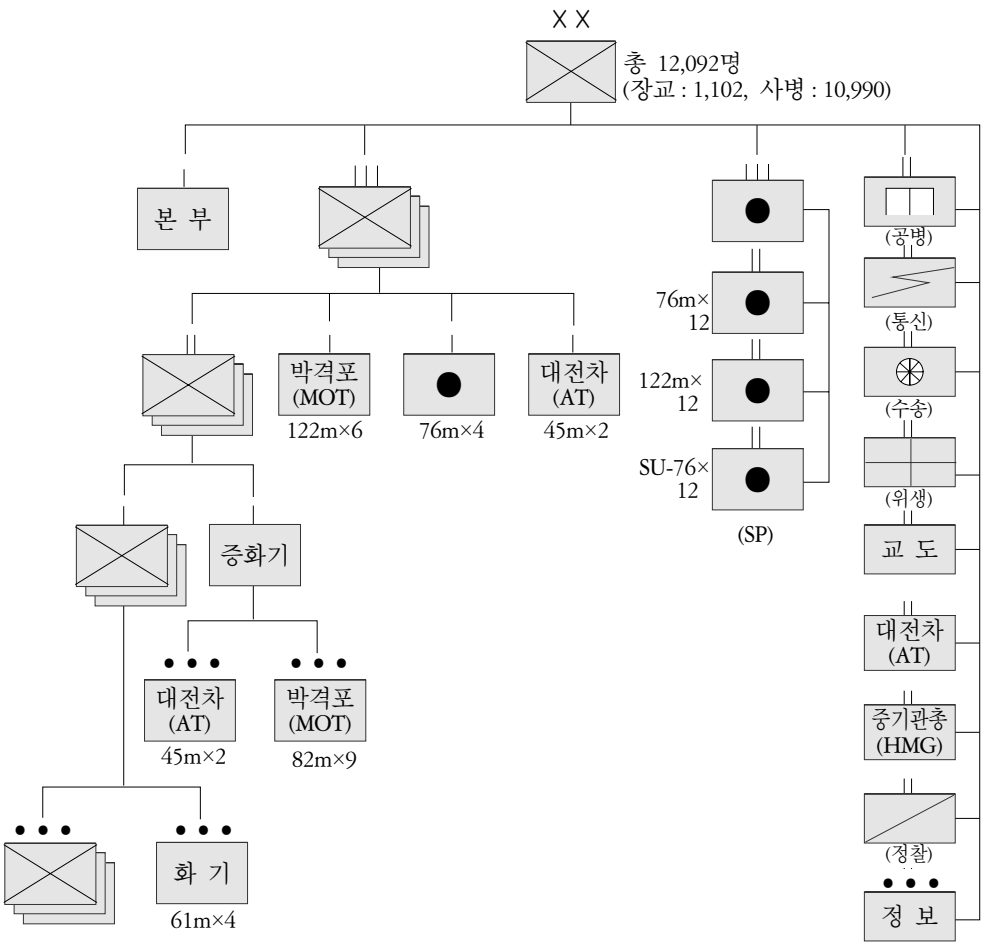
		대전차포	야 포		박격포		고사포		기 갑			항공기	경비정
		45㎜	122㎜	76.2㎜	120㎜	82㎜	85㎜	37㎜	T-34	SU76㎜	장갑차		
육군	보병 10개 사단	480	120	360	180	890	-	-	-	176	-		
	전차	-	-	-	-	36	-	-	242	-	-		
	122포연대	-	36	-	-	-	-	-	-	-	-		
	고사포연대	-	-	-	-	-	12	24	-	-	-		
	모타지크연대	16	-	-	16	-	-	-	-	-	54		
	기계화보병 연대	12	-	4	6	27	-	-	-	-	-		
	제1군관학교	6	4	4	6	9	-	-	-	-	-		
	제2군관학교	-	-	-	-	18	-	-	-	-	-		
	소계	514	160	368	208	980	12	24	242	176	54		
	38경비대	36	12	12	18	162	-	-	-	-	-		
	합 계	550	172	380	226	1,142	12	24	242	176	54		
공군	공군	-	-	-	-	-	-	-	-	-	-	211	-
해군	기지	-	-	-	-	-	-	-	-	-	-	-	30
	육전대	36	-	12	18	81	-	-	-	-	-	-	-
	해안포	-	-	72	-	-	-	-	-	-	-	-	-
	계	36	-	84	18	81	-	-	-	-	-	-	-
총계		586	172	464	244	1,223	12	24	242	176	54	211	30

따라서 그 수적인 측면에서 북한군은 2단계에 걸쳐 급격히 팽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제1단계는 1948년 후반부터 1949년 8월 사이 약 2배가, 제2단계인 1949년 후반부터 1950년 3월까지는 약 50% 가량 각각 증강되었다.

이는 한국군의 병력과 비교해 보면 1949년까지 대체로 비슷한 수를 유지하다가 전쟁 직전에 접어들면 198,380명까지 증강시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비 면에서 북한은 1949년 8월 무렵부터 남한에 비해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장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월등한 전력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쟁 직전 육·해·공군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강시켰다.

<표 6-7> 북한군 보병사단 편성(1950년 6월)



국군은 총 8개 사단 중 5개 사단만이 1개 포병대대씩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3개 사단은 그나마 포병대대가 없는 사단이었다. 또 4개 사단은 3개 보병연대 편성이나 나머지 4개 사단은 2개 보병연대 편성이다. 여기에 비하면 북한군 사단은 모두 3개 보병연대에 1개 포병연대(4개 포병대대)를 가진 완편 사단이다.

그러므로 포병연대를 포함하여 북한군은 총 40개 연대인데 비해 한국군은 총 22개 연대규모로 열세하였다. 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곡사포는 8분의 1(1 : 8.2), 박격포는 2분의 1(1 : 2.4)로 열세하였고, 다만 적의 전차도 파괴 못하는 대전차포(57㎜ RR, 2.36″RKT)는 북한군보다 4배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군은 국군에 없는 1개 전차여단과 1개 전차연대의 전차부대와 모터찌크연대와 같은 기동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군에 단 한 대도 없는 전차 258대와 자주포 176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항공기에 있어서도 국군이 연습기 22대를 보유했을 뿐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데 비해 전투기 17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당시 남북한의 사단 편성과 주요 화력장비를 비교해 보면 같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전투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국군과 북한군 사단의 보병대대 수(각 9개 대대)는 동일하나 장비면에서 거의 절반 수준이고, 포병에 있어서는 포병대대 수와 포병장비 수 그리고 포병사거리에서까지 국군이 절대적으로 열세하였다. 그러므로 보병사단의 수만을 가지고 피아의 전투력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실제 전력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남침 작전계획

(1) 남침의 기본전략

김일성과 스탈린이 모택동과 협의하여 수립한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며,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124]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북한군 참모부가 바실리에프 예하의 고문단과 함께 수립한 남침 공격계획을 승인하였다.[125] 남한이 6월 11일 '조국전선'측이 제의한 평화통일안을 거부하게 되자, 다음날 북한군은 계획대로 6월 12일 38선 이북 10~15㎞ 지역으로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스티코프 대사는 6월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모스크바에 보고하였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작전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연막전술'로 6월 16일 남한 국회에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하였다고 전하였다.[126]

한편,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이 전쟁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한 사항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 문제였다.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고 특히 핵무기 개발에서 뒤져 있는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단독으로서는 미군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미 점령군의 철수를 사전에 촉구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가 미국의 태평양방위선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으나,[127] 남침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김일성과 스탈린이 심사숙고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스탈린이 "소련이 원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참전하지 못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128]

김일성은 비록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전제로 남침을 최종 결심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의 참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이승만 도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든 행동을 모든 인민은 예리하게 감시해야 하며 경계심을 고조시켜야 한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국참전에 관한 우려는 주로 스탈린이 제기한 것이다. 모택동의 입장도 "미국이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때문에 3차대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129]

다시 말하여 남침전략의 기본은 미국의 지원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속전속결로서 서울을 점령하여 승리를 굳히고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국군에 대한 상대적 우세, 미군의 대한반도 전략적 가치 저평가, 미군이 비교적 취약하고 광범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정복이 무리가 없는 안전한 모험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뒤에 북한은 다음과 같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북한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130]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회담에서도 "남조선인민은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 그는 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일격을 가하기만 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 인민의 권력이 승리할 것"이라며 인민봉기론(人民蜂起論)을 들어 전쟁 조기종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131] 유성철(兪成哲)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과 지도부는 "일단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역에 잠복해 있는 20만 남로당 당원이 봉기하여 남한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박헌영의 호언장담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면 끝나는 것으로 오판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북한군 부총참모장과 정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상조(李相朝)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132]

박헌영의 주장은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부추긴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동시에 후에 그가 숙청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133] 따라서 남침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북한군의 공격과 더불어 남노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민중봉기를 촉발시켜

남한 정부가 스스로 전복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김일성은 남침 다음날 방송을 통하여 '남한인민'의 봉기를 촉구하였다.[134]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군의 남침 후 고대하던 인민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일성은 후에, "미국 놈의 고정간첩 박헌영은 남조선에 지하당원이 20만명이나 되고 서울에만 6만명이 있다고 떠벌였는데 20만명은 고사하고 우리가 낙동강 계선에 진출할 때까지 단 한건의 폭동도 없었다. 만일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단 몇천명이라도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부산까지 해방시켰을 것이고 미국 놈들은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35] 이는 당시 김일성이 인민봉기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방증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고 그 후 선거를 거쳐 동년 8월 15일까지 서울에 통일 인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속전속결 작전계획은 1950년 6월 10일 제3사단장 김광협(12일부 제2군단장)이 북한군 장교들에게 "이번 작전은 2주일이면 충분히 끝마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달한 지시문에서 확인된다.[136]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작전 소요시간은 2주일 정도였으며 북한이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월 22일경 스탈린은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 암호전문의 교신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차후 일체의 암호전문을 교신하지 말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양과 소련 외무성간에는 1950년 말까지 교신이 중단되고 있었다.[137]

이와 같이 북한군은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남침시 배합전술을 구사하기 위해 인민유격대를 사전에 남파하고, 전쟁을 개시한 후 3일 이내에 서울을 점령하며, 또 인민봉기에 의해 한국정부가 전복되면 미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속전속결로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통일 인민정부를 수립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2) 선제타격작전계획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0년 4월부터는 소련에서 도입된 신형장비의 조작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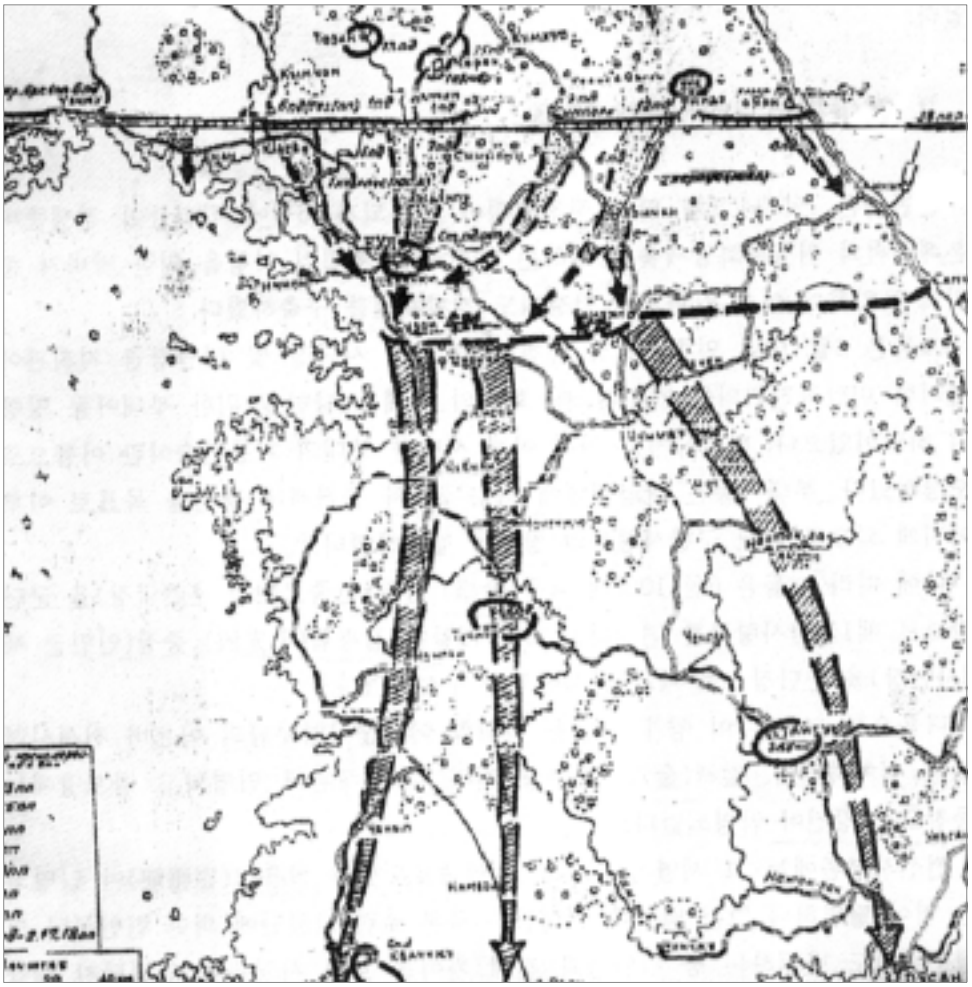
및 대부대훈련에서 나타난 결점을 보충하는 북한군의 부대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 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한 바 있었고,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소련 군사고문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가 중심이 되어 1950년 5월 29일에 소위 선제타격작전계획(先制打擊作戰計劃)을 완성하였다. 이 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고,[138] 마지막으로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를 받은 후 남침일자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139]

북한지도부는 이에 따라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김일성은 공격개시일이 더 늦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남쪽에 누설될 수 있으며, 7월에는 장마로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5월말을 선호하였고 고문관들을 설득하여 6월로 결정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이 계획은 6월 16일에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동의도 받았다.[140] 이와 같이 북한의 남침계획은 '김일성·스탈린·모택동'간 긴밀한 협의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공격개시일을 일요일로 계획한 것은 한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을 예상하여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었다.

김일성과 소련군사고문단과의 남침회의

그런데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으로서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어로 된 이들 문서의 사본이 전쟁 중에 노획되었다. 이는 소련고문관이 주동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증거이다. 당시 북한군총사령부 간부들의 군사경력으로서는 전쟁계획을 세우기에 부족한 반면, 고문관들은 소련군 작전 전

<상황도 6-1>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는 러시아 군역사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상황도이다.

<상황도 6-2> 북한군 남침계획(선제타격작전계획)

접이식

문가들이었다. 유성철은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하에 소련군 출신인 포병사령관, 공병국장 등과 함께 극비리에 이를 한글로 옮겼다.[141] 이로써 드디어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이 완성된 것이었다.

이 계획은 전투명령서·부대이동계획·병참보급계획·기만계획으로 구성된 공격계획이었다.[142] 김일성의 작전방침에 따라 그들의 공격집단을 금천－구화리, 연천－철원, 화천－양구 지역에 집중하여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3일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한 후 그 전과를 확대하며 남해안까지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도록 수립되었다.

정보계획은 6월 20일 소련군 군사고문단 작전팀이 북한군 각 사단에 발령한 계획이며 노어로 작성된 군사극비 문서였으며 다음 3단계로 계획되었다.

제1단계 : 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서 3일내에 서울을 점령한다.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한다.
제2단계 :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한다.
제3단계 :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서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한다.[143]

위의 3단계 작전단계와 이에 따른 정보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요약하면 <표 6－8>과 같이 정리된다.[144]

<표 6－8>에 의하면,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제1단계 작전은 인민군의 지상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고,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 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145]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자체의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철원－포천－의정부 축선과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제6사단(－1)과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의 지원하에 금천－개성－문산 축선과

<표 6-8> 단계별 작전목표

작전단계	작전지역	정보계획 목표
제1단계 방어선 돌파 및 주력섬멸	38도선 방어선에서 서울(수원)-원주-삼척선까지	- 전방 방어체계 - 서울 방어조직 - 예비대 투입
제2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	서울(수원)-원주-삼척선에서 군산-대구-포항(경주)선까지	- 후방 방어진지 - 사단의 전방이동 - 증원부대 및 물자 유입
제3단계 소탕작전 및 남해안으로 전개	군산-대구-포항(경주)선에서 부산-여수-목포선까지	- 접근로상의 방어조직 - 항구의 작업활동 - 항구의 방어대책

구화리-고랑포-문산 축선으로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제6사단 일부로 옹진반도 및 김포반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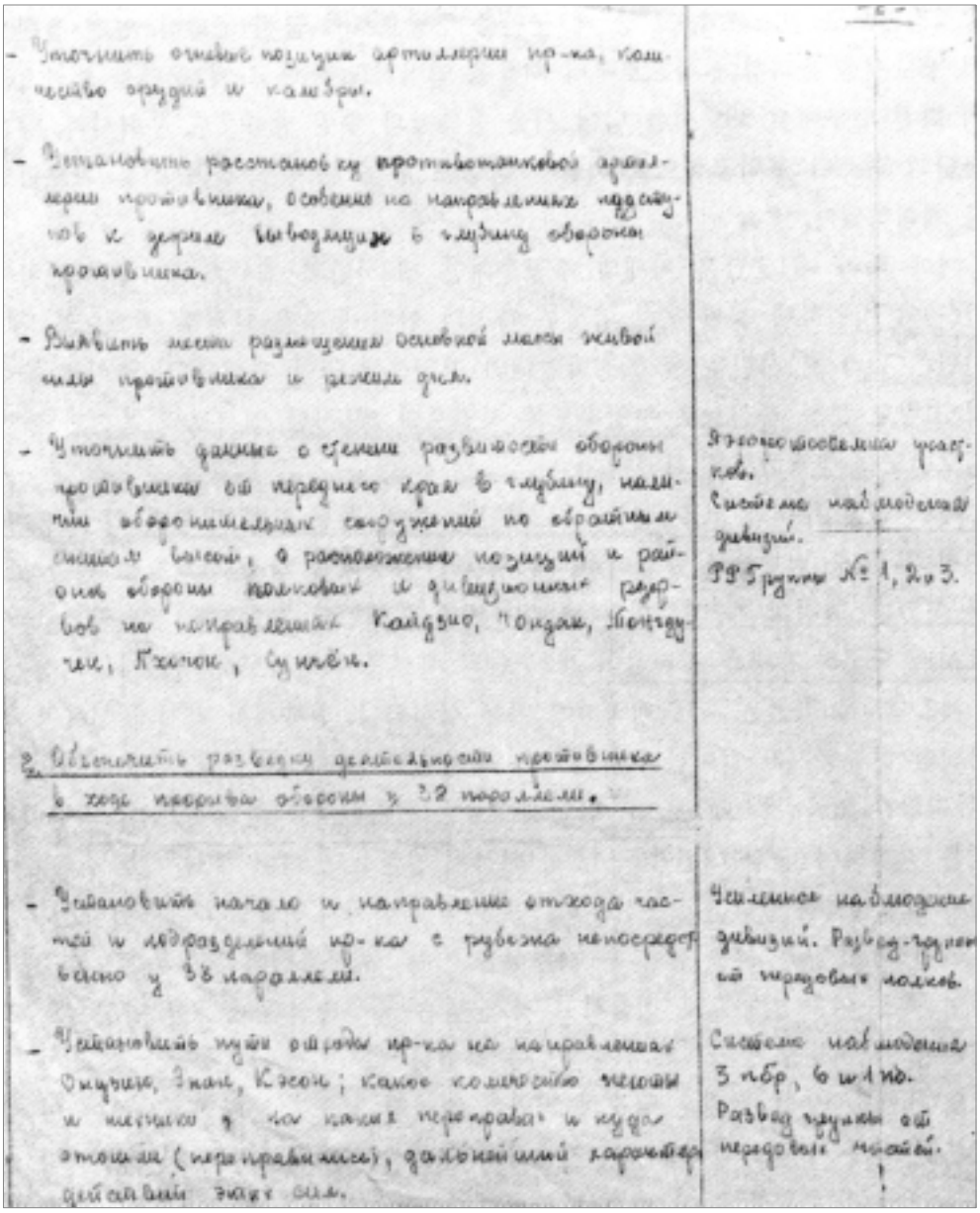
제2군단은 주력인 제2사단과 제12사단을 화천-춘천-가평 방향과 양구-홍천-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투입하고, 제5사단을 양양에서 강릉-삼척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를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2, 3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에 이어 실시되나, 전략계획 자체가 서울이 점령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전과확대로 들어가 예비부대를 격파하며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이어 제3단계로 전환하여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고 부산-마산-여수-목포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146]

이때 제1군단은 서울 점령 후 재편성을 거쳐 서부축선과 중부축선으로 진격하여 목포-여수 방면으로 진출하고, 제2군단은 동부축선과 동해안 방향으로 진격하여 마산-부산방면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147]

또한 제2, 3단계 작전은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미 지원군의 전개 이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부대배치를 끝낸다는 전략에 따라 신속한

북한군 정보계획(노어)



- Уточнить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пр-ка, количество орудий и калибры.

- Установить расстановку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артиллерии противника, особенно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дступов к дефиле выводящих в глубину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 Выявить места размещения основной массы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и режим дня.

- Уточнить данные о степени развитости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от переднего края в глубину, наличии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о обратным скатам высот, о расположении позиций и районов обороны полковых и дивизионных резервов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йдзио, Чондан, Тонгдучен, Пхочон, Сунчён.

Эксплоатация участков.
Система наблюдения дивизий.
РР Группы № 1, 2 и 3.

2. Обеспечить разведку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тивника в ходе прорыва обороны у 38 параллели.

- Установить начало и направление отхода частей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р-ка с рубеж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38 параллели.

Усиленное наблюдение дивизий. Развед-группы от передовых полков.

- Установить пути отхода пр-ка на направлениях Онцзюн, Энан, Кэсон; к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пехоты и техники, на каких переправах и куда отошли (переправились), дальнейший характер действий этих сил.

Система наблюдения 3 пбр, 6 и 1 пд.
Развед группы от передовых частей.

기동에 중점을 두어 제1단계 작전과는 달리 군단간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개의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전략 종심'으로 깊숙이 진입하도록 하였다.

실제에 있어 제1단계작전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계획목표도 달성하였으나 제2, 3단계 작전은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것은 박헌영 등 남로당계가 주장했던 인민봉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군의 저항도 완강하였으며 미 지원군도 신속히 전개하는 등 상황이 그들의 전략 판단과는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북한군의 남침계획은 국군의 주력을 한강선 이북에서 포위 섬멸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제1단계 작전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한강 이남지역으로의 진격을 위한 후속계획 및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는 그들이 남한 내 좌익세력의 능력을 과신한 때문으로, 일단 공격을 개시한 후 서울을 단시일 안에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각 지역의 남로당 세력들이 총 봉기하게 될 것이므로 한강선 이남지역이 거의 무혈로 점령되리라고 낙관하였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군의 끈질긴 저항과 대다수 남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과소평가한 점도 있다.

서울 점령의 의의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고 또 예상보다 손쉽게 서울을 탈취한 사실에 도취된 북한 수뇌부는, 서울 점령 후 만 3일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군으로 하여금 재편성 및 지연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허용하였다. 물론 초전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후이므로 다음 단계의 작전을 위하여 휴식 및 재편성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승리를 자축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더욱 드높인다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승기를 놓친 셈이 되었다.

끝으로 남침계획상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책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148] 이것은 물론 군사적인 차원을 넘은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적어도 북한 수뇌부와 이 전쟁을 정책결정의 차원에서 지도한 소련 당국은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아예 개입을 하지 않거나 개입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므로 그 안에 충분히 한반도를 적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예상 밖으로 신속히 개입하여 미 지원군을 조속히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극동의 '한 작은 분쟁'을 복잡한 국제전쟁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세계전략상 소련의 적화팽창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거둔 국제정치상의 가장 큰 성과, 즉 역으로 소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받은 타격은 서유럽 각국으로 하여금 집단 안전보장체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미국을 맹주로 하는 군사동맹으로 결속시켰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유럽에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게 버티고 있게 됨으로써 소련의 적화팽창 의도에 크나 큰 손실을 입혔던 것이다. 소련은 세계전략상 2차적인 중요성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한반도에서 그들의 영향권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유럽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이야말로 김일성 집단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던 소련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149]

제 4 절 전투배치와 전투명령 하달

1. 지휘체제

북한은 1950년에 들어와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군사문제연구반'에서 남한의 정치, 경제, 지형, 도로, 철로 등을 분석하였고, 국군의 편성·장비·배치 그리고 창설과 증편과정 등 전쟁지도를 위하여 비밀리에 국군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도하에 동년 5월말 작전계획이 완성되자 조선전선을 통한 평화제의를 집중시키는 한편 작전이행을 위한 전쟁지도체제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들은 동년 6월 10일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실에서 여단 및 사단장이 참석한 비밀작전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주제는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 명령'의 하달이었으나, 비밀유지를 위해 이를 사단급 부대의 기동연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였다. 부대이동은 작전개념에 따라 2개의 공격제대 형성을 목표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때 군단사령부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6월 10일에 김웅 중장(민족보위성 훈련국장)을 군단장으로 제1군단사령부를 창설하고, 6월 12일에 김광협 중장(북한군 제3사단장)을 군단장으로 제2군단사령부를 창설하였다.[150] 다음으로 그들은 이 양개 군단을 지휘할 야전군사령부급의 이른바 전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김책(부수상)이 사령관에 임명되고 참모장에는 총참모장 강건이 임명되었다. 유성철에 의하면 전선사령관은 김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총참모장 강건이 전쟁을 지휘했고, 강건은 브야츠크의 제88특별독립여단 제4대대장 시절에 군사전술에 탁월한 솜씨를 가졌던 인물로 소련군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였다.[151]

전선사령관에는 그 서열이나 위치상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이 임명되는 것이 당

연하나 그는 남침에 반대함은 물론, 소련 고문단에 의한 북한군의 전쟁준비에도 반대하는 등 김일성과 견해 차이를 보여 사령관에 임명되지 않았다. 미군 정보분석에 의하면, "최용건은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남 침략을 반대하였다. 그는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 온 소련의 새로운 군사고문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그는 앞의 고문관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바실리에프 고문단장을 비롯한 새로운 고문관들과의 관계는 냉랭했다. 그래서 바실리에프는 그을 배제하고 직접 전쟁을 준비했다"고 하였다.[152]

『조선전사』에는 "전선사령부는 전선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하였으며 이로써 김일성의 지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고 전반적 전선에 대한 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53] 여기에는 7월 5일에, 즉 전쟁발발 후에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 전 6월 20일경에 설치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개전 당시 전선사령부는 평양에 가까운 서포(西浦) 천연동굴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일제시대 일본군 화약창고로 사용했던 이 동굴 안에서 전선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황보고를 받고 있었다. 25일 09 : 00 북한군이 개성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동굴 안에는 순간 '와' 하는 함성이 터졌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하였다.[154]

이와 같이 군의 야전지휘체제를 확립한 김일성은 전쟁준비의 최종단계로서 국가의 3권을 직접 장악함은 물론, 군통수권을 자신이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이 군사위원장에 올랐다. 『조선전사』에서는 그가 6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한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사위원장에 추대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상 전쟁발발 다음날에 결정한 것으로 발표한 것이지 사실은 전쟁 전에 모두 짜여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55]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정령에 의하면, "국군의 38도선 이북에 대한 불의의 침공으로 조성된 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조직한다"고 엉뚱하게 둘러대고 위원장 김일성, 위원 박헌영 · 홍명희 · 김책 · 최용건 · 박일우 · 정준택으로 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으며, 전체 인민들과 일체 주권기관·정당 및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이 이 위원회의 결정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 내각의 각 성·국들을 비롯하여 중앙기관들과 각 도·시의 각급 조직들이 모두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었다. 그는 군사위원장으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구와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모든 역량을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목표로 조직하고 동원하도록 조치하였다.[156]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 그들의 법률에 따라 7월 4일자로 김일성을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실제로는 전쟁 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157] 그는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위원회의 명에 의거 평시 민족보위상 지휘하에 있던 참모기구와 각 군부대를 직접 지휘 감독하게 됨은 물론, 사회안전성 관하의 준 군사부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 통수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김일성은 내각수상에다 군사위원장, 나아가 북한군 최고사령관을 겸함으로써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위원회 위원장－총사령관－전선사령관－군단장－사단장에 이르는 전시 전쟁지도 및 지휘체제를 완전하게 갖추어 전쟁에 임하였다.[158] 이것 만으로서도 북한이 사전에 전쟁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2. 전투 배치

1950년 3월부터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이어 5월 중순부터는 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부대정비와 이동이 개시되었다. 모란봉극장의 회의(1950. 5. 16)가 개최된 직후 북한의 민족보위성과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전쟁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예를 들어, 1950년 5월 23일에 제371부대에서 예하부대에 하달된

하계 전투훈련계획에 의하면, “1950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0년 7월 15일에 종결을 짓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59]

민족보위성에서는 매일 고위 군 수뇌부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민족보위상 최용건, 북한군총참모장 강건 등의 사무실과 중요한 국, 과, 그리고 소련 군사고문단 사무실에는 외인 출입금지라는 표식이 붙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전선의 6월 8일부 제의를 거부하던 날(6월 10일) 민족보위성은 전방 사단장과 여단장을 갑자기 평양으로 소집하여 비밀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대기동 작전훈련을 가장한 무력남침의 비상태세를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회의에서 참모장 강건은 6월 23일까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구두로 명령하였다.

> 우리 인민군은 지금까지 사단단위까지의 전투연습을 해 왔으나 금번 전투사단을 총동원하여 기동연습을 하게 되었다. 본 연습에는 모든 기본부대는 물론 병기의 일체와 전장비가 시위될 것이다. 그리고 본 기동연습은 다소 오래 걸릴지 모르나 2주일이면 족할 것이다. 특히 본 연습은 극비리에 거행되는 만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이며 가족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명심하여 비밀을 지켜라.[160]

여기에서 부대이동이 2주간의 훈련이라면 가족에게까지도 비밀을 유지하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신편 양개 군단의 통제하에 남침을 위한 부대이동이 실시되었다. 이때까지 38도선에는 내무성 관할의 제1경비여단(간성), 제7경비여단(시변리), 제3경비여단(죽천)이 경비 임무를 수행해 왔고 민족보위성 예하의 전투사단들은 후방의 각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년 6월 8일에 하달된 명령에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체 군무자들은 오늘 긴박한 조국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고장무기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포와 자동차에 대한 정상적인 검열을 실시함으로써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전투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6월 25일, 26일에 실시하는 중대 실탄

북한군의 전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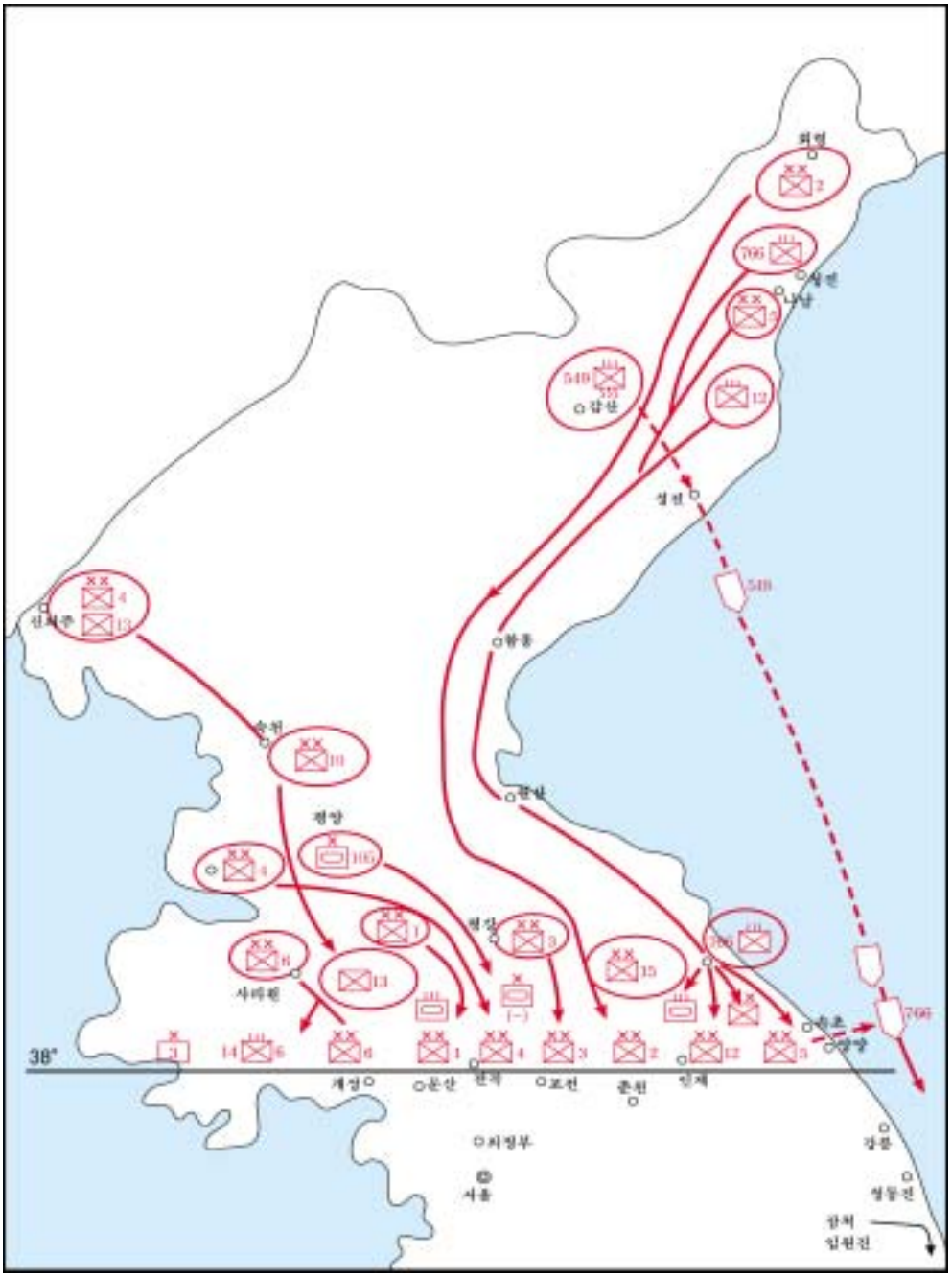
사격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이미 하달한 명령 제0108호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무정이 부대장으로 있던 제531부대(민보성 포병훈련국)에서는 6월 8일 다음과 같이 지령하고 있다. 즉, "각 사단 및 여단 참모부에서 1950년도 내의 전투훈련 진행에 있어서 극히 필요한 물자 즉 현금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전투훈련용 물자들에 한하여 세세한 예산서와 설명서를 1950년 6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령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보병 전투훈령 강령 2부(동기훈련 2단계, 하기훈련 제1·2·3단계)를 분배하였고, 이를 1950년 6월 20일까지 제581부대 기밀실에서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61]

한편 제466부대가 남포에서 6월 15일에 하달한 명령－철도 수송에 관하여－에 의하면, "현하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하에서 우리 부대는 금번 보위성에서 실시하는 대연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철도이동을 개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군 사단은 1950년 6월 11일경부터 공격출발 진지로 이동을 개시하였으며,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하여 20일만인 7월 15일에는 모든 작전을 끝낼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2] 이 명령에 따라 6월 11일부터 북한군은 2개의 군단으로 재편성되었다. 제1군단장에는 전 보위성 훈련

<상황도 6-3> 북한군의 전투배치



국장인 김웅 소장이, 동 제2군단장에는 제3사단장인 김광협 소장이 각각 취임하여 참모를 대동하고 6월 12일에 약 2주일 계속될 최종적인 대기동 작전훈련을 지휘하기 위해 임지로 향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장인 김광협(金光俠) 소장은 그의 참모들에게 동 기동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지금껏 사단단위의 전투훈련을 하여 왔다. 그러나 금반 실시되는 대기동작전은 전 사단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될 것이며, 종래의 훈련과 같이 지휘관들의 많은 결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기동작전만은 누구 할 것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성과 있게 끝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민족보위성은 또한 가장 신임이 두텁고 유능한 소련계 한인으로 알려진 재정부상 김찬, 교육부상 남일(南日), 당 조직부장 김열을 각각 차관으로 임명하였다. 김찬에게는 신편 제2군단의 정치위원, 남일과 김열은 군과 민의 긴밀한 협조를 조정하는 주요 직책을 맡겼다.

대기동 작전훈련 명령을 받은 북한군 각 사단은 전쟁 지휘체제의 구축과 동시에 남침준비의 마지막 단계의 작전개념에 따라 이동을 개시하였다.[163] 비밀리에 침략을 계획한 북한군의 지도부로서는 공격부대의 전개로 인하여 그 기도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단급 부대의 약 2주간에 걸친 대기동 연습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부대전개를 위장하였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방 10~15㎞ 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주둔지가 38도선 가까운 부대는 도보로, 먼 부대는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예비사단도 각각 해당 군단지역으로 이동하였다.[164] 그리고 지원부대도 피(被)지원부대 전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는 해상침투 준비를 하였다. 이동은 6월 23일까지 명령대로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북한군은 작전계획대로 2개 군단으로 재편성이 완료되고 공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최종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6사단은 사리원(沙里院) 지역에서 기차로 이동, 1950년 6월 18일에는 금천 동남쪽 6㎞ 750고지, 국사동, 개성동북 18㎞ 와룡대(현 장풍)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

주포 포대가 서해 연안에서 예성강까지를 경비하고 있던 제2경비여단 지역에 투입되었다. 제1보병사단은 6월 17일 구화리 북방 4㎞ 고야동, 개성 동북 구화리에 집결하였다.[165]

중부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6월 19일 평강을 출발하여 운천리로 이동하여 6월 23일 야미리, 산정리 지역에 재배치되었다. 제4사단은 6월 22일 진남포(鎭南浦)를 출발하여 평양과 남천을 거쳐 연천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사단은 6월 21일 돌고개(석현), 선곡리, 신망리 지역에 집결하였다. 최강부대로 알려진 제105전차여단은 이미 109전차연대가 평양에서 남천으로, 제203전차연대는 철원으로 각각 이동하여 동 6월 22일에는 38선 접경 깊숙이 진출하고 있었다. 이로써 중부지역과 의정부 정면을 주공방향으로 계획한 북한군은 전투훈련과 장비가 충분한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내에서도 최강부대인 제203전차연대를 이 방면에 배치하였다.

제12사단은 1950년 4월 15일 중공군 제20사단과 중국각처에 산재하고 있던 중공군출신 한인 약 10,000명을 모집하여 극비리에 북한으로 이동한 후 원산에서 개편된 부대이다. 동 사단은 6월 18일 원산에서 양양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6월 23일 동부 산악지역인 인제 서방 14㎞ 대목리, 선수리 지역에 1개 포병연대를, 그리고 사단 예하의 나머지 부대를 인제와 고사리에 집결시켰다. 제2사단은 함흥에서 김화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동하였고, 6월 17일 춘천 서북 추곡리, 화천 북서 장촌리, 춘천 북서 원천리 등지로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나남에서 기차로 이동하여 원산을 거쳐 6월 20일 양양에 도착하였다. 양양에서 동해안지구를 담당하여 사단 예하 1개 보병연대, 1개 포병대대 및 자주포 포대가 동해 연안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제1경비여단을 보강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다.[166] 동 사단은 중공군에서 편입된 사단으로서 전투경험이 많은 사단이었다.

한편 회령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부대 제766부대는 6월 12일 회령을 출발하여 동해안지역 간성으로 이동하였다. 동 부대는 주로 남로당원 및 강동정치학원출신

<표 6-9>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방이동 상황(1950. 6)[167]

부대	주둔지	도착지	부대	주둔지	도착지
제1군단	금천		제2군단	화천	
제6사단	사리원	계정	제2사단	원산	화천
제14연대	남천점	해주·죽천	제12사단	원산	양구
제1사단	남포	구화리	제5사단	나남	양양
제4사단	평강	연천	제15사단	회령	화천
제3사단	신의주	운천	독립전차연대	나남	인제
제13사단	평양	금천	제12MTSP연대	길주	양양
제105전차연대	평양	연천	제766부대	회령	원산, 간성
제203전차연대	평양	남천	제549부대	갑산	성진
제10사단은 군예비로서 숙천에 주둔					

등으로 편성된 유격부대로서 동 부대의 주임무는 남침과 동시에 강릉부근에 상륙하여 무장폭동을 야기하는 한편,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일대는 이미 주둔하고 있던 38경비 제1여단 등 도합 3개 사단과 1개 유격부대가 전투를 위하여 전개를 완료하였다.

서부지역에서는 제1사단이 6월 23일 남천에서 고랑포 남방에 위치한 구화리로, 제6사단 1개 연대는 동일 사리원에서 개성 정면 계정으로 이동하고 제6사단(一)은 해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옹진 정면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0, 제13, 제15의 3개 예비사단은 후방지역을 담당케 하였다. 내무성 소속인 38경비보안대를 남침직후에 북한군 제7, 제8사단으로 개편 증강되어 민족보위성 예하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비밀회의를 가진 6월 10일부터 동 23일 사이에 7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부대가 훈련을 가장하여 전개함으로써 남침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3. 전투명령의 하달

남침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계획대로 진전되자 민족보위성은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노어로 작성한 전투명령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전선사령부에 하달하였다. 1950년 6월 18일 각 사단장 앞으로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Reconnaissance No. 1)는 공격 직전 국군의 주력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작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찰행동을 개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명령은 공격부대 정면의 적(국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이전까지, 그리고 공격개시 이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되었다.[168]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 중 대표적으로 북한군 제4사단과 제2사단 것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표 6-10>, <표 6-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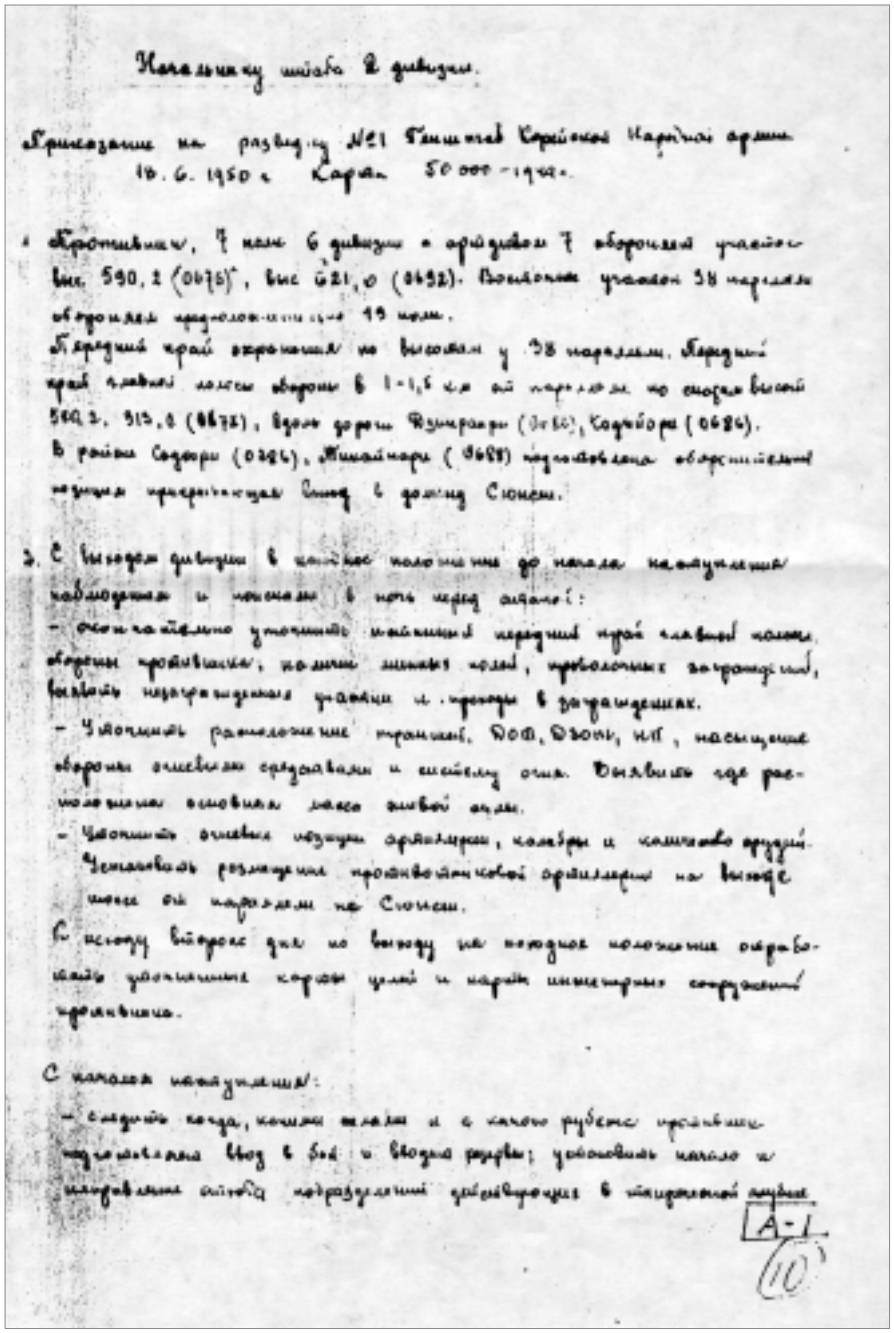
주공을 담당한 북한군 제4사단장에게 하달된 동 정찰명령 제1호의 내용은 남침 개시 전에 국군의 배치상황을 정찰하고, 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확한 작전지도를 작성키 위하여 정찰행동을 할 것과 공격개시 후에는 서울로 통하는 방어선에서 국군의 저항중심지를 정찰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4

<표 6-10>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169]

수 신 : 제4사단 참모장

1. 적 보병 제1사단 제1연대가 임진강-538고지까지 방어하고 있다. 우전방은 적 제1사단 제13연대가, 좌전방은 적 제7사단 제9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실시하여 공격개시 전날밤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 진지 및 관측소 위치, 화력체계, 적 주력의 위치, 포진지 및 구경, 대전차포의 배치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정찰대를 추가로 편성·파견하여 의정부-서울로 이르는 각 접근로상의 저항진지를 파악하고 예비대를 공격하라. 서울 부근으로 진출하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시내에 집중된 적의 부대와 시가방어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

북한군 정찰명령(노어)



Начальнику штаба 2 дивизии.

Приказание на разведку №1 Генштаб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18.6.1950 г. Карта 50 000-1949 г.

1. Противник, 7 полк 6 дивизии с артдивом 7 обороняет участок выс. 590,2 (0675), выс. 621,0 (0692). Восточнее участок 38 параллели обороняет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19 полк.
Передний край охранения по высотам у 38 параллели.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в 1-1,5 км от параллели по скатам высот 590,2, 313,0 (0672), вдоль дороги Дзинкари (0680), Кодыбори (0686).
В районе Содоори (0286), Тинайнари (0688)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орони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прикрывающая вход в долину Сюнси.

2. С выходом дивизии в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 начала наступления наблюдения и поиска в ночь перед атакой:
-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очнить истинный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наличие минных полей, проволочных заграждений, выявить незаграждённые участки и проходы в заграждениях.
- Уточн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траншей, ДОТ, ДЗОТ, НП, насыщение обороны огне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истему огня. Выявить где расположена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живой силы.
- Уточнить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калибры и количество орудий. Установить размещение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артиллерии на выходе тоже от параллели на Сюнси.
К исходу второго дня по выходу на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работать уточненные карты целей и карты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С началом наступления:
- следить когда, какими силами и с какого рубежа противник подготовляет ввод в бой и вводит резервы; установить начало и направление отхода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ействующих в тактической глубине.

A-1

(10)

<표 6－11> 북한군총사령부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170]

수 신 : 제2사단 참모장
1. 적 제6사단 제7연대가 590-621고지를 방어하고 있다. 그 동쪽으로는 적 제19연대가 병행하여 방어하고 있다. 적의 경계진지는 38도선 근처의 고지에 연하여 있고, 주저항선 전단은 이로부터 1~1.5㎞ 후방 590고지-313고지(중략) 가지리선에 연해 있다.
2. 사단이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면 관측과 정찰을 통하여 공격개시 전날 밤까지 적 주저항선, 지뢰와 장애물지대 및 통로(중략)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적 예비대의 투입을 관찰하고, 부대의 철수 개시와 방향을 파악한다. 전방부대가 사암리에 도달하면(중략) 방향으로 정찰대를 파견하여 부대의 출현과 서울－춘천 철로와 도로상의 이동상황을 파악한다. 전방부대가 고현리, 강촌리에 도달하면 서울로 이르는 도로에 강력한 기동정찰대를 파견하여 한강 남쪽 제방까지 진출해 그곳의 적정과 서울로 이르는 도로상의 적정을 파악한다. 부대가 한강에 도달하면 정찰을 통하여 서울－수원－이천 도로상의 이동과 곡수(?), 수원, 이천 부근의 적 활동을 파악한다.

사단은 그 목표를 서울에 두고 제2사단은 춘천-서울 도로를 따라 한강을 건너 이천, 수원 방향으로의 진출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찰명령에 이어 부대기동이 완료될 무렵 북한군의 공격부대에 대한 준비된 6월 22일 전투명령 제1호가 하달되었다.[171] 북한은 그들의 남한 공격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최종적 시도로 소위 조국전선이 그간의 경위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북한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묵살되자 북한은 최근 2주일 동안에 일어난 몇 가지 결과를 가지고 전쟁발발에 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침공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6월 22일, 평양에 있는 소련 군사고문단은 민족보위성에 명하여 전투명령 제1호를 전방 사단장에게 하달하여 1950년 6월 23일 12 : 00시까지 그들이 이른바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예하부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선제타격작전계획에는 전투명령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노획된 북한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이 1950년 6월 20일자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북한군에 대한 공격작전 명령은 적어도 정보계획보다 늦지 않게 하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제2군단 공병소좌 주영복이 6월 19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공병국장실에서 박길남 국장으로부터 <전투명령> 제1호 공병부록(노어)를 받아 한글로 번역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총참모부 전투명령은 6월 19일에 하달된 것으로 추측된다.[172] 총참모부가 하달한 북한군 전투명령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보다 2일 후인 6월 22일에 하달한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한글 필사본)이 1950년 7월 16일 대전부근에서 노획되고, 역시 동일 부로 하달된 제2사단 전투명령이 노획되었다.

제4사단의 전투명령 제1호는 사단이 서울 공격의 주공부대로서 1950년 6월 23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기동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격을 지원할 각 부대에 대한 임무도 상세히 기술되어 공격작전에 필요한 신호규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표 6－12>와 같다.

이 전투명령에서 "제4사단은 군단 정면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다", "우익에는 제1사단, 좌익에는 제3사단이 병행 공격한다"함으로써,

<표 6－12>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173]

1. 아군의 방어 정면에는 적(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방어한다.
2. 사단은 군단의 공격 정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광동－아장동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며, 최초 마지리, 535고지를 점령하고 평마을, 내회암을 점령한 후 의정부, 서울 방향으로 진격한다.
3. 우익에는 제1보사가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3보사가 공격한다.
9. 포병 공격준비사격은 30분간이며(후략)
10. 항공대는 적의 군사시설, 도로를 파괴하며 예비대의 집결을 불허한다.
11. 반항공 대책은(중략) 적기 내습시 보병무기의 30%를 동원한다.
12. 반전차 화기로써 반전차 대책을 강구한다.
13. 지휘소는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 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14. 기본신호. 공격 개시－폭풍(전화), 244(무전), 돌격 개시－녹색신호탄, 224(무전)

비록 군단예하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4사단이 군단과 더불어, 그리고 군단의 주공으로서 좌우 인접사단과 병행하여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한글 필사본)는 사단이 1950년 6월 22일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특별명령에 따라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하여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며 그 날 내로 춘천을 점령한 후, 가평방향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으로 <표 6-13>과 같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 전투명령에서 북한군 제3사단은 "우로는 제1군단 예하 제3보사와 좌로는 제12사단이 병행 공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4사단과 제2사단 전투명령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다른 사단의 공격명령이 없더라도 그들은 전 전선에서 전면남침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특히 이들 명령상의 기동계획이 전술한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작전개념과 일치하고 있어, 그 개념의 정확성도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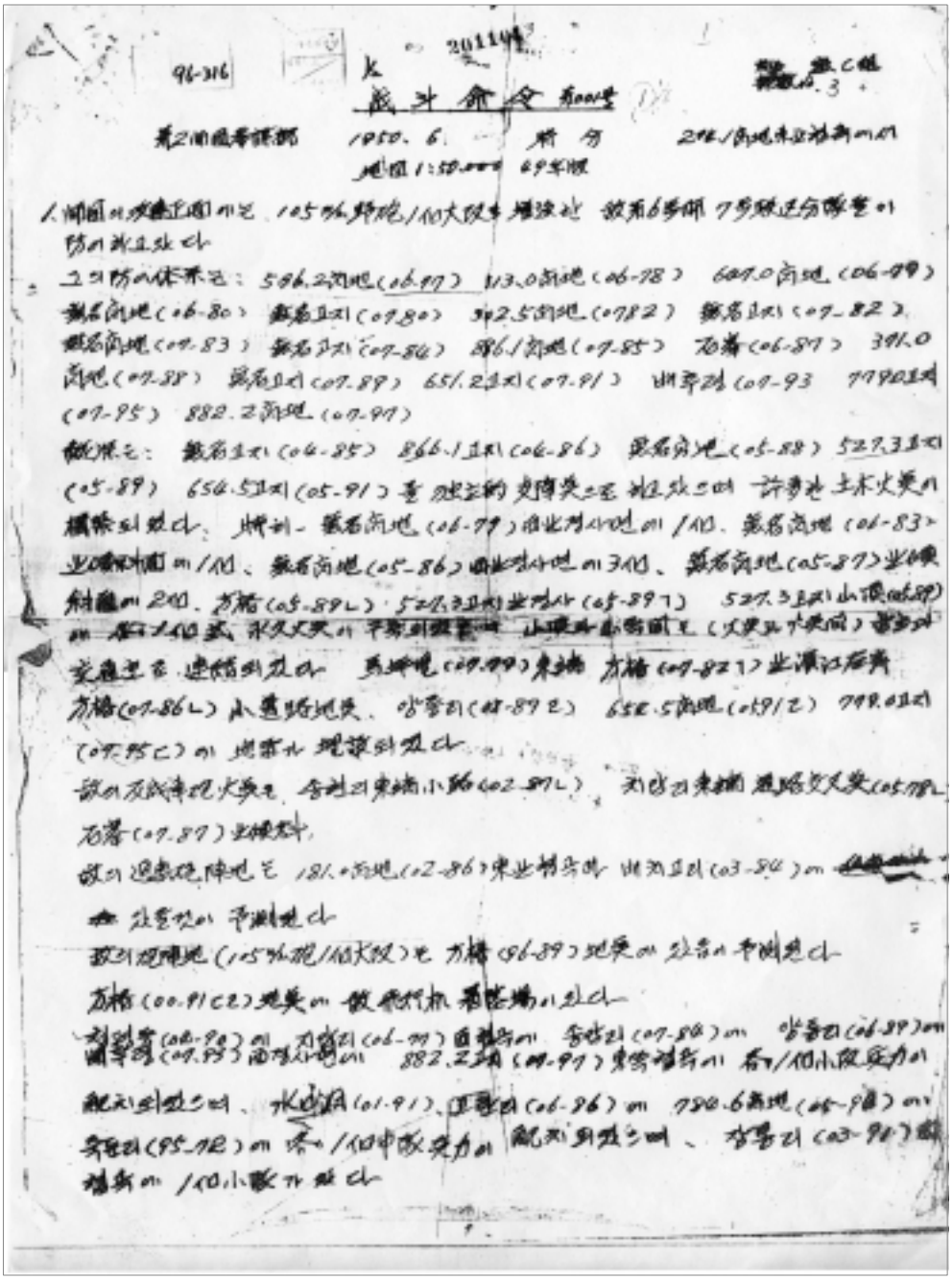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전투명령을 하달하던 무렵 북한전역에 걸쳐 연일 대대적인 강제데모를 강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한국정부의 요인들을 즉시 체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통일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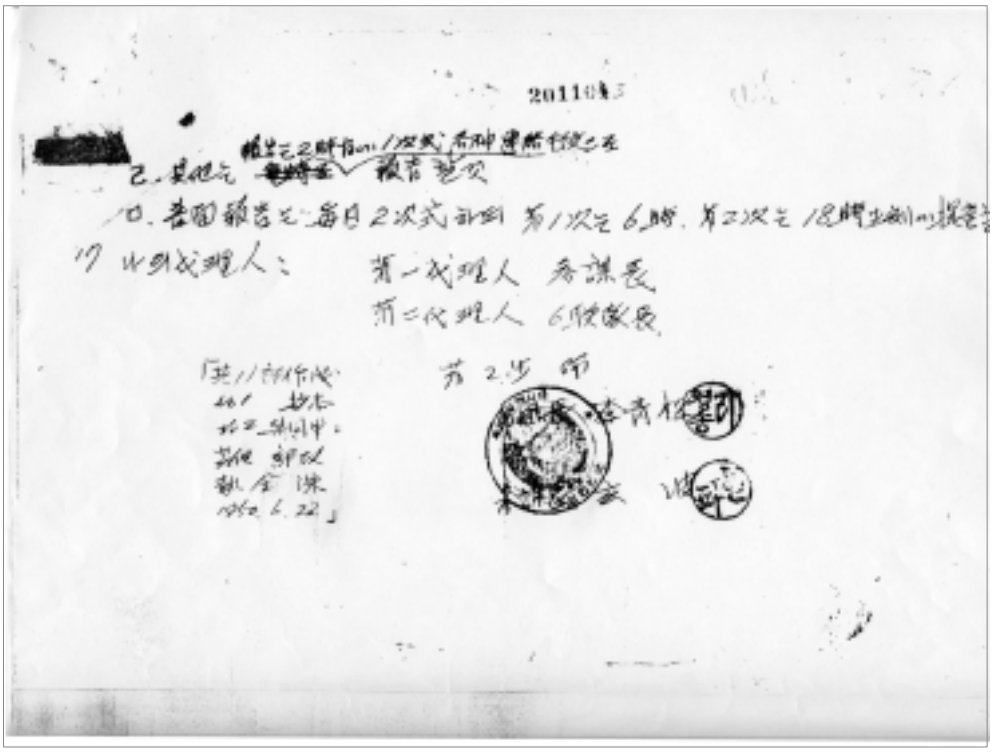
<표 6-13>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174]

1. 사단의 공격 정면에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다.
2. 사단은 882고지, 송암리, 모진교, 마평리간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최근임무로써 신당리(중략) 도자골을 점령하고 최후임무로써 춘천을 당일 내로 점령한 후 가평 강촌 방향으로 진출한다.
3. 우익에는 제3보사가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며, 좌익에는 제12보사가 홍천－원주, 횡성－여주 방향으로 공격한다.
4. 제6연대(주공)를 우, 제4연대를 좌로 하는 2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공격하며 제17연대는 주공을 후속한다.
8. 포병은 1950년 6월 22일 24:00까지 사격준비를 완료하고 공격 준비사격 시간은 30분이다.
9.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며 교량으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한다.

제2보사 사단장 이청송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시킬 것을 외치는 연극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 상임위원회의 서기인 강양욱은 남침 1일 전인 6월 24일에 발표한 그의 담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그는 "부패하고 반동적인 분자가 여하한 수법을 취하든 상임위원회의 제안을 조선인민으로부터 봉쇄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이 제안에 호응하는 인민의 외침을 억압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침의 날이 목전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시사하였다.[175]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선제타격작전계획의 증거를 열거하지 않아도 1950년 6월의 전쟁은 계획적 남침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들의 공간사인 『조선전사』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기만적이고 허구적임이 명약관화하게 되었다. 북한이 전쟁을 남한의 '북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이 내각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동지들! 매국역적 리

승만의 군대가 오늘 이른 새벽 38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라고 공표한 것이었다.[176]

이 성명이 발표된 후 줄곧 북한의 공식적 입장은 "미제와 이승만 도당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었다"[177]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민족의 비극이 남침에 의해 일어났음은 자신들이 수립한 계획과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정찰명령과 전투명령을 하달한 상황에서 6월 21일 최종적으로 스탈린에게 "6월 25일 전 전선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알렸고, 스탈린은 당일 "김일성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178]

스탈린은 공격직전 주북한 소련대사관의 암호전문도 기밀유지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일체의 암호전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군에 배속되어 남침준비에 참여했던 소련 군사고문단 약 150여명은 공격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후방으로 잠적하였다.[179]

주 (註)

1) Kyrio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蘇聯은 어떻게 北韓人民軍을 建設했는가』,『北韓』 1988년 6월호, pp. 51-65.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1967, pp. 705-706 칼리노프(Kalinov) 중령은 특별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에서 활동하였고 동독에서 1949년 서방 세계로 탈출한 후 상기 내용을 발표하였다.
2) 김국헌,『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군사』 제24호, p. 232. 1948년 말 북한군 증강계획은 결과적으로 장래의 남침에 주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 시점에서 이미 남침의 결행시기가 결정되어 이를 목표로 군비건설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蘇聯은 어떻게 北韓人民軍을 建設했는가』, p. 50.
4)『蘇聯은 어떻게 北韓人民軍을 建設했는가』, p.50.
5) 김점곤,『한국동란』, 한국홍보협회, 1973, pp. 260-262 ; 장준익,『북한인민군대사』, 한국발전연구원, 1991, p. 111.
6)『비류조프가 스티코프에게』(1949. 2. 4), 대한민국 외무부(역),『소련외교문서』 제4권(미간행), p. 10.
7)『스티코프 보고』, 안승환,『주북한 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 지원활동(1946-1953년)』,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정문사, 2002, p. 415.
8)『바실리예프스키가 스티코프에게』(1949. 4. 21),『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15.
9)『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p. 410-411.
10)『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3.
11) 유문화(편),『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 민주조선사, 1949, p. 237 ; 볼코고노프,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스탈린』 세경사, 1993, pp. 365-369.
12)『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2-8.
13)『김일성·스탈린회담 속기록』(1949. 3. 5),『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6-12.
14)『중앙위원회 정치국 제68회 회의 의사록』(1949. 3. 18),『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15.
15)『툰킨의 암호전보, 남한군대의 상황』(1949. 9. 14),『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28-32
16)『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9-10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28-31.
17)『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28-31.
18)『김일성 스탈린 회담 속기록』(1949. 3. 5),『소련외교문서』 제3권, pp. 9-10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2.
19)『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3.
20) 북한사회과학원,『조선전사』 제24권, 1981, p. 574.
21)『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 234 재인용.
22)『김일성의 서한과 스티코프의 보고』,『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17-25.
23)『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9-10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28-31.
24)『모스크바(스탈린 : 필자주)가 김일성에게』(1949. 6. 4),『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28-31.
25)『툰킨이 전보』(1949. 9. 14),『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30, p. 39.
26)『젊은 혁명가의 초상』, pp. 94-96.
27)『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4.
28)『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10-11.
29)『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31.

30) 『툰킨의 보고』(1949. 9. 12),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32.
31) 『모스크바가 스티코프에게』,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51-53.
32)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3.
33) 『모스크바가 스티코프』(1949. 10. 26),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4 ; 『그로미코가 스키코프에게』(1949. 11. 20),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57.
34) 국방군사연구소(역), 『中共軍의 韓國戰爭』, 1994, p. 93 ; 姚旭,『抗美援助的英明決』, 한양대 중소연구소편, 『中蘇研究』 제8권 4호, 1984, p. 22.
35) 『스티코프 보고』(1950. 1. 19),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20-21.
36)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 1. 19),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60-62.
37) 『스티코프가 바실리에프에게』(1950. 2. 23), 같은 자료, p. 48.
38) 『스티코프가 핀시에게』(1950. 7. 4), 같은 자료 제3권, pp. 76-78 ; 『김일성이 스탈린에게』(1950. 7. 8), 같은 자료 제4권, p. 50.
39) 이들은 1950년 3월 1일 현재 총 148명 외 2개월 내에 추가 입북되었다.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5.
40)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5.
4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고려대학교 정외과박사학위논문, 1994, p. 345.
42)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7.
43)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p. 420-421.
44)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22.
45) 『蘇聯은 어떻게 北韓人民軍을 建設했는가』, p. 64.
46)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9, pp. 23-24 ; 『모스크바의 새증언』 (9), 『서울신문』 1995. 6. 2일자.
47) 박헌영, 『조국통일과 독립을 위한 남한사람들의 영웅적 투쟁』, 『프라우다』 1950년 3월 27일자, 神谷不二(編), 『朝鮮問題戰後資料』 제1권(1945-1953),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6, p. 300.
48)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5.
49) 『필로포프가 모택동에게』(1950. 5. 14),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72.
50)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6.
51)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 5. 12),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p. 68-69.
52)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24-28.
53) 『툰킨 공사의 전보』(1949. 9. 14), 『소련외교문서』 제3권, p. 41.
54)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208.
55)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 제45호, 1949. 5. 9), 정경모(편), 『북한법령집』 제1권, 대륙연구소, 1990, pp. 2684-2685.
56)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p. 127.
57) 『조선전사』 제24권, pp. 284-285 ; 『북한인민군대사』, pp. 383-417.
58) 『조선전사』 제24권, p. 284.
59) 『북한사회과학력사연구소 자료 제2675호』, 『북한인민군대사』, p. 195 재인용.
60) 『조선전사』 제24권, p. 282.
61)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6.
62) 『조선전사』 제23권, p. 173.
63) 『조선전사』 제24권, p. 276.
64) 『조선전사』 제24권, pp. 274-278, p. 280 ; 『북한인민군대사』, p. 197.
65) 『스티코프의 보고』(1950. 1. 7),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7 ;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 2. 7),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46- 49.
66) 「비신스키가 스티코프에게」(1950. 2. 9), 위의 자료 제4권, p. 47.
67) 「스티코프 보고」(1950. 2. 7), 위의 자료, pp. 46-49 ;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 6. 22),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35 ; 朱榮福, 『朝鮮人民軍の南侵の敗退』, pp. 212-232.
68) 「스티코프의 보고」(1950. 5. 29),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11.
69) 『중앙일보』 1992년 6년 23일자.
70)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19.
71) 『북한인민군대사』, pp. 196-200.
72) 북한군 사단들은 6월 15일부터 공격 출발진지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10일 남침사단들을 지휘하기 위해 2개 군단사령부를 편성하여 1군단장에 김웅, 2군단장에 김광협을 임명하였다. 「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 239.
73) 소련 군사고문단은 1948년에는 북한군 각 사단에 150여명씩 총 3,000명 정도가 있었으며, 1950년 3월 1일 현재 북한군에 배속된 고문단의 총수는 239명이었으나 148명만이 북한에 잔류해 있었다(『동아일보』 1995년 6월 20일자).
74) 『북한인민군대사』, pp. 140-144.
75) 『내가 겪은 조선전쟁』, p. 167.
76)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724-726.
77) 「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 242 재인용.
78)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 722.
79)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p. 86-88.
80) 조국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조선민보사, 1949, pp. 159-160.
81)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6권, p. 311 ; 『조선중앙년감』 1950, p. 233.
82)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8. 6. 28),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38-39.
83) 「스티코프 보고」(1949. 6. 28),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38.
84) 「스티코프 보고」(1949. 6. 28),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38-39.
85)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6권, pp. 312-313.
86) 『조선중앙년감』 1950, p. 237.
87) 『조선중앙년감』 1950, pp. 88-89.
8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p. 61.
89)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 6. 28),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38-39.
90) 「소련대사 스티코프 보고」,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8.
9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pp. 36-37.
92) 한국홍보협회, 『한국동란』, 1973, pp. 148-149.
93) 『북한관계사료집』 제6권, p. 314.
94) 「북조선로동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1호(1949. 12. 10), SN. 887-8.
95)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 726.
96)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집』 제1집, 1973, p. 626.
97) 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51-1952, p. 142.
98) 『동아일보』 1950년 6월 18일자.
99)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727-728.
100) 조선노동당출판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문헌집』, 1951, p. 185.
101)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51-1952, p. 81, p. 140.

102) 『투사신문』 1950년 6월 15일자.
103)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51-1952, p. 82.
104) 정찰명령의 원본은 러시아어 필사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쟁 중인 1950년 10월 4일에 서울에서 노획되었다. 이 무렵 예하부대에는 1950. 6. 20-30일까지의 구체적인 야영훈련계획이 하달되었다. 『인민군 제238군부대 명령 및 지령철』, SN. 501.
105)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51-1952, p. 82.
106) 『민주조선』 1950년 8월 31일자.
107)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723-724.
108)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715-716 ; 홍종혁,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민출판사, 1974, p. 69.
109) 『동아일보』 1950년 6월 10일자.
110) *New York Times*, 1950. 5. 13.
111) *New York Times*, 1950. 5. 28.
112) 蘇鎭轍, 『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三一書房, 1999, p. 116.
113) 『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p. 116 ;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p. 717-718.
114) 『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p. 117.
115) 『인민일보』(1950년 1월 18일자), 『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p. 118 재인용.
116) 『朝日新聞』 1950年 1月 25日字.
117) 『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p. 121.
118) 『극동통신』 1950년 5월 21일자 ; 藤原一郎, 『日本經營の今後の對策』, 東京, 1955, p. 198.
119)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21-25, pp. 69-75.
120) 오기완, 『평양・모스크바・서울』, 『신동아』 1966년 5월호, p. 342.
121)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69-75.
122) 이 자료는 국군 정보국의 적정판단 자료이며, 당시 북한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근사치이다. 예컨대 전차의 경우, 실제 북한의 전차보유 대수는 당시 소련문서에 의하면 258대였음을 비추어 상당히 가깝게 파악되었다. 『한국전쟁의 새로운 연구』 2, p. 453.
123)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p. 739.
124) 『스티코프 보고』, 『소련외교문서』 제2권, pp. 9-12.
125) 『핀시(스탈린 가명 : 필자주)가 스티코프에게』(1950. 8. 28), 같은 자료 제4권, p. 53.
126)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49. 6. 28),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p. 38-39.
127) 『한국문제담당관 본드와의 대화비망록』(1950. 4. 3), 서동구(역), 『한반도의 긴장과 미국』, 대한공론사, 1977, pp. 60-62.
128) Evgeniy P. Bajanov & Natalia Bajanova, 『소련비밀문서로 본 한국전쟁』, pp. 41-42.
129)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9-12 ; 『김일성저작집』 제6권, p. 11.
130) 『조선전사』 제25권, p. 85.
131) 정홍진(역), 『후루시초프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p. 352.
132) 유성철, 『나의 증언』 (10), 『한국일보』, 1990년 11월 13일자.
133) 박갑동, 『한국정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pp. 80-84.
134) 『조선전사』 제25권, p. 83.
135) 『북괴 6・25 남침분석』, p. 318.
136) 김철범, 『한국전쟁과 냉전』, 평민사, 1991, pp. 232-233.
137) 『모스크바가 스티코프에게』(1950. 6. 22),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12.

138) 『주중대사 로신 보고』(1950. 5. 15),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6.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연합통신자료실(1992. 8. 29). 이는 연합통신이 러시아 군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코르트코프 박사로부터 입수한 실제 상황도의 사본이다. 이 작전 상황도의 원본은 모스크바와 평양에 각각 1부씩 보관되어 있다.
139) 『스티코프가 스틸린에게』(1950. 6. 21),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 전략문제연구소(역), 볼코고노프, 『스탈린』, 세경사, 1993, pp. 372-373.
140)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27-28.
141)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년 11월 9일자.
142)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년 11월 9일자.
143)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144)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 이 문서의 원본은 러시아어로 작성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이 원본의 사본과 영문번역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 정보계획은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되었으며 1987년 4월 28일에 비밀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모두 7쪽 분량으로 1950년 6월 20일에 '조선인민군'총참모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145) 『조선인민군 제2, 제4보병사단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146) 『조선인민군 정보계획』(1950. 6. 20) ; 『조선전사』 제25권, pp. 85-86.
147) 『조선인민군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148)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p. 9-12 ; 『김일성저작집』 제6권, p. 11.
14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2권, 행림출판사, 1993, pp. 482-483.
150)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41.
151) 유성철, 『나의 증언』 (9), 『한국일보』 1990년 11월 11일자 ; 『한국일보』 1990년 11월 3일자.
152)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 제1권, 724-726 ;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1990년 11월 11일자) ;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91-92.
153) 『조선전사』 제25권, p. 162.
154) 유성철, 『나의 증언』, 『한국일보』 1990년 11월 11일자.
155)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45-1968』, 1968, p. 524.
156) 『북한총람 1945-1968』, p. 524 ; 『조선전사』 제25권, pp. 98-99.
157)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 91.
15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 1961, p. 41.
159) 『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 238.
160)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8.
161) 『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p. 238-239. 배부처에 기록된 115라 함은 115군부대로서 인민군 1사단, 235군부대는 2사단, 395군부대는 3사단, 485군부대는 4사단, 615군부대는 5사단, 655군부대는 6사단, 825군부대는 7사단, 1민은 1민청훈련소, 3민은 3민청훈련소, 105군부대는 105탱크여단, 586군부대는 독립중포연대를 가리킨다. 인민군에서 사단은 연합부대라 부르며 그 통상명칭은 끝자리 숫자가 5로 끝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162) 『북한의 6·25남침 결정과정』, pp. 238-239.
163)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164)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SN. 792.
165)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34.
166)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p. 135.
167) 『북괴 6·25 남침분석』, pp. 108-109.

168) Enemy documents, GHQ FEC, 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 Issue No. 6, Copy No. 11, Item 2 200564. 이는 극동군사령부의 적 노획 문서철로서 Ⅲ급 비밀로 분류하여 미국국립문서보존소에서 보관해 오다가 1987년 4월 28일 보통문서로 등급 저하되었다. 여기에 북한군총사령부가 각 사단에 하달한 정찰명령이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169) 위의 자료,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To : The Chief of the 4th Division, Reconnaissance Order No. 1, 18 Jun. 1950.

170)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To : The Chief of the 2nd Division, Reconnaissance Order No. 1, 18 Jun. 1950.

171) 이 명령의 명칭은 노획문서(한글 필사체)에는 '전투명령'으로 되어 있다. 영문 번역에는 'Operation Order'라고 표기하고 있어 '작전명령'으로 번역된다.

172) Gerneral Staff North Korean Army, *Intelligence Plan of the North Korean Army for an Attack Plan*, Chief, 20 Jun 1950 ; 유성철, 『나의 증언』 (8), 『한국일보』 1990년 11월 9일자 ; 『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pp. 244-245.

173)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제1호, 옥계리에서』(1950. 6. 22).

174)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1001호-214고지 동북협곡에서』(1950. 6. 22)

175) 전사편찬위위원회, 『한국전쟁연구』, p. 13.

176) 『1950년 6월 25일 내무성 성명』, 『북한중앙년감』(1951-1952), p. 91.

177) 『조선전사』 제25권, pp. 69-.72 ; 『스티코프가 소련외무성에게』(1950. 9. 13), 『소련 외교문서』 제4권, p. 60.

178) 『소련비밀문서로 본 한국전쟁』, pp. 59-60.

179) 『소련 외교문서』 제2권, p. 29 ; 『펀시가 평양대사에게』(1950. 6), 『소련 외교문서』 제3권, p. 73.

제 7 장 국군의 방어태세

제 1 절	국방체제와 운용
제 2 절	국군의 방어계획
제 3 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제 1 절 국방체제와 운용

1. 국군의 지휘체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통수 및 군정·군령에 관한 법규는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制憲憲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직제령, 공군본부직제령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들 법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체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부 장관, 국군참모총장, 육·해·공군 총참모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통령의 통수(統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헌법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 통수권 행사에 대해서는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자(統帥者)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發)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

또한 국군조직법 제4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최고국방위원회(最高國防委員會)와 그 소속의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국방자원관리위원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 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위임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掌理)"하도록 규정하면서 군정권만을 언급하고 있다.[4] 그러나 국군조직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군정을 장리(掌理)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 승 만(1875~1965)

제2대 국방부장관
신 성 모(1891~1960)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 행사를 보다 원활하기 위해 국방부 편제에 미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국군참모총장(國軍參謀總長)과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군참모총장은 현재의 합동참모의장과 같은 직책으로, 각군 총참모장을 통해 각군에 대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에 그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6] 국군참모총장의 임무는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指揮統轄)하며 일체의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것이었다.[7]

국군조직법에는 국군참모총장이 각 군에 대한 군령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연합참모회의(聯合參謀會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합참모회의는 육·해군의 작전, 용병과 훈련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군 최고의 합의기구였다. 연합참모회의는 의장인 국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그 밑에 국군참모차장, 육·해군 총참모장 및 참모부장(參謀副長), 국방부 항공국장·제1국장·제3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육·해군 장교로 구성되었다.[8]

육·해군 총참모장은 국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 하도록 국군조직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군은 국군조직법 제23조에 규정된 "본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육군에서 독립하였다.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는 1949년 대통령령 제254호로 공포된 「공군본부직제령」에 따라 공군으로 새로이 발족되었다.[9] 공군의 독립으로 국군은 육·해군의 2군 체제에서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에 앞서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해병대가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에 의거 창설되었다.[10]

6·25전쟁 당시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75세의 재미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그는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4년 임기 중 절반인 2년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 외교활동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처럼 전쟁에 직접 참전한 적도 없었다.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인 국방부 장관은 한국광복군 참모장 출신의 초대 이범석(李範奭) 장관에 이어 1949년 3월 21일에 영국 선장(船長)출신의 신성모(申性模) 장관이 임명되었다. 신성모 장관은 비록 중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11] 군대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 광복될 때까지 상선 선장으로 주로 해양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경험이나 군사지식이 부족하였다. 전쟁 발발 1개월 전인 1950년 5월 17일에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장경근(張璟根)도 법조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 전무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7-1>과 같다.

<표 7-1> 6·25전쟁 당시 대통령 및 국방장관 현황

직 책		이 름	나이	임명일자	재직기간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75세	1948. 7. 20	23개월
국방부	장관	신성모(申性模)	59세	1949. 3. 21	15개월
	차관	장경근(張景根)	39세	1950. 5. 17	1개월

육군 총참모장
소장 채 병 덕

해군 총참모장
소장 손 원 일

공군 총참모장
준장 김 정 렬

해병대사령관
대령 신 현 준

6·25전쟁 발발 당시 각군 총참모장으로는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육군소장을 비롯하여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해군소장,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金貞烈) 공군준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해병대사령관에는 신현준(申鉉俊) 해병대령이 보직되어 있었다. 이들 중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임기 2개월을 맞이하고 있었고, 해·공군 총참모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21개월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파악은 마친 상태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7－2>와 같다.

김홍일(金弘壹) 장군

김석원(金錫源) 장군

6·25전쟁 당시 한국 육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고급 장교들은 대부분 미 군정하의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거나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임관 형식을 거쳐 임관한 일본군·광복군·중국군 출신의 군사경력자들이었다. 이들 군사경력자들은 대부분이 전투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중국군 소장 출신인 김홍일(金弘壹) 장군과 일본군 대좌(大佐) 출신인 김석원(金錫源) 장군이 대대장 이상 전투 지휘관을 역임하였다.[12)]

그렇지만 국군은 건군 과정에서 좌익들이 군내에 침투하여 일으킨 제주4·3사건, 여순 10·19사건시 제14연대반란사건, 제6연대 반란사건, 그리고 북한이 남파한 소위 인민유격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전투지휘 경험을 쌓게 되었다.

<표 7-2> 6·25전쟁 당시 각 군 총참모장/해병대사령관

직 책	이 름	나이	보직일	재직기간
육군총참모장	채병덕(蔡秉德)	35세	1950. 4. 10	2개월
해군총참모장	손원일(孫元一)	42세	1948. 9. 5	21개월
공군총참모장	김정렬(金貞烈)	33세	1949. 10. 1	9개월
해병대사령관	신현준(申鉉俊)	35세	1949. 2. 1	17개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과 참모일동
(앞줄 중앙, 정일권 사령관)

정일권(丁一權) 준장과 김백일(金白一) 대령은 1949년 3월과 9월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유재흥(劉載興) 대령은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이성가(李成佳)[13] 대령은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원용덕(元容德) 대령은 호남지구전투사령관으로, 백선엽(白善燁) 대령은 여순 10·19사건 및 38도선 국지도발시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확한 정황분석을 통하여 장차 작전에 기여하였고, 그 후 제5사단장으로 부임해서는 공비토벌 과정에서 전투지휘를 경험하게 되었다. 6이형근(李亨根) 장군도 초대 제8사단장으로 재직시 오대산 및 태백산 지역으로 침투한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되었다.

또한 송요찬(宋堯讚), 함병선(咸炳善), 신현준(申鉉俊), 김성은(金聖恩), 백인엽(白仁燁), 송호림(宋虎林), 김점곤(金點坤), 고근홍(高根弘), 함준호(咸俊鎬), 김용배(金容培), 공국진(孔國鎭) 등은 연대장 및 고급사령부 참모로서 공비토벌 과정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투지휘를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렇듯 전쟁 이전 공비토벌 과정에서 6·25전쟁의 주역들이 경험했던 실병(實兵) 지휘를 통한 전투경험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 국방조직의 개편과 운용

정부수립 이후 국방조직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국방기구를 편성해 나감으로써 국방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초대 이범석(李範奭)[14] 국방부장관은 신생 대한민국의 열악한 안보 환경 및 예정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여 미국 중심의 자유우방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연합국방을 국방목표로 정하고 추진하였다.

이범석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육군을 6개 여단, 20개 연대로 증편하였다. 그는 첩보수집과 검찰기능의 전담기구로 국방부 내에 특수공작국(特殊工作局)인 제4국을 설치하는 한편 육군수색학교, 호림부대, 그리고 보국부대 등 대북 첩보 및 대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운용하였다.[15] 1948년 11월 20일 긴급대통령령인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근거하여 예비군인 호국군(護國軍)을 창설하여 운용하였다. 호국군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예비병력 확보 차원에서 창설된 예비군으로 1949년 1월 현재 총 10개 연대 약 20,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16]

여순 10·19사건시 제14연대 반란사건과 대구의 제6연대 반란사건을 경험한 이범석 장관은 미 군정기 미국의 불편부당(不偏不黨) 원칙에 따라 군내에 침투한 좌익세력을 발본하기 위한 대대적인 숙군(肅軍)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는 6·25 전쟁시 부대단위 집단 투항 등의 국가안보의 위해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었다.[17] 이범석 장관은 군 내부의 사상통일과 반공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정훈공작(政訓工作)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1948년 11월 29일 정훈공작을 담당하는 제2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정훈(政訓)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이범석 장관은 그 동안 자숙(自肅)하고 있거나, 귀국이 늦어 군대에 들어오지 못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군사경력자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그는 "국군을 육성함에 있어서, 장교의 질은 일본 육사를 앞서야 하고, 정신면에서는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며, 나아가 강병 육성의 장래는 학도병 출신에

게 달려 있다"[18]고 말함으로써 군사경력자들을 영입하였다. 이들로는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의 정래혁(丁來赫)·유병현(柳炳賢)·유양수(柳陽洙)·이주일(李周一)·장경순(張坰淳)·조문환·김관오(金冠五)·김국주(金國柱)·방희·장흥(張興), 김묵(金默) 등이 있었고, 육군사관학교 제8기 특별의 안춘생(安椿生)·이준식·김석원·권준·백홍석·유승열(劉升烈)·오광선·박임항 등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임관 형식을 빌어 뒤늦게 귀국한 김홍일(金弘壹)·이종찬·신응균·이형석·이용문·김응조·박창암 등 일본군 및 광복군 출신의 군 원로들을 끌어들여 군 간부의 질적 향상을 제고시켰다.

1949년 3월 21일 이범석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신성모 국방장관은 군대 경험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19] 신성모 장관이 취임한 시기는 안보환경 면에서 미군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호남지방에서는 반란군 및 공비 토벌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었다. 신성모 장관은 재임기간 공군의 독립, 육군의 8개 사단 체제 편성, 남한 각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산게릴라 토벌을 통한 치안확보,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계 불순분자의 일소, 군기·사상통일을 통한 반공태세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 1일 설치된 육군 참모학교와 보병학교 등 군사교육 기관을 증설하고, 해외군사교육기관에 장교들을 파견함으로써 새로운 군사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20]

그러나 신성모 장관 재임기간 동안 국군참모총장과 연합참모회의 폐지, 특수공작을 위해 이범석 장관이 설치했던 국방부 제4국의 폐지는 전쟁 발발 이전 대북 첩보 및 공작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국방부 제4국의 폐지는 특수부대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국군참모총장제 폐지는 합동참모의장의 기능을 폐지한 것으로 6·25전쟁 초기 육·해·공군의 효율적인 지휘에 불합리한 요인을 남겼다.[21] 예비군인 호국군을 해체시킴으로써 유사시 즉응(卽應) 전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호국군을 대체하여 새로 설치된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도 6·25전쟁 발발 2개월 전에야 비로소 조직편성을 완료하게 됨으로써 예비전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22]

호국군 해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징역제를 실시하기 위해 1949년 9월 1일

각 도에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병사구사령부는 국군의 병력 수가 미국이 정한 65,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집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징집을 위한 모병기구로 설치되었던 병사구사령부는 육군 8개 사단에서 3년 복무를 마친 만기 제대자 2,000명을 재 소집하여 보충한 뒤, 전쟁 3개월 전인 1950년 3월 14일 해체되기에 이르렀다.[23]

이렇듯 신성모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면서 전력증강을 이루어 나갔으나, 대북 첩보전담 기구인 국방부 제4국 해체를 비롯하여 국군참모총장제와 예비군인 호국군 등을 폐지함으로써 개전 초기 육군총참모장에게 지휘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미확보로 예비전력 즉응화(卽應化)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방조직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전쟁지도에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될 국방자문 및 군사기구들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국방기구를 원용하여 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방기구들인 최고국방위원회(最高國防委員會)를 비롯하여 국방자원관리위원회(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최고국방위원회 소속의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그리고 성격이 모호한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 등은 아예 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휘구조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아 전쟁 초기 육군총참모장에게 많은 지휘부담을 주었다. 국군의 편성과 조직은 전투에 적합한 편제가 아니라 평시 부대관리에 적합한 부대구조였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 전쟁지도본부에 해당되는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과 전술최고단위인 군단사령부(軍團司令部)간에 전선사령부(前線司令部)를 설치하여 작전통제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비해 국군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국군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사단이라는 지휘구조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결과 육군본부가 중간 사령부인 군단도 없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8개 사단을 통제하는 것은 지휘의 폭이 너무 컸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작전통제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듯 전쟁 당시 국군은 전쟁 전반을 지도하고 통제할 공식적인 국방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일사불란한 전쟁지도를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결심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제 2 절 국군의 방어계획

1. 기본 계획

국군 방어계획은 1949년 12월 27일 육군본부 정보국(情報局)에서 작성한 「1949년 말 종합정보보고」에 의거하여 1950년 1월말 경 그 시안(試案)이 수립되었다. 육군본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인 1949년 8월 북한이 남침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각 사단에 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1949년 11월에는 각 사단장과 작전참모, 그리고 미 수석고문관이 참석한 합동 평가회의를 갖고, 이 계획과 1949년도 육군본부 정보국이 작성한 연말정보보고서를 기초로 육군본부와 참모학교에서 방어계획의 시안을 수립하게 되었다.[24]

국군방어계획은 "1950년 춘계에 적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고 평가한 육군본부 정보국의 1949년 말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서둘러 1950년 3월 25일 국군 방어계획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를 확정하고,[25] 예하 부대에 국군방어계획을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26]

국군방어계획은 신태영(申泰英) 육군총참모장의 지시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이 주동이 되어 작성한 국군의 기본방어계획으로서,[27] 부록까지 구비한 비교적 완벽을 기한 작전계획이었다.[28] 이 계획에는 "해군과 공군작전계획에 따라…"의 내용으로 보아 해군과 공군도 기본방어계획에 따라 자체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육군의 각 사단은 1950년 3월 말경 육군본부로부터 국군방어계획을 수령하였다.[29] 각 사단은 이를 기초로 1950년 5월초 사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사단의 방어계획은 방어선 점령을 위한 기본계획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화력

제3대 육군총참모장
소장 신태영(申泰英)

육군본부 작전국장
대령 강문봉(姜文奉)

계획, 장벽계획, 역습계획 등과 같은 지원계획은 작성 중에 있었다.[30]

국군방어계획은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정부 지구에 방어중점을 두고 방어지대를 편성하였다.[31] 방어 목표는 이 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적의 주공을 진지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38도선 확보를 위한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첫째, 옹진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후방지역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시 역습부대로 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후방지역 경계는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여 관할 지역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32]

그러나 38도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큰 강을 이용하여 지연전(遲延戰)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연전은 최초 한강(漢江)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강선(漢江線), 대전선(大田線),

<상황도 7-1> 국군 방어계획(후방사단 전방전개 및 지연도)

접이식

낙동강선(洛東江線)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하였다.[33] <상황도 7－1>은 국군방어계획을 도식화한 것이다.

육군본부의 작전국은 이러한 단계별 철수작전에 수반되는 교량 및 도로 파괴계획 등 공병부록(工兵附錄)을 작성하여 방어계획에 포함시켰다.[34] 당시 미 군사고문단측에서는 38선의 방어계획이나 적 침공시의 철수작전, 또는 공세이전시의 작전계획 등에 관해서는 이를 지도한 바 없었고, 모든 계획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였다.[35]

2. 전방부대 작전 계획

육본작전명령 제38호 작성된 국군방어계획은, “방어중점을 의정부 지역에 두고서 제일선의 전방방어지대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전방 사단을 제일선부대와 예비대 등 2개의 방어제대로 편성하여 전방방어작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 격퇴한다”는 개념이었다.[36]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 사단은 적의 공격시 38도 선상의 경계진지 전투지대, 주저항선 전투지대, 최후저항선 전투지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전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37]

제1단계에 해당하는 초기작전시 실시하는 경계진지전투간에는 38도선 경계진지 선에서 적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지연전투는 주저항 진지 정면의 교량 및 도로를 파괴하며 주저항선까지 전진(轉進)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방예비사단인 제2보병・제3보병・제5보병사단의 전방지역으로의 집결과 동시에 옹진지역의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와 동해안의 제8보병사단은 작전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견제공격을 취하고 적절히 유격전을 감행하여 적의 동서(東西) 측방을 위협하도록 계획되었다.[38]

제2단계 작전인 주저항선 전투간에는 주진지선에서 전 화력의 집중 및 철저한 역습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를 실시하여 적을 진지 전방에서 격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이 아군 방어진지에 침투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선에서 적을 고착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전선이 너무 확장되어 전투지도상 불리한 경우에는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예비진지 방어선으로 점차 이동하도록 계획하였다.[39]

제3단계 작전인 최후저항선, 즉 예비진지 전투간에는 전군이 예비진지 방어선에서 전 화력을 집중하고, 역습으로써 적의 전력을 철저히 분쇄 격파하여 이 선을 최후까지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부대는 좌로부터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 제1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제6보병사단, 그리고 동해안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8보병사단 등 4개 사단 및 1개 연대가 맡고 있었다.[40]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보병연대는 주 전투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옹진지구 정면에서 철저한 방어전투의 전개 및 유격전을 실시하여 적의 서측방을 위협하도록 임무를 받았다.[41]

육군 제1보병사단은 방어 중점을 문산(汶山) 정면에 지향하고 적의 공격을 보·포의 전투력으로 철저히 소모시켜 진지전방에서 적을 격멸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제1사단은 적 주공의 진출로인 국군 제7사단 전방지역에 화력을 집중시켜 적의 주공정면의 전투에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42]

육군 제7보병사단은 방어의 중점을 적의 주공의 접근로로 판단되는 의정부 정면에 지향하고, 전차를 동반하는 적의 공격을 보병과 포병의 긴밀한 협동과 전투력으로 진지전방에서 격멸하도록 계획되었다.[43]

육군 제6보병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 및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예상되는 적 주력의 동측방에 대한 위협을 견제하고, 제7보병사단 우전방에 대한 화력지원의 실시로 주작전지역의 전투가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계획되었다.[44]

육군 제8보병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유격전과 방어전투를 전개하며 특히 동해안으로부터 상륙을 기도하는 적에 대해 수제선에서 철저히 격멸하도록 계획되었다.[45]

그러나 이러한 방어계획은 전쟁 발발 불과 3개월 전에 육군본부에서 수립되어 각 사단에 하달되었기 때문에 사단 방어계획의 수립은 전쟁 1개월을 앞두고 수립된 실정이었다. 그 결과 각 전방 사단은 미흡하나마 자체 방어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지휘소훈련과 기동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실시해 보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사단간의 협동작전이나 육군 차원의 작계시행훈련(作計施行訓練) 같은 사단기동훈련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후방부대 작전계획

육본작전명령 제38호 작성된 국군방어계획에는 후방지역 사단을 비롯하여 경찰 및 청년방위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 당시 육군의 후방 사단으로는 서울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충남 대전의 제2보병사단, 전남 광주의 제5보병사단, 경북 대구의 제3보병사단, 그리고 서울의 육군본부 직할 독립기갑연대가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지구의 방어를 준비하면서, 필요시 전방의 제1보병·7보병사단을 증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제2보병·3보병·5보병사단은 신속히 서울로 이동하여 서울 주변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공격을 적극 방어하는 것이었다.

충남 대전에 위치한 제2보병사단은 춘천－의정부 부근에, 경북 대구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은 의정부－문산 부근에, 전남 광주에 위치한 제5보병사단은 문산－의정부 부근에 증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의명(依命) 공세이전(攻勢移轉)할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46] 이들 후방예비사단의 증원이후 부대배치는 <상황도 7－1>과 같다.

육군본부 직할 독립기갑연대는 경원선의 철원 이남지역에 중점을 두고 수색준

비를 하면서 서울 동남 반경 32㎞ 지역에 대한 수색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포병학교 교도연대는 수도방어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제7보병사단과 경기도 문산 지역에 위치한 제1보병사단 주진지 전방에 대한 화력지원계획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제1공병단은 수도방어계획에 협력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제1·7보병사단 방어전투시 지원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47]

국군방어계획에는 후방경계를 위한 공비토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 22개 대대를 편성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국가주요시설은 원칙적으로 경찰·청년방위대·대한청년단 등이 경비하도록 하였다. 해안선 경비는 해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해군본부의 해안선 방어계획에 의거 한강하구·군산·포항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해안선방어진을 구성하여 해군지휘하에 특별경찰대·해안청년방위대로 하여금 해안 감시 및 경비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대공경계는 공군이 담당하도록 계획하였다. 공군본부는 대공계획에 의거 대공감시부대를 편성하도록 계획하였고, 육군의 각급 부대도 별도 대공부대를 편성하여 중요지역을 방어하도록 계획하였다.[48]

그러나 이러한 방어계획은 전쟁 발발 3개월 전에 수립되어 예하부대에 하달된 관계로 시기적으로 이를 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그 당시 국방예산 및 공비토벌 등 국방 환경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단 한번도 실시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4. 방어계획 평가

육군방어계획으로 통칭되는 육본작전명령 제38호는 전쟁 불과 3개월 전에 완성되어 배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한 실정이었다. 이는 육군본부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 전방사단들이 1950년 5월에야 비로소 불완전한 사단방어계획을 수립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공격작전계획인 이른바

「선제타격작전계획(PSOP : Preemptive Strike Operation Plan)」이 소련 군사고문단에 의해 치밀하게 작성됨으로써 작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수집계획, 각종 통제계획, 그리고 신호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통합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49]

국군 방어계획은 38도선 고수와 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어느 지역과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다가 지상이나 해상으로부터 증원병력이 투입되어 전투력이 증강되면 공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50]

국군의 방어계획은 38도선을 고수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방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이를 수복한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예비진지를 최후 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다. 이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군의 주공이 의정부 지역을 거쳐 서울로 향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 수뇌부는 옹진반도의 제17연대로 하여금 개성 지역 제1사단의 서측방을 보호하고, 의명(依命) 해주(海州)를 점령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제1보병사단은 문산 정면을 방어하면서 우측에 위치한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일대에 화력을 집중하여 양 개 사단의 접경지역이 돌파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으며, 의정부 지역의 제7보병사단은 정면에서 북한군의 주공을 격멸하도록 계획하였고, 춘천 지역의 제6사단도 횡격실 산악지대의 지형상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군을 격파·견제함으로써 의정부 지역에서의 전투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동해안의 제8사단은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하면서 이를 격멸하고, 동해안에 상륙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차단하도록 계획되었다.

수도경비사령부를 포함한 후방사단은 38도 선상에 배치된 전방 사단을 지원하는 개념이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명에 의하여 제7보병사단과 제1보병사단을 지원하고, 대전의 제2보병사단과 광주의 제5보병사단은 제7보병사단을, 그리고 대구의 제3보병사단은 제1보병사단을 증원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때 후방사단들이 담당해 온 공비토벌은 경찰, 해안경비는 해군, 그리고 해병은 소집될 육군병력과 더불어 후방지역의 경계와 작전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51]

이와 같이 국군은 8개 사단 중 4개 사단만을 38도 선상에 배치하였고, 이들 사단들도 안전을 스스로 보장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부대를 종심(縱深)으로 배치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38도선 상의 방어는커녕 38선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도로에 대한 통제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서울 북방의 서부 지역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은 사단 정면을 전부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 초기부터 개성(開城)을 포기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사단 우측 지역의 의정부(議政府)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7사단, 춘천(春川) 및 홍천(洪川) 축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옹진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는 이 지역을 포기하고 해상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철수하도록 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다.[52]

이처럼 국군의 방어계획은 선제공격에 따른 북진을 위한 공격계획이 아니라, 북한군이 공격을 했을 때 이를 현 전선에서 고착 견제하는 수세적인 지역고수 방어개념이었다. 또한 국군 방어계획은 육군 각 전투병과가 작전을 통합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협동방어작전 계획이나, 각군의 전력을 통합시킨 합동방어계획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방어한다는 개별적이고 막연한 계획이었다.[53]

1949년 및 1950년 대북 정보판단에 나타난 북한군이 전력상 절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방 3개 사단의 전방 투입이라는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없었고, 사전 치밀한 계획이 없는 관계로 실전에서는 효과적인 병력 투입에 많은 제한과 문제점을 낳게 하였다. 그 결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연대의 투입은 24~48시간, 후방 예비사단은 최소 48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전쟁 초기 즉응 전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54]

38도선의 경계진지 상에서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차후 후퇴작전이 보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단지 한강선-대전선-낙동강선 이라는 3단계의 행정적 의미의 후퇴작전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운 면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적의 주공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방면에 전투력 배비(配備)를 비롯한 장벽계획 등의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연대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던 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

제 3 절 부대배치와 준비태세

국군이 38도선의 경계임무를 시작된 것은 1949년 1월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하면서부터이다. 당시 38도선은 지형을 고려치 않고 1945년 8월 미·소가 인위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선상에는 12개의 강과 75개 이상의 샛강, 181개의 작은 우마차로, 104개의 지방도로, 15개의 전천후 도로, 8개의 상급 고속도로, 6개의 남북간 철로가 단절되었고, 옹진반도가 고립되었고, 개성의 일부가 소련군의 점령지역으로 편입되었다.[55]

국군은 정부 수립 이후 주한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1949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군사적으로 경계에 불리한 38도선 경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국군이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한 것은 북한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북한은 1947년 7월 38도선 경계임무를 위해 38경비대를 조직하고 1948년 10월 12일 소련군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인수받은 후, 그 병력을 대폭 증원하여 전쟁 발발 당시에는 3개 경비여단으로 증강하였다. 북한의 3개 경비여단은 38도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미리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미군 철수 후에 있을 국군 배치에 사전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56]

그러나 1949년 1월 12일부터 38도선 경비를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국군은 처음 군·경 합동으로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제1사단은 38도선 방어임무를 미군 철수 이전부터 이미 수행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1948년 1월 초순 사단의 전신인 제1여단이 주한미군과 개성 부근의 38도 분계선 초소에서 연합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단은 1949년 1월 미군 철수 이후부터 38도선에 대한 경계임무에 들어갔다.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에 대한 경계임무는 4개 보병사단 및 1개 독립연

대가 책임지역을 할당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육군은 총 8개 보병사단 21개 보병연대 및 1개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로 편제된 4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다. 제1사단은 개성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1·12·13연대, 그리고 제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7사단은 의정부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9·25연대,[57] 그리고 제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6사단은 춘천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2·7·19연대, 그리고 제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8사단은 동해안 강릉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0·21연대, 그리고 제1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독립 제17연대는 38도선의 옹진반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2·3보병대대와 제7포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표 7-3>은 전쟁직전 육군부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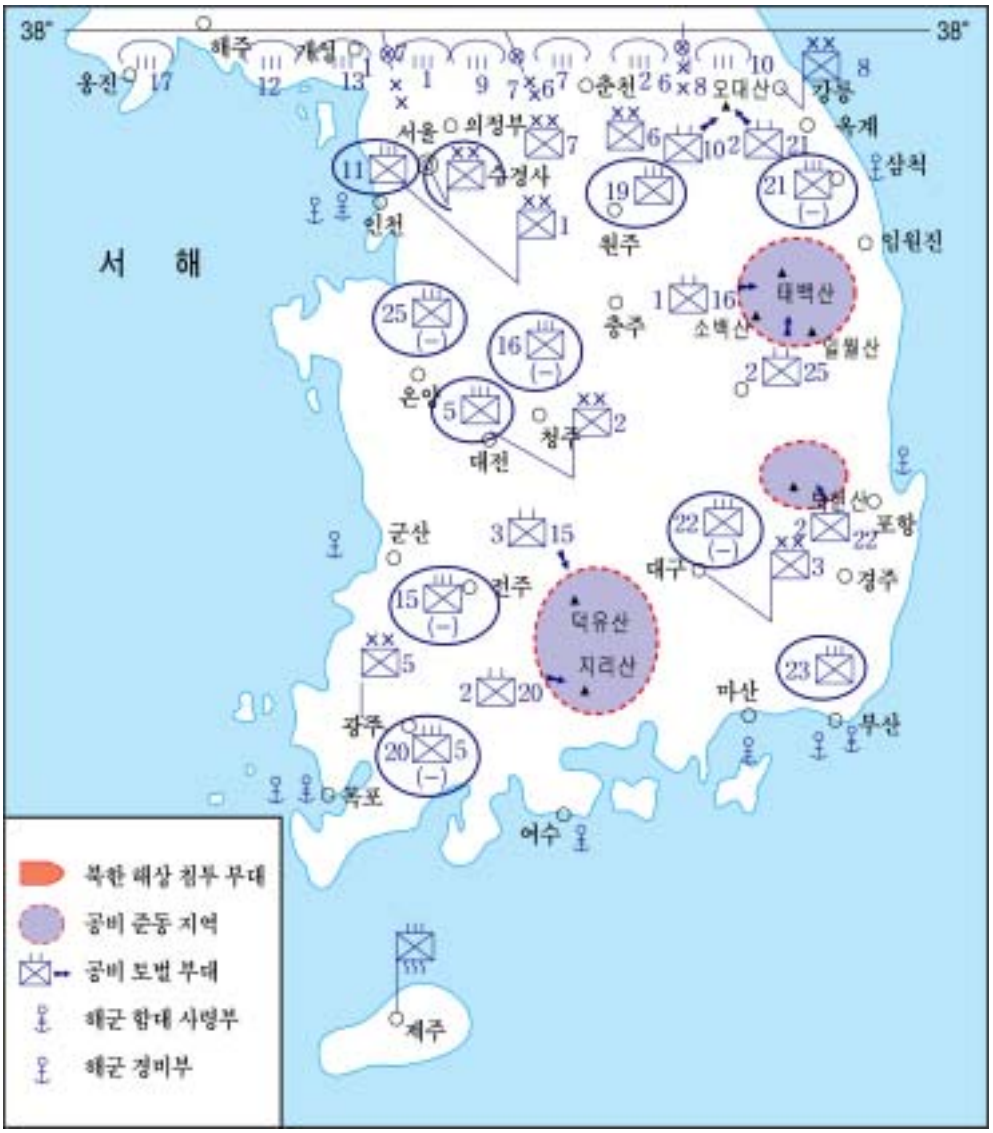
후방 예비사단으로는 4개 사단이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사령부를 서울에 두고서 예하에 제3·8·18연대가 있었다. 제2사단은 사령부를 대전에 두고서 예하에 제5·16연대가 있었다. 제3사단은 사령부를 대구에 두고서 예하에 제22·23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제5사단은 사령부를 광주에 두고서 예하에 제15·20연대

<표 7-3> 전쟁직전 육군 전투부대 현황[58]

구분		부대 명칭	예하 부대
전방부대	옹진반도	독립제17연대	제1·2·3보병대대, 제7포병대대
	개성지구	제1보병사단	제11·12·13연대, 제6포병대대, 공병대대
	동두천 지구	제7보병사단	제1·9·25연대, 제8포병대대, 공병대대
	춘천/원주지구	제6보병사단	제2·7·19연대, 제16포병대대, 공병대대
	주문진/강릉지구	제8보병사단	제10·21연대, 제18포병대대, 공병대대
후방부대	서울지구	수도경비사령부	제3·8·18연대, 육본직할 독립기갑연대
	중부지구	제2보병사단	제5·16연대, 공병대
	영남지구	제3보병사단	제22·23연대, 보국대대, 공병대
	호남지구	제5보병사단	제15·20연대, 제1독립대대, 공병대

및 제1독립대대가 있었다. 이들 후방 사단들은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토벌을 위한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59] <상황도 7-2>는 6·25전쟁직전 국군의 부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도 7-2> 전쟁직전 국군 부대배치



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보병 21개 연대 63개 대대 중 실제로 38도선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는 12개 연대 36개 대대 중 8개 연대 13개 대대였다. 다른 4개 연대 23개 대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서울－원주－삼척을 연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후방지역에는 9개 연대 27개 대대 중 22개 대대는 후방지역 경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개 대대, 즉 제16연대 제1대대, 제25연대 제1대대, 제22연대 제2대대, 제15연대 제2대대, 제20연대 제2대대는 남한지역에 침투한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태백산·일월산·보현산·지리산·덕유산 등 남부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60]

이러한 부대배치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배치는 북한의 전면 공격을 무시한 배치였다. 후방에 배치된 4개 사단은 공비토벌 및 치안유지에 적합한 부대배치였고, 38도 선상에 배치된 전방 4개 사단 및 1개 연대는 북한군의 국지도발 및 소규모 국경 충돌에 적합한 부대 편성 및 배치였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의 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인식한 것과 비슷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전면적인 군사공격이 아니라 게릴라 부대를 중심으로 한 침투전술이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61]

1. 전방 방어부대의 배치와 임무

1)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7연대

옹진반도를 책임지역으로 방어하고 있던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始興)에서 창설되어, 다음 해인 1949년 6월 20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로 예속됨과 동시에 서울 용산 삼각지(현 전쟁기념관)로 이동하여 수도서울의 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7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경기 옹진(甕津) 반도로 이동하여 은파산(銀波山) 전투에 참전한 후,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

<상황도 7-3> 제17연대 방어계획

접이식

되자 옹진지구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날 부로 수도경비사령부 예속에서 벗어나 육군본부의 작전지휘를 받는 육군본부 직할 독립연대로 예속이 변경되었다.[62]

옹진반도는 방어정면이 45㎞에 달하였는데, 그 광정면을 제17독립연대인 1개 연대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방어정면은 통상 사단 방어정면 10㎞에 비하여 약 4.5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옹진반도는 38도선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527m)을 비롯하여 계명산(279m), 은파산(283m)이 위치해 있었고, 그 남쪽에는 두락산, 421고지, 충무고지, 녹달산, 까치산(鵲山, 350m) 등이 있었다.

제17연대는 옹진반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지대, 주저항선, 최후저항선과 같은 종심 깊은 방어지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제17연대는 38도 분계선 남쪽의 두락산－412고지－충무고지－녹달산－까치산－초동을 연결하는 방어선이 주저항선이자 최후저항선이었다.[63]

옹진반도는 38도선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차단되어 교통을 해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전방에 배치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옹진반도 중앙부인 옹진광산에 배치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제17연대장은 1948년 11월 20일 초대 연대장인 백인엽(白仁燁) 대령이 계속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은 김희태(金禧泰) 소령, 제2대대장은 송호림(宋虎林) 소령, 제3대대장은 오익경(吳益慶) 소령이었다. <상황도 7－3>은 제17연대의 방어계획이다.

육군본부의 옹진 방어계획을 보면 장차 전투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계획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 시에는 북한군에게 손실을 가하면서 38도 분계선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국부적으로 38도 분계선 이남으로 침공할 시에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면서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주저항선을 지탱하는 것이었다. 제3단계 작전은 북한군이 전면 공격을 할 때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하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64] 즉, 작산(鵲山)지대를 확보함으로써 강령(康翎)을 장악하고 최후의 경우에는 부포(釜浦)항을 사수하여 증원병력을 기다려 적을 반격하거나 또는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포항에서

연대병력을 인천방면으로 해상 철수하는 것이었다.[65]

2) 제1보병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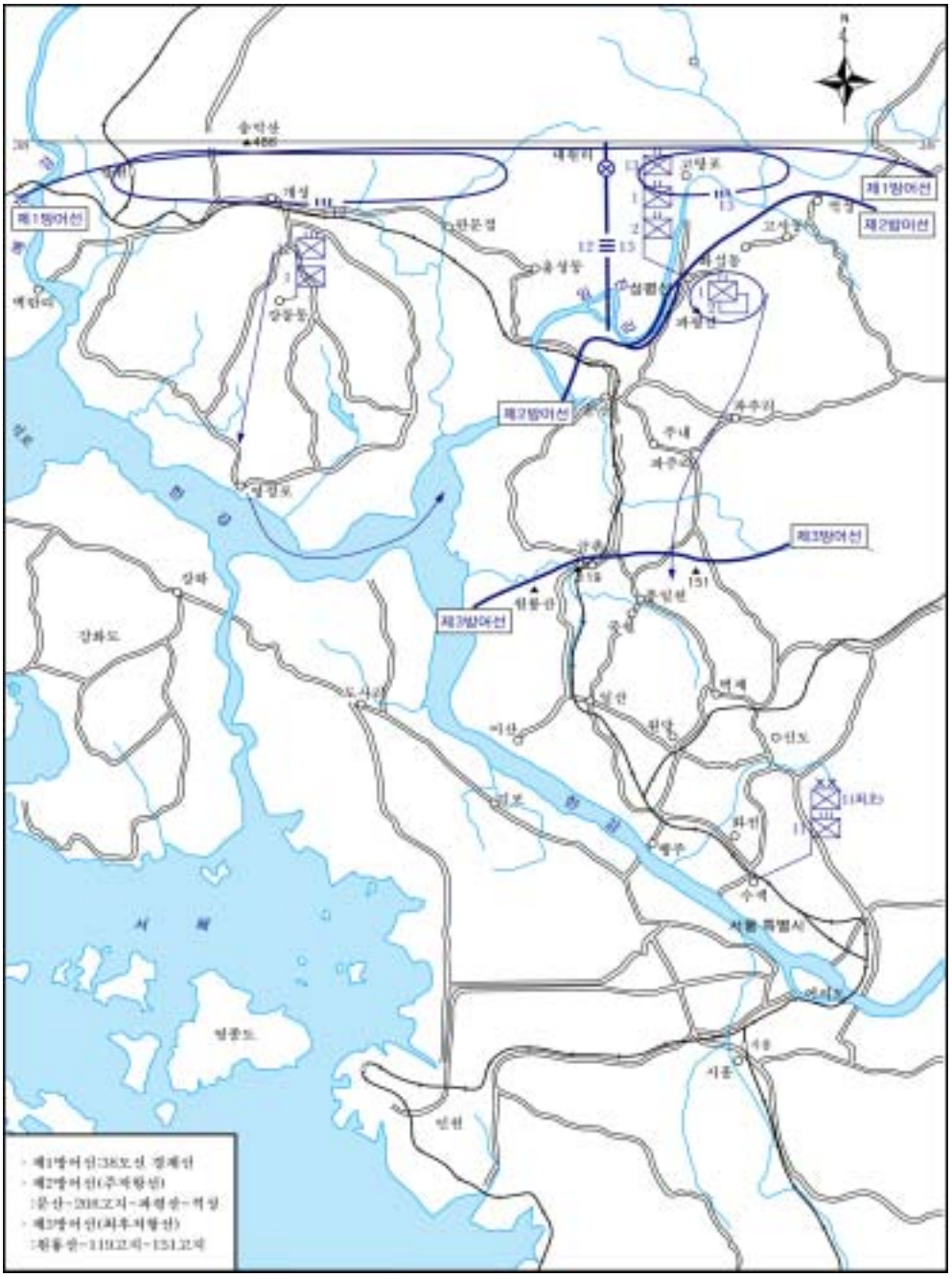
개성－문산－고량포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제1보병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1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된 부대로, 초대 사단장에는 제1여단장이던 김석원 준장이 사단장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4일 송악산(松嶽山) 전투를 치른 후, 그 해 6월 1일 수색(水色)에 위치한 제13연대를 문산(汶山)으로 이동시켜 개성 우측지역의 38도선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그 후 사단은 1950년 4월 12일을 기하여 인천(仁川)에 주둔한 제12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38도선 지역을 인수시킴과 동시에 개성(開城)에 위치한 제11연대를 사단사령부가 있는 수색으로 이동시켜 사단 예비로 조치하였다.[66] 전쟁 발발 당시 사단장은 1950년 4월 20일 부임한 백선엽(白善燁) 대령이었다.

이렇듯 제1사단이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48년 1월 초순 제1사단의 전신인 제1여단이 주한미군과 개성 부근의 38도 분계선 초소에서 연합근무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그 결과 제1사단은 38도선 전방에 배치된 국군 4개 사단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11월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개성 일대 38도 분계선을 인수한 이래 1950년 4월 2일 제12연대와 진지를 교대할 때까지 1년 5개월 동안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방어지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중심지인 개성은 바로 그 북쪽의 감제고지(瞰制高地)인 송악산(488m) 때문에 국군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8도선 경계지대는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으로 방어의 입장에 있는 제1사단에게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사단은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송악산 남사면의 38도 분계선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1949년 5월 4일 북한군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 송악산 전투로 발전되었다.[67]

이렇듯 제1사단 지역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전쟁 발발 2개월 전에 사단장으로 부임해온 백선엽(白善燁) 대령은 작전지역의 특징과

<상황도 7-4> 제1사단 방어계획



접이식

가용병력, 적정 등을 고려하여 약 90㎞에 이르는 광정면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개념에서 정규전에 대비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문산－봉일천－서울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는 방어편성이었다.[68]

제1사단의 방어정면은 청단－연안－개성－고랑포까지 90㎞에 달했다. 이 정면 역시 연안(延安)반도의 지형적 조건이 불리하므로, 청단, 배천(白川), 연안 부근에는 경계부대 정도를 배치하여 적정을 수집케 하고 적의 침공시에는 백석포(白石浦)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해군함정으로 문산 부근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개성방면은 상황에 의하여 예성강(禮成江) 철교를 파괴하는 동시에 남하하는 적을 최대한으로 저지시키는 한편 장단(長湍) 예비방어선에서 제12연대는 예성강 이남에서 철수하여온 경계부대와 합류하여 지연전을 하고 상황이 급할 때에는 진봉산(進鳳山)에 집결한 후 여기서 영정포(領井浦)로 이동한 다음 다시 선박으로 문산 부근에 상륙하여 우일선 부대인 제13연대 주력과 합류하여 사단 주저항선인 문산－적성(積城)간의 임진강 남안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13연대는 고랑포(高良浦) 일대의 진지에서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임진강 이남의 좌일선 부대의 철수를 엄호하여 사단 예비대 및 증원부대의 지원을 받아 주저항선에서 적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69] 이 계획은 개성, 연백(延白), 청단 등의 주요 지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므로 백선엽 사단장은 육군본부로 출두하여 총참모장 채병덕 장군의 승인을 받았다.[70] 다음 <상황도 7－4>는 제1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이렇듯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적의 주공방향을 문산－봉일천－서울 축선 방면으로 예측하고 제1사단 방어계획을 3선 개념에 의한 방어지대로 편성하였다. 제1선은 38도선 분계선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의 접근로 및 침투로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에 소대 또는 분대단위 거점과 진지를 준비하여 전투전초 임무와 주민통제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으로 임진강 남쪽의 문산리－208고지－파평산－적성을 연결하는 선이었다. 북한군이 공격하면 38도선 경계지대에 배치된 제1사단 병력을 철수한 뒤 임진강 철교를 폭파하며,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때에는 사단 예비로써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

이었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방어선이었다. 최후저항선은 원룡산－119고지(금촌 북방 3.4㎞)－151고지를 연결하는 선이었다.

백선엽 사단장은 이러한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 1950년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학도호국단 1,000여명 이상을 동원하여 주저항선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방어선은 개인호와 교통호는 무개호로 구축되었고, 공용화기진지 및 관측소만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장벽자재가 지급되지 않아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다. 임진강 철교 폭파계획은 준비되어 있었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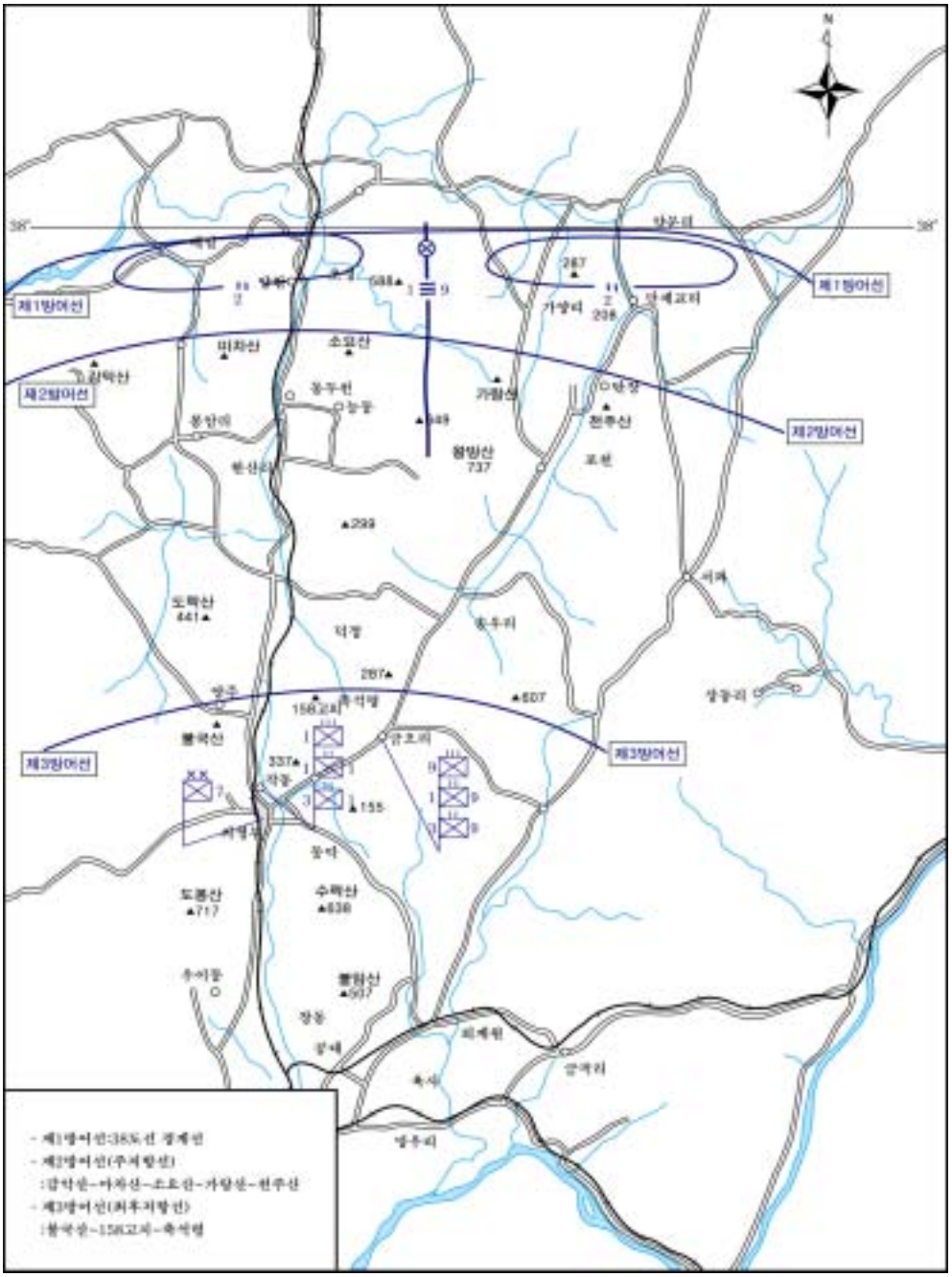
제1사단은 2개 연대를 제1선에 배치하고 1개 연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전성호(全盛鎬) 대령이 지휘하는 일선연대인 제12연대는 본부를 개성 남방 4㎞ 지점인 강릉(康陵)에 두고 2개 대대가 65㎞의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연대본부와 함께 있었다. 김익열(金益烈) 대령이 지휘하는 우일선 연대인 제13연대는 25㎞ 정면에 1개 대대를 배치한 다음 연대본부를 문산에 두고 나머지 2개 대대는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서울 근교의 수색(水色)에 위치하였고, 최경록(崔慶祿) 대령이 지휘하는 예비연대인 제11연대는 사단사령부 지역에서 정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3) 제7보병사단

의정부(議政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7보병사단은 원래 제7여단으로 창설되었으나, 1949년 2월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그 해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가 그 해 6월에 제7사단으로 개칭되면서 의정부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7사단은 최초 제1・3・9연대로 편성되었으나, 1950년 6월 1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3호」에 의해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 예하로 예속이 변경되었다가, 그 해 6월 1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1950. 6. 13)」에 따라 제2사단 제25연대가 사단에 편입되었으나, 주둔지 관계로 전쟁 발발 때까지 신 주둔지로 이동

<상황도 7-5> 제7사단 방어계획



접이식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7사단은 예비연대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전쟁 발발 당시 사단장은 1950년 6월 부임한 유재흥(劉載興) 준장이었다.[72]

국군 제7사단은 적의 주공 방향으로 판단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사단의 방어정면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에 달했다. 사단은 1950년 5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에 따라 사단방어계획을 완성하고 주저항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6월 7일에는 유재흥(劉載興) 준장이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제7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지역은 북한군이 남침을 자행할 경우 적의 주공이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38도 분계선에 배치된 사단 중에서 가장 좁은 방어정면을 부여하였다.

제7사단의 방어계획은 육군본부의 방어개념에 바탕을 둔 지역고수 개념으로 3선 방어개념이었다. 제1선은 38도 분계선으로, 이 선 부근의 전술적 요지에 소대단위 거점을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조기경고, 지연, 침투방지, 주민통제 및 보호, 적정 수집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선은 주저항선으로 북한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상황 추이에 따라 대응하면서 이 선 전방 주요 접근로상에 가설된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도로 대화구 및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 선이 돌파되었을 경우에는 사단의 가용병력으로 역습을 감행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주저항선은 감악산－마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을 연결하는 선이다. 제3선은 최후저항선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방어선으로 군 예비부대가 역습할 수 있는 선이었다. 이 선은 불국산－158고지－축석령을 연결하는 선이다.[73] 다음 <상황도 7－5>는 제7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사단사령부는 의정부(議政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함준호(咸俊鎬) 대령이 지휘하는 제1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써 동두천(東豆川)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대 본부 및 제1대대는 의정부(議政府)에, 제2대대는 동두천에, 그리고 제3대대는 의정부 북방 삼리(三里)에 위치하였다. 윤춘근(尹春根) 중령이 지휘하는 우일선의 제9연대는 포천(抱川) 정면을 담당하여 연대본부와 제1・3대대는 의정부북방 4㎞ 지점인 금오리(金梧里)에 위치해 있었고, 38선 경비를 담당한 제2대

대는 포천에 대대본부를 두고 있었다.

본래 사단예비대인 제3연대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이 변경되고, 대신 충남 온양(溫陽)에 주둔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의 제25연대가 배속되어 6월 15일까지 주둔중인 금오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74] 수용시설 문제로 적 남침시까지 부대를 이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7사단은 예비연대가 없는 가운데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7사단의 방어진지 준비는 인접사단과 마찬가지로 일반진지에 대해서는 교통호와 산병호(散兵壕)는 구축되어 있었으나, 철조망이나 지뢰는 매설하지 못하였다. 다만 만세교(萬世橋) 남방 4㎞ 지점에 대전차용 방어물로 철근 콘크리트 진지 1개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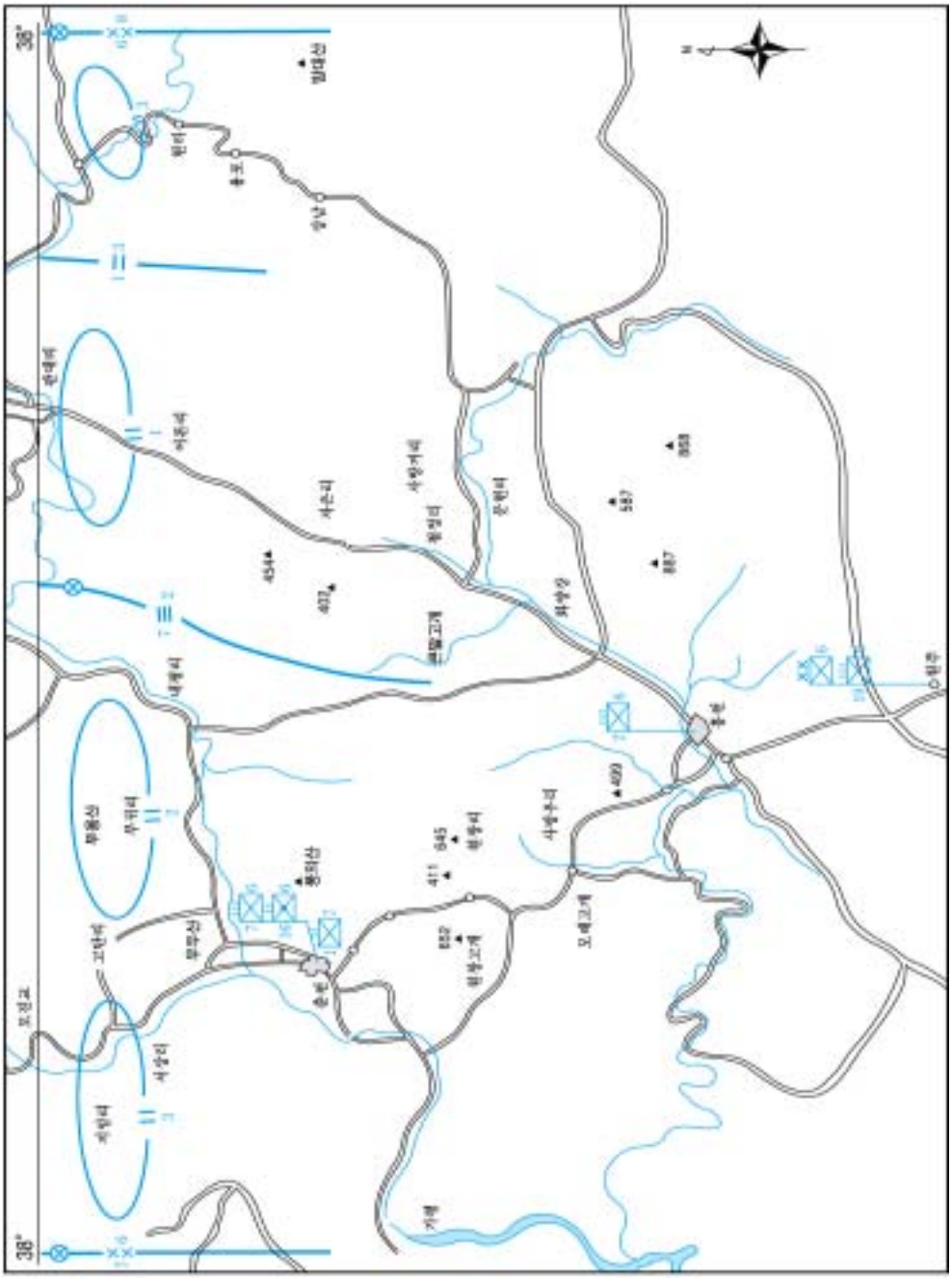
4) 제6보병사단

중부지역의 요충지인 춘천(春川)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제6보병사단은 1949년 청주(淸州)에서 원주로 이동한 다음 현리(縣里)로부터 가평(加平), 즉 제7사단 우측 협조점인 적목리로부터 제8사단의 좌측 협조점인 진흑동(鎭黑洞)에 이르기까지 84㎞의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제6사단 사령부는 원주(原州)에 위치해 있었고, 사단장은 학병 소위 출신인 김종오(金鍾五) 대령이었다.

임부택(林富澤) 중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춘천에 연대본부를 두고 화천(華川)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연대는 사단의 좌일선 부대로서 1949년 2월 20일 제6사단에 예속되어 청주로부터 원주로 이동하여 2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그해 5월 3일 현 진지인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춘천으로 이동한 후 제7연대는 제8연대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수받아 제3대대와 제2대대를 전방에 두고,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춘천에 배치하였다.

함병선(咸炳善) 대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홍천(洪川)에 연대본부를 두고 인제(麟蹄)방면의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연대는 옹진의 은파산(銀波山) 전투(1949. 8. 13～11. 15)를 끝마치고 전쟁 발발 불과 5일전인 1950년 6월 20일 홍천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예속되었다. 제2연대는 사단의 우일선 부대

<상황도 7-6> 제6사단 방어계획



접이식

로서 제1대대와 제3대대와 전방에 두고, 제2대대를 연대 예비로 당인리(唐仁里)에 배치하였다.[76] 따라서 제2연대는 지형도 잘 모르는 생소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민병권(閔丙權) 중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는 사단 예비로서 사단사령부와 함께 원주(原州)에 있었다. 제19연대는 남원(南原)지구공비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쟁 발발 45일전인 1950년 5월 1일 제6사단에 예속되어 원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6사단의 방어개념은 춘천에 방어중점을 두고 적이 공격하면 이를 진지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제6사단은 적의 주공이 화천－춘천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포병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제16야전포병대대를 춘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방 2개 연대에는 사단 공병 1개 중대씩을 각각 배속하였다. 다음 <상황도 7－6>은 제6사단의 방어계획이다.

제7연대 방어지역인 화천(華川) 방면에서 춘천에 이르는 도로상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대전차 예비진지 3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중대마다 2～3개소의 통나무로 만든 유개호를 마련하고 호(壕)간에는 철조망을 치고 그 중간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면은 적의 조공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방어상의 융통성과 주공방면의 작전추세에 호응하기 위하여 제2선 방어진지의 구축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어진지는 종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77] 따라서 방어에 유리한 소양강변과 그 북쪽 춘천 분지를 감제하는 164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전쟁 발발 1개월 전인 5월 하순에 공사를 마쳤다.[78]

그러나 제2연대 방어지역인 인제－홍천 정면에는 콘크리트 진지가 없었고, 통나무로 쌓은 유개호를 제8연대로부터 인수받아 수축하였는데, 이곳에는 철조망이나 대인지뢰가 없었고, 그렇다고 이를 새로 구축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79]

북한군의 남침시에는 38선의 경계지역에서 적극 저지하고 진지가 돌파시에는 춘천과 인제방면에서 남하하는 적에 대하여 사단 예비대를 투입하여 견제하는 동시에 좌일선인 가평(加平)－현리(縣里) 방면에도 예비병력을 배치하여 대비토록 하였다.

전선상황의 진전에 따라 사단은 공세이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진지는 38선상의 중요지점에 1개 중대씩 예비병력을 배치하고 일선 연대는 각각 1개 대대의 예비(제2연대는 2개 대대의 예비대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5) 제8보병사단

강릉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에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6호」에 의해 제6사단 예하 제10연대와 제5사단 예하 제21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었다.

제10연대는 38도선 경비를 담당하고, 제21연대는 삼척에 연대본부를 두고 공비소탕 작전을 실시하였다. 1950년 3월 22일 제21연대는 김달삼(金達三)을 비롯한 그 주력을 소탕하였고, 그 해 4월 9일에는 이호제(李昊濟) 부대를 섬멸하였다. 제10연대도 김달삼과 이호제의 월북을 지원하기 위해 급히 남파된 김상호(金尙昊)의 게릴라부대 300명을 청계동 계곡에서 토벌하였다.[80]

제8사단은 2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38도선 책임 경계지역은 제6사단 좌측 책임지역인 진흑동(鎭黑洞)으로부터 동해안의 기사문리(基士文里)에 이르는 26㎞ 정면을 제10연대가 단독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해 있었고, 사단장은 제16연대장 겸 태백산지구사령관으로 있다가 1950년 6월 10일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성가(李成佳) 대령이었다.

고근홍(高根弘) 중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38선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10연대 제3대대는 그 동안 제1대대가 담당하고 있던 38도선 경비임무를 1950년 6월 25일 이동하여 26일 진지를 교대하도록 지시받았다.[81] 이 때 제3대대가 부여받은 책임구역은 제6사단 협조점인 진흑동－우탄리－서림리－정족산(鼎足山)에 이르는 12㎞의 정면이었다. 연대의 우일선 부대인 제2대대는 제3대대의 우측 경계부대로서 책임 경계구역은 동해안으로부터 46고지－판교리－대치리－명지리－연화동을 연하는 14㎞의 정면이었다. 제3대대와 38도선 경계임무를 교대할 제1대대는 연대 예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25일 전쟁발발로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진지교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도 7-7> 제8사단 방어계획

접이식

제21연대장 김용배(金容培) 중령은 1950년 6월 10일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제21연대 본부는 삼척(三陟)에 주둔해 있었다. 연대는 8개월에 걸쳐 오대산 및 태백산(太白山) 지구 일대에 남파된 공비토벌작전을 1950년 5월 일단락 짓게 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기관총 게릴라부대가 다시 남파되자, 제21연대는 1950년 6월 13일 제2대대를 진부리(珍富里)로 출동시키고 6월 20일 공비들을 거의 토벌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북평(北坪)에 위치하고, 제2대대 제5·8중대 및 제3대대 제12중대는 삼척(三陟)에 이었다. 한편 제18포병대대는 1949년 10월 28일 사단에 배속된 후 105㎜ 야포 15문을 장비한 채,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82]

제8사단의 방어계획에는 일반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83]

먼저 일반계획을 보면, 유사시 적을 38선상의 진지에서 저지하다가 진지가 돌파되었을 때에는 중점을 동해안에 두고, 인구(仁邱)－어성전(漁城田)에서 적에게 타격을 준 다음 이어서 연곡천(連谷川)변에 적을 유도하여 이 선에서 적을 격멸함으로써 여하한 경우에도 강릉을 확보하여, 여기서 공세이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방어세부계획 상에는 부대편성 및 단계별 전투지도, 그리고 지원부대의 임무 및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대편성을 보면, 우일선에는 제10연대의 2개 대대를 전방, 1개 대대를 예비로 하고, 105㎜ 곡사포·57㎜ 대전차포·공병의 각 1개 중대를 배속하였다. 좌일선에는 제21연대의 제1대대와 사단 공병대대를 배치하고, 사단 예비부대로는 제21연대 1개 대대를 두었다.

또한 전투지도는 각 전투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제1단계 경계진지 및 진지 전방 전투, 제2단계 주문진 전투, 제3단계 주방어지대 전투, 제4단계 진내 전투(陣內戰鬪)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제1단계 경계진지 전투간에는 화력의 집중 및 역습으로 적을 38도 선상에서 저지하여 공세로 이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정족산(鼎足山)－서림(西林)에서 공격해 오는 적을 역습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주문진 전투간에는 주문진의 외곽에 구축된 전초진지 앞으로 적을 유인한 다음 주문진 수비대와 연곡천 주진지대의 병력으로 적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제3단계 주방어지대 전투간에는 사단의 전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한 후 역습을 실시하여 적을 연곡천 연안선에서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 선에서 적을 고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광원리(廣院里)에서 적을 섬멸 또는 저지하는 것이었다.

제4단계 진내 전투간에는 주진지 및 강릉 북방 산지(山地)에 구축한 외곽진지에서 소모된 적 전력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강릉시를 최후까지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때 좌일선 부대는 진부리(珍富里)에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84] 다음 <상황도 7-7>는 제8사단 방어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전투간 제18포병대대는 우일선 부대에 배속되어 적의 접근저지, 아군의 반격지원, 그리고 대포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공병부대는 도로파괴, 장애물 및 지뢰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강릉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예비대인 제21연대 1개 대대는 진부리로 이동시켜 좌일선 부대의 예비대로 하고,[85] 배속된 증원부대를 사단예비대로 하여 그 주력을 강릉에, 일부를 묵호(墨湖)에 위치시켜 대기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사단 책임구역 및 후방지역의 경비는 경찰, 청년방위대, 학도호국단 등을 동원하여 각 마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가주요 시설목표인 발전소 및 수원지(水源池) 등에 대해서도 경계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86]

그러나 1개 연대를 결한 2개 연대로 창설된 사단은 26㎞에 이르는 38도선 경비를 담당하여 계속적인 적의 도전을 받는 가운데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적의 남침에 대비한 병력의 집중이나 유기적인 제병(諸兵) 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가운데 전쟁을 맞이하였다.[87] 이는 전방 사단 및 제17연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사항이었다.

6) 전방 방어진지 구축 실태

국군은 1949년 초 정부가 수립된 이후 주한미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임무를 공식으로 인수받았다. 이 때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방어진지는 38도선을

통과하여 남북으로 왕래하는 인원이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경비초소 뿐이었다. 그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시설물도 콘센트 건물이 전부였고, 방어진지는 하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계받을 때, 전술용 방어진지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88]

북한이 소련군으로부터 38도선 경계임무를 인계받은 시기는 국군보다 훨씬 빨랐다. 북한의 38경비대는 1947년 7월부터 소련군으로부터 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받기 시작하였다. 38도선을 인수받은 북한군은 1949년 초 경비대를 3개 여단으로 증편함과 동시에 38도선 일대의 전술 및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점령하고 여기에 토치카 등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38도선 경계를 강화하였다.

국군은 이처럼 북한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38도선 경계임무를 인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보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방어진지를 구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38도선 일대의 전초 진지 구축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령한 북한의 38경비대의 방해로 인하여 쉽지가 않았다. 특히 양측이 38도선 일대에서 서로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려는 과정에서 무력충돌로까지 번지게 된 이후부터 북한의 견제를 받는 국군의 진지 구축공사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국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방해뿐만 아니라 38도선을 전담하는 별도의 경비부대가 없는 관계로 부대의 증편 및 교체시기에 따라 경계부대가 다른 부대로 빈번히 교체되었다. 그 때마다 38도선 경계는 물론이고 방어진지 구축 공사에도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방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군의 38도선 일대에 대한 방어조직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전쟁을 불과 3개월 앞둔 1950년 3월이었다. 국군이 1949년 5월부터 여단에서 사단체제로 증편되면서 방어조직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1950년 3월에는 국군 방어계획이 작성되고, 그 해 5월까지 전방 사단의 방어계획이 준비됨에 따라 방어편성과 방어진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국방예산 부족 및 정부 지도층의 국방인식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38도선에서의 무력도발, 후방지역에서 공비의 준동에 따라 작전소요의 증

가, 진지공사 자재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전방 사단의 방어진지 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각 사단별로 작전 책임지역 내 지역주민, 학생, 대한청년단 등의 노력봉사에 힘입어 진지공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89]

그 당시 38도선 일대의 진지공사는 사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방어진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관측소와 공용화기 진지 등에만 콘크리트 및 통나무로 구축된 유개호 진지가 있었다. 진지간에는 교통호로 연결되었고, 진지전방에는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였다. 진지와 철조망 사이에는 대인지뢰를 매설하였다.

또한 주저항선과 예비진지 사이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교통호와 개인호 등을 구축하였다. 이 지역에는 지뢰나 철조망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적의 전차에 대비한 장애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대전차지뢰는 보유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매설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전차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책이 결여된 채 국군은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90]

공병은 보병부대의 축성 및 장애물 공사를 지원하면서 임진교와 소양교 등 38도선 일대의 전술적으로 중요한 교량에 대한 폭파 및 거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전방 사단에 편제되어 있는 포병대대에서는 작전지역 내의 측지(測地)를 실시하고 포병관측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유사시 각 포대별로 전방연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포병 진지를 선정해 두었다.[91]

이렇듯 전쟁 직전 38도선 일대의 전방 방어진지에 대한 구축은 적의 곡사화기 공격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자체 생존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선(線) 방어개념의 방어편성이어서 종심(縱深) 방어력이 부족하였다. 특히 적의 주요 접근로상에 북한군의 최신형 소련제 전차에 대응할 대전차 방어대책이 전혀 없었다.

2. 후방 예비부대

6·25전쟁 발발 당시 후방예비사단은 4개 보병사단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유

사시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북한의 주요 접근로로 판단되는 문산 및 의정부 축선에 대한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전방 사단을 증원하는 것이었다.

후방예비사단은 수도경비사령부를 비롯하여 제2보병사단·3보병사단·제5보병사단이었다. 이들 예비사단은 평시에는 군 예비로 있다가 전쟁이 발발되면 전방사단에 대한 증원 및 의명(依命) 공세이전을 위한 역습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평시 서울에 주둔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김포 인천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다가, 의명 적의 주공 진출로인 제1사단과 제7사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92] 6·25전쟁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이종찬 대령이었고, 예하 연대로는 제3연대, 제8연대, 제18연대가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 연대장은 모두 육사 제1기 출신으로 제3연대장은 이상근(李尙根) 중령이었고, 제8연대장은 서종철(徐鍾喆) 중령이었고, 제18연대장은 임충식(任忠植) 중령이었다.

제2사단·제3사단·제5사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신속히 서울로 집결하여 서울 주변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침투를 적극 방지하는 동시에 제2사단은 춘천－의정부지구에, 제3사단은 의정부－문산지구에, 제5사단은 문산－의정부지구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명 공세이전을 위한 역습을 실시하는 것이었다.[93]

제2사단은 제5연대와 제16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단장은 이형근 준장이었다. 사단사령부는 충남 대전에 위치해 있었고, 대전에는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는 제5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문용채(文容彩) 대령이 지휘하는 제16연대는 충북 청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원래 제2사단이었던 제25연대는 전쟁 발발 10일전인 6월 15일부로 제7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었으나, 수용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전쟁 발발 때까지도 계속 온양에 주둔해 있었다. 제25연대장은 김병휘(金炳徽) 중령이었다. 제16연대 1대대와 제25연대 제2대대는 태백산 지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출동해 있었다.

제3사단은 제22연대와 제23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단장은 유승열 대령이었다. 사단사령부는 대구에 위치해 있었고, 대구에는 강태민(姜泰敏) 중령이 지휘하는 제22연대가 주둔해 있었다. 김종원(金宗元) 중령이 지휘하는 제23연대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2연대 2대대는 보현산 지역의

<표 7-4> 6·25전쟁 발발 당시 후방부대 지휘관 및 임무

부 대 명	예하부대	사단장/연대장	위치	임 무
수도경비사령부	사령부	대령 이종찬	서울	• 수도권 방어임무 • 의명 제1·7사단 증원
	제3연대	중령 이상근	서울	
	제8연대	중령 서종철		
	제18연대	중령 임충식		
제2보병사단	사령부	준장 이형근	대전	• 후방지역 경계 • 의명 의정부지역 지원
	제5연대	대령 백남권 (대리 중령 박기성)	대전	
	제16연대	대령 문용채	청주	
제3보병사단	사령부	대령 유승열	대구	• 후방지역 경계 • 의명 의정부/문산지역 지원
	제22연대	중령 강태민	대구	
	제23연대	중령 김종원	부산	
제5보병사단	사령부	소장 이응준	광주	• 후방지역 경계 • 의명 의정부/문산지역 지원
	제15연대	대령 최영희	전주	
	제20연대	대령 박기병	광주	
독립기갑연대	연대본부	대령 유흥수	서울	• 수도권 지역 수색임무

공비소탕을 위하여 출동해 있었다.

제5사단은 제15연대와 제20연대의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고, 전쟁 당시 사단장은 이응준 소장이었다. 사단사령부는 전남 광주에 위치해 있었고, 광주에는 박기병(朴基丙) 중령이 지휘하는 제20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최영희(崔榮喜) 대령이 지휘하는 제15연대는 전북 전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0연대 제2대대는 지리산 지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출동해 있었고, 제15연대 제1대대는 덕유산 지역의 공비소탕을 위해 각각 출동해 있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서울 서빙고에 위치해 있던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가 있었다. 유흥수(劉興洙) 대령이 지휘하는 독립기갑연대는 전시(戰時)

경원선 철원 이남지역에 대한 수색 및 서울 동남 반경 32㎞ 지역에 대한 수색 임무를 부여받았다.[94]

이렇듯 후방 사단에 대한 평시 및 전시 임무는 명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후방 예비사단은 대부분 건제를 무시한 채 전방지역에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게 됨으로써 실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병력·장비·교육훈련

6·25전쟁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하였다. 이는 당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 면에서 근본적 취약점과 위협이 되었다. 북한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직전의 총 병력이 198,380명에 달함으로써 국군의 105,752명에 비하여 2 : 1로 우세하였다. 전방방어지역에서의 피아 병력 비율은 아군 방어부대 병력을 적의 전개부대와 비교할 때, 주공방향인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은 1 : 4.4이었고, 개성－문산－서울 축선은 1 : 2.2였다. 조공방향인 화천－춘천과 인제－홍천 축선은 1 : 4.1이었고, 양양－강릉 축선은 1 : 2.5로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하였다.[95]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7－5>와 같다.

주공방향의 전투력 비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육군본부가 취한 일부 부대의 예·배속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1950년 6월 15일부로 서울 서빙고에 위치한 제7사단의 예비연대인 제3연대를 서울의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변경하고, 온양에 위치한 제2사단 제25연대를 제7사단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명령대로 후방으로 이동을 해 버렸는데, 제25연대는 주둔할 전방지역의 수용시설이 해결되지 않아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침을 당하였다.[96]

적의 남침위험도 경고된 상황에서 전방부대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시킨 자체가

<표 7-5> 예상 접근로별 피아 병력 비교

접근로	국군		북한군		비율
	병력	부대	병력	부대	
문산-서울	9,715명	제1사단	21,000명	1사단(11,000명), 6사단(-1)(8,000명), 203전차연대(2,000명)	1 : 2.2
의정부-서울	7,211명 (실병력 : 4,500명)	제7사단	32,000명	제3사단(11,000명), 제4사단(11,000명), 제13사단(6,000명), 105전차여단(-1)(4,000명)	1 : 4.4 (1 : 7.1)
화천-춘천 인제-홍천	9,112명	제6사단	36,938명	제2사단(10,838명), 제12사단(12,000명), 제15사단(11,000명), 독립전차연대(1,100명), 제12MTSP(2,000명)	1 : 4.1
양양-강릉	6,866명	제8사단	17,000명	제5사단(11,000명), 제766부대(3,000명), 제549부대(3,000명)	1 : 2.5

전술적으로 부대교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밖에 당시 1/3 병력이 외출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병력 비율은 이보다 훨씬 격차가 심하여 예로써 제7사단의 경우는 1 : 7로 대단히 심각하였다.

무기와 장비의 상대적 전투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 북한군은 T-34전차 242대, 전투기를 주종으로 한 항공기 211대를 보유한데 비하여 국군은 전차는 전무하였고 항공기도 연락용과 연습용을 합하여 22대 밖에 없어 비교가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화기나 항공기를 공격할 대공화기도 갖추지 못하였다. 편제상 보유한 57㎜ 대전차포나 2.36인치 로켓은 성능이 약하여 정상적인 공격으로서는 T-34 전차를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북한군은 122㎜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552문의 곡사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105㎜ M3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120㎜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한데 비해, 국군은 81㎜ 박격포와 60㎜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당시 무기와 장비의 성능과 위력을 평가함에 있어 북한군의 장비는 남침공

격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대부분의 신형장비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미 전투 예비량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대부분의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노후장비였다. 이들 노후장비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및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이들 부품이 도착되지 않아 병기장비의 15%가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차량도 보병 8개 사단이 장비 및 편제표(T/E)상의 52%밖에 보유하지 못하였는데, 이들 차량마저도 노후 및 고장으로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였다.[97] 전쟁 발발 당시 육군 각 사단의 편제차량은 총 377대였는데 실제 보유차량은 52%에 해당하는 196대에 불과하였다. 육군 중에서 8개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566대였고, 직할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약 1,200대였다. 그 결과 전쟁 발생시 전후방부대를 막론하고 전투보다 병력과 탄약을 수송할 차량이 부족하여 작전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한편 북한군은 그들의 치밀한 남침계획에 따라 전력증강과 병행하여, 훈련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1949년 전반까지 사단내 자체훈련을 완료하고, 이해 말부터는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 훈련국 통제하에 사단 단위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격작전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었다.[98]

북한의 이러한 완성도 높은 훈련에 반해 국군의 교육훈련 수준은 초보단계였다. 국군이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시작한 것은 1948년 4월 12일 육군보병학교에서 각 여단으로부터 장교 13명을 소집하여 M-1소총, 카빈 소총 등 소화기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였다. 소화기 교육훈련이 끝나자 다음에는 미군이 인계한 기관총·박격포·2.36인치 로켓포·57㎜ 대전차포 등 중화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울과 대구에서 어렵게 실시하였다.[99]

그러나 여순 10·19사건과 제6연대 반란사건 등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비롯하여 38도선에서의 적의 도발에 대응하고 정부수립 이후 북한군이 남파시킨 인민유격대 토벌을 위한 대비정규작전에 출동함으로써 지휘체제상의 건제단위별로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부대훈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50년 1월 초 「교육각서 제1호」를 하달하여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교육각서 제1호에 의하면, 8개 사단의 모든 부대는 3월말까지 분대전술부터 대대전술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전방사단은 38도선에 배치된 경계부대까지도 교대해 가면서 훈련시키고, 후방사단은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공비토벌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훈련은 현행 작전에 밀려 형식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100]

육군본부는 1950년 3월 14일 다시 「교육각서 제2호」를 하달하였다. 교육각서 제2호에 의하면, 각 사단은 그 해 6월 1일까지 대대훈련을 완료한 후, 9월말까지 연대전술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15일 현재, 17개 대대와 5개 연대가 지휘소훈련을 마치었고, 14개 대대는 8일간의 기동훈련을 마쳤으며, 6개 대대는 대전차 공격훈련을 끝마쳤다. 대대 전술훈련은 총 66개 대대 중 제7사단이 6개 대대를, 제8사단이 1개 대대를,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가 9개 대대를 완료함으로써 총 16개 대대가 대대 훈련을 끝마쳤다. 30개 대대는 아직 중대훈련을 실시 중에 있었고, 17개 대대는 소대 훈련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기타 3개 대대에서는 소대 훈련은 75% 마쳤으나, 중대훈련은 50%에 머물렀다.

따라서 66개 보병대대 중 24%에 불과한 16개 대대만이 기간 내에 대대훈련을 마쳤을 뿐이었다. 그 결과 육군본부는 1950년 7월말까지 대대훈련을, 10월말까지 연대훈련을 마치도록 훈련기간을 연장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101] 그러나 육군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의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군이 훈련을 실시하기도 전에 북한군의 전면 기습공격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표 7-6> 6·25전쟁 직전 대대급 훈련 수준(1950. 6. 15 현재)

지휘소 훈련		기동훈련	대전차 공격훈련	대대 전술훈련	중대 전술훈련	소대훈련	소대훈련 미실시
연대	대대						
5개 연대	17개 대대	14개 대대	6개 대대	16개 대대	30개 대대	3개 대대	17개 대대

4. 전쟁 직전 대비태세

1)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인사

195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군의 남침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4월 10일 제4대 육군총참모장에 재임명된 채병덕 육군 소장은 두 번에 걸친 대규모의 군 고위급 장교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첫번째는 총참모장으로 취임한지 12일만인 1950년 4월 22일 단행하였다. 이 인사에서는 육군본부 참모진과 일부 사단장급 지휘관이 포함되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도미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 후임으로 제3사단장 김백일(金白一) 대령을 작전참모부장에 임명하였다. 제5사단장으로 있던 백선엽 대령을 제1사단장으로, 제1사단장으로 있던 유승렬 대령을 제3사단장으로, 그리고 전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을 제5사단장에 임명하였다.

두번째는 총참모장으로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난 6월 10일에 실시하였다. 이 때는 주로 사단장과 연대장 등 고급 지휘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제8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제2사단장으로, 제16연대장인 이성가 대령은 강릉의 제8사단장으로, 제7사단장인 이준식(李俊植) 준장은 육사교장으로, 제2사단장인 유재흥 준장은 의정부의 제7사단장으로, 제6사단장인 신상철 대령은 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제1연대장인 김종오(金鍾五) 대령은 원주의 제6사단장으로, 국방부 제1국장이던 이종찬(李鍾贊) 대령은 서울의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인 강문봉 대령은 도미유학차 대기로, 참모학교 부교장인 장창국 대령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으로, 제15연대장 송요찬 대령은 헌병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1950년 6월 10일 인사이동 후 사단장 현황은 <표 7－7>과 같다.

그 결과 전방 38도선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는 4개 사단장과 육군 작전의 핵심 직책인 작전교육국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교체되었다. 교체된 신임 사단장들은 1950년 6월 10일자로 임명되었으나, 실제 부임일자는 이 보다 늦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나마 일선 사단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제1사단장

<표 7-7> 전쟁 당시 육군 사단장 및 제17연대장(1950. 6. 25)

구 분	계급	성 명	연령	보직일	재직기간
수도경비사령관	대령	이종찬(李鍾贊)	34세	1950. 6. 15	10일
제1사단장	대령	백선엽(白善燁)	30세	1950. 4. 22	2개월
제2사단장	준장	이형근(李亨根)	30세	1950. 6. 10	15일
제3사단장	대령	유승열(劉升烈)	59세	1950. 3. 10	3개월
제5사단장	소장	이응준(李應俊)	60세	1950. 4. 22	2개월
제6사단장	대령	김종오(金鍾五)	29세	1950. 6. 10	15일
제7사단장	준장	유재흥(劉載興)	29세	1950. 6. 7	18일
제8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28세	1950. 6. 23	2일
제17연대장	대령	백인엽(白仁燁)	27세	1948. 11. 20	19개월

백선엽 대령도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군의 기습적인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듯 6월 10일의 인사이동은 이제까지 총참모장이 교체되면 상례로 했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6월 10일 인사는 그 시기와 규모로 보아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6월이면 4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이상 징후에 대비하여 계속된 경계태세를 비롯하여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된 와중에 이런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전방 경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전쟁에 대비한 인사이동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사단장급 지휘관들의 경력을 분석해 볼 때, 적절한 인사조치라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교체된 사단장 중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과 제8사단장 이성가 대령이 제주도 및 태백산 지역 공비토벌사령관으로서 전투지휘 경험이 있을 뿐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전투경험이 전혀 없었다.

또한 1947년 9월 이후부터 작전계통에서 근무하고 작전의 최고봉인 작전교육국장에까지 오른 강문봉 대령을 위기설이 나도는 이 시기에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 대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조치였다. 결국 이 인사로 말미암아

전쟁직전 사단장 및 제17연대장

수도경비사령관
대령 이 종 찬

제 1 사단장
대령 백 선 엽

제 2 사단장
준장 이 형 근

제 3 사단장
대령 유 승 렬

제 5 사단장
소장 이 응 준

제 6 사단장
대령 김 종 오

제 7 사단장
준장 유 재 흥

제 8 사단장
대령 이 성 가

제17연대장
대령 백 인 엽

육군 참모들은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채병덕 총참모장을 보좌하게 되었고, 전후방으로 배치된 사단장들도 부대현황 및 지형 숙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어 전투지휘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2) 전쟁직전의 대북 정보

1950년 5월 12일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金白一) 대령과 정보국장 장도영(張都暎) 대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임병직(林炳稷)과 유엔한국통일위원단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군사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중 전쟁직전의 북한군에 관한 정보판단이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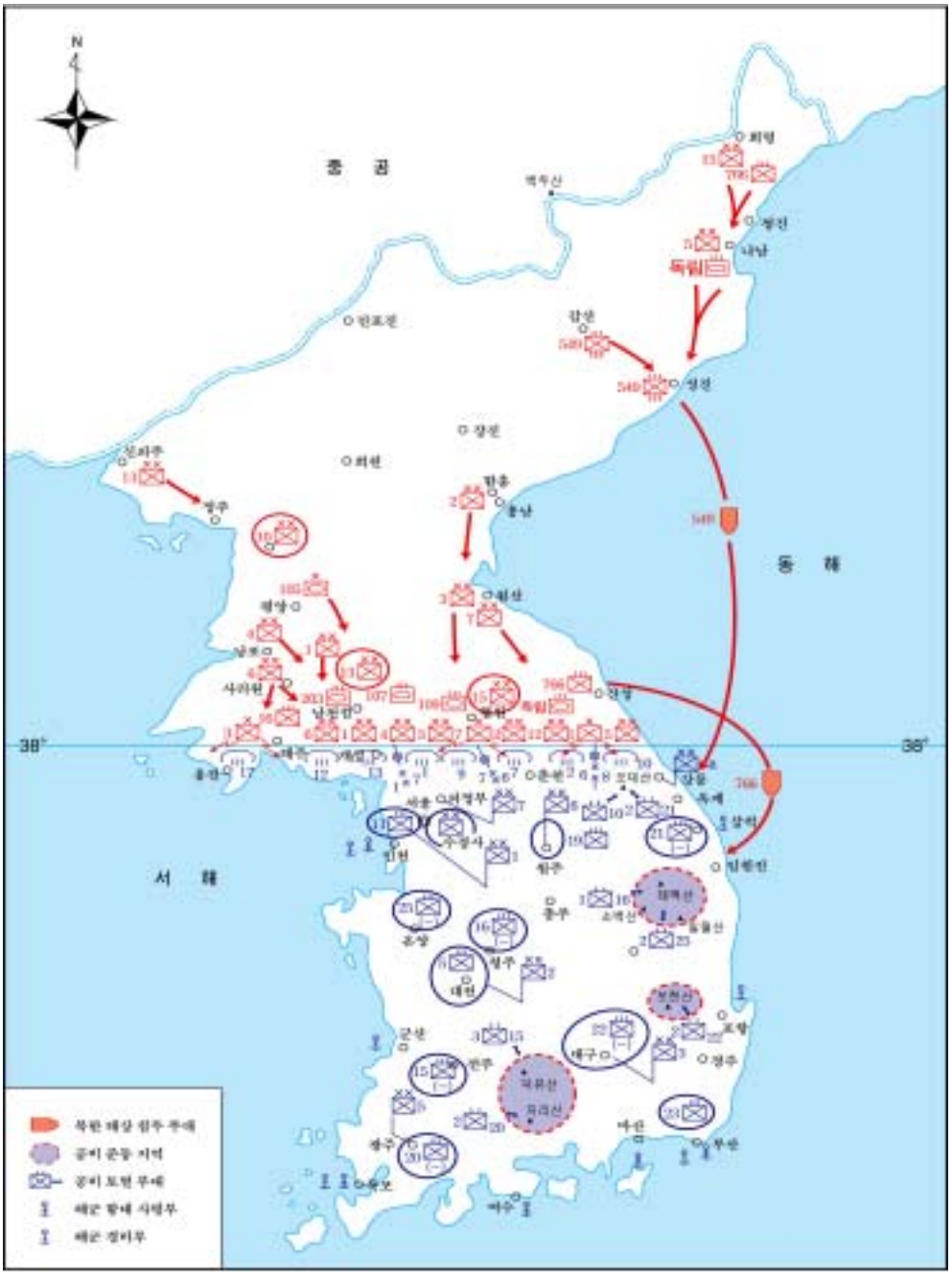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38도선 일대에 3개 경비여단을 배치하고, 그 후방 지역인 사리원(沙里院)에는 제6사단, 연천(連川)에는 제1사단, 철원(鐵原)에는 제3사단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전차 1개 연대는 철원에, 다른 전차연대는 사리원과 연천에 각각 배치하여 보병사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02]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50년 3월 4일 이후 보안대를 38선 일대에 집결하여 38도 선상의 국군 방어진지에 침투활동을 전개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탐색하고 있으며, 3,300명의 보안대가 1950년 3월 4일 이래 38도선 일대에 집결한 후, 도처에서 국군 방어 진지에 대해 침투행동을 감행하여 국군을 분주케 하는 동시에 경계능력을 탐색하고 있고, 북한의 정규군이 언제라도 임전(臨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육군본부는 판단하였다.[103]

육군본부 정보국은 자체 수집된 정보와 월남 귀순자,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귀순 조종사 이건순(李建舜) 중위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군 병력 및 장비에 관한 최신 현황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상군 10개 사단을 비롯하여 공군 1개 사단과 해군 2개 사단에 182,4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22㎜ 곡사포 120문을 비롯하여 각종 포 2,613문, 전차 173대, 장갑차 60대 등의 현대화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949년도 연말 종합보고서에 비해 6개월 동안에 병력 80,000명, 박격포 666문, 곡사포 293문, 자주포 176문, 전차 53대, 비행기 135대 등 인원 및 장비가

<상황도 7-8> 전쟁직전 국군과 북한군의 대치상황(1950. 6. 24 현재)



접이식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이 긴박한 적정에 자력으로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0년 5월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이 피아의 병력과 장비를 비교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약 300㎞에 달하는 38도선 방어시설의 강화로써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5월 30일 선거로 인하여 휴회 중이어서 처리되지도 못한 채 결국 전쟁을 맞게 되었다.[104] 이러한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정부는 북한의 남침을 경고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전개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황도 7-8>은 전쟁직전 국군과 북한군의 부대배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 5·6월의 비상경계령과 해제

1949년 봄부터 38도선상에서 시작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그 대부분은 소규모 전투였으나 어떤 것은 포병까지 동원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도 위협적이었다. 다행히 국군 토벌군에 의해 공비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전쟁 발발 전까지는 거의 전멸상태가 되었으나, 그들이 그 동안 한국 국민과 군에 미친 위기의식은 상당하였다.

1949년 말부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 즉 북한군이 남침하리라는 풍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 1950년 초에는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북한의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남침은 시간문제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반복되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5~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는가 하면,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책임자인 윌로우비(Charles A. Willooughby) 장군은 1950년 3월 10일 한국의 첩보부대인 켈로(KLO)부대가 보낸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1950년 3월 또는 4월, 늦어도 6월까지는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고 회고하였다.[105]

이에 따라 5~6월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1950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기용된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과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공비들이 5월 1일의 노동절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4월에서 6월에 적의 동향과 국내정세를 고려하여 세 번에 걸친 경계 강화조치를 취하였다.[106]

첫째,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1950년 4월 21일 북한군과 공비들이 5월 1일 노동절(May-day)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를 하달하였다. 육본 작전명령 제57호에 의하면, "각 사단장은 관내 경찰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관할지역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의 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4월 27일 12시부터 5월 3일 12시까지 대기태세를 발령하였고, 4월 29일 24시부터 5월 2일 12시까지 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107]

둘째, 1950년 5월 8일 육군은 북한군과 남한내의 잔존 공비가 5월 30일 선거의 혼란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7호에 의하면, "각 사단장은 비상소집 및 비상출동에 만전의 태세를 기하면서 관내 순찰 및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장은 관하 38도선 경비병력의 증가와 경계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경계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위해 육군본부는 기간 중 장갑차 1개 중대가 5월 17일 12 : 00시에 제1사단에 배속하여 경비를 강화하였고,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포병 1개 포대를 개성에 파견하여 특별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1950년 5월 9일 12시부터 5월 27일 12시까지 대기태세를 발령하였고, 5월 24일 12시부터 6월 2일 12시까지는 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108]

셋째,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북한의 1950년 6월 7일 남북한 선거제의, 6월 10일 요인교환제의 등 강화되는 위장 평화공세가 남침흉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950년 6월 11일 16 : 00시를 기하여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를 하달하였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에 의하면,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장은 관하의 비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수도경비사령관·제2사단장·기갑

연대장·포병학교장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앞의 각 부대장은 교통망은 물론 남북간 비밀도로 봉쇄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정보수집 및 야간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109] 그러나 1950년 6월 비상경계령이 실시되는 기간에도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자, 육군본부는 6월 22일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다음날인 23일 24 : 00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6월 11일부터 6월 23일, 이 기간은 북한군이 남침을 위한 공격 대기지점으로 부대이동을 한 기간이었다. 그들 계획으로는 공격일자를 2일 앞두고 있었다. 적은 공격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공격 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는데, 전군에 비상대기령을 내려도 부족할 시기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아무튼 그간 45일이나 지속되던 오랫동안의 경계태세가 해제되자 다음날인 6월 24일 토요일에는 부대가 외출 외박을 실시했고, 또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일을 즐기려 하였다. 이리하여 1/3에 해당되는 병력이 주말에 제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6월 24일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22~23일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고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데 우려하고 있던 차, 의정부의 제7사단으로부터 "북한군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아측(我側)을 향하여 지형정찰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모든 첩보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면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쟁]는 이날이나 그 다음날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렸다."[110]

정보 실무자들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날 15 : 00시에 채병덕 총참모장을 위시하여 일반참모들이 상황실에서 긴급회합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때

<표 7-8> 경계태세 발령(1950. 4. 7~6. 23)

구 분	노동절경계 (26일간)	해제 (7일간)	5.30총선경계 (25일간)	해제 (10일간)	평화공세경계 (13일간)	해제
대기태세	4. 7←→5. 3	5. 3←→5. 9	5. 9←→6. 2	6. 2←→6. 11	6. 11←→6. 23	6. 23. 24 : 00부
경계태세	4. 29←→5. 2		5. 27←→6. 2			

김종필 중위와 이영근(李永根) 중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상경계령 해제의 즉각 중지, 즉시 휴가 및 외출중지, 아니면 최소한 2/3 병력의 영내대기를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채병덕 총장은 정보국 첩보대원들을 서울 접근로상의 중요지역인 포천, 동두천, 개성 등지로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인 6월 25일 08 : 00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111] 이에 전투정보과 소속 첩보부대장 김병계(金丙季) 소령은 6월 24일 밤 김경옥(金京沃) 대위와 김정숙(金正淑) 대위를 팀장으로 한 2개의 첩보반을 편성하여 적의 주·조공 지역인 개성과 동두천 북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들 첩보반은 적지에 침투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침 공격으로 적중에 고립되었다가 전쟁 중 일부는 피난민과 함께 탈출하였다.

그러나 전방 일선부대에서는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다음날인 6월 24일 토요일을 기해 외출 및 외박, 그리고 휴가를 실시하였다. 오랜 비상근무가 끝난 후의 분위기에다가 농번기라는 명분까지 겹쳐서 많은 장병들이 부대를 빠져나갔다. 따라서 부대 내에 남아 있는 장병들의 수는 군의 복무규정과 육본의 요구범위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들마저도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리하여 북한군이 공격대기선에 집결을 끝마치고 기습공격을 위한 지형정찰과 마지막 공격준비를 점검하고 있을 때, 한국군은 38도선을 비워두다시피 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채병덕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대부분은 전쟁 발발 바로 전날 저녁에 열린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떠나 서울로 가버렸으므로 전선의 지휘계통은 공백상태가 되었다. 또한 백선엽 제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및 참모 47명은 1950년 5월 8일부터 육군참모학교의 고급간부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전술적 교리와 참모업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렇듯 6·25전쟁 전야의 국군의 방위태세는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최악의 상황, 그 자체였다. 국군 방위태세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를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안보관계 국무위원 및 군 수뇌부로 구성될 전시

내각(war cabinet)이나 전쟁지도부에 대한 편성 및 운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전쟁 상황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통합방위계획이나 이를 기초로 한 국가차원의 동원 및 전쟁연습은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다.

둘째, 국군 방어계획의 수립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시 일자를 고려할 때 전쟁 발발 불과 3개월에 작성된 관계로 예하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를 이해하고 부대에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고, 전방 사단에서는 방어계획에 의거 적의 공격에 대비한 진지구축 등 충분한 방어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 전쟁 당일부터 육·해·공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한 육군총참모장의 임무 및 지휘 폭이 너무 광범위했다. 그 결과 육군총참모장은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상황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육군총참모장은 전쟁 발발 후 국무회의 비상회의·비상국회·군 원로회의·군 수뇌회의·국방수뇌회의 등 정부·국회·국방부회의 참석, 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선 지도방문,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8개 사단에 대한 직접 지휘 등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그 임무가 너무 많고 부담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총참모장은 자신의 고유임무인 전선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지휘 결심을 하여 전선의 각 부대에 지시해야 될 적시 절절한 지휘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넷째, 전쟁 불과 1개월 전에 단행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폭 인사, 주요 지휘관의 교육파견, 전쟁 전야 재경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장교구락부 개관 축하 회식 및 부대별 평균 1/3에 달하는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조치, 그리고 38도선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방 사단 연대급 부대에 대한 전후방 교체는 가장 중요한 개전 초동단계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연되거나 무시됨으로써 초전 효율적인 즉응태세에 막대한 혼선을 불러왔다.

다섯째, 육군 사단의 기동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입고 조치와 적 전차 및 항공기에 대한 대응 수단 부재는 탄약 등 보급 지원에 차질을 가져 왔고, 전차를 앞세운 적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의 소련제 전차에 대한 공포증까지 수반함으로써 아군의 초기 작전에 막대한 차

질과 혼란을 가져왔다.

여섯째, 공비토벌로 인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미실시, 정확한 대북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의 정확한 남침 의도 및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수집한 정보를 안일하게 대처한 군 수뇌부의 판단 능력 결여가 전쟁을 불러왔다. 이와 같이 전쟁 직전 국군이 안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의 모든 결함 및 문제점이 전쟁 발발 당일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일대에서 전면 기습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3년 1개월 2일간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 (註)

1) 『大韓民國 制憲憲法 第61條』(1948. 7. 17).
2) 『國軍組織法 第3條』(1948. 11. 30).
3) 國防部, 『國防史』 1, 1984, p. 449.
4) 『政府組織法 第17條』(1948. 7. 17).
5) 『國軍組織法 第5條』(1948. 11. 30).
6) 『國軍組織法 第7條』(1948. 11. 30).
7) 『國軍組織法 第9條』(1948. 11. 30).
8) 『國防部職制令』(大統領令 第375號, 1948년 12월 7일 공포) ; 『國軍組織法 第39・40・41條』(1948. 11. 30).
9) 國防部, 『國防史』 1, p. 159.
10) 國防部, 『國防史』 1, p. 160.
11) 許政, 『許政 回顧錄 : 내일을 위한 證言』(서울 : 샘터, 1979), p. 40.
12) 김석원 장군은 1949년 제1사단장 재직시 일명 '명태사건'으로 인하여 채병덕 장군과 함께 예비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채병덕 장군은 얼마 안 있어 병기행정본부장에 이어 1950년 4월 육군총참모장으로 다시 등용되었다. 그러나 김석원 장군은 1950년 7월에야 비로소 수도사단장에 임명되면서 현역으로 복귀하였다.
13) 본래 이름은 이정일(李正一)이었으나, 1950년 8월초 현재의 이름인 이성가로 개명하였다(陸軍本部, 『이성가 장군 참전기 : 永川 大會戰』, 1995, p. 180).
14) 이범석 장군은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수료하고 중국의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을 졸업하였다. 그 후 한국독립군 사관양성소 교관을 거쳐 광복군으로 활동하였다. 1946년 귀국하여 민족청년단을 조직하였고, 정부수립 후에는 초대 국방장관 겸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1949년 3월 20일 신성모에게 국방장관을 인계하였다.
15) 國防部, 『國防史』 1, p. 131.
16)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1954, p. 163.
17) 國防部, 『國防史』 1, p. 146.
1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310.
19) 신성모는 경남 의령(宜寧)에서 태어났다. 그는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런던 항해대학을 거쳐 영국에서 상선선장을 하였다. 1948년 11월 귀국하여 12월에 내무장관에 이어, 1949년 3월 20일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1949년 4월 이범석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를 겸직하였다.
20) 國防部, 『國防部史』 第1輯, p. 164.
21) 國防部, 『國防史』, p. 156.
2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1, p. 313.
23) 國防弘報協會, 『韓國動亂』(서울 : 광명인쇄사, 1973), p. 203.
2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1977, p. 197.
25) 육본작전명령 제38호는 총 120쪽으로 기본계획, 부대편성, 제일선부대, 후방부대, 대공경계, 해안경비, 부록 및 부도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부록으로는 군대구분, 작전도, 정보부록, 육군방어계획, 공병부록, 통신부록이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육본작전명령 제38호』).

26)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서울 : 軍人共濟會, 1995), p. 95.
27) 丁一權, 『丁一權回顧錄 : 6・25秘錄 戰爭과 休戰』(서울 : 東亞日報社, 1986), p. 21.
28) 安龍鉉, 『韓國戰爭秘史』 제1권(서울 : 경인문화사, 1992), p. 123.
29) 白善燁, 『軍과 나』(서울 : 大陸硏究所出版部, 1989), p. 45.
3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7.
31)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40
32)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7.
33)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韓 傀儡軍의 南侵』 2, p. 56.
34)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20
3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韓 傀儡軍의 南侵』 2, p. 57.
36)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7.
37)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p. 120-37～120-38.
38)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37.
39)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37.
40)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38.
41)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38.
42)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p. 120-48～120-49.
43)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49.
44)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50.
45)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pp. 120-50～120-51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6.
46) 『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18.
47)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pp. 120-16, 120-53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7.
48) 『육본작전명령 제38호』 ; pp. 120-55～120-56 ;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7.
49) 陸軍本部 情報參謀部, 『6・25南侵分析』(서울 : 陸軍本部, 1970), pp. 52-53 ; 온창일, 『韓國軍 指揮官의 리더쉽』, 『韓國戰爭史의 새로운 硏究』 1(서울 :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2001), p. 66.
50) 陸軍本部 情報參謀部, 『6・25南侵分析』, pp. 52-53
51) 戰爭記念事業會, 『韓國戰爭史 : 北韓軍 侵攻과 韓國軍 防禦』 第3卷, 1992, pp. 23-26.
5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p. 58-60.
53)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譯),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p. 127-129.
5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20.
55) Shannon McCune, *Korea: Land of Broken Calm*(Princeton : Nostrand, 1966), pp. 98-99.
56) 韓國弘報協會, 『韓國動亂』, p. 193.
57) 제25연대(연대장 중령 김병휘)는 1950년 6월 15일 제2사단에서 제7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어 6월 20일 12 : 00까지 경기도 의정부 금오리로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주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쟁 발발 때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충남 온양의 주둔지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陸軍本部, 『創軍前史』, 1980, pp. 378-379).
5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56.
59)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上), p. 95.
6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 中東部戰線篇』, 1982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1985.
6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 63.
6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1977, p. 58.
6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西部戰線篇』, 1985, p. 226.
6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西部戰線篇』, p. 225.
6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58.
6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p. 393-394.
6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p. 151.
6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pp. 152-153.
6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58.
7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394.
7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p. 154.
72)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318.
7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pp. 28-29.
74) 陸本 作戰命令 第79號(1950. 6. 13).
75)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59.
7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246.
7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p. 59-61.
78)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中・東部戰線篇』, 1982, pp. 26-28.
79)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247.
8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193.
8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초기전투 : 중동부전선 편』, pp. 196-197.
82)『陸軍本部 作戰命令 第224號』(1949. 10. 28).
8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60.
84)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60.
85) 이 경우에는 제21연대장이 우일선 부대장이 된다.
8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韓 괴뢰군의 南侵』 2, p. 61.
8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195.
88)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1969, pp. 278-279.
89)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p. 279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p. 247, 319, 397.
9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247.
91)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p. 198-217, 396-398.
92)『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52.
93)『육본작전명령 제38호』, pp. 120-54～120-55.
94)『육본작전명령 제38호』, p. 120-53.
95) Appalment, *South to the Nactong, North to the Yalu*, pp. 11, 15.
96) 육본일반명령 제43호(50. 6. 1).
97)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p. 393-398.
98) 陸軍本部,『北傀 6・25 南侵 分析』, p. 49.
99) 韓國弘報協會,『韓國動亂』(서울 : 光明印刷工社, 1973), p. 202.
100)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p. 215.
101) Sawyer, *KMAG in Peace and War*, p. 78 ; 國防部,『國防史』 第1輯, 1984, pp. 356-357.

1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建軍과 解放』 1, p. 751.
10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建軍과 解放』 1, p. 751.
10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p. 17.
105)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1988, p. 63.
106)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763.
107)『陸軍本部 作戰命令 第57號』, 1950. 4. 21.
108)『陸軍本部 作戰命令 第67號』, 1950. 5. 8.
109)『陸軍本部 作戰命令 第78號』, 1950. 6. 11.
11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766.
11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 p. 766.

부 록

1. 연 표
2. 조약 및 협정
3. 관계법령
4. 북한군 정찰명령·전투명령

1. 연 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8	한 국	※ 광 복 15일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여운형) 16일 조선공산당경성지구위원회 결성 17일 건준 중앙조직 완료 1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30일 국군준비대 결성(좌익)
	북 한	8일 경흥일대에 소련군 진공 10일 웅기 소련군점령 12일 나진·청진에 소련군 상륙 15~17일 각 지방에서 자치위원회 결성 18일 소련군 원산에 상륙(선발대) 21일 1개 여단병력 원산에 상륙 22일 함흥에 소련군 진주 24일 평양에 소군사령부 설치 25일 조선민족함남집행위원회 발족 26일 『건준』 평남지부를 인민정치위원회로 개칭 27일 소련군 평양에 대부대 입성 30일 평북임시인민위원회 결성
	국 제	6일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탄 투하 8일 소련군 대일 선전포고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탄 투하 14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수락 15일 일본왕 무조건 항복 방송 17일 38선 분할점령안에 대한 스탈린 동의
1945. 9	한 국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대회위원회 조직 안재홍 조선민국당 결성 2일 38선 분할점령 공식 발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9	한 국	4일 각 지방 인민원회 발족 6일 인민공화국 수립을 건준에서 발표 7일 미군 선견대 인천상륙·국민대회소집위원회 결성 8일 미군 인천에 상륙 9일 미군 서울에 진주 군정실시 선포 11일 하지 중장 시정방침 발표·아놀드 군정장관 취임 12일 박헌영 조선공산당 재건 발표 16일 한국민주당 결성·한국인 경찰관 모집 19일 미 군정청 명칭 공포 28일 미군 부산에 진주
	북 한	3일 진남포인민정치위원회 결성 8일 해주인민위원회 발족 15일 강원도인민위원회 결성 16일 정치국에서 북한 정부수립요강 공표 27일 소작료 3·7제 실시 28일 현준혁 암살
	국 제	2일 미조리함상에서 일본항복 조인식 ※ 맥아더사령부 38도선 분할점령(일반명령 제1호) 발표
1945. 10	한 국	5일 미군정장관, 고문관에 한인 10명 임명·소작료 3분의 1제 실시 8일 미군 목포에 진주 10일 아놀드 군정장관 인민공화국 부인 성명 11일 조선공산당 제1차 확대위원회 조직 12일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16일 이승만 귀국 20일 공산당 위조지폐 사용 개시 23일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회장 이승만) 24일 3당통합 성명(한민당·국민당·공산당) 26일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으로 탁치반대 성명 29일 군정장관 탁치는 군정당국의 의사 아님을 성명
	북 한	8일 5도(五道)임시 인민위원회 조직(대표 조만식) 12일 소련군 25군사령부의 명령서 공포 13일 북조선 공산당열성자대회 공산당 북조선분국 설치 14일 김일성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10	북 한	18일 김일성 가족위안회(평양대동관) 21일 각도별로 보안대조직(공산당원·민청원 진남포 2천명) 25일 항공대 창설(신의주) 28일 5도임시인민위원회를 5도행정국으로 개편
	국 제	20일 미 국무성 극동부장 빈센트 신탁통치가능성 시사
1945. 11	한 국	1일 박헌영·이승만 통일전선문제 요청 5일 전국노동조합평의회 결성(전평) 7일 이승만 인공입각 거부 12일 조선인민당 결성(여운형·장건상) 13일 미 군정청에 국방사령부 설치 23일 임정요인 제1진 귀국, 김구, 김규식 등 15명 27일 김구 주석 4대 당수와 요담 29일 19개 청년단체독촉중앙청년회 결성
	북 한	3일 북조선민주당 결성(조민당) 11일 조·소(朝蘇)문화협회 결성 18일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제1서기 김일성) 23일 신의주학생의거 26일 평양문화직업동맹 결성 30일 북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조선총국 결성
	국 제	27일 하지 장군 미·소가 모스크바에서 38선 철폐협의 성명
1945. 12	한 국	1일 임정요인 제2진 귀국 5일 군사영어학교 설치 13일 신한민족당 결성(22개 정당 합동) 26일 이승만 반공 반탁노선 방송 28일 탁치반대 국민총궐기대회 29일 탁치반대투쟁위원회 결성 30일 송진우 피살 31일 탁치반대 시위 전국에 파급
	북 한	1일 조선공산당 평양시 당대회 각지 인민재판소 개정 13일 연안파－김두봉, 최창익, 무정 등 입북 19일 북조선 인민교원직업동맹결성 준비위원회 개최 24일 북조선 연극동맹 결성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5. 12	국 제	16일 모스크바 3상회의 개최 25일 소련은 탁치안,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27일 신탁통치안 의결, 회의 완료 28일 미·영·소 3상 모스크바 결정 동시 발표
1946. 1	한 국	2~3일 공산당 돌연 탁치반대 서울시민대회에서 지지 발표 4일 김구 주석 비상국민회의 소집 7일 전국학생탁치반대 시위 12일 탁치반대국민대회 15일 국방경비대 창설(제1연대 발족) 18일 학병동맹사건 발생 21일 사설군사단체 해체령
	북 한	1일 5도행정국위원회소집 소군사령부의 신탁지지 강요를 조만식 거부 5일 조만식 고려호텔에 감금 6일 탁치지지 평양시민대회 16일 민청북부 조선위원회결성대회 23일 평남도 인민위원회 확대회의 25일 전국농민조합연맹 북조선총국 준비위원회 결성 26일 평남지구예술동맹 결성 28일 평남지구문학동맹 결성 31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
	국 제	10일 런던에서 UN총회 제1회 개막 국부·중공 정치협상(중경) 15일 박헌영 신탁후 소연방편입 보도(뉴욕 타임스) 16일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1946. 2	한 국	1~2일 임정소집으로 각계대표 비상국민회의(좌익 불참) 7일 미·소공위 소군대표 이탈 8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4일 남조선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결성(미 군정자문기관) 의장 이승만·부의장 김규식·총리 김구 의원 15명 15~16일 공산계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26일 3·1기념행사 통일 타협안 제의(언론계)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6. 2	북 한	1일 평남지구예술연맹 결성(문학・연극・미술・음악) 2일 평양시민교원동맹 결성 5일 각지방 정당사회단체회의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조직(각정당 사회단체 소집) 9일 각부서 발표위원장 김일성 24일 조선민주당 제1회 대회(각도대표 190명 당수에 최용건) 26일 북조선농민대회
	국 제	5일 예비회담 개막 6일 성명 제2호 발표 9일 소(蘇) 5개년계획 발표 10일 미・영・소 3국에서 알타협정문 발표
1946. 3	한 국	1일 3・1절 기념(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공원) 5일 38선 철폐요구 국민대회 13일 문학가동맹에 대항하는 문필가협회 결성 15일 러취 군정장관 귀속농민에게 직매 성명
	북 한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발표(인민위원회) 8일 토지개혁세칙 발표 13일 함흥학생사건 발생 23일 김일성 25개 정강정책 발표 25일 예술총연맹결성대회 개최 30일 토지개혁종결 발표
	국 제	20일 제1차 미・소공위 개최 23일 제2호 성명발표 25일 UN안전보장이사회(제1차) 30일 제3호 성명발표
1946. 4	한 국	7일 대한노총 결성 18일 한국독립당개편(신민당・신한민족당 외 4당 통합) 25일 조선민주당 남한으로 이전 30일 군사영어학교 폐교
	북 한	1일 제5차 임시인민위원회 1946년도 예산 채택 (11억 6,863만 2,036원) 14일 공업기술연맹결성대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6. 4	국 제	8일 제4호 성명발표 18일 제5호 성명발표 24일 제6호 성명발표
1946. 5	한 국	1일 민전(民戰) 미·소공위 참가 결의 ※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 8일 하지 중장 공위결렬 경위 발표 12일 독립전취(戰取) 국민대회 15일 공산당 위조지폐사건 발표(정판사) 16일 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 정간령 23일 38선 무조건 월경금지 25일 미군정 좌·우합작 알선 26일 공산당에 제재 27일 공산당 본부건물 명도령 (전단·출판물·포스터 등의 취재(取綵) 발포) 29일 미 군정법령 88호
	북 한	1일 노동절(기념식) 8일 체육후생연맹결성 10일 건축가동맹결성 20일 토지소유권증명서교부에 관한 규칙 공포 23일 중앙예술공작단결성 25일 종합대학창립 준비위원회조직결정서 발표
	국 제	1일 제7호 성명발표 6일 공위결렬
1946. 6	한 국	3일 이승만 정읍에서 남한만의 자율정부수립 발언 11일 러취 군정장관 단독정부수립 반대 표명 14일 좌우합작회담 개시(허헌·김규식·원세훈·여운형) 18일 포스터·비라 등 단속중지 언명 22일 광복군 환국(이범석 장군 귀국) 25일 요인암살단 선견대 검거(북한밀파) 29일 민족통일 총본부 결성(김구·이승만 노선 불일치)
	북 한	3일 조선문화협회 특설도서관 개관 6일 중앙정치간부학교 창립 결정 ※ 개천·신의주·정주·강계 보안훈련소 개설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6. 6	북 한	※ 중앙보안간부학교 창설 24일 노동법령 공포 26일 평양학원 제1기생 입교(4,800명) 27일 현물세법에 관한 결정서 발표
	국 제	10일 이탈리아 공화제 선언
1946. 7	한 국	4일 이관술 피검(위폐사건) 13일 입법기관설치 언명(하지 중장) 17일 좌우합작의 일일회담 22일 북한으로의 항행금지령 25일 좌·우합작위원회 정식회담 개시 29일 하지 중장 좌우합작통일 공작 지지성명 30일 위폐공판 방해사건(경찰 1명 사망) 31일 전국학생총연맹 결성
	북 한	8일 산업경제 협의회령 공포 9일 종합대학·교육대학 설립 계획안 발표 13일 철도경비사령부 창설(13개 중대) 21일 보안간부 훈련학교 개교 22일 북조선 민족통일전선 결성 29일 공산당 신민당 합당연석 중앙확대위원회 30일 남녀평등 법령 공포
	국 제	2일 소련 서울영사관 철수 4일 필리핀 독립선언
1946. 8	한 국	3일 좌익당합당운동 개시(공산, 인민, 신민, 여운형) 26일 북한 밀파 요인암살단 검거
	북 한	5일 노동당 중앙당학교 제1회 졸업식 6일 사무원직업동맹 중앙위원회 결성 9일 공민증 발행 공포 18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 18일 산업국유화 법령공포 28일 북조선노동당 평양시당 결성대회 28일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6. 9	한 국	7일 박헌영 지명수배 8일 이주하 체포 • 대한독립청년단 결성 • 미군정 한국인 부처장에게 행정권이양 성명발표 17일 수도경찰청 정식으로 사무개시 24일 서울주변 철도종업원 총파업 26일 출판노조 파업 28일 중앙전신국 파업 29일 대구 40개 공장 총파업·대구학생 데모
	북 한	1일 공민증 교부개시(통행·제한) 5일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 개최 15일 김일성대학 개교식 25일 김일성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보고
1946. 10	한 국	1일 경전파업·서울시내 학교맹휴 4일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좌익의 음모로 5원칙 8대 원칙을 절충하여 7대 원칙 합의 발표 12일 미군정법령 제118호로 과도입법의원에 관한 법령 공포 16일 경무부장 조병옥 피격 22일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 창설 절차 공포
	북 한	1일 개간령 공포 12일 조·소문화협회 제1차 전체회의 15일 여성동맹 국제연맹에 가입
	국 제	17일 아놀드 소장, 미 대통령에 미·소공위 불능에 대한 보고 18일 미·소정부 공위속개요청 서한문 교환
1946. 11	한 국	2일 민선입법위원 45명 결정발표 13일 경무총감 장택상 피격사건 14일 이주하 단식위독으로 출감 16일 제9연대 창설(총 9개 연대) 23일 남노당 결성(인민·신민·공산당 합당)
	북 한	3일 북한지역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5일 당선자 발표
	국 제	17일 미 의회 2,500만 달러 대한차관 가결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6. 12	한 국	1일 미·소공위 속개 민중대회(사노당 주최) 2일 이승만 박사 도미·민족청년훈련생 입소 7일 과도입법의원관선의원 45명 발표 12일 과도입법의원 의장에 김규식 피선 13일 서북청년회 발족
	북 한	2일 북노당에서 건국사상 운동발표 10일 임시인민위원회 기획국 설치
1947. 1	한 국	15일 과도입법의원에서 반탁 결의 16일 우익단체 미·소공위공동협의 서명을 일제 취소하고 반탁 일관을 표명 24일 하지 중장 입법의원 반탁결의 유감 표명
	북 한	1일 일제무기를 소련제로 대체 11일 임시인민위원회 제26차 위원회 개최 27일 조·중 인민친선교류대회
	국 제	11일 하지 중장 미·소공위재개에 관한 양국 서한을 공개하고 재개요청 18일 마샬 국무장관 국공조정 실패
1947. 2	한 국	5일 민정장관에 안재홍 임명 7일 대한노총과 전평 영등포에서 충돌 14일 하지 중장 반탁운동의 비난성명과 동시에 귀미(歸美)
	북 한	17~20일 각 도·시·군 인민대회 개최 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개칭 22일 제1차 인민회의에서 제1차 인민경제계획 채택
	국 제	10일 소 동구제국강화조약(루마니아·불가리아·헝가리)
1947. 3	한 국	1일 전국 각지에서 3·1절 기념행사와 함께 좌·우 충돌 발생 10일 힐드링 국무차관보 『미국은 남한에 단독정부수립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
	북 한	11일 제28차 인민위원회 개최
	국 제	10일 미·영·프·소 4개 외상 모스크바회의(미·소 대립 표면화) 12일 트루만 독트린 발표 19일 국부군 연안점령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7. 4	한 국	21일 이승만 귀국·이청천 환국
	북 한	1일 국제직업연맹대표단장 일행 평양 도착 5일 치스챠코프 대장 귀국, 후임에 코로토프 중장 임명 16일 노동간부양성소 개설
	국 제	11일 마샬 국무장관 미·소공위 재개 요청
1947. 5	한 국	10일 한독당 전당대표자대회 개최 13일 여운형 혜화동에서 피습 21일 미·소공위 덕수궁에서 개막 24일 근로인민당 결성대회
	북 한	6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5차 회의개최 7일 김일성대학 연구원 개원 17일 인민집단군으로 재편 확대 27일 전장병에게 계급장 수여식 인민군 제115전차연대 창설(400명 입대훈련 개시)
	국 제	21일 미·소공위 재개(제2차) 24일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1호 발표
1947. 6	한 국	3일 미 군정청 한국인기관을 남한과도정부로 개칭 21일 미군정의 한·미 양측 특별의정관으로 서재필 취임
	북 한	14일 민전(民戰)산하 각 정당사회단체열성자대회에서 김일성의 소위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인민의 요구 천명 19일 소련적십자 평양병원 개원 ※ 북한 해안경비간부학교 신설
	국 제	7일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정당단체를 협정지지를 서약하고 23일까지 신청하라고 언명 12일 마샬프랜 발표 26~30일 미·소공위 서울·평양에서 각단체와 회의
1947. 7	한 국	1일 서재필 귀국 2일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특별조례법안 통과 12일 공위에 청원서제출(정당단체수 463, 남한 452, 북한 28단체) 19일 여운형 피습 사망 26일 서울시민 공위 소련대표 승용차에 투석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7. 7	북 한	1일 공위 평양합동회의 개최 ※ 38경비대 조직 12일 인민위원회 42차 회의 개최 23일 인민위원회 43차 회의 개최 ※ 수상보안대 신설
	국 제	4일 트루만 미 대통령 세계평화 4조건 제창 10일 미·소 2차공위(사실상 결렬)
1947. 8	한 국	※ 8·15를 기한 폭동을 준비하다가 남한일대에서 1,300여명의 피검, 그 후부터 남한에서의 공산당의 합법활동은 사실상 끝남.
	북 한	1일 인민경제계획의 상반기 실행결산 발표
	국 제	11일 마샬 미 국무장관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공위속개를 종용하는 서한 23일 몰로토프 모스크바협정 반대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회한 26일 라베트 미 국무차관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안 제시
1947. 9	국 제	12일 중공군 총반공(總反攻)을 선언 17일 한국문제 UN총회에 정식상정 제의(마샬) 18일 UN총회에서 비신스키 소련대표 미국 제안을 반대, 1948년 1월까지 미·소 양군 철퇴 주장 23일 한국문제 UN총회 의제 채택
1947. 10	한 국	19일 민주독립당 결성대회 30일 미 군정장관 러취 소장 퇴임 후임에 윌리엄 F. 딘 소장
	국 제	5일 코민포름 결성 20일 미·소공위 사무 정지
1947. 11	북 한	1일 직맹(職盟) 각기관 선거개시 26일 중앙교육간부학교 개교
	국 제	8일 런던 4개국 외상 회담 14일 UN총회 한국 즉시독립과 한국임시위원단파견 결의안 가결 18일 UN 조선선거비용 53만 8천 달러 가결
1947. 12	한 국	1일 9개 연대로 제1, 제2, 제3여단을 편성 2일 장덕수 피살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7. 12	북 한	1일 신화폐 발행과 구화폐 교환 법령 공포 20일 조선임시헌법 초안 통과
1948. 1	한 국	1일 인민해방군사건 진상 발표 2일 AMS형 함정 1척 인수 8일 UN한국위원단 서울 도착 23일 UN한국위원단 38선 이북 입북거부 통보(소련)
	북 한	1일 흥남지구 인민공장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 발표 ※ 38보안여단 본부설치(사리원에 설치) 9일 김일성 UN한위 입북 거부 31일 동남아청년대회 참가 북한대표 인도향발
	국 제	1일 극동코민포름 제창(모택동) 6일 로얄 미 육군장관 일본 방벽 연설
1948. 2	한 국	4일 UN한위 의장에 메논 인도대표 취임 6일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안 한위에 제출 7일 공산당 2·7폭동 사건 10일 김구 '삼천동포에 읍소함' 성명서 발표 14일 메논, 호세택 UN소총회에 보고차 도미 28일 하지 중장 UN총회 결의찬성 성명
	북 한	8일 조선인민군 창설 선포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인민군 해군군관학교로 개칭 10일 임시헌법초안 발표 29일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5기 졸업
	국 제	12일 미 극동위원회 일본무장화 채택 19일 UN소총회에 메논 한국문제 보고 24일 UN소총회에 한국의 가능한 지역 선거 요청 25일 한국문제 토의 26일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 결의(UN)
1948. 3	한 국	1일 하지 중장 남한총선거 실시 발표 9일 한독당 선거불참 결의 12일 UN한위 가능지역선거 가결(4대 2, 기권 2) 22일 미군정 적산농토(28만정보) 농민 불하 법령 제73호 공포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8. 3	북 한	9일 제25차 민전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 보고(남조선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통일 방법을 모의) 14일 남한단선 및 소총회결정 반대 평양군중대회(김일성 광장에서) 23일 인민위원회의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국 제	17일 서구 5개국 동맹조약 조인(영·프·벨·네·룩셈부르크) 26일 미, 대소(對蘇) 수출 제한
1948. 4	한 국	3일 제주도 4·3사건 발생 6일 남북협상절차 연락원 이북행 9일 선거인등록 성적발표(91%) 13일 남북연석회의 참석(남로당, 민주독립당, 전농, 여맹 평양도착) 27일 제4, 제5여단 신설 30일 남북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공동성명 발표
	북 한	19일 평양에서 협상회의 21일 남북연석회의(제2일)
	국 제	28일 한위 선거감시 결정
1948. 5	한 국	5일 육군비행부대 창설 6일 남북협상에서 귀경한 양 김씨 공동성명 발표 7일 남북협상회의 미·소양군 철퇴요청서에 소군 정식 회한 10일 남한 총선거(UN한위 감시하) 31일 대한민국 의회 개원(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김동원)
	북 한	14일 북한 남한송전을 중단
	국 제	15일 이스라엘공화국 성립 22일 하지 중장, 코로토프 대장에 송전 요청
1948. 6	한 국	1일 군정재판 폐지 25일 5·10총선거 합법적 승인(UN한위)
	북 한	7일 코로토프 대장 귀국, 후임에 미끄로프 소장 취임 10일 해양간부학교 개교
	국 제	2일 미 하원세출위 한국구제위 1억 7천만 달러 불지출 가결 22일 소 베를린 봉쇄
1948. 7	한 국	1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7일 대한민국 헌법 선포 17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당선
	북 한	10일 최고 인민회의대의원선거시행을 발표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8. 8	한 국	15일 정부수립을 선포 16일 이범석 국방부장관 취임 26일 한·미군사잠정협정 성립 27일 주한미군사령관에 콜더 장군 보임
	북 한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국 제	19일 중공의 화북민주연합정부 수립
1948. 9	한 국	4일 항공군사령부 산하 비행부대 창설 5일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 국군으로 편입 13일 한국정부 본격적 업무 개시 13일 육군항공사령부 비행부대 L-4로 최초 비행연습 실시 20일 미군 당분간 철퇴 않겠다고 성명
	북 한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립을 선언 ※ 조·만 국경비대대 편성 ※ 철도보안대대를 철도보안여단으로 확대
	국 제	19일 소 북한에서 철퇴하겠다고 성명 20일 미 남한에서 당분간 철병 않겠다고 성명
1948. 10	한 국	2일 국회법 공포 19일 여순 10·19사건 발생(제14연대)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 선포
	북 한	13일 소·북한간 외교관계를 설정, 대사 교환 경제관계 설정을 표명 15일 몽고 수상겸 외상 호미·발산으로부터 북한, 몽고간 외교와 경제관계 설정 ※ 제4독립혼성여단 창설 21일 체코외상 크레멘씩쓰로부터 북한, 체코간 외교 및 경제관계 설정을 표명
	국 제	15일 소 북한정권을 정식 승인
1948. 11	한 국	3일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14일 북한 남파유격대 180명 남한으로 침투 20일 제10~제19연대 창설 완료(5월부터) 30일 국군조직법 공포
	국 제	11일 트루만 대통령 재선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8. 12	한 국	1일 국가보안법 공포 9일 한미경제협정 조인 19일 대한청년단 결성
	북 한	※ 보안간부학교를 제1군관학교로 개칭 9일 박헌영 북한 외상 UN사무총장 및 제3차 총회의장에게 UN의 북한대표단 배제 결정에 항의 성명서 전달
	국 제	10일 UN 세계인권선언 채택 10일 한·미 경제원조협정 ※ 모스크바에서 소·중·북한 전략회의 12일 UN총회 한국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26일 소·북한에서 철퇴 완료했다고 발표
1949. 1	한 국	14일 제7여단 창설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15일 해군대학을 해군사관학교로 개편 27일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으로 개칭
	북 한	※ 평양학원을 제2군관학교로 개칭 11일 북한주재 소 특명전권대사 스티코프 평양 도착 17일 북한 특명전권대사 모스크바 향발(주영하) 하얼빈에서 동북의용군 입북에 관한 회의
	국 제	1일 미 한국정부를 정식 승인 3일 중화민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8일 영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30일 중공군 북경 입성
1949. 2	한 국	1일 제21연대 창설 15일 육군항공군사령부 산하 여자항공교육대 창설 21일 반민특위 본격적 활동 개시 25일 호림부대 창설
	북 한	13일 소련공청대회에 참가차 북한민청대표 모스크바 향발
	국 제	6일 프랑스,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3	한 국	1일 호남지구 및 지리산전투사령부 설치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창설 4일 호국군 간부훈련소 창설 21일 국방장관에 신성모 임명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9. 3	북 한	2일 소련연맹대회참가를 위해 북한대표 모스크바 향발(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정준택, 장시우, 백남운, 김정주) 17일 북한은 소련과 경제문화협정 조인 * 소련제 122밀리 곡사포 도입 * YAK IL 등 전폭기 100대 원조 결정
	국 제	3일 필리핀,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5일 스탈린·김일성 회담
1949. 4	한 국	10일 701함 미국에서 진해에 입항 15일 해병대 진해에서 발족 23일 한·일교역 조인식
	북 한	9일 파리평화옹호세계대회 참가차 대표단 출발 ※ 유류 10만톤 망산에 저장 27일 조선문화협회 초청 중공동북문화인 대표단 도착
	국 제	4일 NATO조약 조인 13일 로마교황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1일 국민정부 광동으로 이동 28일 모택동·김일 회담
1949. 5	한 국	1일 육군경리학교 창설 5일 표무원·강태무 소령 월북사건 7일 해군기지 설치령 공포 20일 육군정보학교 창설
	북 한	1일 철도보안여단을 철도경비 제5여단으로 개편 38경비보안 제3여단을 제3여단으로 증편 11일 북한군 38선에 내습 시작 16일 인민군 115전차연대를 제105전투여단으로 개편 25일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 제	12일 소 베를린 봉쇄 해제 27일 칠레,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6	한 국	북한 제2차 남파유격대 400명 침투 5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8일 미군철퇴 발표 20일 수도경비사령부 창설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9. 6	한 국	21일 농지개혁법 공포 25일 국군징계령 공포 26일 김구 피살 27일 육군본부항공부 창설 30일 육군참모학교 창설
	북 한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2차 회의 개막 중순 남·북노동당 합당 25일 조통결성대회 개막(남북 민전 총통합) 2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29일 조국전선결성 경축 평양시민대회 개최
	국 제	8일 주한미군철퇴 발표 29일 주한미군철퇴 완료
1949. 7	한 국	5일 지방자치법 공포
	북 한	1일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 7일 경제적·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비준서 교환 15일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23일 세계민청 및 대학생축전 참가 북한대표단 출발 25일 중공에 제166사단 입북
	국 제	14일 볼리비아·쿠바,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5일 도미니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6일 브라질,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일 캐나다,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5일 네덜란드,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8	한 국	4일 북한 제4차 남파유격대 침투(김달삼부대) 6일 장개석 총통 내한 12일 병역법 공포 12일 북한 제5차 유격대 용문산에 침투 ※ 제6차, 제7차 남파유격대 300명 경북에 침투
	북 한	17일 소련평화옹호대회 허헌, 박정애 등 모스크바 향발 23일 중공군 제164사단 입북 25일 모란봉극장에서 남북조선연맹열성자대회 개최
	국 제	12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3일 터키·아이티,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0일 니카라과,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49. 9	한 국	1일 각지구병사구사령부 창설 15일 육군보충대대 창설 25일 항공기 헌납운동 전개 28일 북한 제8차 침투
	국 제	4일 엘살바도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23일 트루만 대통령 소련의 원폭소유 확인을 공포 24일 이란,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10	한 국	1일 공군독립 초대총참모장(김정열 대령) 15일 육군포병학교 창설 16일 남노당 등의 좌익제단체등록 취소 신성모 국방부장관, 미군사고문단에 전차요청, 거절당함.
	북 한	6일 중공과 외교관계 설정합의 하얼빈 협정 ※ 제109전차연대, 제203전차연대 남천과 철원으로 각각 이동
	국 제	1일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언 5일 에쿠아도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7일 독일 인민공화국 수립(동독) 21일 UN총회 UN한위의 소련군철수 확인불능 보고서 접수 21일 태국,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49. 11	한 국	1일 육군포로수용소 설치 북한 제9차유격대 보현산에 침투
	북 한	6일 북한, 중공과 국교 수립
	국 제	7일 국민당 정부 대북을 수도로 결정
1949. 12	한 국	27일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남침 준비에 대한 정보보고서 작성
	북 한	* 비행연대를 사단으로 확장 전폭기 122대 보유 소련군의 군사원조로 대소형 35척의 소함정 보유
	국 제	8일 우루과이,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6일 모택동 스탈린 회담(1950. 2. 16까지) 17일 페루, 대한민국정부 정식 승인
1950. 1	한 국	5일 미 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한·미 협정 12일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국·대만 제외 애치슨 발언 26일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소장, UN한국위원단에 북한군의 침략계획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보고 26일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1	북 한	1일 김일성 북한군에 통일을 위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신년사 30일 북한 월맹간 외교관계 설정
	국 제	14일 호지명 월맹공화국 독립선언 31일 트루만 미 대통령 수폭제조 지령
1950. 2	한 국	9일 한·미간 경제원조안 가결 27일 남한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김삼룡·이주하 검거
	북 한	※ 북한군 공병여단 만주간도에서 축성지대의 돌파훈련 실시
	국 제	14일 중공·소련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의 조인
1950. 3	한 국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 해편 15일 건군기(T-6) 10대 도입 15일 지리산－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해편
	북 한	※ 38선에서 5㎞ 이내 주거 주민들에게 후방 소개 20일 남노동계의 유격부대 남파 30일 김일성 모스크바 향발
	국 제	31일 미 대외원조법 성립
1950. 4	한 국	10일 농지개혁 실시 백두산함 미국에서 입항 육군총참모장에 채병덕 소장(임명) 21일 국무총리서리에 신성모
	국 제	초순 스탈린·김일성 회담(4. 25일 평양 복귀)
1950. 5	한 국	PC 구축함 도입 10일 신성모 국방부장관 북한군 38선에 대거 이동을 발표 11일 이대통령 미국원조로 남침방어 주장 12일 UN한국위원단에게 북한군 병력장비에 대한 설명 14일 건국기 명명식, 정일권 장군 미국유학에서 귀국명령(미 유학중) 육군당국 국회에 긴급건의서 제출 30일 국회의원 선거
	북 한	17일 모란봉극장에서 평화통일달성회의 미명하에 남침 토론회의 29일 선제타격작전계획 완성 30일 조선의용군 제15사단 원산에 입북하여 인민군 제12사단 편성
	국 제	13일 모택동·김일성 회담(5. 16일 평양 복귀)

연 도	구 분	사 건 내 용
1950. 6	한 국	10일 국내 주요 지휘관 대거 인사이동 이대통령 UN감시하에 북한 선거 촉구 17일 덜레스 미국무성 고문 한국 방문 19일 제2대 국회개원(의장 신익희) 21일 정보국장 일선지휘관에게 경계 특별지시 23일 일선지구 비상경계 해제 24일 일선지구 장병 3분의 2 병력 외출
	북 한	12일 북한군 38선으로 이동 18일 전투부대에 남침정찰명령 하달 18일 북한군총사령부 전 사단에 남침작전 명령 하달 19일 북한 조만식 조건부교환 제의 거부 20일 각사단장 전투명령시 제1호 작명 예하대에 하달 22일 사단 전투명령 하달

2. 조약 및 협정

1. 트루만 독트린(1947. 3. 12)[1)]

나는 이 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미 의회 양원 합동위원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현 사태의 일면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리스와 터키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그리스 정부로부터 재정적·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다. 지금 그리스에서 활동중인 미국 경제사절단이 보내온 예비 보고서와 그리스 주재 미국 대사가 보내온 보고서는 그리스가 자유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리스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나는 미국 국민과 의회가 그리스 정부의 호소를 못들은 체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리스의 생존 그 자체가 현재 무장된 수천명의 파괴적인 활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들은 여러 곳에서 특히 그리스의 북쪽 국경 지역에서 그리스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명한 한 위원회가 현재 북부 그리스 지역의 혼란스러운 사태와 그리스와 알바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소위 국경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리스 육군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장비도 허술하다. 그리스 전 영토에 대한 그리스 정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 육군에게 물자와 장비가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가 자활적이고 자존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는 마땅히 원조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에 어떤 형태로든 구제 기금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인 그리스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는 없다. 그 어떤 국가도 민주적인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

1) "Truman Doctrin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47*(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pp. 176-180.

지금까지 그리스를 지원해 왔던 영국정부도 {1947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가 없다. 영국 자신도 그리스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영국의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나 긴급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이나 그 산하 관련 기구들은 꼭 필요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리스의 이웃인 터키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가 장차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실한 국가로 발전하는 문제는 그리스의 장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터키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스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터키는 그리스가 당했던 그러한 재난들은 없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과 영국은 터키에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쟁이래 터키는 민족적 통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대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해 왔다. 터키의 민족적 통일 유지는 중동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영국정부는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재정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해 왔다. 그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약 터키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미국이 마땅히 그러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나는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원조를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영향들을 지금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들이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계속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의지와 생활양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억지로 강요하고자 했던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각 국가들이 압제 없이 평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은 유엔의 창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유엔의 목적은 모든 회원국들의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들에게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강요하려고 하는 침략적인 책동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주의적인 제도들과 그들의 민족적 통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 자유민들을 도와줄 의지가 없는 한 우리의 목표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직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접 침략에 의해서건 간에 자유민에게 강요된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은 국제 평화의 토대를 헤치고 나아가 미국의 안전도 해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이 세계의 많은 국가의 국민은 최근 그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전체주의적인 정권들이 그들에게 강요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얄타협정에 위배되는 압제와 협박에 대하여 자주 항의해 왔다. 나는 또한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다.

세계사에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생활양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은 흔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삶의 형태 중 하나는 다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자유주의적인 제도, 대의 정부, 자유 선거, 개인의 자유 보장, 언론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또 다른 형태의 삶은 다수에게 억지로 강요된 소수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폭력과 억압, 언론의 통제, 비민주적인 선거 그리고 개인의 자유 억압 등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소수의 무장된 세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자유민들의 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자유민들이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의 도움이 경제적 안정과 평화적인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인 경제적·재정적 원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세계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상도 신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엔의 헌장에 위배되는 압제와 같은 방법이나 혹은 정치적 침투와 같은 속임수를 통한 현상의 변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자주 독립적인 국가들이 그들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미국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스의 생존과 보존이 한층 더 광범위한 정세와 관련시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잠깐만 쳐다보아도 족한 일이다. 만약 그리스가 소수의 무장된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웃인 터키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며 매우 심각할 것이다. 혼란과 무질서가 전체 중동지역을 휩쓸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복구의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는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강적과 대항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다. 자유적인 제도들이 붕괴되고 독립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전세

계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실망과 어쩌면 패배감이 자유와 독립의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국민들 마음속에 곧장 파급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광범위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따라서 나는 1948년 6월 30일까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원조기금에 추가해서 나는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또 제공된 재정원조와 물자원조의 사용을 감독할 목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민간인과 군사관계 요원을 이들 국가에게 파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한다. 나는 그리스와 터키의 선발된 병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의회가 위임해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필요한 일용품과 군수품과 장비의 구입에 쓰이는 그러한 원조기금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체주의적 정권의 씨앗은 빈곤과 궁핍에 의해서 더욱 더 잘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한 씨앗들은 가난과 투쟁이라는 나쁜 토양에서 퍼져 나가고 잘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씨앗들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인민들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 성장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이 포기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 세계의 자유민들은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르며, 또한 미국의 복지를 분명히 위태롭게 할 것이다. 사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의회가 이러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직시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2. 마샬 계획(Marshall Plan, 1947. 6. 5)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세계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지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어려움은 사안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성격의 일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의해 일반 대중들에게 제공된 다량의 사실들이 오히려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사태의 정확한 평가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구나 이 나라의 국민은 이 세계의 분쟁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인민들의 곤란한 처지와 그로 인한 반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반발이 그들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럽의 재건을 위해 필요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인명의 손실, 도시, 광산, 그리고 철도의 현저한 파괴 등이 정확하게 조사·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현저한 파괴는 아마도 전반적인 유럽 경제 구조의 혼란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사정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전쟁에 대비한 엄청난 군비와 전쟁수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은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기계들은 파손되었거나 혹은 완전히 쓸모 없게 되어버렸다. 전제적이고 파괴적인 나치의 지배하에서 거의 모든 기업은 사실상 독일의 전쟁도구로 전환되었다. 오랫동안의 상업적인 관계, 민간단체,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해운회사는 자본감소나 국유화를 위한 합병조치, 혹은 무조건 해체를 통해서 사라져 버렸다. 많은 국가에게 있어서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격심하게 떨어졌다. 전쟁동안에 유럽의 경제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유럽의 재건이 심각하게 지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한층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해도 유럽의 경제구조를 재건시키는 일은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문제의 한 측면에는 흥미롭고도 중대한 점이 있다. 농민은 항상 생활에 필요한 다른 필수품들을 도시민과 교환하기 위하여 식량을 생산해왔다. 이러한 분업행위는 근대문명의 기초이다. 지금 현재 [경제구조의]붕괴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산업계는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과 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원료와 연료의 공급이 부족하며 기계도 부족하거나 낡아빠진 것들뿐이다. 자작 농민들이나 소작농들은 그들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위하여 그들의 농산물을 파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익이 없는 거래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많은 농지들을 경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목초지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의복이나 다른 통상적인 문명들의 부족을 느끼긴 하겠지만 한층 더 많은 곡물을 가축 사육에 사용하며, 그 자신과 가족에게는 충분한 식량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량과 연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그와 같은 필수품들을 국외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돈과 차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 재건을 위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고갈시킨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생산품의 교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근대적인 분업체제가 붕괴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내지 4년 동안 외국으로부터 주로 미국으로부터지만, 식량과 다른 필수품들을 유럽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은 현재 유럽의 지불 능력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유럽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치료책은 악순환을 근절시키고 유럽인들이 자신들 국가들의 경제적 장래와 전체로서의 유럽의 경제적 장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제조업자와 농민의 넓은 지역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물들을 항상 가치가 있는 화폐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또한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계 전반에 미치는 사기 저하라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인민들의 절망감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혼란의 가능성은 차지하고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필연적인 영향을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정상과 회복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 경제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안정도 확실한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미국의 정책은 어떠한 국가나 교의에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와 가난과 절망과 그리고 무질서를 타파하는 것이다. 미국 정책의 목적은 자유주의적인 제도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다시 소생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여러 위기들이 조성될 때마다 조금씩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믿는다. 장차 미국 정부가 제공하게 되는 어떠한 원조도 단순한 일시적인 완화책이 아니라 완전한 치료책의 성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럽경제의] 재건과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받게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방해하려고 책동하는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영속화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획책하는 국가들과 정당들과 혹은 단체들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사태의 완화와 유럽 세계가 재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 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들과 미국이 취할 어떠한 조치에도 적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맡아야 할 몫에 대해 유럽의 제 국가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이다. 유럽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효과적인 것도 못된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일인 것이다. 솔선적인 발의가 유럽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역할은 유럽[재건]계획을 기초하는 데에 우호적으로 도와주고, 미국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 나중에 그러한 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공동의 계획안으로 되어야 하며, 유럽 국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동의되어

져야 한다.

미국이 취하는 어떠한 조처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과 사용할 구제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치적 정열이나 편견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통찰력과 역사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부과해 온 막중한 책임감을 정면으로 감당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로 내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어질 것이다.

3.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한·미협정(KMAG 협정)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은 다음에 규정한 조항하에 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칭함)설치를 인가한다.

제 1 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대와 국립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국방조직 및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조언 및 원조하며, 또한 국방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군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군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단, 해단의 국방성 인원수는 양 정부의 상호합의가 없는 한 장교 및 병원 도합 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 국방군 장교 및 병원(兵員)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행한다.

제 2 조 본 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결한다.

① 일방의 정부에서 타방정부에서 사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할 때

② 일방의 정부에서 해단의 철회가 동 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타방정부에게 차 철회를 통보하여 해단이 철회될 때, 그러나 차시에는 본조 1항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 협정을 종결할 시에는 동단이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도 한국정부는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동 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 3 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 공여하는데 있다. 해단은 일국 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국방군부대에 대하여 조언과 원조를 공여한다.

제 4 조 해단과 소속원은 주한미대사관 및 해단 계급의 동 관원에게 부여한 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대사관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 5 조 해국단원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하게 되는 의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는 인수케 할 수도 없다.

제 6 조 해단의 전단원은 현실로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수

와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수당을 받는다. 이 특별수당을 위한 여하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한국통화로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해단 각 단원이 단의 직물을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기간에 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의 공용으로 또는 해단, 또는 동 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질, 비품, 공급품 및 기타 물품에 한하며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및 그밖에 물품은 한국국산세, 소비세 및 기타 세관세, 부과금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반 출시의 수출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단원 및 그 가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현지 공급품(식료품 제외) 비품 및 역무 등을 위하여 주한미대사관의 지정된 대표에게 임시로 충분한 한국통화를 공급한다. 동 통화중에는 해단 및 그 가족의 주거와 해단의 공용을 위한 건물 및 사무소의 수리 및 유지에 필요한 통화 및 본 협정 제8조㉯과 제9조에 규정된 한국인 고용비 및 교통비를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대한민국내에서 해단의 사무를 위한 여행을 함으로써 소용하는 비용을 한국통화로 지불한다.

㉰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해단원과 동 가족에게 적당한 주거와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및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거, 건물 및 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공용시설과 연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해단의 사용을 위하여 공급한다.

모든 주거와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군 군사처에서 동양의 주거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여사한 비용발생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양해된다.

제 9 조 해단에 소요되는 한국인고용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동 비용에는 대한민국대표 및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 의하여 때때로 결정되는 보수율에 의하여 현지 고용된 통역, 서기, 노동자 및 사고용인을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한 보수와 해단 및 단원에 의하여 소요되는 한국내에서의 공급품 및 비품의 운송비가 포함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의무원과 동 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해단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단원 또는 그 가족중 위중한 환자를 한국내의 미국의료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 및 해단원 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연락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 사단이 승인하는 단순히 군사적인 성질을 가진 사항에 관

하여 대한민국정부공무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의 또는 양 정부간의 분류된 군사사정의 교환 또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분류규정에 따라서 동 정보를 보전하여 동 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삼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를 재발표할 수 없다는 상호양해하에서만 행할 수 있다.

제13조 본 규정은 UN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UN사무국에 등록케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효력은 1949년 7월 1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규정은 비준을 위하여 대한민국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양해된다.

본 규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한국어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식대표자가 본 규정에 조인하였다.

미 국 대 표 존·J·무치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김 도 연

4. 미국의 대 '아시아' 대책(抄錄)-애치슨 국방장관 연설문(1950. 1. 12 발표)

[전략] 군사적 안전보장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지역의 정세 및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일본의 패배와 무장해제에 의해 미국은 미국, 전태평양지역 및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일본의 군사적 방위를 담당하게 됐다. 일본에는 현재 미군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진주하고 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군을 대신하여 발언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의 방위를 포기하거나 약체화할 어떤 의도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영구적 해결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어떤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방위는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반드시 유지할 결의임을 보증할 수 있다.

이 방위선은 얼류션 열도에서 일본을 거쳐 유구(오키나와)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은 방위선의 요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유구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들은 적당한 시기에 유구열도를 유엔의 신탁통치 아래 둘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유구열도는 태평양방위선의 일부이며 우리들은 이를 보존치 않으면 된다.

방위선은 유구에서 필리핀 군도에 이어진다. 우리들의 대비관계, 대비방위관계는 양국간의 협정에 정해져 있다.

이 제협정은 종래 충실히 지켜져 왔는데 금후에도 충실히 수행될 것이다. 양국민은 쓰디쓴 경험에 따라 양국은 당연한 국방상의 필요가 강하게 결합돼 있음을 배웠다. 우리들은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에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용인할 의사가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고 있음을 부언해 둔다.

기타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구라 할지라도 이 지역을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보증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명백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공격이 있을 경우, 첫째로 의지해야 할 것은 공격을 받은 국민의 저항이며, 다음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전문명세계가 유엔 헌장 아래서 맺은 약속이다. 유엔 헌장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 자기의 독립을 지키려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무력한 신조가 아님을 보여 왔다. 그러나 태평양 내지 극동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군사적 고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밖에도 절박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태평양지역에 있는 다수의 지역, 다수의 나라가 파괴행동 및 침투행동을 당하기 쉬운데서 생기는 것이며, 이는 군사적 수단으로서는 저지될 수 없다.

침투행동을 당하기 쉽다는 것은 다수의 지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어 이들 정부가 행정경험이 적고 또한 아마도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제적 곤란에서 기인한다. 경제적 곤란의 일부는 전쟁에서 직접 기인됐고, 일부는 이번 대전의 간접적 결과로서, 즉 외부세계와의 무역중단에 장기간에 걸쳐 이들 지역에 신용거래 및 경영기술을 공급해 온 협정의 중단 때문에 발생했다. 그 결과는 경제적 노력의 혼란과 민중의 곤궁은 일본군의 점령 및 전후에는 소비에트 쪽에서 행하는 선전 때문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것이 태평양지역에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이나 여기서 두개의 사실을 지적하고, 이어서 이들 지역의 일부에 관해 더욱 상세하게 검토하려 한다. 제일의 사실은 북태평양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과 기회는 남태평양지역에 관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북태평양의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직접의 책임을 지며 직접적인 행동의 기회를 지닌다. 이 사실은 정도는 낮지만 한국에 관해서도 진실이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과거 직접적 책임을 졌고 또한 행동했다. 현재 역시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큰 기회를 지니고 있다.

[중략] 한국에 있어서 우리들은 큰 전진을 보며 군사점령을 끝내고 독립주권국가를 수립시켰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승인됐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수립시키기 위해 원조를 공여했다. 우리들은 현재 이 나라가 확고한 기초를 쌓을

때까지 원조를 계속하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 입법화 조처가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원조를 중지해 버리라는 의견이나 이 나라의 건설을 중도에 그만두자는 의견은 완전한 패배주의이며, 아시아에서의 우리들의 이해로 볼 때 말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 우리들의 책임은 직접적이며, 우리의 기회는 명백하다. 이와는 반대로 남쪽에서는 필리핀을 빼면 우리의 기회는 적고 우리의 책임은 아주 적다. [후략]

5.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문(1950. 1. 26)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UN헌장의 범주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적절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을 조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UN에 무력을 비치함과 또한 헌장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뢰할만한 보장하에 보편적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조정함에 대하여 각 가맹국의 합의를 얻는데 공명정대하게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을 추진시키려고 미국정부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하여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이를 인수할 것을 규정하고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① 경제부흥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절대 필요하므로 우선 관행하여야 된다는 원칙에 순응하여 각 정부는 원조공여정부가 허락하고 기구, 물자, 노력, 기타 군사원조를 해 정부가 동의하는 약정 및 조건하에 상대방의 정부 혹은 기타 정부에게 제공 혹은 계속 제공한다. 협정국 중 한쪽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UN헌장에 순응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1949년의 상호방위원조법의 각 규정, 조건, 약정 및 종료규정과 금후 시행될 기타 미국법령에 의거한다. 양국정부는 수시로 본항의 규정을 관행함에 필요한 상세한 조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수취한 원조를 그 공여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사용할 것과 미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원조공여목적 이외의 타목적을 위하여 유용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③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설비·물자 내지 노력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한국정부의 관원이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타 국가에 이양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제 2 조 한국 서울에서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날인된 경제협조협정 제8조가 본 협정 완료전에 실효될 시에는 대한민국은 본 협정에 유효한 기간내에는 합의한 조건과 약정에 의하여 미국이 자원결핍 또는 결핍가능으로 인하여 요구하며 한국내에서 구득할 수 있는 원료품 및 반제품을 소정기간 중에 소정량을 생산하여 미국정부에게 이를 이양하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양도의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내사용과 상업수출용에 필요한 적당한 양을 고려한다.

제 3 조 ① 각 정부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공표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② 각 정부는 본협정에 의하여 상대방 정부가 제공한 군용품, 기술 또는 정보의 비밀이 발로되거나 누설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정부 협의하에 안전보장방도를 취한다.

제 4 조 양국정부는 일방이 요청할 시에는 본 협정하에 제공된 기구, 물자 또는 기술에 관한 발명·가공·기술·정보 및 기타 법률이 보호하는 재산의 전매특허권과 유사한 청구권에 대하여 적당한 조정을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 있어서 각 정부는 각 국민의 전기요구와 그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바 본 협정국이 아닌 외국국민의 청구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공약을 협의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한다.

제 5 조 대한민국정부는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본 협정에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재산·자재 및 기구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세와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제 6 조 ① 양국정부는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정의 적용 및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한 운영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의한다.

② 대한민국정부는 정식미국대표에게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조의 이용상태를 자유로 또 충분히 시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제 7 조 양국정부는 상호안전과 부흥 목적을 위하여 전력자재기구 및 가능한 범위내의 기술자료 등의 수출에 관하여 유효한 통제를 행함에 상호관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양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8 조 ① 본 협정은 쌍방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가 상대방으로부터 본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② 본 협정은 UN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UN사무총장에게 제출 등록한다. 본 협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글과 영문, 2통을 작성한다. 한국문본과 영문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상이가 있을 때에는 영문본법에 의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의 정식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각한다.

미 국 대 표 존·J·무치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김 도 연

3. 관계법령

1. 미군정법령 제23호(1945. 11. 13)

미 군정법령 제23호(1945. 11. 13)

법령 제28호
제 1 조 국방사령부의 설치
제 2 조 군무국의 창설 및 육해군부의 설치
제 3 조 경찰군사기관의 금지
제 4 조 벌 칙
제 5 조 시행기일

제 1 조 조선의 종국(終局)의 독립을 준비하며, 세계국가에 오(伍)하야 조선의 주권과 대권의 보호,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신속히 준비하며, 민간안녕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에 대하여 민권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관의 보조 및 종교, 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유지하며, 필요한 육·해군의 소집·조직·훈련·준비를 시작하며, 국민의 정부혁명을 보호키 위하여 자에 조선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함.
제 2 조 조선정부 군무국을 정부의 국으로써 창설함. 군무국내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설치함. 현존 경무국과 군무국은 국방부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놓음.
제 3 조 여하한 자와 단체라도 여하한 종류의 경찰, 육·해군 군사활동을 위한 소집·훈련·조직·준비 및 경무·군무국의 관할에 속하는 행동을 행사치 못함.
제 4 조 본령의 조규(條規)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에 의하여 처벌함.
제 5 조 본령은 1945년 11월 13일 오전 영시부터 유효함.

1945년 11월 13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命令에 의하여 朝鮮軍政長官 美陸軍少將 A. V. Arnold

2. 미군정법령 제86호

미군정법령 제86호

朝鮮警備隊 및 朝鮮海岸警備隊

제 1 조 국방부 개칭, 군무국의 폐지
조선정부의 국방부는 자(玆)에 국내경비부로 개칭함. 조선정부의 국내경비부의 군사국은 자(玆)에 폐지한다. 1945년 11월 13일부 법령 제28호 제2조는 자에 폐지함.
제 2 조 조선경비대
조선경비대가 자(玆)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정부 예비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으로 국가대행기관으로서 활동함. 조선경비대는 국내경비부의 조선경비국 관리하에 속한다.

제 3 조 조선해안경비대
조선해안경비대가 자에 창설되고 1946년 1월 14일부로 조선해안 해상의 근(近) 해안 및 도서순찰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정부 해병단으로서 활동함. 조선해안경비대는 국내 경비부의 조선해안경비국 관할에 속함.
제 4 조 조선경비대에 관한 규정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며, 이에 따라 상시 도처에서 조선경비대를 관리하에 속함.
제 5 조 조선해안경비청에 관한 규정
조선해안경비청에 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고 이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를 관리함.
제 6 조 유효기일
본령은 발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1946년 6월 15일

朝鮮軍政長官 美國 陸軍少將 A. L. Lerch

3. 국방부 훈령 제1호

국방부 훈련 제1호(1948. 8. 16)

본관이 금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아울러 대통령령에 의하여 겸직하게 되었다. 자에 책임의 지중지대함을 실감하면서 군정 초부터 국군건립(國軍建立)을 목표로 묵묵히 분투하여 온 전 장병이 국가와 민족의 요청에 보답코자 하는 보국지성(報國至誠)을 위하여 천지신명의 가호를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취임초에 예하 관위학교(官衛學校) 부대실정을 파악함에는 시일을 상수(尙需)하는 바이다. 오직 국군건설에 정진하는 장병제군의 동심육력(同心戮力)을 확신하고 좌기 사항을 훈령하니 철저히 준수 실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1. 금일부터 아 육해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의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명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에 장병제군은 오직 근면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정신으로 새로운 국방군의 절요(切要)되는 시간을 엄수하며 직책을 극진하고 군기를 엄수하며 친애협동(親愛協同)하는 국군의 미덕을 발양하라.
2. 미 군정이 결말되고 친정부수립되는 이 현 전환기에 제(際)하여 확고한 정신으로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더욱이 직책에 근면충실하라.
3. 국가신생지제(國家新生之際)인 만큼 쇄신한 정신으로 생기발랄한 청년국군(青年國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력과 예민한 협동력으로 정성단결하여 화평친절히 전국민의 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 전국민을 생명으로 애호하라.

1948. 8. 16

국방부 장관 이범석

4. 사병훈

사 병 훈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 되자.

진정한 군인이 되자면 군기가 엄정하여 상관의 명령에 충심으로 복종할 것이고,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화목단결(和睦團結)할 것이며, 각자 맡은 책임에 성심성의(誠心誠意) 사력을 다하여 이것을 완수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신애를 받을 것이며, 공전(公戰)에 용감하고, 사투에 겁내며, 특히 음주폭행(飮酒暴行)을 엄금할 것이며, 정직결백하여 부정행위가 절무할 것이며, 극렬 파괴분자를 단호 배격하며, 그들의 모략 선동에 엄연 동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군인이라야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동포의 옹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국군 3대 선서 및 국군 맹서

국군3대선서(國軍三大宣誓)

1. 우리는 선열의 혈적을 따라 죽음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자.
2. 우리의 상관, 우리의 전우를 공산당이 죽인 것을 명기하자.
3. 우리 군인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군기를 엄수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하자.

국군맹서(國軍盟誓)

1.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두만강수에 전승의 칼을 씻자.

6. 군인복무령

군인복무령(軍人服務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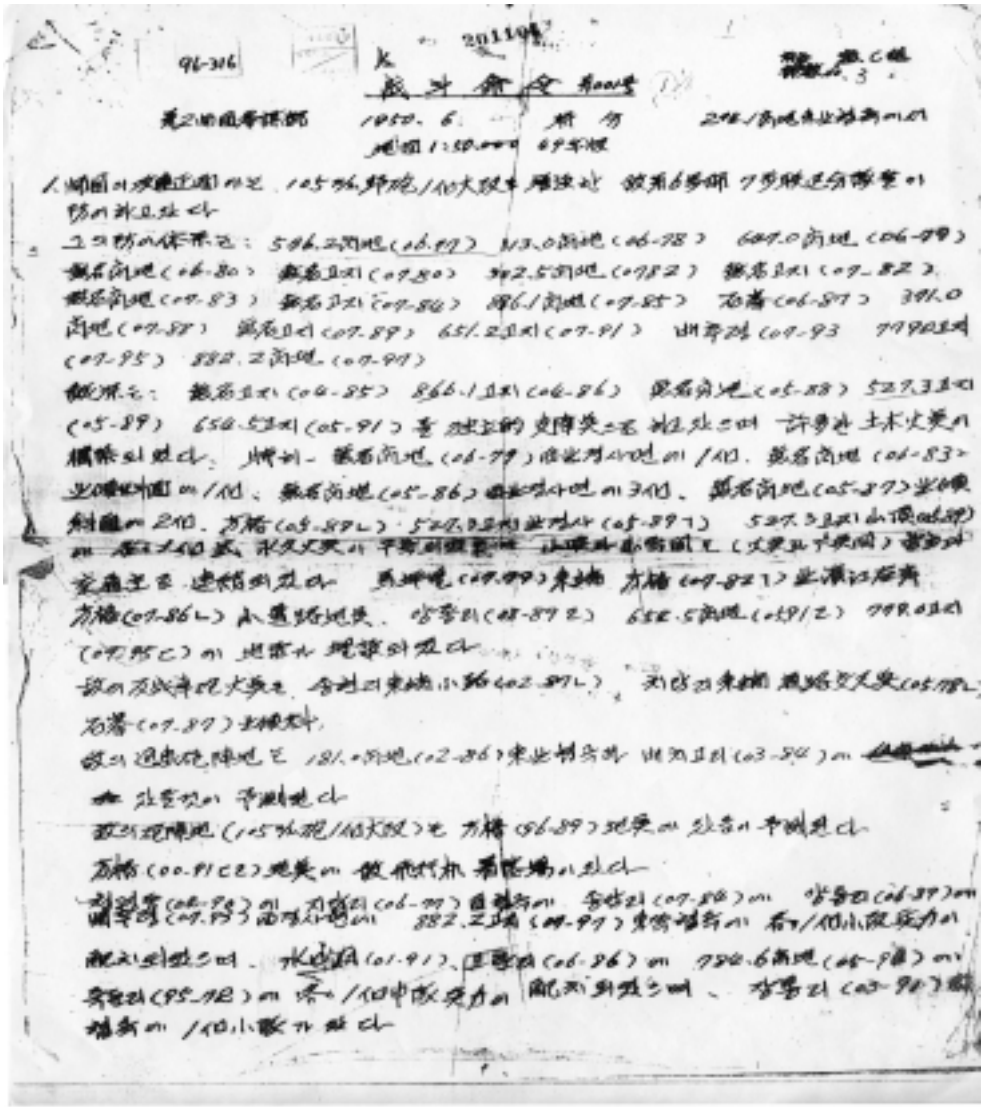
제 1 조 본령은 군인이 복무에 관한 근본 기준을 명시하여 군기를 확립하며 헌신보국의 군인정신을 앙양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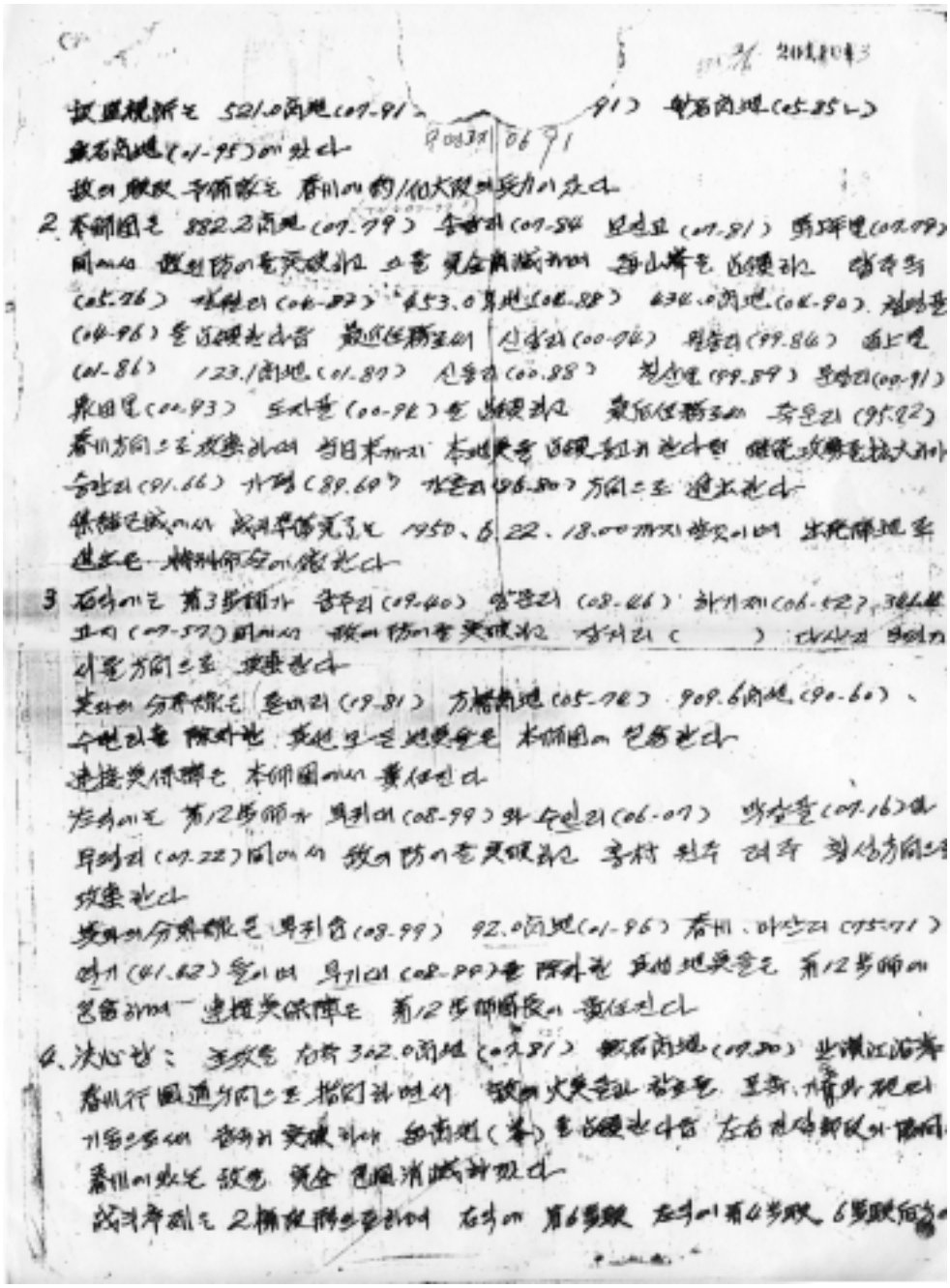
제 2 조 본령에 있어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 군인, 군 교육기관의 생도 및 소집중의 호국병역, 예비병역, 보충병역과 국민병역의 군인을 말한다.

제 3 조 군인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그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군인은 군기를 엄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성실히 법령을 군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군인은 상관을 존경하고, 부하를 애호하며, 화목, 단결하여야 한다.
제 6 조 군인은 청렴검박하고, 무용을 숭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군인은 낭비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또 그 분에 넘치는 부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군인은 신의를 고수하며,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군인은 복장을 단정히 하며, 언동을 삼가야 한다.
제11조 군인은 그 직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군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군인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본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없이 그 직장 및 근무지를 떠나지 못한다.
제14조 군인은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군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
제15조 군인은 직무에 관하여 위로 사례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한다.
제16조 군인은 그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한다.
제17조 군인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
제18조 본령은 군에 복무하는 군속에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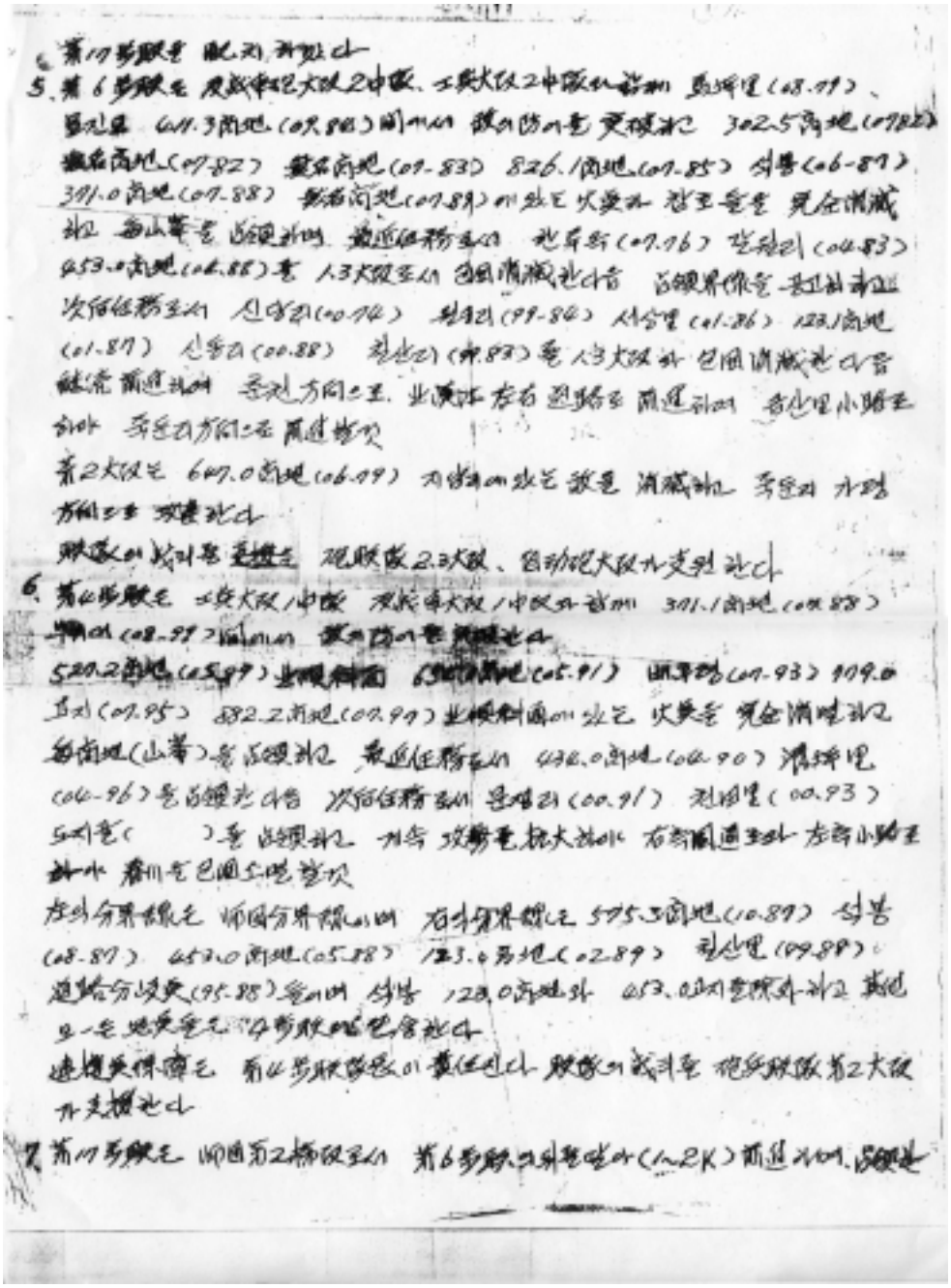
4. 북한군 정찰명령 · 전투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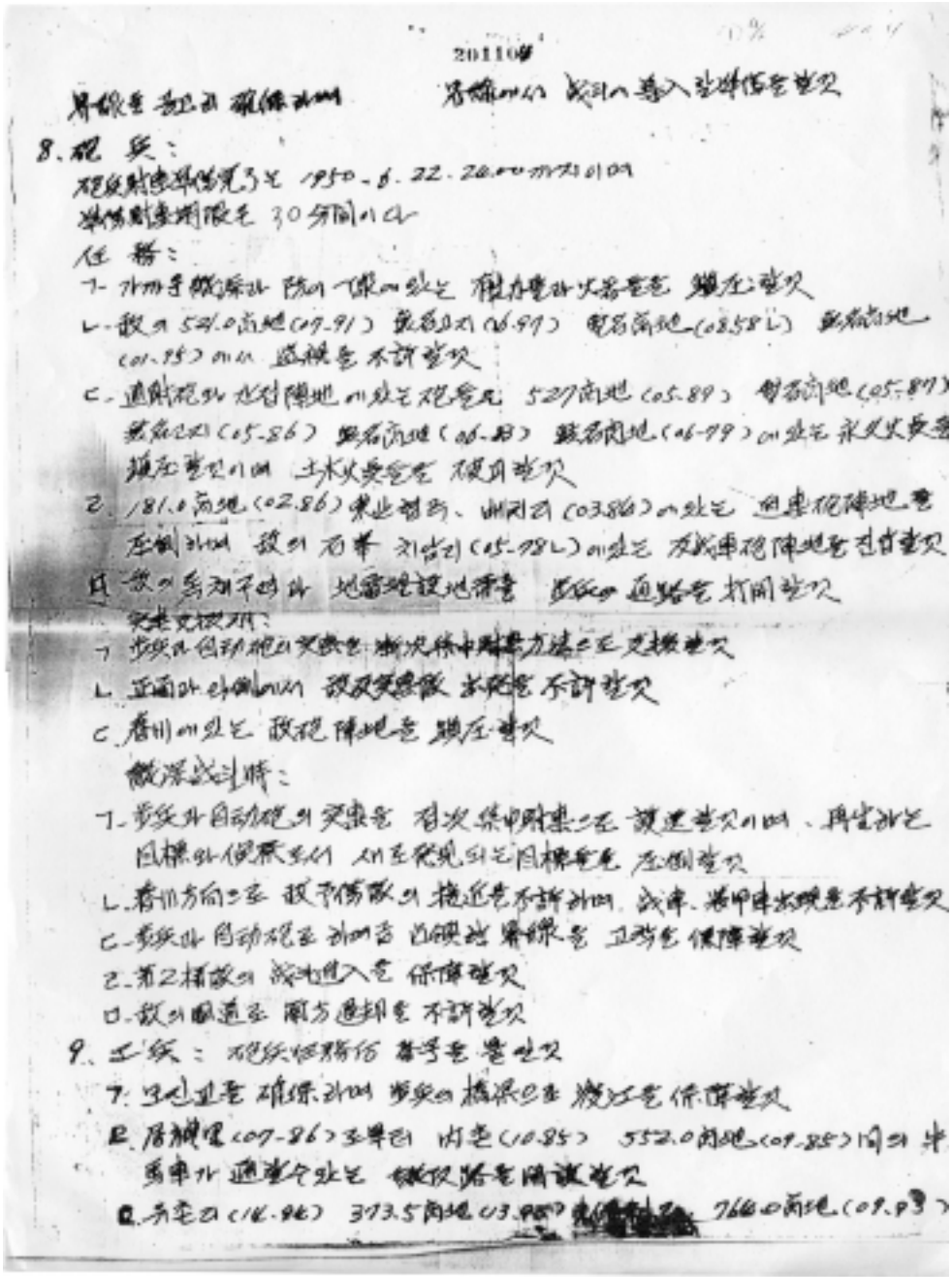
1.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 제1호





1. 攻擊開始 521.0高地(09-91) 91) 軟石洞里(05-85)
   軟石洞里(01-95)에 있다.
   敵의 反擊 予備隊는 春川의 約1個大隊의 兵力이 있다.
2. 本師團은 882.2高地(09-99) 金城川(09-84) 昭陽江(09-91) 華川里(02-09)
   附近의 敵陣防의 突破하고 主力은 現在線에서 西山峰을 攻擊하라. 龍岩洞
   (05-76) 水鉢里(06-92) 453.0高地(06-88) 630.0高地(06-90) 雪峰里
   (04-96)을 攻擊하라. 最近作戰로서 新北里(00-94) 月谷里(99-86) 西上里
   (01-86) 123.1高地(01-89) 新東里(00-88) 龍谷里(99-89) 昭陽里(00-91)
   泉田里(00-93) 五水里(00-96)을 攻擊하라. 最後作戰로서 安昌里(95-92)
   春川方面으로 攻擊하라. 當日午前11時 本地域을 確保하고 地點攻擊을 擴大하라.
   金城里(91-66) 外坪(89-69) 水安里(96-80) 方面으로 進出하라.
   作戰完成에서 戰鬪準備完了는 1950. 6. 22. 18:00까지 報告하며 出發時間은
   進出은 別途命令에 依한다.
3. 右翼에는 第3步兵師가 金城里(09-40) 昭陽里(08-86) 新北里(06-52), 386高
   地(09-57)의 線에서 敵의 防衛을 突破하고 龍谷里( ) 方面으로 攻擊
   前進方向으로 攻擊하라.
   左翼의 分界線은 昭陽里(19-81) 方峴高地(05-78) 909.6高地(90-60),
   수렁리을 除外한 其他 모든 地域을 本師團에 包含한다.
   連絡要領은 本師團에서 責任진다.
   左翼에는 第12步兵師가 鳳凰里(08-99)와 수렁리(06-07) 昭陽里(09-16)을
   通하는 線(09-22)에서 敵의 防衛을 突破하고 高村 北方 3km 線方向으로
   攻擊하라.
   境界의 分界線은 鳳凰里(08-99) 92.0高地(01-96) 春川-마산리(05-71)
   線(01-62)을 따라 鳳凰里(08-99)을 除外한 其他地域을 第12步兵師에
   包含하며 連絡要領은 第12步兵師團長에 責任진다.
4. 決心 : 主攻은 右翼 302.0高地(04-81) 軟石洞地(09-20) 北漢江沿岸
   春川行 國道方向으로 指向하며서 敵의 火力을 制壓, 殲滅하며 主要 交通
   要地을 奪取하며 敵의 突破 하여 西南地(峯)을 攻擊하라. 左右 兩側部隊의 協同
   春川의 北方 設定 現在 包圍消滅하라.
   戰鬪序列은 2個旅團을 前方에 右翼에 第6步兵 左翼에 第4步兵 6步兵師團을





20110

界線을 [illegible] 確保하며 [illegible]에서 [illegible]의 導入 [illegible]을 할것

8. 砲 兵:

砲兵射擊準備完了는 1950-6-22-24.00까지이며

準備射擊期限은 30分間이다

任 務:

ㄱ. 가까운 [illegible]과 防이 [illegible]에 있는 [illegible]과 火器들을 [illegible]할것

ㄴ. 敵의 521.0高地(07-91) [illegible](06-97) [illegible](08.58ㄴ) [illegible](01-95)에서 [illegible]을 不許할것

ㄷ. 道附砲와 [illegible]陣地에 있는 砲들은 527高地(05-89) [illegible](05-87) [illegible](05-86) [illegible](06-83) [illegible](06-79)에 있는 永久火[illegible] [illegible]할것이며 土木火[illegible]을 破[illegible]할것

ㄹ. 181.0高地(02.86) [illegible]、[illegible](03.86)에 있는 [illegible]砲陣地를 [illegible]하며 敵의 石[illegible] [illegible](05-78ㄴ)에 있는 [illegible]砲陣地를 [illegible]할것

ㅁ. 敵의 [illegible]과 地雷[illegible]設地[illegible] [illegible]의 通路를 打開할것

突擊支援[illegible]:

ㄱ. 步兵과 自動砲의 突擊을 漸次集中射擊方法으로 支援할것

ㄴ. 正面과 [illegible]에서 敵及突擊隊 出[illegible]을 不許할것

ㄷ. 春川에 있는 敵砲陣地를 [illegible]할것

[illegible]時:

ㄱ. 步兵과 自動砲의 突擊을 [illegible]集中射擊으로 [illegible]할것이며、再生하는 目標와 [illegible]에서 새로 [illegible]되는 目標들을 [illegible]할것

ㄴ. 春川方向으로 敵予備隊의 接近을 不許하며 戰車、[illegible]出現을 不許할것

ㄷ. 步兵과 自動砲로 하여금 [illegible] [illegible]을 고정을 保障할것

ㄹ. 第2[illegible]隊의 [illegible]進入을 保障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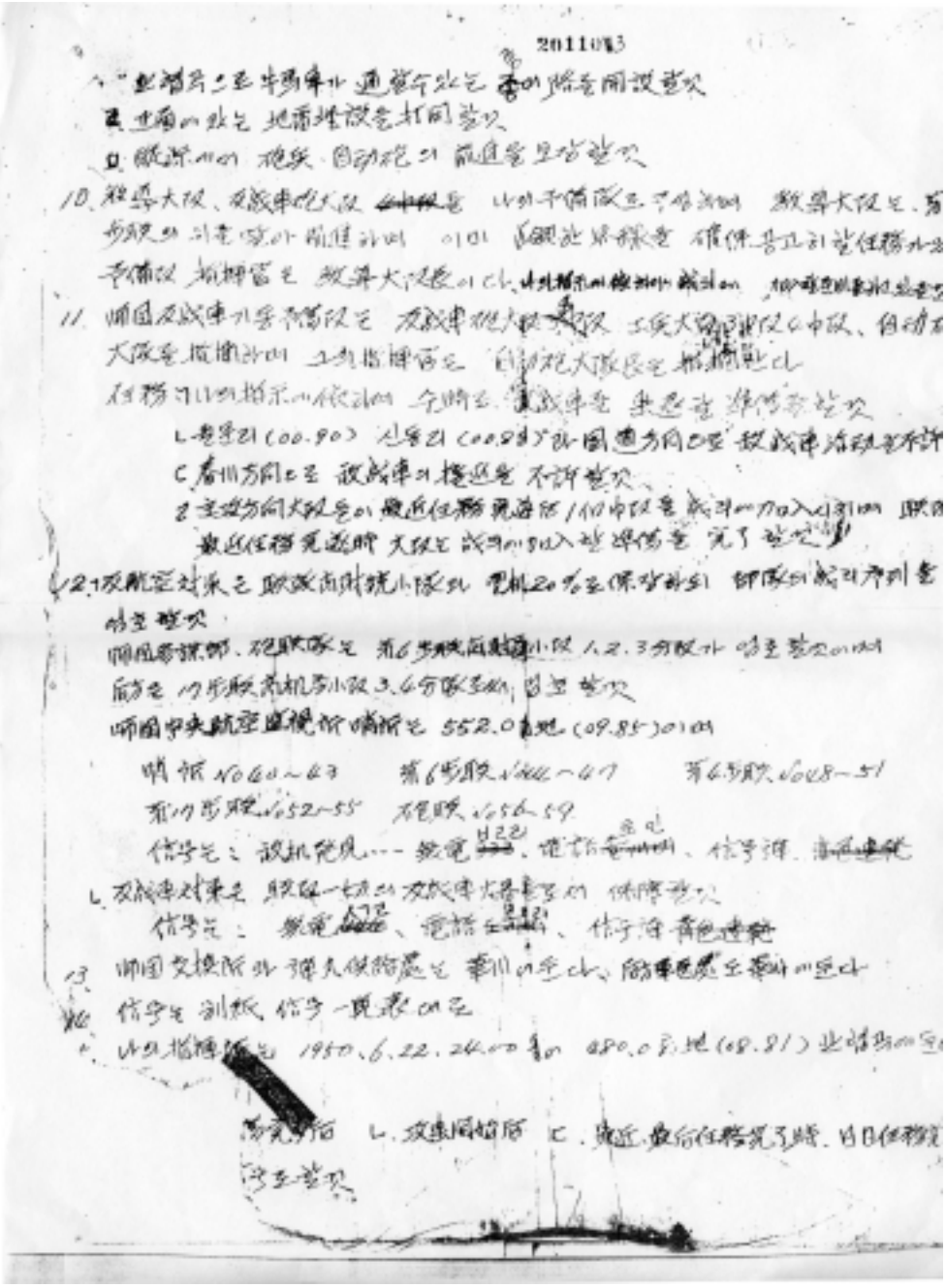
ㅁ. 敵의 [illegible]로 [illegible]退却을 不許할것

9. 工 兵: 砲兵任務[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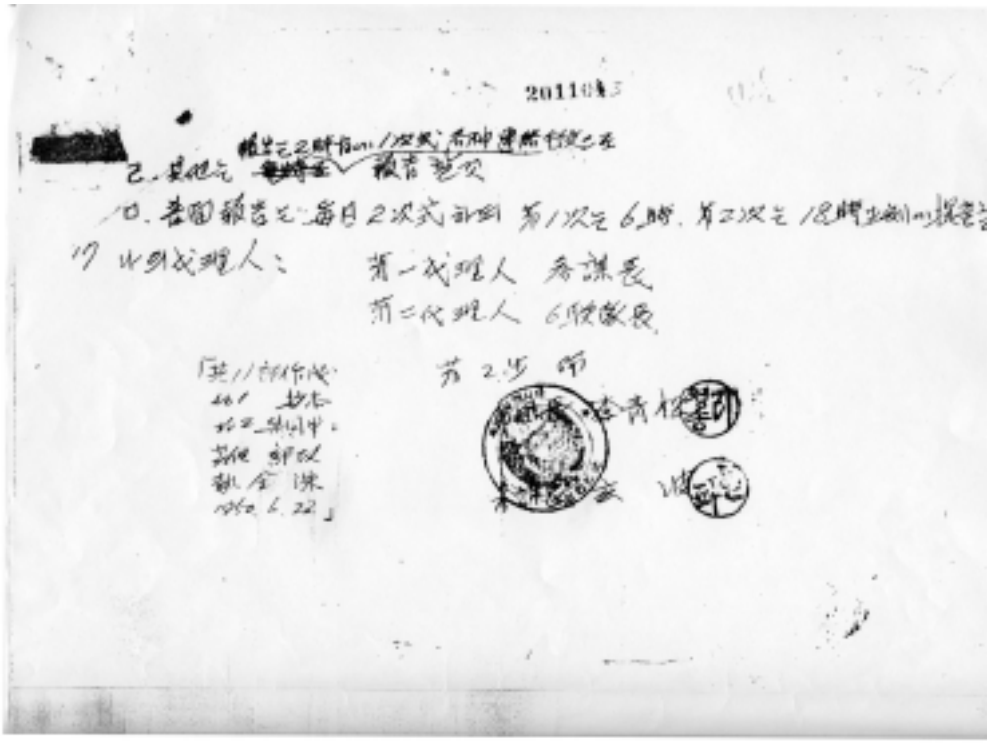
ㄱ. [illegible]을 確保하며 步兵의 橋梁으로 [illegible]을 保障할것

ㄴ. [illegible](07-86)로부터 [illegible](10.85) 552.0高地(09.85)間의 [illegible]車가 通[illegible]수 있는 [illegible]路를 [illegible]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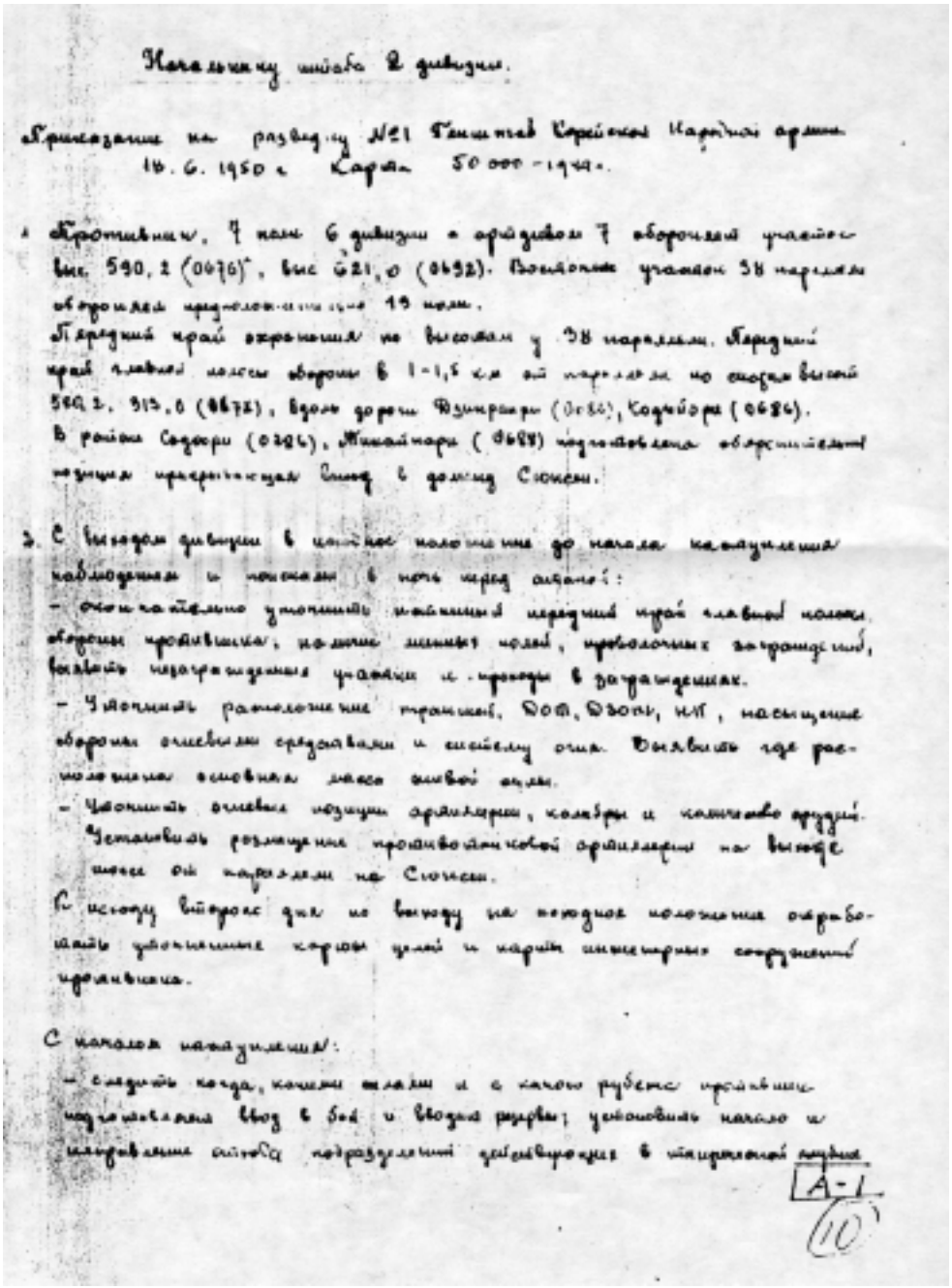
ㄷ. [illegible](14.84) 373.5高地(13.95) [illegible] 766.0高地(09.93)



20110613



2. 북한군 제2사단 정찰명령(노어)



Начальнику штаба 2 дивизии.

Приказание на разведку №1 Геншта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16.6.1950 г. Карта 50 000-1949 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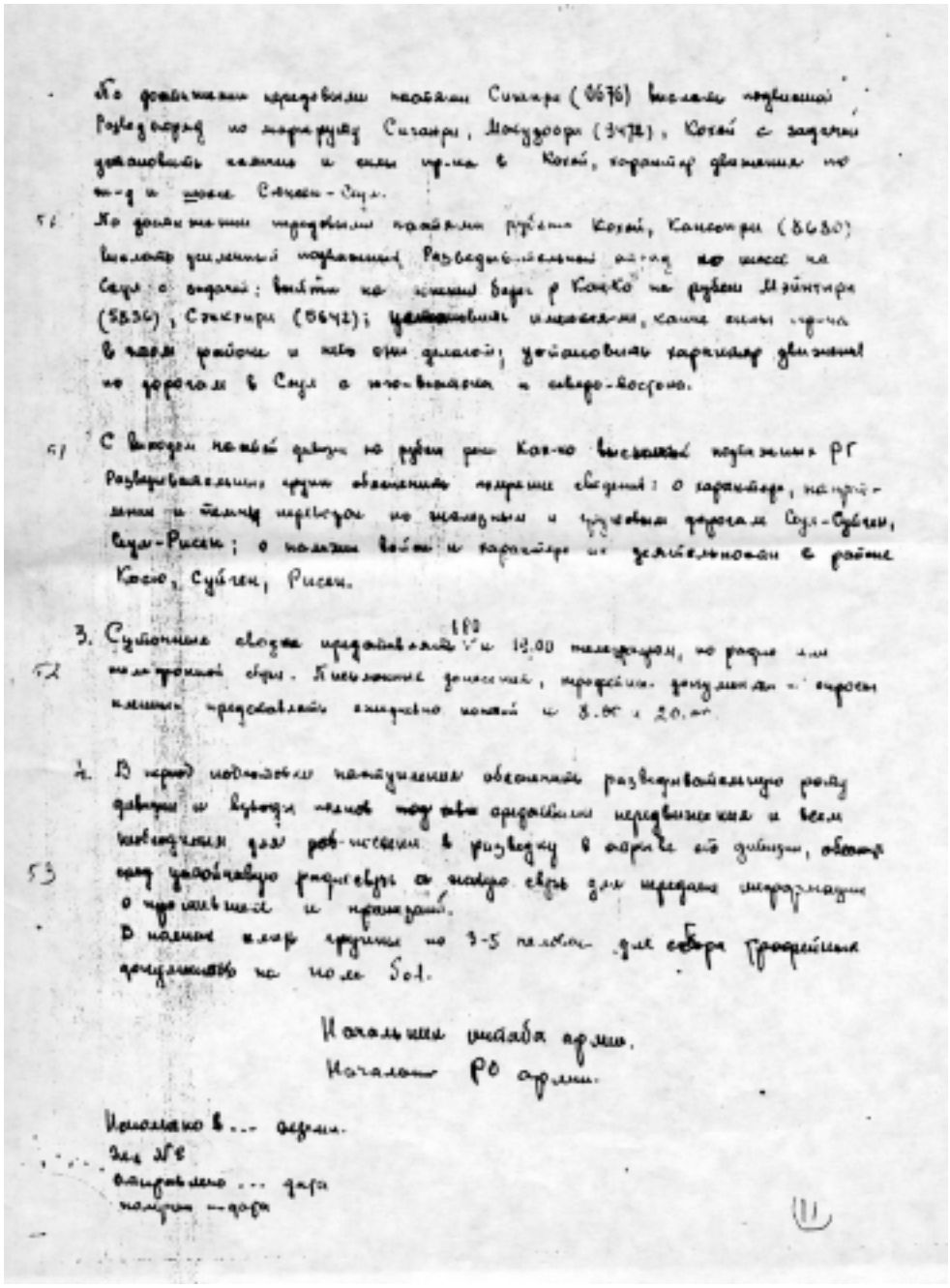
1. Противник, 7 полк 6 дивизии с артдивом 7 обороняет участок выс. 590,2 (0676), выс. 621,0 (0692). Восточный участок 38 параллели обороняет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19 полк.
Передний край охранения по высотам у 38 параллели.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в 1-1,5 км от параллели по скатам высот 590,2, 313,0 (0672), вдоль дороги Дзинраари (0686), Кодыбори (0686).
В районе Содоори (0286), Тинайпари (0688)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орони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прикрывающая вход в долину Сюксен.

2. С выходом дивизии в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 начала наступления наблюдением и поисками в ночь перед атакой:
-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очнить истинный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наличие минных полей, проволочных заграждений, выявить незаграждённые участки и проходы в заграждениях.
- Уточн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траншей, ДОТ, ДЗОТ, НП, насыщение обороны огне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истему огня. Выявить где расположена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живой силы.
- Уточнить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калибры и количество орудий. Установить размещение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артиллерии на выходе шоссе от параллели на Сюксен.
К исходу второго дня по выходу на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работать уточненные карты целей и карты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С началом наступления:
- следить когда, какими силами и с какого рубежа противник подготовляет ввод в бой и вводит резервы; установить начало и направление отхода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ействующих в тактической глубине.

A-1

(10)



По достижении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Сигаири (0676) выслать подвижной Разведотряд по маршруту Сигаири, Мосудоори (3472), Кохой с задачей установить наличие и силы пр-ка в Кохой, характер движения по ж-д и шоссе Сюнсен-Сеул.

51 По достижении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рубежа Кохой, Кансоири (8680) выслать усиленный подвиж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й отряд по шоссе на Сеул с задачей: выйти на ложный берег р Канко на рубеж Мэйнтири (5836), Сэнкхири (5642); установить имеющимися, какие силы пр-ка в этом районе и что они делают; установить характер движения по дорогам в Сеул с юго-востока и северо-востока.

51 С выходом частей дивизии на рубеж реки Кан-ко выслать подвижные РГ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групп обеспечить получение сведений: о характере, направлении и темпе переводов по железным и грунтовым дорогам Сеул-Суйчен, Сеул-Рисен; о наличии войск и характере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айоне Косю, Суйчен, Рисен.

3. Суточные сводки представлять 180 и 19.00 телеграфом, по радио или
52 телефонной сети. Письменные донесения, трофей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опросы п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лять ежедневно нарочно к 8.00 и 20.00.

4. В период подготовки наступления обеспечить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роту дивизии и взводы полков под ... передвижения и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роб-ности в разведку в отрыве от дивизии, обеспечить
53 ... устойчивую радиосвязь с нашего связь для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тивнике и приказаний.
В полках иметь группы по 3-5 человек для сбора трофей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оле Sol.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армии.
Начальник РО армии.

Исполнено в ... экземп.
Зал №8
отправлено ... дата
получено ... дата

(11)

(4)

26 Начальнику Штаба 4 дивизии.

Приказание на разведку № 1 Генштаб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15.6.1950 г. Карта 50000-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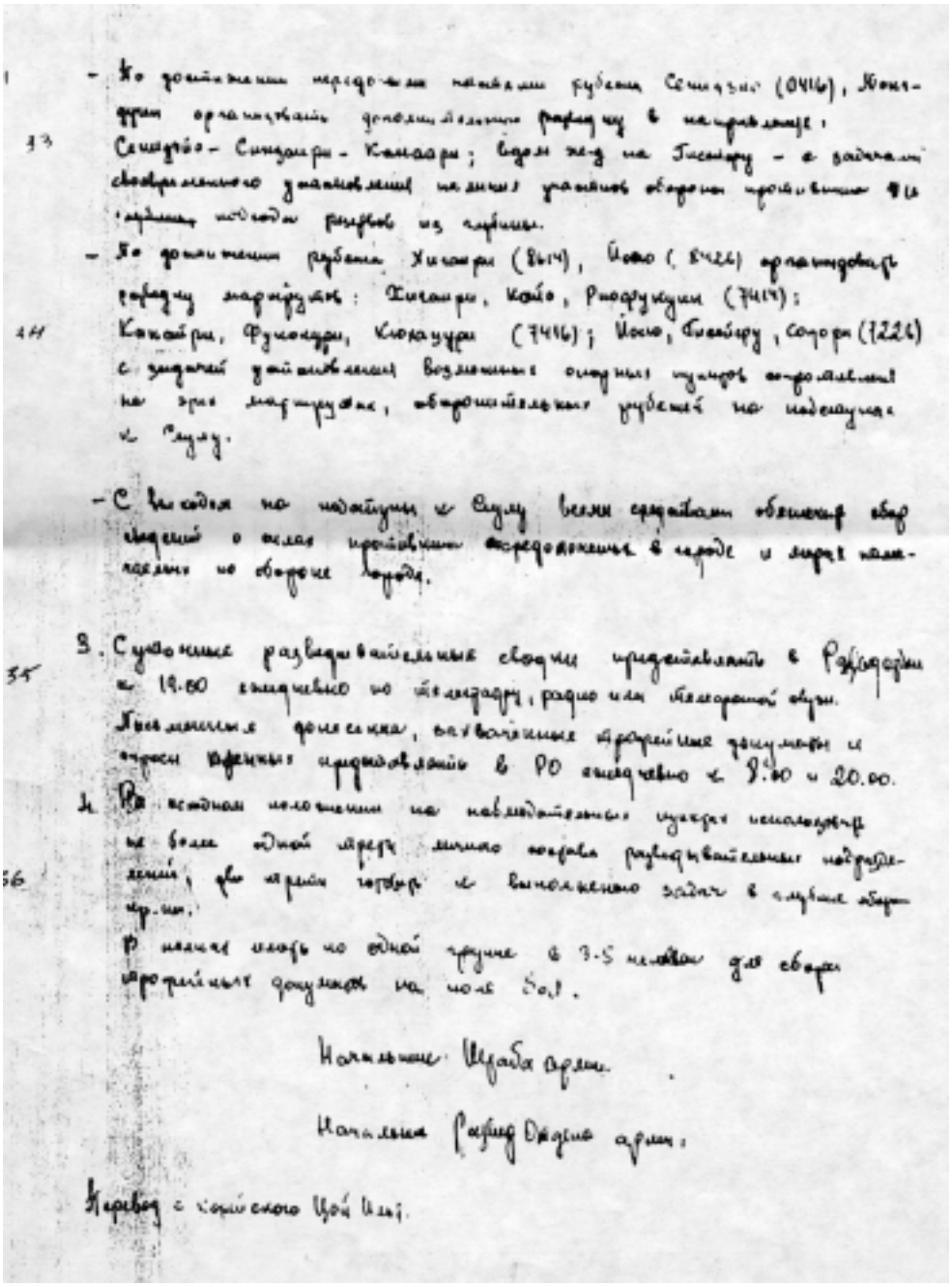
1. Противник, 1 полк 7 дивизии с приданной артиллерией обороняет участок от Индик-чан до выс. 588,5 (0630). Передний край окрашен 33 параллели по сев. скатам высот у параллели. Передний край
27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ка по сев. скатам выс. 217,0 (0628), Сенсоири (0626), ив. скаты выс. 411,3 (0628), с-з и сев. скаты высот (0630, 0632). Дальше вдоль дорог от параллели на Сенсоири (0824) и Бундуры прекрасно развито системой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озиции
28 полевого резерва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в районе выс. 249,7 (0626). Правее обороняется 13 мк 1 нд, левее 9 полк 7 дивизии.

2. С выходом дивизии в исходное для наступления положение и до начала
29 наступления наблюдением и поисками в ночь перед отчетной обеспечить:
— окончательно уточнить конечный передний край главной полосы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наличие и расположение лишних полей, проволочных заграждений и других препятствий, наличие и места незаграждённых участков и проходов в заграждениях.
30 — уточнить расположение траншей, ходов сообщения, ДОТ, ВЗОТ, НП, насыщение обороны огне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истему огня. Выявить где расположен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живой силы противника и режим дня.
— Уточнить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артиллерии, количество и калибр наличных
31 орудий. Установить размещение противотанковых орудий, особенно на подступах к дороге.
— К исходу второго дня по выходу в исх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отработать уточненные карты целей и карты инжене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противника.

— С началом наступления:

32 Вести непрерывное усиленное наблюдение за появлением новых огневых точек, прикрывающих дороги; вскрывать своевременно новые узлы и очаг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ротивника; следить куда отходят сбор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ка.

А-1



1 – По достижении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рубежа Сенидзио (0416), Понгдури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разведку в направлении:

33 Сенидзио – Синзаири – Кокаари; вдоль жел. на Гисейру – с задачами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установления наличия участков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и глубины подхода резервов из глубины.

– По достижении рубежа Хигаири (8614), Йосю (8426)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зведку маршрутов: Хигаири, Кайо, Рюфукуни (7414);

44 Кокаири, Фукокури, Кюхацури (7416); Йосю, Гисейру, Сонори (7226) с задачей установления возможных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на этих маршрутах,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рубежей на подступах к Сулу.

– С выходом на подступы к Сулу все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еспечить сбор сведений о силах противника, передвижения в городе и мерах намечаемых по обороне города.

3. Суточны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водки представлять в Разведотдел

35 к 19.00 ежедневно по телеграфу, радио или телефонной связи.

Письменные донесения, захваченные трофей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опросы пленных представлять в РО ежедневно к 8.00 и 20.00.

4. Во всяком положении на наблюдательных пункт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более одной трети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ве трети готов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глубине обороны кр-н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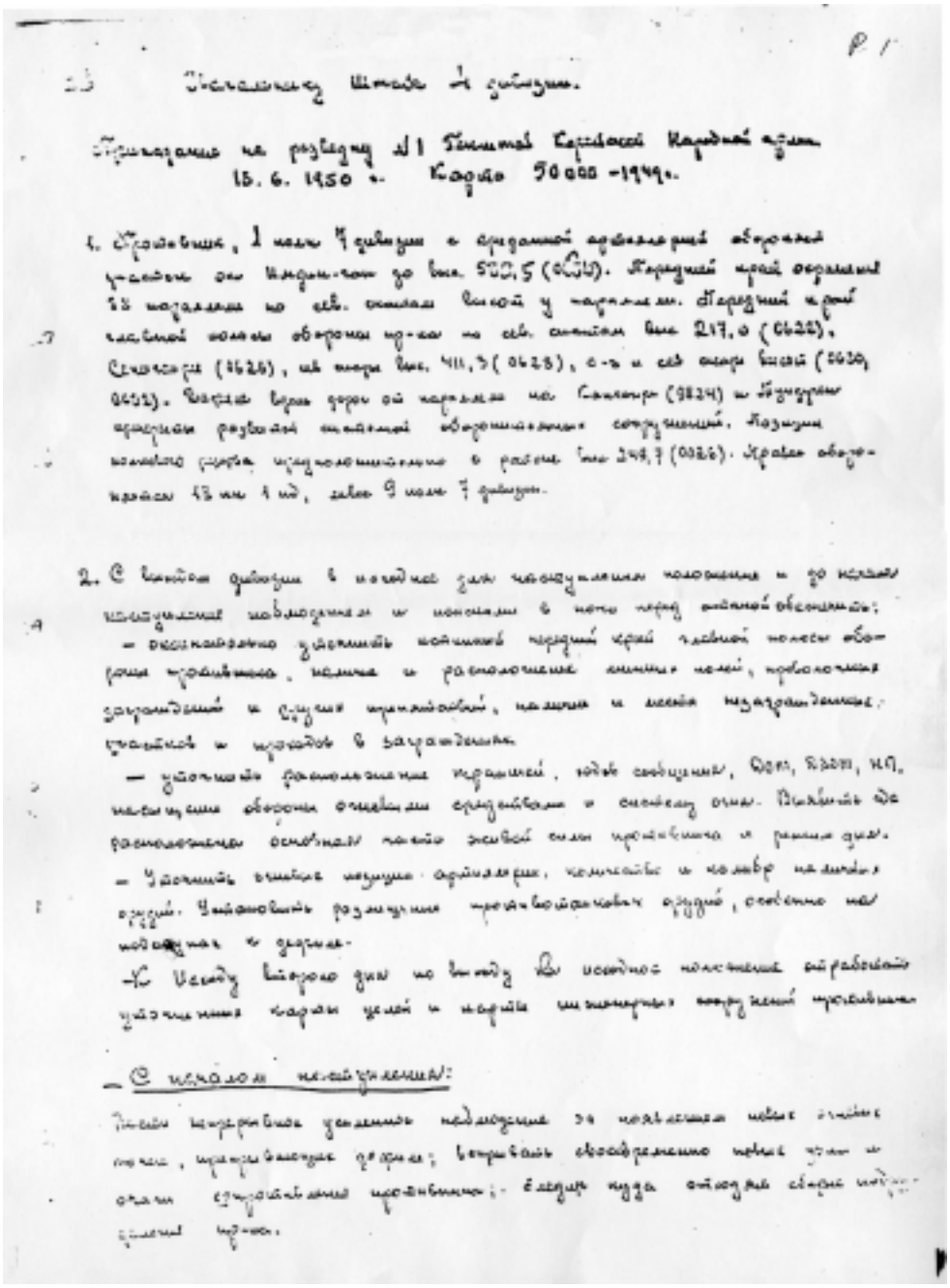
36 Р. полная иметь по одной группе в 3-5 человек для сбора трофей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оле бол.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армии.

Начальник Развед. Отдела армии.

Перевод с корейского Цой Илы.

3. 북한군 제4사단 정찰명령(노어)



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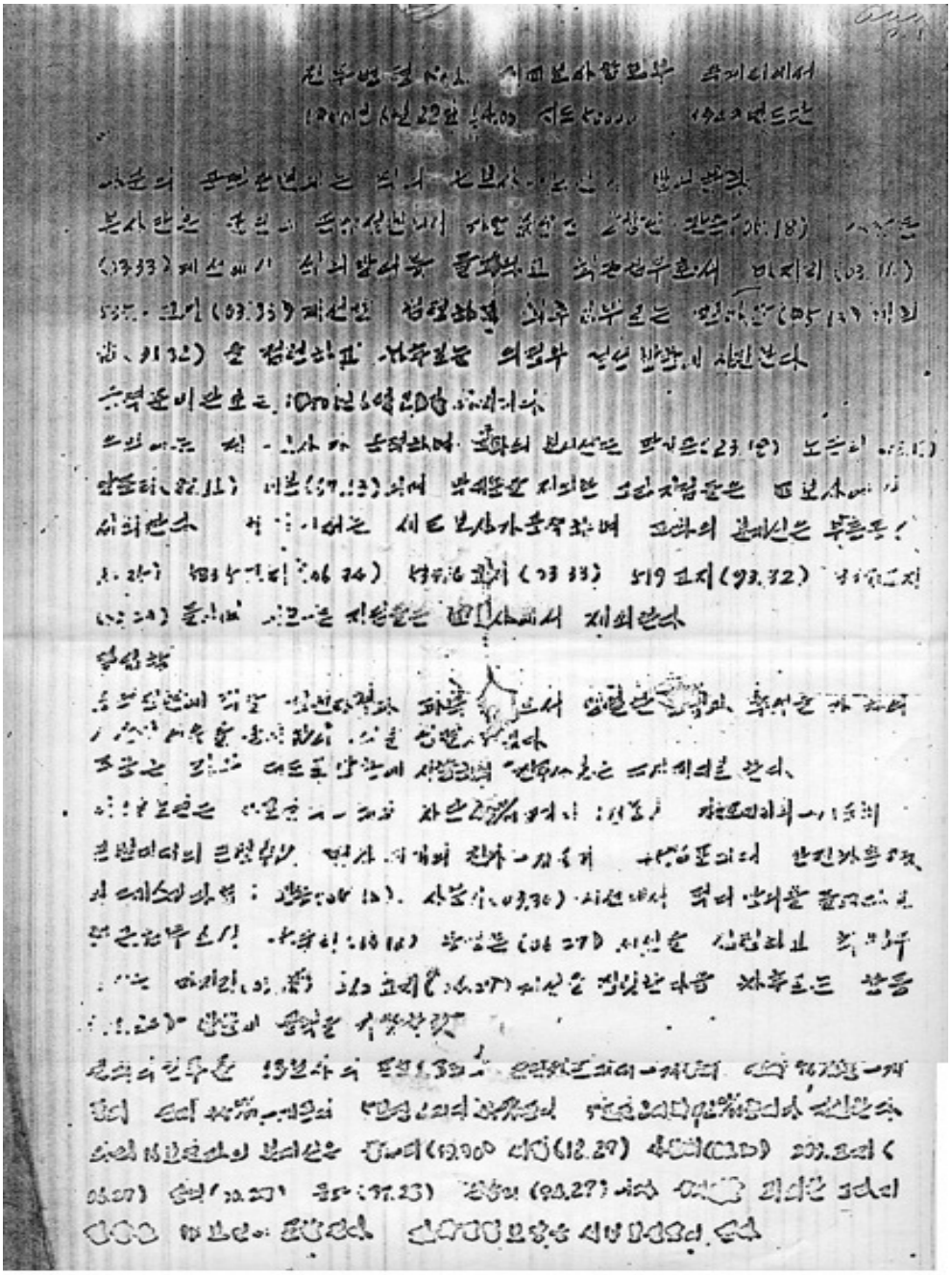
- По достижении передовыми частями рубежа Сенгузйо (0416), Ибоки-[illegible]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разведку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енгузйо – Синзаири – Канаари; вдоль ж-д на Гисейру – с задачами [illegible] установления наличия участков обороны противника [illegible] подхода разрывов из глубины.
- По достижении рубежа Хигаири (8614), Йосю (8426)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зведку маршрутов: Хигаири, Кайо, Рнофукуни (7414); Канаари, Фукокури, Кюхацури (7416); Йосю, Гисейру, Содори (7226) с задачей установления возможных опорных пункт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на этих маршрутах,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рубежей на подступах к Сеулу.
- С выходом на подступы к Сеулу все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еспечить сбор сведений о силах противника, передвижения в городе и мерах [illegible] по обороне города.
- Суточны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водки представлять в Разведотдел к 19.00 ежедневно по телеграфу, радио или телеграфной связи. Письменные донесения, захваченные трофейные документы и спроси [illegible] представлять в РО ежедневно к 8.00 и 20.00.
- В [illegible] положении на наблюдательных пунктах использовать не более одной трети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ве трети готовить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глубине обороны [illegible].
В [illegible] иметь по одной группе в 3-5 человек для сбора трофейных документов на поле Бол.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армии.

Начальник Развед Отдела армии.

[illegible] Цой Ильи

4. 북한군 제4사단 전투명령 제1호



6. 제16보연은 사포연의 23대대 사단 45대포대대의 一개중대 사단 자동포 대대의 二개중대 전차대대의 二개중대 45대포二개 반전차총중대의 二개소대 공병대대의 공병一개중대와 함께 사랑리(09.30) 패지리(..-..)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근임무로서 앞원리(05.27) 패하리(05.33) 계선을 점령하고 최후임무로는 762고지(04.27) 535.6고지(03.33) 계선을 점령한다음 차후로는 의정부 방향을 공격할것 연대의 전투를 13보사의 포연二대대 반전차포대대의 二개중대 76%연대포의 二개중대 연대 45%포 二개중대 5연대의 76%중대 5연대의 120%포대 5연대의 82%二개중대가 지원한다

좌익분계선은 사단 분계선이며 관련보장책임 16보연장이 진다

7. 제5보연은 (1개대대 제외) 사단의 제二전대로서 제16보연의 위를 따라 공격할것이며 762고지(04.27) 535.6고지(03.33) 계선에서 전투진입을 준비할것

제5보연 1대대장은 反전차포一개소대 反전차총二개분대 중기관총二개분대 공병一개소대를 보병一개소대와 함께 습격조를 조직할것 습격조 지휘관은 보병소대장이다

8. 제5보연의 제2보대는 反전차포중대(1)의 18보연의 위를 따라 공격할것이며 마지리(03.16) 동장촌(06.27) 계선에서 전차진입을 준비할것

9. 준관도 대대는 나의 수하 대대로 한다

포병준비사격은 30분간이며 그 후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전반적 포병의 임무

포병사격은 분간이며

폭격준비 시기

(1) 적의 방어전면에서 생활요량을 감안할것

(2) 적의 포병진지를 발도하며 도목회점 영구화점을 파괴할것

(3) 적의 방어전면 장애물에 도로를 개설할것

(4) 정방(06.20) 부점동(06.24) 초촌리(06.30) 에로의 적의 접근을 분쇄할것

(5) 방어전면 감시소로부터의 적의 감시를 분쇄할것

돌격 지원 시기 P3

.1. 보병과 전차 자동포의 공격을 마지리(55[illegible]) 마차산([illegible]) 535.6 고지(0332) 까지로 할것

.2. 정심으로 통하는 대도로를 최 좌우측의 [illegible] 적의 [illegible] 도목화점을 영구 화점을 소멸할것

.3. 적의 포병진지에 反포사격을 실시할것

.4. 고사동(02.14)으로 통하는 도로와 [illegible](39.28)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 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적의 反돌격을 불허할것

.5. 동두천의 [illegible](37.24) 마의의 적의 접근을 저지할것

.6. 적의 지휘 지를 파괴할것

중심전투시기

.1. 피라하는 적의 피라로 [illegible]할것

.2. 反포사격을 [illegible]

.3. 적의 [illegible]포와 주도로를 차단할것이며 [illegible] 방향 [illegible]할것

.4. 사단최근임무 부명시는 [illegible] 고사점(37.27) 기준(38.[illegible]) 주의의 적의 [illegible] 저지할것

.5. 의정부 방향으로부터의 적의 反포병부대 [illegible]을 저지할것

포사격준비완료는 1950년 6월 29일 24시 00분 [illegible] 이다.

항공대의 임무

.1. 一군의 항공지구와 가능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한다

.2. 적의 군사시설 [illegible]을 파괴한다

.3. 적의 집결과 예비대의 접근을 저지한다

.4. 적의 도로를 파괴하며 [illegible]을 불허한다

11. 反항공대책은 각 전지지체의 고사기관포서 할것이며 적기 대응시는 보병부기의 30%를 동원케 할것

사단 항공정시 연락초소는 [illegible] 에 [illegible]

제18보연은 No

제16보연은 No

제5보연은 No 이다 교사기관포 [illegible] 화기진지 [illegible]

사단지휘소지구를 엄호할것

12 反전차 예비隊는 45㎜대대의 1개 공격과 중병중대로서 하여 제二대대의 뒤를 따라 공격하면서 중심으로 침입하는 적기계화 부대의 침입을 저지할것 각부대에서 자체의 反전차 화기지대로서 反전차 대책을 수립할것

13. 사단 준의소는 1950년 6월 20일부터 지도(23.[illegible])에 위치하며 交場所는 1950년 6월 21일부터 지도(23.11 [illegible]) 구역에 위치한다

14. 사단 지휘소는 형국(13.28)이며 강시소는(07.11)인바 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15. 보고는

(1) 공격준비 완료후
(2) 공격개시 후
(3) 최근 차후 맞 [illegible] 무전 맞서를 [illegible] 제출할것
(4) 그다 보고는 매二시간에 一차식 할것
(5) 서면보고는 매일二차식 하되 7시와 19시 정각에 최착될것

16. 기본 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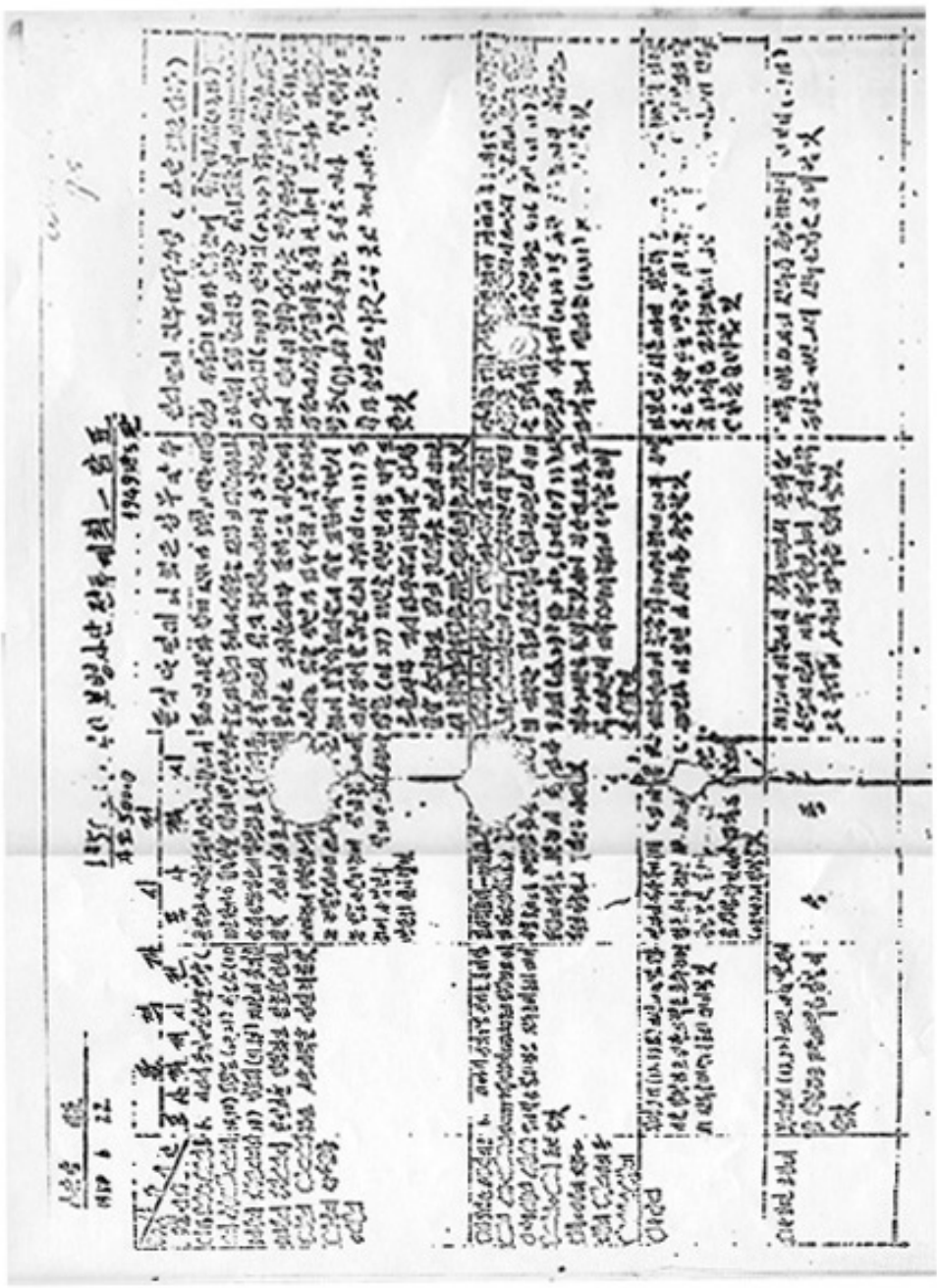
No	신호내용	신호탄	전화	무전
1	공격개시		폭풍	224
2	돌격개시	녹색신호탄	열정	224
3	포병공격개시	붉은신호탄	폭풍	333
4	돌격지원개시	녹색신호탄	논보라	111
5	사격중지	백색신호탄	사격중지	222
6	화기호출	[illegible]	배락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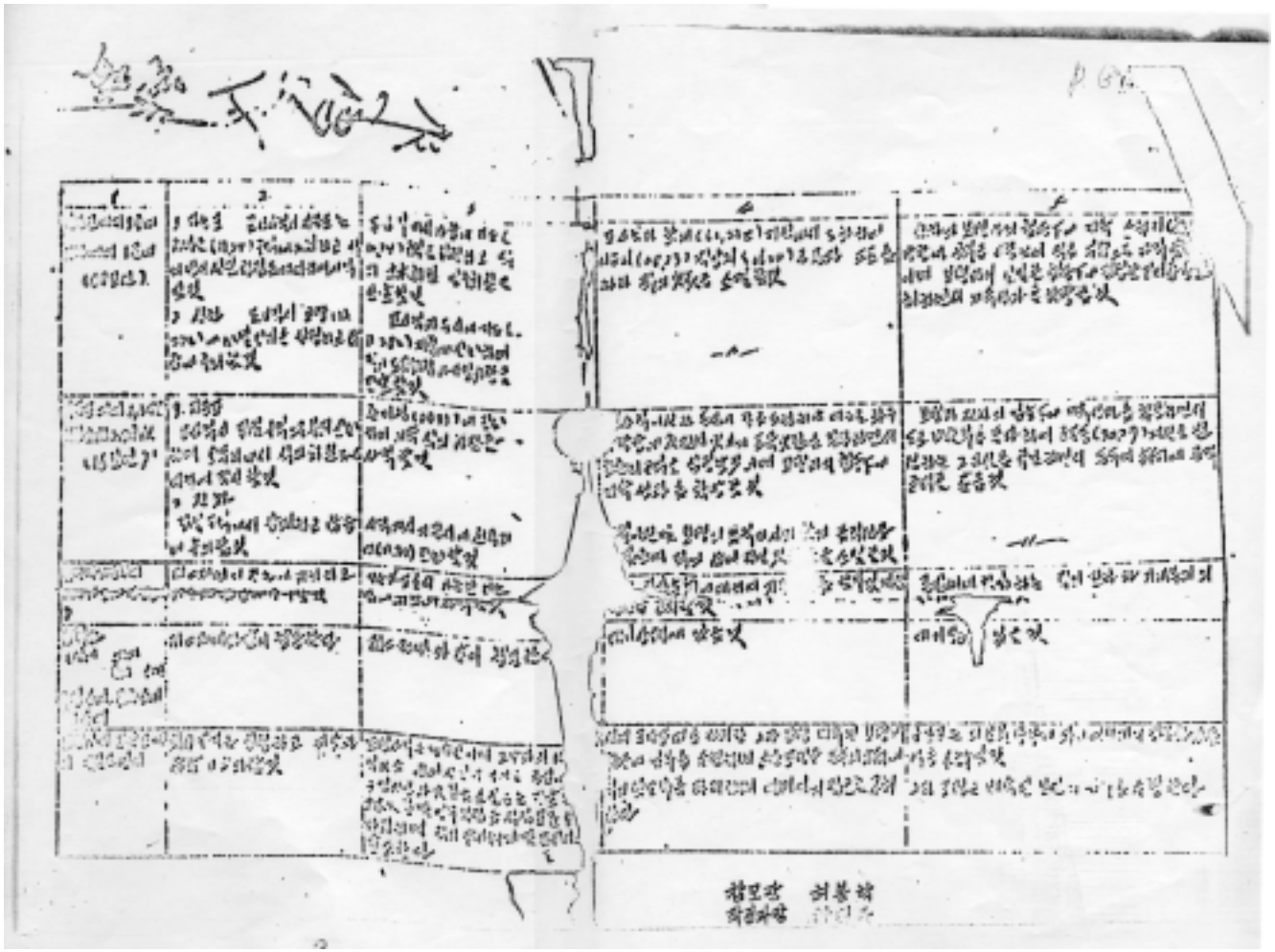
17. 제一대리인 참모장 제二대리인 16보연장

[illegible] 3부작성

제四보병사단장 이권무
참모장 최봉학

5. 북한군 제4사단 전투계획





참 고 문 헌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1) 國文 1次 資料

空軍本部職制令, 1949. 10. 1.
國軍組織法, 1948. 11. 30.
國防部特命綴, 1949～195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職制令, 1948. 12. 7.
國本一般命令(陸), 1949. 12. 17.
國會圖書館, 國際聯合 韓國委員團 報告書(1949, 1950), 1965.
國會速記錄
大統領令 第43號, 1948. 12. 31.
大韓民國 大統領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過渡期에 시행될 잠정적 軍事安全에 관한 協定(1948. 8. 24).
大韓民國 制憲憲法.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주한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協定(1950. 1. 26).
陸軍本部 軍史硏究室, 陸軍歷史日誌(1), 1945～50.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政府組織法, 1948. 7. 17.
制憲議會速記錄.
朝鮮警備隊總司令部, 特命 第75號, 1946. 12. 17.
統衛部特命綴.

2) 國文 公刊資料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1954.
國防部,『군사조약 목록집』, 1995.
國防軍史硏究所,『國防政策變遷史 1945～1994』, 1995.
國防軍史硏究所,『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인쇄, 1997.
國防軍史硏究所,『한국전쟁 (상)』, 1995.
國防軍史硏究所,『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 1945～1950』, 1999.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建軍史』, 20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국방사』 제1집, 198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국방조약집 1945～1980』 제1집, 198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軍事史 硏究叢書』 제1집,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軍事史 硏究叢書』 제2집, 2002.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 2002.
國防部 軍事編纂硏究所,『韓美軍事關係史 1871～2002』, 20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對非正規戰史(1945～1960)』, 1988.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西部戰線篇』, 198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38도선 初期戰鬪 : 中東部戰線篇』, 198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1, 197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解放과 建軍』, 1967.
空軍本部,『空軍史』 第1輯, 1962.
空軍本部,『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空軍本部,『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 第1卷, 1954.
內務部治安局,『美軍政法令集』, 1956.
大檢察廳 搜査局,『左翼事件實錄』 第一卷, 1965.
大韓民國 公報處,『대통령 이승만박사 담화집』, 1953.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집』 제1집, 1973.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1969.
陸軍本部,『創軍前史』, 1980.
陸軍士官學校,『陸軍士官學校 30年史』, 삼화인쇄주식회사, 1978.
兵務廳,『兵務行政史』(上), 1985.
외무부 외교연구원,『韓國 外交 20年 附錄』, 외무부, 1966.
陸軍本部 情報參謀部,『共匪沿革』, 1971.
陸軍本部,『6・25事變 陸軍戰史』 제2권(부록), 1953.
陸軍本部,『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陸軍本部,『陸軍戰史』 제1권.
戰爭紀念事業會,『韓國戰爭史』 제2권, 행림출판사, 1993.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1948.
韓國獨立運動史硏究所,『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海軍本部 戰史編纂監室,『大韓民國海軍史』(行政編), 1954.
海軍本部,『海軍30年史 1945～1975』, 1978.
海兵隊司令部,『海兵發展史』, 1961.
海兵隊司令部作戰敎育局,『海兵戰鬪史』 제1부, 1953.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護國軍史』, 경희정보인쇄, 2001.

3) 國文 證言 및 回顧錄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金貞烈,『金貞烈 回顧錄』, 乙酉文化社, 1993.
金弘壹,『大陸의 憤怒』, 文潮社, 1972.
陸軍本部,『이성가 장군 참전기 : 永川 大會戰』, 1995.
박태균,『조봉암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白善燁,『軍과 나』, 大陸硏究所 出版部, 1989.
白善燁,『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여운홍,『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유성철,『나의 증언』(10),『한국일보』, 1990.
李範奭 장군 기념사업회편,『철기 이범석 평전』, 삼육출판사, 1992.
李應俊,『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이한림, 『세기의 격랑』, 팔복원, 1994.
李亨根, 『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서, 1993.
張志良, 『나의 手記 :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신오성, 2001.
丁一權, 『丁一權回顧錄 : 6·25秘錄 戰爭과 休戰』, 東亞日報社, 1986.
趙炳玉, 『나의 회고록』, 해동, 1986.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許政, 『許政 回顧錄 : 내일을 위한 證言』, 샘터, 1979.

4) 北韓 1次 史料 및 公刊資料

『북조선노동당 인제군당 당조회의록』(1949. 1-3),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SN. 792.
『조선인민군 선제타격계획 작전지도』(사본), 연합통신자료실(1992. 8. 29).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2권~제4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197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5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8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2권, 1949.
민족보위성총참모부, 『명령 : 중공당원 전당을 위한 당문건 작성등기원 동원보장에 대하여』, 1950. 5. 17.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3권~제24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국해방전쟁사』 (1), 1961.
조국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문헌집』, 조선민보사, 1949.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집(1946. 9-1948. 3)』.
조선노동당출판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문헌집』, 1951.
조선인민군 제2사단사령부, 『전투명령 제1001호』(1950. 6. 22).
조선인민군 제4보병사단 참모부, 『전투명령 제1호』(1950. 6. 22).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조선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83.

5) 美國 1次 資料 및 公刊資料

Albert C. Wedemeyer, "Report to the President : Korea",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ts and Lee Bum Suk at 1600 9 August 1948*, 1948. 8. 10.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8. 16.

Dean Acheson, "Crisis in Asia-An Examination of U. S. Policy," *Department State Bulletin*, vol. 22. 551, January 23, 1950.

Department of Commerce, *The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lonial Times to 1957,* Bureau of the Census, 1960.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CHINA & JAPAN(1948-1954),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3, 1996.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Ⅰ(1948-195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Ⅱ(1951-1954),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2, 1996.

FEC,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FEC, Intell. Summary No. 2486(1949. 6. 30).

FEC, Intelligence Report, No. 2480, 1949. 7. 8.

General Staff of the North Korean Army, To : The Chief of the 2nd Division, Reconnaissance Order No. 1, 18 Jun. 1950.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New York : Panthon Books, 1967.

Gerneral Staff North Korean Army, *Intelligence Plan of the North Korean Army for an Attack Plan*, Chief, 20 Jun 1950.

GHQ, CINCFE, *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No. 18, 1947. 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8～198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 Korea 1*～*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HUSAFIK,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Ⅰ ~Ⅳ, 돌베개, 1988.

JCS 1644/1, March 27, 1948; JCS 1769/1.

JWPC 476/2, August 29, 1947.

KMAG, *G-2 Periodic Report 1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SANACC 176/39.

Stalin to Truman, telegram, August 16, 1945, enclosed in Memo, From Admiral Leahy to General Marshall, April 29, 1947, RG 59, 740.00119 Control(Japan)/4-2947, NA.

Truman Doctrin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S. Truman, 1947(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5,* vol. Ⅳ, *The Far East,* 1969.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6,* vol. 8, *The Far East,* 1969.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7,* vol. 6, *The Far East,* 1973.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8,* vol.7,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76.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Relation with Chin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State, 1949.

U. 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8(1948.4.2), NSC-8/1(1949.3.16), NSC-8/2 (1949.3.22), NSC-48(1949.6.10), NSC-48/1(1949.12.23), NSC-48/2(1949.12.30), NSC- 61(1950.1.27), NSC-61/1 (1950.5.16), NSC-68 (1950.4.14).

U. S.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1946. 6. 20).

USAFIK, 『Procession and Evacuation』,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Part Ⅰ, Chapter Ⅶ.

『국제연합한국위원단보고서』, 1949. 9. 1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상), 1990

徐東九 譯, 『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申福龍 編, 『한국 해방전후사 논저』 1, 선인문화사, 1998.

駐韓 美陸軍司令部 정보참모부, 『미군정정보보고서』, 일월서각, 198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제1권,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CIC 보고서(1945. 9～1949. 1)』1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철호 譯,『미국의 대한정책(19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6) 蘇聯·中國 關係 資料

『모스크바의 새증언』(1),『서울신문』1995. 5. 15일자.
『모택동 선집』1～3, 북경, 1970.
『소련 외교문서』1～3권.
중공중앙문헌연구실,『주은래 외교문선』, 1990.
Evgeniy P. Bajanov & Natalia Bajanova,『소련비밀문서로 본 한국전쟁』.
Kyrio Kalinov, *How Russia Built The North Korea Army*, *The Reporter*, September. 26. 1950,『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북한』1988년 6월호.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關聯 蘇聯資料』(1993. 4).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라주바예프 보고서－6・25전쟁보고서』제1권, 신오성, 2001.
소련군총참모부,『군철수 이후 잔류인원 보고』(1949. 2. 18),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고, 자료번호23, 목록번호 173346, 문서번호 73, 195.
外務部,『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1-4권), 199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2002.
중국인민해방군총부,『제1호 공보』,『동북조선인민보』1949. 7. 17.

7) 國外 證言 및 回顧錄

S. 슈람 저, 김동식 역,『모택동』, 두레, 1979.
딘 러스크 저, 홍영주외 역,『딘 러스크의 증언 : 冷戰의 備忘錄』, 시공사, 1991.
리지웨이 저, 김재관 역,『한국전쟁 :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듀 B. 리지웨이』, 정우사, 1984.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역,『스탈린』세경사, 1993.
육군사관학교 인문사회과학처 譯,『미국의 씨이저 맥아더 원수』, 병학사, 1984.
정홍진 역,『후루시초프 回顧錄』, 한림출판사, 1971.
짐 하우스만/정일화 共著,『한국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한국문원, 1995.

프란체스카 여사, 『6·25와 이승만 대통령』 (1), 중앙일보사, 1984.

Acheson, Dean G.,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 W. W. Norton, 1969.

Bradley, Omar N., *A General's Life,* New York, 1983.

Clark, Mark W., *From to the Danube the Yalu,* New York : Harper and Row, 1974.

Collins, J. Lawton, *War in Peacetime :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 Boston : Houghton Mifflin, 1969.

Kennan, George F. *Memoirs : 1925-1950,* New York : Panthon Books, 1967.

Ridgway, Matthew B., *The Korean War,* Garden City, N. Y. : Doubleday and Company, 1967.

Truman, Harry S., *Memoirs* :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Wedemeyer, Albert C., *Wedemeyer Report*, New York : Henry Holt, 1958.

8) 國內·外 新聞, 1945~1950년

『매일신보』, 『동아일보』, 『자유신문』, 『서울신문』, 『중앙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경향신문』, 『독립신보』, 『국제신문』, 『수산경제신문』, 『한성일보』, 『연합신문』, 『부산일보』, 『국도신문』, 『동북조선인민보』, 『인민일보』, 『극동통신』, 『로동신문』, 『프라우다』, 『朝日新聞』, 『New York Times』.

2. 2次 資料 및 單行本

1) 國內資料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90.

金基兆, 『38線 分割의 歷史』, 동산출판사, 1994.

金南植, 『南勞黨硏究』 1, 돌베개, 1984.

金南植,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제12권, 돌베개, 1986.

金奉鉉·金民株,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文友社, 1963.

김국태 역, 『해방3년과 미국』, 돌베게, 1984.

김동화, 『연변청년운동사』, 연변인민출판사, 1988.

김철범, 『한국전쟁과 냉전』, 평민사, 1991.

로버트 T. 올리버, 朴日泳 譯, 『이승만 비록』, 한국문화출판사, 1982.

文國柱,『朝鮮社會主義運動史事典』, 東京, 評論社.
박찬표,『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출판부, 1997.
蘇鎭轍,『朝鮮戰爭の起源-國際共産主義者の陰謀』, 三一書房, 1999.
송건호,『분단과 민족』, 지식산업사, 1986.
申相俊,『濟州四三事件』 上・下卷, 韓國福祉行政硏究所, 2000～2003.
安龍鉉,『韓國戰爭秘史』 제1권, 경인문화사, 1992.
유문화 편,『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 민주조선사, 1949.
유영익 편,『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세대출판부, 1998.
이기하 외,『한국의 정당』, 한국일보사, 1987.
이동원・조성남,『미군정기의 사회이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이태,『여수병란』 상・하, 청산, 1994.
李昊宰,『韓國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法文社, 1988.
張昌國,『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戰爭記念事業會,『韓國戰爭史』 1-6, 1991～1993.
濟州道,『濟州道誌』, 1982.
_____,『濟州道誌』, 1993.
조선일보사 편,『한국 現代史 秘資料 1백25건』, 월간조선, 1996.
존 킹 페어뱅크(중국사연구회역),『신중국사』, 까치, 1994.
최영호,『재일 한국인과 조국광복』, 글모인, 1995.
한국홍보협회,『한국동란』, 1973.
韓鎔源,『創軍』, 박영사, 1984.
한재덕,『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한국정치외교선학회 편,『제2차 세계대전 후 열강의 점령정책과 분단국의 독립・통일』, 건국대출판부, 1999.

2) 北韓 關聯 資料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편),『북한관계자료집』 제1집, 1969.
고려서림,『북한해방직후극비자료』 3, 고려서림, 1980.
공산권문제연구소,『북한총람 1945-1968』, 196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1987.
국토통일원(역),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 1945-1980』.
국토통일원, 『북괴의 권력구조와 군당 숙청관계 연구』, 1977.
김운석, 『북한괴집전술문헌집』, 한국아세아반공연맹, 1957.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83.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 『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제1권, 1990.
박갑동, 『한국정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북한총람간행위원회, 『북한총람』, 공산권문제연구소, 1968.
서대숙, 『김일성』, 청계연구소, 1989.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이정희, 『북한요론』, 문현사, 1987.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한국발전연구원, 1991.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저,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 1992
_____,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중앙일보사, 1993.
홍종혁,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민출판사, 1974.

3) 英文 資料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Beloff, Max,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 1944～1951,* Oxford Univ. Press, 1956.

Churchill, Winston S., "The Sinews of Peace," March 5, 1946, *Vital Speeches of the Day*, vol. 12, 1946.

Etzold, Thomas H. and John Lewis Gaddis, eds., *Containment ;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Y., Columbia Univ. Press, 1978.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Gaddis, John Lewis, *Russia,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 An Interpretive History*, 2nd ed., New York : McGraw-Hill, 1990.

Hewlett, Richard G & Francis Duncan, *A History of US Atomic Energy Commission*, vol. 2,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69.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New York : Random House, 1987.

Matloff, Maurice, ed., *American Military History,* Washington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McCune, Shannon, *Korea: Land of Broken Calm,* Princeton : Nostrand, 1966.

Nathan, James A. and James K. Olive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World Order*, 3rd e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85.

Paterson, Thomas G. Jr., Garry Clifford, and Kenneth J. Hagan, *American Foreign Policy : A History*, 3rd ed. , Lexington, MA : D. C. Heath, 1988.

Raischauer, Edwin O., *Wanted : An Asian Policy,* New York : Alfred A. Knopf Co., 1955.

Ree, Eric Van,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N. Y. : Berg, 1989.

Sandusky, M. C.,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A, 1983.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Stueck, William Whitney Jr., *The Wedemeyer Mission :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Athens :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4.

Gregg-Herken, *The Winning Weapon : The Atomic Bomb in the Cold War*, *1945-1950,* New York : Alfred A. Knopf, 1980.

War Department Intelligence Division, *Intelligence Review*, 1946.

윌리엄 스툭 지음/김형인 외 옮김,『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2001.

4) 中國資料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국방군사연구소 譯,『중공군의 한국전쟁』, 1994.

廖蓋隆, 정석태 譯,『중국공산당사』, 녹두, 1993.

리희일・서명훈 주편,『조선의용군 3지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王生榮主編,『中國地緣戰略論』, 北京 : 國防大出版社, 2001.

姚旭,『抗美援助的英明決』, 한양대 중소연구소편,『中蘇研究』 제8권 4호, 1984.

于星,『非戰之罪!』 1948. 12. 26,『동란의 중국』, 삼일서원, 1949.

파이팅, 채한국 역,『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5) 日本 資料

科學院歷史硏究所,『朝鮮人民の正義の祖國解放戰爭史』(1), 1961.
藤原一郎,『日本經營の今後の對策』, 東京, 1955
森田芳夫,『朝鮮終戰の記錄』, 巖南堂書店, 1964.
神谷不二(編),『朝鮮問題戰後資料』 제1권(1945-1953),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96.
陸戰史硏究普及會,『朝鮮戰爭』 第1-10卷, 原書房, 1966.
李景珉,『朝鮮現代史の岐路-八.一五から何處へ』, 平凡社, 1996.
佐佐木春隆,『朝鮮戰爭 韓國編』(上中下), 原書房, 1976.
朱榮福,『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찾아보기

ㄱ

가곡동고지 460
가산(加山) 477
가평 602, 666, 669
각 정당 행동통일위원회 33, 47
간도(間島) 228
간리 567
간성 259, 260
감악산 468
감제고지 509
감찰총감(監察總監) 417
강·표 월북사건 484, 505, 506, 510, 512
강건(姜健) 191, 239, 245, 246, 257, 268, 551, 559, 569
강건종합군관학교 239
강계(江界) 161, 230, 232, 246
강관용 378
강규찬 443
강기천(姜起千) 335
강동정치학원 237, 491
강동효(姜東孝) 431
강릉 347, 652, 670, 673, 674, 680
강문봉(姜文奉) 316, 327, 412, 642, 683, 689
강영훈(姜英勳) 328, 350, 508
강인수(姜仁秀) 429
강진(姜進) 418
강철 237
강태무 505
강태민(姜泰敏) 333, 677
강필원(姜珌遠) 463
강화도조약 3
개성(開城) 19, 25, 162, 186, 360, 499, 601, 642, 650, 658, 679
개성전투 499
개성지구 500
개천(价川) 161, 232, 236
개천훈련소 247
갱생원 447
거창 470
거창경찰서 471
건국기 388, 389
건국동맹 46, 47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 22, 47, 69, 70, 71, 151, 316, 321, 424
건군(建軍) 313
건군이념 368
게네랄노프 152
게릴라 57, 462, 466, 480, 498
겸이포 162
경비대 481, 556

경비대사령부 442
경비대총사령부 412, 420, 436, 439
경비부직제령 381
경비사관학교(警備士官學校) 314, 324, 326
경위대 246, 256
경제·문화협정 183
경제공황 131
경제문화협력협정 182
경제부흥발전계획 540
경향신문 45
경흥교(慶興橋) 154
계명산 508
계엄령 458
고강(高崗) 184, 196, 198, 203
고경영 334
고광도(高光道) 331
고근홍(高根弘) 508, 636, 670
고급중학 554
고길훈(高吉勳) 335, 392
고랑포 602, 614, 661
고령 478
고리키(Goriky) 143
고무산 157
고백규 516
고야동 613
고정훈(高貞勳) 332, 459
고종(高宗) 3
고진희 443
고창 466
곡성 458, 468
골로우코(Golouko) 533
골호즈(Kolkhoz) 133
공국진(孔國鎭) 636
공군본부직제령 363, 631, 633
공군사관학교(空軍士官學校) 336, 337
공동콤뮤니케 546
공병연대 273, 568
공산기지화 299
공산분자 482
공산주의 482
공산주의자 481
공주 417
과도기의 군사안전에 관한 잠정협정 349
곽종진(郭鍾振) 476
관대리 512
관동군 155
관리위원회 424
관민합동수습대책회의 432
관음사 442
광복군 4, 11, 200, 413
광복군 정진대원(挺進隊員) 11
광양(光陽) 458, 460, 468
광양경찰서 420
광원리 674
광주 420, 451, 460, 652
광주경찰청 459
광주병원 422
광주학생운동 4
괘관산 472
교원노조 457
교육각서(敎育覺書) 제1호 377, 682
교육각서(敎育覺書) 제2호 377, 682
9월 공세설 510
9월 총파업 428
구레비치 172

구례 458, 466, 468
구례경찰서 467
구만리 515
구봉산 464
구억리(九億里) 439
구엄 433
구좌 440
종달리 432
구주(九州) 10
구화리 601, 602, 613
국가방위위원회(GKO) 141
국가보안법 486
국가안전성(KGB) 539
국가안전위원회(GPU) 144
국공내전(國共內戰) 277, 539
국군 방어계획 643, 649, 650, 675
국군맹서(國軍盟誓) 368
국군방어계획 641, 642, 645, 648
국군조직법 361, 362, 364, 365, 370, 371, 372, 379, 385, 386, 631, 632
국군준비대 418
국군참모총장 92, 361, 366, 367, 371, 631, 632, 638
국군토벌대 491
국내경비부 338, 339
국내파 238
국망봉 512
국무－육군－해군부 3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11, 26
국무·육군·해군장관 14
국민당 47, 51, 184, 193, 194, 195, 196, 231
국민당군 136
국민회 57, 59, 60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 314, 326, 344, 349, 409
국방부 338, 339, 361, 363, 365, 369, 379
국방부 긴급대책회의 458
국방부직제령 361, 363, 367, 370, 631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338, 339, 409
국방자원관리위원회 365, 631, 639
국사봉(國師峰) 506, 508, 612, 657
국제공산주의자 546
국제연맹 583
국토완정 572
국회 수습대책회의 483
국회 466, 483
군경충돌사건 457
군법회의 418, 423
군비감축 136
군사 10원칙 567
군사경력자 330, 411
군사대표자 회의 533
군사동원체제 558
군사부(軍事部) 409
군사비밀협정 541
군사사절단 181, 534
군사소비에트 141, 142
군사아카데미 148
군사영어학교 314, 317,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46, 635
군사작전지도 569
군사장비 559
군사지원 533
군사참의원 631, 639
군사학교 549

군사혁명위원회 535
군산 347, 460, 601, 602
군수산업 559
군수산업기지 559
군인복무령 368
군정단 427
군정법령 324, 338, 357, 409
군정부대장 428
군정재판 423
군정중대 427
군정청 31
군통수권 607
권준(權畯) 333, 638
권혁주 420
귀속재산 65
귀속재산처리법 65
그라꼬프 228
그라포프 172
그로모프 152, 166
그로미코(Gromiko) 536
그로즈니 137
그루쉐비 152, 153
그리스(Greese) 131, 539
그린(Green) 326
극동군사령관 말리노프스키(Malinovsky) 533
극동군사령부 107, 111, 427, 583
극동위원회 583
근로인민당 41, 571
금교 19
금문도(金門島) 197
금오리 665, 666
금옥치리(錦玉峙里) 492
금천 162, 502, 601
기갑사단 533, 534
기계화부대 534, 541, 551
기금헌납운동 556
기동보병연대 542
기동보안대대 541
기르코 172
기마경찰 430
기사문리 516, 670
기석복(奇石福) 235, 238
기술훈련소 288
길림성 535
김강 239
김경선 383
김경호 458
김계원(金桂元) 317, 327, 328
김관식 505
김관오(金冠五) 332, 395, 638
김광옥(金光玉) 334
김광협(金光俠) 205, 257, 275, 564
김교식(金敎植) 335
김구(金九) 32, 35, 37, 40, 46, 48, 49, 50, 51, 52, 58, 61, 63, 316, 322, 323, 425
김국주(金國柱) 332, 638
김국태 577
김귀영 456
김규섭(金圭燮) 334
김규식(金奎植) 41, 48, 50, 52, 58, 576
김달삼(金達三) 492, 670
김달현 572
김대식(金大植) 335
김덕영(金德永) 69
김동수(金東洙) 235, 332

김동영 351, 378
김동원(金東元) 55
김동준 321
김동하(金東河) 335, 392
김동훈(金東勳) 414
김두만(金斗萬) 336
김두봉(金枓奉) 52, 178, 201, 227, 228, 572
김두찬(金斗燦) 335, 383
김두한(金斗漢) 319
김두훈(金斗壎) 429
김래수 455
김만영(金萬永) 231
김무현 492
김묵(金默) 332
김문섭(金文燮) 231
김민성 450
김백일(金白一) 324, 327, 347, 348, 459, 475, 508, 636, 683, 686
김병계 692
김병택 336
김병휘(金炳徽) 317
김붕준 50
김사억(金思億) 319
김삼룡(金三龍) 558, 578
김상겸(金相鎌) 348, 443
김상길 334
김상호 492
김석범(金錫範) 335, 357, 420
김석원(金錫源) 316, 348, 366, 505, 635, 638, 658
김성룡(金成龍) 336
김성배 336
김성삼(金省三) 335, 357, 383
김성수(金性洙) 47
김성은(金聖恩) 335, 391, 392, 393, 636
김세용(金世鎔) 481
김신(金信) 321, 336, 360, 386
김연상(金然翔) 335
김열 612
김영관(金榮寬) 334
김영식 484
김영철(金永哲) 321, 335, 353, 357, 383
김영환(金英煥) 317, 322, 336, 347, 358, 359, 385
김완용(金完龍) 317
김용국(金龍國) 335
김용무 31
김용배(金容培) 327, 328, 420, 636, 673
김용범(金容範) 227
김용순 71
김용주(金龍周) 330, 449, 508
김용호 383
김웅(金雄) 240, 257, 564
김원봉 323
김윤근 334
김윤호 333
김은배(金恩培) 422
김응순(金應珣) 69
김응조(金應祚) 332, 638
김이노켄치 539
김익렬(金益烈) 317, 436, 662
김인배 423
김인중 419
김일(金一) 184, 185, 204, 206, 228, 231, 245, 246, 268, 539, 564, 569

김일광(金一光) 418
김일병(金一秉) 335, 383
김일성(金日成) 23, 24, 32, 52, 73, 74, 75, 76, 89, 170, 174, 177, 179, 180, 182, 185, 186, 189, 190, 191, 196, 197, 204, 205, 206, 207, 208, 225, 226, 227, 231, 235, 239, 244, 246, 254, 264, 267, 506, 535, 539, 556, 572
김일성대학 234
김일성－스탈린 회담 295
김일성정치대학 239
김일영 454
김재강 477
김재창 578
김점곤(金點坤) 482, 636
김정계(金廷桂) 539
김정렬(金貞烈) 321, 336, 358, 359, 360, 367, 386, 634
김정주(金廷柱) 353, 395, 435
김종갑(金鍾甲) 317, 347, 351, 475
김종기 383
김종석(金鍾碩) 319, 348, 350, 416, 475
김종수(金鍾洙) 331
김종오(金鍾五) 327, 328, 375, 512, 666, 683, 685
김종원(金宗元) 330, 464, 677
김종필 333, 692
김종환 331
김좌진(金佐鎭) 4
김준동 239
김준원(金俊元) 316
김중보(金重寶) 336
김증동 235
김지회(金智會) 451
김진위(金振暐) 331, 475, 477
김찬 612
김창규(金昌圭) 316, 321
김창룡 512
김창만(金昌滿) 228
김창봉(金昌鳳) 231, 259, 420
김책(金策) 235, 239, 240, 245, 264, 559, 607
김천 477
김천파견대 477
김천해(金天海) 586
김철구(金哲九) 419, 420
김철순 471
김충남(金忠男) 335
김태홍 578
김택수(金澤銖) 433
김판규 332
김포 356
김포반도 602
김포해안경비대 420
김풍익 332
김학림(金鶴林) 330
김학원(金學洹) 332
김형남(金亨南) 421
김형일(金炯一) 317, 414, 505
김홍일(金弘壹) 332, 367, 369, 635, 638
김홍준 347
김화 164, 613
김희덕(金熙德) 331
김희준(金熙濬) 421, 460
까치산 509, 657
꼬뉴호프 172

꾸츠모프 172
꾸트라브체프 172

나가사키(長岐) 11
나남(羅南) 157, 158, 159, 160, 181, 232, 236, 567, 613
나남훈련소 247
나진(羅津) 155, 156, 157, 562
나진항 538
나학선(羅學善) 420
낙동강 478
남교정 508
남대천 516
남로당 여수지구당 456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424, 430
남봉산 460
남북노동당연합중앙위원회 486
남북협상 40, 52, 579
남북협상파 57, 59
남상휘 383
남송악 442
남양 563
남원 433, 458, 460, 468
남원면 443, 448
남원사령부 467
남원초등학교 462
남일(南日) 612
남일주 419
남전출장소 431
남제주군 448
남조선 552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 55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328
남조선노동당 37, 409, 410, 430, 486, 570, 571
남조선민주여성동맹 571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433, 443
남조선인민유격대 487
남조선청우당 571
남지구전투사령부(南地區戰鬪司令部) 466
남진운수 431
남철(南鐵) 322, 330, 335
남초등학교 458
남충렬 420
남침계획(선제타격작전계획) 596, 597, 598, 599, 601, 617, 619, 621, 649
남침위기설 499
남침전략 550
남침전쟁 488
남침회의 564
남포 610
남하 515
내무성 262, 297, 570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지 12
네덜란드 133
노간 172
노고단 470
노동당중앙위원회 570
노사카 산조(野坂參三) 585
노재현(蘆載鉉) 331, 516
노형 442
녹달산 657

농민조합연맹 575
농지개혁 65, 67, 415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499, 584
니콜라이예프 165

ㄷ

다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ait) 130
단독정부안 176
단동(丹東) 228
단천(端川) 232
달궁 468
담양 466
닷지 라인(Dodge Line) 68
당오름 442
당원배가운동(黨員倍加運動) 424, 432
대공경계 648
대구 348, 475, 601, 602, 652
대구연대 420
대구 10·1 폭동 428, 475, 480
대남 공작 486
대남선제공격 544
대남유격사업지도부(對南遊擊事業指導部) 488
대남정치공작 489
대동청년단 54, 433
대련(大連) 13, 14, 189, 194
대만(臺灣) 194, 196, 199
대목리 613
대본영(大本營) 15, 27, 155
대북(大北) 195
대비정규전 496
대외무역성 536
대일공작반 11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 17, 158
대일전선통일동맹 50
대전 347, 416, 417, 602, 647, 652, 677
대정경찰서 435
대정면(大靜面) 433, 435, 439
대청원(大靑員) 435
대한국군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 314, 315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58, 59, 60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 4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54, 57, 425, 433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 322, 324
대한민국 59, 77, 476, 547
대한민국군사후원회(大韓民國軍事後援會) 314, 315, 319, 320
대한민국의정원(大韓民國議政院) 4
대한민국임시정부 4, 5, 10, 11, 28
대한제국(大韓帝國) 3
대한청년단 59, 60, 397, 648
덕유산 468, 471, 678
데레프양코프(Derevyankov) 584
도나우 147
도문(圖們) 160, 563
도서방위전략 107, 109
도용호(都容浩) 70
도쿠다 큐이치(德田球一) 587
도학리(島鶴里) 234
독립군(獨立軍) 4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 647, 652,678
독립신보 4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48

독립촉성청년동맹 432
독소전 146
독일 130, 131
돈(Don) 143
돌격사단 533
돌고개 613
동경만(東京灣) 15
동독 130
동두천 162, 601
동명(東明) 477
동북국(東北局) 202
동북국주조선판사처(東北局駐朝鮮辦事處) 202
동북민주연군 194
동북의용군 182
동성회(同成會) 58
동아일보 45
동인회(同仁會) 58
동해여단 492
두락산 508, 657
두만강 17
두봅스키 153
둔철산 468
둘킨 172
드네프르 147
등대고지 505
딘 러스크(Dean Rusk) 12, 13
딘(William F. Dean) 439

ㄹ

라구치 169
라사노프 168
라이트(W. H. Sterling Wright) 125
러시아 외교사 550
러시아혁명기념일 443
러일전쟁(露日戰爭) 3
러치(Archer L. Learch) 339
레닌그라드 143, 166, 167
레미스코 155
레베데프(Nikolai. G. Lebedev) 152, 153, 164, 165, 166, 168, 169, 170, 171, 172, 173
레베제프(Nikolai. G. Lebedev) 226
로동호 560
로마넨코(Andrei Alekseevich Romanenko) 20, 21, 72, 152, 164, 165, 166, 169, 170, 172, 227
로버츠(William L. Roberts) 125, 458
로스토프 137
로조프스키 152
로진스키 172
루마니아(Rumania) 130, 132, 143, 177
루소프 152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6, 7, 8, 9
룩셈부르크 133
리드 458
리스(L. W. Reese) 326
리오조약 133

ㅁ

마닐라 14
마량도(Malingdao) 535
마렌코프(G. M Malenkov) 533
마르모르쉬체인 153

마르크스－레닌주의 149, 585
마산 347, 463, 602
마상철(馬相哲) 588
마샬 플랜 101, 132, 133, 134
마샬(George Marshall) 38
마샬(John T. Marshall) 349, 350
마프모르쉬체인 168
만가대 512
만경대 238
만세교 666
만주 17, 18, 194, 205
만주군 출신 413
만주령 154
말고개 505
말리크(Malik) 583
맥고원(Gordon McGowan) 355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14, 26, 27, 28, 31, 94, 108, 109, 111, 121, 342
맥케이브(George E. McCabe) 355
맨스필드 439
메논(Crishna Menon) 42
메레츠코프(Meretskov, M.A.) 152, 160, 164, 226
메르쿠로프(Merkulov) 176
메시코프 181
메클레르 153
멘쉬코프 539
모란봉극장 569
모리배 426
모병위원회 555
모스칼렌코 172
모스크바 3상회의 33, 74, 75, 175, 428
모스크바 전략회의 534
모스크바회담 182, 186, 190, 539
모스크바 15, 33, 182, 184, 187, 533, 539
모슬포 436, 440, 443, 447
모진교 505
모택동(毛澤東) 184, 185, 189, 190, 191, 193, 195, 197, 203, 205, 206, 207, 208, 228, 545
모터싸이클 대대 542
목포 419, 455, 601, 602
몰로토프(Molotov) 152, 153, 535, 539
몽골 177, 198
무력부(武力部) 141, 152
무력인민위원회 141, 142
무력통일 182, 183, 184, 188, 486, 487, 540, 548, 552
무력후방위원회(武力後方委員會) 561
무르진 172
무장대 490
무장유격투쟁 462, 486, 487, 574
무정(武亭) 201, 202, 228, 239, 240, 245, 268, 569
무주 468
무쵸(Muccio) 128, 388, 482, 499
묵호해안경비대 420
문등봉 443
문라이즈(MOONRISE) 106
문산(汶山) 500, 601, 602, 446, 648, 658, 661, 677, 679, 680
문상길 436, 440
문석수 335
문성휘 456
문용채 677
문일(文日) 541

문중섭 332, 463
문형태(文亨泰) 331
문홍구 333
문화인 108인 성명 40
문화전(文化戰) 554
미 국무성 482
미 군정 49, 61
미 군정법령 제86호 339
미육군성 11
미 24군단 사령부 427
미 제24군단 430
미 제59군정중대(軍政中隊) 426
미 제6사단 430, 432
미 합동참모본부 24
미·소공동위원회 34, 35, 36, 37, 38, 39, 40, 49, 50, 51, 53, 150, 166, 170, 175, 176, 238, 240, 253, 339, 342, 344, 428
미곡수집정책 426
미국전략정보처(OSS) 11
미군 방첩대 481
미군정 409, 420, 430
미군정법령 제42호 346
미군정보고서 451
미군정재판 414
미군정청 군사국(軍事局) 480
미림비행장 238
미주리(Missouri)호 15
미평 464
미하일로프 541
민기식(閔機植) 317, 327, 328, 347, 378
민병권(閔丙權) 327, 669
민병증(閔丙曾) 320, 321, 353
민보단 440, 449
민보성 610
민스크(Minsk) 143
민애청(民愛靑) 456, 457
민영락(閔泳洛) 336
민정관리총국 21
민정부(民政府) 165
민족보위국 264
민족보위상 238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564, 565
민족보위성 177, 182, 262, 297, 555, 568, 681
민족자주연맹 51
민주개혁 428, 573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 58, 59, 60
민주기지(民主基地) 187, 278, 559
민주기지노선 487, 491
민주독립당 571
민주의원 34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34, 37, 61, 424, 430, 571
민주청년동맹 456, 575
민중봉기 602
민청 425, 430
민청훈련소 278, 554, 587

ㅂ

바가록 166
바라노비치(Baranovich) 143
바로스(Russell O. Barros) 349, 350
바르샤바조약군 143
바빌로프 153
바실레프스키(Vasilebvsky) 533

바실리에프(Vassyliev) 191, 192, 548, 549, 569
바실리예프스키(A. M. Vasilevsky) 17, 150
바이코프 152
바쿠(Baku) 143
박건웅(朴建雄) 41, 50
박경원(朴敬遠) 332
박광혁 477
박기병(朴基丙) 459, 678
박기성(朴基成) 331, 677
박길남 240, 268
박대식(朴大植) 419
박범집(朴範集) 321, 336, 359, 386
박병권(朴炳權) 327, 347
박성철(朴成哲) 240, 279, 588
박승도 334
박승철 239
박승환 318
박승훈(朴勝薰) 316, 332, 453
박시창(朴始昌) 331, 395
박영극 515
박영순(朴英順) 231, 239, 245, 246, 268
박영준(朴英俊) 333
박옥규(朴沃圭) 335, 383
박용국(朴容國) 419, 420
박용식(朴容植) 420
박우섭(朴禹燮) 231
박원석(朴元錫) 332, 336, 358
박일 188
박일우(朴一禹) 239, 245, 261, 569, 570, 607
박임항(朴林恒) 333, 638
박정애(朴正愛) 227
박정인 332
박정희(朴正熙) 200, 330
박진경(朴珍景) 327, 350, 418, 439
박창암(朴蒼岩) 332, 638
박채영 456
박춘석(朴春錫) 452
박태준 332
박헌영(朴憲永) 73, 182, 196, 197, 206, 207, 489, 539, 569, 572, 607
박현식 332
박효삼(朴孝三) 202, 239, 261
박훈일 261
박흥식 63
반란사건 455
반민법 63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62, 63, 64
반선리 472
반야봉 470
반제노선 573
반탁시위 74
반탁위원회 38
발가록 152
발라사노프 152, 173, 539
발사노프 164
발칸(Balkans) 90
방공포연대 273
방대산 492
방호산(方虎山) 588, 566
방희(方熙) 332, 638
배덕진 502
배상수 476
배천 500, 502, 661
배합전술(配合戰術) 496, 596

백낙칠(白樂七) 231
백남권(白南權) 317, 515
백남운(白南雲) 교육상 539
백달현(白達鉉) 479
백두산호 384, 385
백석주(白石柱) 333
백선엽(白善燁) 324, 327, 328, 351, 375, 458, 636, 658, 661, 662, 684, 685
백운산 460, 462, 464
백인기 467
백인엽(白仁燁) 327, 358, 460, 636, 657, 685
백해 147
백홍석(白洪錫) 316, 332, 343, 638
밴꼬프스키 228
뱀부계획(Bamboo Plan) 325, 344, 345, 347
버마 547
벌교(筏橋) 458, 460
베네룩스 133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 29, 31
베로스(Russel D. Barros) 412
베르나드(Lyle W. Bernard) 342
베르시닌 542
베를린 봉쇄 135
베를린(Berlin) 134, 539
베빈(E. Bevin) 133
베트남 198, 199
벨기에 133
변택주(邊宅周) 353
별양(別良)지서 458
병역법 361, 363
병역임시조치령(兵役臨時措置令) 393
보고타 회의 134
보급품 부정처분 사건 416
보로네즈(Voronezh) 143
보성 458, 460
보안간부훈련대대부 233, 245, 247, 251, 253, 255, 267
보안대 169, 229, 230, 245, 424, 556
보안서 456
보안훈련소 230, 245, 246, 247
보자긴 189
보현산 492, 677
복계 164
복구위원회 424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12
본주(本州) 10
볼디래프 166, 168
볼프 166
봉산(鳳山)지서 456
봉성산 468
봉쇄정책(封鎖政策) 96, 132, 136, 581
봉수동(鳳樹洞) 502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 4
봉천 204
부녀동맹(婦女同盟) 425, 430
부루셀 조약기구 133, 134
부르체프 152
부산 347, 482, 601, 602
부양(阜陽) 11
부포 657
북·소 비밀정상회담 551
북경 인민일보 585
북경 197, 20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04, 134, 136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4
북로당 486, 552

북로당남조선특별정치위원회(北勞黨南朝鮮特別政治委員會) 418
북상면 황점부락 471
북상면 471
북오세티야 137
북위 38도선 11, 12, 14
북제주군 433
북조선 민주당 24
북조선공산당 24, 174, 205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69
북조선인민위원회 75, 76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 25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74, 231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 234, 239, 243
북조선철도보안대 262
북지구전투사령부(北地區戰鬪司令部) 466
북한 유격대 486
북한 해군군관학교 292
북한경비대 498
북한군 전차여단 285
북한군 제1사단 268
북한군 증강계획 534
북한군의 전력증강 301
북한군총사령부 617
북한정권 487, 488, 559
북한주둔군사령관 300
북해도(北海島) 10
불가닌(Nicholai A. Bulganin) 183, 533
불가닌 152, 153, 542
불가리아(Bulgaria) 130
불편부당 414, 480
브가예프 172
브라운(Rothwell H. Brown) 432
브로츨라프(Vrozlav)시 582
브야츠크 606
블라디보스토크 536, 562
븨고르키 172
비류조프 168, 535
비류초프 153
비밀군사협정 533
비봉산 502
비상계엄령 441
비상국민회의 36
비신스키 152
비정규전 496
비진스키 539
빈센트(John C. Vincent) 33
빈철현(賓哲顯) 483
빨치산 237, 545
빨치산파 225, 571
뿔루힌 172
삐라르스키 172

ㅅ

421고지 657
4개국 회담 39
4개국 동맹위원회 583
4부정책조정위원회 119, 120
4F전술 466
사국(四國) 10
사단기동훈련 647
사로프 172
사리원(沙里院) 162, 232, 259, 612
사리원선 20
사병제일주의 370

사브쉰 168
사상검열 481
사직리 512
사할린 15
사회민주당 41, 571
산동지서 467
산방산 442
산천당 442
산청 468
3·1기념투쟁준비위원회 429
3·1독립만세운동 4
3·1사건 425, 428
3·1사건 투쟁위원회 431
3·1절 기념투쟁 428
38경비여단 259, 260, 262, 499, 570
38도선 13, 14, 16, 17, 19, 20, 21, 24, 25, 27, 28, 75, 77, 183, 186, 187, 189, 226, 498
38선경비대 259
3부정책조정위원회(SWNCC) 14, 39, 119, 344
삼가리 457
삼도봉 468
삼양 433
삼지 466
삼척 186, 187, 545, 601
상남지구 505
상무위원회 572
상삼봉(上三峰) 232
상해(上海) 4
상해임시정부 69
상호방위원조법 127
상호방위원조안 188
샛별오름 433
생도대장 폭행사건 414
샤닌 166
샤브신 240, 241
서경리 508
서귀포 443
서귀포경찰서 435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4
서림 673
서북청년단 433, 436
서상웅 320
서안(西安) 11
서울 25, 347, 348, 679
서울유격대 472
서울중앙방송 578
서울지도부 487, 489
서정철(徐廷哲) 331
서종철(徐鍾喆) 330, 677
서종현(徐鍾鉉) 456
서중석(徐重錫) 418
서철(徐哲) 246
서포(西浦) 607
석은태(石銀泰) 321, 352, 353
석주암(石柱岩) 331
선·만 국경경비대 263
선곡리 613
선무공작 440, 448
선무공작대 449
선무심리전 449
선수리 613
선전전 554
선제공격 540, 545
선제남침 550

선제타격작전계획(先制打擊作戰計劃) 596, 597, 649
선천 161
선철군 총선론 40
섬진강 466
섭영진(聶榮臻) 205
성산 433, 440, 443, 447
성산경찰서 435
성성(城成)지서 435
성시백(成始伯) 418
성인회(成仁會) 58
성진(城津) 232
성판악 442
세계평화옹호대회 559
세르겐코프(Sergenkov) 584
세르빈 537
세묘노프 172
세화 433
소·만 국경선 17, 154
소년항공대 288
소련 과학아카데미 140
소련 국방성 583
소련 군사고문관 176, 178, 191, 192, 237, 258, 299, 534, 596
소련 군사사절단 282, 533, 536
소련 극동군사령관 15, 17
소련 내각회의 538
소련 사절단 535
소련 정치국 548
소련군 총참모부 180, 548
소련군정 174, 226
소련민정부(蘇聯民政府) 72
소련파 227, 229, 238, 245
소로킨 153, 168
소병기(蘇炳基) 343
소비에트화 24, 75, 299
소요사건 411
소장파 58
소탕작전 436, 440, 462
소해(掃海) 158
소화전공(昭和電工) 234
속도전 466
손관도 332
손성겸(孫聖兼) 332
손원일(孫元一) 314, 315, 320, 334, 335, 352, 353, 366, 367, 379, 383, 390, 634
손종준 239
솔로비예프 172
송당 442
송대후(宋大厚) 331
송석하(宋錫夏) 460
송성관(宋成寬) 70
송악산 지구 360, 500, 658
송요찬(宋堯讚) 327, 328, 352, 636, 683
송욱 456
송진우(宋鎭禹) 47, 423
송호림(宋虎林) 331, 468, 636, 657
송호성(宋虎聲) 331, 348, 349, 350, 367, 396, 417
쇄국정책(鎖國政策) 3
수도경비사령부 647, 649, 662, 666, 677
수동지구 508
수상보안대 254, 286
수색 658, 662
수석민정관(首席民政官) 428
수술로프 152, 153

수원 439, 569, 601, 602
수타오포즈 154
수풍발전소 231
숙군(肅軍) 368, 416, 440
숙천 제2민청훈련소 588
순천 탈환작전 460
순천 161, 456
순천경찰서 457
순천교 458
순천군청 462
순천지구 455
순천파견대장 451
쉬체멘코 541, 542, 551
쉬킨 152
쉬페르닉(N. Shevernik) 178
쉭크(Lawrence E. Schick) 29, 325, 341, 344
슈티코프(T. F. Shtykov) 72, 77
스꾸바 172
스몰렌스크(Smolensk) 143
스미르노프(Smirnov) 246, 534, 537, 539
스베레주크 240
스웨덴(Sweden) 535, 582
스쿠스키 172
스타브로폴(Stavropol) 143
스타우트(Thurman A. Stout) 427, 430
스탈린(Joseph V. Stalin) 8
스탈린·모택동 회담 189, 190
스탈린 9, 76, 97, 132, 143, 152, 153, 177, 179,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5, 206, 207, 208, 240, 241, 539
스탈린그라드 137
스탈린－해리만 회담 154
스텝(Step) 143
스톡홀름(Stokholm) 582
스티코프(Terentii F. Shtykov) 35, 36, 152, 153, 164, 165, 166, 168, 169, 170, 176, 177, 181, 184, 186, 187, 188, 189, 226, 240, 242, 254, 281, 301, 499, 534, 539
스팀슨(Henry S. Stimson) 11
슬라빈 541
습격기연대 294
승주(昇州) 457
시베리아 143
시변리 259
식량생산확보투쟁 443
식민지 44
신간회운동 50
신관지서 500
신남 515
신동(新洞) 479
신막 19, 162, 164
신망리 613
신민당 51
신북지서 421
신상철(申尙澈) 350, 351
신성모(申性模) 484, 632, 633
신성천(新成川) 232
신안주 575
신월리 451
신응균(申應均) 332, 638
신의주 사단 273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 588
신의주 항공대 288
신의주(新義州) 19, 22, 161, 228, 230
신의주치안유지회 69

신익희(申翼熙) 55
신천 181
신철(申澈) 477
신촌 경계선 442
신탁통치 7, 8, 9, 32, 33, 37, 74, 411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 7
신탁통치이사회 583
신태영(申泰英) 316, 334, 371, 641, 642
신포(新浦) 232
신하균(申河均) 319
신학진 333
신한국위원단(新韓國委員團) 43
신현준(申鉉俊) 335, 367, 390, 391, 392, 393, 634. 636
심양 203
심언봉(沈彦奉) 317, 477
심재부락 512
심태산 235
심흥선(沈興善) 331, 378
싸마호트 536

ㅇ

아가르코프 172
아고(Reamer Argo) 480
아놀드(Archibold V. Arnold) 29, 31, 35
아메리카기구 헌장 133
아베(阿部信行) 29
아오지 540
안길(安吉) 235, 239, 245, 246
안동(安東) 228, 563
안동준(安東濬) 315, 317, 332
안병기 334
안병범(安秉範) 316, 332
안성수 465
안세훈(安世勳) 429, 443
안악 162
안영(安英) 231
안영길(安永吉) 330
안의 470
안재홍(安在鴻) 47, 50, 320, 423, 439, 576
안철 245
안춘생(安椿生) 332, 638
안토노프 152
안호상 55
알레스카 188
알렉산드로프 152
알바니아(Albania) 130
애국미 557
애국채(愛國債) 557
애월 433, 440
애치슨(Dean G. Acheson) 109, 123
야산대 480, 490
얄타 협정 9
얄타 회담 10, 9
얄타(Yalta) 9
얌니고프 172
양구 492, 601, 602
양국장(兩局長)제도 31
양국진(楊國鎭) 327, 351
양근환(梁槿煥) 47
양덕(楊德) 232
양양 164, 181, 492, 613
양양－오대산지구 491
양양 인민유격대훈련소 491
양정지서 502

어대진 160
어성전 673
어승생악 442
엔도(遠藤陸作) 46
엘살바도르 43
여성동맹 456, 457, 575
여수 347, 443, 451, 601, 602
여수반도 460
여수우체국 453
여수지구 계엄사령관 465
여수지구 후방사령관 465
여수 철도경찰서 457
여수탈환작전 462
여수항 455
여순 10·19사건 122, 387, 391, 423, 635
여순(旅順) 13, 189
여순항 537
여운형(呂運亨) 46, 49, 50, 316, 423
여운홍 576
여의도기지(汝矣島基地) 359
여현수 335
연곡 512
연곡천 673
연길 154, 160
연안(延安) 227, 500, 502, 661
연안파 201, 238
연정(延禎) 420
연천 601
연포 181
연합국방 368, 369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14
연합군 423
연합참모회의 632, 638
연해주 151
연해주군관구 167
염불리 508
영국－소련 외상(外相)회의 130
영국 56, 131, 133
영국군 총사령부 5
영등포경비대 419
영암 군경 충돌사건 420
영암경찰서 421
영암교회 422
영암군수 422
영월 505
영정포 661
예관수(芮琯壽) 330
5·30선거 61
5도행정국(5道行政局) 24, 72, 74, 174
오광선(吳光鮮) 320, 332, 395, 638
오남리 508
오대산 487, 488, 492, 636, 673
오대진(吳大進) 433
오덕준(吳德俊) 327, 455, 480
오동기(吳東起) 417
오라 442
오르그(조직지도원) 452, 455
오백룡(吳白龍) 239, 245, 261, 512
오범식 335
오스트레일리아 43, 56
오스트리아 143
오영주(吳永柱) 419, 420
오원선 335
오윤경 334
오일균(吳一均) 327, 414, 436

오점석(吳占石) 336
오정방(吳正邦) 323
오진우 270
오키나와(沖繩) 12, 17, 25
오프태클 107
5·30총선거 577
온양 347, 397, 666
옹진 186, 187, 188, 545, 642
옹진군 508
옹진반도 360, 500, 506, 545, 602, 649, 650, 652, 654, 657
옹진지구전투사령부 508
와룡대 612
왕익권(王益權) 314, 315, 317
왕청 160
왕홍경(王弘慶) 356
왜관 477
외도 433
요동반도(遼東半島) 13
요수석(饒漱石) 198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587
요코하마(橫濱) 27
우병규(禹炳圭) 330
우익 8원칙 50
우익정당 425
우크라이나 138
운봉면 피바위고개 472
울리아노프 172
웅기(雄基) 154, 155, 156, 157
웅악 442
워싱턴 26
워커(Walton H. Walker) 111
원산(元山) 160, 181, 232, 537, 613
원산조선소(元山造船所) 560
원산항 562
원세훈(元世勳) 41, 50, 60, 576
원용덕(元容德) 200, 324, 325, 327, 348, 349, 350, 367, 459, 636
원자폭탄 10, 90
원주 601, 666, 669
원초리 508
원호사업(援護事業) 557
월례중앙위원회의 586
월배(月背) 478
월평 442
웨드마이어 사절단(Wedemeyer Mission) 115, 118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26, 118
웨브(Webb) 584
위수사령부(衛戍司令部) 151, 163, 171, 172
위싸리오노위츠 179
위장귀순사건 439
위장평화공세 571, 581
위재설(魏在卨) 414
위천지서 471
윌로우비(Charles A. Willooughby) 689
윌슨(Woodrow T. Wilson) 4
유격대 488
유격병단 489
유격전 490, 492, 508
유격전구(遊擊戰區) 490
유격전술 567
유고 경제봉쇄 134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130, 132, 177
유나이티드 프레스(United Press 499

유동열(柳東悅) 314, 315, 322, 341, 342, 358, 361, 417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134
유목윤 456
유병봉 334
유병현(柳炳賢) 332, 638
유봉순 471
유성 417
유성철(兪成哲) 595, 606
유소기(劉少奇) 198
유승렬(劉承烈) 316, 332, 375, 395, 638, 677, 685
유신 245, 268
유양수(柳陽洙) 332, 638
유엔 39, 41, 43, 56
유엔고지 5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83
유엔 총회 40, 76
유엔한국위원단 41, 51, 56, 203, 573, 57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41, 42, 54
유영준 572
유용구(劉龍九) 231
유원식(柳原植) 333
유재흥(劉載興) 327, 348, 351, 375, 448, 515, 636, 665, 685
유학성 333
유해거 383
유해준(兪海濬) 325, 413, 439
유흥수(劉興守) 327, 413, 678
6·10만세운동 4
육군 정보국원 482
육군본부 365, 367, 370, 371, 445, 508, 509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 645, 64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 69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 69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9호 662
육군사관예비학교(陸軍士官豫備學校) 323
육군사관학교 328
육군수색학교 375, 376
육군예비사관학교(陸軍豫備士官學校) 322
육군조병창 559
육군종합학교 333
육군총사령부 370, 373, 453, 458, 459
육군항공부대 388
육군항공사관학교(陸軍航空士官學校) 336, 337
육군항공사령부 385, 386, 387, 633
육남오 237
육류성출대금(肉類誠出代金) 576
육전대 291
윤공흠(尹公欽) 228, 260
윤기옥(尹起玉) 420
윤성민 333
윤응열(尹應烈) 336
윤치영 55, 577
윤치창(尹致昌) 320, 321
윤태일(尹泰日) 332
윤홍정 333
은파산 189, 508, 654, 657
을사조약 3
음양동 515
응원경찰대 430
의귀리 448
의병(義兵) 4
의용군 544
의장단회의 572

의정부 510, 569, 601, 648, 650, 652, 662, 665, 677, 680
이가르코프 172
이갑(李甲) 476
이갑록 336
이강수 420
이관식(李寬植) 423
이광수 63
이광윤 414
이권무(李權武) 588
이그나체프(Alexander Mateevich Ignatiev) 152, 164, 166, 168, 169, 170
이극로 572
이근석(李根晳) 321, 336, 337, 358, 359, 386
이긍하 502
이기건(李奇建) 332
이대영(李大永) 316, 333
이동근(李東根) 353
이동백(李東伯) 478
이동용(李東用) 335, 468
이든(Anthony Eden) 6
이란 130
이르쿠츠크 비행기술학교 544
이림 245
이맹기(李孟基) 334
이문교 419
이바노프 153, 168
이범석(李範奭) 55, 57, 365, 366, 367, 369, 373, 393, 458, 633, 637, 638
이병문(李丙文) 335
이병주(李丙胄) 351, 413, 481
이병형 332
이봉출(李鳳出) 335
이상근(李尙根) 330, 677
이상렬(李相烈) 356, 357, 420
이상조(李相朝) 595
이상진(李尙振) 413, 416, 481
이상호 334
이선근(李瑄根) 332
이성가(李成佳) 325, 327, 375, 413, 459, 636, 670, 683, 684, 685
이성호(李成浩) 335
이세호(李世鎬) 331
이수봉 335
이승만(李承晩) 9, 32, 35, 37, 40, 48, 50, 51, 53, 55, 57, 58, 60, 61, 62, 64, 127, 181, 196, 199, 206, 367, 369, 388, 390, 463, 546, 632, 633
이승엽(李承燁) 489
이시영(李始榮) 55
이영 419, 572
이영근 692
이영무(李英茂) 321, 358, 359
이영삼 479
이영섭(李英燮) 420
이영순(李永純) 451, 477
이용(李龍) 332
이용기 456
이용문(李龍文) 332, 351, 638
이용수 484
이용운(李龍雲) 335
이우성 460
이원둔(李源屯) 420
이유필(李裕弼) 22, 69
이윤락 439

이윤영 57
이응준(李應俊) 314, 315, 316, 325, 327, 328, 344, 348, 350, 366, 367, 371, 375, 413, 678, 683, 685
이익성(李益成) 261, 588
이인규 578
이재복 484
이재전 333
이정숙 443
이정윤(李廷允) 418
이정택(李正澤) 476
이조승(李祚承) 419
이종간 383
이종인 240
이종찬 332, 375, 638, 683, 685
이주연(李周淵) 227, 553
이주일(李周一) 332, 638
이주하(李舟河) 416, 558, 578
이준식(李俊植) 332, 638, 683
이중업(李重業) 575
이창정(李昌禎) 330
이청천(李靑天) 319, 483
이춘경 515
이치업(李致業) 316, 414
이탈리아 131, 132, 133
이한림(李翰林) 200, 324, 327, 378, 421, 422
이항식(李恒植) 319
이혁기(李赫基) 314, 315, 318, 418
이현상(李鉉相) 462, 475
이형근(李亨根) 327, 329, 347, 349, 350, 351, 361, 367, 375, 378, 677, 683, 685
이형석(李炯錫) 332, 638
이형택(李瀅澤) 69, 71
이호(李澔) 332
이호제(李昊濟) 492, 670
이희권(李喜權) 317, 453
이희성 333
이희정(李熙晶) 357, 384
이희준(李熙俊) 228
인공기 456
인구리 516, 673
인도 43, 547, 582
인도지나 546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34, 424, 573
인민군 454, 490, 556, 557
인민당 51
인민봉기 544
인민봉기론(人民蜂起論) 595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22, 23, 72, 75, 169, 171, 173, 174, 226, 254, 373, 424, 430, 433, 449, 488, 545, 555
인민의용군 457
인민정치위원회 22
인민집단군 171, 176, 238, 242, 253, 254, 255, 257, 258, 269, 289
인민해방군(중공군) 433, 454, 535
인민헌법 76
인민혁명군사건 416, 418
인제 492, 512, 613
인천 25, 650, 658
인천파견경비대 420
일도리(一徒里) 429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 15, 24, 150, 151
일본 육사 413, 416

일본공산당 585
일본군 411, 607
일본해군항공기지 451
일월산(日月山) 492
일장기(日章旗) 29
임부택(林富澤) 330, 666
임선하(林善河) 317, 351, 378
임시인민위원회 559
임충식(任忠植) 330, 677
임표(林彪) 193, 195
입법의원 51

ㅈ

자생적 군사단체 313, 409
자원입대제 554
자위대(自衛隊) 225, 424
자유신문 45
자주포대대 542
자카로프(Zakalov) 534
작전한계선 13, 14
장개석(蔣介石) 6, 41, 104, 118, 193, 206
장건상 60, 576
장경근(張璟根) 633
장경석(張庚石) 322, 332
장경순(張坰淳) 638
장고봉(張鼓峰) 17
장군봉(將軍峰) 463
장권 50
장대동(場垈洞) 502
장덕창(張德昌) 321, 336, 358, 359, 360, 386
장도영(張都暎) 327, 328, 351, 686
장석륜(張錫倫) 327, 412
장성환(張盛煥) 336, 360
장수 468
장시우(張時雨) 226, 227, 539
장안산 468
장연 162
장은산 378, 516
장종식(張鍾植) 227, 240
장지량(張志良) 332, 336, 358
장지수(張志洙) 334
장창국(張昌國) 327, 347, 378, 351, 683
장철부(張哲夫) 332
장촌리 613
장교그룹 455
장춘 철도·여순, 대련에 관한 협정 546
장택상 55
장흥(張興) 638
재건부락 448
재미한족연합회 50
적목리 666
적성 661
적위대(赤衛隊) 162, 225, 227
적화정책 581
전격전 551
전국노동조합평의회 571
전남도당(全南道黨) 452
전명섭(全明燮) 336
전문욱(全文郁) 231
전복행위 482
전봉희 336
전선사령부 607
전성호(全盛鎬) 322, 333, 662
전시동원체제 89

전시총동원령(戰時總動員令) 556
전우(全宇) 588
전투명령 618
전학준 240
정광호(鄭光鎬) 335
정군(政軍) 배합투쟁 490
정긍모(鄭兢謨) 315, 320, 321, 334, 335, 352, 356, 353, 383
정낙현 451
정노식 572
정래혁(丁來赫) 327, 328, 638
정병주 333
정부의 정강 298
정부조직법 361, 631
정세진 464, 468
정수정 450
정승화(鄭昇和) 332
정읍 37
정일권(丁一權) 200, 324, 327, 328, 367, 371, 412, 636
정족산 673
정주(定州) 161
정주석(鄭柱錫) 478
정준택(鄭準澤) 539, 607
정지웅(鄭址雄) 421
정찰명령 615
정치보위부 512
정태석 334
정훈국 368
제1경비여단 609
제1군관학교 242, 243
제1민청훈련소 278
제1보병사단 646, 649
제1사단 650, 652, 658, 677
제1차 세계대전 6
제2경보병사단 252
제2군관학교 238
제2민청훈련소 278
제2보병사단 647, 649, 666, 677
제2사단 652, 677
제2전선 496
제2차 세계대전 8, 534
제3경비여단(죽천) 609
제3군관학교 270
제3민청훈련소 279
제3보병사단 647, 649
제3사단 652, 677, 677
제3혼성여단 269
제4독립혼성여단 270, 275
제5보병사단 645, 647, 649, 677
제5사단 652, 678
제5호 공동성명 36
제5호 성명 37
제6보병사단 646, 666
제6사단 650, 652, 669
제7경비여단(시변리) 609
제7보병사단 646, 648, 649, 662
제7사단 261, 427, 652, 662, 665, 677
제8보병사단 645, 646
제8사단 261, 650, 652, 670
제9사단 261
제17기계화사단 276
제17연대 645, 646, 649, 652
제17전선군 155, 160
제59군정중대 427
제88특별독립여단 606

제105전차여단 283, 565
제549부대 602
제이콥스(J. Jacobs) 38
제주감찰청 429
제주경찰서 435
제주농업학교 424, 431
제주도 인민유격대 434
제주도(濟州島) 356, 425, 426
제주도경비사령부 443
제주도군정청 427, 430
제주도지사 427
제주도청 431, 449
제주북국민학교 431
제주비상경비사령부 435
제주서비행장(濟州西飛行場) 430
제주읍(濟州邑) 429, 443, 447
제천 491
제헌국회 42, 54, 55, 58
조·소(朝蘇) 국경 157, 160
조·소협정(朝蘇協定) 183, 541
조·중 우호동맹상호원조 191
조·소 공식회의(제1차 회의) 535
조·소 군사비밀협정(朝蘇軍事秘密協定) 561
조·중 군사동맹 535
조개옥(趙介玉) 325
조국방위위원회(祖國防衛委員會) 587
조국보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 277, 556
조국전선 중앙상무위원 572
조국전선결성준비위원회 571
조국전선대회 572
조국전선확대중앙위원회 580
조국통일민주주의민족전선 185, 186, 486, 487, 490, 544, 571
조남철 335
조만식(曺晩植) 19, 22, 23, 69, 70, 71, 72, 73, 74, 151, 161, 225, 227, 332, 558, 578
조병건(趙炳乾) 416
조병옥(趙炳玉) 126, 431, 577
조병일(趙炳日) 477
조선경비 358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 339, 340, 344, 345, 347, 348, 349, 353, 363, 370, 385
조선경비대총사령부 361, 370
조선경비사관학교(朝鮮警備士官學校) 328, 340, 409
조선경찰예비대 345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34, 36, 47, 48, 49, 424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74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지구위원회 71
조선공산당 황해지구위원회 69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 314, 315, 318, 409
조선국군학교(朝鮮國軍學校) 322
조선국방경비대 340
조선국방사관학교 34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488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228
조선노동당 486, 555
조선민족부대 54, 535
조선민족 함경남도집행위원회 70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7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6, 77, 177, 557
조선민주청년동맹(朝鮮民主青年同盟)

424, 429, 430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195, 200, 201, 227, 228, 273, 277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47, 48, 49, 571
조선인민군 176, 191, 254, 258, 264, 265, 267, 54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군사문제연구반 606
조선인민군총사령부 266
조선인민보 45
조선일보 45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 314, 315, 316
조선총독부 30, 338, 423
조선통일방안 540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 314, 315, 316, 409
조선항공협회 288
조선해사보국단(朝鮮海事保國團) 321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 321, 352
조선해안경비대 339, 346, 363, 379, 385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 355, 356
조성지서 458
조성환(曺成煥) 37, 314, 315, 319, 320
조소앙(趙素昻) 37, 40, 48, 52, 576
조소향(趙小鄕) 231
조소협정 542
조암(趙岩) 421
조영원(趙永遠) 419
조익학(趙翊鶴) 478
조장필(趙章弼) 476
조재미(趙在美) 460
조정철 235
조천 433, 443, 444
조천비행장 479
조총련(朝總聯) 586
종고산 464
좌우합작 51
좌우합작운동 49, 50
좌우합작위원회 50, 51
좌익 5원칙 50
주덕(朱德) 184, 193
주문진 356, 516
주연(朱然) 231, 239, 245
주은래(周恩來) 184, 197, 198, 546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119, 122, 123, 516
죽천 259, 261
중·소회담 188
중·소 우호동맹상호협정 546
중간노선 51
중간파 576
중공 533
중경 임시정부 34, 46, 49, 50, 200
중경(重慶) 4, 10
중공군 166사단 567
중국 국민당 535
중국 인민해방군 276, 535
중국공산정부 188
중국내전 136
중도 44
중봉산(中峰山) 492
중소우호동맹상호조약 189
중앙당 14호실 488
중앙보안간부학교 236, 240, 242, 242,

245, 246, 247, 265
중앙위원회 572
중앙육군사관학교(中央陸軍士官學校) 322, 323
중앙정보국(中央情報局) 92, 365, 631, 639
중앙직속병원 265
중앙집행위원회 559
중앙확대위원회 572
중일전쟁(中日戰爭) 5
중화인민공화국 43, 193, 196, 546, 559, 582
쥬다노프 152, 153, 226
즈다노프(A. A. Zhdanov) 132
지경리 492
지리산 460, 462, 477, 480, 487, 488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469
지창수 451
진공작전 11
진남포 인민정치위원회 22
진남포(鎭南浦) 22, 161, 230, 234, 260, 613
진종채 333
진주 468
진해 348, 354
진흑동 666, 670
집단군총사령부 259
징집제도 555
찔리코프 172

ㅊ

차갑준 478
차관협정 546
차규헌 333
차령 181
차수갑 334
참페니(Arthur S. Champeny) 342, 345
창산 442
창성지서 458
채명신(蔡命新) 332
채병덕(蔡秉德) 316, 328, 327, 343, 347, 348, 361, 366, 367, 371, 386, 412, 578, 634, 661, 683, 690, 690
채원개 348
채항석 333
처칠(Winston S. Churchill) 6, 97
천교리 515
천길호 537
천마산 468
천연두 426
천왕봉 470
천정동 472
천주원 333
철(鐵)의 장막(帳幕) 130
철군 40, 43
철도경비 제5여단 262
철도경비대(鐵道警備隊) 230, 232, 233, 245, 246, 247, 262
철도경비사령부 233
철도경비훈련소 245
철도경찰대 458
철도노조 457
철도보안대 231, 232
철수 122, 89
철원 181, 260, 601, 613
철의 장막 133, 135, 97

철제경비정 560
청년방위대 396, 398, 638, 642, 648, 674
청년특별지도부(青年特別指導部) 418
청년학도단 424
청년훈련대 558
청단 500, 661
청산리전투(青山里戰鬪) 4
청일전쟁(淸日戰爭) 3
청주연대 420
청진(淸津) 17, 155, 157, 158, 159, 160, 181, 538, 541, 561, 562
체렌코프 172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130, 132, 133, 177, 535
총독부 28, 30, 423
총동원령 554
총선거 54
최경덕(崔璟德) 227, 316, 327, 328, 412, 441, 502, 662
최경만(崔慶萬) 351, 475
최고국방위원회 92, 365, 631, 639, 639
최고인민회의 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79
최남근(崔楠根) 327, 463
최남선 63
최대명(崔大明) 332
최덕신(崔德新) 331, 348, 417
최동섭 505
최동오 50
최린 63
최명학(崔明鶴) 70
최병열 239
최상빈(崔相彬) 420
최석(崔錫) 351, 509
최석기(崔錫基) 423
최수암 419
최영두 512
최영희(崔榮喜) 317, 328, 350, 352, 678
최용건(崔庸健) 164, 235, 238, 239, 240, 245, 246, 263, 264, 268, 534, 559, 546, 569, 607
최용국 419
최용남(崔龍男) 357
최용덕(崔用德) 314, 315, 321, 336, 337, 358, 359, 366, 386
최용진(崔勇進) 240, 278, 588
최원 246
최원락(崔原洛) 416
최인 563
최종윤 460
최주종(崔周鍾) 200, 324
최창근 419
최창덕(崔昌德) 231
최창률(崔昌律) 419
최창식(崔昌植) 420
최창언(崔昌彦) 200, 327, 422
최창익(崔昌益) 228
최천(崔天) 439
최충국(崔忠國) 239
최태환 264
최현 261
최홍극(崔弘極) 268, 245
최홍희 351
추격기연대 294
추곡리 613
축성진지 568
춘천 19, 505, 613, 650, 652, 666, 669,

677, 679, 680
충무고지 657
충무공호 464
치스챠코프(Ivan M. Chistiakov) 17, 18, 19, 20, 21, 22, 37, 70, 71, 73, 151, 152, 154, 160, 161, 162, 164, 165, 166, 167, 169, 172, 173, 176, 226, 229
치악산(雉岳山) 502
치안대(治安隊) 72, 225, 424
치안대총사령부(治安隊總司令部) 316
치칼로프 군사비행학교 544
친일파 61, 64, 413
7월 공세 487
칠곡군(漆谷郡) 477
칠봉 468

ㅋ

카멘슈코프 16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6, 8, 10, 33
카이로 회담 8
카잔(Kazan) 143
카투코프(Katukov) 534, 563
칼라쉬니코프 152, 153
케난(George F. Kennan) 101, 103
켄코부스키 166
코네프(Konev) 533
코로테예프(Koroteyev) 534, 563
코로트코프(G. P. Korotkov) 166, 168, 176
코메콘(Comecon) 132
코민포름(Cominform) 132, 134, 585
코발료프 172, 185
코비젠코 166, 168
코스톨로프스키 164
코시긴(A. N. Kosigin) 137
콤소몰 149
쿠르차토프(I. V. Kurchatov) 140
쿠릴열도 15
쿠바노프(Kubanov) 534, 535, 536, 563
쿠반(Kuban) 143
퀴리노(Elpidio Quirino) 104
크라스노다르 137
크라스키노 157, 540
크레믈린 184, 541, 546
크림반도(Krym Peninsular) 9
키스렌코프(Kislenkov) 584

ㅌ

타브르(Tavr) 143
타스통신 140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34
태국 547
태기산(泰岐山) 491
태릉경비대 420
태백산 488, 492, 636, 673
태석봉 468
태탄지역 508
태평양 미국 육군총사령부 26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 15
태평양동맹(太平洋同盟) 104
태평양전쟁 5, 439
태평양함대 17, 151, 157, 536, 537
태프트－카츠라 비밀협정(Taft-Katsura

Agreement) 9
터키 43, 56, 130, 539
테헤란(Teheran) 8
테헤란 회담 8
토문 154
토지개혁 65
토해선 20
톰프슨(Loren B. Thompson) 342
통위부(統衛部) 322, 338, 339, 342, 343, 347, 373, 413, 482
통위부장 417
통일정부 40
통제부직제령 381
투르케스탄(Turkestan) 143
트루만(Harry S. Truman) 14, 28, 93, 101, 132, 133, 99
트리그브・리 254
특교대(特敎隊) 335
특별경비단 498
특별군사고문단 541
특별군사문제연구반 569
특별군사사절단 77, 178, 534
특설기지사령부(特設基地司令部) 355
티토(Tito) 133
티토주의자 134

파

파니프스킨(Panyvshkin) 584
파리(Paris) 582
파벌분쟁 489
파키스탄 547
팔공산(八公山) 477, 480
패트릿치 430
팬콥스키 166
펜코프스키 169
평강 19
평산군 누천리(平山郡 漏川里) 575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69, 70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19, 71
평안남도 치안유지위원회 69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 19, 22
평양(平壤) 18, 19, 70, 71, 73, 160, 161, 164, 165, 236, 534, 538
평양리민공사(平壤利民公司) 202
평양방송 577
평양방적공장 575
평양역사 575
평양학원(平壤學院) 162, 234, 235, 236, 237, 238, 245, 246, 247, 265
평원선 161
평창(平昌) 491
평택 569
평화공세와 전쟁계획 564
평화옹호투쟁위원회 569
평화적 통일방책선언서 581
평화적 통일호소문 581
평화통일노선 486
평화통일선언서 490
평화회의 569
포병기술훈련소 559
포병훈련국 610
포천 665
포츠담(Potsdam) 10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 10
포츠담 회담 13, 154

포항 479, 601, 602
포항해안경비대 420
폴란드(Poland) 130, 132, 177
폴란스키 152
표도로프 172
표무원(表武源) 319, 505
표문이 237
프라우다 551
프라이스(Terill E. Price) 322, 342, 358, 418
프라하(Prague) 582
프랑스 43, 131, 132, 133
프루소프 166, 172
프리발틱(Pribaltik) 143
프리카르파트(Prikarpat) 143
필리포프 190
필리핀 43, 56, 547
필리핀 제도 15

ㅎ

하극상 사건 414, 415
하동 460, 469
하를라모프 541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226, 237
하빈면(河濱面) 479
하사관교육대 477, 500
하영수(河榮壽) 414
하우스만(James Hausman) 125, 417, 458
하재팔(河載八) 319, 419
하지(John R. Hodge) 24, 26, 28, 29, 30, 31, 35, 49, 55, 123, 339
학구(鶴口) 458
학도군사훈련(學徒軍事訓練) 415
학병단(學兵團) 314, 315, 317
학생동맹 457
한·미경제원조협정(ECA협정) 67
한갑수(韓甲洙) 320, 321, 334, 335
한경 440
한경수(韓景洙) 231
한광선 500
한국·유구열도(琉球列島) 15
한국광복군 314, 319, 320, 325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4, 425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40, 47, 50, 53, 54, 57, 61
한국인화정책(Koreanization Policy) 428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韓國將校團軍事籌備會) 319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 314, 315, 321, 357
한라산 433
한림 433, 440, 440, 447
『한미군사잠정 행정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국임시군사고문단 124
한반도 14, 498
한성일보 45
한신(韓信) 330
한웅진 471
한인독립단 276
한인부대 277, 535
한정희 505
함경남도 공산주의자협의회 69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69
함덕 433, 443
함명리(咸明里) 448
함명수 334

함병선(咸炳善) 327, 446, 464, 636, 666
함양 468, 470, 472
함준호(咸俊鎬) 317, 475, 636, 665
함평 567
함흥(咸興) 18, 69, 70, 160, 162, 164, 181, 232, 538
합동기동연습 534
합동노조 457
합동전략분석위원회(JSSC :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90
합동전쟁계획위원회(Joint War Plans Committee) 13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14, 26, 90, 94, 95, 106, 108, 109, 117, 121, 342
합작 7원칙 50
항공기지사령부 359
항공대대 265
항공부대 322
항공사단 296
항일유격대 74, 231, 235, 268
해군경비정 455, 464
해군군관학교 288
해군기지설치령 381
해군대학 334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 333, 334, 335
해군본부 365, 367
해군사관하교(海軍士官學校) 333, 334
해군사관학교령 381
해군총사령부(海軍總司令部) 379
해군함정 446
해리스 29
해방구 186, 187, 545
해방군 455
해방병단(海防兵團) 321, 334, 353, 354
해방일보 44
해방지구(解放地區) 487, 490
해병대 335, 363, 390
해병대령 363, 381, 391
해병대사령부 450
해사대(海事隊) 314, 315, 320, 321, 352
해사대학 334
해안경비대 287, 321, 353, 355, 418
해안경비대사관학교(海岸警備隊士官學校) 333, 335
해안경비대총사령부 355, 379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 333, 334
해안경비사관학교 334
해외귀환동포 425
해주(海州) 69, 71, 162, 164, 443, 510
해주보안대 69, 71
핵무기 140
핵실험 140
허정숙 569
허헌 572
헌납운동 575
헐(Cordell Hull) 6, 7
헝가리(Hungary) 130, 132, 177
헬믹(G. C. Helmick) 61
혁명의용군(革命義勇軍) 사건 453
현리 506, 666, 669
현시학(玄時學) 334
현준혁(玄俊赫) 19, 69, 161, 225, 226, 227
호국 638
호국군 372, 373, 376, 393, 394, 395, 396, 398, 637
호국군사관학교(護國軍士官學校) 394

호남지구전투사령부 469
호롤리스크 특수비행학교 544
호림부대 375
호응투쟁(呼應鬪爭 476, 487
호찌민 199
홍관식 334
홍관표(洪官杓) 414
홍국선 332
홍명희(洪命憙) 52, 535, 539, 572, 607
홍범도(洪範圖) 4
홍순석(洪淳錫) 451
홍순진 320
홍의 563
홍진 48
홍천 505, 602, 650, 666, 680
화개장 469
화개장 전투 470
화북 433
화순 460
화천 19, 164, 601, 613, 669, 679, 680
환경면 433
황성복 261
황엽(黃燁) 330
황영시 333
황운서(黃雲瑞) 357
황정연(黃汀淵) 334
황철신(黃哲信) 477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331
황필용(黃弼用) 477
황해도 인민위원회 71
황해도 인민정치위원회 71
황헌친(黃憲親) 351
황호림 246, 268
회령 제3민청훈련소 588
회령(會嶺) 154, 263, 613
후방부대사령부(後方部隊司令部) 343
후창 161
훈련강평단(講評團) 566
훈련기 536
훈춘 160
흑백선거 76
흑백투표 75
흥남 18
흥남화학노동조합 69
히로시마(廣島) 11
히틀러 143

S

SU-76포대 144

T

T-34전차 285, 588

U

UN조선위원단(朝鮮委員團) 435

6·25전쟁사 편찬 자문위원

성 명	직 책
백 선 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최 영 희	(전) 국방부장관
박 경 석	전우신문 회장
박 익 순	(전) 전쟁기념사업회장
이 성 호	(전) 해군참모총장
정 용 근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장 지 량	(전) 공군참모총장
김 동 호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김 성 은	(전) 국방부장관
소 진 철	원광대학교 교수
안 용 현	(전) 전사편찬위원회 책임위원
온 창 일	한국전쟁학회장
유 재 갑	경기대학교 교수
이 종 학	서라벌군사연구소장
정 석 균	군사편찬연구소 전문위원
한 용 원	교원대학교 교수

□ **집필자**

김 행 복　책임연구원
양 영 조　선임연구원
남 정 옥　선임연구원
조 성 훈　선임연구원
박 동 찬　연 구 원

□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 문 위 원
정 용 근　자 문 위 원

6 · 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년 6월 19일 인쇄
2004년 6월 23일 발행

발행처 국 방 부 군 사 편 찬 연 구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 709-3188 FAX : 709-3111
발행인 안 병 한
인쇄처 서 울 인 쇄 정 보 산 업 협 동 조 합